

통계청 연구용역

국가주요지표 분류체계 및 지표선정 연구 보고서

국가주요지표 연구 II: 지표 DB

2013. 12.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명예이사장)
부문책임자	
경제	우천식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환경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영역책임자	
국민계정	홍기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재정과 금융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업과 생산	허 정 (서강대학교 교수)
고용과 노동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소득과 소비	박정수 (서강대학교 교수)
인구	김두섭 (한양대학교 교수)
가구와 가족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수)
건강	조병희 (서울대학교 교수)
교육	김경근 (고려대학교 교수)
문화와 여가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주거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교통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안전	민수홍 (경기대학교 교수)
사회통합	한 준 (연세대학교 교수)
생활환경과 오염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코디네이터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연구간사	고지영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위원)
DB시스템 설계	신영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위원)
DB 편집	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위원)
	이상운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위원)
통계청 연구지원	최성욱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안형준 (통계청 통계정책과장)
	이희정 (통계청 통계정책과 사무관)
	정유현 (통계청 통계정책과 주무관)

머 리 말

이 보고서는 통계청이 일반 국민과 국가 정책 수립자들에게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는 통계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추진한 「국가주요지표」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시행한 연구의 결과 보고서이다.

최근 여러 선진국들에서 ‘국민의 웰빙’ 또는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이라는 명칭의 국가지표를 보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용어를 바꿔 쓸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자는 개인의 삶의 질 차원의 지표를 의미하는 반면에 후자는 국가 사회의 발전(progress) 차원의 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국가지표’를 이 두 종류 지표의 복합으로 개념화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개념 구도를 가지고 「국가주요지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구축하였다.

「국가주요지표」의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기존의 지표 연구와 지표체계들을 검토하고 국가지표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정립된 개념에 따라 지표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지표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마련된 지표선정 기준에 따라 주요지표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주요지표들의 DB를 구축하였다. 주요지표 DB에는 상세통계표, 보조지표 및 국제비교지표를 포함시켰으며, 이렇게 구축된 지표 DB 안은 공동연구자들의 합동 검토워크숍, 의견조사, 전문가 초청 평가세미나, 국회공청회 등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여기에 부가하여 기존의 「e-나라지표」를 「국가주요지표」의 분류체계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용자들이 이 두 지표 DB를 쉽게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DB시스템을 설계하였으며, 이 지표 DB의 유지와 발전에 어떤 사업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국가적 수준에서 작성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존 통계지표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e-나라지표」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통계청이 각종 사회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발간한 가장 오래된 지표 보고서이고, 「e-나라지표」는 2006년에 개설된 국정통계 웹사이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구축한 「국가주요지표」는 이 두 지표와 중첩되는 점이 있으나 그 내용과 형식에서 크게 다르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삶의 질 내지 웰빙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전통적 사회지표의 보고서로 지표통계만을 제공하나, 「국가주요지표」는 국가발전지표도 제공하고 주요 지표별로 해설과 함께 보조지표와 국제비교지표도 제공한다. 「e-나라지표」는 국정의 모니터링에 도움이 되는 통계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나,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주요지표들만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 국회에서 제기되고 통계청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다. 통계청은 2012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용역으로 「국가정책지표체계 구축 방안 연구」(2012)를 시행하고 본 연구, 즉 「국가주요지표」의 DB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지표 DB의 개발이나 실제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축된 DB를 구현해 줄 DB 시스템과 사업조직의 형태까지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DB시스템은 DB의 형식과 내용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사업조직은 DB 개선과 업데이트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두 권으로 나누어 보고하고 있다. 제1권에는 「국가주요지표」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었고 이 DB를 유지,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과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제2권에는 「e-나라지표」 DB시스템에 탑재하여 제공될 「국가주요지표」 DB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를 하는 데 많은 분들이 기여하였다. 연구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였으나 해야 할 일들이 무척 많았던 이 연구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45명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조사, 평가세미나 및 공청회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덕분이다. 이 일을 위해 통계청에서는 박형수 통계청장을 비롯하여 최성욱 통계정책국장, 안형준 통계정책과장, 「e-나라지표」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 사무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이 연구를 주관한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서는 한준 원장을 비롯하여 신영란 기획관리실장, 김대훈 자료개발실장, 그리고 이상운 통계DB팀장이 뒷받침을 해주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연구책임자 석 현 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명예이사장

목 차

I. 경제지표	1
1.1. 국민계정	3
1.1.1. 국내총생산	4
11101. 1인당 국내총생산	4
1.1.2. 소득분배	8
11202. 노동소득분배율	8
1.1.3. 투자	11
11303. 투자율	11
1.1.4. 대외거래	15
11404. 경상수지비율	15
11405. 수출입비율	18
1.2. 재정과 금융	23
1.2.1. 재정 규모와 구성	24
12101.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24
12102. 정부세입구성	28
12103. 정부지출구성	31
1.2.2. 재정안정성	34
12204. 국가채무비율	34
12205. 재정수지비율	38
1.2.3. 금융시장규모	42
12306. 금융자산비율	42
1.2.4. 금융시장안정성	46
12407. BIS자기자본비율	46
12408. 대외채무비율	49
1.2.5. 금융시장	53
12509. 국고채금리	53
12510. 코스피주가지수	57
12511. 환율	60
1.3. 산업과 생산	63
1.3.1. 산업구조	64
13101. 산업구성	64
13102. IT산업생산비율	69
13103. 외국인직접투자비율	73

1.3.2. 생산성	76
13204. 노동생산성	76
13205. 중소기업임금비율	80
1.3.3. 혁신	83
13306. 연구개발투자비율	83
13307. 특허출원증가율	86
1.4. 고용과 노동	91
1.4.1. 고용	92
14101. 고용률	92
14102. 비임금근로자비율	97
14103. 취업자의 산업구성	102
1.4.2. 임금	108
14204. 비정규직근로자비율	108
14205.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112
14206. 저임금근로자비율	116
1.4.3. 근로조건	120
14307. 근로시간	120
14308. 산재사망률	124
14309. 일자리만족도	126
1.4.4. 노사관계	129
14410. 노동조합조직률	129
1.5. 소득과 소비	133
1.5.1 소득과 자산	134
15101. 개인소득	134
15102. 가구소득	137
15103. 가구자산	141
1.5.2 소득분배	145
15204. 지니계수	145
1.5.3 소비와 물가	149
15305. 소비지출	149
15306. 물가상승률	153
1.5.4 저축률	157
15407. 저축률	157

II. 사회지표	161
2.1. 인구	163
2.1.1. 총인구	164
21101. 총인구	164
2.1.2. 인구변화	168
21202. 인구성장률	168
21203. 합계출산율	171
21204. 조사망률	175
21205. 체류외국인	178
2.1.3. 인구구조	181
21306. 중위연령	181
21307. 성비	185
21308. 부양인구비	188
2.2. 가구와 가족	191
2.2.1. 가구구성	192
22101. 평균가구원수	192
22102. 한부모가구비율	196
2.2.2. 가족형성	200
22203. 혼인율	200
22204. 이혼율	205
2.2.3. 가족관계	209
22305. 가족관계만족도	209
22306. 가사노동시간	213
2.2.4. 가족돌봄	217
22407. 어린이집이용률	217
22408. 노인과 자녀 동거비율	220
2.3. 건강	223
2.3.1. 건강상태	224
23101. 기대수명	224
23102. 건강인지율	228
2.3.2. 건강결정요인	231
23203. 흡연율	231
23204. 음주율	235
23205. 신체활동실천율	238
23206. 비만율	241
2.3.3. 보건의료서비스	244
23307.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44

23308. 국민의료비	249
23309. 암생존율	252
23310. DPT예방접종률	256
2.4. 교육	259
2.4.1. 교육기회	260
24101. 공교육비	260
24102. 사교육비	263
24103. 취학률	266
24104. 평생교육참여율	270
2.4.2. 교육의 조건과 과정	273
24205. 교원1인당학생수	273
24206. 학교생활만족도	276
24207. 학습시간	280
2.4.3. 교육효과	284
24308. 교육년수	284
24309. 기초학력미달률	287
24310. 대학졸업자취업률	290
2.5. 문화와 여가	295
2.5.1. 문화자원	296
25101. 문화재정	296
25102. 문화여가비	298
2.5.2. 문화여가활동	301
25203. 문화예술관람률	301
25204. 독서율	304
25204. 생활체육참여율	307
25206. 여가시간	310
25207. 여가만족도	314
2.5.3. 미디어	316
25308. 인터넷이용률	316
2.6. 주거	319
2.6.1. 주택공급·관리	320
26101. 인구 1,000명당 주택수	320
26102.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326
2.6.2. 주택시장	330
26203. 주택매매가격변동률	330
26204. 주택전세가격변동률	333

2.6.3. 주거상황	335
26305. 소득대비임대료(RIR)	335
26306. 자가점유율	339
26307. 1인당 주거면적	342
26308. 주거환경만족도	345
2.7. 교통	347
2.7.1. 교통공급	348
27101.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348
2.7.2. 교통수요	352
27202. 대중교통수송분담률	352
27203. 통근시간	356
2.7.3. 교통환경	359
27304. 자동차에너지소비량	359
27305.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362
2.7.4. 교통비용	365
27406. 교통비	365
27407.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368
2.7.5. 교통사고	370
27508.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370
2.8. 안전	373
2.8.1. 범죄	374
28101. 범죄율	374
28102. 범죄피해율	379
28103. 재범률	381
2.8.2. 치안	384
28204.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384
2.8.3. 재해	387
28305. 자연재해피해액	387
28306. 화재피해액	390
2.8.4. 안전에 대한 인식	392
28407. 사회안전인식도	392
28408. 범죄두려움	395
2.9. 사회통합	399
2.9.1. 정치 및 사회 참여	400
29101. 선거투표율	400
29102. 여성의원비율	403
29103. 사회단체참여율	406

2.9.2. 신뢰와 투명성	408
29204. 기관신뢰도	408
29205. 대인신뢰도	411
29206. 부패인식지수	413
2.9.3. 사회적 관계	416
29307. 자원봉사활동참여율	416
29308. 사회적고립도	419
2.9.4. 삶의 기회와 만족	422
29409.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422
29410. 삶의만족도	425
29411. 자살률	428
2.9.5. 사회보장	431
29512. 공공복지예산	431
29513. 공적연금수급률	434
29514. 기초생활보장수급률	437

III. 환경지표

3.1. 생활환경과 오염	443
3.1.1. 기후·대기·소음	444
31101. 온실가스배출량	444
31102. 대기오염도	449
31103. 환경소음도	453
3.1.2. 물환경	456
31204. 하수도보급률	456
31205. 상수도보급률	459
3.1.3. 폐기물·유해물질	462
31306. 폐기물발생량	462
31307. 화학물질배출량	466
3.1.4.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469
31408. 환경보호비용	469
31409. 환경향상체감도	472
3.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475
3.2.1. 생물다양성	476
32101. 멸종위기종	476
32102. 자생생물종	480
3.2.2. 토지산림	483
32203. 경지면적	483

32204. 생태경관보존면적	486
32205. 유기농경작면적률	489
32206. 산림면적	492
3.2.3. 해양수산	495
32307. 총허용어획량소진율	495
32308. 연안습지면적	498
3.2.4. 수자원	501
32409. 1인당 취수량	501
3.2.5. 에너지	504
32510. 1차에너지공급량	504
32511. 전력생산량	508
32512. 재생가능에너지비율	512
부록 1. 국가주요지표체계	519
부록 2. 용어해설	525

I. 경제지표

1.1.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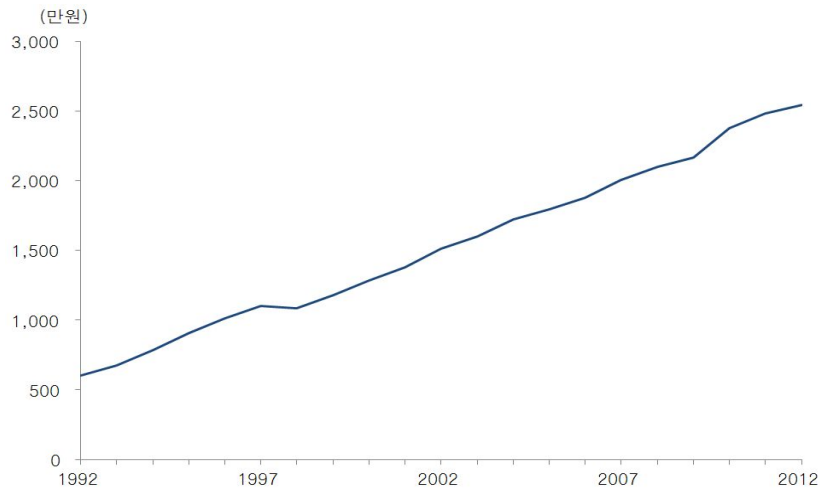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국내총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소득분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소득분배율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투자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무형고정자산투자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율 	
	대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수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수지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상대국별 수출비율 주요 상대국별 수입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비율

1.1.1. 국내총생산

11101. 1인당 국내총생산

■ 주요지표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 1992-2012



주: 1)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 { \sum (당해 연도 생산량 \times 당해 연도 시장가격)} \div 총인구수.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은 명목 국내총생산을 총인구수로 나눈 값임. 명목 국내총생산(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국가 내의 모든 경제주체가 1년 동안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당해 연도 생산량에 당해 연도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출함.
- 측정 방법: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 { \sum (당해 연도 생산량 \times 당해 연도 시장가격)} \div 총인구수.

● 지표의 의미

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의 전반적인 생산 및 지출의 크기 즉 국가경제의 규모를 나타낸다. 따라서 1인당 GDP는 한 개인의 소득 및 지출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각국의 생활수준(living standards) 및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의 개략적인 척도로서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GDP가 국민들의 후생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GDP가 커지면 국민의 물질적 생활수준은 높아지지만 삶의 질은 반드시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의 질은 1인당 GDP의 크기 외에 여가, 사회 및 자연 환경, 소득 분배 등 경제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해설

2012년 현재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2,545만 원이다.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2000년과 2010년 사이 약 85% 증가하였고,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산출한 실질 GDP는 같은 기간 약 43%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은 약 3만 4천 달러이며, 한국의 1인당 GDP는 중국의 약 4배이고, 이탈리아, 스페인,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GDP는 2010년에 1,000조 원을 넘었으며, 2012년 현재 미 달러화 기준 1조 달러를 초과하였다. 세계은행(WB)이 발표한 GDP 순위에 의하면 한국은 2000년대 들어 1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은 크게 민간소비지출, 정부지출, 투자지출(총자본형성), 순수출(=수출-수입)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지난 6년(2007-2012년) 동안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평균 52.3%, 정부지출은 평균 14.6%로서 국내총생산의 약 66.9%가 소비 목적으로 지출되었다. 한편 총투자는 26.6%, 순수출은 6.6%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실질 GDP의 증가율)은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약 7%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약 4%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성장률의 하락은 경제가 성숙해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아직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일수록 고도성장의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경기가 침체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하락한 면도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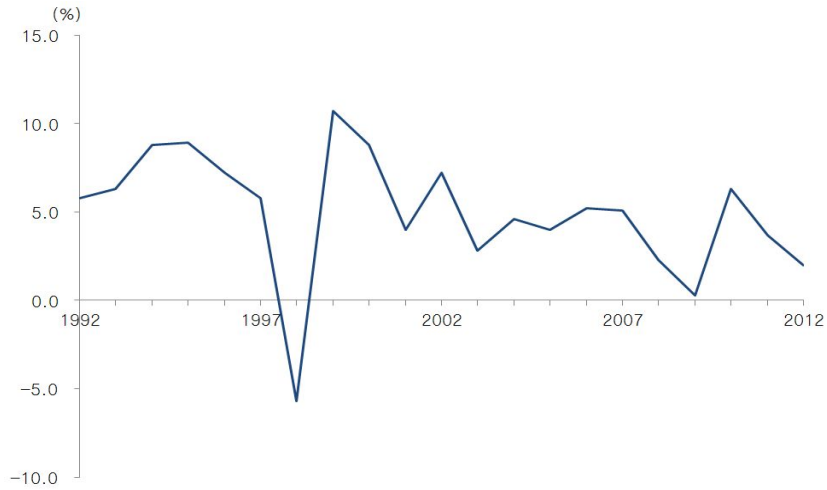
국내총생산 항목별 지출 및 국민총소득, 1990-2012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내총생산															
1인당 명목(만원)	446	908	1,283	1,376	1,513	1,603	1,721	1,797	1,879	2,006	2,097	2,165	2,375	2,481	2,545
1인당 실질(만원)	861	1,196	1,478	1,525	1,625	1,662	1,733	1,797	1,881	1,968	1,999	1,996	2,112	2,174	2,208
실질(조원)	369	539	695	722	774	796	832	865	910	957	979	982	1,044	1,082	1,104
지출항목별 비율(%)															
최종소비지출	76.6	75.3	69.6	70.6	71.3	69.7	67.3	67.7	67.6	67.6	67.4	68.0	66.6	65.7	65.8
민간	59.5	60.2	55.7	56.6	57.5	55.7	53.5	53.8	53.6	53.5	53.0	52.8	51.9	51.2	51.1
정부	17.4	15.1	13.9	14.0	13.7	13.9	13.8	13.9	14.1	14.1	14.4	15.1	14.6	14.4	14.7
총자본형성	37.0	37.9	31.7	30.3	30.4	30.8	30.2	29.7	29.5	29.0	28.4	24.5	26.7	26.1	25.1
순수출	-6.4	-8.6	-0.7	-0.3	-0.9	0.0	2.5	2.7	2.9	3.4	4.5	7.2	6.9	8.5	9.4
실질 국민총소득(조원)															
실질 국민총소득(조원)	418	608	718	742	797	817	848	864	898	941	935	950	1,004	1,019	1,045

주: 1) 실질 국내총생산과 실질 국민총소득은 2005년 기준.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경제성장률, 199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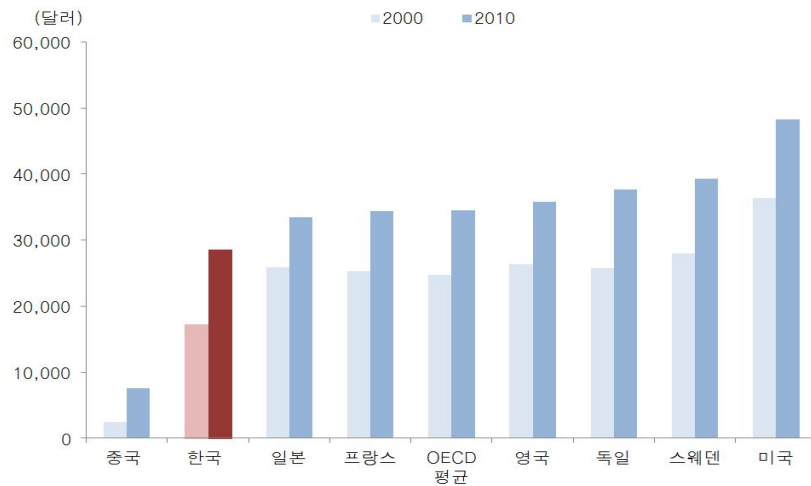
주: 1)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 10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경제성장률	5.8	6.3	8.8	8.9	7.2	5.8	-5.7	10.7	8.8	4.0	7.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제성장률	2.8	4.6	4.0	5.2	5.1	2.3	0.3	6.3	3.7	2.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명목), 200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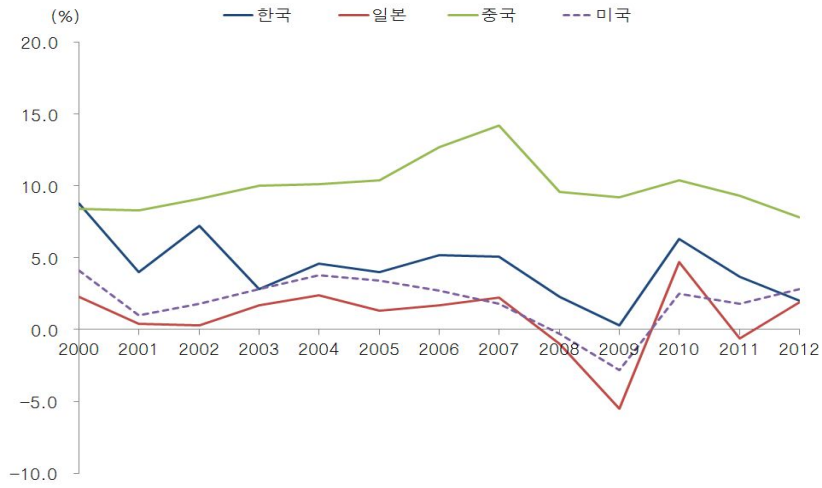


주: 1)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 = {∑ (당해연도 생산량 × 당해연도 PPP 환율기준가격)} ÷ 총인구수.
출처: OECD, *OECD.Stat*.

통계표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OECD 평균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
2000	2,379	17,197	25,897	25,245	24,749	26,358	25,764	27,953	36,437
2010	7,554	28,613	33,512	34,408	34,480	35,757	37,643	39,249	48,287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2000-2012



주: 1) 경제성장률 = (금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 100.
출처: OECD, *OECD.Stat*.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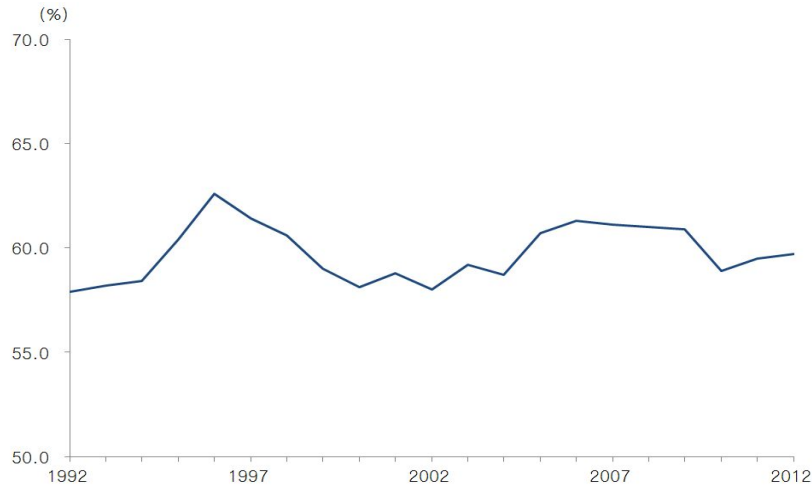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8.8	4.0	7.2	2.8	4.6	4.0	5.2	5.1	2.3	0.3	6.3	3.7	2.0
일본	2.3	0.4	0.3	1.7	2.4	1.3	1.7	2.2	-1.0	-5.5	4.7	-0.6	1.9
중국	8.4	8.3	9.1	10.0	10.1	10.4	12.7	14.2	9.6	9.2	10.4	9.3	7.8
미국	4.1	1.0	1.8	2.8	3.8	3.4	2.7	1.8	-0.3	-2.8	2.5	1.8	2.8

1.1.2. 소득분배

11202. 노동소득분배율

■ 주요지표

노동소득분배율, 1992-2012



주: 1)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10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노동소득분배율(Labor's Relative Share)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국민소득은 크게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소득은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 즉 피용자보수를 의미하고, 자본소득은 기업가가 자본, 경영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즉 영업잉여를 의미함.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소득은 피용자보수가 아닌 영업잉여에 포함됨.
- 측정 방법: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100.

● 지표의 의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의 분배구조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생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기업과 노동자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의 크기와 노동자의 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진다면 임금근로자의 재정상태가 나아진다고 볼 수 있다.

국민소득의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의 분배는 개인 혹은 사회집단 간의 소득 분배와 구별되어야 한다. 한 개인은 노동자로서 노동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신의 저축

을 통하여 자본을 공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의 합으로 주어지므로, 경제 전체의 소득비율이 변화하더라도 개인 간 소득격차에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 해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여 년 간 약 6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는 총자본의 크기가 총노동의 크기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는 곧 임금(노동에 대한 대가)이 이자율(자본에 대한 대가)보다 더 빨리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계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영세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노동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영업잉여)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대부분 영업잉여로 계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OECD에서는 자영업자의 임금이 피용자의 임금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노동소득분배율을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OECD에서 발표된 노동소득분배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노동소득분배율보다 평균 약 15%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더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OECD의 노동소득분배율 자료를 보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 이후부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찰되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나, 대체로 자본편향적 기술진보(Capita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세계화로 인한 저숙련 노동의 공급확대, 금융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본소득의 확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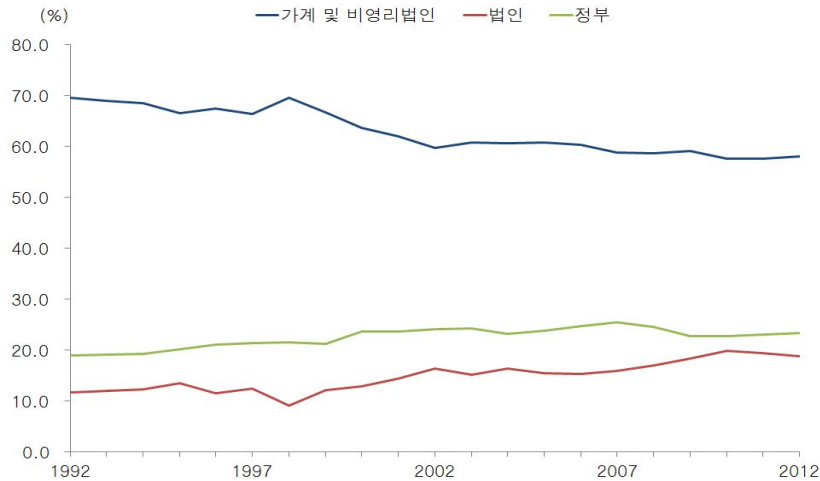
생산요소별 소득분배율, 1990-2012

	(%)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민총처분가능소득															
피용자보수	44.5	46.8	43.2	43.8	43.5	44.7	44.7	46.0	46.4	46.1	45.9	46.1	44.8	45.2	45.6
영업잉여	33.6	30.7	31.2	30.7	31.6	30.8	31.5	29.8	29.3	29.4	29.3	29.6	31.3	30.8	30.8
고정자본소모	10.7	11.6	13.8	13.6	12.9	13.0	12.9	13.2	13.3	13.2	13.1	13.3	12.9	13.2	12.9
생산및수입세 (공제)보조금	10.7	10.8	11.7	12.0	12.2	11.9	11.2	11.2	11.5	11.6	11.6	11.1	11.3	11.0	11.0
국외순수취경상이전	0.4	0.0	0.1	-0.1	-0.3	-0.5	-0.3	-0.3	-0.4	-0.3	0.0	-0.1	-0.3	-0.2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동소득분배율	57.0	60.4	58.1	58.8	58.0	59.2	58.7	60.7	61.3	61.1	61.0	60.9	58.9	59.5	59.7

주: 1)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10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 199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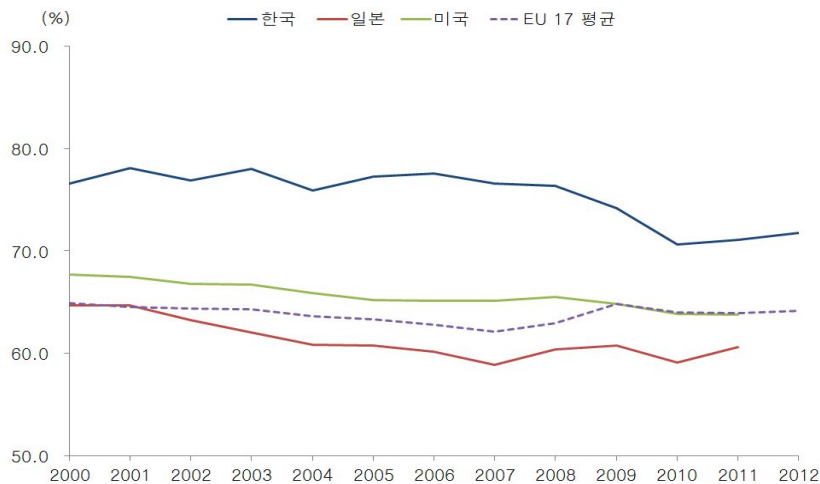
주: 1)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가계 및 비영리법인	69.5	68.9	68.5	66.5	67.4	66.3	69.5	66.7	63.6	62.0	59.6
법인	11.6	12.0	12.2	13.4	11.5	12.4	9.0	12.1	12.8	14.4	16.4
정부	18.9	19.1	19.2	20.1	21.1	21.3	21.5	21.2	23.6	23.7	24.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가계 및 비영리법인	60.7	60.6	60.8	60.2	58.8	58.7	59.0	57.5	57.6	58.1	
법인	15.0	16.3	15.5	15.2	15.9	16.9	18.2	19.8	19.3	18.7	
정부	24.2	23.1	23.8	24.6	25.3	24.5	22.7	22.6	23.0	23.2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2000-2012



주: 1) 노동소득분배율은 조정노동소득분배율로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조정된 노동소득분배율임.
출처: OECD, *OECD.Stat*.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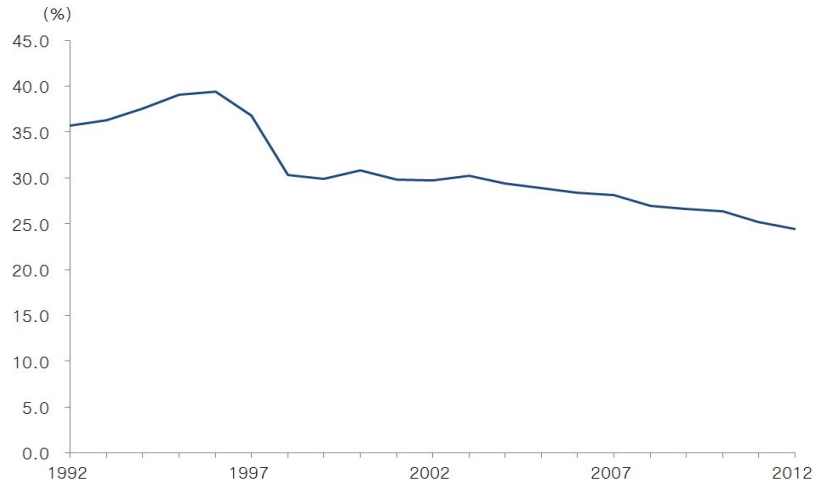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76.6	78.1	76.9	78.0	75.9	77.3	77.5	76.6	76.4	74.1	70.6	71.1	71.8
일본	64.7	64.7	63.3	62.0	60.8	60.8	60.1	58.9	60.3	60.8	59.1	60.6	
미국	67.7	67.5	66.8	66.7	65.9	65.2	65.2	65.1	65.5	64.8	63.8	63.7	
EU 17 평균	64.9	64.5	64.4	64.3	63.6	63.3	62.8	62.1	62.9	64.8	64.0	63.9	64.1

1.1.3. 투자

11303. 투자율

■ 주요지표

총고정투자율, 1992-2012



주: 1) 총고정투자율 =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총고정투자율은 GDP 중 건설투자, 설비투자 및 무형 고정자산투자를 포함하는 총고정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측정 방법: 총고정투자율 =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

● 지표의 의의

총고정투자율은 국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총고정투자율은 한 해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현재의 소비 대신 미래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부분을 드러내며, 총고정투자율이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GDP의 다른 지출항목들에 비해서 기간별 변동 폭이 상당히 크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투자의 변동에 따라 경제 전체가 호황과 불황이 결정된다. 총고정투자율은 이처럼 장기적인 경제성장 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해설

한국의 총고정투자율은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락한 총고정투자율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총고정투자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그동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온 한국의 성장이 악화될 수도 있다.

한국의 총고정투자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총투자의 크기는 총저축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한국의 저축률(특히 가계저축률) 또한 199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둘째,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경제가 성숙함에 따라 성장 기회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일 수 있다. 자본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반면 노동력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간 비교에 의하면 한국의 투자율은 아직까지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또한 앞으로는 연구개발투자를 비롯한 무형고정자산투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총고정투자의 구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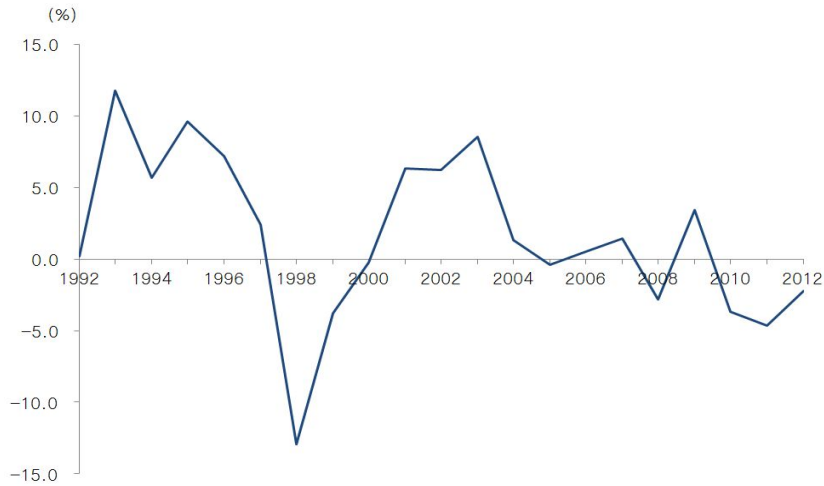
유형별 총고정자산 투자액, 1990-2012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고정투자(조원)	133	211	214	215	230	240	245	250	258	269	264	261	276	273	269
건설투자	93	137	126	133	142	154	156	155	156	158	154	159	153	146	143
설비투자	40	69	75	69	74	73	76	80	86	94	93	84	106	109	107
무형고정자산투자	2	6	11	12	14	14	14	15	16	17	17	17	18	19	20
총고정투자율(%)	36.0	39.1	30.8	29.8	29.7	30.2	29.4	28.9	28.4	28.1	27.0	26.6	26.4	25.2	24.4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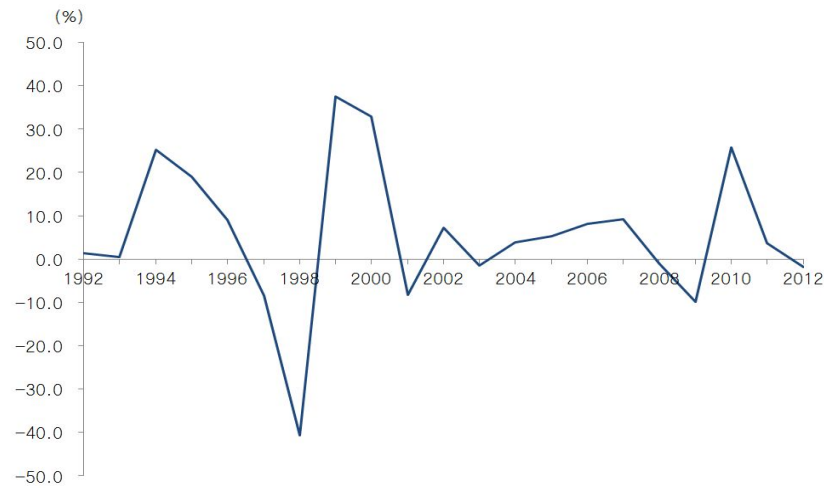
건설투자 증가율, 1992-2012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건설투자 증가율	0.19	11.76	5.69	9.64	7.19	2.42	-12.92	-3.80	-0.23	6.32	6.2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설투자 증가율	8.53	1.34	-0.37	0.53	1.44	-2.83	3.41	-3.66	-4.67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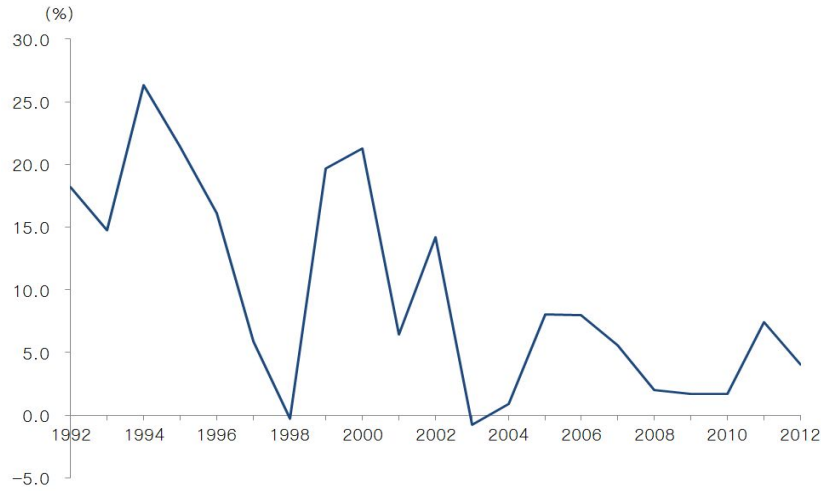
설비투자 증가율, 1992-2012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설비투자 증가율	1.30	0.48	25.27	18.93	9.11	-8.39	-40.60	37.50	32.90	-8.27	7.3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설비투자 증가율	-1.53	3.78	5.31	8.18	9.28	-1.02	-9.85	25.70	3.60	-1.89	

무형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99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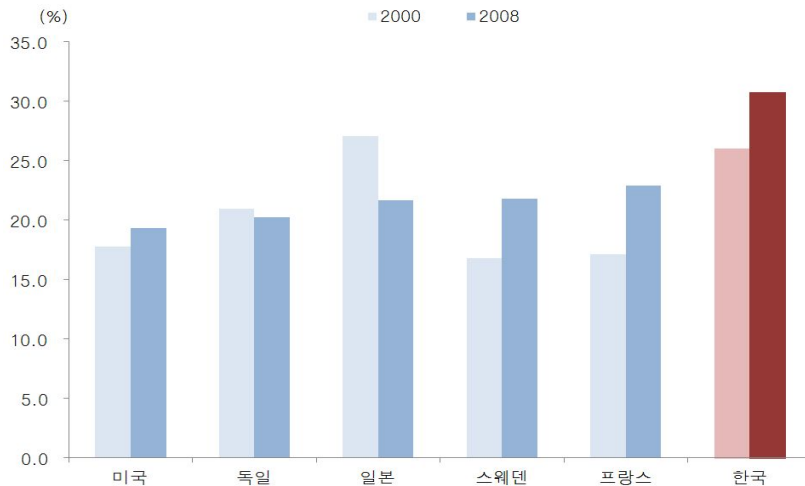


주: 1) 전년 대비 증가율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무형고정자산 투자증가율	18.2	14.7	26.3	21.4	16.1	5.9	-0.3	19.7	21.3	6.4	14.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무형고정자산 투자증가율	-0.8	0.9	8.0	8.0	5.6	2.0	1.7	1.7	7.4	4.1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총고정투자율, 2000, 2008



출처: OECD,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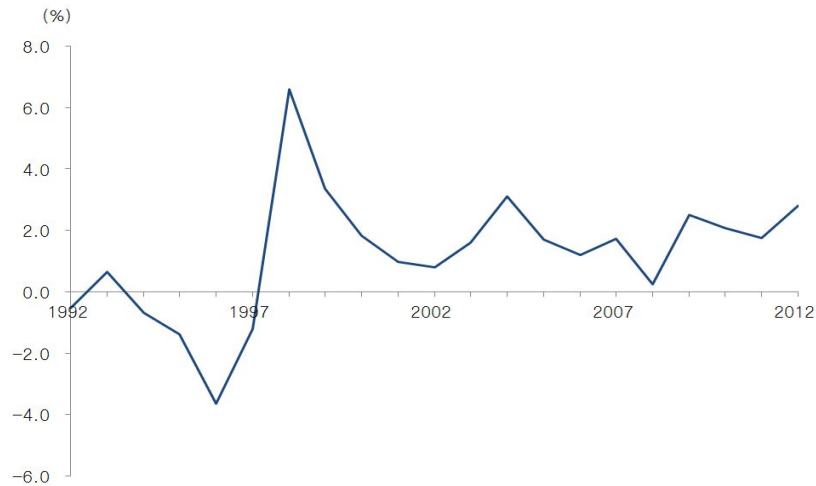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프랑스	한국
2000	17.8	21.0	27.1	16.8	17.1	26.0
2008	19.4	20.2	21.7	21.8	22.9	30.7

1.1.4. 대외거래

11404. 경상수지비율

■ 주요지표

경상수지비율, 1992-2012



주: 1)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지액 ÷ GDP) × 100.
출처: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경상수지비율은 GDP 중 경상수지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경상수지액은 한 국가 내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1년 동안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과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거래 중, 다른 국가들에서 해당 국가로 지급된 액수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로 지출된 액수를 뺀 값을 의미함.
- 측정 방법: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지액 ÷ GDP) × 100.

● 지표의 의미

한 가구의 수입(revenue)과 지출(expenditure)로부터 가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듯이, 한 국가의 경우에도 외국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경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경상수지는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1년 동안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과 행한 모든 경상거래를 분류하여, 다른 국가들에서 해당 국가로 지급된 액수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다른 국가들로 지출된 액수를 뺀 값이다. 경상수지가 플러스(+) 값을 보일 때를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고,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값을 보일 때를 경상수지 적자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는 한 국가의 총생산이 총지출보다 더 클(작을) 때 흑자(적자)를 나타낸다. 한 가구에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클(작을) 때 흑자(적자)를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해설

한국의 경상수지비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주로 적자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원화 가치의 하락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의 경상수지는 꾸준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경상수지비율은 2.8%였으며, 이 해 한국은 경상수지액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경상수지 적자는 민간이나 정부가 자신의 수입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부족한 투자재원 때문에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투자 확충이 장래의 생산을 확대시킴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대외 채무가 증가하게 된다. 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대외 채무가 높아지게 되면 더 이상의 차입은 어려워지고 기존의 차입금을 상환할 압력을 받게 된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는 경상수지 적자와 반대로 한국의 대외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로 인하여 유입되는 외환은 고정 환율제 하에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의 거품을 초래하기도 한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모두 대외불균형에 해당하므로 지나치게 큰 흑자와 적자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국내총생산 및 경상수지, 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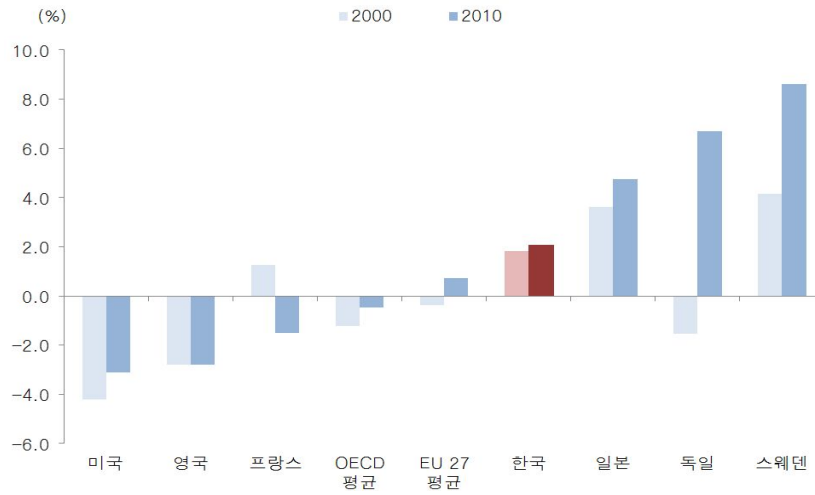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2
국내총생산(10억 달러)	350	577	808	860	936	966	1,039	1,097	1,173	1,268	1,306	1,312	1,483	1,540
경상수지액(100만 달러)	-1,390	-8,012	14,803	8,428	7,542	15,584	32,312	18,607	14,083	21,770	3,198	32,791	26,068	43,139
상품수지	-2,298	-4,420	18,656	13,029	15,203	24,028	39,661	32,857	31,433	37,129	5,170	37,866	31,660	38,338
서비스수지	-101	-2,190	-2,037	-2,969	-6,442	-5,792	-5,958	-9,952	-13,332	-11,967	-5,734	-6,641	-5,850	2,676
본원소득수지	-141	-1,383	-2,383	-1,247	399	253	1,042	-1,817	75	135	4,435	2,277	2,891	4,886
이전소득수지	1,150	-19	566	-385	-1,618	-2,905	-2,432	-2,482	-4,093	-3,527	-674	-712	-2,633	-2,761
경상수지 비율 (%)	-0.4	-1.4	1.8	1	0.8	1.6	3.1	1.7	1.2	1.7	0.2	2.5	1.8	2.8

주: 1)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지액 ÷ GDP) × 100.
출처: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경상수지비율, 2000, 2010



주: 1)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지액 ÷ GDP) × 100.
출처: OECD,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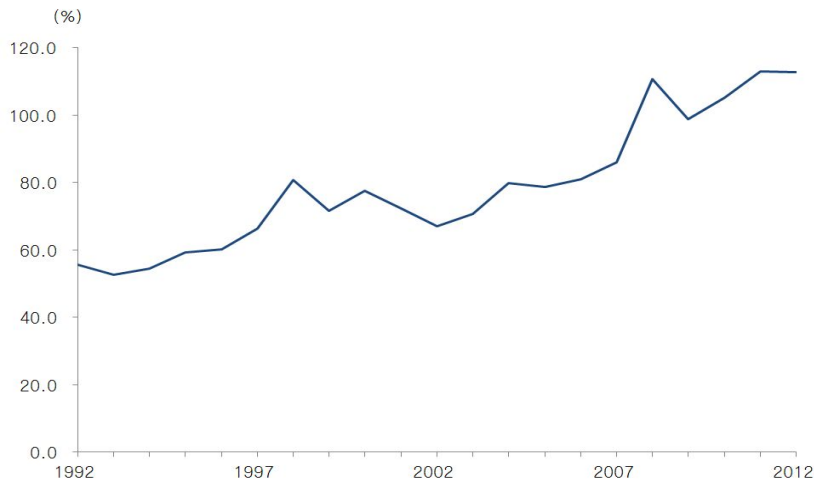
통계표

	미국	영국	프랑스	OECD 평균	EU 27 평균	한국	일본	독일	스웨덴
2000	-3.1	-2.8	-1.5	-0.5	0.7	2.1	4.8	6.7	8.6
2010	-4.2	-2.8	1.3	-1.2	-0.4	1.8	3.6	-1.5	4.2

11405. 수출입비율

■ 주요지표

수출입비율, 1992-2012



주: 1) 수출입비율은 국민총소득(GNI) 중 수출액과 수입액,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수출입비율은 국민총소득(GNI) 중 수출액과 수입액, 그리고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수출액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무역을 통해 타국에 판매된 액수를 나타내고, 수입액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가 무역을 통해 국내에 판매된 액수를 나타냄. 국외수취요소소득은 자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며, 국외지급요소소득은 외국의 노동과 자본이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임.
- 측정 방법:
$$\text{수출입비율} = \{(\text{수출 총액} + \text{수입 총액} + \text{국외수취요소소득} + \text{국외지급요소소득}) \div \text{GNI}\} \times 100.$$

● 지표의 의미

수출은 1년 동안 국내에서 새롭게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에 의해 지출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한편 수입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운데 국내 경제주체들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수출과 수입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과 판매에서 외국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수출입비율은 대외 의존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입이 크다는 것은 해당 국가 경제가 그만큼 대외 거래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음을 의미하

기 때문에 수출입 비율은 개방도의 척도로서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수입 비중도 같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수출입 비율은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을 포함하고 있어, 자국 자본과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와 외국 자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생산에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자본과 노동자들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울수록 크게 나타나므로 역시 해당 국가 경제의 개방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 해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대외 무역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와 자본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입도 더불어 확대된 것이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수출입비율은 약 113%를 기록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해외에서 발생한 충격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입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이 위축될 수 있으며,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에 따라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의 확대는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특화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로 인하여 국가간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역내 무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입에서 기존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수출입비율, 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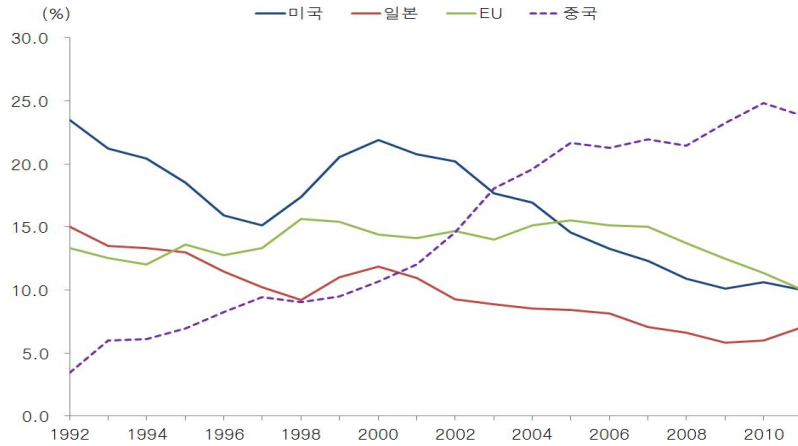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민총생산(조원)	191	408	600	650	721	768	829	864	910	971	1,034	1,070	1,175	1,238	1,280
수출액	53	117	233	233	239	271	338	340	361	409	544	530	613	692	719
수입액	54	119	215	218	228	254	304	316	348	394	556	490	583	667	680
국외수취요소소득	2.0	2.5	6.9	8.5	8.7	8.7	11.3	11.1	14.4	19.0	26.1	21.0	20.4	21.2	25.1
국외지급요소소득	2.1	4.1	10.0	10.0	8.2	8.0	8.9	11.9	13.1	17.3	18.5	16.3	19.0	18.0	18.1
수출입비율 (%)	58.2	59.3	77.5	72.2	67.1	70.6	79.8	78.6	80.9	85.9	110.7	98.8	105.2	112.9	112.7

주: 1) 수출입비율은 국민총소득(GNI) 중 수출액과 수입액,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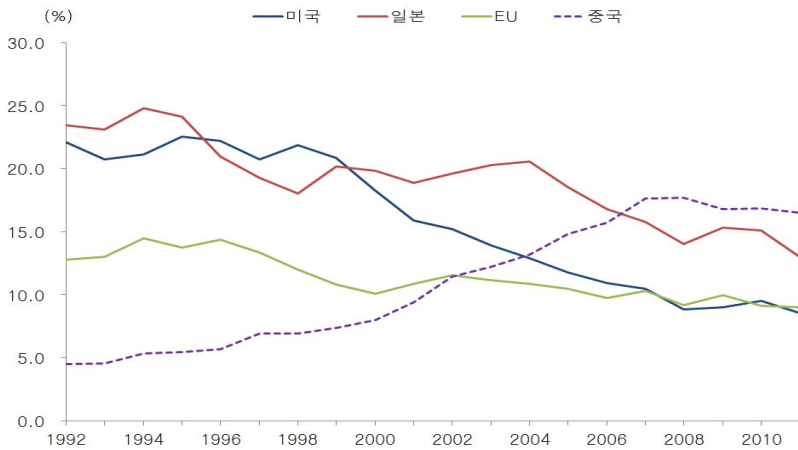
주요 상대국별 수출비율, 1992-2011



주: 1) 수출비율은 해당년도 수출총액 중 해당 상대국으로의 수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13.

통계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미국	23.5	21.2	20.4	18.5	15.9	15.2	17.4	20.5	21.9	20.8
일본	15.0	13.5	13.3	13.0	11.4	10.2	9.2	11.0	11.9	10.9
EU	13.3	12.5	12.0	13.6	12.7	13.3	15.7	15.4	14.4	14.1
중국	3.4	6.0	6.1	7.0	8.3	9.4	9.0	9.5	10.7	12.0
통계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20.2	17.7	16.9	14.5	13.3	12.3	10.9	10.1	10.6	10.0
일본	9.3	8.9	8.5	8.4	8.1	7.1	6.6	5.8	6.0	7.1
EU	14.7	14.0	15.1	15.5	15.1	15.0	13.7	12.5	11.4	10.0
중국	14.6	18.0	19.6	21.7	21.3	21.9	21.4	23.2	24.8	23.8

주요 상대국별 수입비율, 199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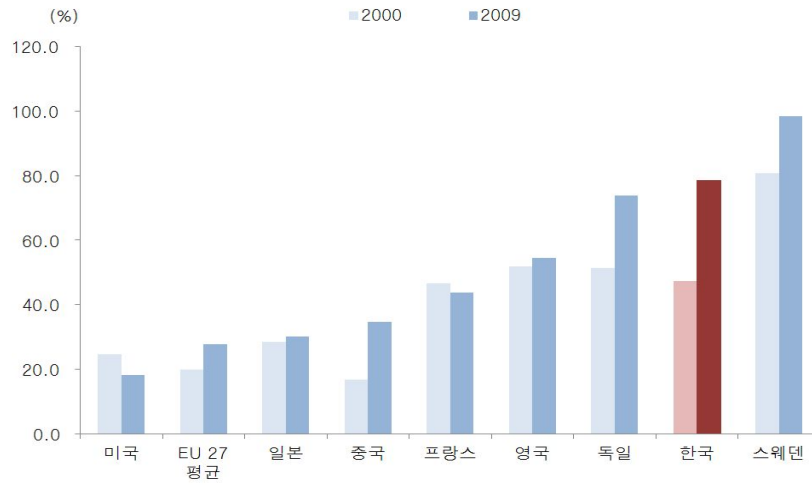


주: 1) 수입비율은 해당년도 수입총액 중 해당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2013.

통계표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미국	22.1	20.7	21.1	22.5	22.2	20.7	21.9	20.8	18.3	15.9
일본	23.5	23.1	24.8	24.1	20.9	19.3	18.0	20.2	19.8	18.9
EU	12.8	13.0	14.5	13.7	14.4	13.3	12.0	10.8	10.1	10.9
중국	4.5	4.5	5.3	5.5	5.7	6.9	7.0	7.4	8.0	9.4
통계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15.2	13.9	12.9	11.8	10.9	10.5	8.9	9.0	9.5	8.6
일본	19.6	20.3	20.6	18.5	16.8	15.8	14.0	15.3	15.1	13.0
EU	11.6	11.1	10.9	10.5	9.8	10.3	9.2	10.0	9.1	9.0
중국	11.4	12.3	13.2	14.8	15.7	17.7	17.7	16.8	16.8	16.5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수출입비율, 2000, 2009



주: 1) 수출입비율은 국민총소득(GNI) 중 수출액과 수입액, 국외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OECD. *OECD.Stat*.

통계표

	미국	EU 27 평균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스웨덴
2000	24.7	20.0	28.3	16.9	46.5	51.7	51.3	47.3	80.9
2009	18.2	27.7	30.1	34.6	43.8	54.6	73.8	78.7	98.5

1.2. 재정과 금융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 정부세입구성		• 정부세입구성
		• 정부지출구성		• 정부지출구성
	재정 안정성	• 국가채무비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비율 • 공공부문부채비율	• 국가채무비율
		• 재정수지비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수지비율	• 재정수지비율
	금융시장 규모	• 금융자산비율	• 주식시가총액비율 • 기업공개실적 • 총여신비율	• 금융자산비율
	금융시장 안정성	• BIS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BIS자기자본비율
		• 대외채무비율	• 단기외채비율 • 외환보유액비율	• 대외채무비율
	금융시장	• 국고채금리	• 기준금리 • 콜금리, 회사채금리	• 해외주요시장금리 • 해외주요정책금리
		• 코스피주가지수	• 코스닥주가지수	• 해외주요주가지수
		• 환율		• 해외주요통화환율

1.2.1. 재정 규모와 구성

12101.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 주요지표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2005-2011



주: 1)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기준이고, GDP 대비 정부 총수입, GDP 대비 정부 총지출 비율임.
출처: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정부수입과 지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총수입 및 총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비율임. 여기서 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이른바 일반정부를 뜻하며 공기업 부문은 제외됨. 정부수입은 크게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나누어지고, 정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수입은 다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며, 경상수입의 대부분은 조세수입임. 지출은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누어짐.
- 측정 방법: 정부수입비율 = (총수입 ÷ 국내총생산) × 100.
정부지출비율 = (총지출 ÷ 국내총생산) × 100.

● 지표의 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의 총수입의 규모를 나타내는 정부수입비율은 나라의 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정부수입비율이 30%라면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 가운데 30%가 재정의 수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수입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수입비율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국가별로 재정활동 비중이 어떻게 다른 지를 살펴 볼 수도 있다. 정부수입과 정부지출의 차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하고, 정부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에는 통합재정이 흑자라고 표현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라고 한다.

• 해설

우리나라의 총정부수입은 2011년 기준으로 약 363조원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수입비율은 29.4%이다. 이는 2011년의 국내총생산액 1,235조원 가운데 약 30%가 정부수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재정의 규모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되며, 어떠한 수준이 적절한지는 단정 짓기 어렵다. 국방과 국내 법질서의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야경국가의 단계를 넘어 사회간접자본,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공급, 아울러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국민이 기대하게 되면 이를 반영하여 정부의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정부수입도 증가하게 된다.

정부수입비율은 매년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최근 10여 년간 대략 30% 전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조세수입이 국내총생산보다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수입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수입비율은 30%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총정부지출은 2011년의 경우 약 337조원이며 정부지출비율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경기부양대책을 반영하여 31.4%에 달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2005년 이후 20퍼센트 중·후반대에서 연동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의 측면에서 본다면 2009년에는 재정이 적자였지만 다른 해에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수입비율과 관련이 깊은 지표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있다. 조세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조세수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고,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조세수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세는 정부수입비율의 추세와 유사하나, 포함되는 항목이 정부수입비율보다 적은 탓으로 2011년의 경우 정부수입비율이 29.4%였던 것에 비해, 국민부담률은 25.9%, 조세부담률은 20.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규모 비중은 중국보다는 높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OECD 주요국들의 정부지출비율은 국내총생산의 40%를 초과하는 수준에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거나 이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수입비율이 지출비율보다 높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상태에 있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상당히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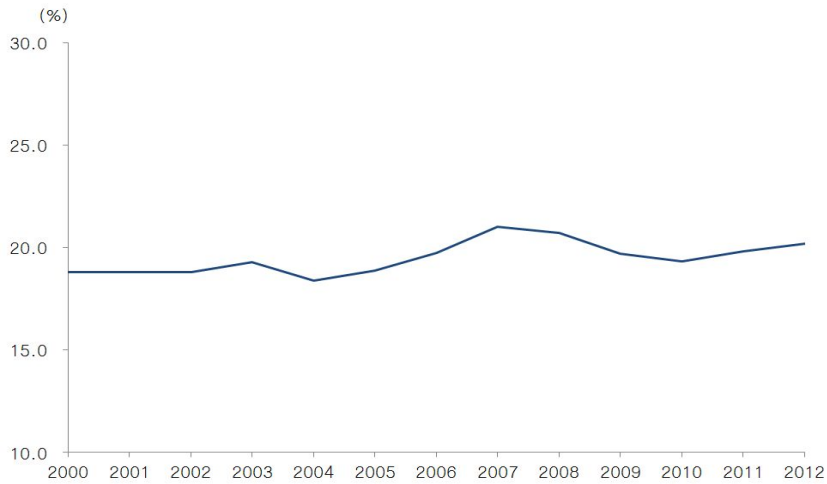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2005-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정부수입 (조원)	244.6	271.0	310.7	314.6	315.0	337.9	363.1
총정부지출 (조원)	236.0	252.6	258.0	289.9	334.6	322.0	337.6
국내총생산 (조원)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3.3	1,235.1
정부수입비율 (%)	28.3	29.8	31.9	30.6	29.6	28.8	29.4
정부지출비율 (%)	27.3	27.8	26.5	28.2	31.4	27.4	27.3

주: 1) 정부의 수입과 지출 비율은 GDP 대비 수입과 지출의 비율임. 정부는 일반정부 기준임.
출처: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조세부담률,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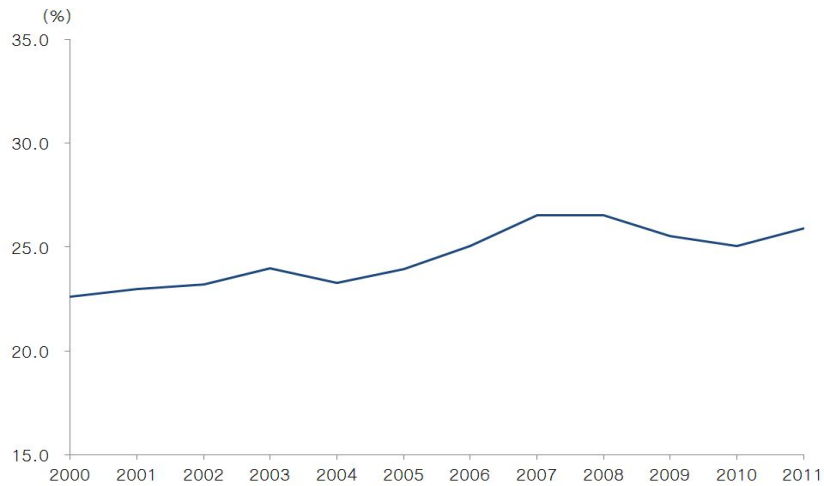


주: 1)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총 조세의 비율임.
출처: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조세부담률	18.8	18.8	18.8	19.3	18.4	18.9	19.7	21.0	20.7	19.7	19.3	19.8	20.2

국민부담률,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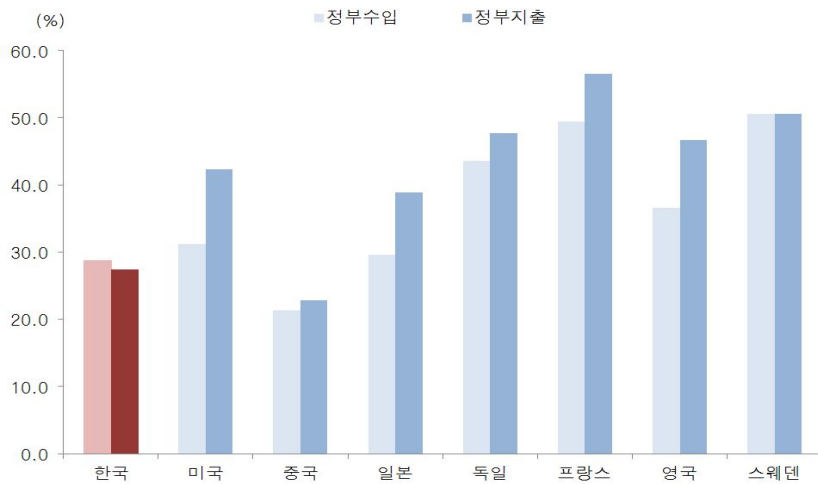
주: 1) 국민부담률은 GDP 대비 총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민부담률	22.6	23	23.2	24	23.3	24.0	25.0	26.5	26.5	25.5	25.1	25.9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2010



주: 1)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비율.
출처: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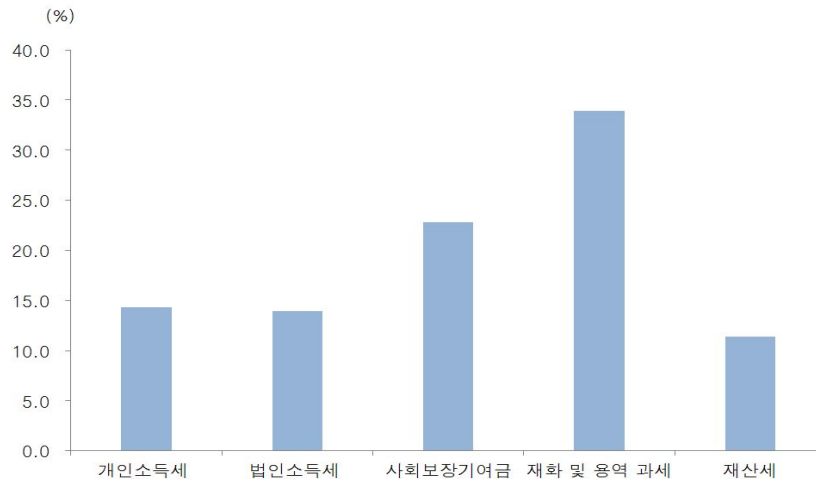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정부수입비율	28.8	31.2	21.3	29.6	43.6	49.5	36.6	50.5
정부지출비율	27.4	42.4	22.8	38.9	47.7	56.6	46.7	50.6

12102. 정부세입구성

■ 주요지표

정부세입구성, 2010



주: 1) 정부세입구성은 총세입 중 해당 세목별 세입의 비율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정부세입구성은 각종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정부세입(歲入)은 정부의 1년간 총수입을 말하며, 세목은 구성에 있어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나 OECD의 세입분류기준을 따른다면, 세목은 크게 정부 수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각종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다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 재산세 등으로 세분할 수 있음.
- 측정 방법: $\text{세목별 세입비율} = (\text{세목별 세입} \div \text{총 정부세입}) \times 100$

• 지표의 의의

재정 세입에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수입이다. 같은 조세수입이라 하더라도 조세의 종목에 따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도도 달라질 수 있고, 누진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도는 낮지만, 비례세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 사이에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세입구성비 지표는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요지표이다.

• 해설

2010년 기준, OECD 세입분류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부세입구성을 보면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가 3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여금 (22.8%), 개인소득세 (14.3%), 법인소득세 (13.9%), 재산세 (11.4%)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른 세목에 비해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OECD 주요국과 정부의 세입구성을 비교하면 2010년의 경우 우리나라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과세는 33.9%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반면에 (미국 18.0%, 일본 18.7%, 프랑스 25.0% 등), 개인소득세 비중은 14.3%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미국 32.8%, 영국, 28.8%, 스웨덴 23% 등). 법인소득세는 자본의 국제이동성을 고려할 때 투자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단순히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만을 살핀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소득세의 비중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정부세입구성,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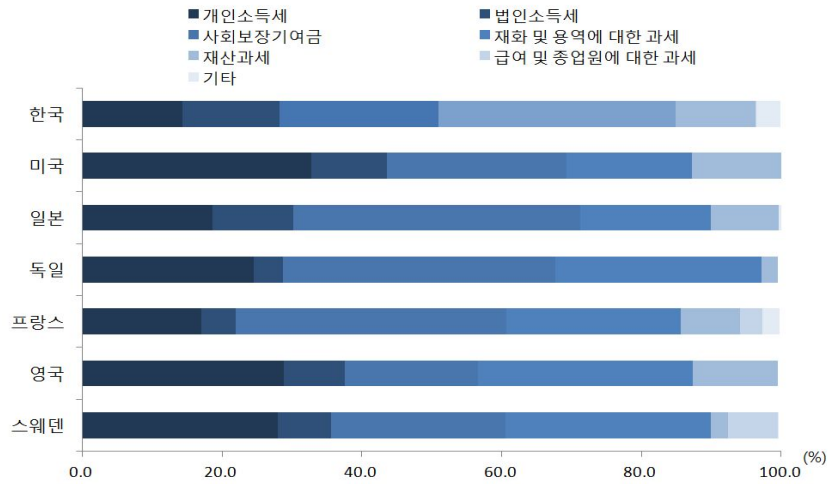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개인소득세	14.6	14.1	12.7	12.6	13.6	13.3	15.2	16.7	15.0	14.2	14.3
법인소득세	14.1	12.3	12.7	15.3	14.3	15.9	14.3	15.1	15.9	14.4	13.9
사회보장기여금	16.7	18.3	19.0	19.7	21.0	21.2	21.2	20.7	21.8	22.9	22.8
재화 및 용역 과세	38.4	39.6	38.7	37.0	36.2	34.3	32.5	31.3	31.6	32.0	33.9
재산세	12.4	11.4	12.7	11.8	11.2	11.9	13.2	12.8	11.9	11.7	11.4

주: 1) 정부세입구성은 총세입 중 해당 세목별 세입의 비율.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정부세입구성,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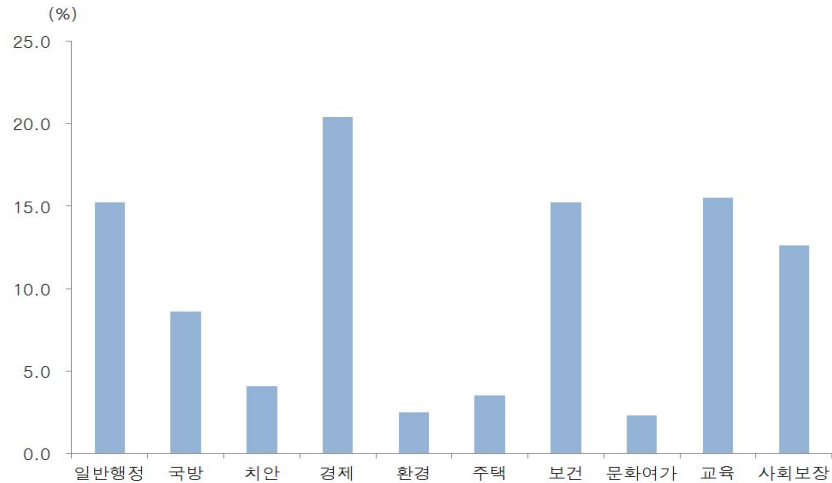
주: 1) 정부세입구성은 총세입 중 해당 세목별 세입의 비율.
 2) “급여에 대한 과세”는 “payroll taxes”의 번역으로 여기에서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대상으로 고용주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뜻함.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012*.

통계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개인소득세	14.3	32.8	18.6	24.5	17.0	28.8	28.0
법인소득세	13.9	10.8	11.6	4.2	5.0	8.8	7.6
사회보장기여금	22.8	25.7	41.1	39.0	38.7	19.0	25.0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	33.9	18.0	18.7	29.5	25.0	30.8	29.4
재산과세	11.4	12.8	9.7	2.3	8.5	12.1	2.4
급여 및 종업원에 대한 과세	0.2	0.0	0.0	0.0	3.2	0.0	7.1
기타	3.4	0.0	0.3	0.0	2.4	0.0	0.1

12103. 정부지출구성

■ 주요지표

정부지출구성, 2010



주: 1) 정부지출구성은 정부 총 지출액 중 해당 지출항목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2013.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정부지출구성은 정부지출항목별로 각 항목에 있어서의 지출액이 정부의 총지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정부지출항목을 나누는 데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나, OECD의 분류체계를 따라 일반행정, 국방, 치안, 경제, 환경, 주택, 보건, 문화여가, 교육, 사회보장 등의 항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측정 방법: $\text{지출항목별 지출비율} = (\text{지출항목별 지출액} \div \text{총 정부지출}) \times 100$.

● 지표의 의의

정부지출구성은 나라의 살림인 재정의 쓰임새, 다시 말하면 재원의 분야별 분배 비율을 보여 준다. 재정의 규모, 수입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출의 구성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기 마련이다. 정부지출의 구성은 한편으로는 한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재정지출필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 나라가 지향하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정부지출구성을 보면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 일반행정, 보건, 사회보장, 국방 등의 순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제가 20.4%, 교육이 15.5%, 일반행정은 15.2%, 보건의 15.2%, 사회보장은 12.6%, 그리고 국방이 8.6%이다. 2000년과 대비하여 2010년까지 지출비중이 늘어난 분야는 보건 (9.9% → 15.2%), 사회보장 (9.2% → 12.6%)이며, 국방 및 치안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정부지출구성에 있어서 특징은 국방분야의 지출비중이 8.6%로 11.9%를 기록한 미국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분야의 지출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보장분야의 지출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분야 지출비율은 한국보다 3배 이상 높은 40%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분야의 지출비율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분야에 대한 총투자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하리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정부지출구성,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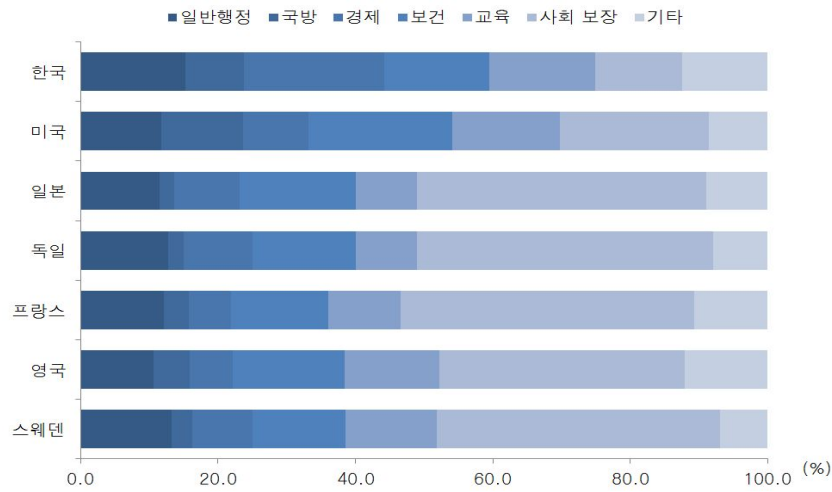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반행정	13.6	13.4	13.5	12.1	13.6	13.7	14.3	14.2	14.1	14.1	15.2
국방	11.9	10.5	9.7	8.8	9.0	9.3	9.1	8.8	8.9	8.5	8.6
치안	5.8	5.1	5.3	4.1	4.6	4.7	4.6	4.6	4.4	4.1	4.1
경제	22.5	23.3	23.7	31.9	22.9	22.4	22.0	22.1	21.8	22.1	20.4
환경	3.1	2.8	3.2	2.5	2.9	2.9	3.1	3.1	3.2	3.2	2.5
주택	4.0	3.8	3.7	4.1	4.6	3.7	3.7	3.6	3.6	4.2	3.5
보건	9.9	11.0	10.9	9.3	10.8	11.5	12.4	13.0	12.9	13.1	15.2
문화여가	2.8	2.3	2.4	2.5	2.8	2.7	2.7	2.5	2.5	2.5	2.3
교육	17.3	18.0	18.0	15.6	18.8	18.0	16.7	15.9	16.3	15.8	15.5
사회보장	9.2	9.8	9.6	9.0	10.1	11.1	11.4	12.2	12.4	12.4	12.6

주: 1) 정부지출구성은 정부 총 지출액 중 해당 지출항목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2013.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정부지출구성, 2010



주: 1) 정부지출구성은 정부 총 지출액 중 해당 지출항목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기타 항목은 치안, 환경, 주택, 문화여가 항목 등이 포함됨.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2013.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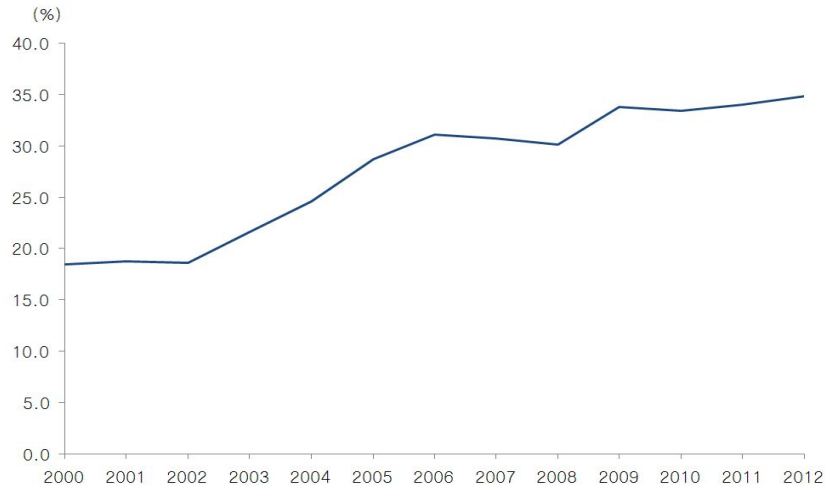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일반행정	15.2	11.7	11.5	12.8	12.1	10.6	13.3
국방	8.6	11.9	2.1	2.2	3.7	5.3	3.0
경제	20.4	9.5	9.6	10.0	6.1	6.2	8.7
보건	15.2	20.9	17.0	15.0	14.1	16.3	13.5
교육	15.5	15.7	8.8	9.0	10.6	13.8	13.3
사회보장	12.6	21.7	42.1	43.1	42.7	35.7	41.2
기타	12.5	8.6	9.0	7.9	10.8	12.0	7.0

1.2.2. 재정안정성

12204. 국가채무비율

■ 주요지표

국가채무비율, 2000-2012



주: 1)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정부는 일반정부 기준임.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각 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총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여기에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채무를 뺀 채무액 액수로 계산됨.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채무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합산을 막기 위해서임.
- 측정 방법: 국가채무비율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 GDP × 100.

• 지표의 의의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수록 세입 가운데 이자지급에 충당되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의 필요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의 가능성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본시장,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의심받게 되어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하였듯이 채무상환불능, 다시 말해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국가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IMF 등 국제기구, 국제자본시장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기한이나 상환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조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 해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현재 35% 수준으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이 해마다 기복은 있으나 2000년 18.4%에서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그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를 시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의 예산낭비 및 재무상태 악화가 여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국내총생산 대비 지방정부채무의 비율을 보면 대체로 3% 미만의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일반정부 이외에도 정부의 출자, 투자 혹은 재정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에는 공기업과 준공기업은 아니지만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국가채무, 공기업 부채, 준정부기관 부채를 합산한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채무비율보다 높으며, 200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려가 되는 것은 공공부문부채비율이 2004년 40.4%에서 2012년 72.8%로 그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이다.

IMF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은 모두 80%에 근접하거나 이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미국이 102.5%, 일본이 230.3%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의 국가채무 상환위기 가능성이 그다지 거론되지 않는 것은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국내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 미국의 경우 달러화가 국제기축통화로 미국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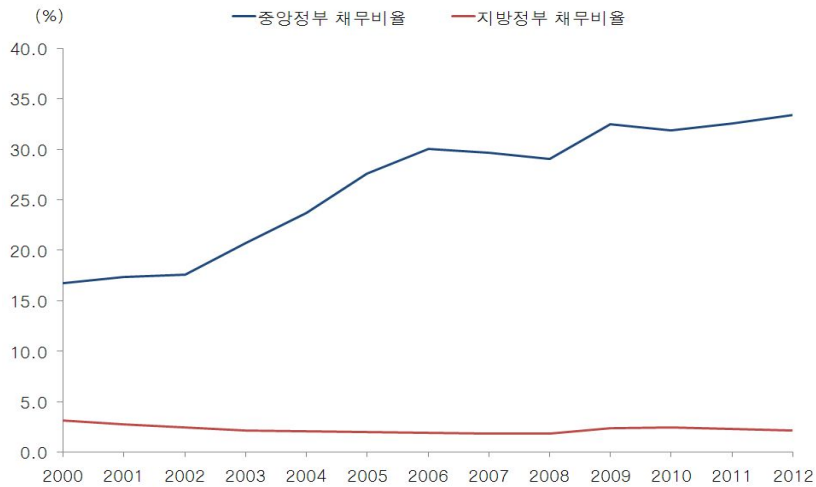
국가채무비율, 2000-20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채무(조원)	111.2	121.8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국내총생산(조원)	603.2	651.4	720.5	767.1	826.9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3.3	1,235.1	1,272.5
국가채무비율(%)	18.4	18.7	18.6	21.6	24.6	28.7	31.1	30.7	30.1	33.8	33.4	34.0	34.8

주: 1)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총국가채무의 비율임.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각 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 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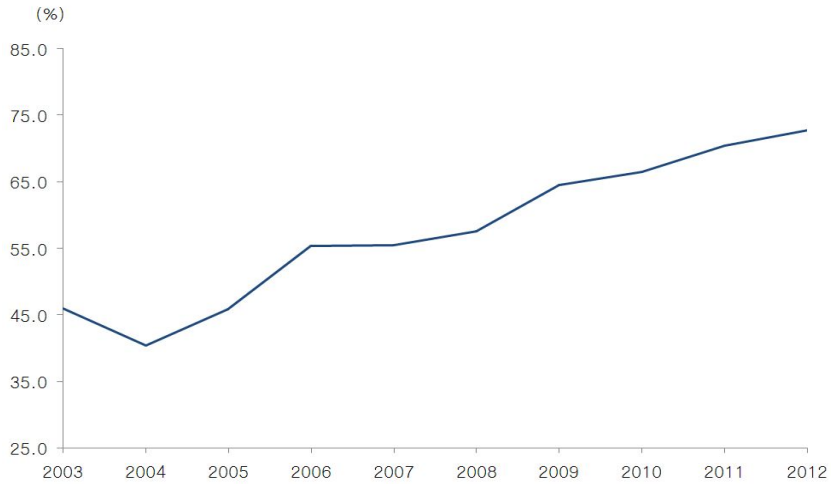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비율, 2000-2012



주: 1) 채무비율은 각각 GDP 대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채무의 비율.
 출처: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안전행정부, 「지방채무현황」, 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앙정부	16.7	17.4	17.6	20.7	23.7	27.6	30.1	29.7	29	32.5	31.9	32.6	33.4
지방정부	3.1	2.7	2.5	2.2	2.0	2.0	1.9	1.9	1.9	2.4	2.5	2.3	2.1

공공부문 부채비율,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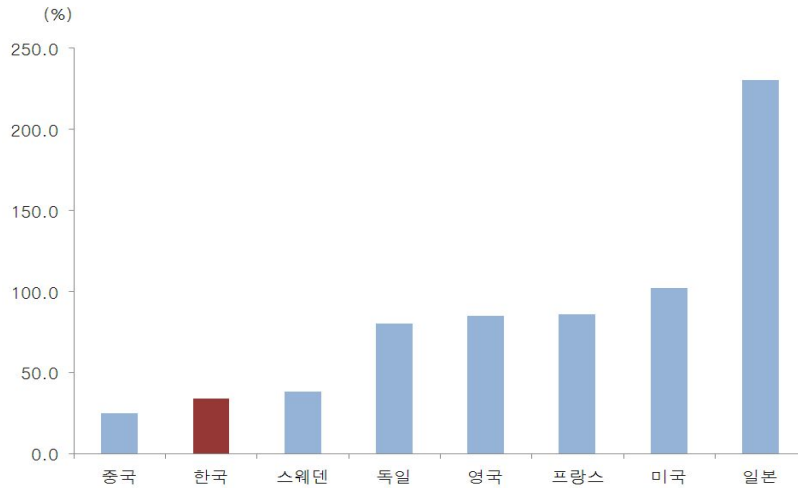


주: 1) 공공부문부채비율 = (일반정부부채무 + 공기업 부채 + 준정부기관부채) ÷ GDP × 100.
 3) 통계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예보채상환기금 등),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기금), 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등 3개 기관은 제외함.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각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 각년도. 한국은행, 「국민소계정」, 각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공공부문 부채비율	46.0	40.4	45.9	55.3	55.5	57.6	64.5	66.5	70.4	72.8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국가채무비율,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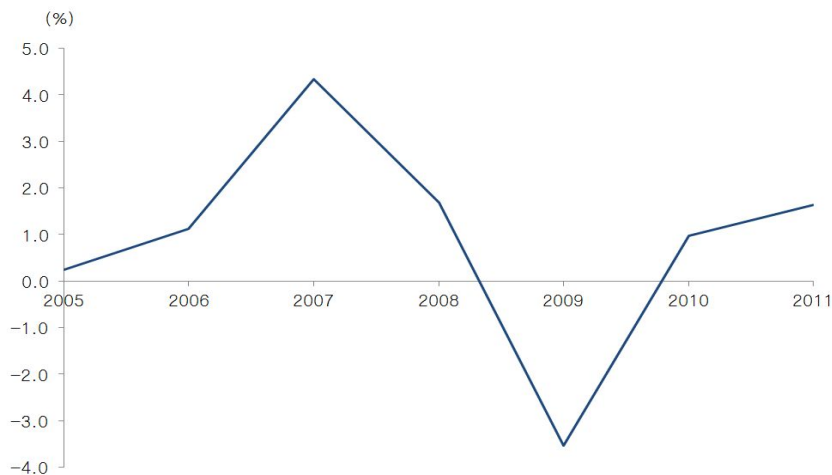
주: 1)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정부는 일반정부 기준임.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국가채무비율	34.2	102.5	25.5	230.3	80.5	86	85.4	38.3

12205. 재정수지비율

■ 주요지표

통합재정수지비율, 2005-2011



주: 1) 통합재정수지비율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임. 정부는 일반정부 기준임,
출처: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통합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임. 재정수지(收支)란 크게 보아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 다시 말해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말하며, 여기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를 지칭함.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이외에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로 분리하여 관리되는 특별회계 (예를 들면 우편사업특별회계 등),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정되는 기금 (예를 들면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정의됨.
- 측정 방법: $\text{통합재정수지비율} = (\text{통합재정세입} - \text{통합재정세출 및 순융자}) \div \text{GDP} \times 100$.

● 지표의 의의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정부재정은 흑자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되며,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가 누증하게 된다. 당해 연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하는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채무비율과 함께 재정 안정성을 가늠케 하는 주요 지표이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없거나 0에 가까울 때에는 균형재정을 이루었

다고 말한다. 계속되는 적자재정이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매년 균형재정을 편성해야 옳은 것은 아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경기부양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한 경기순환주기를 통틀어 균형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정재건이라 하여 흑자재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재정 안정성 회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 해설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09년을 제외하고 흑자재정임을 알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대비 중앙정부재정수지비율은 2005년 이후 6% 이상의 흑자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재정비율은 2% 이상의 적자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방만하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세입으로 되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에 비해 월등히 높고, 지방정부 재정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재정에서 이전되는 수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지방재정제도는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실제 부담과 관계없이 상위정부에서 이전재원을 보장해주는 구조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재원 확보보다는 추가적인 재정수요를 유발하여 더 큰 이전재원을 확보하려 하며, 이는 지방정부의 적자재정의 주요한 이유이다.

2011년 기준으로 OECD 주요국 및 중국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자재정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를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극복한 것과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에 비하여 재정 지출 억제에 상대적으로 규율을 잘 유지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가채무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로 통합재정수지의 흑자에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아직까지는 인구고령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연금수령인구가 비교적 적은 탓으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게 되면 연금 수급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에 연유한 착시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차감하고,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더한 이른바 관리재정수지를 함께 계산하여 재정 안정성의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에 잠깐 흑자를 기록한 이후로 적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정부는 2014년을 기점으로 관리재정수지 기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비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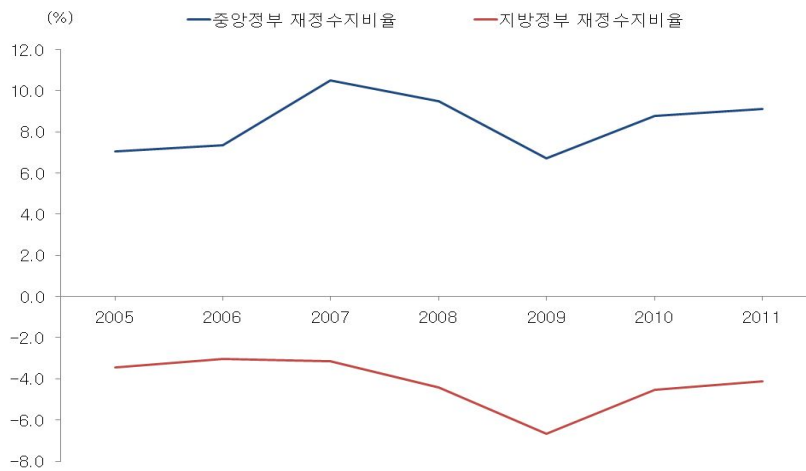
통합재정수지비율, 2005-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통합재정수지(조원)	2.0	10.2	42.3	17.3	-37.7	11.4	20.3
국내총생산(조원)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3.3	1,235.2
통합재정수지비율(%)	0.2	1.1	4.3	1.7	-3.5	1.0	1.6

주: 1) 통합재정수지비율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임. 정부는 일반정부 기준임.
출처: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수지비율, 200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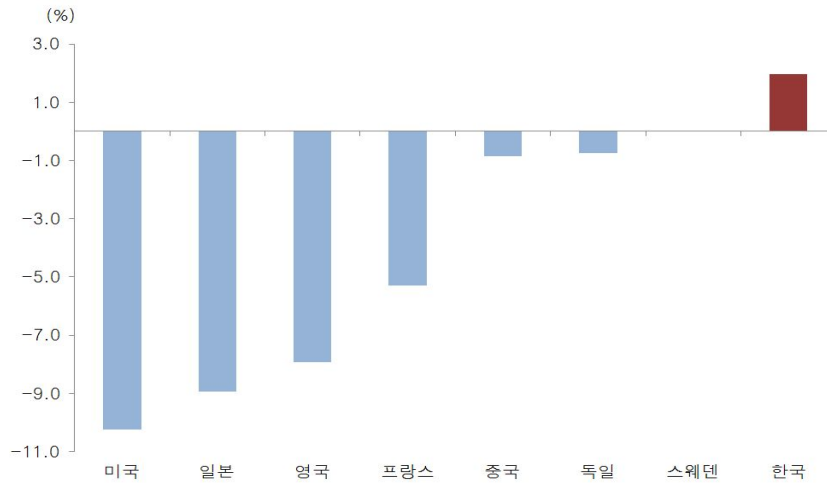
주: 1) 재정수지비율은 각각 GDP 대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수지의 비율임.
출처: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앙정부	7.1	7.4	10.5	9.5	6.7	8.8	9.1
지방정부	-3.5	-3.0	-3.1	-4.4	-6.7	-4.5	-4.1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통합재정수지비율, 2011



주: 1) 통합재정수지비율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임. 정부는 일반정부 기준임.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93 database*, 2013.
 IMF, *Fiscal Adjustment in an Uncertain World*,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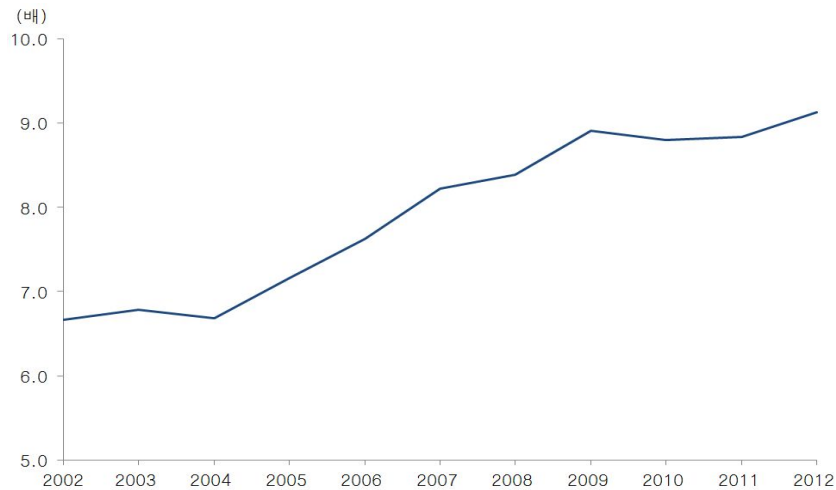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통합재정수지비율	2.0	-10.2	-0.9	-8.9	-0.8	-5.3	-7.9	0.0

1.2.3. 금융시장규모

12306. 금융자산비율

■ 주요지표

금융연관비율, 2002-2012



주: 1) 금융연관비율= 총 금융자산 ÷ GDP.
출처: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각 년도;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금융자산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예탁금, 주식, 채권, 어음 등을 포함하는 신용자산을 뜻함. 금융연관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총 금융자산 비율을 나타냄. 국민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면 금융자산의 규모가 한 해의 국내총생산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금융연관비율은 배율로 표현됨.
- 측정 방법: $\text{금융연관비율} = \text{총 금융자산} \div \text{국내총생산(GDP)}$.

● 지표의 의의

금융시장은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저축 등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연관비율은 금융시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 주는 주요 지표이다. 하지만 금융연관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파생금융상품이 급증하게 되면 금융연관비율도 덩달아 상승할 것이다. 이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에서 목격된 바와 같이 금융위기를 촉발시켜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금융연관비율은 2002년 6.7배에서 2012년 9.1배로 상승하였으며 대체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채권과 같은 신용자산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의 금융연관비율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영국 19.1배, 일본 12.5배, 스웨덴, 10.3배, 미국 9.2배).

기업 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필요자금을 충당하는 주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그 주식이 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들에게 의해 거래되게 되는데, 주식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업을 상장회사라고 하고,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되는 것을 기업공개라고 한다. 상장회사마다 발행주식수를 거래소 시가로 곱하면 주주의 입장에서 본 회사의 시장가치, 즉 시가가 계산되고, 상장회사들의 시가를 모두 합치면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비율은 2003년 51.2%에서 2012년 9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경기가 호전되거나 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되어 상장회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인 경우가 있고,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기업의 수 및 상장된 주식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시가총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 기업들이 신규상장으로 조달한 자금 총액을 나타내는 기업공개실적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9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시장(주식)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업이나 가계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은행 입장에서는 여신(與信)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은행부문 총여신의 비율을 나타내는 총여신비율은 2002년 65.5%에서 2012년 86.4%로 증가하였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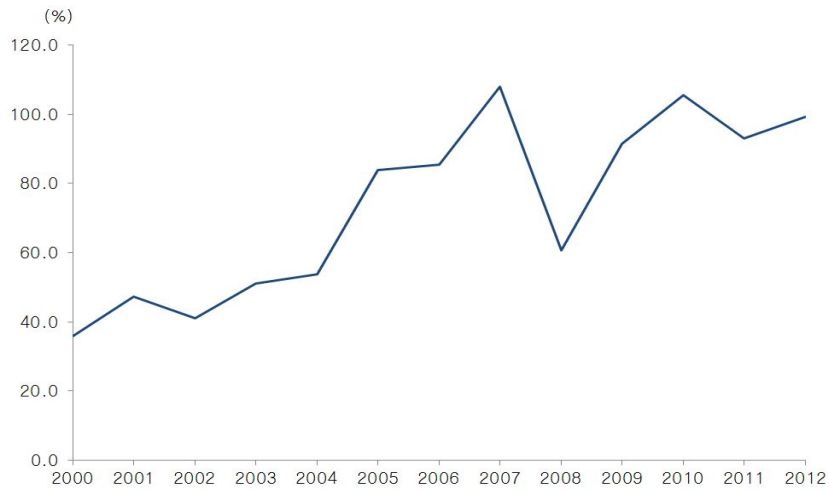
금융연관비율, 2002-201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금융자산(조원)	4,804.2	5,206.7	5,524.7	6,199.0	6,933.7	8,014.1	8,612.1	9,490.1	10,328.5	10,915.6	11,618.0
국내총생산(조원)	720.5	767.1	826.9	865.2	908.7	975.0	1,026.5	1,065.0	1,173.3	1,235.2	1,272.5
금융연관자산비율	6.7	6.8	6.7	7.2	7.6	8.2	8.4	8.9	8.8	8.8	9.1

주: 1) 금융연관비율= 총 금융자산 ÷ GDP.
출처: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각 년도;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주식시가총액비율,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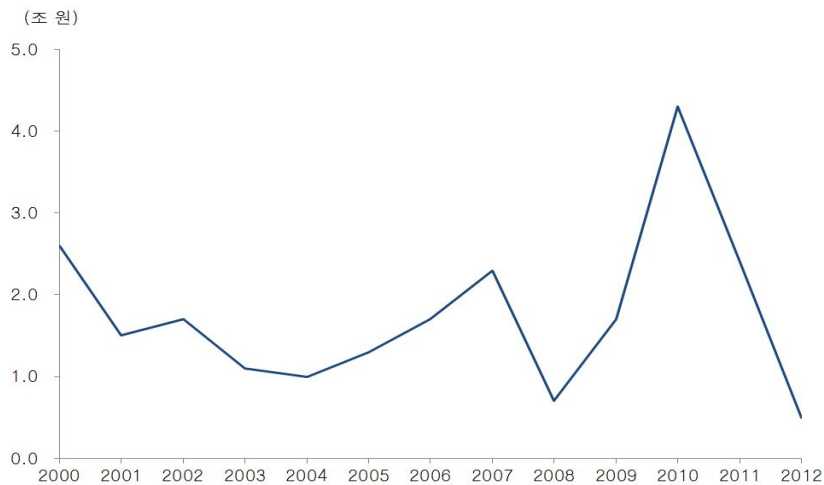


주: 1) 주식시가총액비율은 GDP 대비 주식시가총액의 비율임. 주식시가총액은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합으로 상장기업 시가총액은 상장주식수와 주가의 곱으로 산출함. 연말 기준임.
출처: 한국거래소, 「KRX 상장주식(총괄)」, 각 년 12월.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식시가총액비율	36.0	47.2	41.1	51.2	53.7	83.9	85.5	107.9	60.7	91.5	105.4	92.9	99.3

기업공개실적, 2000-2012



주: 1)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기업들이 신규상장으로 조달한 자금 총액.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업공개실적	2.6	1.5	1.7	1.1	1.0	1.3	1.7	2.3	0.7	1.7	4.3	2.4	0.5

총여신비율,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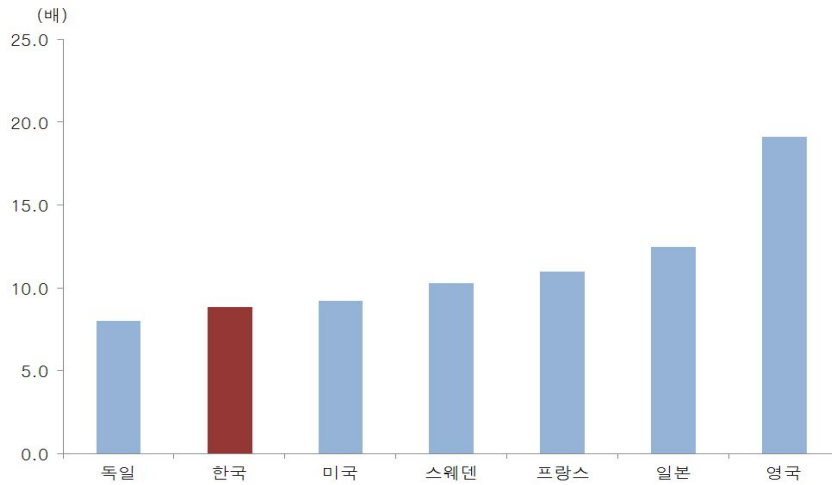
주: 1) 총여신비율은 GDP 대비 총 은행부문 여신의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여신비율	51.5	54.9	65.5	70.2	68.4	71.0	77.0	82.4	89.3	89.5	84.1	86.1	86.4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금융연관비율, 2011



주: 1) 금융자산비율=총 금융자산 ÷ GDP.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2013.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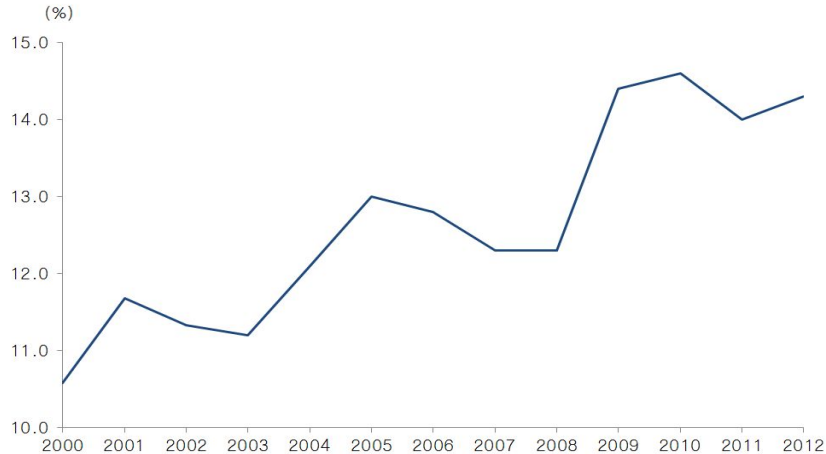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금융연관자산비율	8.8	9.2	12.5	8.0	11.0	19.1	10.3

1.2.4. 금융시장안정성

12407. BIS자기자본비율

■ 주요지표

BIS자기자본비율, 2000-2012



주: 1) BIS자기자본비율 = {(은행부문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이른바 위험가중자산의 크기로 나눈 비율을 퍼센트로 표현한 것임. 여기서 위험가중자산은 대출 등 은행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위험의 정도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것으로, 위험이 높은 자산일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대출자가 상환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부실채권이 누적되면 해당은행의 손실을 넘어 경제전반의 신용경색 및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함.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각 은행으로 하여금 계산하여 공표하게 하고 일정수준 이상으로 그 비율을 유지하도록 권고 혹은 강제하고 있음. BIS란 스위스 바젤에 소재한 국제결제은행을 말함.
- 측정 방법: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div 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지표의 의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서, 은행의 청산능력, 다시 말해 은행이 잠재적으로 떠안고 있는 리스크(위험가중자산)를 자기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더 나아가 한 국가의 은행부문 전체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여 그 국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국가별 BIS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에서 국제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지표로 된다. BIS 자기자본비율 도입 목적은 은행들의 과도한 위험자산 보유를 제한하여 일차적으로는 예금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은행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의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 해설

BIS자기자본비율은 1993년 한국에 도입되었고, 1995년 연말부터는 BIS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의 주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은행들의 위험자산 관리 실패가 지목된다. 2003년 이후 한국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여 국제자본시장에서 우량은행으로 평가 받는 10%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은행부문 총여신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상환되지 않는 부실여신 비중을 나타내는 이른바 무수익여신의 비율도 2003년 2.6%에서 2012년 1.3%로 낮아져 금융시장 안정성이 계속 개선되고 있음을 방증해 주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BIS자기자본비율은 OECD 주요 선진국 및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이다(한국 14.0%, 미국 14.7%, 일본 14.2%, 중국 12.7%).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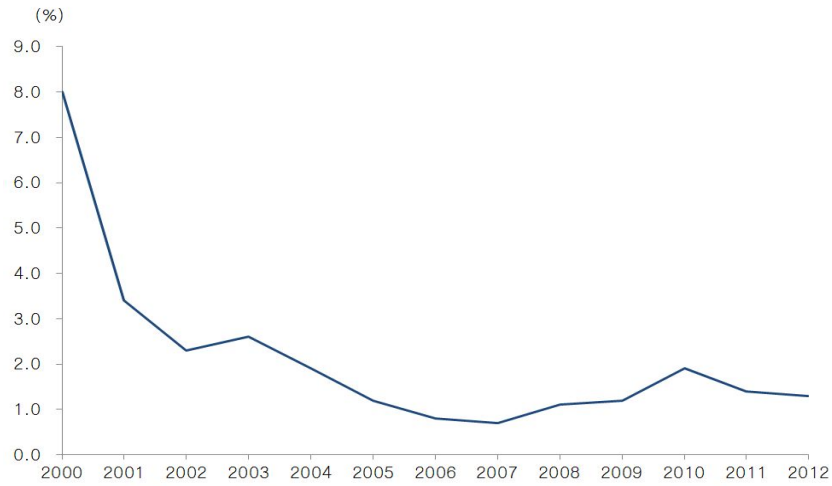
BIS자기자본비율, 2000-2012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BIS자기자본비율	10.6	11.7	11.3	11.2	12.1	13.0	12.8	12.3	12.3	14.4	14.6	14.0	14.3

주: 1) BIS자기자본비율 = {(은행부문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조지표

무수익여신비율,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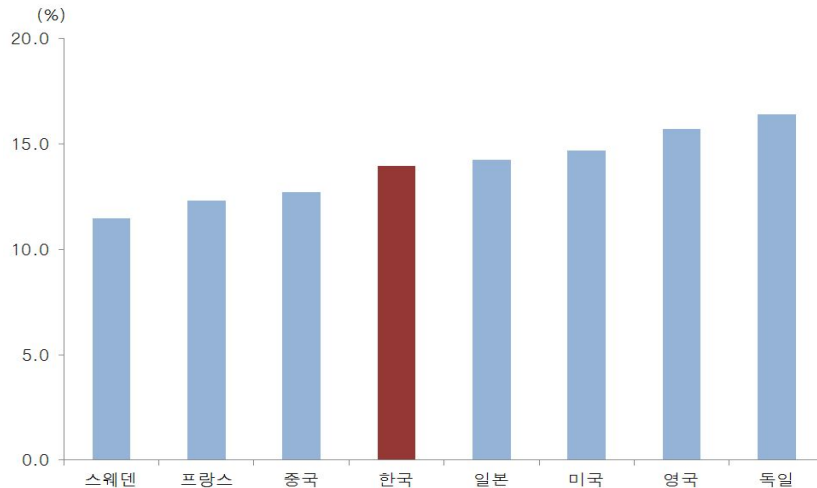
주: 1) 무수익여신비율은 은행부문 총여신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여신(고정이하여신)의 비율임.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무수익여신비율	8.0	3.4	2.3	2.6	1.9	1.2	0.8	0.7	1.1	1.2	1.9	1.4	1.3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BIS자기자본비율, 2011



주: 1) BIS자기자본비율 = {(은행부문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출처: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F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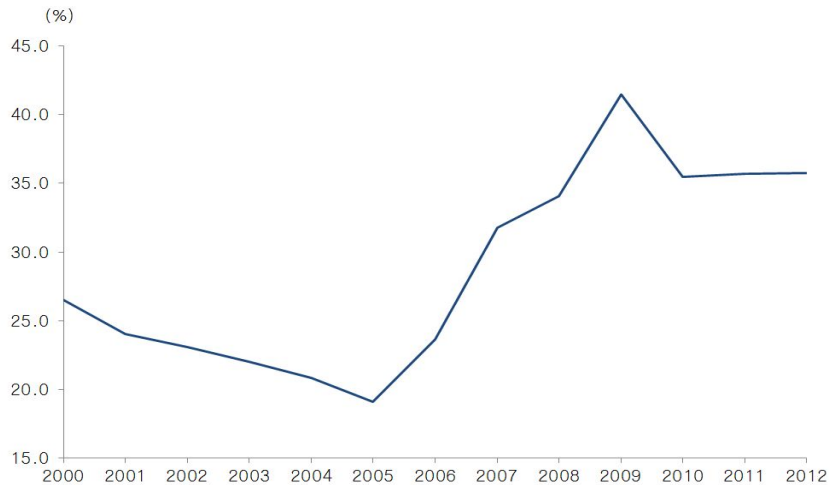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BIS자기자본비율	14.0	14.7	12.7	14.2	16.4	12.3	15.7	11.5

12408. 대외채무비율

■ 주요지표

대외채무비율, 2000-2012



주: 1) 대외채무비율은 GDP 대비 대외채무의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각 년도;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대외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을 나타냄. 여기서 대외채무란 일정시점에 일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미래 특정 시점에 금융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확정채무의 잔액을 뜻함.
- 측정 방법: 대외채무비율 = {(대외채무 ÷ 국내총생산(GDP))} × 100.

● 지표의 의의

대외채무는 한 국가가 외국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이며 채무는 상환기간이 정해져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빚을 뜻한다. 대외채무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외채와 1년 이상 만기를 가지고 있는 장기외채로 나뉜다. 과도한 대외채무는 국가의 유동성 위기 및 지급불능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외채무비율, 특히 단기외채비율은 금융시장 안정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을 나타내는 대외채무비율은 한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또한, 타 국가들과의 비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 해설

한국의 대외채무비율은 2000년 26.5%로부터 2005년 19.1%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6년(23.7%)부터 2012년(35.8%)까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외채비율은 2000년 9.3%에서 2007년 22.2%로 증가하였다. 2008년 이후에는 10% 중반대로 낮아졌으며, 2012년 기준 15.2%이다.

외환보유액비율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7년 36.3%에서 2008년 23.8%로 낮아졌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 기준 39.2%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외환보유액은 정부의 자산으로서 중앙은행 및 외국 국립은행 등에 예치된 외국 통화 예금의 총액을 뜻한다. 외환보유액비율은 대외채무비율(2012년 35.8%)과 비교하여 안정적인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대외채무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외채무비율(35.7%)은 중국보다는 다소 높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영국 409.6%, 프랑스 186.2%, 독일 148.0%, 미국 102.9%, 중국 13.3%).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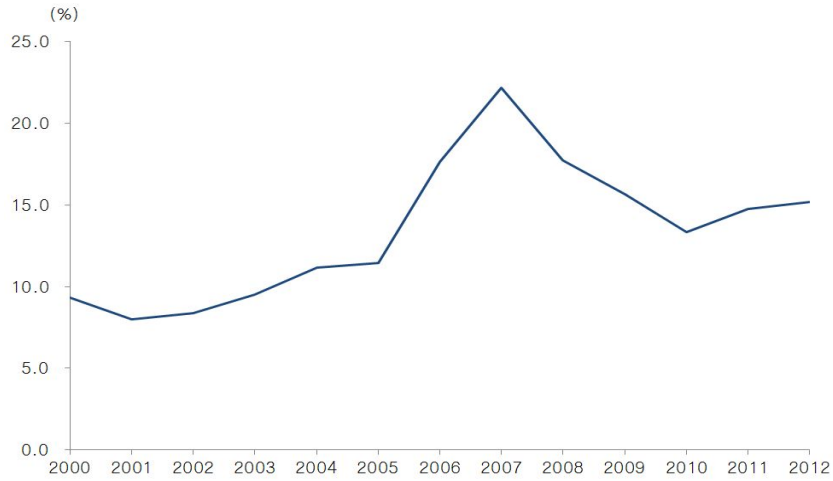
대외채무비율, 2000-20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대외채무(억 달러)	1,414.0	1,213.0	1,328.0	1,416.5	1,506.3	1,614.1	2,252.0	3,334.3	3,173.7	3,456.8	3,597.6	3,987.2	4,135.7
국내총생산(억 달러)	5,333.9	5,045.8	5,759.3	6,437.6	7,219.8	8,448.7	9,517.7	10,492.4	9,314.1	8,340.6	10,148.9	11,162.5	11,558.7
대외채무비율 (%)	26.5	24.0	23.1	22.0	20.9	19.1	23.7	31.8	34.1	41.4	35.4	35.7	35.8

주: 1) 대외채무비율은 GDP 대비 대외채무의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각 년도;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단기외채비율, 2000-2012



주: 1) 단기외채비율은 GDP 대비 1년 미만 외채의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각 년도;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기외채비율	9.3	8.0	8.4	9.5	11.2	11.4	17.7	22.2	17.7	15.7	13.3	14.8	15.2

외환보유액비율,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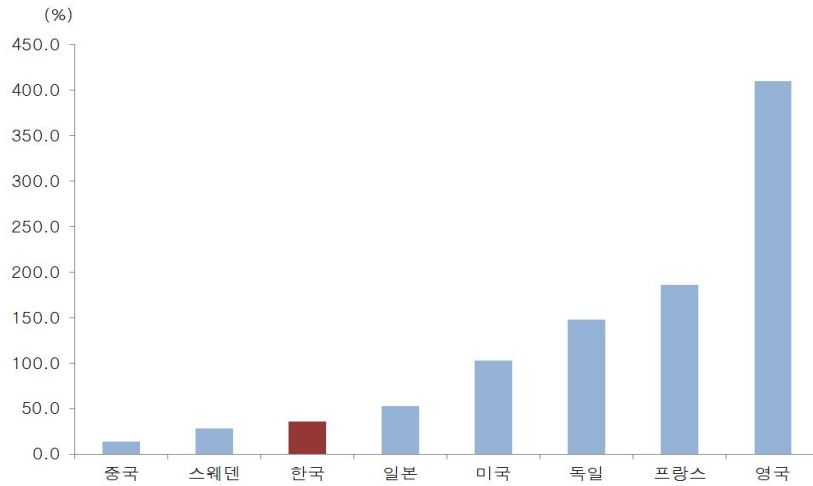
주: 1) 외환보유액비율은 GDP 대비 외환보유액의 비율임.
출처: 한국은행,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각 년도;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외환보유액비율	18.0	20.4	21.1	29.1	39.5	36.5	37.1	36.3	23.8	28.4	27.8	32.9	39.2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대외채무비율, 2011



주: 1) 대외채무비율은 GDP 대비 대외채무의 비율임.
 출처: World Bank, *Quarterly External Debt Statistics*.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3.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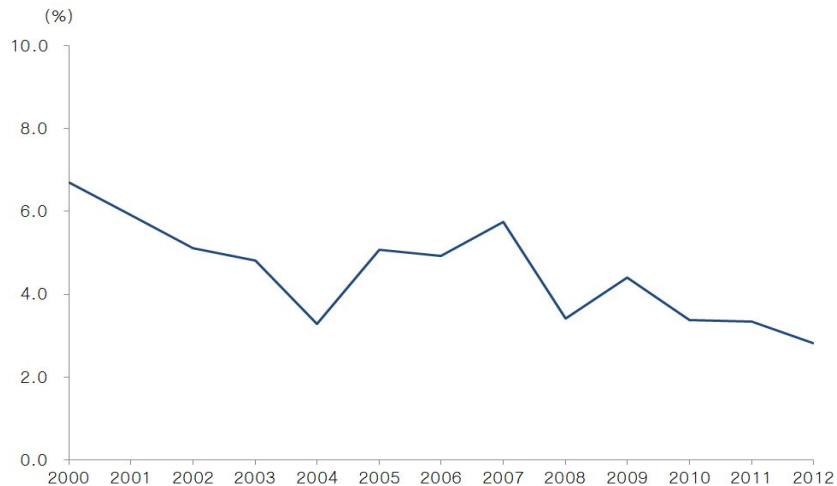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대외채무비율	35.7	102.9	13.3	52.8	148	186.2	409.6	28.4

1.2.5. 금융시장

12509. 국고채금리

■ 주요지표

국고채 금리, 2000-2012



주: 1) 국고채금리는 연말 기준 3년 만기 정부채권의 수익률임.
출처: Bloomberg.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국고채 금리는 보통 대표적인 국고채인 3년 만기 정부채권의 수익률로 나타냄. 국고채는 국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행하며, 발행업무는 한국은행이 대행함.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국고채도 만기가 되면 원금과 미리 확정된 이자를 받게 되지만,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시장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수익률도 함께 변동함. 예를 들어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수익률 즉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는 셈이 됨.
- 측정 방법: 연말 기준.

● 지표의 의의

국고채금리는 정부 발행 채권의 유통수익률을 나타낸다. 특히, 3년 만기 국고채는 정부발행 채권 중 가장 유통 물량이 많은 채권이며,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우리나라 시장금리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장기시장금리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타 국가 국고채 금리들과의 비교를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국제비교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 해설

한국의 국고채금리(3년 만기물)는 2000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말 기준 6.70%였던 국고채 금리는 2004년 말 3.28%까지 하락하였다. 2005년 이후 국고채 금리는 2007년 연말기준 5.74%까지 상승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라 2012년말 2.82%까지 하락 하였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결정하는 정책금리로서 금융 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연말기준, 2007년 5.00%, 2012년 2.75%).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을 반영한다.

금융기관 간 단기차입 금리를 나타내는 콜금리(1일물)와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인 회사채(AA- 등급, 3년 만기) 금리도 기준금리 추세에 따라 2008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연말기준, 콜금리는 2.75%이며 회사채 금리는 3.29%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역시 2008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5년 만기 국고채는 2012년 기말 기준 1% 이하의 금리를 보이고 있다(미국 0.72%, 일본 0.18%, 독일 0.30%, 영국 0.86%).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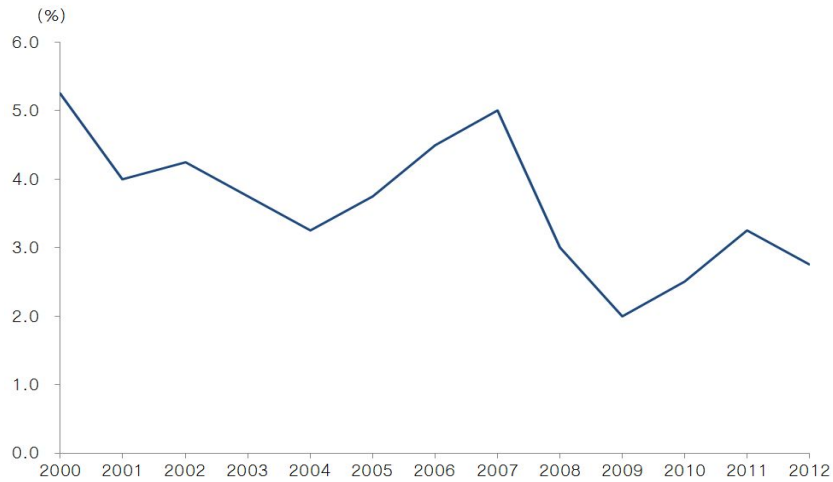
국고채금리, 2000-2012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고채금리	6.70	5.91	5.11	4.82	3.28	5.08	4.92	5.74	3.41	4.41	3.38	3.34	2.82

주: 1) 국고채금리는 연말 기준 3년 만기 정부채권의 수익률임.
출처: Bloomberg.

■ 보조지표

기준금리,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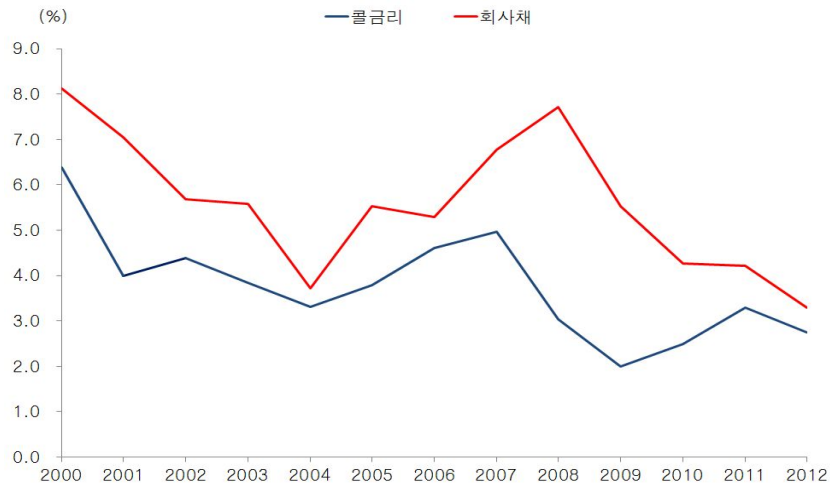


주: 1) 연말 기준.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여수신금리", 경제통계시스템.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준금리	5.25	4.00	4.25	3.75	3.25	3.75	4.50	5.00	3.00	2.00	2.50	3.25	2.75

콜금리, 회사채 금리, 2000-2012



주: 1) 연말 기준.
2) 콜금리 1일물, 회사채 AA- 등급, 3년만기물.
출처: Bloomberg.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콜금리	6.38	4.00	4.38	3.84	3.31	3.78	4.61	4.97	3.03	2.00	2.49	3.29	2.75
회사채	8.13	7.04	5.68	5.58	3.72	5.52	5.29	6.77	7.72	5.53	4.27	4.21	3.29

■ 국제비교지표

해외 주요 시장금리, 2000-2012

(%)

연도	미국 (재무부증권 5년물)	일본 (정부채 5년물)	독일 (정부채 5년물)	영국 (정부채 5년물)	한국 (국고채 5년물)	한국 (국고채 3년물)
2000	4.98	0.96	4.51	5.17	6.91	6.70
2001	4.30	0.55	4.40	5.12	6.73	5.91
2002	2.74	0.30	3.40	4.18	5.34	5.11
2003	3.22	0.61	3.50	4.60	5.06	4.82
2004	3.61	0.61	3.03	4.49	3.39	3.28
2005	4.35	0.86	3.07	4.17	5.36	5.08
2006	4.69	1.25	3.92	5.06	5.00	4.92
2007	3.44	1.02	4.12	4.41	5.78	5.74
2008	1.55	0.69	2.32	2.43	3.77	3.41
2009	2.68	0.47	2.42	2.80	4.92	4.41
2010	2.01	0.41	1.84	2.20	4.08	3.38
2011	0.83	0.35	0.76	1.05	3.46	3.34
2012	0.72	0.18	0.30	0.86	2.97	2.82

주: 1) 연말 기준.
출처: Bloomberg.

해외 주요 정책금리, 2000-2012

(%)

연도	미국 (Fed Fund Rate)	유로 (Refinancing Rate)	일본 (Overnight Call Rate)	중국 (1-year Lending Rate)	한국 (기준금리)
2000	6.50	4.75	0.25	5.85	5.25
2001	1.75	3.25	0.00	5.85	4.00
2002	1.25	2.75	0.00	5.31	4.25
2003	1.00	2.00	0.00	5.31	3.75
2004	2.25	2.00	0.00	5.58	3.25
2005	4.25	2.25	0.00	5.58	3.75
2006	5.25	3.50	0.25	6.12	4.50
2007	4.25	4.00	0.50	7.47	5.00
2008	0.25	2.50	0.10	5.31	3.00
2009	0.25	1.00	0.10	5.31	2.00
2010	0.25	1.00	0.05	5.81	2.50
2011	0.25	1.00	0.05	6.56	3.25
2012	0.25	0.75	0.05	6.00	2.75

주: 1) 연말 기준
출처: Bloomberg.

12510. 코스피주가지수

■ 주요지표

코스피 주가지수, 2000-2012



주: 1) 연말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주식통계: 주가지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코스피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가의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임. 코스피 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기준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지수를 산출할 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중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에 의해 주가 또는 상장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총액과 비교시가총액을 수정함.
- 측정 방법: $\text{코스피 주가지수}^1) = \{(\text{비교시점의 주식 시가총액} \div \text{기준시점의 주식 시가총액})\} \times 100$

● 지표의 의의

코스피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가늠하는데 활용되는 주요지표이다. 또한, 상장기업의 시가는 주식시장이 평가하는 기업의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유력한 경기선행지표로도 활용된다.

1) 신기준시가총액 = 구기준시가총액 × {(변동전일의 비교시가총액 ± 비교시가총액 변동액)} ÷ 변동전일의 비교시가총액

● 해설

코스피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들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산출되고 있다. 기준시점은 1980년 1월 4일이며 기준 값은 100이다. 이는 2012년 말 기준(1984.80)으로 기준시점(1980년 1월, 100) 대비 시가총액이 약 20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스피 주가지수는 2000년 이후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코스닥 주가지수 역시 시가총액식으로 산출되고 있다. 코스닥 주가지수 기준시점은 1996년 7월 1일이며 기준지수는 1,000이다(2004년 1월 26일, 100에서 1000으로 기준지수 조정). 2012년말 기준으로 코스닥 주가지수는 493.66으로 기준시점(1996년 7월) 대비 50% 수준이다.

해외 주요 지수(미국 다우존스, 일본 니케이225, 영국 FTSE100, 독일 DAX, 중국 상하이B)들은 코스피 지수와 같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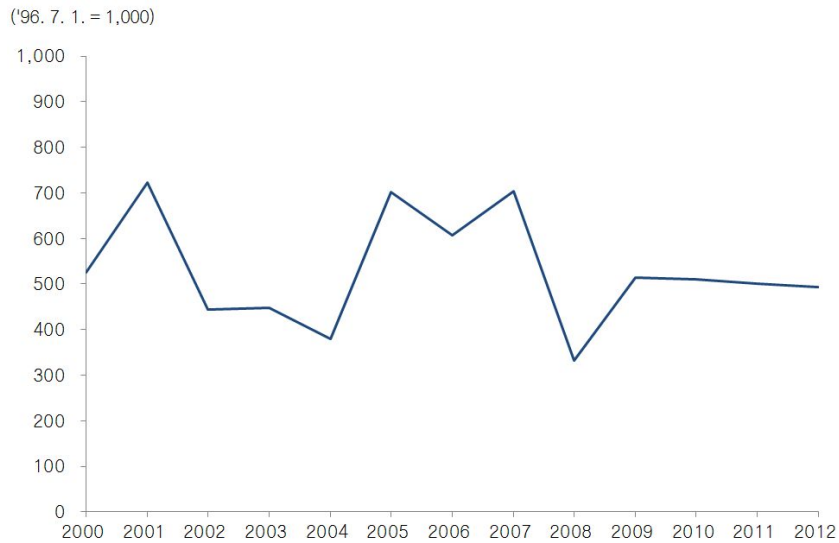
코스피 주가지수, 2000-20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코스피 주가지수	504.6	693.7	627.6	810.7	895.9	1,379.4	1,434.5	1,897.1	1,124.5	1,682.8	2,051.0	1,826.0	1,984.8

주: 1) 연말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주식통계: 주가지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보조지표

코스닥 주가지수, 2000-2012



주: 1) 연말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주식통계: 주가지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코스닥지수	525.8	722.1	444.0	448.7	380.3	701.8	606.2	704.2	332.1	513.6	511.0	500.0	493.7

■ 국제비교지표

해외 주요 주가지수, 2000-2012

연도	코스피 (한국)	다우존스 (미국)	니케이225 (일본)	상하이B (중국)	FTSE100 (영국)	DAX (독일)
2000	504.6	10,786.9	13,785.7	89.6	6,222.5	6,433.6
2001	693.7	10,021.5	10,542.6	171.5	5,217.4	5,160.1
2002	627.6	8,341.6	8,579.0	113.5	3,940.4	2,892.6
2003	810.7	10,453.9	10,676.6	104.9	4,476.9	3,965.2
2004	895.9	10,783.0	11,488.8	75.7	4,814.3	4,256.1
2005	1,379.4	10,717.5	16,111.4	62.0	5,618.8	5,408.3
2006	1,434.5	12,463.2	17,225.8	130.1	6,220.8	6,596.9
2007	1,897.1	13,264.8	15,307.8	365.9	6,456.9	8,067.3
2008	1,124.5	8,776.4	8,859.6	110.9	4,434.2	4,810.2
2009	1,682.8	10,428.1	10,546.4	252.4	5,412.9	5,957.4
2010	2,051.0	11,577.5	10,228.9	304.4	5,899.9	6,914.2
2011	1,825.7	12,217.6	8,455.4	215.3	5,572.3	5,898.4
2012	1,997.1	13,104.1	10,395.2	244.9	5,897.8	7,612.4

주: 1) 연말 기준.

출처: 한국은행, "주요국제통계: 주가지수", 경제통계시스템,

12511. 환율

■ 주요지표

원/달러 환율, 2000-2012



주: 1) 원/달러, 대미환율.
2) 연말·종가 기준.
출처: 한국은행, "원화의 대미환율 달러", 경제통계시스템.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원화와 미국 달러와의 교환비율로서 미국달러 대비 한국 원화의 가치를 나타냄.
- 측정 방법: 연말·종가기준

● 지표의 의미

원/달러 환율은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화와의 교환비율로서 달러화로 표시된 재화가 가격간 가치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개방경제하에서 환율은 국가간 경상/자본거래와 거시경제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율은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과 예측의 지표로 활용되며 지표분석을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가늠할 수 있다.

● 해설

한국 원화와 미국 달러와의 교환비율인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로 표시된 재화가 가격간 가치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지표이다. 환율상승은 원유와 같은 상품들의 수입 원가를 높여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수출기업에게는 수출가격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매출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환율이 국가간 경상/자본거래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환율은 금융시장 변동성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과 예측의 지표로 활용된다.

원/달러 환율은 2012년 연말기준, 1,070.6원이며 2008년 말 이후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2012년 말 기준, 2008년 말 대비환율 약 14% 하락).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²⁾과 이에 따른 달러화의 공급 증가의 영향이 크다. 한국의 원화와 같이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안화 역시 2008년 이후 달러 대비 대체로 강세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유로존의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대체로 약세/보합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원/달러 환율, 2000-2012

	(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환율	1,264.5	1,313.5	1,186.2	1,192.6	1,035.1	1,011.6	929.8	936.1	1,259.5	1,164.5	1,134.8	1,151.8	1,070.6

주: 1) 환율은 연말, 종가 기준임.
출처: 한국은행, "원화의 대비환율 달러", 경제통계시스템.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해외 주요 통화 환율, 2000-2012

연도	원/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유로/달러
2000	1,264.50	114.90	8.28	1.07
2001	1,313.50	131.80	8.28	1.13
2002	1,186.20	119.90	8.28	0.95
2003	1,192.60	107.10	8.28	0.79
2004	1,035.10	104.12	8.28	0.73
2005	1,011.60	117.97	8.07	0.85
2006	929.80	118.95	7.81	0.76
2007	936.10	114.00	7.30	0.68
2008	1,259.50	90.75	6.84	0.72
2009	1,164.50	92.06	6.83	0.69
2010	1,134.80	81.45	6.62	0.75
2011	1,151.80	77.72	6.30	0.77
2012	1,070.60	86.55	6.29	0.76

주: 1) 연말 기준.
출처: 한국은행, "주요국제통계: 환율", 경제통계시스템.

2) 양적완화정책: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로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는 정책

1.3. 산업과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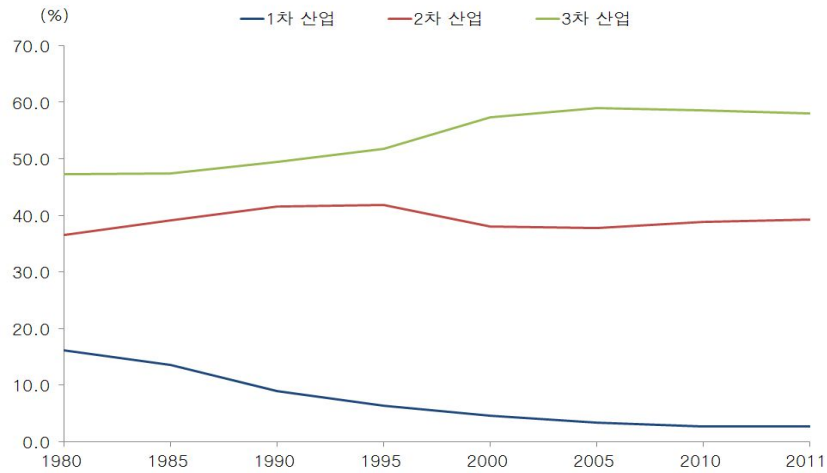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 산업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중도 • 식량자급률 • 전력공급예비율 • 서비스업 산업구성 	• 산업구성	
		• IT산업생산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생산 • 디스플레이생산 • 바이오산업생산 • IT산업생산 • 세계시장점유율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비율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생산성	• 노동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노동생산성	
		• 중소기업임금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 중소기업 신규진입률 		
	혁신	• 연구개발투자비율			• 연구개발투자비율
		• 특허출원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지출대비특허출원수 • 한국의 세계기술혁신순위 • 한국의 세계기술수용성순위 	• 특허출원수	

1.3.1. 산업구조

13101. 산업구성

■ 주요지표

산업구성, 1980-2011



주: 1) 산업구성 = (해당 산업별 부가가치 ÷ 국내총생산) × 100.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3.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산업구성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차, 2차, 3차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산업의 분류는 모든 종류의 생산업을 분류하여 농림어업 부문에 속하는 산업을 1차 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산업, 가스업 등의 부문에 속하는 산업을 2차 산업, 기타 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모든 업종을 3차 산업이라고 함.
- 측정 방법: 산업별 구성비율 = (각 산업의 부가가치 ÷ 국내총생산) × 100.

● 지표의 의의

산업 활동의 발전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산업 활동이 활발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실질소득이 상승한다. 한편, 산업 활동의 발전은 양적인 확대의 측면 뿐 만 아니라 산업구성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찰이 필요하다. 산업구성의 고도화는 각 산업부문에서의 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규모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지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구성을 관찰하는 것은 경제의 질적, 양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 해설

산업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 산업 비중의 감소와 3차 산업 비중의 확대를 볼 수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1995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이후 소폭의 하락을 겪은 뒤 다시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1차 산업의 감소와 3차 산업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성이 고도화 된 것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의 비중확대는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구조로 변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1차 산업의 경우 1980년 16.2%에서 2010년에는 2.7%로 대략 13%포인트의 하락을 보였고 2차 산업은 36.6%에서 39.2%로 소폭의 상승을 나타냈으며 3차 산업은 47.3%에서 58.1%로 약 11%포인트 증가하였다. 특히, 3차 산업을 주로 구성하는 서비스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에서 2010년의 기간 동안 도소매 및 숙박업과 운송, 창고 및 통신업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도소매 및 숙박업은 18.7%, 운송, 창고 및 통신업은 10.6%,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은 35.2% 그리고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35.4%를 기록하였다.

산업집중도를 통해 산업구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산업구조와 경쟁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장구조의 독과점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지표는 특히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산업의 경우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갖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식량자급률의 경우 한국의 산업구성에서 1차 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국민전체의 농축산물 수요와 공급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식량자급률의 관찰을 통해 농축산물의 수요와 공급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FTA로 인한 농산물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식량안보물량을 확보하고 적정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력공급예비율의 경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력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장기적인 전력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은 2003년 17.1%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예비율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11년에는 5.5%를 기록하였다. 전력의 경우 저장이 불가능하고 매순간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최대 전력수요보다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공급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여유정도를 파악하는데 전력공급예비율이 활용되며 이를 통해 전력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산업구성이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의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력공급 예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OECD 주요 국가들의 산업구성을 살펴보면, 선진국일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산업구성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2차 산업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으로 멕시코, 칠레 등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산업구성 비중의 변화가 다소 정체되고 있으나, 향후 우리경제의 산업구성이 더욱 고도화 될수록 선진국과 유사한 형태로 3차 산업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상세 통계표

산업구성, 1980-2011

연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980	16.2	36.6	47.3
1985	13.5	39.1	47.4
1990	8.9	41.6	49.5
1995	6.3	41.9	51.8
2000	4.6	38.1	57.3
2005	3.3	37.7	59.0
2010	2.6	38.8	58.5
2011	2.7	39.2	58.1

주: 1) 산업별 구성비율 = (해당 산업별 부가가치 ÷ 국내총생산) × 100.
출처: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3.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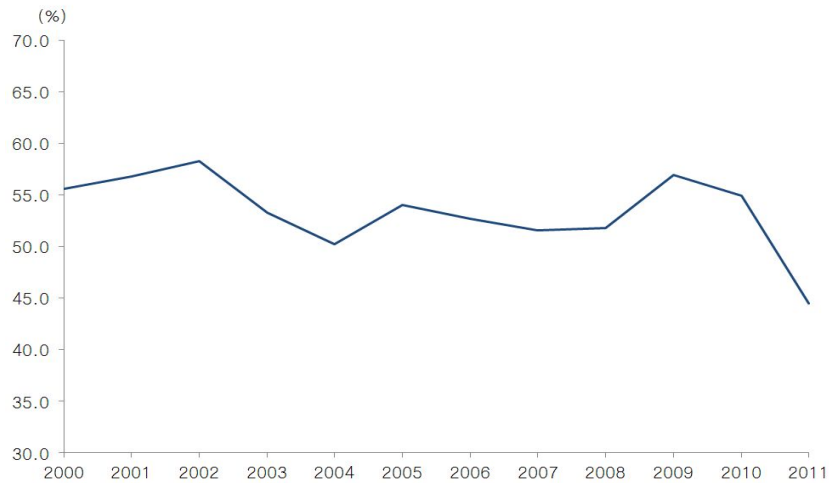
산업집중도, 2000-2010



주: 1) 산업집중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된 세세분류(5단위) 기준 CR3(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평균값.
출처: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각 년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산업집중도	44.0	43.4	40.7	40.9	42.1	41.7	45.6	45.2	45.4	45.0	45.0

식량자급률,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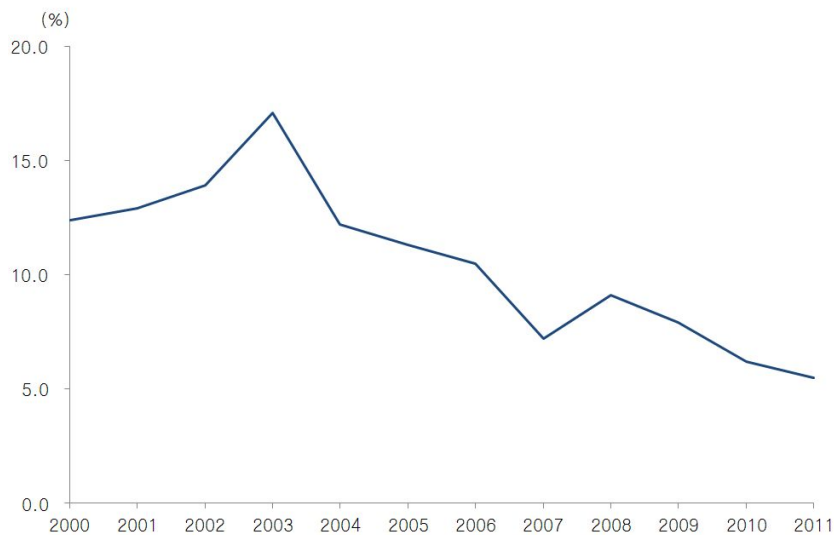


주: 1) 식량자급률 = (곡물 생산량과 축산물 생산량의 합계 ÷ 국내 소비량) × 100.
 출처: 통계청, 「양곡소비량조사」, 각 년도; 「작물통계」, 각 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양곡수급실적 및 계획」,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식량자급률	55.6	56.8	58.3	53.3	50.2	54.0	52.7	51.6	51.8	56.9	54.9	44.5

전력공급예비율,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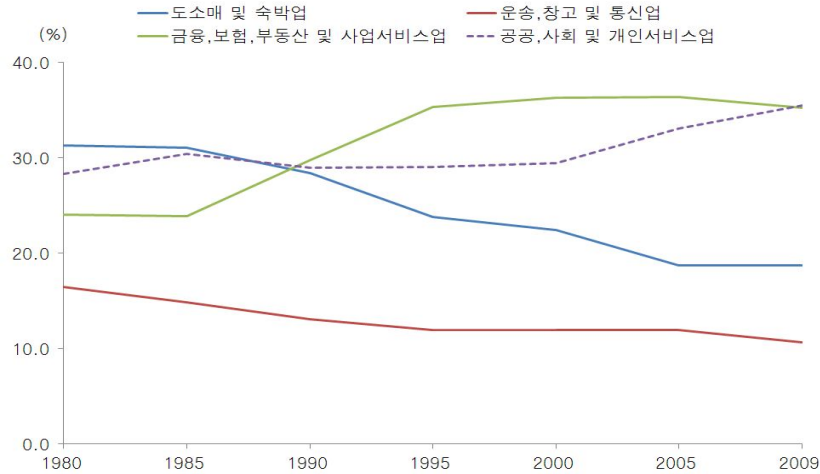


주: 1) 전력공급예비율 = (전력공급능력 - 최대전력수요) ÷ 최대전력수요 × 100.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력공급예비율	12.4	12.9	13.9	17.1	12.2	11.3	10.5	7.2	9.1	7.9	6.2	5.5

서비스업 산업구성, 198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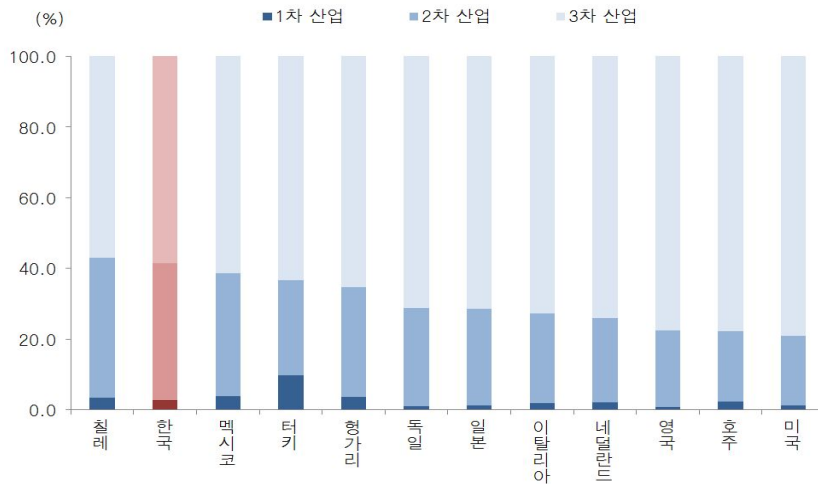
주: 1) 서비스업종 산업구성 = (각 서비스업 하위 부문의 부가가치 ÷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 100.
출처: OECD, *OECD stat*.

통계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도소매 및 숙박업	31.3	31.0	28.4	23.8	22.4	18.7	18.7
운송, 창고 및 통신업	16.4	14.8	13.0	11.9	11.9	11.9	10.6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4.0	23.9	29.7	35.3	36.3	36.4	35.2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8.3	30.4	28.9	29.0	29.4	33.0	35.4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산업구성, 2010



주: 1) 각 산업의 비중 = (각 산업의 부가가치 ÷ 국내총생산) × 100.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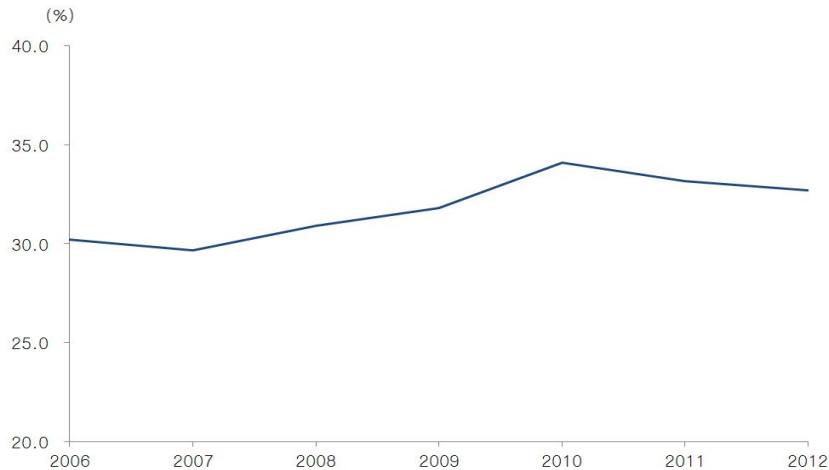
통계표

	칠레	한국	멕시코	터키	헝가리	독일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호주	미국
1차산업	3.4	2.6	3.9	9.6	3.5	0.9	1.2	1.9	2.0	0.7	2.3	1.2
2차산업	39.5	38.8	34.7	26.9	31.0	27.9	27.5	25.3	23.9	21.6	19.8	19.8
3차산업	57.0	58.5	61.4	63.4	65.4	71.2	71.4	72.8	74.2	77.7	77.9	79.0

13102. IT산업생산비율

■ 주요지표

IT산업생산비율, 2006-2012



주: 1) IT산업생산비율=(IT산업의 연간 총 생산액 ÷ GDP) × 100.

출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IT산업생산비율은 IT산업의 연간 총 생산액이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IT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은 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 및 표시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 및 통신기능을 실현시키거나 가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시설을 공급, 설치 운영 또는 유지 보수하는 산업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함.
- 측정 방법: $IT산업생산비율 = (IT 산업생산의 연간 생산액 \div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 \times 100$.

● 지표의 의의

IT 산업생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첨단시대를 맞아 한국 첨단산업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해설

IT산업생산비율은 2006년 30.2%에서 2010년 34.1%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에는 32.7%를 기록하였다. 최근 신흥 개발도상국에서 낮은 인건비를 장점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의 유치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산업 부문의 국내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생산증가폭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가진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의 증대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속도보다 IT산업생산의 증가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IT산업생산비율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IT산업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ICT기기의 비중이 가장 높고 통신서비스가 그 다음을 차지했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ICT융합서비스 및 기기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IT산업생산의 세계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2006년 7.2%를 기록했으나 2012년 5.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IT산업생산 규모가 전 세계 IT산업생산 규모의 증가속도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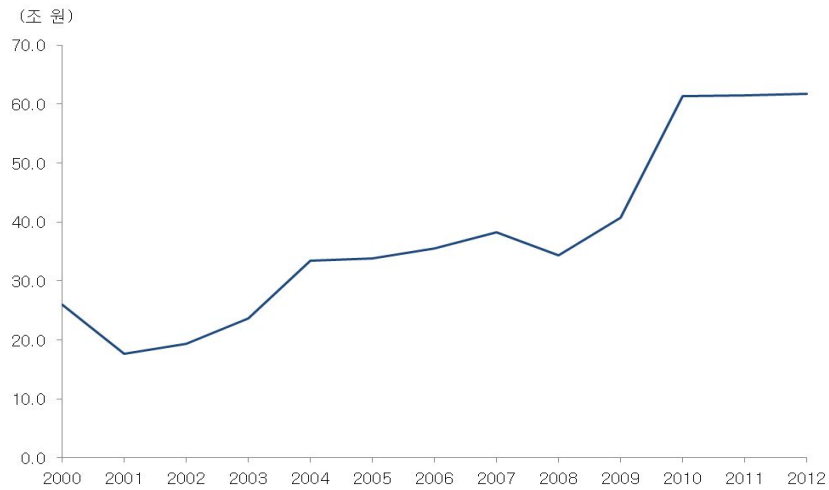
IT산업별 생산액, 2006-20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IT산업생산비율(%)	30.2	29.7	30.9	31.8	34.1	33.2	32.7
IT산업별 생산액(1,000억 원)							
전체	2,745.0	2,890.5	3,171.2	3,385.3	4,000.9	4,097.1	4,160.0
통신서비스	386.6	405.1	426.6	436.0	436.8	438.8	444.3
방송서비스	90.0	97.5	92.9	95.2	107.4	119.8	129.2
ICT 기기	1,733.4	1,829.6	2,016.5	2,219.8	2,729.7	2,736.7	2,725.7
S/W	210.6	221.3	261.7	260.0	272.3	295.3	315.5
ICT융합서비스 및 기기	324.4	337.0	373.5	374.3	454.7	506.5	545.3

주: 1) IT산업생산비율=(IT산업의 연간 총 생산액 ÷ GDP) × 100.
출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보조지표

반도체 생산액,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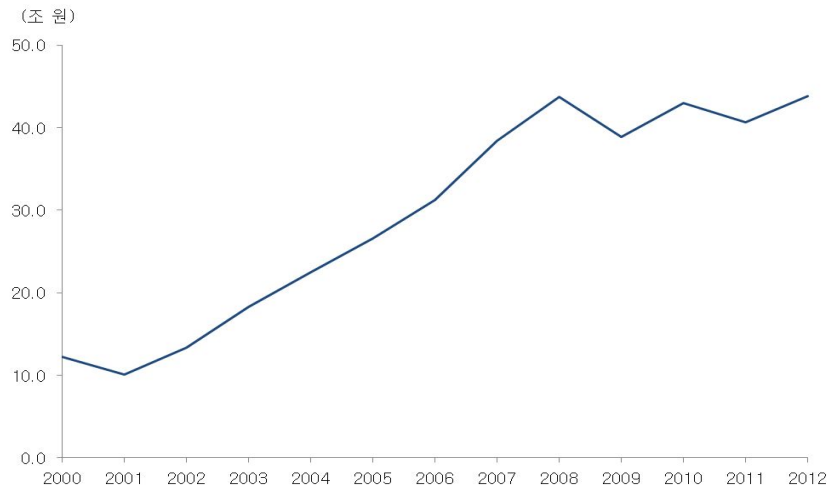


주: 1) 연간 총 생산액임.
출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반도체 생산	26.0	17.7	19.3	23.6	33.5	33.8	35.5	38.3	34.3	40.8	61.3	61.5	61.8

디스플레이 생산액,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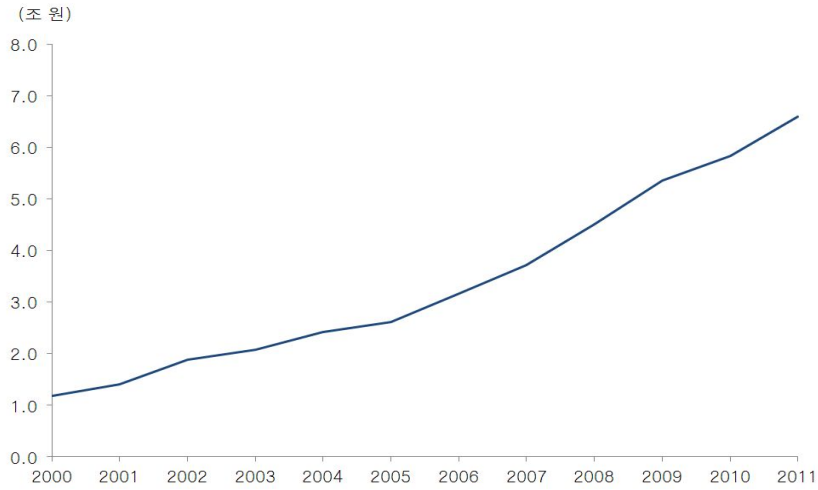


주: 1) 연간 총 생산액임.
출처: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디스플레이 생산	12.2	10.1	13.4	18.3	22.5	26.6	31.2	38.4	43.7	38.9	43.0	40.7	43.8

바이오산업 생산액,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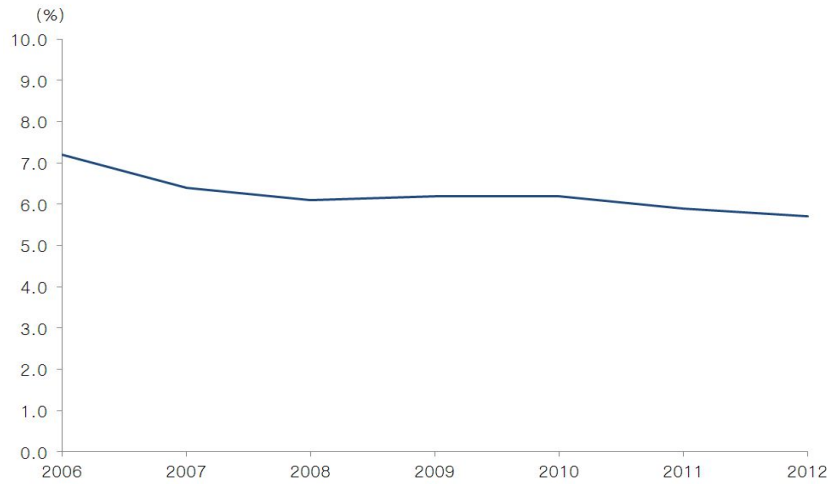


주: 1) 연간 총 생산액임.
출처: 산업연구원.

통계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바이오산업 생산액	1.2	1.4	1.9	2.1	2.4	2.6	3.2	3.7	4.5	5.4	5.8	6.6

IT산업생산 세계시장점유율, 2006-2012



주: 1) IT산업생산 세계시장점유율 = (국내 IT 산업생산 규모 ÷ 전세계 IT 산업생산 규모) × 100.
출처: Reed Electronics Research, *Year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Volume 3 2012/2013*, 2012.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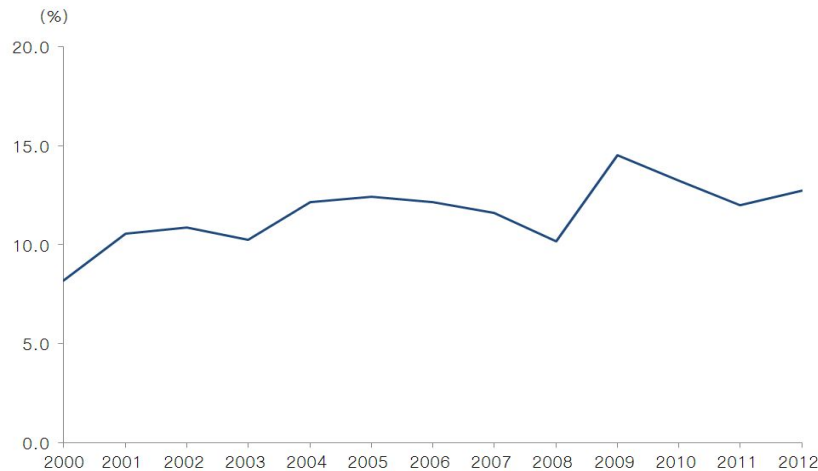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점유율	7.2	6.4	6.1	6.2	6.2	5.9	5.7

■ 국제비교지표 (없음)

13103. 외국인직접투자비율

■ 주요지표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2000-2012



주: 1)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국내총생산) × 100.
출처: OECD, *OECD stat*.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외국인 직접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투자하는 국가의 기업이 그 국가의 국경을 벗어나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하여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뜻함.
- 측정 방법: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국내총생산) × 100.

● 지표의 의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외국기업이 한국 기업(설립예정 기업 포함)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한 투자금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것이다. 외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현황을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평가하는 한국 시장에 대한 경제성 등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높은 수준일 경우 해외자본의 유입을 통해 투자가 촉진되고 자본형성을 증가시키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를 일으킨다. 또한 기술이전과 고용창출, 생산성증가 등을 통해서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 해설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단기적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8.2%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을 반복하다가 2009년 1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2년 12.7%를 기록하였다. 국경 간 M&A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국내에서는 2005년 이후 해외자본에 의한 국내 M&A형 투자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단기적 변화가 많은 이유는 국내외경기와 상당부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주변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이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거주자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 4%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17%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비교해볼 경우 해외 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경기둔화와 더불어 개발도상국들의 저임금 및 투자여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 간 비교지표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수준은 OECD 주요국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국내투자와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여건 개선에 대한 노력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수준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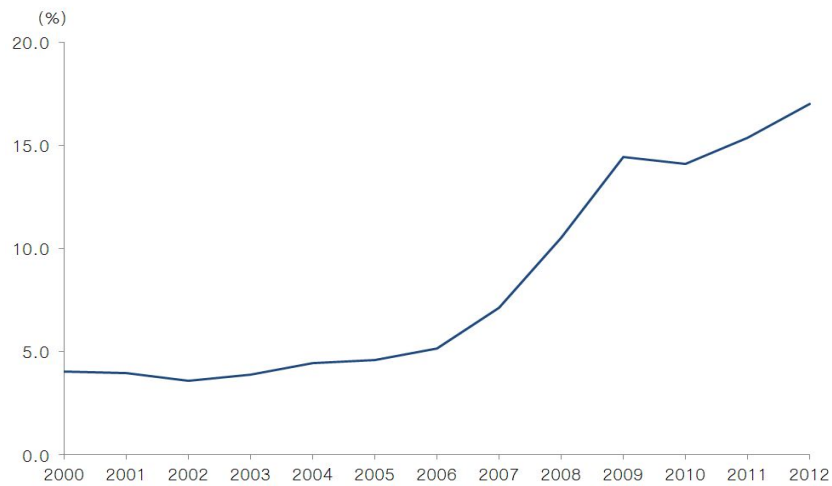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과 증가율, 2000-2012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8.2	10.5	10.9	10.3	12.2	12.4	12.2	11.6	10.2	14.5	13.2	12.0	12.7
전년 대비 증가율		28.6	3.2	-5.7	18.5	2.1	-2.0	-4.4	-12.5	42.8	-8.9	-9.5	6.4

주: 1)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국내총생산) × 100.
출처: OECD, *OECD stat*.

■ 보조지표

거주자 해외 직접투자 비율,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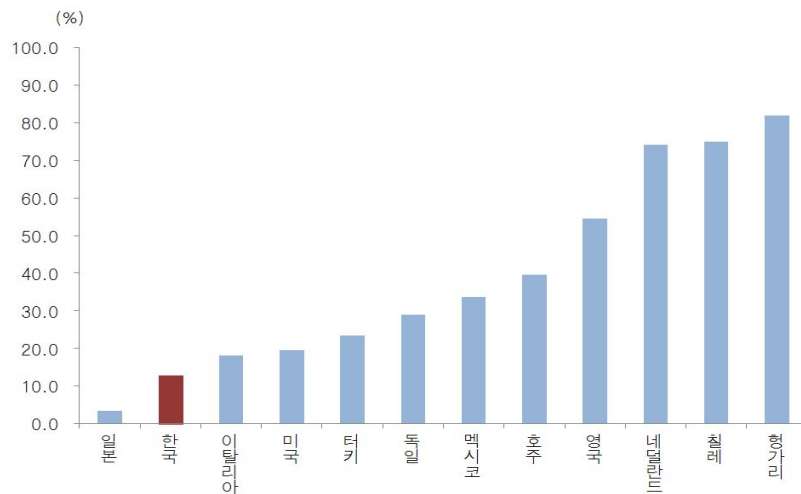
주: 1)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비율 = (거주자 해외 직접투자금액 ÷ 국내총생산) × 100.
출처: OECD, *OECD stat*.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거주자 해외 직접투자	4.0	4.0	3.6	3.9	4.5	4.6	5.2	7.1	10.5	14.4	14.1	15.4	17.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2012



주: 1)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 국내총생산) × 100.
출처: OECD, *OECD Stat*.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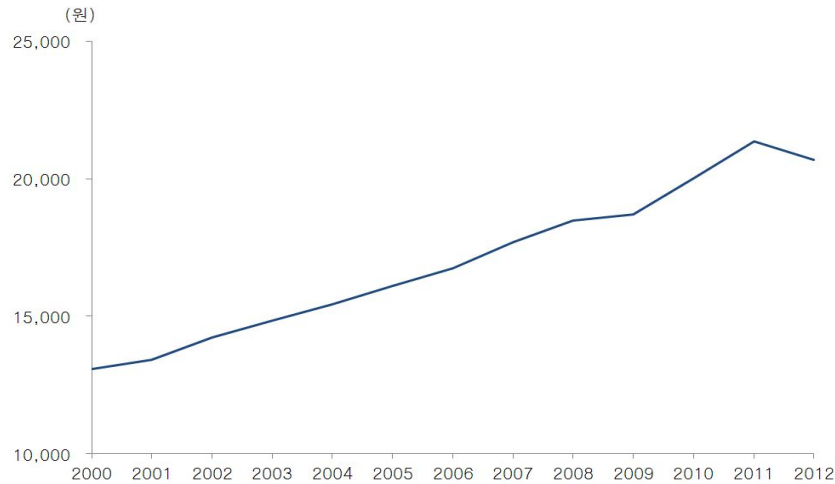
국가	일본	한국	이탈리아	미국	터키	독일	멕시코	호주	영국	네덜란드	칠레	헝가리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3.4	12.8	18.1	19.5	23.5	28.9	33.7	39.6	54.4	74.2	75.0	82.0

1.3.2. 생산성

13204. 노동생산성

■ 주요지표

시간당 노동생산성, 2000-2012



주: 1) 시간당 노동생산성 = 1인당 국내총생산 ÷ 총 노동시간.
출처: OECD, *OECD stat*.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노동생산성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노동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로서 노동자 1인이 단위 노동시간동안 산출하는 생산량의 시장가치를 의미함.
- 측정 방법: 시간당 노동생산성 = (1인당 국내총생산 ÷ 총 노동시간).

● 지표의 의의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평균 숙련도, 과학의 수준과 과학을 기술에 적용하는 수준의 발전단계, 생산과정의 사회적 결합방식, 생산수단의 규모와 작업능력, 자연 상태 등에 의해 결정되며 생산과정에 있어서 생산효율의 향상정도, 기술수준의 변화 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동일한 노동투입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얻거나, 또는 동일한 생산량을 더 적은 노동투입으로 얻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은 기업의 발전은 물론 경제 전체의 성장가능성을 측정함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이용된다. 또한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며 성과배분의 기준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GDP를 기준으로 할 때 2000년 13,097원(2005년 기준 PPP)에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20,688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2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은 증가하였으나 노동생산성이 하락했는데, 이는 국내총생산 증가폭에 비해 노동시간이 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노동생산성과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000년대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정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서는 국내외 더딘 경기회복으로 인해 산업생산의 증가가 미진한 것이 주된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수준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당 약 50달러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한국은 26.2달러로 이들의 거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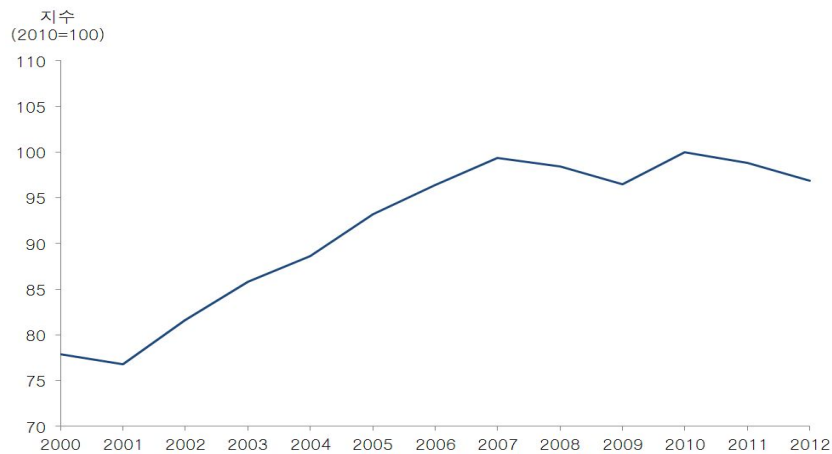
시간당 노동생산성, 2000-20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달러(2005년 기준 PPP)	16.6	17.0	18.0	18.8	19.6	20.4	21.2	22.4	23.4	23.7	25.4	27.1	26.2
원	13,097	13,423	14,231	14,842	15,429	16,100	16,757	17,700	18,482	18,710	20,030	21,361	20,688

주: 1) 시간당 노동생산성 = 1인당 국내총생산 ÷ 총 노동시간.
출처: OECD, *OECD stat*.

■ 보조지표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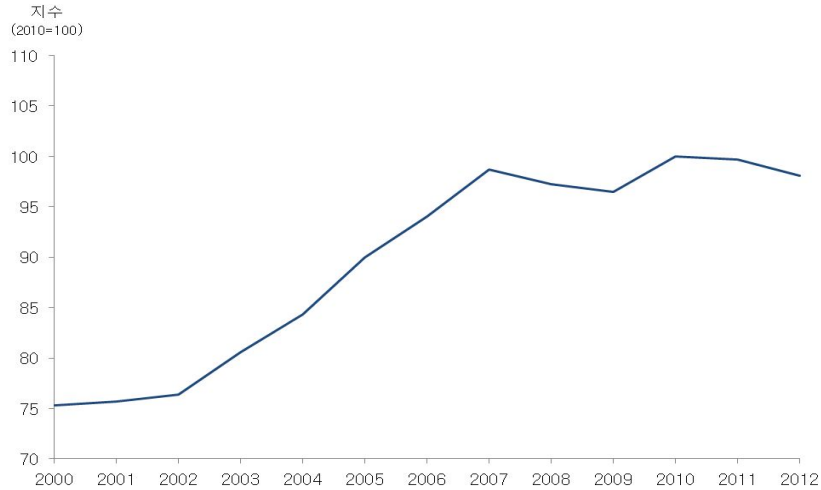


주: 1)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지수 ÷ 근로자수) × 100.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 년도.

통계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77.9	76.8	81.6	85.8	88.6	93.2	96.4	99.4	98.4	96.5	100.0	98.8	96.9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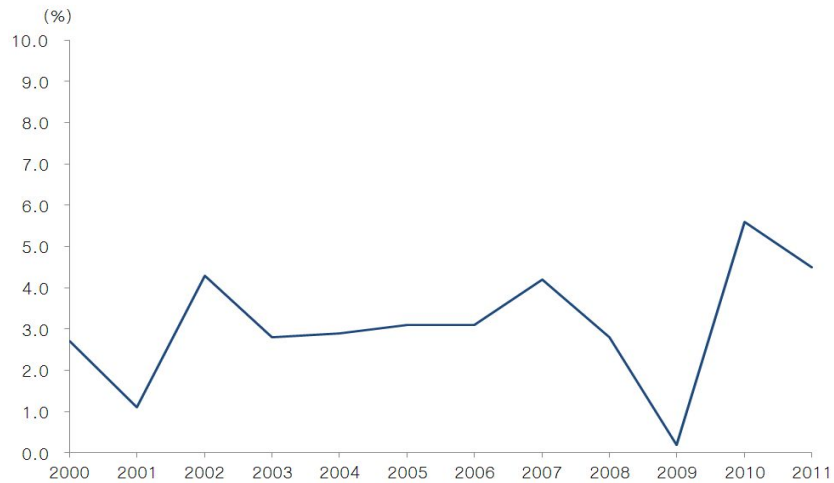


주: 1)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지수 ÷ 노동투입량지수) × 100.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리뷰」, 각 년도.

통계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75.3	75.7	76.4	80.6	84.3	90.0	94.0	98.7	97.2	96.5	100.0	99.7	98.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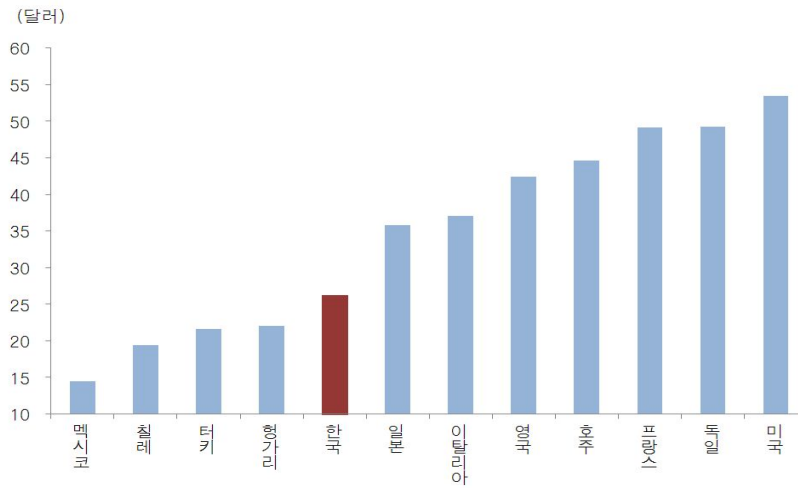
주: 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생산성에서 노동과 자본투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분을 뺀 생산성의 증가율임.
출처: OECD, *OECD stat*.

통계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7	1.1	4.3	2.8	2.9	3.1	3.1	4.2	2.8	0.2	5.6	4.5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2012



주: 1) 시간당 노동생산성 = 1인당 국내총생산 ÷ 총 노동시간.
출처: OECD,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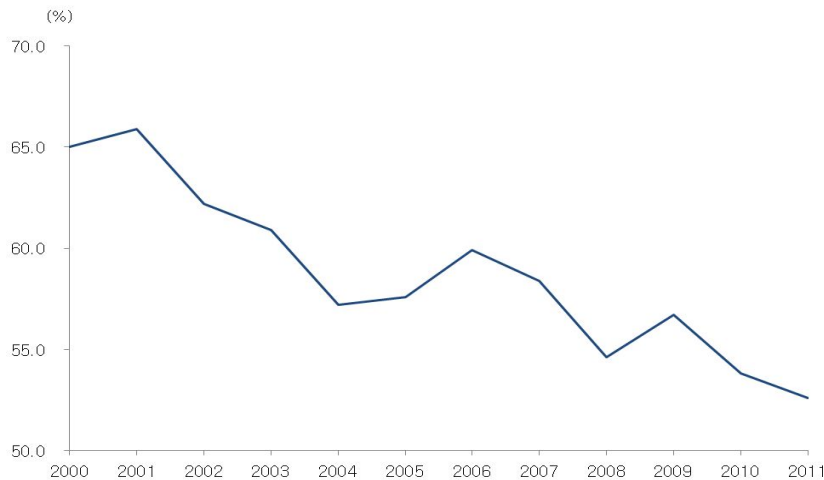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멕시코	칠레	터키	헝가리	한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미국
노동생산성	14.5	19.4	21.6	22.0	26.2	35.8	37.1	42.4	44.6	49.1	49.2	53.4

13205. 중소기업임금비율

■ 주요지표

중소기업 임금 비율, 2000-2011



주: 1) 중소기업 임금 비율 = (중소기업 임금 ÷ 대기업 임금) × 100.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나타냄. 즉,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보여줌. 중소기업은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의 업체를, 대기업은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의 업체를 의미함.
- 측정 방법: 중소기업 임금 비율 = (중소기업 임금 ÷ 대기업 임금) × 100.

● 지표의 의의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소득 격차를 살펴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경우 대기업과의 임금소득 격차 증가로 인해 고용시장의 왜곡 등을 나타내며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고용시장을 관찰하고 고용구조의 개선으로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경제지표이다.

● 해설

중소기업의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오르내림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 기준 대기업 대비 65% 수준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52.6%로 약 12%포인트의 하락폭을 보였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대비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 임금소득의 양극화정도가 점진적으로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업규모별 영업 이익률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단기적으로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영업 이익률이 하락하는 추세이다. 대기업의 경우 2000년 8.2%에서 2011년 6.1%로 2.1%포인트 하락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2000년 5.8%에서 2011년 4.2%로 1.6%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2000년대 초반 5.3%포인트까지 벌어졌으나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2011년에는 1.9%포인트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부분의 기업이 소규모 회사로 창업하여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점에서 신규기업의 시장 진출을 살펴볼 수 있는 중소기업 신규 진입률은 2% 수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1.67%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1년 2.01%를 기록했다.

● 상세 통계표

중소기업 임금 비율, 2000-2011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소기업 임금	65.0	65.9	62.2	60.9	57.2	57.6	59.9	58.4	54.6	56.7	53.8	52.6

주: 1) 중소기업 임금 = (중소기업 임금 ÷ 대기업 임금) × 100.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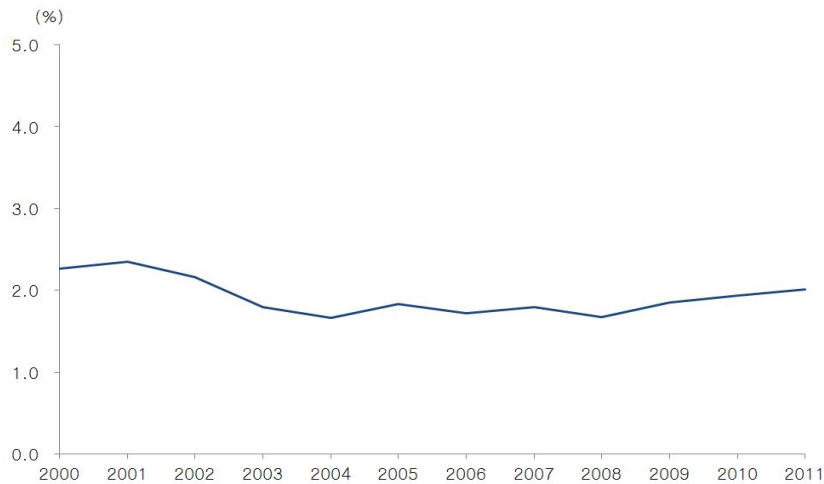


주: 1)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 (당해 연도 영업이익 ÷ 당해 연도 매출액) × 100.
 2) 2008년부터 소규모기업까지 포함하였고, 2011년부터 모든 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기업	8.2	6.0	7.5	8.2	9.4	7.2	6.0	6.7	6.6	6.4	7.7	6.1
중소기업	5.8	4.5	5.3	4.6	4.1	4.4	4.3	4.5	4.8	4.5	4.5	4.2

중소기업 신규 진입률, 2000-2011



주: 1) 중소기업 사업체 총수 대비 신설법인수의 비중.
 출처: 중소기업청, 「신설법인 동향」, 각 년도; 「중소기업현황」, 각 년도.

통계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소기업 신규 진입률	2.27	2.35	2.16	1.8	1.66	1.84	1.72	1.8	1.67	1.85	1.93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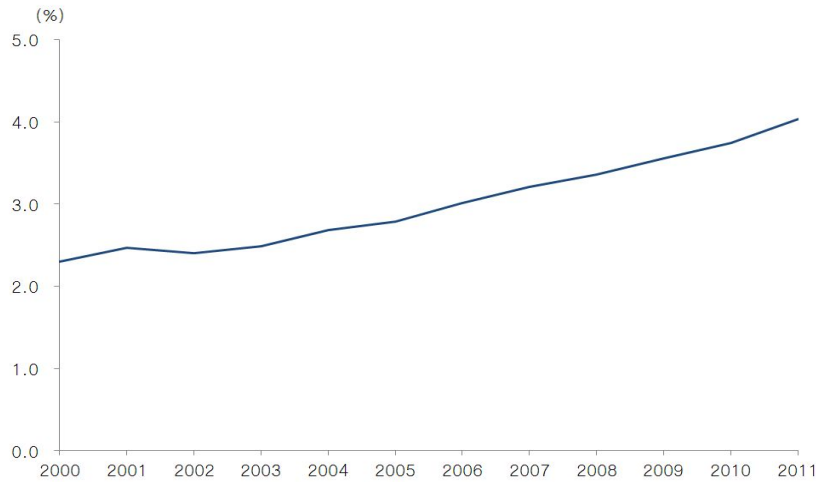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1.3.3. 혁신

13306. 연구개발투자비율

■ 주요지표

연구개발투자비율, 2000-2011



주: 1) 연구개발투자비율 = (총 연구개발 지출금액 ÷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 × 100.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은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과 공공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총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나타냄.
- 측정 방법: 연구개발투자비율 = (총 연구개발 지출금액 ÷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 × 100.

● 지표의 의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은 한국이 한 해 동안 연구개발 활동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과학기술관련 지출금액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노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부문별 연구개발 투자비중의 확인을 통해 어느 부문의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한지 관찰할 수 있다. 특히 부문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통해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어느 부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지 살펴볼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 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했던 연구·개발투자는 2011년에는 4.0%를 기록하면서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의 부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2000년 기업부문 1.7%, 정부부문 0.3%, 고등교육부문 0.3%에서 2011년 기준으로 기업부문의 투자비중이 3.1%, 정부부문과 고등교육부문은 각각 0.5%와 0.4%를 기록하며 기업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국가 간 비교지표를 통해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수준을 살펴보면 OECD 주요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3.3%, 미국 2.8%, 독일 2.8%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연구·개발 투자 금액규모를 비교한 지표가 아니며,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왔으며 투자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대비하여 절대적인 규모수준이 작기 때문에 향후 더욱 연구·개발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상세 통계표

기업, 정부, 고등교육 부문별 연구개발투자비율,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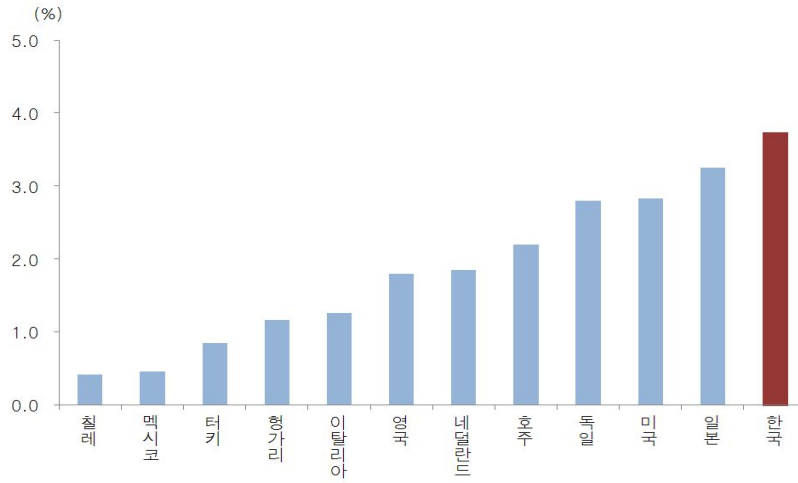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3	2.5	2.4	2.5	2.7	2.8	3.0	3.2	3.4	3.6	3.7	4.0
기업부문	1.7	1.9	1.8	1.9	2.1	2.2	2.3	2.5	2.5	2.6	2.8	3.1
정부부문	0.3	0.3	0.3	0.3	0.3	0.3	0.4	0.4	0.4	0.5	0.5	0.5
고등교육부문	0.3	0.3	0.3	0.3	0.3	0.3	0.3	0.3	0.4	0.4	0.4	0.4

주: 1) 부문별 연구·개발 투자 = (해당 부문별 연구개발 지출금액 ÷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 × 100.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연도.
OECD, OECD stat.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비율, 2010



주: 1) 연구개발투자비율 = (해당 국가의 연간 총 연구개발 지출금액 ÷ 해당 국가의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 × 100.
출처: OECD,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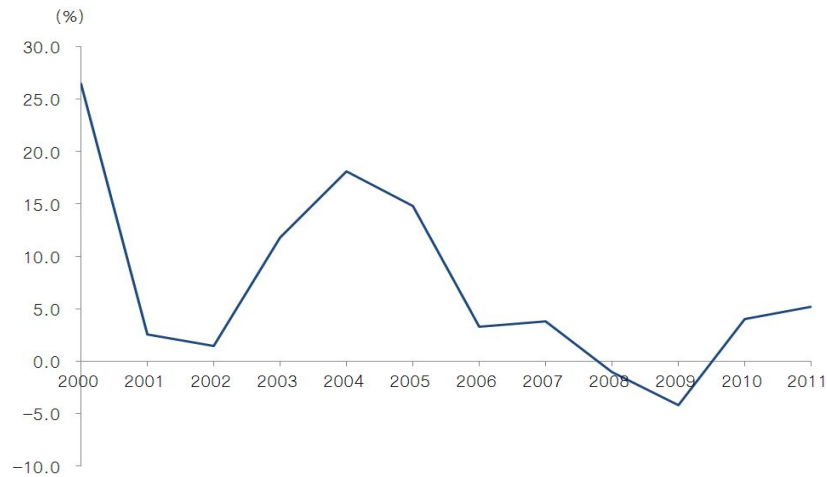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칠레	멕시코	터키	헝가리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호주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연구개발 투자비율	0.4	0.5	0.8	1.2	1.3	1.8	1.9	2.2	2.8	2.8	3.3	3.7

13307. 특허출원증가율

■ 주요지표

특허출원 증가율, 2000-2011



주: 1) 특허출원 증가율 = ((당해 연도 특허 출원 수 - 전년도 특허 출원 수) ÷ 전년도 특허 출원 수) × 100.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특허 출원 수의 연간 증가율을 의미하며, 특허 출원 수란 특허권을 특허청으로부터 권리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횟수를 의미함.
- 측정 방법: 특허출원 증가율 = ((당해 연도 특허 출원 수 - 전년도 특허 출원 수) ÷ 전년도 특허 출원 수) × 100.

● 지표의 의의

특허출원 증가율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연구개발 부문의 투자 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신제품 개발 필요성에 의해, 정부부문에서는 고용창출 정책과 경제정책의 변화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며 특히 특허출원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정부부문에서는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유용하다.

● 해설

한국의 특허출원증가율은 2000년대 초반 10%를 넘기며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5년 이후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2008, 2009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특허 출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절대적 수치인 특허출원수와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는 2008, 2009년에 잠시 정체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출원수의 경우 2000년 약 10만 2,000건에서 2011년 약 17만 9,000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의 경우 역시 2000년 1,549건에서 2011년 2,77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 간 비교지표를 통해 OECD 주요국들과 한국의 특허출원수를 살펴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된 특허출원수는 한국이 약 17만 9,000건으로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 규모를 고려할 경우, 한국의 기술 혁신 노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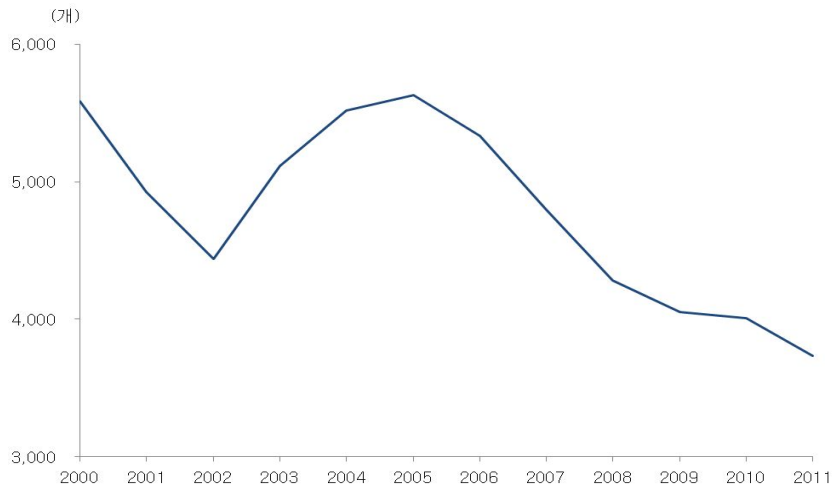
특허출원 수와 증가율, 2000-201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특허출원수 (건)	102,010	104,612	106,136	118,651	140,115	160,921	166,189	172,469	170,632	163,523	170,101	178,924
인구 100만 명당	1,549	1,557	1,608	1,887	2,191	2,538	2,594	2,648	2,597	2,589	2,668	2,773
특허출원증가율(%)	26.5	2.6	1.5	11.8	18.1	14.9	3.3	3.8	-1.1	-4.2	4.0	5.2

주: 1) 특허출원수는 연간 접수건수 기준임.
 2) 특허출원증가율 = ((당해 연도 특허출원수 - 전년도 특허출원수) ÷ 전년도 특허출원수) × 100.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 연도.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보조지표

연구개발지출 대비 특허출원수,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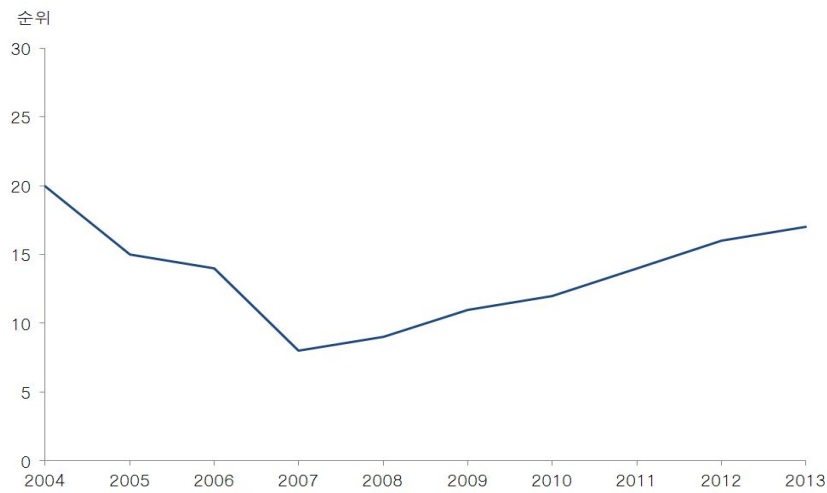


주: 1) 연구개발지출 대비 특허출원수 = 당해 연도 특허출원 접수건수 ÷ 연구개발지출액
출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통계표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연구개발 지출대비 특허출원수	5,583	4,925	4,439	5,113	5,518	5,627	5,332	4,799	4,283	4,052	4,006	3,736

세계 기술 혁신순위,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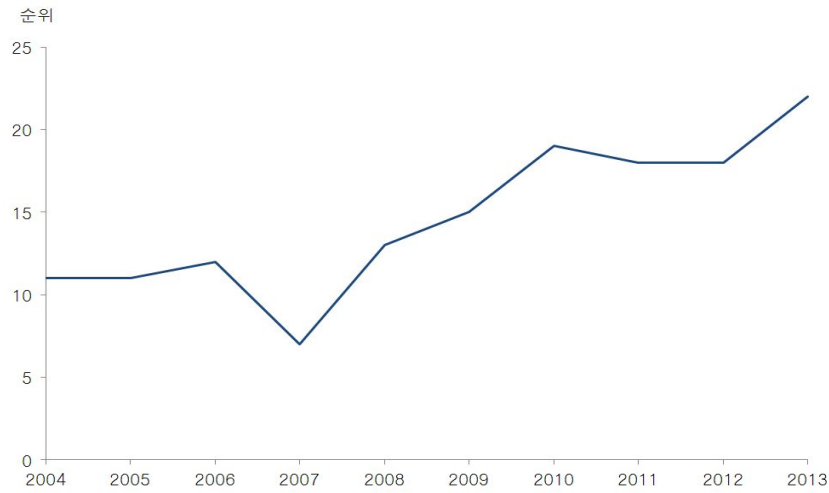


주: 1) 세계경제포럼의 기술 혁신 평가순위임.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

통계표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기술 혁신순위	20	15	14	8	9	11	12	14	16	17

세계 기술 수용성 순위, 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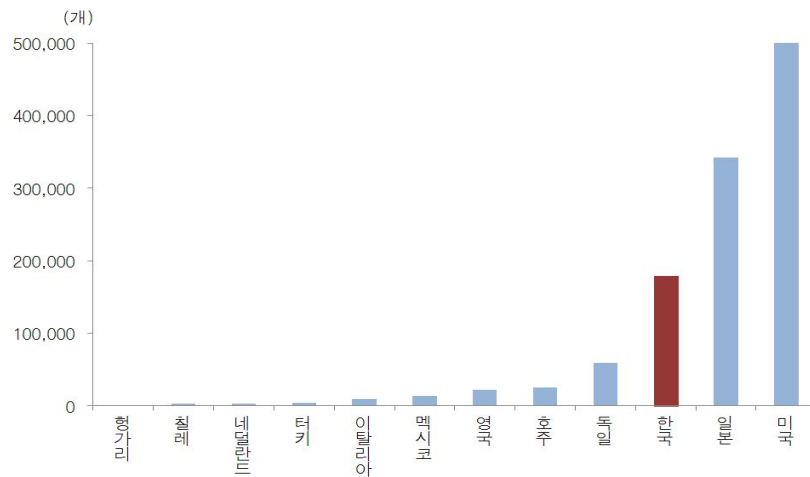
주: 1) 세계경제포럼의 기술 수용성 평가순위임.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

통계표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세계기술수용성 순위	11	11	12	7	13	15	19	18	18	22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특허출원수, 2011



주: 1) 특허출원수는 연간 접수건수 기준임.
출처: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통계표

국가	헝가리	칠레	네덜란드	터키	이탈리아	멕시코	영국	호주	독일	한국	일본	미국
특허출원수	698	2,792	2,895	4,113	9,721	14,055	22,259	25,526	59,444	178,924	342,610	503,582

1.4. 고용과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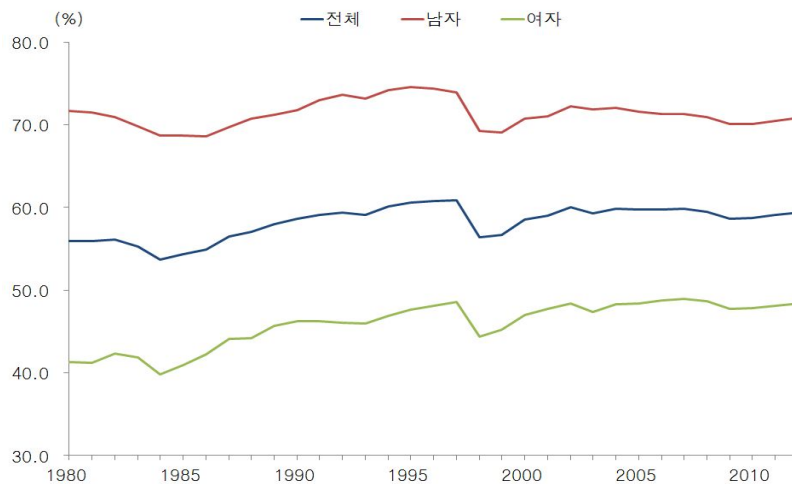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고용과 노동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OECD기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OECD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임금근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비율 자영업자비율 무급가족종사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임금근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자의 산업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업취업자비율 취업자의 직업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취업자비율 도소매·숙박업취업자비율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취업자비율
	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근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시적근로자비율 시간제근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격차 (임금10분위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임금차이 근로형태별임금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성별임금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임금근로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최저임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임금근로자비율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근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취업자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재사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만족도 일자리장래성만족도 	
	노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조합조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손실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조합조직률 단체협약적용률

1.4.1. 고용

14101. 고용률

■ 주요지표

성별 고용률, 1980-2012



주: 1)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함. 생산가능인구는 조사 대상 주간을 기준으로 한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로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등은 제외함.
- 측정 방법: $\text{고용률} = [\text{취업자} \div \text{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 지표의 의의

고용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취업하고 있는지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내는 지표이다. 이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주목하였으나,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어서, 최근에는 고용률을 노동시장의 현황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국가 간 비교지표로도 고용률이 주로 사용된다.

● 해설

한국의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기준)은 1980년에 55.9%에서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2년 현재는 59.4%를 기록하고 있다. 1997년 고용률은 60.9%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악화를 반영하여 1998년에는 56.4%로 감소하였다. 이후 천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1997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국의 OECD 기준(15-64세) 고용률은 2012년 64.2%이며, 여성 고용률은 53.5%,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0.5%이다. 여성 고용률은 1980년대까지는 증가세였으나 1990년에 49.0%를 기록한 다음 그 이후는 약간의 등락이 있을 뿐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고용률 지표가 제출된 34개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은 20위를 차지하여 중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은 고용률이 73%를 넘어서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국가들이며, 그 다음으로 독일, 덴마크, 호주, 캐나다 순이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1980-201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55.9	54.3	58.6	60.6	58.5	59.0	60.0	59.3	59.8	59.7	59.7	59.8	59.5	58.6	58.7	59.1	59.4
성																	
남자	71.7	68.7	71.8	74.6	70.7	71.0	72.2	71.9	72.0	71.6	71.3	71.3	70.9	70.1	70.1	70.5	70.8
여자	41.3	40.9	46.2	47.6	47.0	47.7	48.4	47.4	48.3	48.4	48.8	48.9	48.7	47.7	47.8	48.1	48.4
연령집단																	
15-19세	26.6	15.6	13.2	11.0	10.3	10.1	9.4	8.6	8.4	8.0	6.7	6.6	5.9	5.4	6.1	6.8	7.0
20-29세	58.0	56.7	62.1	63.5	60.1	60.2	61.3	60.2	61.1	61.2	60.2	60.0	59.1	58.2	58.2	58.5	58.1
30-39세	70.0	70.6	74.4	74.6	72.5	72.7	73.0	72.6	72.6	72.3	73.2	72.9	72.9	71.3	72.0	72.2	72.7
40-49세	74.0	74.8	77.8	79.1	76.4	76.6	77.4	76.9	77.3	77.1	77.7	78.3	78.4	77.7	77.8	78.4	78.3
50-59세	65.4	64.7	71.6	71.2	66.5	66.8	68.2	67.6	67.8	68.1	68.5	69.7	70.6	70.3	70.9	71.6	72.2
60세 이상	28.1	29.2	35.5	38.7	37.7	38.0	38.7	36.2	36.9	36.9	37.4	38.1	37.2	36.7	36.0	36.5	37.5

주: 1)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성 및 연령집단별 취업자수, 1980-2012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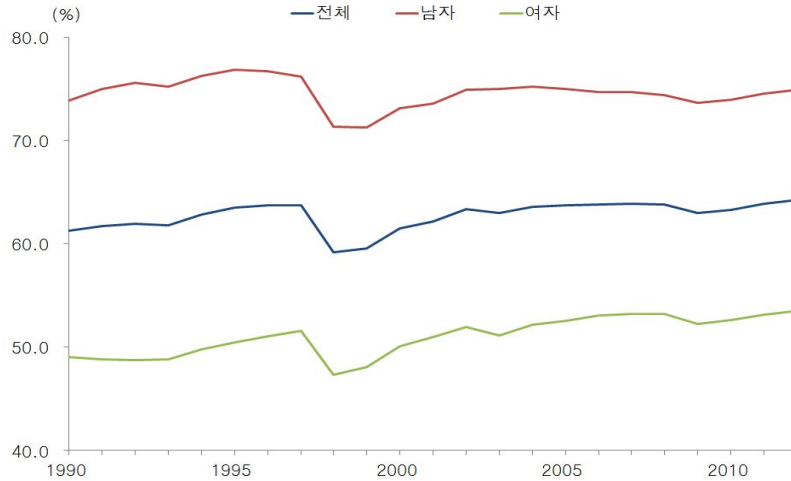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3,683	14,970	18,085	20,414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성																	
남자	8,462	9,137	10,709	12,147	12,387	12,581	12,944	13,031	13,193	13,330	13,444	13,607	13,703	13,734	13,915	14,153	14,387
여자	5,222	5,833	7,376	8,267	8,769	8,991	9,225	9,108	9,364	9,526	9,706	9,826	9,874	9,772	9,914	10,091	10,294
연령집단																	
15-19세	1,035	634	580	421	389	358	313	272	258	243	209	211	190	178	204	227	231
20-29세	3,512	4,068	4,442	5,022	4,490	4,457	4,486	4,334	4,320	4,207	4,061	3,992	3,894	3,779	3,710	3,652	3,612
30-39세	3,468	3,990	5,060	6,238	6,137	6,167	6,212	6,186	6,181	6,122	6,136	6,035	6,010	5,837	5,833	5,786	5,756
40-49세	3,188	3,366	3,910	4,272	5,277	5,561	5,856	6,031	6,206	6,305	6,407	6,484	6,548	6,524	6,553	6,611	6,622
50-59세	1,766	2,034	2,816	2,858	2,899	2,959	3,098	3,174	3,334	3,599	3,835	4,093	4,300	4,498	4,792	5,083	5,353
60세 이상	716	879	1,277	1,604	1,963	2,071	2,204	2,142	2,257	2,381	2,503	2,618	2,636	2,690	2,737	2,886	3,108

주: 1) 취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성별 고용률(OECD 기준), 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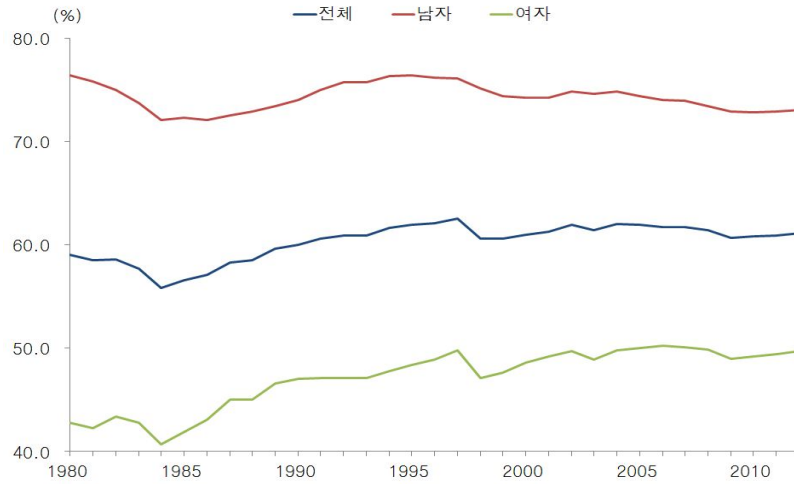


주: 1) 고용률은 15-64세 인구(OECD 생산가능인구 기준) 중 취업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61.2	63.5	61.5	62.1	63.3	63.0	63.6	63.7
남자	73.9	76.8	73.1	73.5	74.9	75.0	75.2	75.0
여자	49.0	50.5	50.1	51.0	52.0	51.1	52.2	52.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63.8	63.9	63.8	62.9	63.3	63.9	64.2	
남자	74.7	74.6	74.4	73.6	73.9	74.5	74.9	
여자	53.1	53.2	53.2	52.2	52.6	53.1	53.5	

경제활동참가율, 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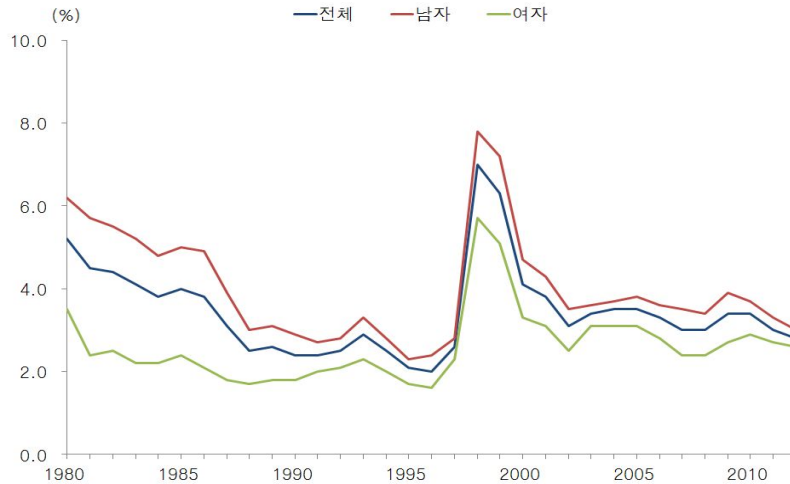


주: 1)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59.0	56.6	60.0	61.9	61.0	61.3	61.9	61.4	62.0
남자	76.4	72.3	74.0	76.4	74.2	74.2	74.8	74.6	74.8
여자	42.8	41.9	47.0	48.4	48.6	49.2	49.7	48.9	49.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61.9	61.7	61.7	61.4	60.7	60.8	60.9	61.1	
남자	74.4	74.0	73.9	73.4	72.9	72.8	72.9	73.0	
여자	50.0	50.2	50.1	49.9	49.0	49.2	49.4	49.7	

실업률, 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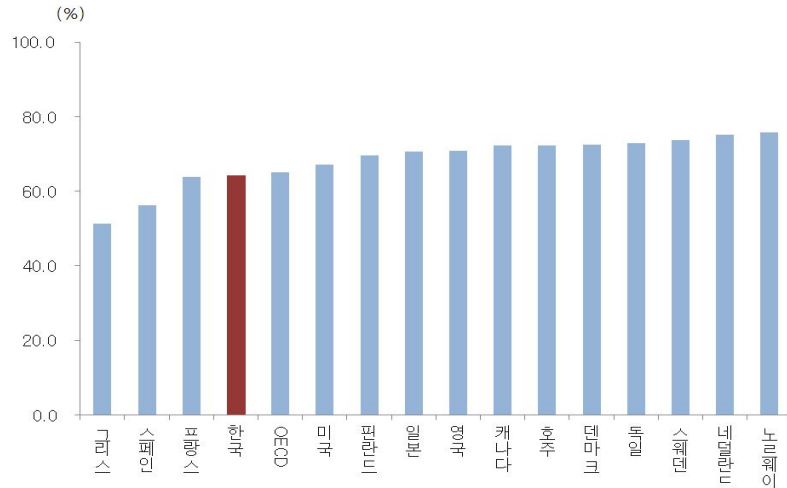
주: 1)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5.2	4.0	2.4	2.1	4.1	3.8	3.1	3.4	3.5
남자	6.2	5.0	2.9	2.3	4.7	4.3	3.5	3.6	3.7
여자	3.5	2.4	1.8	1.7	3.3	3.1	2.5	3.1	3.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3.5	3.3	3.0	3.0	3.4	3.4	3.0	2.8	
남자	3.8	3.6	3.5	3.4	3.9	3.7	3.3	3.0	
여자	3.1	2.8	2.4	2.4	2.7	2.9	2.7	2.6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고용률, 2012



주: 1) 고용률은 15-64세 인구(OECD 생산가능인구 기준) 중 취업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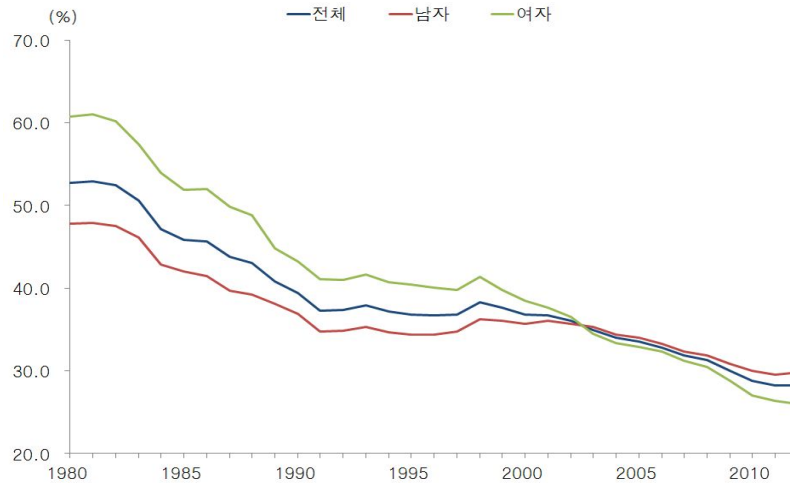
통계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한국	OECD	미국	핀란드	일본
고용률	51.3	56.2	63.9	64.2	65.1	67.1	69.5	70.6
	영국	캐나다	호주	덴마크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고용률	70.9	72.2	72.3	72.6	72.8	73.8	75.1	75.8

14102. 비임금근로자비율

■ 주요지표

비임금근로자비율, 1980-2012



주: 1) 비임금근로자비율 = (비임금근로자 수 ÷ 전체 취업자수) × 100.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비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주,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고용주는 한 사람 이상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자영업자는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만을 데리고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임.
- 측정 방법: 비임금근로자비율 = (비임금근로자수 ÷ 전체 취업자수) × 100.

● 지표의 의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적 임노동화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과 함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추세가 진행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선진국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해외지표나 문헌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만을 주목하

기도 하는데, 이는 무급가족노동자의 규모가 무시할 만큼 작고, 나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를 함께 관찰하여야 한다.

● **해설**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비임금근로자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경험을 하였으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1980년에 비임금근로자비율이 52.8%였던 상황에서 2012년에는 28.2%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아서 남성보다 높은 비임금근로자비율을 나타내었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이 수치는 역전되었다. 2012년 현재 남성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9.8%인데 비해서 여성은 26.0%로 이제는 오히려 여성의 비임금근로자비율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난다.

비임금근로자비율의 감소와 동전의 다른 쪽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통계지표는 임금근로자비율이다.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대체로 정체되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내부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주는 증가해 온 데 비해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OECD 34개 국가들의 비임금근로자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비임금근로자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성별 비임금근로자비율, 1980-2012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52.8	45.9	39.5	36.8	36.8	36.7	36.0	34.9	34.0	33.6	32.8	31.8	31.3	30.0	28.8	28.2	28.2
남자	47.8	42.0	36.9	34.3	35.7	36.0	35.7	35.3	34.4	34.0	33.2	32.3	31.9	30.8	30.0	29.6	29.8
여자	60.8	51.8	43.2	40.4	38.5	37.6	36.5	34.5	33.4	32.9	32.3	31.2	30.4	28.8	27.1	26.4	26.0

주: 1) 비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성별 비임금근로자수, 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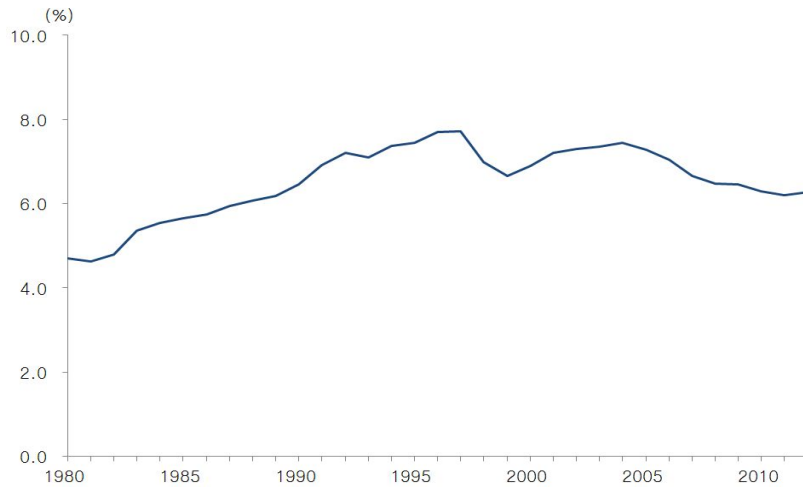
(1,000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7,220	6,866	7,135	7,515	7,795	7,913	7,988	7,736	7,663	7,671	7,600	7,463	7,371	7,052	6,858	6,847	6,969
남자	4,047	3,842	3,950	4,172	4,423	4,531	4,619	4,599	4,536	4,536	4,467	4,393	4,365	4,236	4,175	4,184	4,294
여자	3,173	3,024	3,185	3,343	3,372	3,382	3,368	3,138	3,127	3,135	3,134	3,070	3,006	2,816	2,683	2,664	2,675

주: 1)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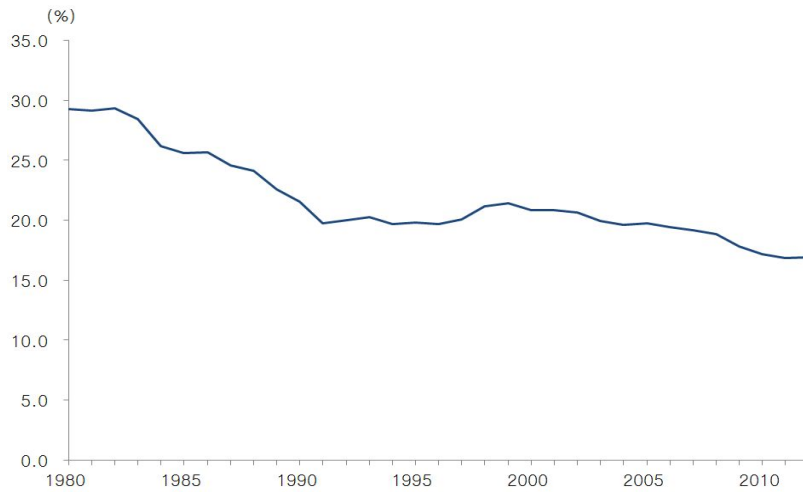
고용주비율, 1980-2012



주: 1) 고용주비율 = (고용주 수 ÷ 전체 취업자수) × 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고용주비율	4.7	5.6	6.5	7.4	6.9	7.2	7.3	7.4	7.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고용주비율	7.3	7.0	6.7	6.5	6.5	6.3	6.2	6.3	

자영업자비율, 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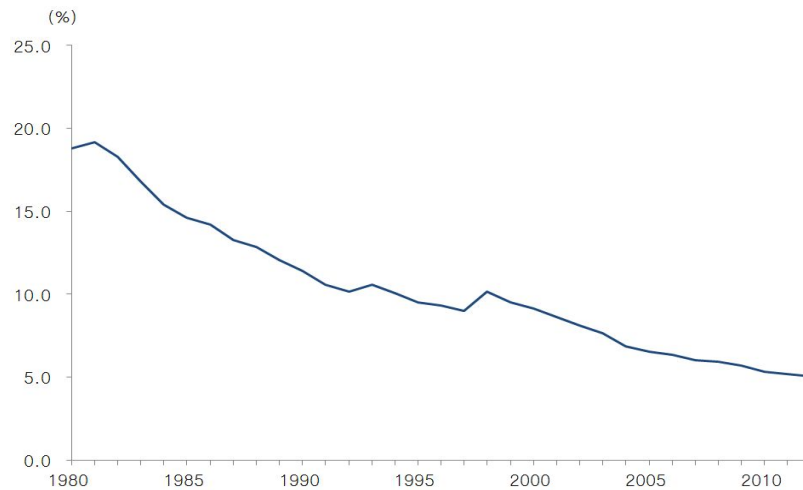
주: 1) 자영업자비율 = (자영업자수 ÷ 전체 취업자수) × 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자영업자 비율	29.3	25.6	21.6	19.8	20.8	20.8	20.6	19.9	19.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자영업자 비율	19.7	19.5	19.1	18.8	17.8	17.2	16.9	16.9	

무급가족종사자비율, 1980-2012



주: 1) 무급가족종사자비율 = (무급가족종사자수 ÷ 전체 취업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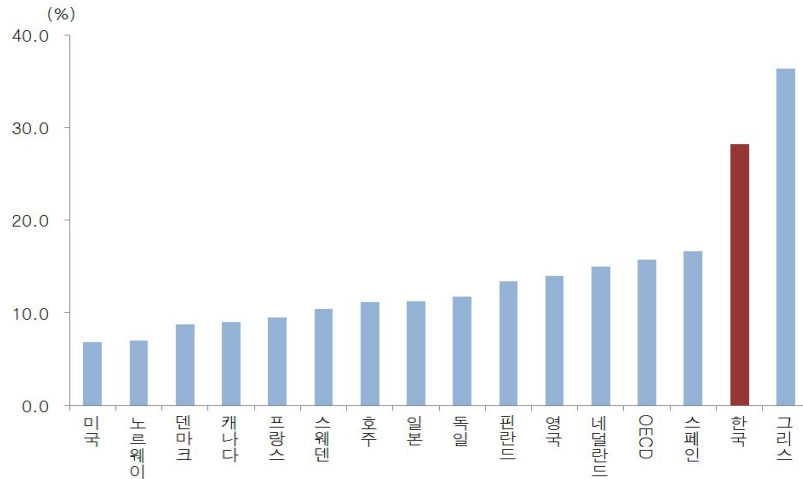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18.8	14.6	11.4	9.5	9.1	8.6	8.1	7.7	6.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무급가족종사자 비율	6.6	6.3	6.0	5.9	5.7	5.3	5.2	5.1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비임금근로자비율, 2011



주: 1) 비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함.

출처: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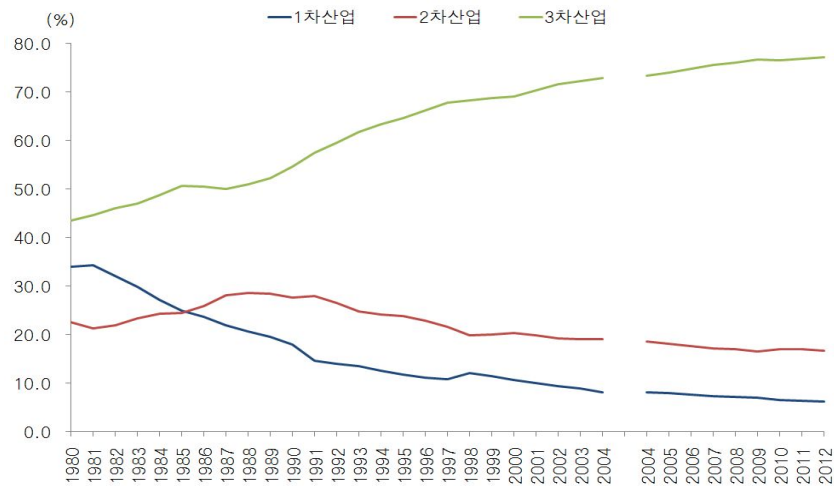
통계표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호주	일본
비임금근로자비율	6.8	7.0	8.7	9.0	9.5	10.4	11.2	11.3
	독일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OECD	스페인	한국	그리스
비임금근로자비율	11.7	13.4	14.0	15.0	15.8	16.6	28.2	36.3

14103. 취업자의 산업구성

■ 주요지표

산업별 취업자비율, 1980-2012



주: 1) 산업별 취업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1992년 이전은 제5차, 1993-2000년은 제6차, 2001-2004년은 제8차 분류기준에 따름. 2004년 이후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르는데, 이전 자료와 시계열 연결이 되지 않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취업자의 산업구성은 산업별 취업자비율로서, 전체 취업자 수 중 1-3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이다. 산업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가 주로 하는 일로 정의됨. 제9차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라, 1차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산업대분류 A), 2차 산업은 광공업(산업대분류 B, C), 3차 산업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산업대분류 D-U)을 포함함
- 측정 방법: 산업별 취업자비율 = (해당 산업별 종사자 수) ÷ (전체 취업자 수) × 100.

● 지표의 의의

제조업(2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과 서비스업(3차 산업) 취업자의 비율은 고용을 기준으로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면서 서비스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비스산업화가 심하게 진행되면 생산성의 저하와 고용의 불안정성 심화가 동반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조업 비중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독일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게 유지되고 있다. 서비스업 비중의 확대는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와 여성취업률의 증가 등의 현상과도 관련성이 높다.

● 해설

한국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1980년대 후반에 약 28%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그 이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16.6%이다. 남성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는 19.7%이고 여성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는 12.3%이다. 동전의 다른 쪽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1980년에 37%에서 2011년에는 69.2%까지 상승하였다. 남성 취업자 중에서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62.3%, 여성은 78.9%이다.

국가간 비교지표로 살펴본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비율의 상대적 수준은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비교적 높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취업자의 산업별 분류는 취업자가 속한 사업체가 주로 하는 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비하여, 직업별 분류는 취업자 자신이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분류체계이다. 한국의 농업직 종사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데 비해서 관리직과 전문직은 증가하였다. 단순노무직을 포함한 생산직은 현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직과 판매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문직과 사무직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산업별 취업자비율, 1980-2012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차산업	34.0	24.9	17.9	11.8	10.6	10.0	9.3	8.8	8.1	8.1	7.9	7.7	7.4	7.2	7.0	6.6	6.4	6.2
2차산업	22.5	24.4	27.6	23.7	20.4	19.9	19.2	19.1	19.1	18.6	18.1	17.6	17.2	16.9	16.4	17.0	16.9	16.7
3차산업	43.5	50.6	54.5	64.5	69.0	70.2	71.5	72.1	72.8	73.3	73.9	74.7	75.4	75.9	76.6	76.4	76.7	77.1
남자																		
1차산업	31.0	23.1	16.3	10.2	9.5	9.0	8.4	7.9	7.3	7.3	7.2	7.0	6.7	6.6	6.6	6.4	6.1	6.0
2차산업	22.6	25.2	27.2	25.4	22.4	22.0	21.2	21.1	21.3	20.8	20.8	20.4	20.0	19.8	19.6	20.2	20.0	19.8
3차산업	46.4	51.7	56.6	64.4	68.2	69.0	70.4	71.1	71.4	72.0	72.0	72.6	73.3	73.6	73.7	73.4	73.9	74.2
여자																		
1차산업	39.0	27.8	20.3	14.0	12.2	11.3	10.7	10.1	9.2	9.2	8.9	8.6	8.3	7.9	7.6	6.9	6.8	6.4
2차산업	22.3	23.2	28.2	21.3	17.5	16.9	16.5	16.2	16.0	15.5	14.4	13.7	13.3	12.9	11.9	12.5	12.6	12.3
3차산업	38.7	49.0	51.5	64.6	70.3	71.8	72.9	73.7	74.8	75.3	76.7	77.7	78.4	79.2	80.6	80.6	80.6	81.3

주: 1) 산업별 취업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1992년 이전은 제5차, 1993-2000년은 제6차, 2001-2004년은 제8차 분류기준에 따름. 2004년 이후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르는데, 이전 자료와 시계열 연결이 되지 않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성 및 산업별 취업자수, 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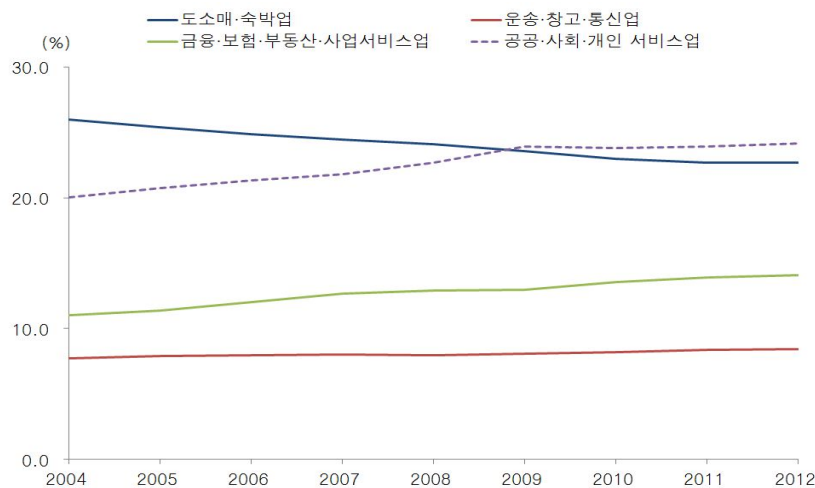
(1,000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3,683	14,970	18,085	20,414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557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23,829	24,244	24,681
1차산업	4,654	3,733	3,237	2,403	2,243	2,148	2,069	1,950	1,825	1,824	1,813	1,781	1,723	1,686	1,648	1,566	1,542	1,528
2차산업	3,079	3,659	4,900	4,844	4,310	4,285	4,259	4,222	4,306	4,192	4,146	4,073	4,031	3,965	3,859	4,049	4,108	4,120
3차산업	5,951	7,578	9,868	13,168	14,603	15,139	15,841	15,967	16,427	16,542	16,897	17,298	17,679	17,906	17,998	18,214	18,555	19,033
남자	8,462	9,137	10,709	12,147	12,387	12,581	12,944	13,031	13,198	13,198	13,330	13,444	13,607	13,703	13,734	13,915	14,153	14,337
1차산업	2,620	2,114	1,742	1,243	1,171	1,132	1,085	1,026	959	958	963	943	911	904	910	884	859	870
2차산업	1,913	2,303	2,909	3,080	2,775	2,765	2,739	2,746	2,812	2,742	2,774	2,747	2,722	2,713	2,697	2,811	2,834	2,850
3차산업	3,929	4,720	6,057	7,824	8,442	8,684	9,119	9,259	9,423	9,494	9,593	9,754	9,973	10,066	10,127	10,220	10,460	10,668
여자	5,222	5,833	7,376	8,267	8,769	8,991	9,225	9,108	9,364	9,364	9,526	9,706	9,826	9,874	9,772	9,914	10,091	10,294
1차산업	2,034	1,619	1,495	1,160	1,072	1,016	984	923	866	866	850	838	812	783	738	683	683	659
2차산업	1,166	1,356	2,081	1,764	1,535	1,520	1,519	1,476	1,494	1,450	1,372	1,326	1,308	1,272	1,162	1,238	1,274	1,270
3차산업	2,022	2,858	3,800	5,344	6,161	6,455	6,722	6,709	7,004	7,048	7,304	7,543	7,706	7,820	7,872	7,994	8,134	8,365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 1992년 이전은 제5차, 1993-2000년은 제6차, 2001-2004년은 제8차 분류기준에 따름. 2004년 이후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르는데, 이전 자료와 시계열 연결이 되지 않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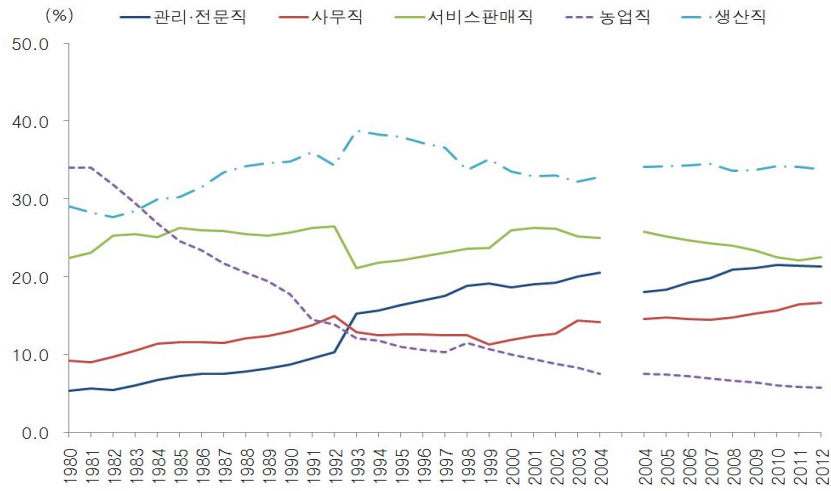
서비스업종별 취업자비율, 2004-2012



주: 1) 서비스업종별 취업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도소매·숙박업	26.0	25.4	24.9	24.4	24.1	23.6	23.0	22.7
운송·창고·통신업	7.7	7.9	8.0	8.0	8.0	8.1	8.2	8.4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11.0	11.4	12.0	12.7	12.9	13.0	13.6	13.9
공공·사회·개인 서비스업	20.0	20.7	21.3	21.8	22.7	23.9	23.8	23.9

취업자의 직업구성, 1980-2012



주: 1) 취업자의 직업구성은 직업별 취업자비율로서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2) 분류체계 변화로 2004년 이후는 시계열 연결이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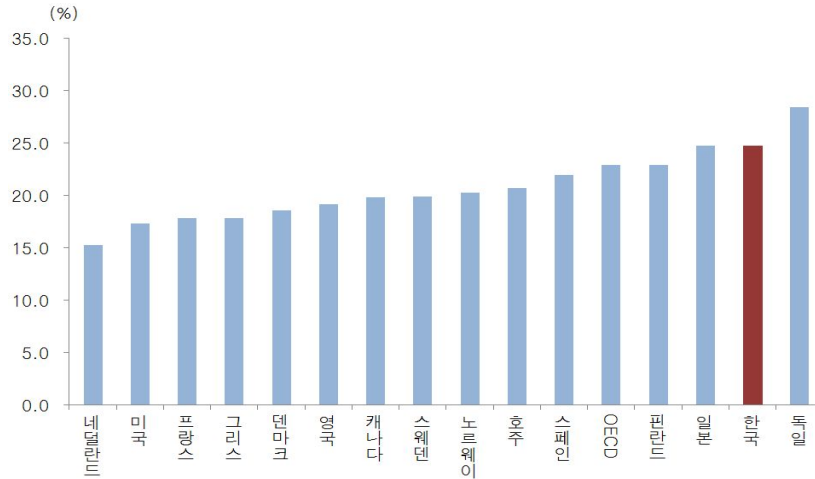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표

연도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업직	생산직
1980	5.3	9.3	22.4	34.0	29.0
1985	7.3	11.5	26.3	24.6	30.3
1990	8.7	13.0	25.7	17.8	34.8
1995	16.4	12.6	22.1	11.1	37.9
2000	18.6	11.9	26.0	10.0	33.5
2001	19.0	12.4	26.2	9.4	33.0
2002	19.2	12.7	26.1	8.9	33.0
2003	20.1	14.3	25.2	8.3	32.2
2004	20.5	14.1	25.0	7.5	32.8
2004	18.0	14.6	25.7	7.5	34.1
2005	18.4	14.8	25.2	7.5	34.2
2006	19.2	14.6	24.7	7.2	34.3
2007	19.8	14.5	24.3	6.9	34.5
2008	20.9	14.8	24.0	6.7	33.6
2009	21.2	15.3	23.4	6.5	33.7
2010	21.5	15.7	22.5	6.0	34.2
2011	21.5	16.5	22.1	5.9	34.1
2012	21.3	16.6	22.5	5.8	33.8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제조업 취업자비율, 2011



주: 1) 제조업 취업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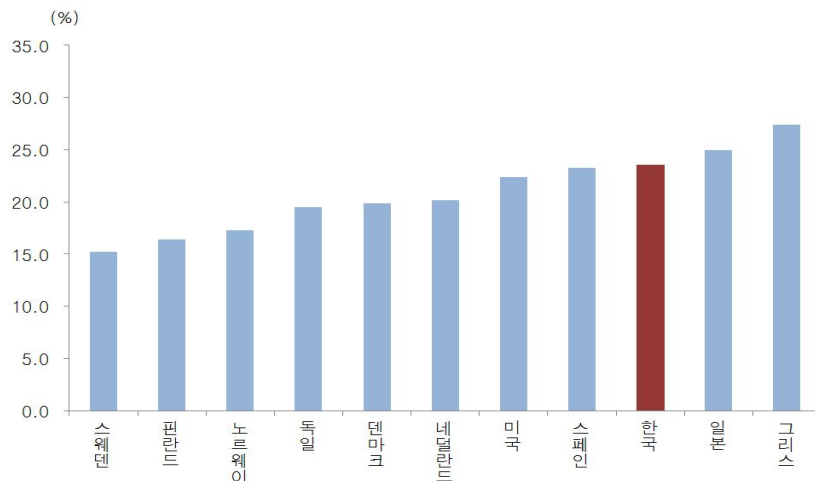
2) 스위스는 2009년 데이터임.

출처: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2013.

통계표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영국	캐나다	스웨덴
제조업 취업자비율	15.3	17.3	17.8	17.8	18.6	19.1	19.8	19.9
	노르웨이	호주	스페인	OECD	핀란드	일본	한국	독일
제조업 취업자비율	20.2	20.7	21.9	22.9	22.9	24.8	24.8	28.4

OECD 주요국의 도소매·숙박업 취업자비율, 2009



주: 1) 도소매·숙박업 취업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도소매·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Structural Analysis Statistics*, 2011.

통계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도소매·숙박업 취업자 비율	15.2	16.4	17.3	19.5	19.9	20.2
	미국	스페인	한국	일본	그리스	
도소매·숙박업 취업자 비율	22.4	23.3	23.6	24.9	27.4	

OECD 주요국의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취업자비율, 2009



주: 1)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취업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Structural Analysis Statistics*, 2011.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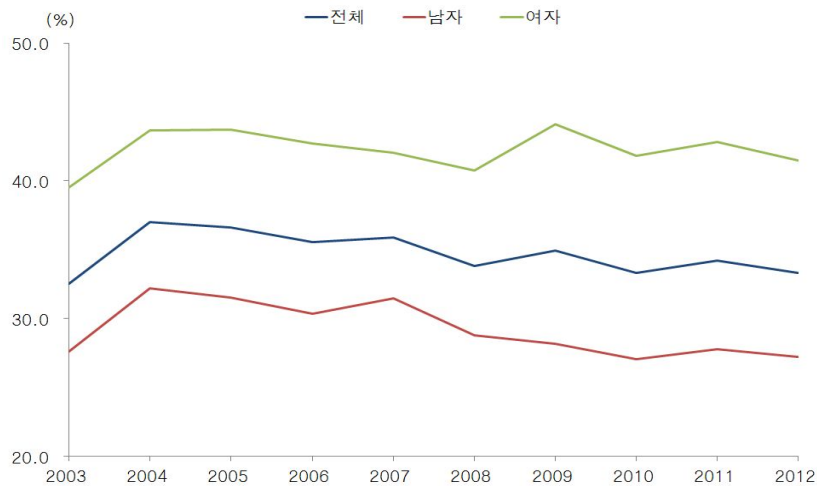
	그리스	스페인	한국	핀란드	노르웨이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10.1	12.4	13.0	13.9	14.1
	덴마크	스웨덴	독일	미국	네덜란드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 취업자 비율	16.0	16.5	17.3	18.5	21.4

1.4.2. 임금

14204. 비정규직근로자비율

■ 주요지표

성별 비정규직근로자비율, 2003-2012



주: 1)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등)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로 근무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의 잔여범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함. 한시적 근로자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시간제 근로자는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고,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비정규직 근로의 하위범주인 한시적 근로, 시간제 근로, 비전형 근로는 상호배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범주의 합은 비정규직 규모보다 큼.
- 측정 방법: $\text{비정규직근로자비율} = (\text{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수}) \div (\text{전체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 지표의 의의

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 일차적으로는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포착하는 개념이다.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실제로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근로조건 수준 악화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 정도와 근로조건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 해설

비정규직 비율을 엄밀한 정의에 따라 측정하고 자료의 안정성이 확보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4년에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2년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1/3이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성별 차이도 분명한데, 남성근로자의 경우 27.2%가 비정규직인데 비해서 여성근로자는 41.5%가 비정규직이다. 연령별로는 10대와 60세 이상 인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비정규직 고용의 하위범주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한시적 근로자의 비중은 19.2%이며 시간제 근로자는 10.3%, 비전형근로자는 12.9%이다. 최근에는 시간제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비교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비해서, 시간제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에 속한다. 국제비교지표는 OECD에 개별 국가가 제출하는 통계수치를 취합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같은 기준을 가지고 측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OECD에서 한시적 근로는 ‘temporary employment’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에는 한국에서 한시적 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일일근로가 포함된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연령집단별 비정규직근로자비율, 2003-20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32.6	37.0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성										
남자	27.6	32.2	31.5	30.4	31.5	28.8	28.2	27.1	27.8	27.2
여자	39.5	43.7	43.7	42.7	42.1	40.8	44.1	41.8	42.8	41.5
연령집단										
15-19세	62.3	61.8	71.0	71.3	70.7	65.1	74.9	69.8	69.4	75.9
20-29세	29.6	33.3	32.8	30.9	31.2	31.0	31.7	31.3	31.6	30.5
30-39세	26.3	32.1	30.4	29.8	29.8	26.7	25.2	23.3	24.3	23.1
40-49세	31.2	35.9	36.3	34.1	34.1	31.6	32.3	29.8	30.5	29.1
50-59세	40.0	43.1	42.8	41.9	42.6	39.6	40.6	39.3	39.6	37.6
60세이상	65.9	67.7	66.7	69.0	66.0	65.7	72.7	69.6	70.5	70.5

주: 1)비정규직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금근로자(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 등)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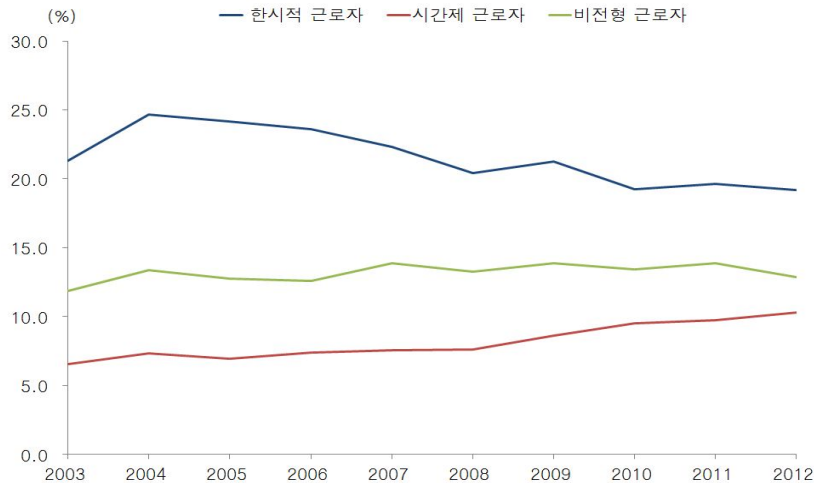
성 및 연령집단별 비정규직근로자수, 2003-2012

	(1,000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4,606	5,394	5,483	5,457	5,703	5,445	5,754	5,685	5,995	5,911
성										
남자	2,286	2,732	2,736	2,705	2,907	2,699	2,681	2,649	2,791	2,757
여자	2,320	2,662	2,747	2,752	2,796	2,746	3,073	3,037	3,203	3,154
연령집단										
15-19세	167	144	169	144	157	136	146	148	159	195
20-29세	1,134	1,282	1,237	1,141	1,144	1,101	1,101	1,069	1,084	1,016
30-39세	1,136	1,429	1,371	1,385	1,383	1,264	1,182	1,110	1,163	1,108
40-49세	1,057	1,284	1,364	1,325	1,397	1,334	1,408	1,352	1,417	1,358
50-59세	658	743	800	851	960	946	1,041	1,121	1,212	1,217
60세이상	455	512	543	611	661	664	876	885	959	1,017

주: 1) 비정규직근로자는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 보조지표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비율,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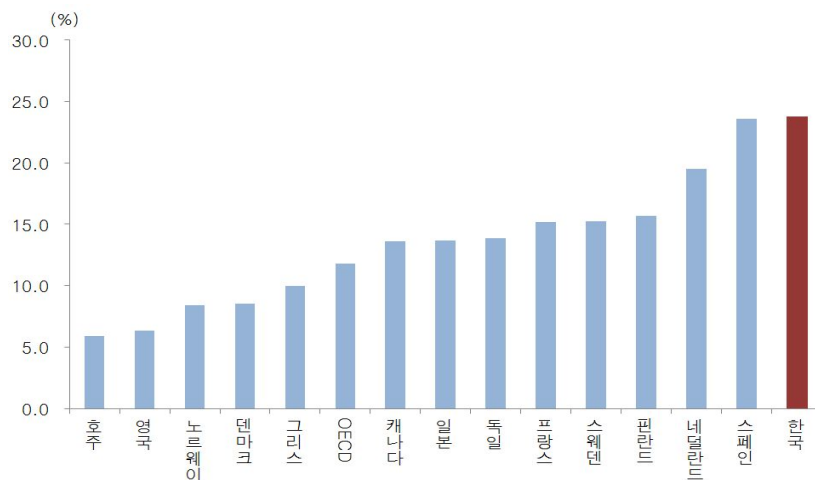


주: 1) 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해당 비정규직 유형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임.
2)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제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 8월.

통계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시적	21.3	24.7	24.2	23.6	22.3	20.4	21.3	19.2	19.7	19.2
시간제	6.6	7.4	7.0	7.4	7.6	7.6	8.7	9.5	9.7	10.3
비전형	11.9	13.4	12.7	12.6	13.9	13.3	13.9	13.4	13.9	12.9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한시적근로자비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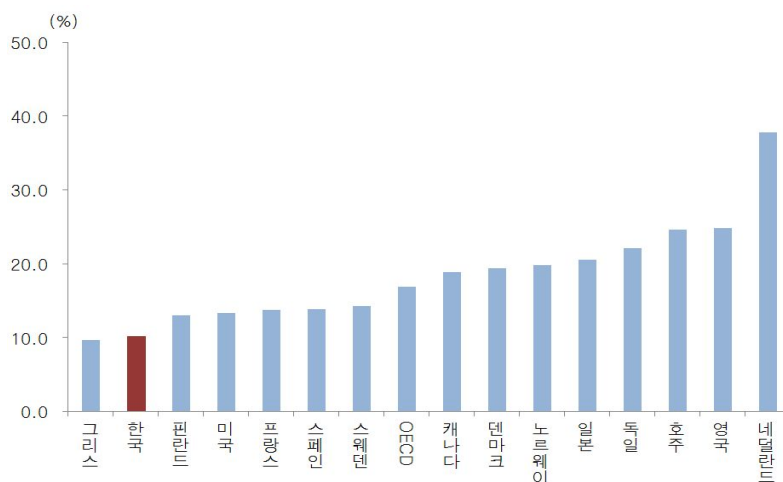
주: 1) 한시적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비율임. 한시적 근로자는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이며, ①기간제 근로자 ②계약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자 ③파견근로자 ④호출근로자의 범주를 모두 포함함.
2) 한국은 2011년, 스웨덴은 2009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2013.

통계표

	호주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스	OECD	캐나다	일본
한시적 근로자 비율	5.9	6.3	8.4	8.5	10.0	11.8	13.6	13.7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한국	
한시적 근로자 비율	13.9	15.2	15.3	15.7	19.5	23.6	23.8	

OECD 주요국의 시간제근로자비율, 2012



주: 1) 시간제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시간제 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임.

출처: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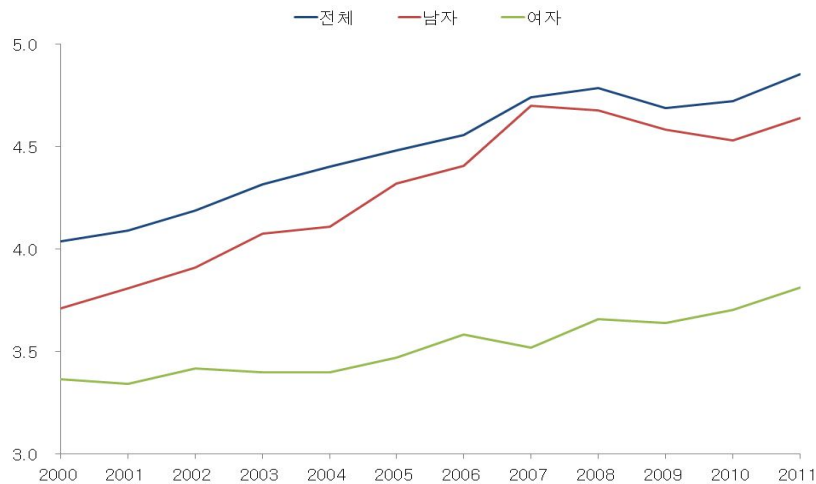
통계표

	그리스	한국	핀란드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OECD
시간제 근로자 비율	9.7	10.2	13.0	13.4	13.8	13.8	14.3	16.9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	독일	호주	영국	네덜란드
시간제 근로자 비율	18.8	19.4	19.8	20.5	22.1	24.6	24.9	37.8

14205.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 주요지표

성별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2000-2011



주: 1) 임금격차는 1분위(하위 10%) 임금근로소득 대비 10분위(상위 10%) 임금근로소득의 배율임.
출처: OECD, *OECD.Stat*.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는 임금근로자 근로소득을 10분위로 나눌 때, 1분위 근로소득 대비 10분위 근로소득의 배율임, 즉, 소득 상위 10% 지점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이 하위 10% 지점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의 몇 배가 되는지 측정하는 지표임.
- 측정 방법: $\text{임금격차} = (\text{10분위 임금근로소득}) \div (\text{1분위 임금근로소득})$.

● 지표의 의의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들 간에 임금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임금소득이 상위 10% 지점에 있는 근로자의 소득이 하위 10% 지점에 있는 근로자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지를 측정한다. 이 수치가 클수록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해설

한국에서 임금소득이 상위 10% 지점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하위 10% 지점에 있는 근로자에 비해서 4.85배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 수치는 2000년에는 4.04배였으나 2000년대 중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증가세가 멈추는 추이에 있다. 여성근로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3.81배가량 되어 남성에 비해서는 작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남성의 경우 2007년 이후 격차의 폭이 줄어들려는 경향을 보인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격차는 OECD 주요국들 중에서 미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도 한국은 매우 큰 편에 속한다. 여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2년 현재 남성 임금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이 지표는 남성의 월임금액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의 평균 월임금액의 수준을 측정한 것이다. 국제비교로 살펴보면, 한국은, 통계를 보고한 OECD 주요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즉 성별 임금차이가 가장 큰 국가이다.

근로형태별 임금차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월임금액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최근 6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정규직 임금에 70% 수준, 파견/용역근로자의 임금은 57% 수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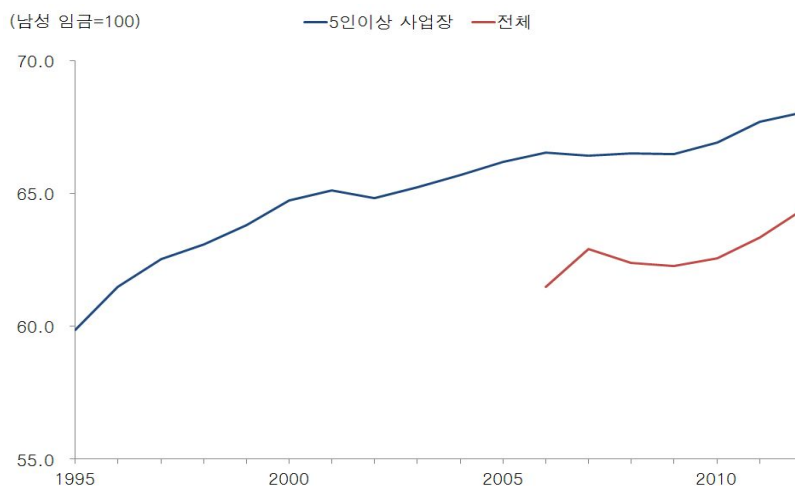
성별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2000-201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4.04	4.09	4.19	4.32	4.40	4.48	4.56	4.74	4.78	4.69	4.72	4.85
남자	3.71	3.81	3.91	4.07	4.11	4.32	4.41	4.70	4.68	4.58	4.53	4.64
여자	3.36	3.34	3.42	3.40	3.40	3.47	3.58	3.52	3.66	3.64	3.70	3.81

주: 1) 임금격차는 1분위(하위 10%) 임금근로소득 대비 10분위(상위 10%) 임금근로소득의 배율임.
출처: OECD, *OECD.Stat*.

■ 보조지표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 199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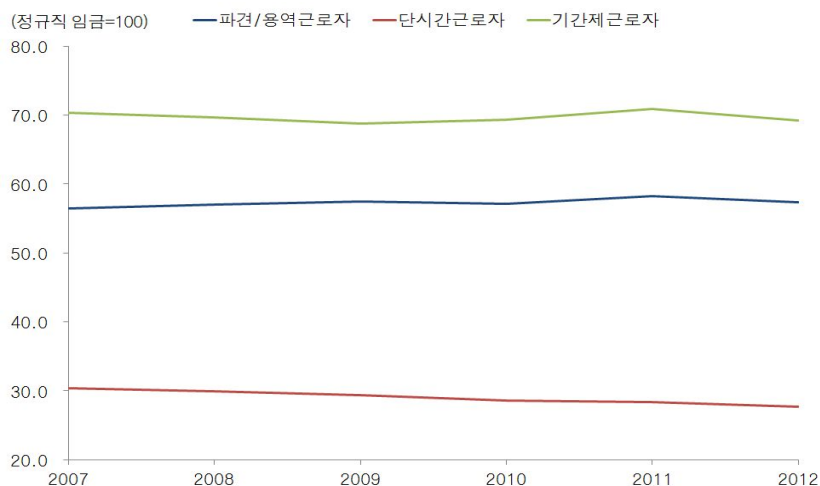


주: 1)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여성의 평균 월임금액 ÷ 남성의 평균 월임금액) × 1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포함)」, 각 년도.

통계표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인이상사업장	59.9	64.8	65.1	64.8	65.2	65.7	66.2	66.5	66.4	66.5	66.5	66.9	67.7	68.0
전체사업장	-	-	-	-	-	-	-	61.5	62.9	62.4	62.3	62.6	63.3	64.4

근로형태별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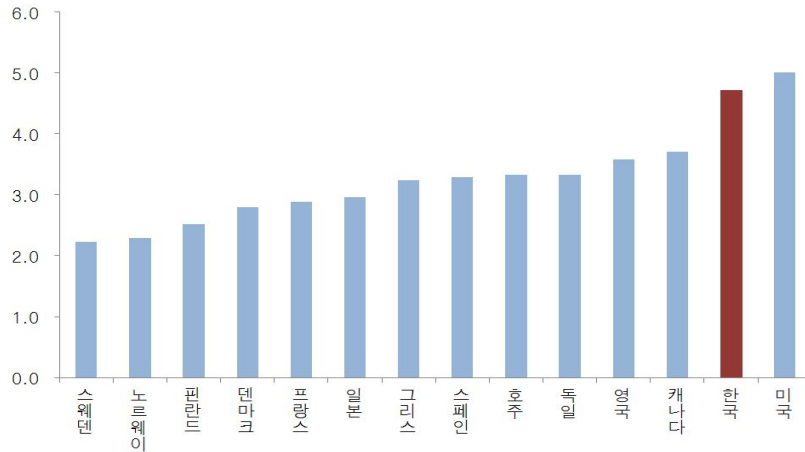
주: 1) 근로형태별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해당유형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임금액 ÷ 정규직의 평균 월임금액) × 100.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포함)」, 각 년도.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파견/용역근로자	56.4	57.0	57.4	57.2	58.3	57.3
단시간근로자	30.4	29.9	29.3	28.6	28.4	27.7
기간제근로자	70.3	69.7	68.7	69.4	70.9	69.2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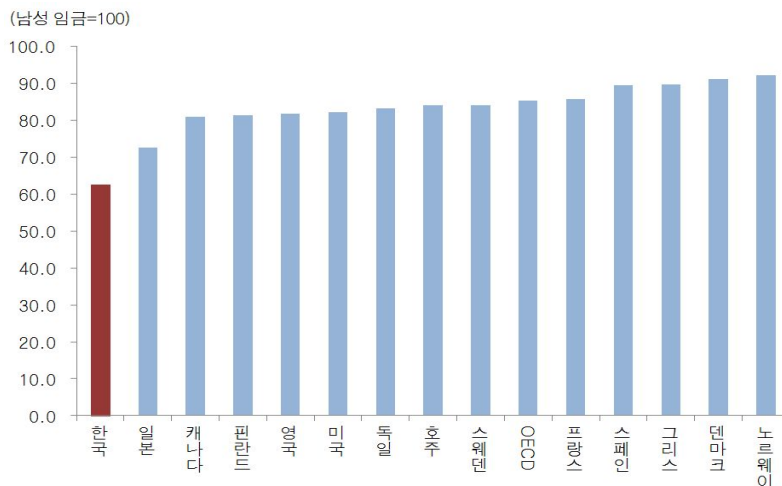
주: 1) 임금격차는 1분위(하위 10%) 임금근로소득 대비 10분위(상위 10%) 임금근로소득의 배율임.
 2)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현금 소득 기준이며, 초과근무나 특별수당까지도 포함함.
 3) 프랑스는 2009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Stat*.

통계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일본	그리스
임금격차	2.23	2.30	2.52	2.80	2.89	2.96	3.24
	스페인	호주	독일	영국	캐나다	한국	미국
임금격차	3.30	3.33	3.33	3.58	3.71	4.72	5.01

OECD 주요국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 2011



주: 1)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여성의 임금 ÷ 남성의 임금) × 100.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 기준임.

2) 프랑스는 2009년, 독일은 2010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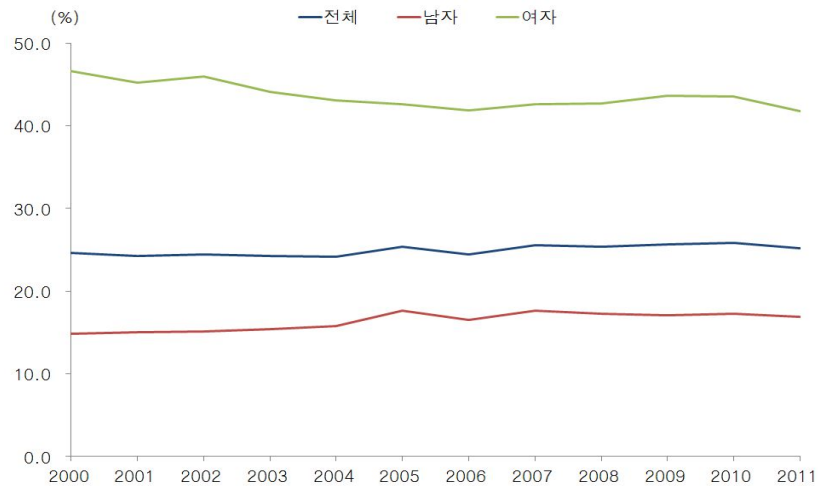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영국	미국	독일	호주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	62.5	72.6	80.8	81.4	81.8	82.2	83.3	84.0
	스웨덴	OECD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노르웨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	84.1	85.2	85.7	89.4	89.6	91.2	92.2	

14206. 저임금근로자비율

■ 주요지표

성별 저임금근로자비율, 2000-2011



주: 1) 저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Stat*.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저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저임금근로자비율 = (임금이 임금 중위값의 2/3 보다 적은 임금근로자의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 × 100

● 지표의 의미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임금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핵심지표이며 국제비교 지표로도 흔히 사용된다. 저임금의 정의는 중위임금의 2/3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에 저임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 해설

한국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2011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5.1%이다. 이러한 수준은 2000년부터 큰 증감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고, 캐나다와 영국 등의 영어권 국가가 비교적 높은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보인다. 한국 저임금근로자의 상당부분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남성근로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는 16.9% 수준인데 비해서, 여성근로자 중에서 저임금근로자는 4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최저임금의 수준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흔히 간주되지만, 한국에서는 법정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이 수치의 변화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 비율은 2011년에 10.8%이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몇 퍼센트인지로 측정하는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기준으로 0.41, 즉 중위임금의 41% 수준이다.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비교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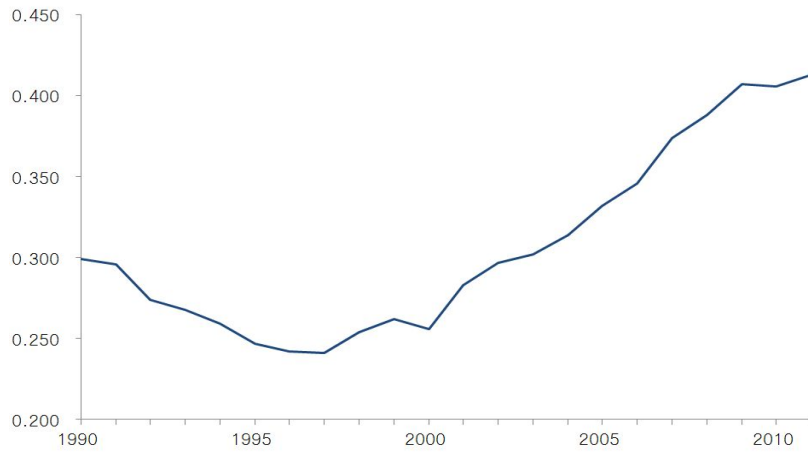
성별 저임금근로자비율, 2000-2011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4.6	24.2	24.5	24.3	24.2	25.4	24.5	25.6	25.4	25.7	25.9	25.1
남자	14.8	15.0	15.1	15.4	15.8	17.6	16.6	17.7	17.3	17.1	17.3	16.9
여자	46.6	45.2	45.9	44.1	43.1	42.6	41.9	42.6	42.7	43.6	43.5	41.7

주: 1) 저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Stat*.

■ 보조지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199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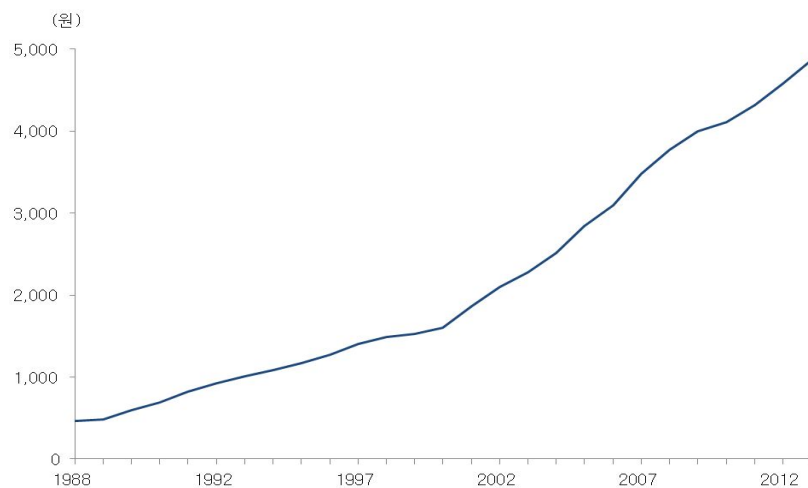


주: 1) 중위임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임금임.
출처: OECD, *OECD.Stat.*

통계표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0.299	0.247	0.256	0.283	0.297	0.302	0.31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0.332	0.346	0.374	0.388	0.407	0.406	0.413

최저임금액, 198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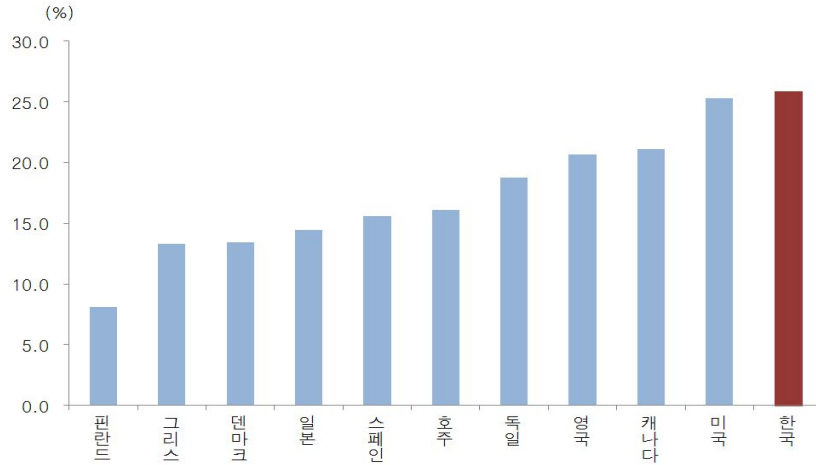
주: 1)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근로자 보수의 최저액이며, 시간당 임금 기준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통계표

	1988	1988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최저임금액	463	488	690	1,170	1,600	1,865	2,100	2,275	2,51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최저임금액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저임금근로자비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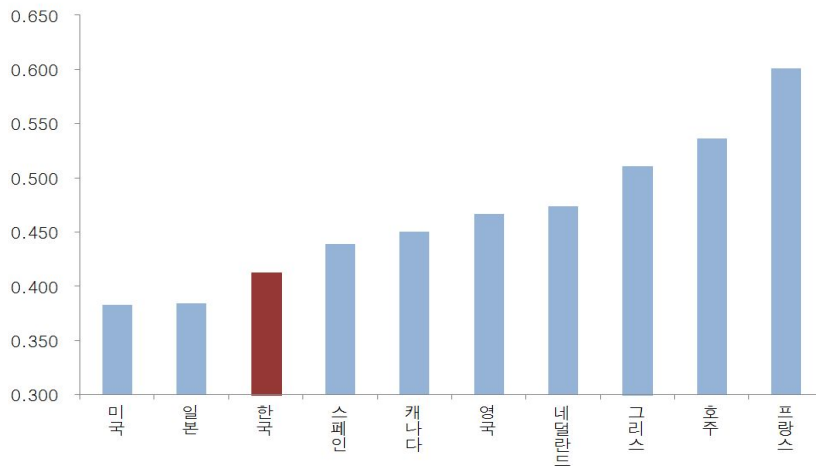


주: 1) 저임금근로자비율은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2013.

통계표

	핀란드	그리스	덴마크	일본	스페인	호주
저임금근로자 비중	8.1	13.3	13.4	14.5	15.6	16.1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한국	
저임금근로자 비중	18.8	20.7	21.1	25.3	25.9	

OECD 주요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2011



주: 1) 중위임금은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임금임.
출처: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2013.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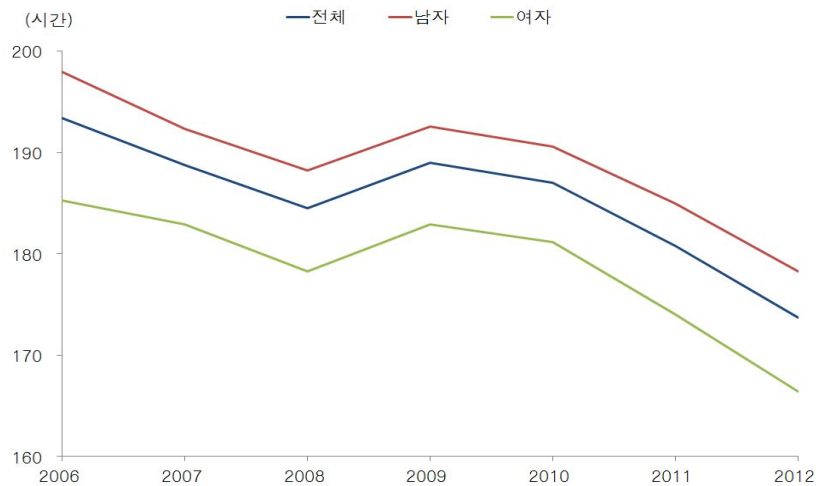
	미국	일본	한국	스페인	캐나다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0.383	0.384	0.413	0.439	0.450
	영국	네덜란드	그리스	호주	프랑스
최저임금의 상대수준	0.467	0.474	0.511	0.536	0.610

1.4.3. 근로조건

14307. 근로시간

■ 주요지표

임금근로자의 성별 월간근로시간, 2006-2012



주: 1) 근로시간에는 정상근로시간 외에도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포함)」,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 근로시간으로서, 정상근로시간 뿐 아니라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등 초과근로시간을 모두 합친 것임
- 측정 방법: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집계한 월간 총 근로시간으로 측정함.

● 지표의 의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의 장시간근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바, 이것을 얼마나 줄여나가는가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간 총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1개월에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로에 따라서 증가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비중이 크면 줄어들게 된다.

● 해설

한국 임금근로자의 월간근로시간은 2012년 현재 173.7시간이다. 2006년에 193.4시간이었던 것에 비하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이다. 근로형태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단시간 근로자(시간제)의 월간근로시간은 2007년 127시간에서 2012년에는 91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77시간, 파견·용역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83시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의 근로시간이 여성보다 길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약간 짧은 근로시간을 보일 뿐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으나,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장시간근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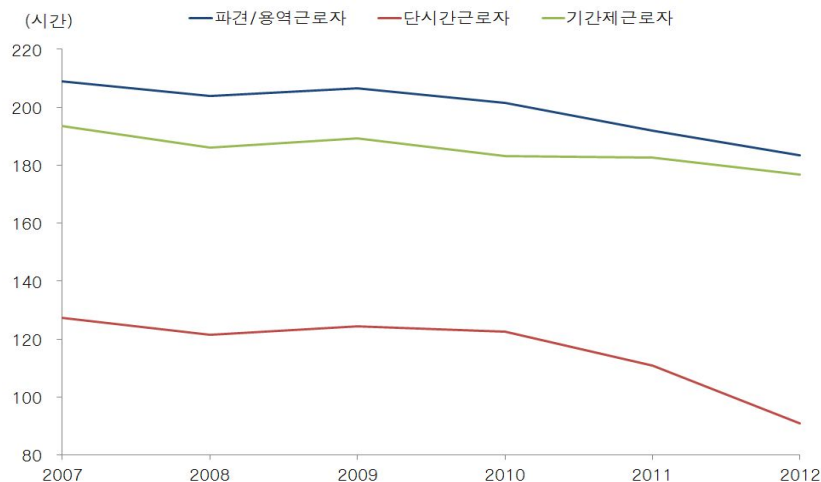
임금근로자의 성 및 연령집단별 월간근로시간, 2006-2012

	(시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93.4	188.8	184.5	189.0	187.0	180.8	173.7
성							
남자	198.0	192.3	188.2	192.6	190.6	185.0	178.3
여자	185.3	182.9	178.3	182.9	181.2	174.0	166.4
연령집단							
29세 이하	186.9	184.7	178.6	184.0	180.3	175.6	166.6
30-39세	192.3	186.4	183.1	189.3	187.6	183.0	176.5
40-49세	195.5	190.2	186.8	190.4	189.2	182.3	175.9
50-59세	198.9	194.6	189.3	191.9	190.5	181.5	175.4
60세 이상	219.1	210.2	203.1	196.2	192.8	180.6	169.8

주: 1) 근로시간에는 정상근로시간 외에도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포함)」, 각 년도.

■ 보조지표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월간근로시간,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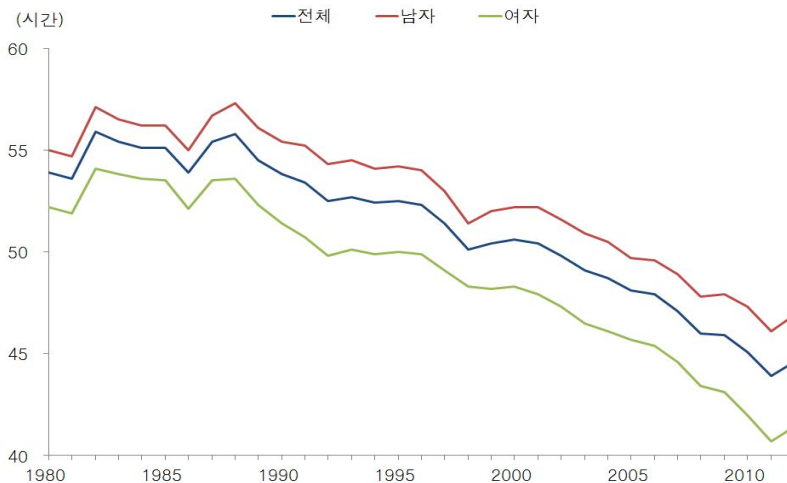


주: 1) 근로시간에는 정상근로시간 외에도 초과근로시간이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포함)」, 각 년도.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파견/용역근로자	209	204	207	202	192	183
단시간근로자	127	122	124	123	111	91
기간제근로자	194	186	189	183	183	177

취업자의 성별 주당근로시간, 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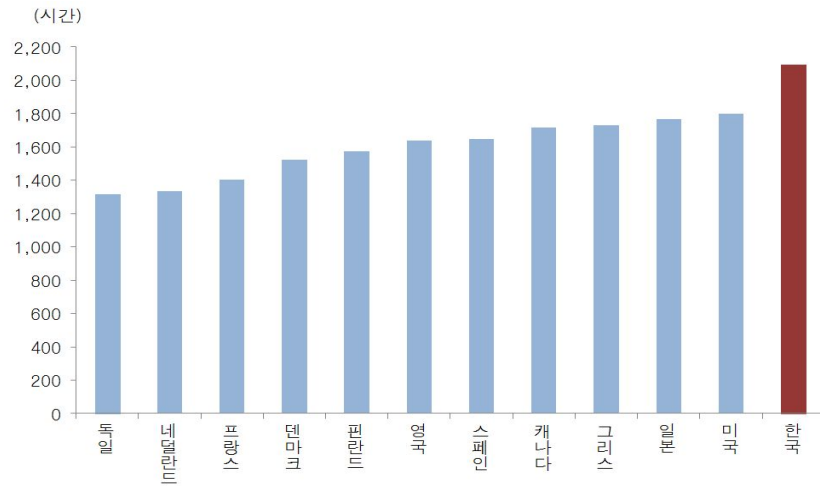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전체	53.9	55.1	53.8	52.5	50.6	50.4	49.8	49.1	48.7
남자	55.0	56.2	55.4	54.2	52.2	52.2	51.6	50.9	50.5
여자	52.2	53.5	51.4	50.0	48.3	47.9	47.3	46.5	46.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48.1	47.9	47.1	46.0	45.9	45.1	43.9	44.6	
남자	49.7	49.6	48.9	47.8	47.9	47.3	46.1	46.9	
여자	45.7	45.4	44.6	43.4	43.1	42.0	40.7	41.4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 임금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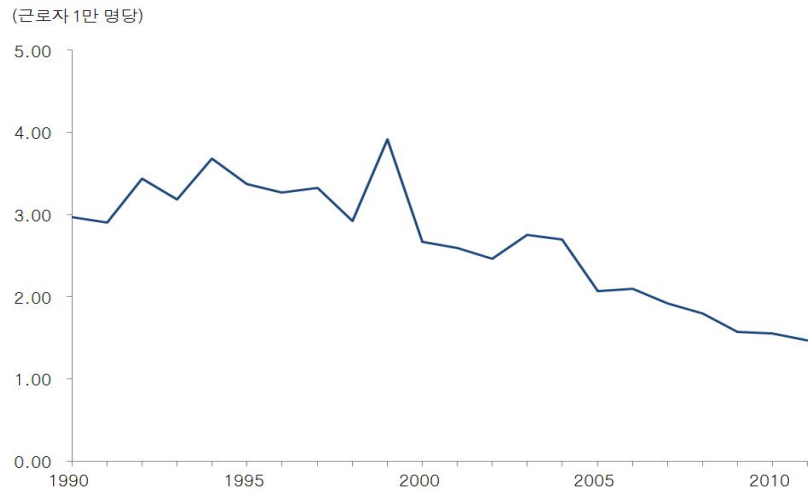
출처: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2013.

통계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영국
근로시간	1,317	1,334	1,402	1,523	1,575	1,637
	스페인	캐나다	그리스	일본	미국	한국
근로시간	1,645	1,717	1,728	1,765	1,798	2,092

14308. 산재사망률

■ 주요지표

산재사망률, 1980-2011



주: 1) 산재사망률=(산재로 인한 사망자수 ÷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수) × 10,000. 사망자에는 요양 중 사망자도 포함됨.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산재사망률은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중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비율임. 근로자 10,000명 중 사망자 수로 측정함. 사망자에는 요양 중 사망자를 포함함.
- 측정 방법: 산재사망률 = (산재로 인한 사망근로자 수) ÷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 수) × 10,000.

● 지표의 의의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업재해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다. 재해율은 대상근로자 수 대비 재해근로자의 수로 측정되며, 총근로시간 중 재해로 인해 손실된 모든 시간의 비율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런 지표들은 전반적인 산업재해의 현황을 드러내 주는 지표이지만, 통계에 포착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고가 있고, 그 누락 정도가 국가마다 시기마다 매우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 산재로 인한 사망 근로자의 수로 포착하는 산재사망 만인률(1만 명당 사망자 수)이다.

● 해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률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 근로자 1만 명당 3명이었던데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자 1만 명 중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1.5명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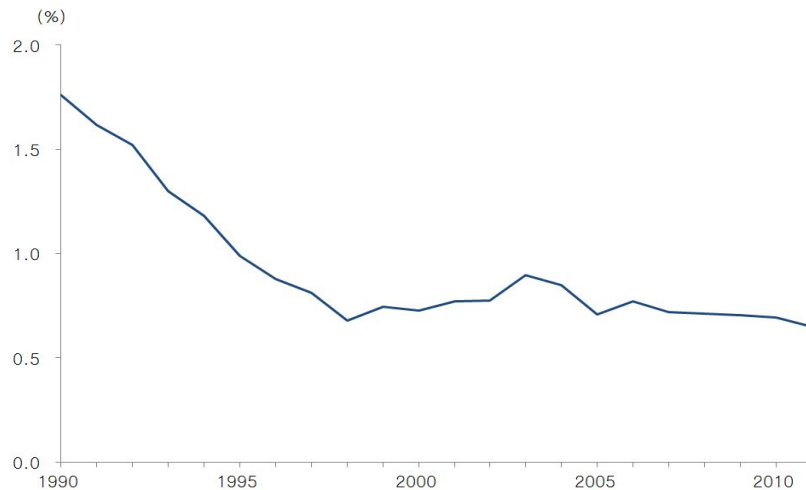
산업재해자수, 1990-2011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산재적용대상근로자(1,000명)	7,543	7,894	9,486	10,581	10,571	10,599	10,473	12,070	11,689	12,529	13,490	13,885	14,199	14,362
재해자(명)														
전체	132,893	78,034	68,976	81,434	81,911	94,924	88,874	85,411	89,910	90,147	95,806	97,821	98,645	93,292
사망자	2,236	2,662	2,528	2,748	2,605	2,923	2,825	2,493	2,453	2,406	2,422	2,181	2,200	2,114
부상	129,019	74,252	63,511	74,290	75,116	84,261	78,154	76,518	78,343	77,292	84,624	87,699	89,459	84,662
업무상 질병 요양자	1,638	1,120	2,937	4,396	4,190	7,740	7,895	6,400	9,114	10,449	8,760	7,941	6,986	6,516

주: 1) 산업재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임.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 년도.

■ 보조지표

산업재해율, 1990-2011



주: 1) 산업재해율=(산재로 인한 재해자수 ÷ 산재 적용 대상 근로자수) × 1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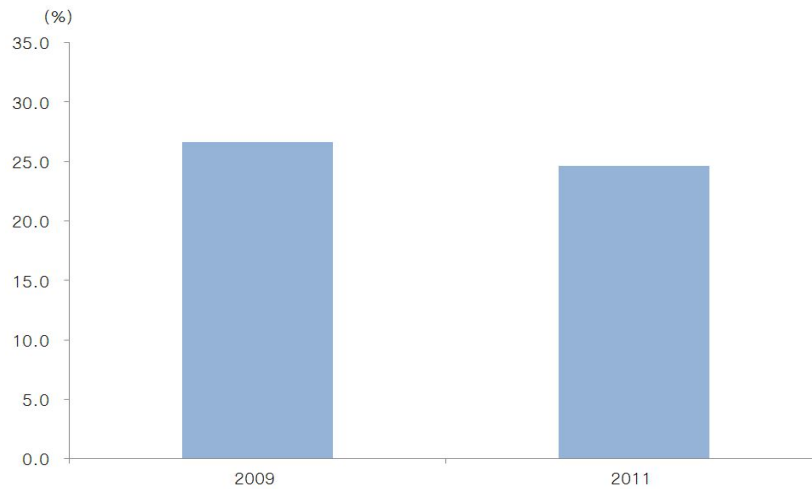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산업재해율	1.76	0.99	0.73	0.77	0.77	0.90	0.85	0.71	0.77	0.72	0.71	0.70	0.69	0.65

■ 국제비교지표 (없음)

14309. 일자리만족도

■ 주요지표

일자리 만족도, 2009, 2011



주: 1) 일자리만족도는 취업 중인 조사대상자 중 현재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일자리만족도는 취업인구 중 현재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인구의 비율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조사되는 근로여건 만족도 문항을 이용하여 산출함. 설문문항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을 합한 비율로 측정함.

● 지표의 의의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삶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들 중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주관적 지표이다.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임금수준, 고용의 안정성, 일의 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측정하기도 하는데, 이 지표는 이러한 하위 지표들을 측정하고 나서 전반적인 만족도를 다시 질문하여 얻었다.

● 해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격년으로 조사되는 항목으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대체로 취업자의 1/4정도만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2009년 조사보다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간 감소하였다. 남성보다는 여성 취업자 중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세 미만 청소년층과 60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현재 일자리의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하는 일에 비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2011년에 1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2006년에는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19.4% 수준까지 높게 나타났던 적이 있다. 일자리의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좀 더 높은 편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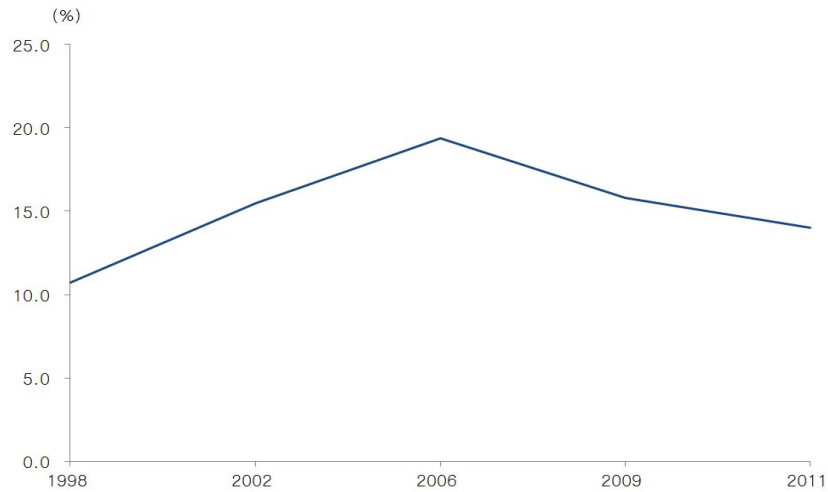
성 및 연령집단별 일자리만족도, 2009, 2011

	(%)	
	2009	2011
계	26.6	24.6
성별		
남성	26.1	23.7
여성	27.4	26.0
연령집단		
20세 미만	15.2	23.2
20-29세	28.0	26.2
30-39세	28.4	24.8
40-49세	26.8	25.3
50-59세	24.0	23.9
60세 이상	19.6	18.0

주: 1) 일자리만족도는 취업 중인 조사대상자 중 현재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9년은 15세 이상, 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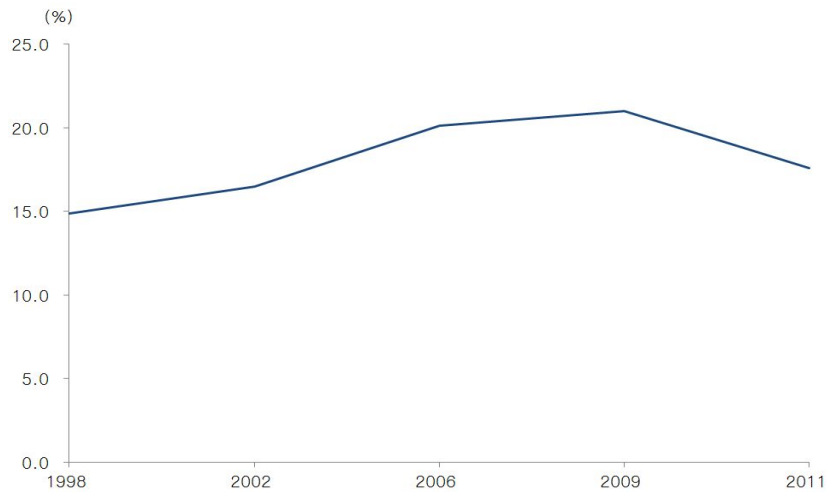
임금만족도, 1998-2011



주: 1) 임금만족도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조사대상자 중 일에 비해 현 직장 받는 임금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8	2002	2006	2009	2011
임금만족도	10.7	15.5	19.4	15.8	14.0

일자리의 장래성 만족도, 1998-2011



주: 1) 일자리의 장래성 만족도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조사대상자 중 현재 직장에서 하는 일자리의 장래성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8	2002	2006	2009	2011
만족	14.8	16.5	20.1	21.0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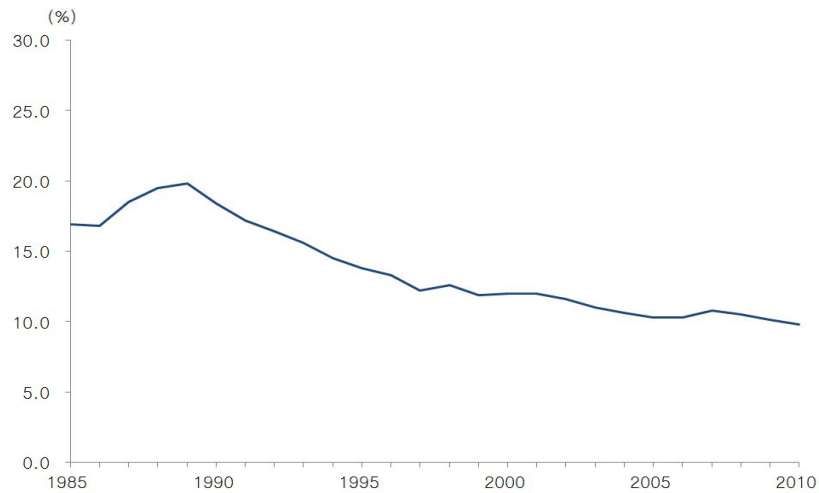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1.4.4. 노사관계

14410. 노동조합조직률

■ 주요지표

노동조합조직률, 1985-2010



주: 1) 노동조합조직률=(조합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인 자의 수로 나눈 값.
- 측정 방법: 노동조합조직률 = (조합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 지표의 의의

노동조합조직률은 근로자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단,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범위가 조합원을 넘어서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직률이 이러한 지표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단체협약의 효력범위가 조직률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 해설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2012년 현재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1987년에 최고점에 달한 이후 노동조합 조직률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조직률은 1990년에 18.4%로 비교적 높았으나 그 이후로 하락하는 추이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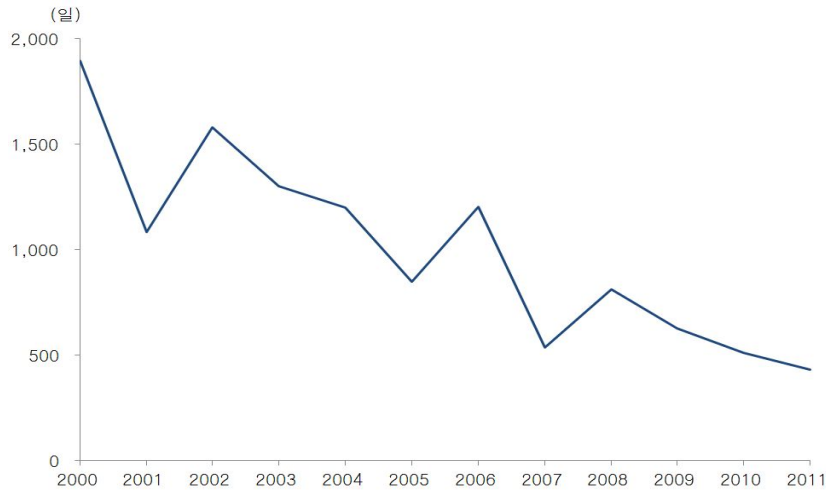
노동조합조직률, 1985-2010

	(%)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노동조합조직률	16.9	18.4	13.8	12.0	12.0	11.6	11.0	10.6	10.3	10.3	10.8	10.5	10.1	9.8

주: 1) 노동조합조직률=(조합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각 년도.

■ 보조지표

근로손실일수,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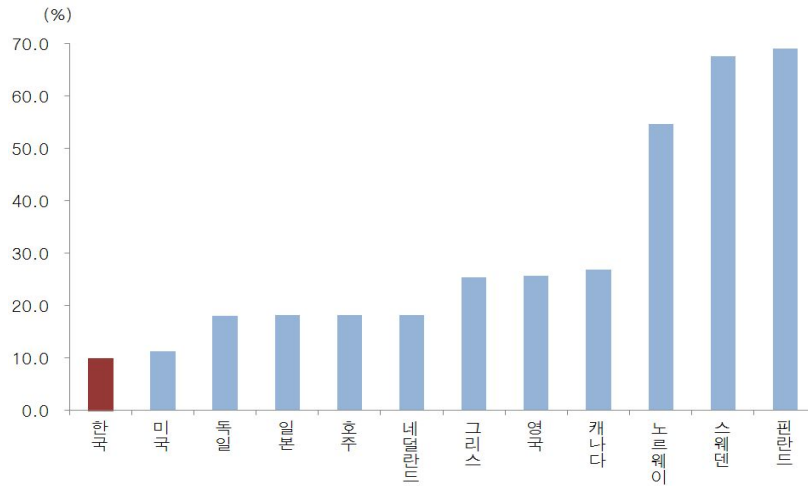


주: 1)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임.
출처: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근로손실일수	1,894	1,083	1,580	1,299	1,199	84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근로손실일수	1,201	536	809	627	511	429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노동조합조직률, 2011



주: 1) 노동조합조직률=(조합원수 ÷ 임금근로자수) × 100.

출처: OECD, *OECD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Statistics*, 2013.

통계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네덜란드	그리스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노동조합조직률	9.9	11.3	18.0	18.1	18.1	18.2	25.4	25.6	26.8	54.6	67.5	69.0

OECD 주요국의 단체협약적용률, 2000년대 후반



주: 1) 단체협약적용률은 노동조합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결과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임.

2) 미국은 2010년, 캐나다, 독일, 헝가리, 영국은 2009년, 프랑스, 그리스, 일본,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2008년, 호주, 덴마크, 핀란드는 2007년 자료임.

출처: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3: Going for Growth*, 2013..

통계표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헝가리	폴란드	호주	OECD
단체협약적용률	10.0	13.1	16.0	31.6	32.7	33.5	38.0	40.0	53.4
	독일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단체협약적용률	62.0	65.0	74.0	80.0	82.3	84.5	90.0	90.0	91.0

1.5. 소득과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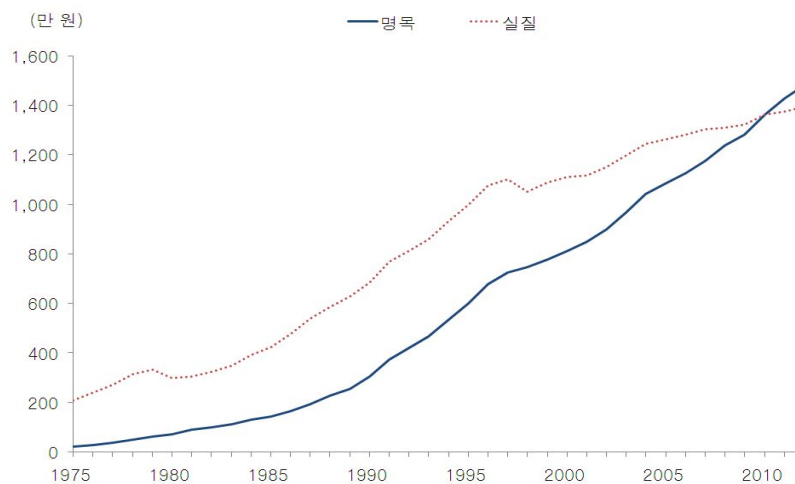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소득과 소비	소득과 자산	• 개인소득	• 소득만족도	• 개인소득
		• 가구소득	•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원천구성 • 가구소득변화인식	• 가구소득
		• 가구자산	•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 • 가구자산과 부채 • 가구부채변화인식	
	소득분배	• 지니계수	• 소득5분위배율 • 상대적빈곤율	• 지니계수
	소비와 물가	• 소비지출	• 소득대비소비지출액 • 가구 소비지출구성 • 소비생활만족도	• 소비지출
		• 물가상승률	• 생활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 • 물가수준
	저축	• 저축률		• 가계저축률

1.5.1 소득과 자산

15101. 개인소득

■ 주요지표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 1975-2012



주: 1)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이 임의로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임.

2) 실질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이 임의로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개인본원소득에서 직접세와 기타 경상이전지급을 공제한 것을 의미함. 개인본원소득(PPI)이란 국민소득(NI)에서 법인소득과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등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고, 경상이전지급이란 자산이나 저축이 아닌 경상수입 중에서 충당되는 소득의 이전거래로 사회보장부담금, 보조금 등을 말함.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한 해의 중간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계한 인구 수)로 나눈 것임.
- 측정 방법: $\text{개인총처분가능소득} = (\text{개인본원소득} - \text{직접세} - \text{경상이전지급}) \div \text{연앙인구}$.

● 지표의 의의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경제 전체 또는 개인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로서, 국민소득을 분배측면에서 본 지표이며 개인이 소비와 저축을 결정할 때 주로 이용하는 중요 지표이다. 본 지표를 인구의 수로 나눈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한 국가 내 개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 해설

한국의 2012년 1인당 명목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1,482만 원으로 이는 2000년도 개인총처분가능소득(813만 원) 대비 약 82% 상승한 것이고, 연평균(CAGR) 5.1%씩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으로 측정한 1인당 실질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2011년도에 비하여 1.4% 증가하였고 2000년에 비하여 연평균(CAGR) 1.9%씩 증가하였다. 2011년 한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미국의 약 47% 수준이고, OECD에 보고된 32개국 중에서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1년에는 소득수준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11%인 반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49%로 나타나 대부분 본인의 소득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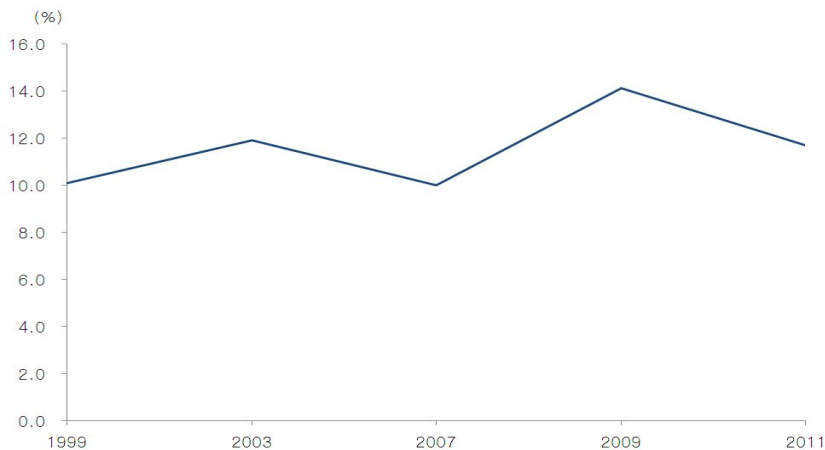
1인당 개인총처분가능소득, 1975-2012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명목소득(만원)	23	72	145	305	602	813	1,088	1,129	1,177	1,239	1,284	1,364	1,430	1,482
증가율(%)		15.3	11.1	18.3	11.9	4.3	4.4	3.7	4.3	5.3	3.6	6.3	4.9	3.6
실질소득(만원)	209	297	424	684	1,000	1,112	1,263	1,281	1,303	1,311	1,322	1,364	1,375	1,394
증가율(%)		-10.4	8.4	9.0	7.1	2.0	1.6	1.5	1.7	0.6	0.8	3.2	0.8	1.4

주: 1)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이 임의로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임.
 2) 실질 개인총처분가능소득은 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산출함.
 3)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보조지표

소득만족도, 1999-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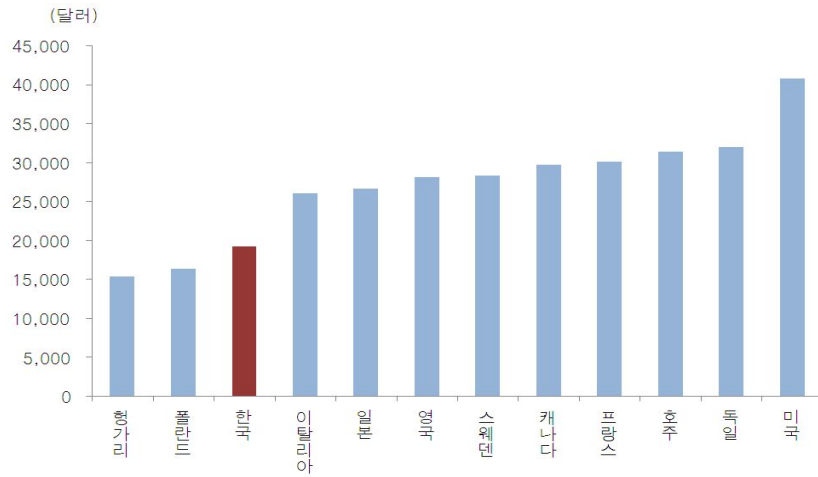


주: 1) 소득만족도는 소득이 있는 조사대상자 중 본인의 소득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2)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은 19세 이상 인구 대상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9	2003	2007	2009	2011
소득만족도	10.1	11.9	10.0	14.1	11.7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1인당 총처분가능소득,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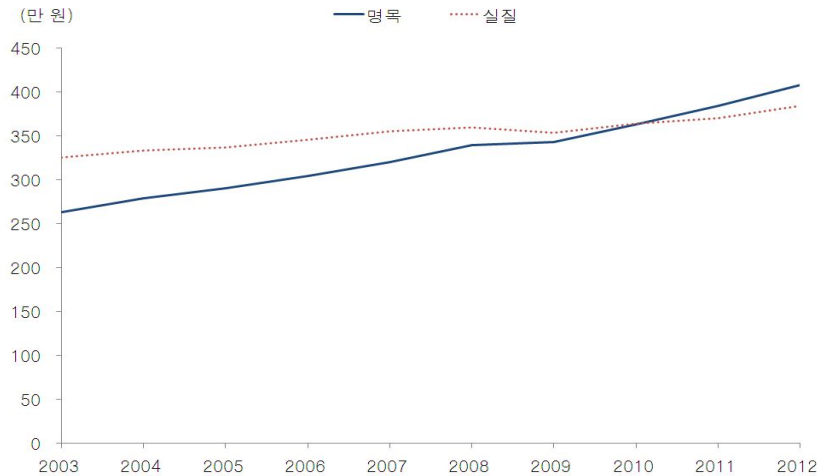
주: 1) 명목소득으로, 호주, 캐나다, 일본, 폴란드, 미국은 2010년 자료임.
 2) 개인소득에서 차감하는 직접세와 이전지급 항목의 포함 범위에 따라 국민계정 상의 자료가 OECD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2013.

통계표	헝가리	폴란드	한국	이탈리아	일본	영국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미국
1인당 총처분가능소득	15,303	16,366	19,194	26,020	26,606	28,092	28,289	29,625	30,088	31,331	31,901	40,780

15102. 가구소득

■ 주요지표

월평균 가구소득, 2003-2012



주: 1) 가구소득은 한 가구가 취득한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수입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됨.
2) 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집계된 소득임.
3) 실질가구소득은 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산출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가구소득은 한 가구가 취득한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됨.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 및 자산거래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않음.
- 측정 방법: 월평균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금융소득, 임대수입 등),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합임.

● 지표의 의의

가구단위의 소득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평균적인 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해 준다. 또한 가구소득분위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소득 통계는 소득계층 간, 세대 간 가구의 소득분포를 보여준다.

● 해설

한국의 2012년 월평균 명목 가구소득은 408만 원이었고, 이는 가계동향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3년도 가구소득 대비 약 55% 상승한 것이다.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구매력 기준으로 측정한 월평균 실질 가구소득은 2011년도에 비하여 3.8% 증가하였고 2003년에 비하여 연평균(CAGR) 1.9% 증가하였다.

2012년도 가구소득의 구성비를 명목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상소득이 96.5%(393만 원)으로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경상소득은 3.5%(14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 중에서는 근로소득 66.0%, 사업소득 21.0%, 재산소득 0.5%, 이전소득 9.1% 순이었으며 지난 10년간 근로소득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한편 사업소득은 감소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최상위 소득계층(5분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약 775만 원으로 최하위 소득계층(1분위)의 가구소득의 5.7배 수준이었고, 근로소득에서는 약 10배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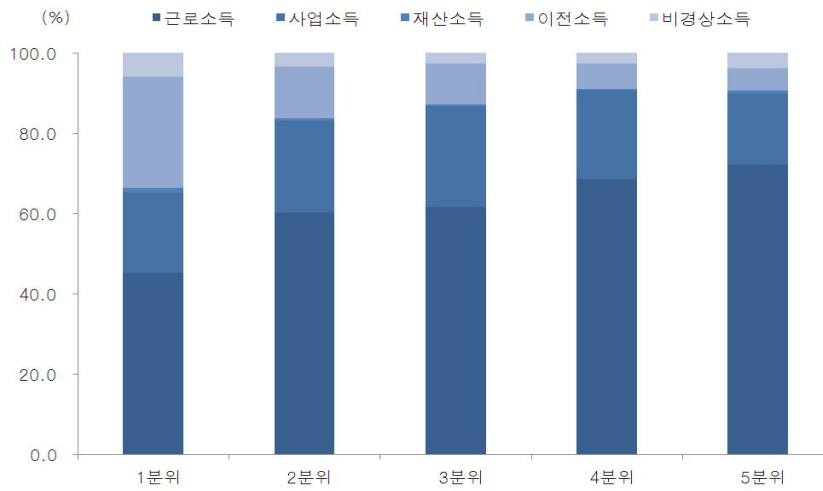
월평균 가수소득과 소득원천구성, 2003-2012

연도	가구소득(만 원)				원천별 구성비율(%)					
	실질	명목		비경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증가율 (%)	증가율 (%)							
2003	325		263		96.3	63.2	25.9	0.7	6.6	3.7
2004	333	2.3	279	6.0	96.1	63.2	24.9	0.6	7.4	3.9
2005	336	1.2	290	3.9	95.9	62.7	24.4	0.6	8.3	4.1
2006	345	2.5	304	4.8	95.6	63.1	23.8	0.5	8.2	4.4
2007	354	2.7	320	5.3	95.7	63.9	22.6	0.6	8.6	4.3
2008	359	1.2	339	6.0	96.0	65.1	21.7	0.5	8.6	4.0
2009	353	-1.5	343	1.2	96.0	65.2	21.8	0.4	8.6	4.0
2010	363	2.8	363	5.8	96.1	64.7	22.2	0.4	8.9	3.9
2011	369	1.7	384	5.8	96.5	65.0	21.9	0.4	9.2	3.5
2012	384	3.8	408	6.1	96.5	66.0	21.0	0.5	9.1	3.5

주: 1) 가구소득은 한 가구가 취득한 일체의 현금 및 현물 수입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원천구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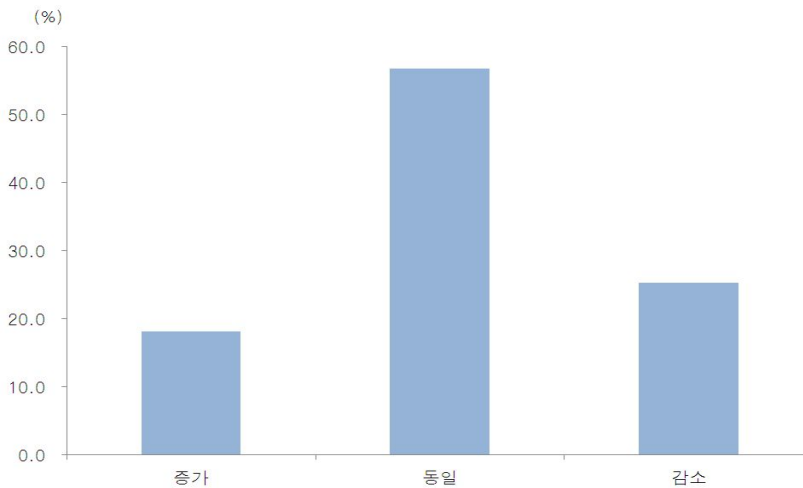


주: 1) 가구소득원천구성은 가구소득 1분위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구성비율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명목소득							비경상 소득
	(만원)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2012	408	96.5	66.0	21.0	0.5	9.1	3.5	
1분위	135	94.0	45.3	20.0	1.0	27.8	6.0	
2분위	271	96.5	60.2	22.9	0.5	12.9	3.5	
3분위	370	97.3	61.5	25.2	0.4	10.2	2.7	
4분위	487	97.3	68.5	22.0	0.4	6.4	2.7	
5분위	775	96.1	72.1	17.8	0.6	5.6	3.9	

가구소득 변화의 인식,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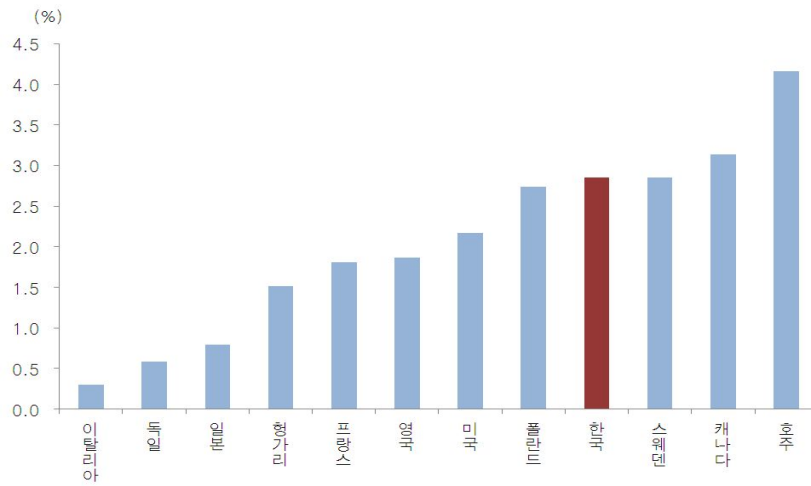
주: 1) 가구소득 변화의 인식은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귀하 가구 소득의 변화 정도는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통계표

	증가	동일	감소
소득의 변화	18.1	56.7	25.2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실질가구처분가능소득 10년 평균증가율, 2001-2010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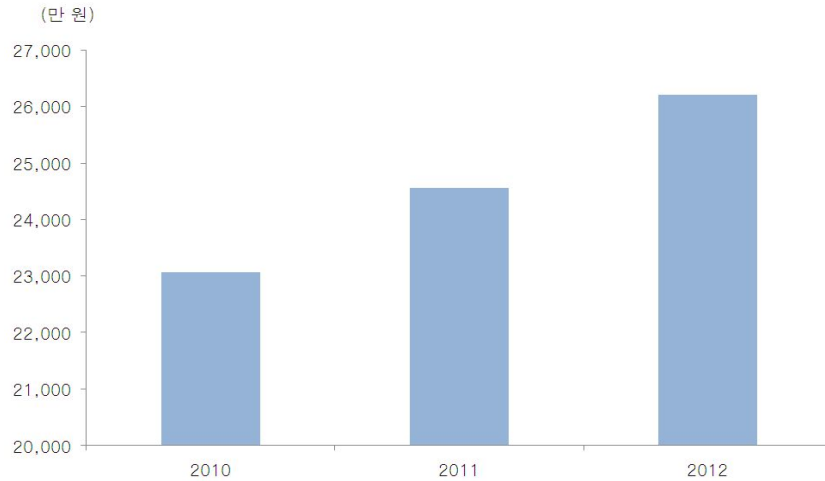
통계표

	이탈리아	독일	일본	헝가리	프랑스	영국	미국	폴란드	한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평균 증가율	0.31	0.59	0.80	1.52	1.81	1.87	2.17	2.75	2.85	2.86	3.14	4.17

15103. 가구자산

■ 주요지표

가구순자산, 2010-2012



주: 1)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
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2010년부터 생산된 신규 통계임. 2010년 이전 자료로는 2006년에 비정기적으로 시행된 「가계자산조사」가 있으나, 두 통계 자료 간 조사 대상의 차이 및 표본 차이 등의 이유로 자료왜곡이 있을 수 있어 수록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됨.
- 측정 방법: $\text{가구 순자산} = \text{가구의 평균자산} - \text{가구의 평균부채}$.

● 지표의 의의

평균적인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구 평균 순자산을 통하여 가구의 재산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구의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 가구의 재산 증감과 각 자산 및 부채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가구의 재산 상태가 소비에 영향을 주므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전체가구의 가구당 평균자산은 2012년도에 3억 1,495만원(금융자산 25%, 실물자산 75%)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고, 평균부채는 5,292만원(금융부채 68%, 임대보증금 32%)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였다. 한국의 가구평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억 6,203만원으로 전년(2억 4,560만원)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한 소득분위에 따른 가구 평균 순자산을 살펴보면,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6억 756만원으로 전년대비 14.1%가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8,917만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하였다. 이는 1분위에서는 자산이 8.7% 증가한데 비하여 부채가 32.0%의 큰 폭의 증가로 인하여 순자산이 감소한 반면, 5분위에서는 자산의 증가폭이 부채보다 큰 것에(자산 13.3%, 부채 9.7%가 증가)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소득계층간 순자산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구주 성별에 따른 순자산액은 남성 가구주의 경우 2억 9,956만원 인 반면, 여성 가구주의 경우 1억 3,008만원으로 여성 가구주의 순자산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구부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11년에는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23.7%를 차지하였고,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1%를 차지해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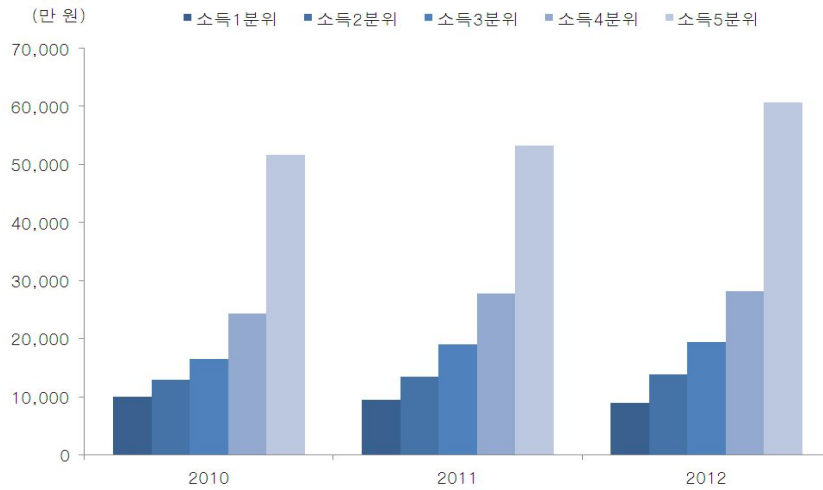
가구의 성 및 가구원별 가구순자산, 2010-2012

	(만원)		
	2010	2011	2012
자산	27,684	29,765	31,495
금융자산	5,886	6,903	7,855
실물자산	21,798	22,862	23,639
부채	4,618	5,205	5,292
금융부채	3,151	3,597	3,599
임대보증금	1,468	1,608	1,693
순자산(자산-부채)	23,066	24,560	26,203
가구주 성별			
남자	25,940	27,576	29,956
여자	11,743	12,948	13,008
가구원수별			
1인	7,876	9,321	9,635
2인	23,571	24,054	25,774
3인	25,041	25,119	28,367
4인	27,310	29,086	32,734
5인이상	31,178	35,921	35,672

주: 1)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 201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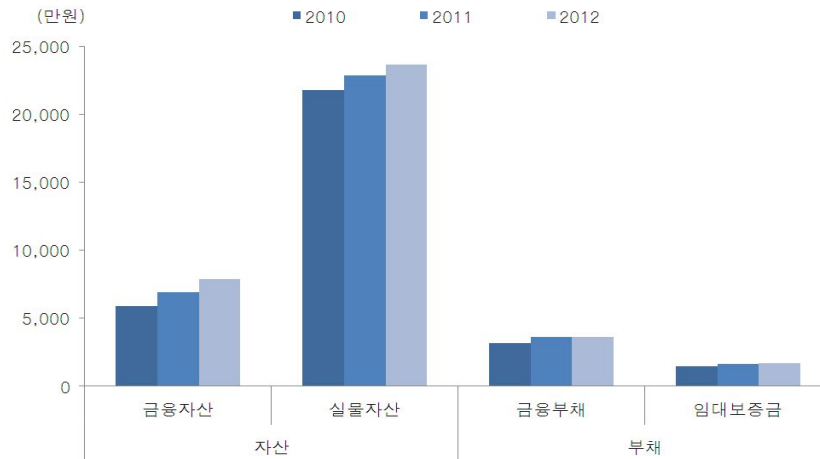


주: 1)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통계표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2010	9,929	12,868	16,497	24,306	51,717
2011	9,401	13,381	18,963	27,779	53,258
2012	8,917	13,807	19,348	28,183	60,756

가구 자산과 부채, 201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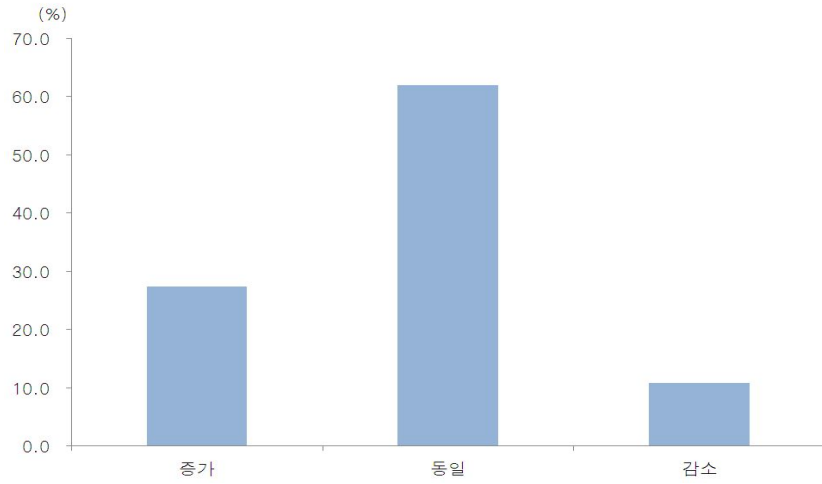


주: 1) 가구자산 = 금융자산 + 실물자산, 가구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년도.

통계표

	자산: 금융자산	자산: 실물자산	부채: 금융부채	부채: 임대보증금
2010	5,886	21,798	3,151	1,468
2011	6,903	22,862	3,597	1,608
2012	7,855	23,639	3,599	1,693

가구부채 변화의 인식, 2011



주: 1) 가구부채 변화의 인식은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귀하 가구 부채의 변화 정도는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증가	동일	감소
가구부채 변화의 인식	27.3	61.9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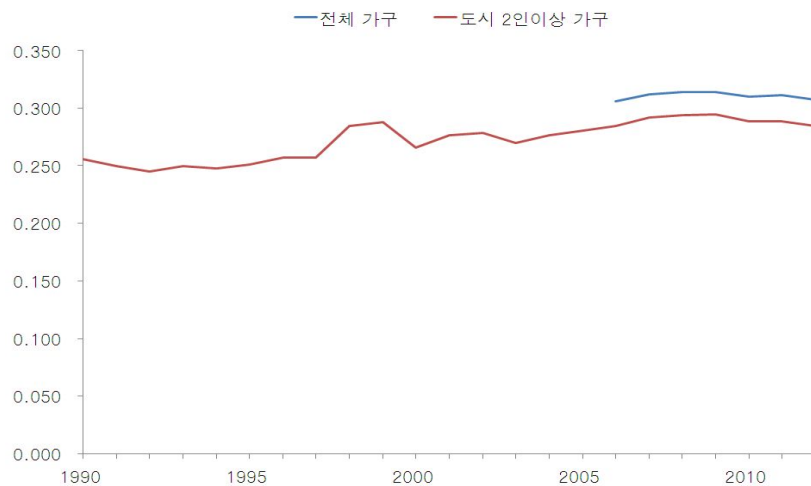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1.5.2 소득분배

15204. 지니계수

■ 주요지표

지니계수, 1990-2012



주: 1)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냄.
2)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지니계수임.
3) 가계동향조사는 2001년까지는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002년부터는 2인 이상 비농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대상을 확대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냄.
- 측정 방법: 로렌즈 곡선과 완전균등선(대각선)이 이루는 면적을 불평등면적이라고 하고 이 불평등면적을 완전균등선 이하의 면적(0.5)으로 나누어서 도출한 비율임.
 - ※ 로렌즈 곡선(Lorenz curve): 전체가구를 소득에 따라 낮은 소득에서 높은 소득 순으로 배열한 후 낮은 소득부터 축차적으로 더하여 얻은 곡선.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을 받는 경우 이 곡선은 완전균등선(45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으로 나타나고 가구 간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완전균등선보다 아래로 멀어짐.

● 지표의 의의

지니계수는 한 국가의 가구 간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한 국가 내의 소득불평등도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용이하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기활성화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니계수는 OECD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어서 이를 통한 국가 간 소득불평등도 비교가 가능하다. 또한 세전(시장)소득과 세후(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각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비교하면 정부의 재분배정책의 크기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 해설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살펴본 2012년 전체가구(전국, 1인 및 농가 포함)의 지니계수는 0.307로 2011년의 0.311에 비해 불평등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기초로 작성된 지니계수는 전체가구 지니계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 도시 가구 간 소득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1인 가구와 농가를 포함할 때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가구 지니계수와 도시 2인 이상 가구 지니계수의 장기 추이를 보면 모두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전소득인 시장소득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으로 구분하여 지니계수를 각각 산출하고 두 지표의 차이를 정부의 재분배정책의 크기로 볼 때, 2006년과 2012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30과 0.338인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각각 0.306과 0.307이어서 장기적으로 두 지표간의 차이가 확대되어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에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기준 및 방법으로 작성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에 의하면, 2010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10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았고, OECD 평균인 0.31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스웨덴(0.269), 헝가리(0.272), 독일(0.286) 등의 지니계수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미국(0.380), 영국(0.341), 일본(0.336)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니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와 더불어, 소득불평등도의 척도로 널리 이용되는 지표로는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들 수 있다.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집단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며, 이는 201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및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4.67배였다. 가구를 소득 순으로 배열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나타낸 상대적 빈곤율은 12.1%였다. 소득5분위배율과 상대적 빈곤율은 지니계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장기적으로 악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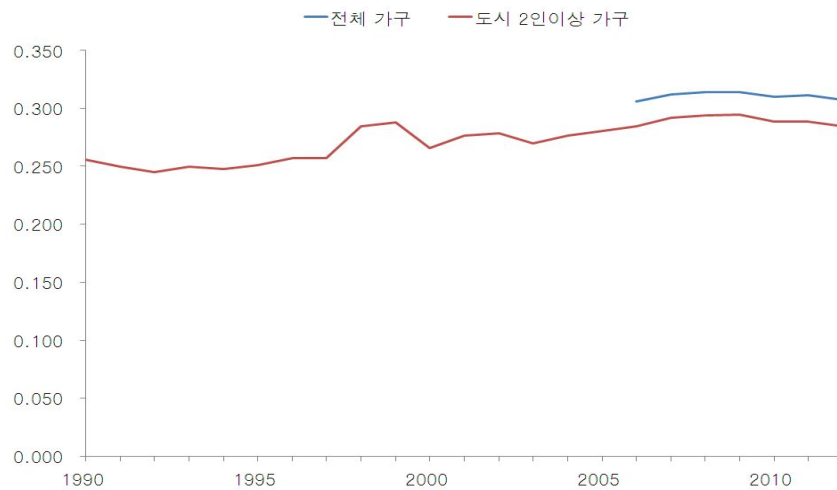
지니계수, 1990-2012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처분가능소득(세후) 기준											
전체가구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2인 이상 비농가				0.287	0.291	0.295	0.296	0.294	0.288	0.288	0.285
도시 2인 이상 가구	0.256	0.251	0.266	0.281	0.285	0.292	0.294	0.295	0.289	0.289	0.285
시장소득(세전) 기준											
전체가구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2인 이상 비농가				0.306	0.312	0.321	0.323	0.320	0.314	0.313	0.311
도시 2인 이상 가구	0.266	0.259	0.279	0.298	0.305	0.316	0.319	0.320	0.315	0.313	0.310

주: 1)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냄.
 2) 처분가능소득(세후소득) =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비소비지출, 시장소득(세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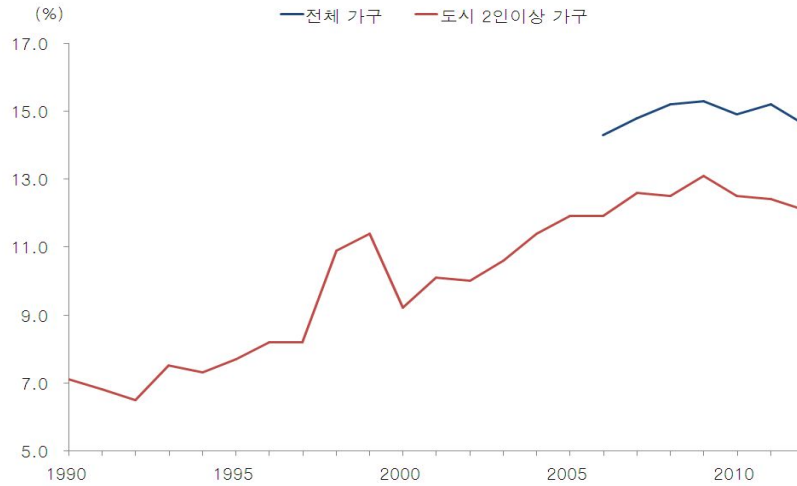
소득5분위배율, 1990-2012



주: 1) 소득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수치임. 1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고, 값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음을 의미함.
 2)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가구					5.38	5.60	5.71	5.75	5.66	5.73	5.54
도시 2인 이상 가구	3.72	3.68	4.05	4.55	4.62	4.84	4.88	4.97	4.82	4.82	4.67

상대적 빈곤율, 1990-2012



주: 1)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수준으로 가구를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2)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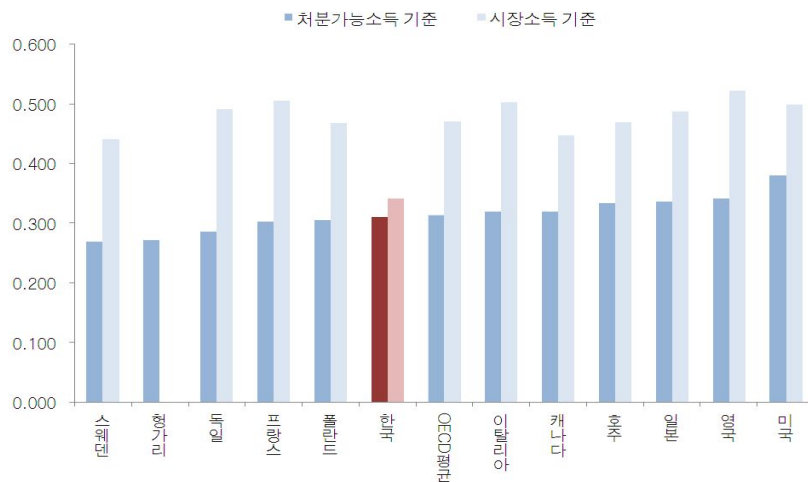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가구					14.3	14.8	15.2	15.3	14.9	15.2	14.6
도시 2인 이상 가구	7.1	7.7	9.2	11.9	11.9	12.6	12.5	13.1	12.5	12.4	12.1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지니계수, 2010



주: 1)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에서 1사이의 비율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상태를 나타냄.

2) 헝가리, 일본은 2009년 수치이고, 헝가리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작성된 지니계수가 없음.

출처: OECD,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13.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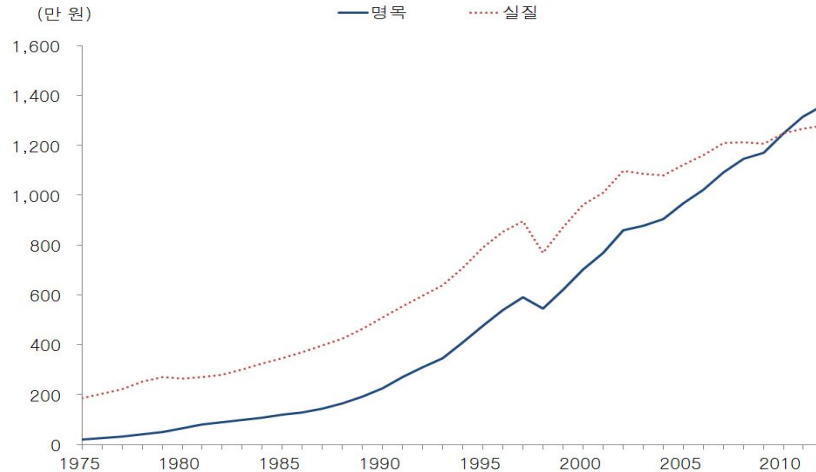
	스웨덴	헝가리	독일	프랑스	폴란드	한국	OECD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미국
처분가능소득 기준	0.269	0.272	0.286	0.303	0.305	0.310	0.314	0.319	0.320	0.334	0.336	0.341	0.380
시장소득 기준	0.441		0.492	0.505	0.468	0.341	0.470	0.503	0.447	0.469	0.488	0.523	0.499

1.5.3. 소비와 물가

15305. 소비지출

■ 주요지표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1975-2012



주: 1) 민간소비지출은 국민계정 상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을 말함.
2) 실질의 경우 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명목금액을 재계산한 수치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1인당 민간소비지출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을 국민 1인당으로 나타낸 것임. 민간소비지출 중 가계소비지출은 지출목적에 따라 식료품 및 연초, 의류 및 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교통통신, 교육, 문화, 오락 등 다양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비영리단체의 최종소비지출은 교육조사연구, 의료보건, 복지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 측정 방법: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 민간소비지출 ÷ 총인구수(추계인구)

● 지표의 의의

국민의 소비생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국민들의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해설

2012년도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은 명목 소비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1,361만 원이었다. 물가상승분을 제거한 2012년 1인당 실질 민간소비지출액은 전년대비 1.2% 증가하였다. 한 국가의 국민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2012년도 기준으로 6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통하여 살펴본 가구의 소비지출을 보면, 2012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5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실질로는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교육, 기타상품·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증가하였다. 2012년 가구 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을 살펴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가 전체 소비지출 중 1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음식·숙박(12.7%), 교통(12.3%), 교육(11.7%), 주거·수도·광열(10.4%)의 순이었다.

한국의 소비지출 수준을 보여주는 주관적 지표로 소비생활의 만족도를 보면 2011년 조사에서 12.7%로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1999년의 10.2%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불만족도는 매조사마다 40%이상을 차지하여 한국 국민 대부분이 자신의 소비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OECD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1인당 소비지출 수준을 보면, OECD 평균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은 72.19로 OECD 평균의 약 71%수준의 소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 영국이 각각 92.66, 103.24 수준이었다.

● 상세 통계표

1인당 민간소비지출과 증가율, 1980-201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인당 명목 소비지출액(만원)	64	119	226	475	703	967	1,023	1,091	1,147	1,171	1,249	1,317	1,361
증가율(%)	25.9	9.8	18.5	16.3	13.0	6.8	5.8	6.6	5.2	2.1	6.6	5.4	3.4
1인당 실질 소비지출액(만원)	265	347	508	790	961	1,122	1,162	1,208	1,214	1,206	1,249	1,266	1,281
증가율(%)	-2.2	7.1	9.2	11.3	10.5	3.9	3.5	4.0	0.5	-0.7	3.6	1.4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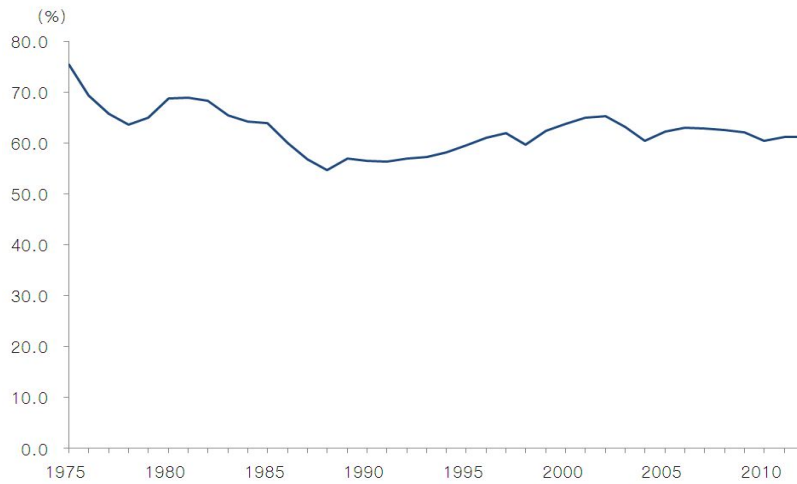
주: 1) 민간소비지출은 국민계정 상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을 말함. 실질의 경우 물가지수(2010년=100)를 이용하여 명목금액을 재계산한 수치임.

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보조지표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소비지출, 197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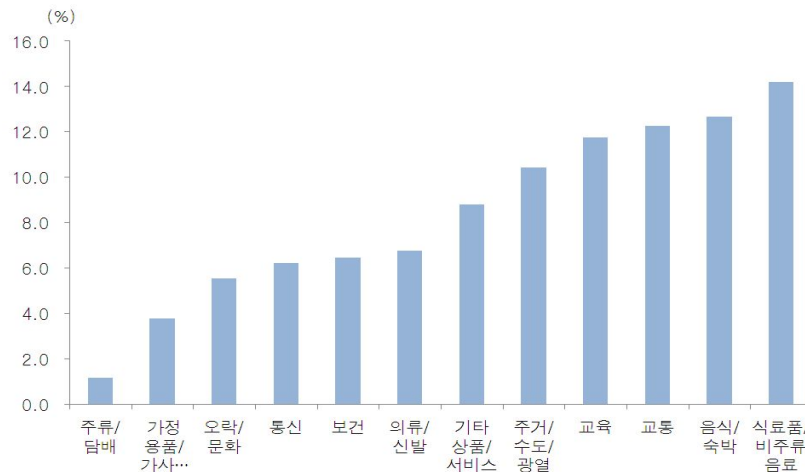


주: 1) 처분가능소득은 국민계정 상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득임.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소비지출	75.4	68.8	63.9	56.5	59.5	63.8	62.2	63.0	62.8	62.5	62.1	60.5	61.1	61.2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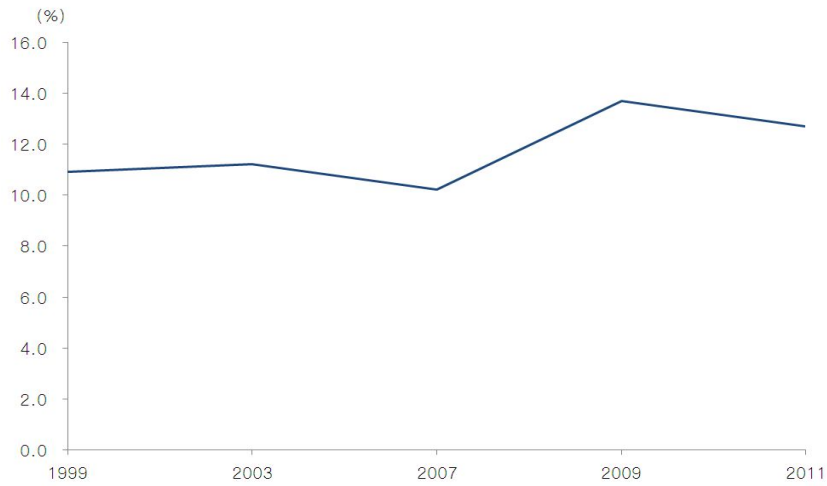


주: 1) 가구당 월평균소비지출 금액으로 UN 등에서 권고하는 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에 따라 분류한 항목별 구성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주류/담배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통신	보건	의류/신발	기타 상품/서비스	주거/수도/광열	교육	교통	음식/숙박	식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 구성비	1.1	3.8	5.5	6.2	6.5	6.8	8.8	10.4	11.7	12.3	12.7	14.2

소비생활만족도, 1999-2011



주: 1) 소비생활만족도는 조사대상자 중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에 대한 소비)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은 19세 이상 인구 대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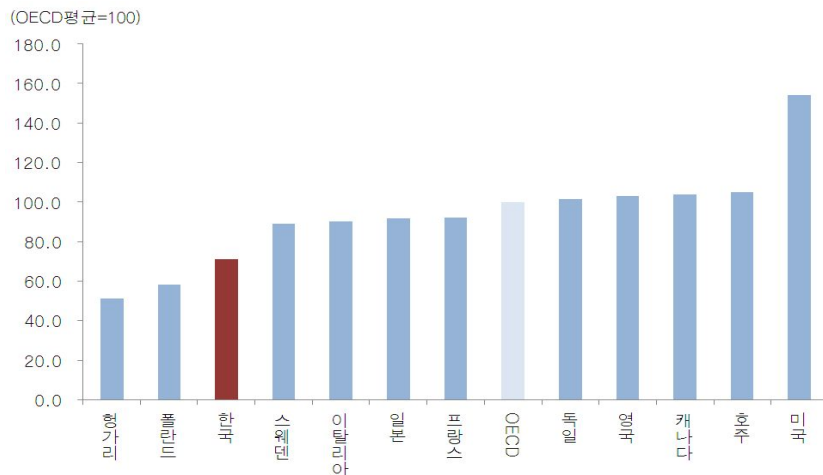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9	2003	2007	2009	2011
소비생활만족도	10.9	11.2	10.2	13.7	12.7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1인당 소비지출 수준(OECD평균=100), 2011



주: 1) 통계치는 각 국가의 가계최종소비지출액을 OECD평균=100을 기준으로 대비한 비율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2013.

통계표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OECD	독일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소비지출	51.07	58.02	70.98	88.98	90.29	91.95	92.05	100.00	101.71	102.92	103.79	104.93	154.42

15306. 물가상승률

■ 주요지표

소비자물가상승률, 1985-2012



주: 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변화율임.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란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대비 변화율로서 물가상승에 대한 대표적인 지표임.
- 측정 방법: $\text{소비자물가상승률} = [(\text{금년도 소비자물가지수} \div \text{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 1] \times 100$.
 - ※ 소비자물가지수의 계산은 2005년 기준지수의 경우 전국 36개 도시 가계의 총소비지출액 중에서 구입비중이 큰 489개의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지표의 의의

물가지수를 기초로 산출된 물가상승률은 한 국가의 경제동향 분석이나 경제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됨은 물론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화폐의 구매력 측정수단, 경기 동향 판단지표, 그리고 전반적인 상품수급동향 파악의 용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된 물가지수는 일반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활용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 내지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과 생계비 등의 측정에 사용되며 매년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기초자료로도 이용되고 있다.

● 해설

한국의 물가상승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일시적으로 급상승(1998년, 7.5%)하였으나, 그 이후 매년 약 2%대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 원유가격 급등이 있었던 2008년에는 4.7%의 물가상승률을 보였지만, 2010년 3.0%, 2011년에는 4.0%, 2012년에는 2.2% 상승하며 물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소비지출의 목적에 따른 12개 대분류별 세부지수를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는 2012년 4.0% 상승률을 보였고 2011년 8.1% 상승에 이어 물가상승을 주도하였다. ‘주류 및 담배’는 1.5%, ‘의류 및 신발’은 4.8%이었다. 12개의 대분류 중 10개 군에서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가 4%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에 ‘통신’(2.5% 하락), ‘기타상품 및 서비스’(3.2% 하락)는 전년대비 물가가 하락하였다.

생활물가지수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게들이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만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2년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2.2%)보다 낮은 1.6%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12년 기준 독일(2.0%), 미국(2.1%)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한국의 물가수준을 기준으로(한국=100) 타국과의 비교물가 수준을 살펴보면³⁾, 한국보다 일본이 89포인트, 미국이 2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물가수준은 낮은 편이다.

● 상세 통계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품목별 상승률, 1985-2012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비자물가총지수	34.2	44.5	60.2	73.1	86.1	88.1	90.3	94.5	97.1	100.0	104.0	106.3
소비자물가상승률(%)	2.5	8.6	4.5	2.3	2.8	2.2	2.5	4.7	2.8	3.0	4.0	2.2
식료품·비주류음료		9.9	3.0	0.8	3.1	0.5	2.5	4.9	7.6	6.4	8.1	4.0
주류 및 담배		5.3	2.2	0.8	14.9	-0.2	0.4	0.5	1.1	0.4	0.8	1.5
의류 및 신발		9.8	1.7	1.5	1.0	2.7	2.7	2.6	5.1	2.9	3.3	4.8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7.7	4.2	3.7	1.9	2.9	2.2	4.3	1.1	2.4	4.5	4.6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6.1	1.9	-2.5	0.6	0.2	2.6	4.4	4.4	0.3	3.7	2.9
보건		7.5	5.5	7.3	2.2	2.0	1.7	1.9	2.2	1.8	1.8	0.9
교통		2.6	6.2	4.5	5.0	4.6	3.6	8.8	-3.5	4.9	7.0	3.3
통신		6.6	-2.3	-2.3	-1.8	-1.3	-2.0	-1.4	-0.2	-0.9	-1.7	-2.5
오락 및 문화		4.7	3.6	-1.0	0.1	-2.4	-1.7	1.5	2.3	0.9	1.6	0.2
교육			13.2	13.3	5.1	4.2	4.8	6.0	5.5	2.5	2.3	1.7
음식 및 숙박			13.8	5.5	0.9	2.4	1.9	1.9	4.8	3.8	2.3	4.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5	3.2	1.3	1.4	5.2	4.9	9.0	6.8	3.5	3.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2

주: 1) 소비자물가총지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로 2010년=100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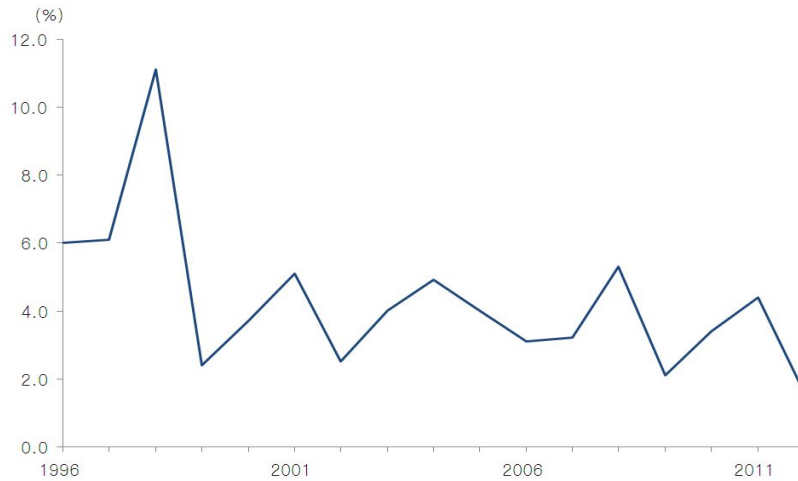
2) 품목별 소비자물가는 1985년부터 제공함에 따라, 품목별 상승률은 1986년부터 가능함.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년도.

3) 주요국의 물가수준을 한국 기준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US\$를 기준통화로 정하여 각국 환율에 대한 PPP율 × 100으로 계산한 수치임.

■ 보조지표

생활물가상승률, 199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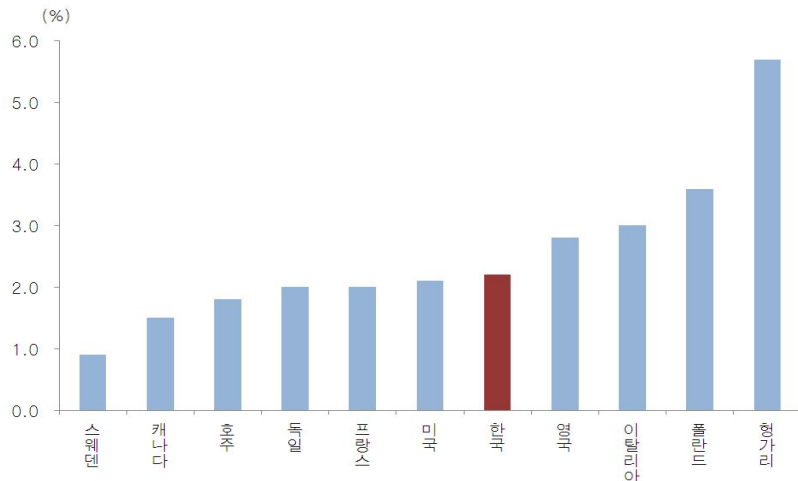
주: 1) 생활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서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중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2개 품목으로 작성된 생활물가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생활물가지수상승률	6.0	3.7	4.0	3.1	3.2	5.3	2.1	3.4	4.4	1.6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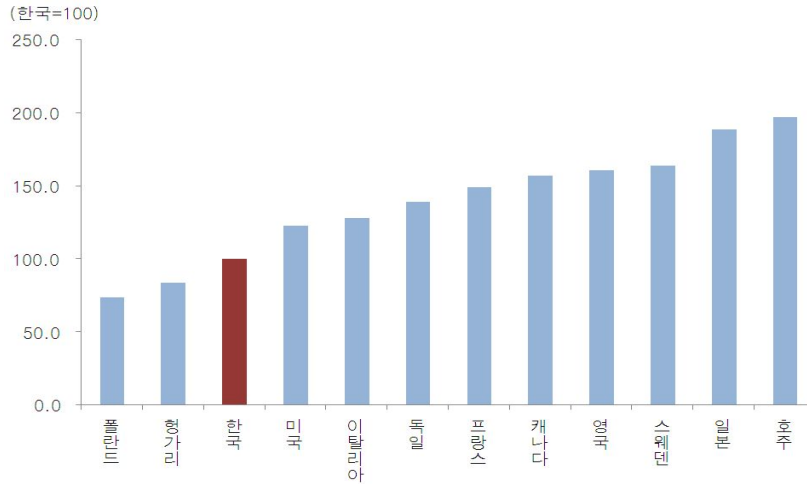


주: 1) 2012년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으로 그래프 상에 표시하지 않았음.
출처: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2013.

통계표

	스웨덴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미국	한국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	0.9	1.5	1.8	2.0	2.0	2.1	2.2	2.8	3.0	3.6	5.7	0.0

OECD 주요국의 한국 대비 물가수준, 2011



주: 1) 한국의 물가를 100으로 할 때 주요국의 물가수준을 나타낸 것임.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각 국가의 대비 US\$ 환율에 해당 국가와 미국의 물가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PPP율을 곱하여 미국물가에 대한 상대적인 물가를 우선 구한 다음 이를 다시 한국물가=100으로 하여 변환시킨 수치임.
 2) 자료는 12월 기준임.

출처: 통계청, 「국제통계」, 2011.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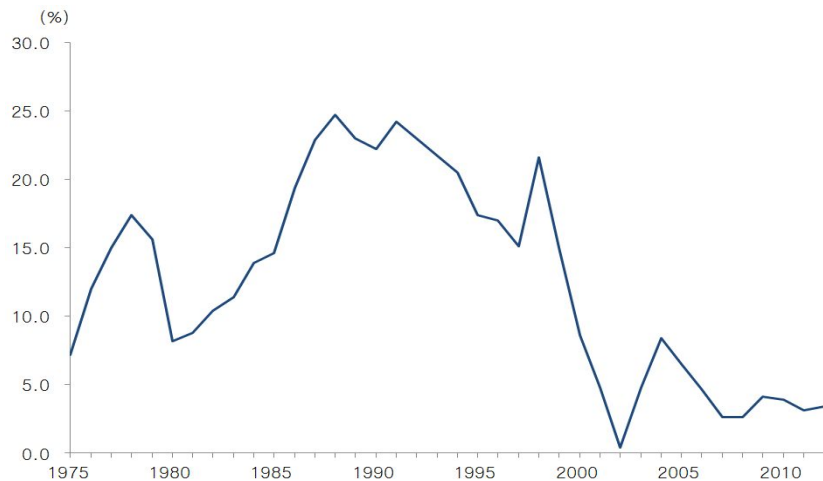
	폴란드	헝가리	한국	미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스웨덴	일본	호주
물가수준	74	84	100	123	128	139	149	157	161	164	189	197

1.5.4. 저축률

15407. 저축률

■ 주요지표

개인순저축률, 1975-2012



주: 1) 민간총저축의 한 구성요소인 개인순저축률은 '가계저축률'이라고도 하며,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 지출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을 말함.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개인순저축률은 '가계저축률'이라고도 하며, 국민계정 상에서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 지출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을 말함
- 측정 방법: $\text{개인순저축률} = \{ \text{개인 순저축} \div (\text{개인 순조정처분가능소득} + \text{연금 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 \} \times 100$
 - ※ 총저축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총소비를 차감한 수치이고 민간저축은 그 중에서 비금융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저축을 의미하며 개인순저축은 그 중에서 가계의 순저축을 의미함

● 지표의 의의

국민계정에서 개인 부문의 저축 성향과 재정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로서 가계자산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이다. 경기가 어려우면 낮아지고 호황이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축은 투자의 재원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2012년 개인순저축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3.4%이다. 한국의 개인순저축률은 1990년대 약 20% 내외를 기록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 10% 이하로 떨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2.6%로 급락했다. 그 이유는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하락과 가계소득 중 비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개인의 저축여력 감소, 저금리로 인한 저축에 대한 유인감소 등을 들 수 있다.

OECD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국가와 한국의 가계저축률을 비교해보면, 2010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저축률이 각각 5.5%, 2.3%, 11.3%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가계저축률(4.3%)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밖에 한국의 민간총저축률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23.9%였고, 민간저축을 구성하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각각의 저축률은 각각 15.4%, 3.9%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통계표

저축률, 197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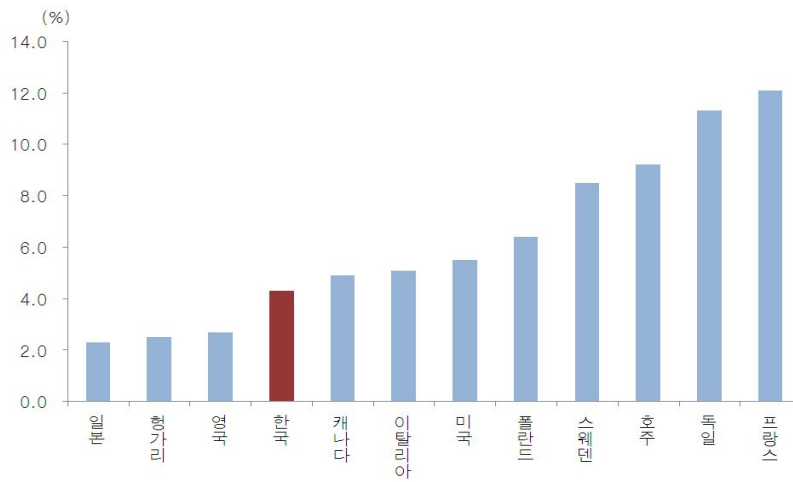
	(%)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인순저축률	7.2	8.2	14.6	22.2	17.4	8.6	6.5	4.7	2.6	2.6	4.1	3.9	3.1	3.4
민간총저축률	16.1	19.2	25.5	30.3	27.3	21.4	22.2	20.8	20.2	21.2	23.4	24.7	23.9	23.4
비금융 법인기업	7.4	8.9	11.0	11.3	11.3	10.6	13.1	12.8	13.2	13.8	14.5	16.3	15.4	-
금융기관	0.6	2.6	1.5	1.5	2.0	2.1	2.2	2.3	2.7	3.0	3.5	3.4	3.9	-
가계및비영리단체	8.1	7.7	12.9	17.5	14.0	8.6	6.9	5.7	4.3	4.4	5.3	5.0	4.6	-

주: 1) 민간총저축률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민간부분의 저축 비율임.
 2) 총저축은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총소비를 차감한 수치이고 민간저축은 그 중에서 비금융법인기업, 금융기관,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저축을 말하며 개인순저축은 그 중에서 가계의 순저축을 의미함.
 3) 민간총저축의 한 구성요소인 개인순저축률은 '가계저축률'이라고도 하며,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 지출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을 말함.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가계저축률, 2010



주: 1) 가계저축률은 가계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순저축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13.

통계표

	일본	헝가리	영국	한국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폴란드	스웨덴	호주	독일	프랑스
가계저축률	2.3	2.5	2.7	4.3	4.9	5.1	5.5	6.4	8.5	9.2	11.3	12.1

II. 사회지표

2.1.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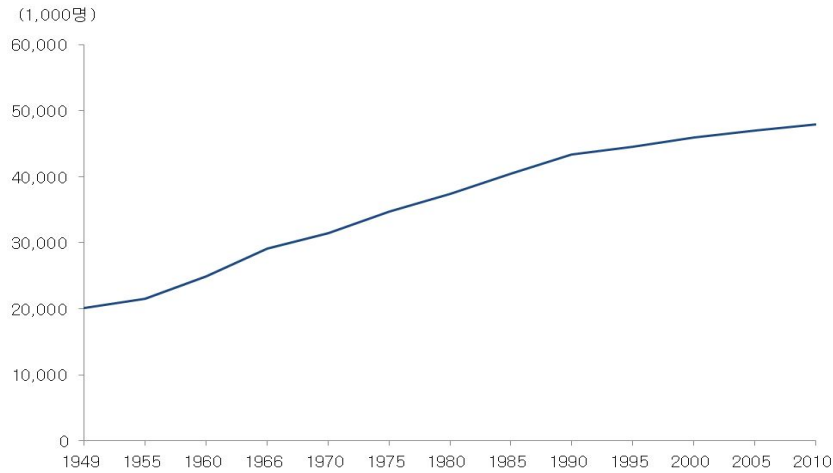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인구	인구규모	• 총인구	• 시도별 인구	• 총인구 • 도시인구
	인구변화	•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
		• 합계출산율	• 조출생률 •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 조사망률	• 영아사망률	• 조사망률
		• 체류외국인	• 국적취득자수	
	인구구조	• 중위연령	• 인구피라미드	• 중위연령
		• 성비	• 출생성비	• 성비
		• 부양인구비	• 고령화지수	• 부양인구비

2.1.1. 총인구

21101. 총인구

■ 주요지표

총인구, 1949-2010



주: 1) 총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총인구는 해당 시점(해당년도 11월 1일 0시 기준)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인구의 총합으로, 여기에서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 측정 방법: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내국인수로 파악함.

● 지표의 의의

총 인구의 규모는 국가의 장·단기 국가발전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기초자료로서 각종 경제·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 해설

총 인구는 인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인 인구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후 대체로 5년 간격으로 2010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인구총조사는 1944년까지는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인 1949년 인구총조사부터는 남한의 자료만이 가용하다. 남한의 1949년 인구는 당시의 38선 이남을 기준으로 약 2,017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 인구는 약 4,79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인구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26번째에 해당된다.

한국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발견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2010년 현재 경기도 약 1,119만 명, 서울시 약 963만 명, 부산광역시 약 339만 명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비중은 20.1%에 달하며, 서울, 인천과 경기도의 인구를 포괄하는 수도권에는 전국인구의 48.9%에 해당하는 2,346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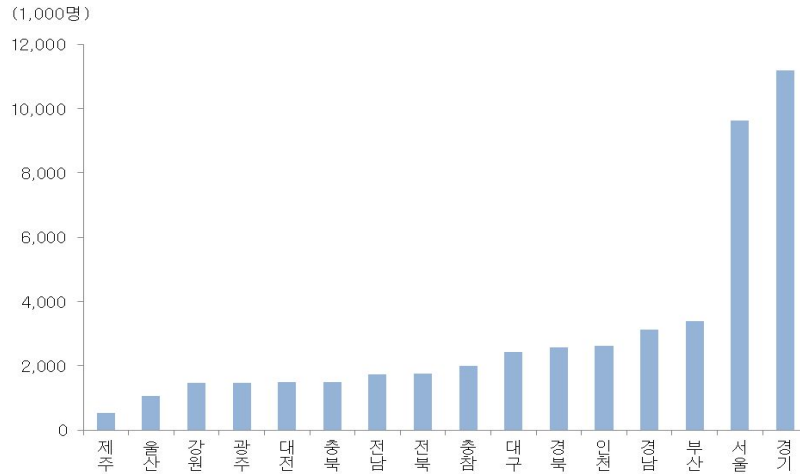
성 및 연령집단별 인구, 1949-2010

	1949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1,000명)						
전체	20,167	24,954	31,435	37,407	43,390	45,985	47,991
성							
남자	10,188	12,525	15,780	18,749	21,771	23,068	23,841
여자	9,979	12,429	15,656	18,658	21,619	22,917	24,150
연령집단							
10세 미만	5,878	7,331	8,848	8,216	7,142	6,574	4,614
10-19세	4,537	5,205	7,481	8,680	8,441	6,756	6,612
20-29세	3,213	4,193	4,727	7,136	8,730	7,945	6,594
30-39세	2,408	2,973	4,047	4,743	7,409	8,280	7,794
40-49세	1,721	2,221	2,747	3,913	4,716	6,948	8,205
50-59세	1,298	1,549	1,880	2,451	3,633	4,319	6,565
60-69세	1,076	971	1,100	1,442	2,057	3,165	3,994
70-79세	-	438	491	654	972	1,519	2,650
80세 이상	-	93	114	171	290	477	962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전체 인구에는 '연령 미상'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집단별 인구의 합계와 차이가 있음.
 3) 1949년 자료의 경우 64세 인구까지만 자료가 제공되어, 만 60-69세 인구는 60-64세 인구임.
 4) 1960년 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연령집단별 인구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시도별 인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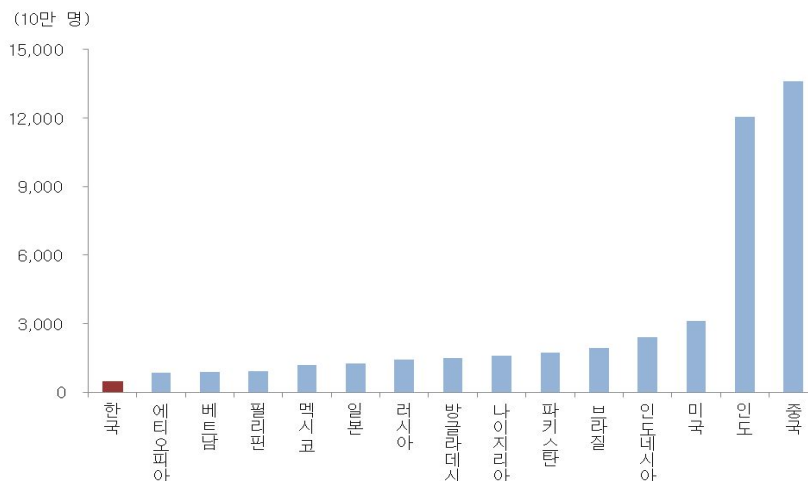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제주	울산	강원	광주	대전	충북	전남	전북
인구	528	1,072	1,464	1,466	1,490	1,496	1,729	1,766
	충남	대구	경북	인천	경남	부산	서울	경기
인구	2,000	2,432	2,575	2,632	3,120	3,393	9,631	11,196

■ 국제비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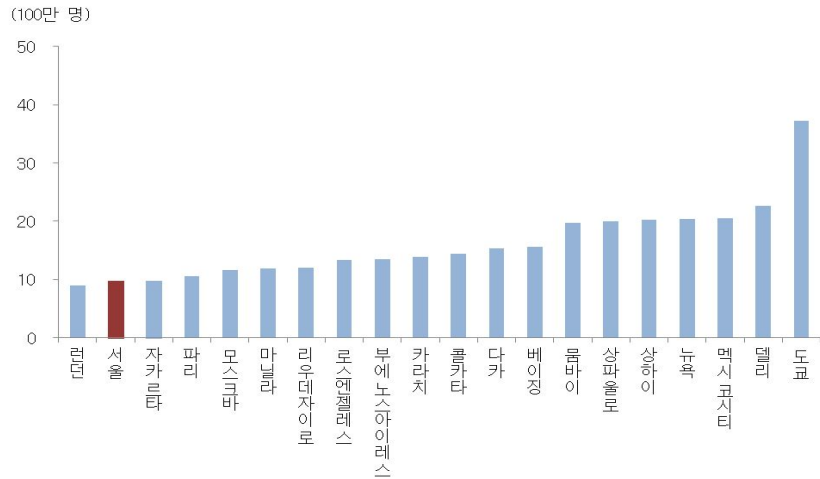
주요국의 총인구, 2010



주: 1) 각 국가의 총인구에는 외국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한국	에티오피아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일본	러시아	방글라데시
총인구	485	871	890	934	1,179	1,274	1,436	1,511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브라질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중국	
총인구	1,597	1,731	1,952	2,407	3,122	12,056	13,598	

세계 주요 도시 인구, 2011



출처: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1 Revision*, 2012.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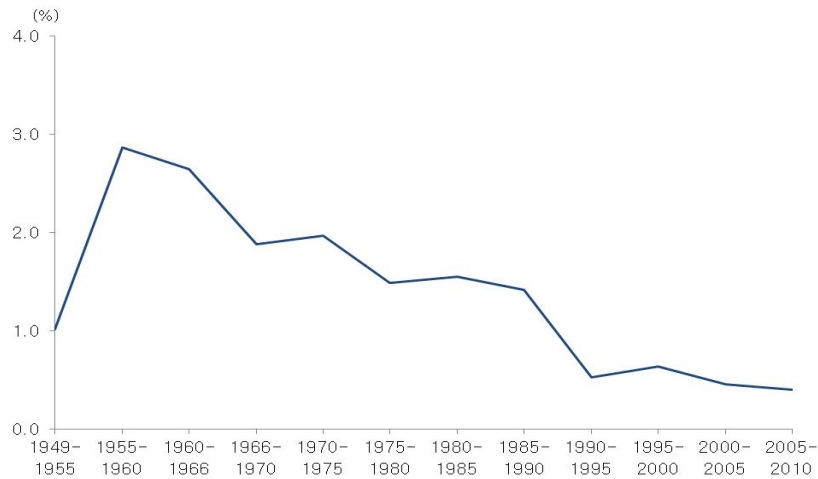
	런던	서울	자카르타	파리	모스크바	마닐라	리우데자이로	로스앤젤레스	부에노스아이레스	카라치
인구	9.0	9.7	9.8	10.6	11.6	11.9	12.0	13.4	13.5	13.9
	콜카타	다카	베이징	뮌헨	상파울로	상하이	뉴욕	멕시코시티	델리	도쿄
인구	14.4	15.4	15.6	19.7	19.9	20.2	20.4	20.4	22.7	37.2

2.1.2. 인구변화

21202. 인구성장률

■ 주요지표

인구성장률, 1949-2010



주: 1) 인구성장률은 해당기간 총인구(내국인 기준)의 연평균 성장률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인구성장률은 해당기간 총인구(내국인 기준)의 연평균 성장률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내국인 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text{인구성장률} = \log (P_t \div P_0) \div t \times 100$$

(P_0 : 해당기간 시작시점의 인구, P_t : 해당기간 종료시점의 인구,

t : 해당기간 년수)

● 지표의 의의

인구성장률은 인구의 변화를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 지표로 간주된다. 국가의 장·단기 발전 계획의 수립이나 각종 경제·사회 정책의 수립에도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해설

인구성장률은 출생과 사망의 격차에 의한 자연증가와 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를 반영한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시기별로 보면, 1955-1960년 사이에 전후 베이비붐 현상으로 2.98%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1960-1966년의 2.60%이다. 실제로 이 두 기간 동안 각각 약 345만 명과 421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1990년 이후 약 0.5%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저출산 현상에 기인한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서도 최근 들어 인구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등은 2005-2010년의 기간에 각각 2.44%, 1.76%, 1.70%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보여준다. 싱가포르와 호주의 경우에는 높은 인구성장률이 이민자의 유입에 기인하는 바 큰 것으로 판단된다.

● 상세통계표

인구성장률, 1949-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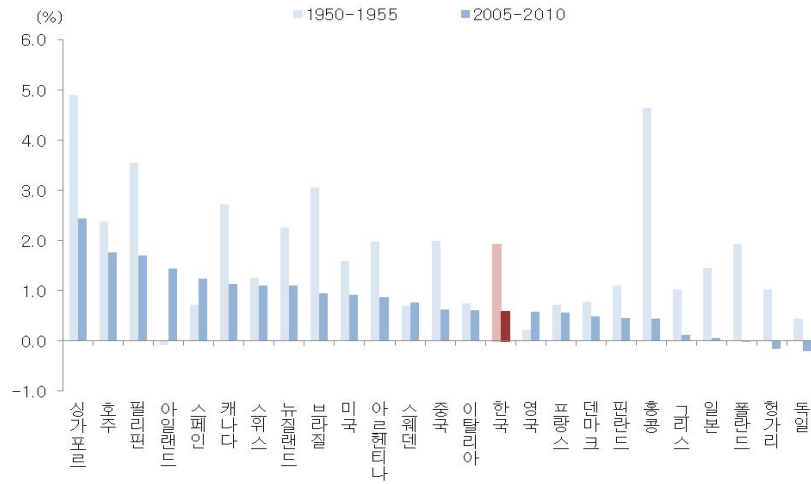
	(%)											
	1949- 1955	1955- 1960	1960- 1966	1966- 1970	1970- 1975	1975- 1980	1980- 1985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10
인구 성장률	1.07	2.98	2.60	1.88	1.96	1.51	1.55	1.42	0.53	0.63	0.45	0.40

주: 1) 인구성장률은 해당기간 총인구(내국인 인구 기준)의 연평균 성장률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인구성장률, 1950-1955, 2005-2010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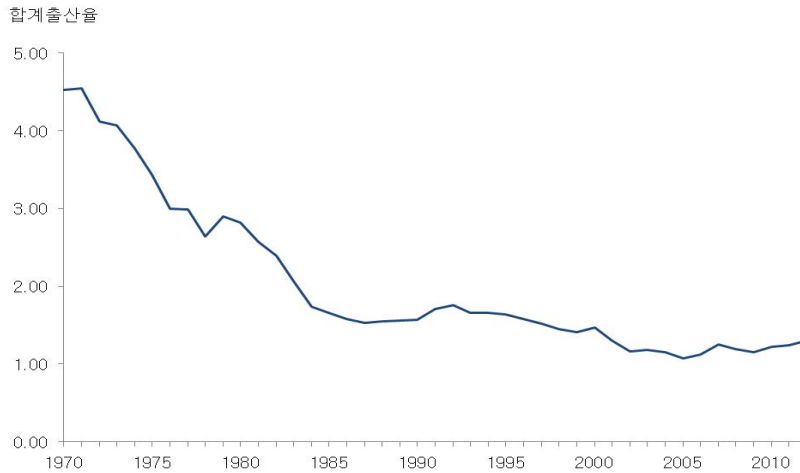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1950-1955	2005-2010	국가	1950-1955	2005-2010	국가	1950-1955	2005-2010
싱가포르	4.90	2.44	미국	1.60	0.92	핀란드	1.10	0.46
호주	2.39	1.76	아르헨티나	1.98	0.87	홍콩	4.65	0.44
필리핀	3.54	1.70	스웨덴	0.70	0.77	그리스	1.03	0.12
아일랜드	-0.08	1.44	중국	2.00	0.62	일본	1.45	0.06
스페인	0.72	1.25	이탈리아	0.75	0.62	폴란드	1.94	0.00
캐나다	2.71	1.13	한국	1.94	0.60	헝가리	1.03	-0.16
스위스	1.26	1.11	영국	0.22	0.58	독일	0.44	-0.20
뉴질랜드	2.26	1.10	프랑스	0.72	0.57			
브라질	3.06	0.95	덴마크	0.79	0.49			

21203. 합계출산율

■ 주요지표

합계출산율, 1970-2012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자가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집계된 연령집단별(5세 간격) 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 = \{\text{연령집단별(5세 간격) 출산율의 합} \div 1,000\} \times 5.$$

※ 연령집단별 출산율은 1년간 발생한 산모의 연령집단별(15-49세, 5세 간격)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해당 연령집단별 여성의 연앙 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임.

● 지표의 의의

합계출산율은 인구의 연령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출산력의 정교한 지표이며, 연령구조가 상이한 국가나 집단과의 출산수준의 비교에 널리 사용된다. 합계출산율은 특정 시점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활용하여 한 여자가 가임기를 거치면서 출산하게 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모아비, 일반출산율, 재생산율 등과 같은 출산력 지표에 비해 그 의미의 파악과 해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 해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급격한 감소를 거듭하여 1983년에는 2.06으로 대체수준(2.10) 아래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08으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1.30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감소추세는 한국 인구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최근 유럽의 동부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동아시아의 국가들에서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추세가 관찰된다.

출산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특정 연도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로 계산되는 조출생률을 들 수 있다. 한국의 조출생률은 1970년에 31.2의 수준이었으나 1996년에는 그 절반인 15.0으로 낮아졌으며, 2012년에는 9.6으로 집계되었다. 출산력의 저하추세는 출생아수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70년의 출생아수는 100.7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의 출생아수는 48.5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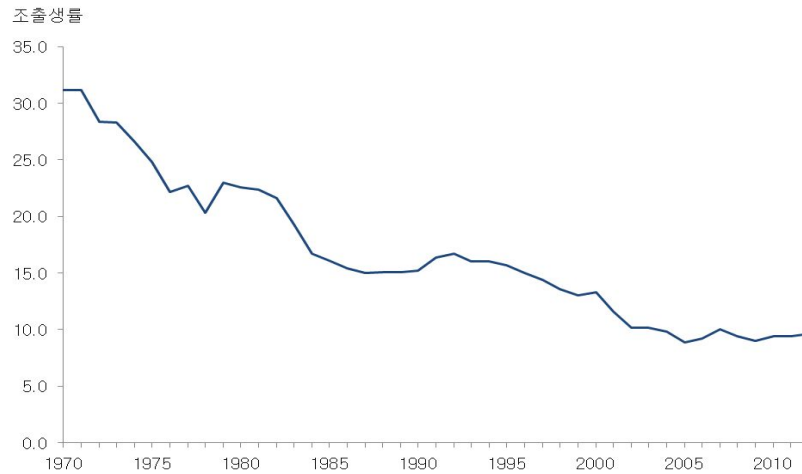
연령집단별 출산율, 1997-2012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2
연령집단별 출산율									
15-19세	3.00	2.60	2.20	2.50	2.10	2.20	1.70	1.80	1.80
20-24세	54.20	43.30	31.40	23.60	17.80	19.50	16.50	16.40	16.00
25-29세	159.70	147.20	129.20	111.70	91.70	95.50	80.40	78.40	77.40
30-34세	71.50	72.30	77.50	79.10	81.50	101.30	100.80	114.40	121.90
35-39세	15.40	15.30	17.00	17.10	18.70	25.60	27.30	35.40	39.00
40-44세	2.30	2.40	2.40	2.40	2.40	3.10	3.40	4.60	4.90
45-49세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0.20
합계출산율	1.52	1.41	1.30	1.18	1.08	1.25	1.15	1.24	1.30

주: 1) 연령집단별 출산율 = (산모의 해당 연령집단별 출생아수 ÷ 해당 연령집단의 여자 인구) × 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조출생률, 197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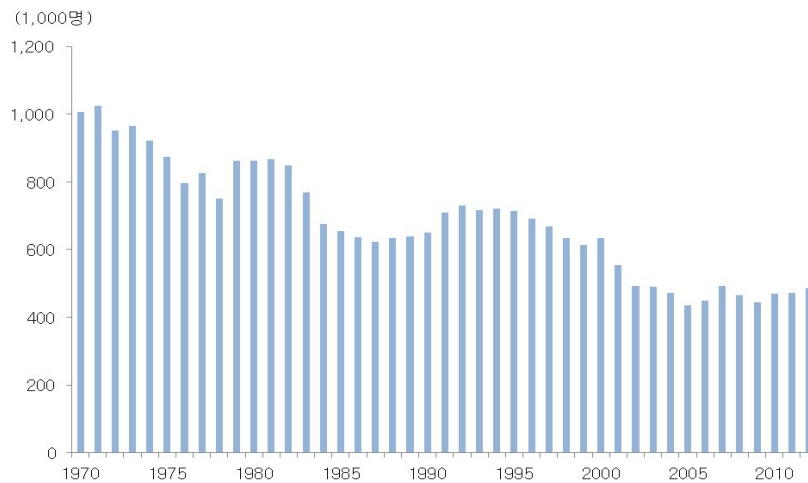


주: 1)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조출생률	31.2	24.8	22.6	16.1	15.2	15.7	13.3	8.9	9.4	9.4	9.6

출생아수, 197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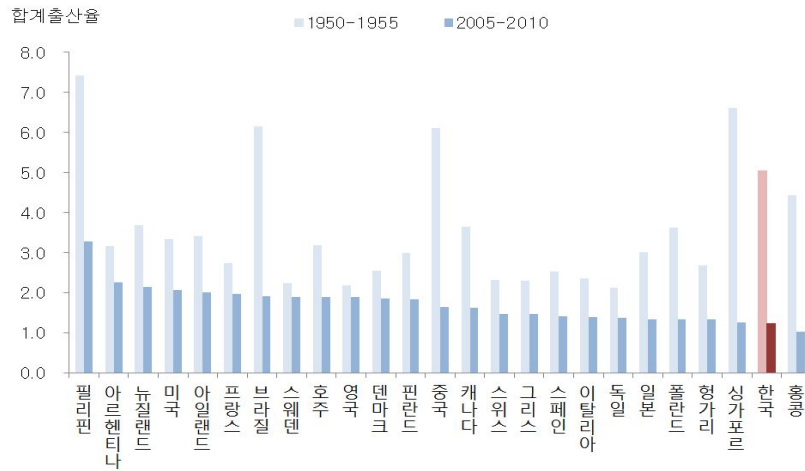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출생아수	1,007	874	863	655	650	715	635	435	470	471	485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1950-1955, 2005-2010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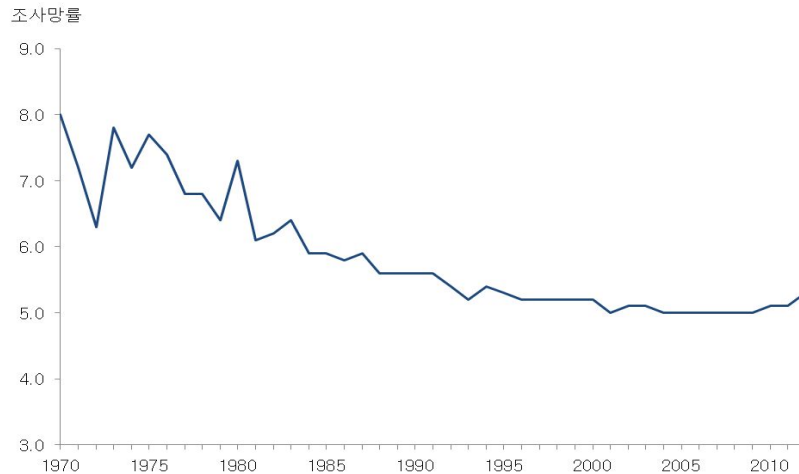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1950-1955	2005-2010	국가	1950-1955	2005-2010	국가	1950-1955	2005-2010
필리핀	7.42	3.27	영국	2.18	1.88	독일	2.13	1.36
아르헨티나	3.15	2.25	덴마크	2.55	1.85	일본	3.00	1.34
뉴질랜드	3.69	2.14	핀란드	3.00	1.84	폴란드	3.62	1.34
미국	3.33	2.06	중국	6.11	1.63	헝가리	2.69	1.33
아일랜드	3.42	2.00	캐나다	3.65	1.63	싱가포르	6.61	1.26
프랑스	2.75	1.97	스위스	2.31	1.47	한국	5.05	1.23
브라질	6.15	1.9	그리스	2.29	1.46	홍콩	4.44	1.03
스웨덴	2.24	1.89	스페인	2.53	1.41			
호주	3.18	1.89	이탈리아	2.36	1.39			

21204. 조사망률

■ 주요지표

조사망률, 1970-2012



주: 1) 조사망률은 해당연도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조사망률은 1년간의 사망자수를 그 해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것으로, 보통 1,000명당 사망자 수로 표시됨
- 측정 방법: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집계된 연간 사망자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text{조사망률} = (\text{연간 사망자수} \div \text{해당년도 연앙인구}) \times 1,000$$

● 지표의 의의

조사망률은 조출생률과 함께 주어진 인구의 성장 및 변화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의 하나이다. 조사망률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계산 또한 간편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조사망률은 인구의 연령구조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특히 사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조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사망률은 연령구조가 상이한 국가나 지역 간의 사망수준을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 해설

조사망률은 특정 인구의 전반적인 사망수준을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조사망률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면, 이는 조사망률의 저하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1970년에는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가 8.0의 수준이었으나 2012년에는 5.3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사망력이 일정한 수준까지 낮아지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져 조사망률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1990년대 후반기부터 5.0-5.3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인구의 조사망률은 UN에서 2005-2010년 기준으로 추정된 세계인구(8.4)와 개발도상국(8.0), 아시아 국가(7.4)들은 물론 선진국(10.0)의 평균 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 상세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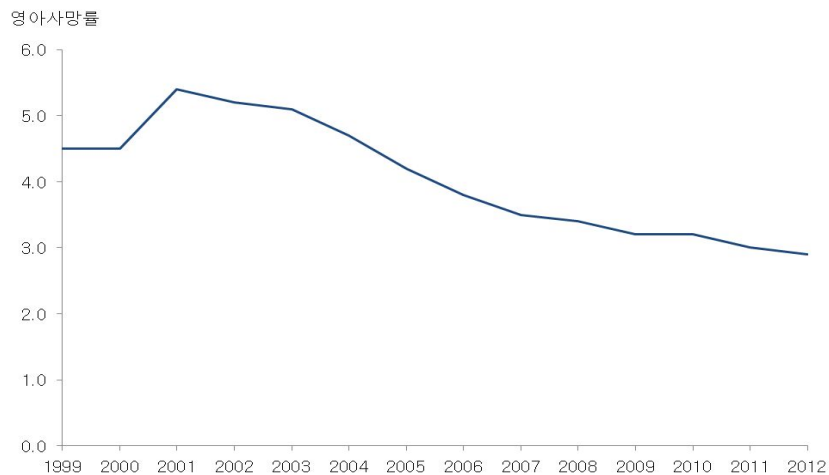
조사망률, 1970-2012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조사망률	8.0	7.7	7.3	5.9	5.6	5.3	5.2	5.0	5.1	5.1	5.3

주: 1) 조사망률은 해당년도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영아사망률, 199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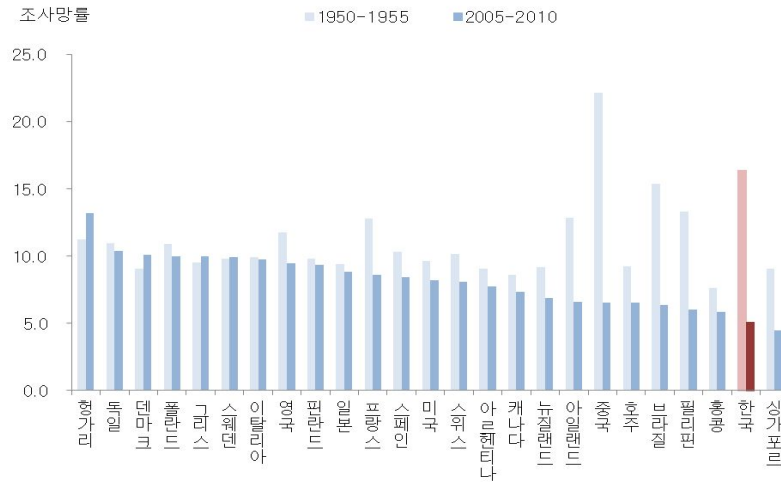


주: 1) 영아사망률은 해당년도의 출생아 1,000명당 영아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영아사망률	4.6	4.8	5.3	5.1	5.4	4.8	4.2	4.1	3.8	3.5	3.3	3.5	3.2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조사망률, 1950-1955, 2005-2010



주: 1) 조사망률은 해당기간의 연평균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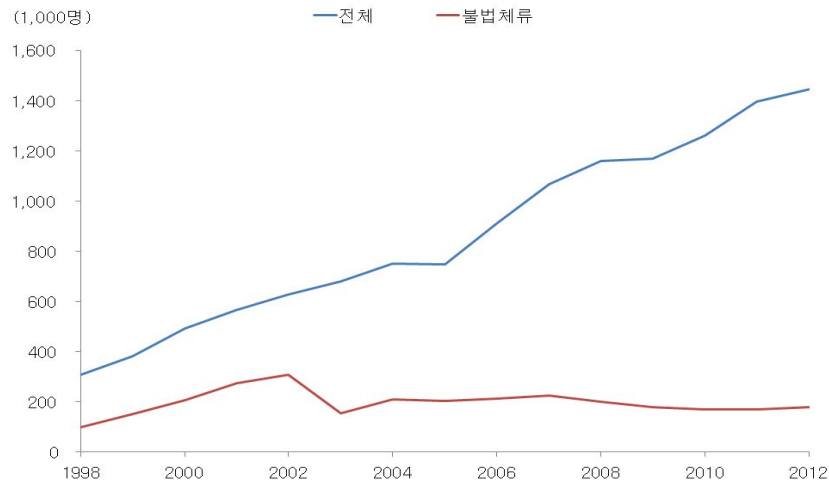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1950-1955	2005-2010	국가	1950-1955	2005-2010	국가	1950-1955	2005-2010
헝가리	11.3	13.2	일본	9.4	8.8	중국	22.1	6.6
독일	10.9	10.4	프랑스	12.8	8.6	호주	9.3	6.5
덴마크	9.1	10.1	스페인	10.3	8.4	브라질	15.3	6.3
폴란드	10.9	10.0	미국	9.6	8.2	필리핀	13.3	6.0
그리스	9.5	10.0	스위스	10.1	8.1	홍콩	7.6	5.8
스웨덴	9.8	9.9	아르헨티나	9.1	7.7	한국	16.4	5.1
이탈리아	9.9	9.7	캐나다	8.6	7.3	싱가포르	9.0	4.5
영국	11.8	9.5	뉴질랜드	9.2	6.9			
핀란드	9.8	9.3	아일랜드	12.8	6.6			

21205. 체류외국인

■ 주요지표

체류외국인수, 1998-2012



주: 1) 체류외국인수는 연말 기준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체류외국인수는 연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장기 및 단기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수임. 단기체류자는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이고, 장기체류자는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임.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는 자임.
- 측정 방법: 법무부가 외국인등록 자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자 자료 및 단기체류외국인 자료 등에 기초하여 집계한 연말 기준 「체류외국인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함.

■ 지표의 의의

장기 및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체류외국인을 국적을 비롯한 특성별로 파악하여 다양한 사회발전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의 수립에 활용한다. 불법체류자들은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 해설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고 장기체류하는 자이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등록 및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을 의미한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체류기간이 초과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체류 외국인은 2012년 현재 144.5만 명으로 2011년 대비 3.6%가 증가하였다. 집계자료가 가용한 1998년 이후로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불법체류자 수는 2012년 현재 17.8만 명으로 추산되며, 2002년 30.8만 명의 정점에 도달 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주에 의한 인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국적취득자 수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수는 2006년까지 3.9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에는 그 누적 규모가 12.3만 명으로 불과 6년 사이에 약 3배로 증가하였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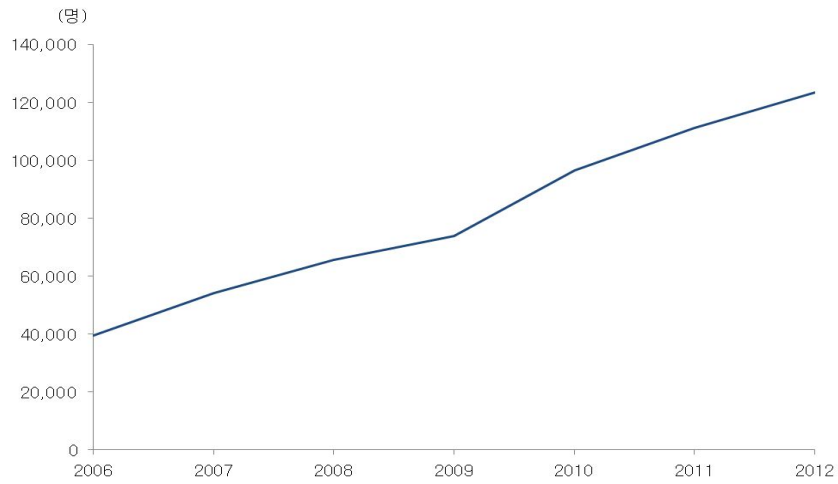
체류유형별 외국인수, 1998-2012

	(1,000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308	381	491	567	629	679	751	747	910	1,066	1,159	1,168	1,261	1,395	1,445
합법체류															
장기	148	170	220	244	272	460	491	511	661	800	895	921	1,003	1,117	1,121
단기	160	211	271	322	357	218	259	237	250	266	263	248	259	278	325
불법체류	100	152	205	273	308	154	210	204	212	223	200	178	169	168	178

주: 1) 체류외국인수는 연말 기준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년도.

■ 보조지표

국적취득자수, 1998-2012



출처: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각 년도.

통계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적취득자수	39,525	54,051	65,511	73,725	96,461	111,110	123,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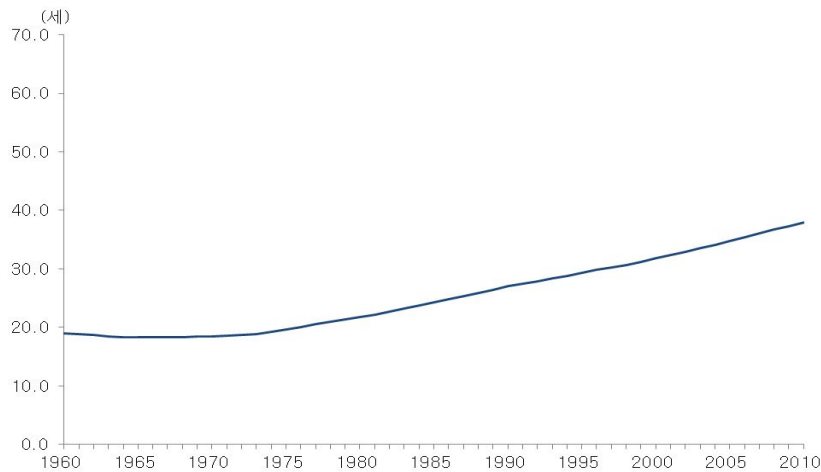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2.1.3. 인구구조

21306. 중위연령

■ 주요지표

중위연령, 1960-2010



주: 1)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사람의 연령임. 즉 총인구를 균등하게 2등분하는 연령을 의미함. 따라서 인구의 절반은 중위연령보다 어리고, 절반은 중위연령보다 많게 됨.
- 측정 방법: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초로 5년 주기로 추계하는 「장래인구추계」 자료의 총인구를 이용하여 산출함.

$$\text{중위연령} = \alpha + \left(\frac{\frac{N}{2} - \sum_{\alpha=0}^{\alpha-1} N_x}{N_\alpha} \right) \quad (\alpha = \text{인구의 중앙값이 속한 연령, } N_x = x \text{세의 인구})$$

● 지표의 의의

중위연령은 인구의 연령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 대부분의 인구는 비대칭의 연령분포를 지니기 때문에 중위연령이 평균연령(mean age)보다 널리 활용된다. 중위연령은 인구고령화의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중위연령이 30세 미만이면 ‘어린 인구’로, 30세 이상이면 ‘나이 든 인구’로 간주된다.

● 해설

중위연령은 개략적으로 주어진 사회의 발전수준, 인구변천의 단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는 간단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인구의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했을 만큼 매우 ‘어린 인구’였다. 즉,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전통적인 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위연령은 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0년에는 37.9세로 높아졌다. 높은 중위연령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높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사회에서 주로 발견된다. 중위연령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중위연령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평균수명의 남녀 차이에 기인한다.

국가별로 보면, 평균수명이 높은 선진국들의 중위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2010년 현재 일본(44.9), 독일(44.3), 이탈리아(43.3) 등이 중위연령이 높은 국가이며, 필리핀(22.3)과 브라질(29.0)은 상대적으로 중위연령이 낮은 국가에 해당된다.

인구의 연령 구성과 아울러 중요한 것은 성별 구성이다. 인구 피라미드를 작성하면 성과 연령 구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인구의 1960년 연령구조는 아랫부분이 넓은 전형적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냈으나, 출산수준의 저하로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는 방추형으로 변하는 추세를 1980년과 2000년의 연령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2010년에 이르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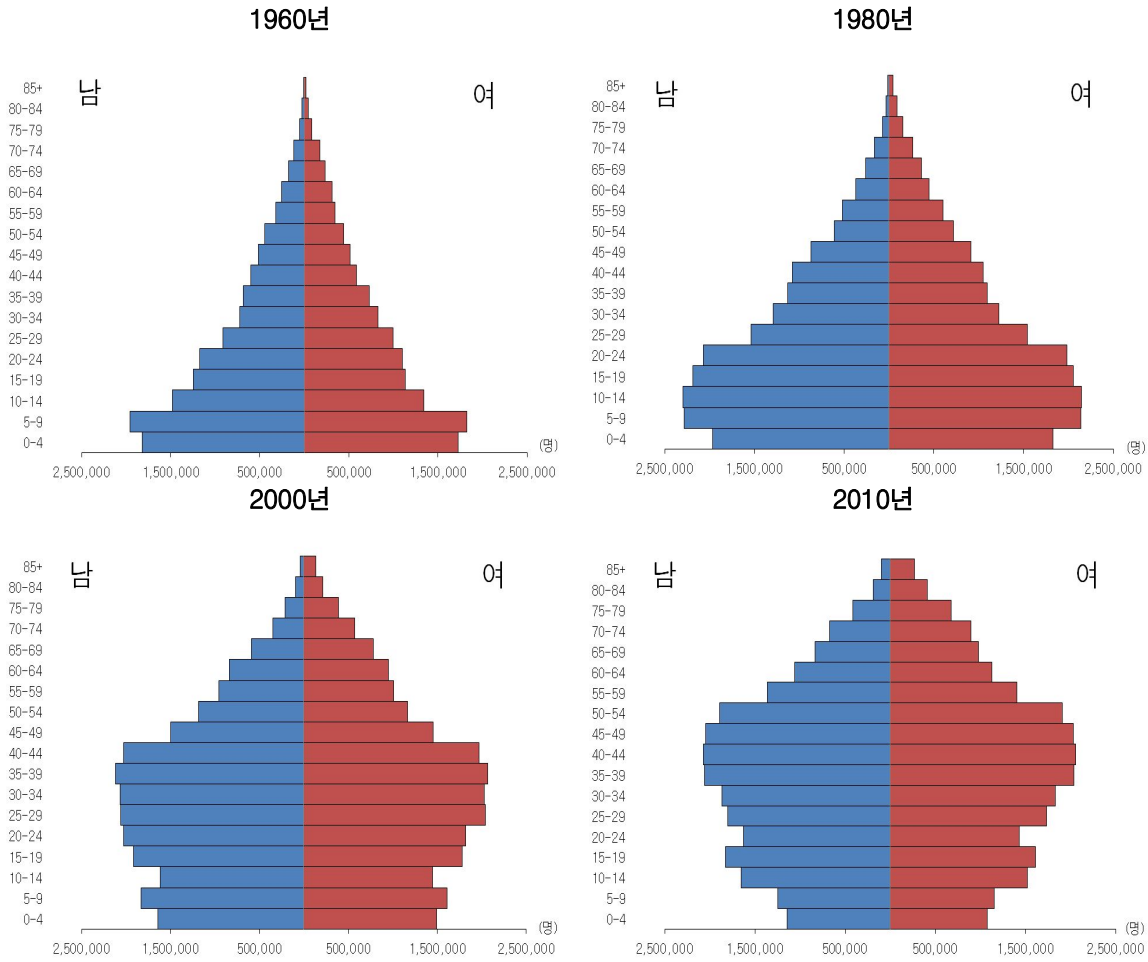
성별 중위연령, 1960-201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19.0	18.3	18.5	19.6	21.8	24.3	27.0	29.3	31.8	34.8	37.9
남자	18.2	17.6	17.9	18.9	21.2	23.8	26.3	28.4	30.8	33.8	36.8
여자	19.8	19.1	19.2	20.3	22.4	24.9	27.7	30.2	32.7	35.8	39.0

주: 1)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보조지표

인구피라미드, 1960, 1980, 2000,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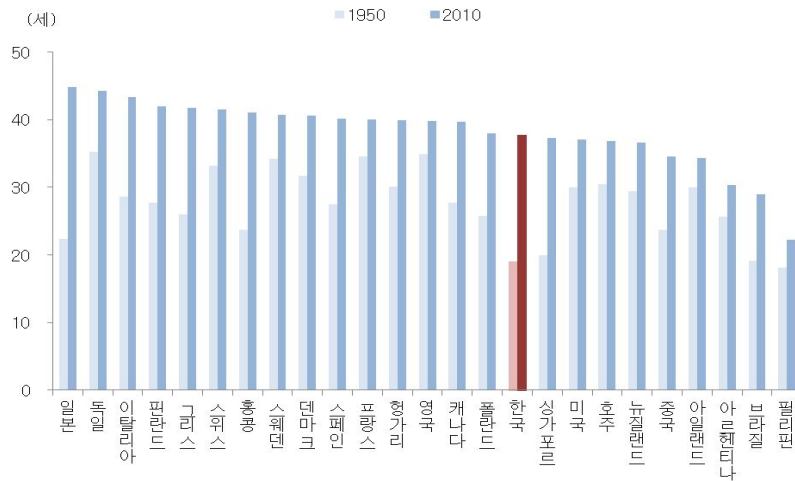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표

연령	1960		1980		2000		201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4	1,820,312	1,729,252	1,963,963	1,830,729	1,641,166	1,489,092	1,142,220	1,076,864
5-9	1,958,379	1,823,172	2,282,813	2,138,133	1,831,446	1,612,610	1,243,294	1,151,369
10-14	1,480,279	1,341,976	2,293,386	2,146,751	1,615,013	1,449,429	1,654,964	1,518,262
15-19	1,248,791	1,134,363	2,186,973	2,052,756	1,913,885	1,777,699	1,826,179	1,612,235
20-24	1,175,602	1,103,847	2,067,729	1,985,909	2,028,206	1,819,980	1,625,371	1,430,049
25-29	916,751	996,435	1,540,965	1,541,207	2,057,321	2,039,657	1,802,805	1,736,144
30-34	72,096	829,238	1,293,533	1,225,708	2,068,202	2,025,026	1,866,397	1,828,951
35-39	687,559	729,178	1,127,158	1,096,183	2,117,492	2,069,461	2,060,233	2,038,914
40-44	598,867	588,603	1,080,457	1,051,194	2,029,413	1,966,923	2,071,431	2,059,992
45-49	518,017	515,744	868,659	913,154	1,496,104	1,455,919	2,044,641	2,028,717
50-54	444,283	440,293	609,166	716,759	1,185,239	1,165,011	1,887,973	1,910,158
55-59	318,745	345,793	521,797	603,556	959,680	1,008,792	1,360,747	1,405,948
60-64	257,447	309,124	373,222	448,835	836,465	952,384	1,057,035	1,125,201
65-69	174,206	230,526	260,597	359,686	593,974	782,148	833,242	978,926
70-74	120,719	173,283	161,867	263,229	348,226	569,895	672,894	893,120
75-76	55,635	85,028	74,175	155,111	211,347	389,251	410,726	673,641
80-84	25,744	42,696	31,546	86,661	94,135	209,624	186,008	409,501
85+	8,186	15,983	11,296	41,946	39,715	133,491	94,736	271,873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중위연령, 1950, 2010



주: 1)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임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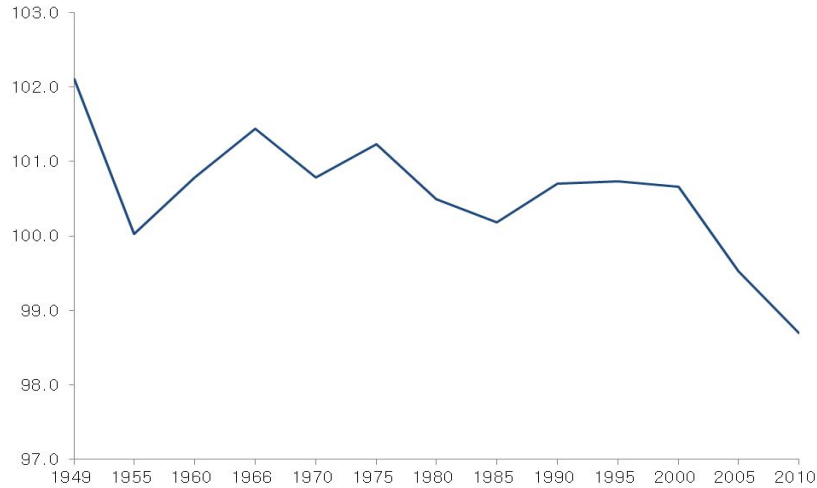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일본	22.3	44.9	스페인	27.5	40.2	호주	30.4	36.8
독일	35.3	44.3	프랑스	34.5	40.0	뉴질랜드	29.4	36.6
이탈리아	28.6	43.3	헝가리	30.1	39.9	중국	23.7	34.6
핀란드	27.8	42.0	영국	34.9	39.8	아일랜드	30.0	34.3
그리스	26.0	41.8	캐나다	27.7	39.7	아르헨티나	25.7	30.3
스위스	33.2	41.6	폴란드	25.8	38.0	브라질	19.2	29.0
홍콩	23.7	41.1	한국	19.0	37.8	필리핀	18.2	22.3
스웨덴	34.2	40.7	싱가포르	20.0	37.3			
덴마크	31.7	40.6	미국	30.0	37.1			

21307. 성비

■ 주요지표

성비, 1949-2010



주: 1) 성비는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임(내국인 기준).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성비는 남자 인가와 여자 인구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인수로 나타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로 통해 집계된 성별 인구(내국인 기준)를 이용하여 산출함.
성비 = (남자 인구 ÷ 여자 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인구의 성별구조 및 균형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 해설

성비는 인구의 성별구조 및 균형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성비는 흔히 전체 인구에 대해 계산하지만, 특정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구가동으로 인한 교란요인이 없다면 성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특히 노인인구는 남녀의 사망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2010년 한국 전체인구의 성비는 98.7이었으며, 10-19세의 성비가 111.2로 가장 높았고, 60-69세 89.8, 70-79세 69.2, 그리고 80세 이상이 41.2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집단의 성비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출생 당시의 남아와 여아의 수를 비교하는 출생성비를 들 수 있다.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몇 명 태어나는가로 측정한다. 출생성비는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더 많이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104-107의 범위를 정상수준으로 간주한다. 한국의 출생성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3년과 1994년에 115 수준의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105-107의 안정된 수준에 도달하였다.

● 상세 통계표

연령집단별 성비, 1949-2010

	1949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전체	102.1	100.8	100.8	100.5	100.7	100.7	98.7
10세 미만	103.7	106.4	107.2	107.0	109.1	112.0	107.1
10-19세	103.9	110.2	105.9	106.7	104.9	109.4	111.2
20-29세	102.1	99.6	102.7	102.3	104.2	105.9	108.3
30-39세	106.5	90.8	100.0	104.3	104.8	102.2	101.5
40-49세	105.1	101.1	92.5	99.2	105.0	103.0	100.7
50-59세	95.8	97.1	94.7	85.7	93.5	98.7	98.0
60-69세	82.3	80.0	78.5	78.4	73.4	82.5	89.8
70-79세	-	68.3	58.8	56.4	59.1	58.3	69.2
80세 이상	-	57.8	44.2	33.3	34.1	39.0	41.2

주: 1) 성비는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임(내국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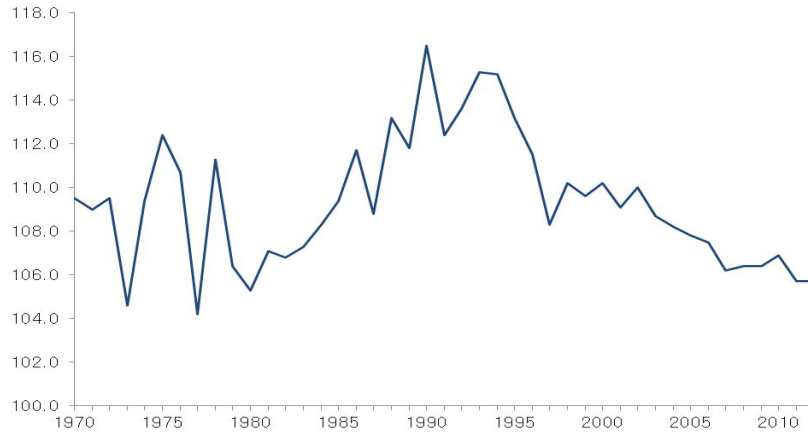
2) 1949년 자료의 경우 64세 인구까지만 자료가 가용하여, 60-69세의 성비는 60-64세의 성비임.

3) 1960년 자료의 경우 연령집단별 성비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 수치로 계산되었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출생성비, 197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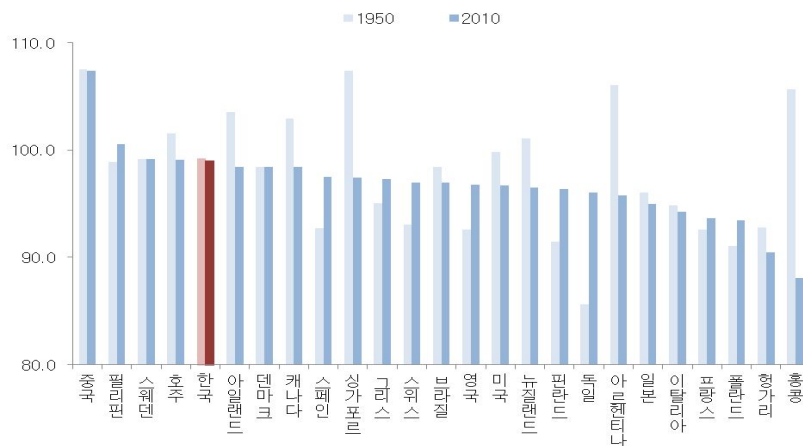
주: 1) 출생성비는 해당년도 여자 출생아 100명당 남자 출생아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출생성비	109.5	112.4	105.3	109.4	116.5	113.2	110.2	107.8	106.9	105.7	105.7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성비, 1950, 2010



주: 1) 성비는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임구임.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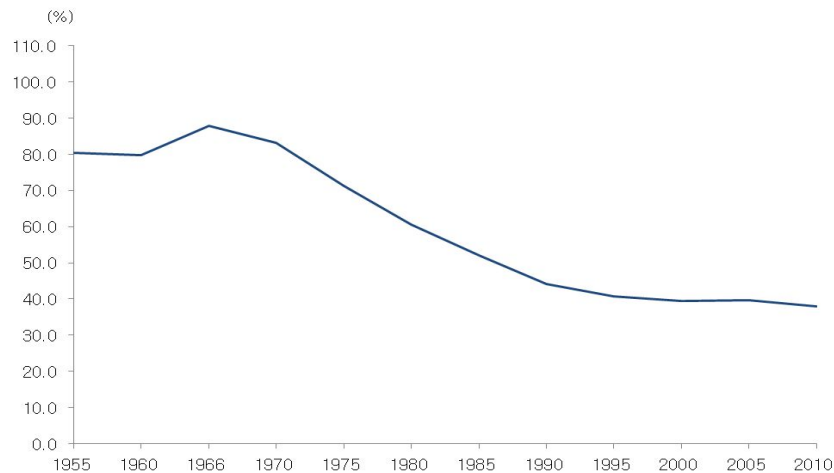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중국	107.5	107.4	싱가포르	107.4	97.4	아르헨티나	106.1	95.8
필리핀	98.9	100.5	그리스	95.1	97.3	일본	96.0	95.0
스웨덴	99.2	99.2	스위스	93.0	97.0	이탈리아	94.9	94.3
호주	101.6	99.1	브라질	98.4	97.0	프랑스	92.6	93.6
한국	99.2	99.0	영국	92.6	96.8	폴란드	91.0	93.4
아일랜드	103.6	98.4	미국	99.8	96.7	헝가리	92.8	90.5
덴마크	98.4	98.4	뉴질랜드	101.1	96.5	홍콩	105.7	88.1
캐나다	103.0	98.4	핀란드	91.5	96.3			
스페인	92.8	97.5	독일	85.6	96.1			

21308. 부양인구비

■ 주요지표

부양인구비, 1955-2010



주: 1) 부양인구비 = {(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부양인구비는 총인구(내국인 기준) 중에서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비율로 생산가능연령층 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임. 부양인구비는 소년부양인구비와 노년부양인구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을 합산한 지표라는 의미에서 총부양인구비라고 지칭하기도 함. 소년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한 소년(0-14세) 인구의 비율이고, 노년부양인구비는 생산가능연령 인구에 대한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로 통해 집계된 연령집단별 인구(내국인 기준)를 이용하여 산출함.
부양인구비 = {(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부양인구비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사회경제구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부양인구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투자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경제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노년부양인구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노인복지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소년부양인구비와 노년부양인구비를 각각 분모와 분자로 하는 비를 취하여 고령화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 해설

소년부양인구비는 1955년 74.3%로 매우 높았지만 2010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4%로 집계되었다. 소년부양인구비의 이 같은 저하는 주로 출산수준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반면, 1955년 4.6%에 불과했던 노년부양인구비는 지속적인 사망률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2010년에는 15.6%으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노년부양인구비의 증가추세에 비해 소년부양인구비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양인구비 역시 감소추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10%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69.7%에 도달하였다. 고령화지수의 빠른 증가추세는 출산력의 빠른 저하로 소년부양인구비가 떨어지고, 사망률 저하로 노년부양인구비가 높아지는 추세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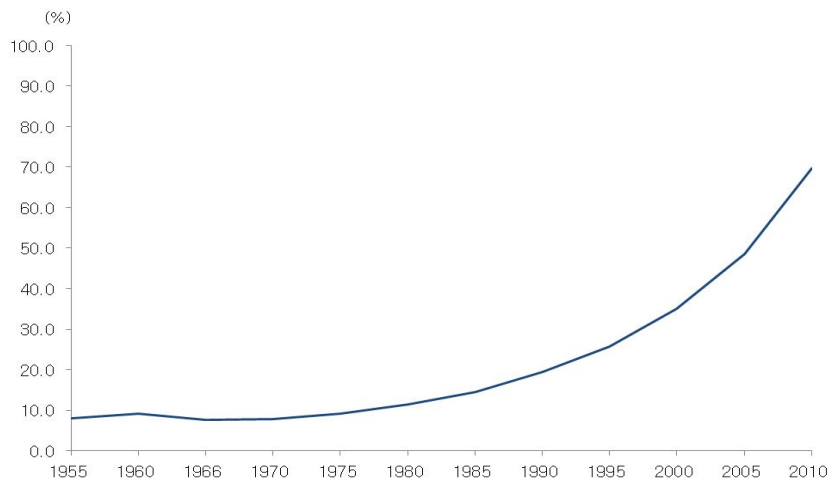
부양인구비, 소년부양인구비 및 노년부양인구비, 1955-2010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부양인구비	79.0	79.9	88.0	83.2	71.1	60.5	52.1	44.2	40.6	39.5	39.6	38.0
소년부양인구비	74.3	73.1	81.8	77.2	65.2	54.3	45.5	37.0	32.3	29.2	26.7	22.4
노년부양인구비	4.6	6.7	6.2	6.1	6.0	6.2	6.6	7.2	8.3	10.2	13.0	15.6

주: 1) 부양인구비 = $\{(15\text{세 미만 인구} + 65\text{세 이상 인구}) \div (15\text{-}64\text{세 인구})\} \times 100$.
 2) 소년부양인구비 = $(15\text{세 미만 인구} \div 15\text{-}64\text{세 인구}) \times 100$.
 3) 노년부양인구비 = $(65\text{세 이상 인구} \div 15\text{-}64\text{세 인구}) \times 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고령화지수, 195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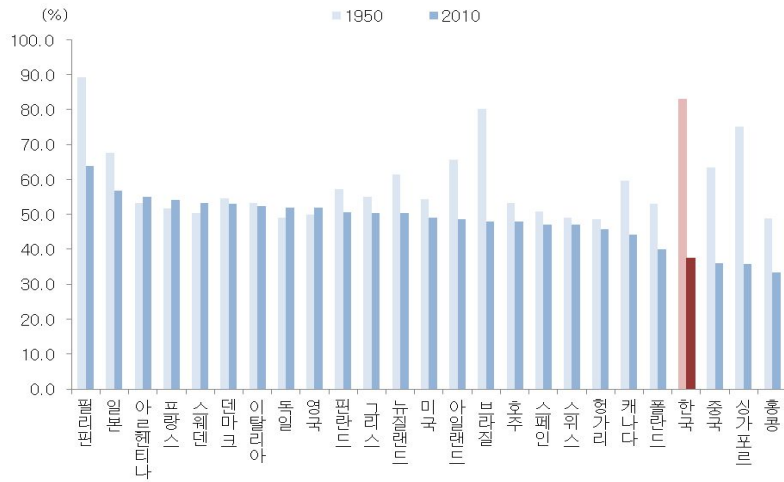


주: 1) 고령화지수 = $(65\text{세 이상 인구} \div 15\text{세 미만 인구}) \times 10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고령화지수	8.0	9.2	7.6	7.8	9.1	11.4	14.5	19.4	25.8	35.0	48.6	69.7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부양인구비, 1950, 2010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통계표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필리핀	89.3	63.9	핀란드	57.2	50.7	헝가리	48.7	45.7
일본	67.6	56.9	그리스	54.9	50.4	캐나다	59.6	44.1
아르헨티나	53.2	55.0	뉴질랜드	61.4	50.4	폴란드	52.9	39.9
프랑스	51.7	54.2	미국	54.5	49.0	한국	83.0	37.6
스웨덴	50.4	53.2	아일랜드	65.5	48.5	중국	63.3	36.0
덴마크	54.6	53.0	브라질	80.3	47.9	싱가포르	75.0	35.8
이탈리아	53.3	52.3	호주	53.3	47.9	홍콩	48.9	33.4
독일	49.1	52.0	스페인	50.9	47.1			
영국	49.9	51.9	스위스	49.1	47.0			

2.2. 가구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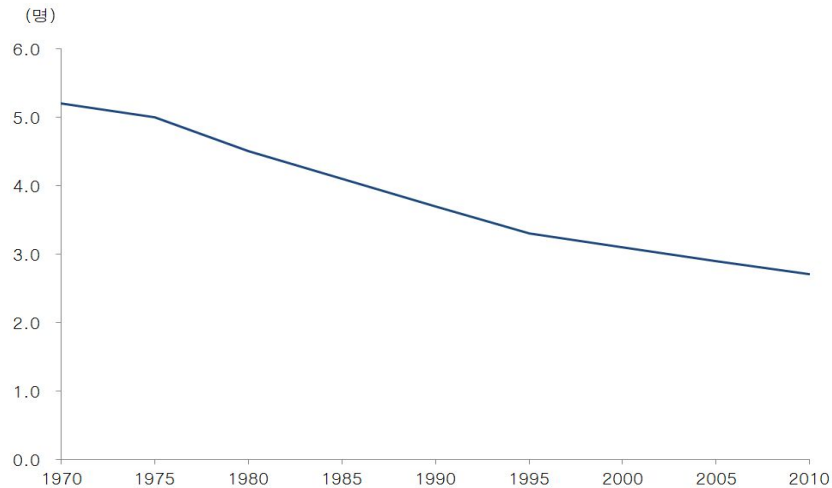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 평균가구원수		• 평균가구원수
		• 한부모가구비율	• 저소득층 한부모가구비율	• 한부모가구비율
	가족형성	• 혼인율	• 평균초혼연령 • 결혼선호율 • 국제결혼비율	• 혼인율
		• 이혼율	• 평균이혼연령 • 이혼반대율	• 이혼율
	가족관계	• 가족관계만족도	• 배우자만족도 • 자녀만족도	
		• 가사노동시간	• 가족시간	•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	• 어린이집이용률	• 육아휴직자수	• 어린이집이용률
		• 노인과 자녀 동거비율	• 부모부양의무수용률	

2.2.1. 가구구성

22101. 평균가구원수

■ 주요지표

평균가구원수, 1970-2010



주: 1) 평균가구원수는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한 주택에 살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 내 평균 구성원의 수임. 여기서 가구는 일반가구를 지칭하는데, 일반가구란 혼인, 출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단위로서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나 5인 이하의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는 비친족 가구를 포함함.
- 측정 방법: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일반가구수와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일반가구의 집계기준은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등임.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는 일반가구로 분류됨.
평균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수

● 지표의 의의

평균가구원수의 변화는 한 사회의 출산율 및 가구구성의 변화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지표이다. 자녀수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가구 유형의 선택은 가족가치관이나 규범과 함께 경제적 여건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즉 평균가구원수는 개인 및 개별가구의 미시적 환경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의 영향이 함께 작동하여 응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해설

1980년에 4.5명이었던 평균가구원수는 1990년 3.7명, 2000년 3.1명, 2010년 2.7명까지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설명된다. 상세 통계표를 통해 최근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에 1인가구의 증가가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향후 가구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인가구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10년 22.5%로 감소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세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 그리고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처럼 1인가구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에서, 즉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평균 가구원수 감소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1980년 4.7명으로 동부보다 높았던 읍면부의 평균 가구원수는 2010년에는 2.5명으로 동부에 비해 0.2명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읍면부에서 1인가구와 2인가구의 증가율이 동부보다 높은데 기인한다. 읍면부의 1인가구는 1980년 4.9%에서 2010년 27.1%로 22.2%포인트가 증가하였고, 2인가구는 2012년 현재 31.8%에 이르러 동부의 22.5%에 비해서 9.3%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다. 동부보다 읍면부에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자녀세대의 이혼으로 인한 노인 독거 및 노인부부가구의 증가가 읍면부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에 특히 기여하였다. 이렇게 가구규모가 축소하고 있지만 한국의 평균가구원수는 OECD 평균가구원수인 2.60명, 일본의 2.54명보다는 약간 많은 편이다.

● 상세 통계표

지역별 가구원수구성과 평균가구원수, 198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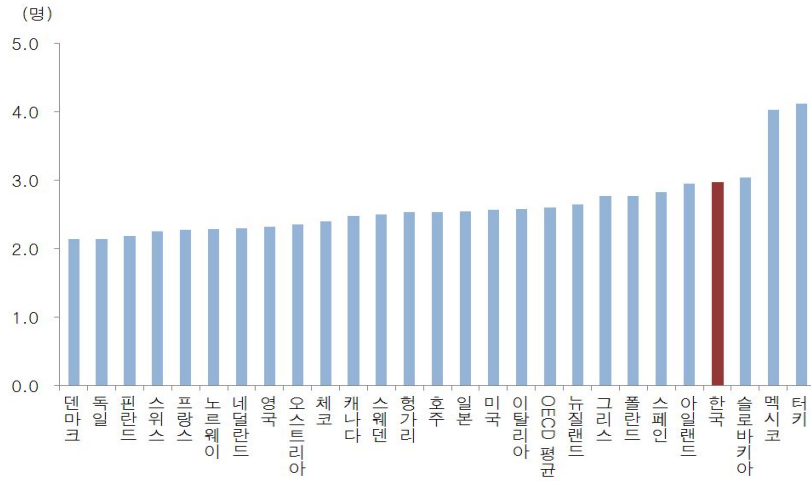
	가구수 (1,000가구)	가구원수별 가구 구성비율(%)					평균 가구원수 (명)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가구
전국								
1980	7,969	4.8	10.5	14.5	20.3	20.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8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1
2005	15,887	20.0	22.2	20.9	27.0	7.7	2.3	2.9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동부								
1980	4,670	4.7	10.7	15.3	22.3	20.8	26.1	4.4
1985	6,331	6.8	11.6	16.8	27.4	20.0	17.4	4.0
1990	8,462	8.6	12.2	19.5	31.9	19.1	8.6	3.7
1995	10,032	11.8	14.5	20.8	34.5	13.2	5.1	3.4
2000	11,229	14.6	16.8	21.5	33.6	10.3	3.0	3.2
2005	12,745	19.1	20.1	21.7	29.1	7.9	2.1	2.9
2010	14,031	23.1	22.5	22.2	24	6.4	1.8	2.7
읍면부								
1980	3,299	4.9	10.3	13.3	17.5	18.9	35.1	4.7
1985	3,241	7.2	13.7	15.9	21.2	18.3	23.7	4.2
1990	2,892	10.3	18.3	17.6	22.4	18.1	13.3	3.7
1995	2,926	15.6	24.9	18.7	22.3	11.6	6.9	3.1
2000	3,082	18.9	27.3	18.4	21.7	9.2	4.5	2.9
2005	3,142	23.3	30.6	17.6	18.7	6.9	2.9	2.7
2010	3,308	27.1	31.8	17.4	15.9	5.6	2.2	2.5

주: 1) 일반가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평균가구원수, 2000년대 초중반



주: 1) 평균가구원수는 일반가구 기준임.

2) 기준년도는 대부분 2007년이고, 예외는 호주(2003), 캐나다(2006), 아일랜드(2002), 뉴질랜드(2006), 노르웨이(2001), 미국(2005)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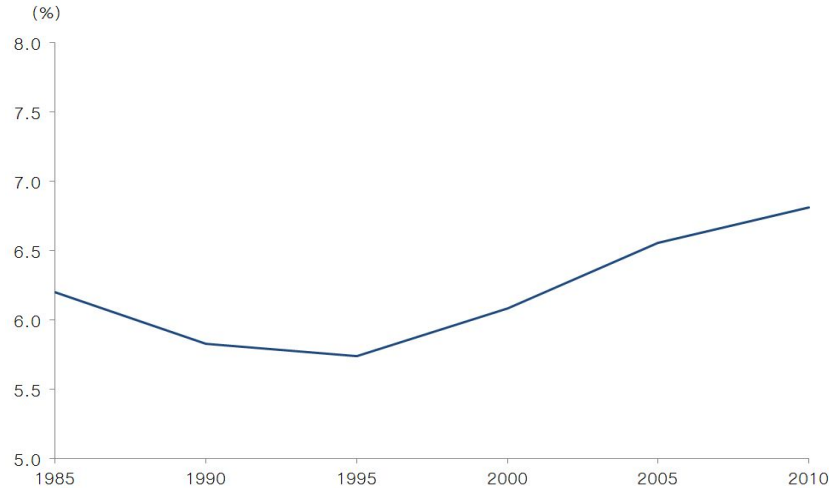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평균가구원수	국가	평균가구원수	국가	평균가구원수
덴마크	2.13	체코	2.39	뉴질랜드	2.65
독일	2.14	캐나다	2.47	그리스	2.76
핀란드	2.18	스웨덴	2.50	폴란드	2.77
스위스	2.25	헝가리	2.53	스페인	2.82
프랑스	2.27	호주	2.53	아일랜드	2.94
노르웨이	2.28	일본	2.54	한국	2.97
네덜란드	2.29	미국	2.57	슬로바키아	3.04
영국	2.32	이탈리아	2.58	멕시코	4.03
오스트리아	2.35	OECD 평균	2.60		

22102. 한부모가구비율

■ 주요지표

한부모가구 비율, 1985-2010



주: 1) 한부모가구비율은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율임. 한부모가구수 산정 시 부(모)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한부모가구비율은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율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세대구성 및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일반가구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한부모가구수 산정 시 ‘부(모)+ 미혼자녀 가구’ 중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text{한부모가구비율} = (\text{한부모가구수} \div \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 지표의 의의

한부모가구는 사별, 이혼, 미혼모(부), 별거, 유기 등의 원인으로 형성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으로 인해서 빠르게 양산되는 추세이다. 한부모가구 구성원은 소득의 상실에 따른 빈곤의 위험, 경제활동과 가사 및 자녀양육의 병행으로 인한 한부모의 역할과중, 사회관계망 제한 등의 현실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한부모가구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한 위치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하다.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의 증가는 해당가족의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회비용을 발생시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해설

한부모가구비율은 1970년부터 1995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그 비율이 감소했던 속도보다 최근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구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도 최근 많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체 한부모가구에서 약 21%정도를 차지한다.

한부모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층 한부모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5년에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약 9%가 저소득층에 속하였으나 2012년에는 그 비율이 13.0%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 한부모가구는 4.9%에서 5.2%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한부모가구는 2005년 4.2%에서 2012년 7.8%로 지난 8년간 그 비율이 계속 해서 증가해왔다. 한국사회 전반의 경제적 여건변화가 한부모가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도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부모가구의 부나 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상세 통계표

한부모가구 비율과 부모의 성별 한부모가구수, 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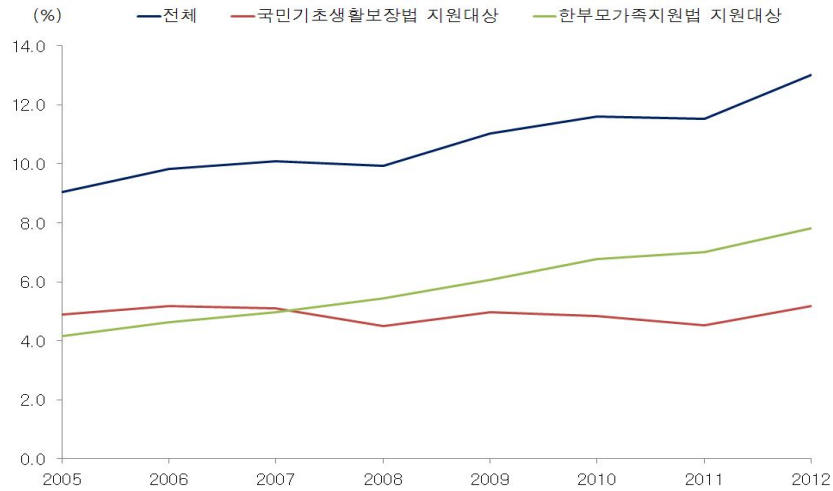
	1995	2000	2005	2010
한부모가구비율(%)	5.7	6.1	6.6	6.8
한부모가구(1,000가구)	743	870	1,042	1,181
부+미혼자녀	121	161	222	253
모+미혼자녀	622	709	819	928

주: 1) 한부모가구비율은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의 비율임. 한부모가구수 산정 시 부(모)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가구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비율, 200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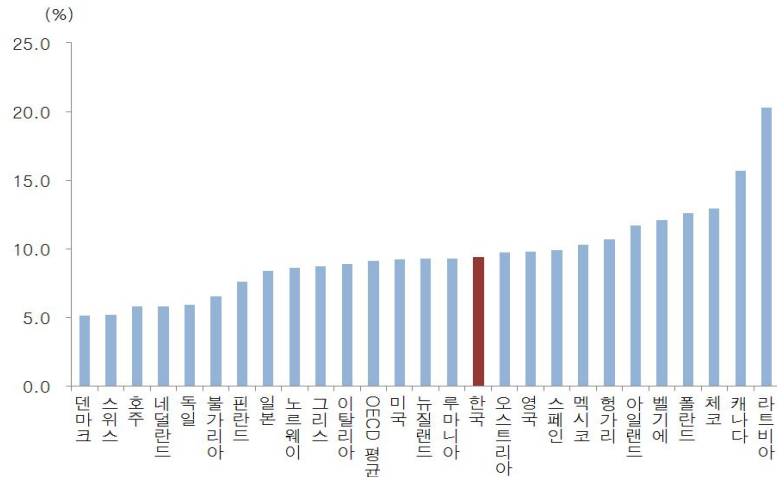
주: 1) 저소득층 한부모가구 비율은 전체 한부모가구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한부모가구수 산정 시 부(모)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가구도 포함되었음. 2005년과 2010년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였고, 나머지 자료는 「장래가구추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 한부모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하인 가구를 의미함.
 4)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한부모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초과 130%이하인 가구를 의미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장래가구추계」, 2011.

통계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9.1	9.8	10.1	9.9	11.0	11.6	11.5	1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	4.9	5.2	5.1	4.5	5.0	4.8	4.5	5.2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4.2	4.6	5.0	5.4	6.1	6.8	7.0	7.8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한부모가구비율, 2000년대 초중반



주: 1) 한부모가구비율은 일반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한국, 핀란드, 라트비아, 스위스, 터키, 미국 등은 2000년 자료,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등은 2001년 자료,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2002년 자료, 멕시코, 일본 등은 2005년 자료,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2006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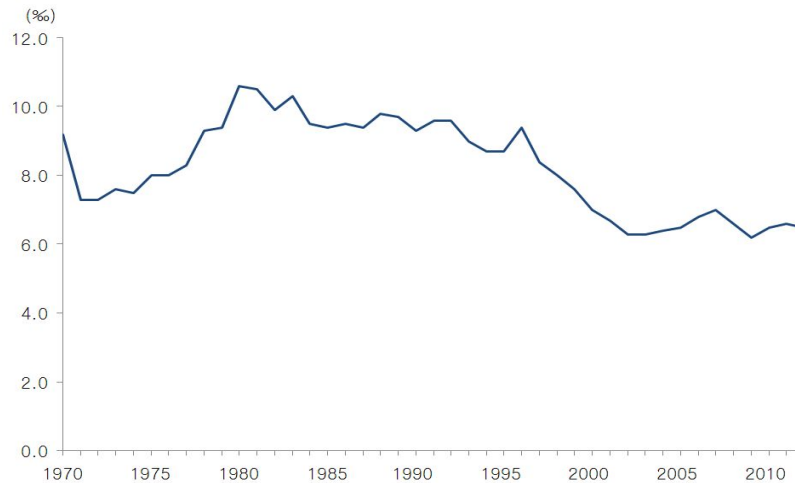
국가	한부모가구비율	국가	한부모가구비율	국가	한부모가구비율
덴마크	5.1	그리스	8.7	스페인	9.9
스위스	5.2	이탈리아	8.9	멕시코	10.3
호주	5.8	OECD 평균	9.1	헝가리	10.7
네덜란드	5.8	미국	9.2	아일랜드	11.7
독일	5.9	뉴질랜드	9.3	벨기에	12.1
불가리아	6.5	로마니아	9.3	폴란드	12.6
핀란드	7.6	한국	9.4	체코	12.9
일본	8.4	오스트리아	9.7	캐나다	15.7
노르웨이	8.6	영국	9.8	라트비아	20.3

2.2.2. 가족형성

22203. 혼인율

■ 주요지표

조혼인율, 1970-2012



주: 1)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즉 연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년도 주민등록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고, 그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매월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집계하는 혼인건수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혼인건수는 혼인신고서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혼전 동거, 별거 등 사실혼은 제외됨.
조혼인율 = (연간 총 혼인건수 ÷ 당해년도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

● 지표의 의의

가족이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사회화하여 세대를 연결하고 공통 구성원의 문화, 관습, 언어, 가치관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결혼은 개인이나 가족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이 지연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은 출생아수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부족, 인구 고령화를 가져오면서 과도한 부양 부담의 문제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조혼인율 변화추세를 통해서 인구규모와 구조의 변동 요인 중 하나인 혼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 가족의 미래와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해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1992년 9.6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2년 6.5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조혼인율이 감소하는 추세는 OECD 주요 국가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조혼인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30여 년 사이 조혼인율이 급격히 감소였다. 조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평균초혼연령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초혼연령은 결혼생활로 돌입하는 시기로 혼인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지난 30여 년간의 평균초혼연령의 변화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2.1세, 여자 29.4세로 전년대비 남자 0.2세, 여자 0.3세 상승하였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만혼과 비혼의 비율이 높아짐에 기인한다. 즉 결혼을 늦추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였으나,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되고 가족주의 규범이 약화되면서 결혼이 보편성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찬성하는 인구의 비율이 1998년에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을 ‘만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과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의 합이 1998년 73.5%였지만 2012년에는 63.0%이다. 아직까지 과반이 넘는 사람이 결혼을 당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에 점차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혼인율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결혼은 여성에게 높은 기회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한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신중해지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청년실업률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결혼 의사와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경쟁이 심한 현실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교육기간 증가로 이어져 미혼율을 증가시키고 결혼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결혼은 2005년을 정점으로 그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제결혼은 2012년 총 혼인건수의 8.7%수준으로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건수는 2만 600건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하였고,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혼인은 7,700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여 전체 국제결혼의 감소는 주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 감소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중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은 72.9%를 차지하여 국제결혼의 대다수는 아직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혼인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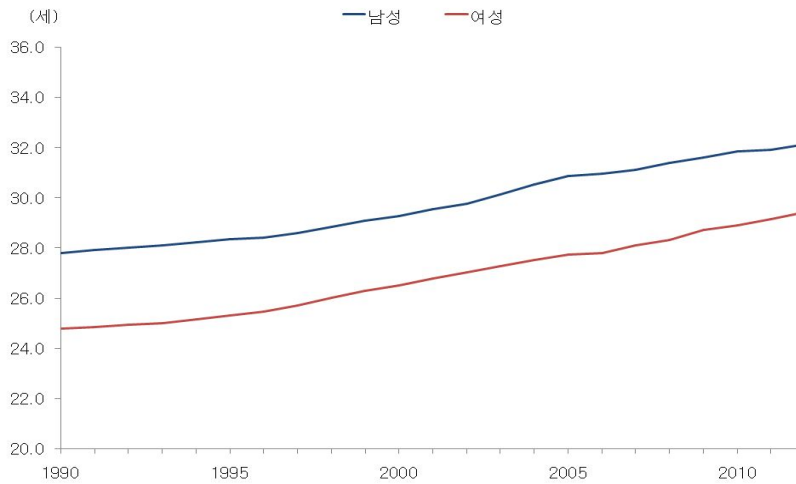
조혼인율, 1970-2012

연도	조혼인율	연도	조혼인율	연도	조혼인율	연도	조혼인율	연도	조혼인율
1970	9.2	1979	9.4	1988	9.8	1997	8.4	2006	6.8
1971	7.3	1980	10.6	1989	9.7	1998	8.0	2007	7.0
1972	7.3	1981	10.5	1990	9.3	1999	7.6	2008	6.6
1973	7.6	1982	9.9	1991	9.6	2000	7.0	2009	6.2
1974	7.5	1983	10.3	1992	9.6	2001	6.7	2010	6.5
1975	8.0	1984	9.5	1993	9.0	2002	6.3	2011	6.6
1976	8.0	1985	9.4	1994	8.7	2003	6.3	2012	6.5
1977	8.3	1986	9.5	1995	8.7	2004	6.4		
1978	9.3	1987	9.4	1996	9.4	2005	6.5		

주: 1)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성별 평균초혼연령, 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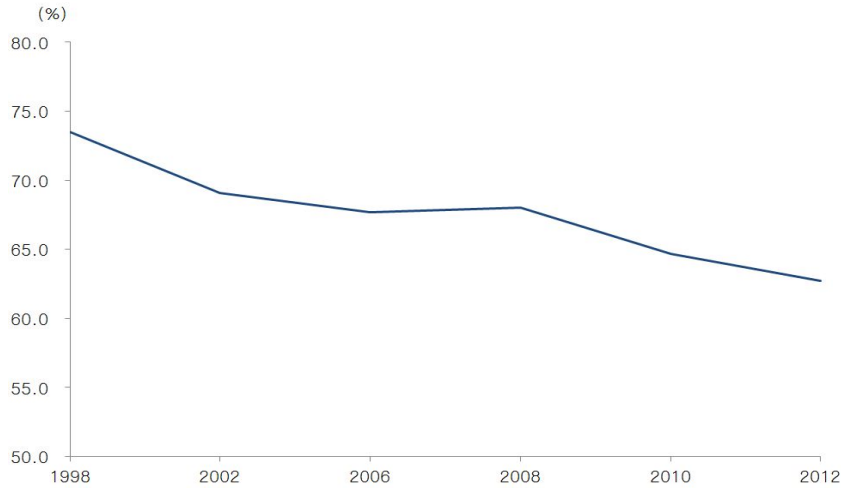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남성	27.8	27.9	28.0	28.1	28.2	28.4	28.4	28.6
여성	24.8	24.8	24.9	25.0	25.1	25.3	25.5	25.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성	28.8	29.1	29.3	29.6	29.8	30.1	30.5	30.9
여성	26.0	26.3	26.5	26.8	27.0	27.3	27.5	27.7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성	31.0	31.1	31.4	31.6	31.8	31.9	32.1	
여성	27.8	28.1	28.3	28.7	28.9	29.1	29.4	

결혼선호율, 199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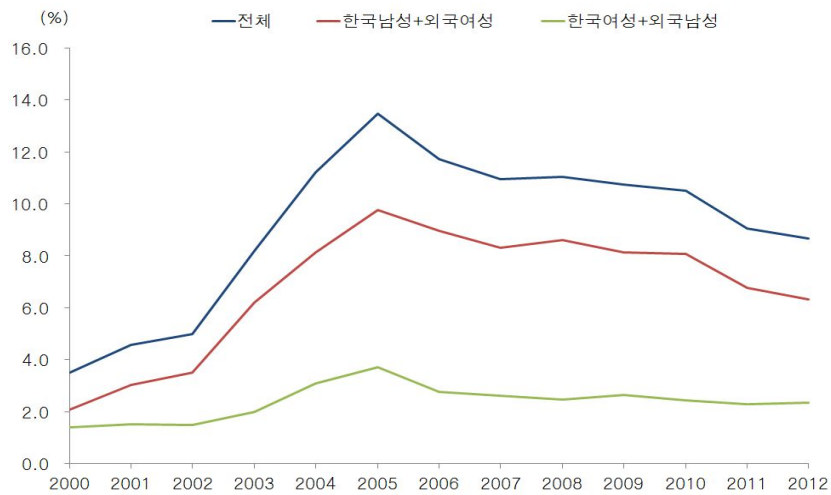


주: 1) 결혼선호율은 전체 조사대상인구(2010년까지는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또는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8	2002	2006	2008	2010	2012
결혼선호율	73.5	69.1	67.7	68.0	64.7	63.0

국제결혼비율,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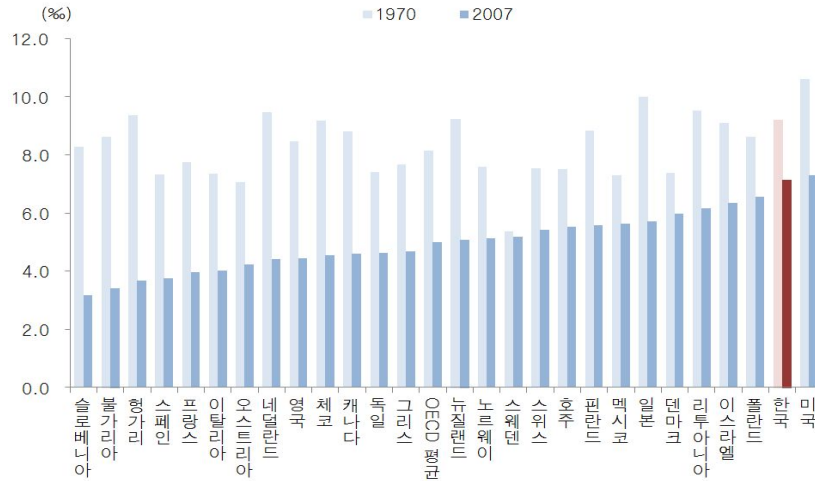
주: 1) 국제결혼비율은 해당년도 총 혼인건수 중 해당유형 국제결혼건수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3.5	4.6	5.0	8.2	11.2	13.5	11.7	10.9	11.1	10.8	10.5	9.0	8.7
한국남성+외국여성	2.1	3.0	3.5	6.2	8.1	9.8	9.0	8.3	8.6	8.1	8.1	6.8	6.3
한국여성+외국남성	1.4	1.5	1.5	2.0	3.1	3.7	2.8	2.6	2.5	2.6	2.4	2.3	2.4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조혼인율, 1970, 2007



주: 1)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주: 2) 2007년 이스라엘 자료는 2006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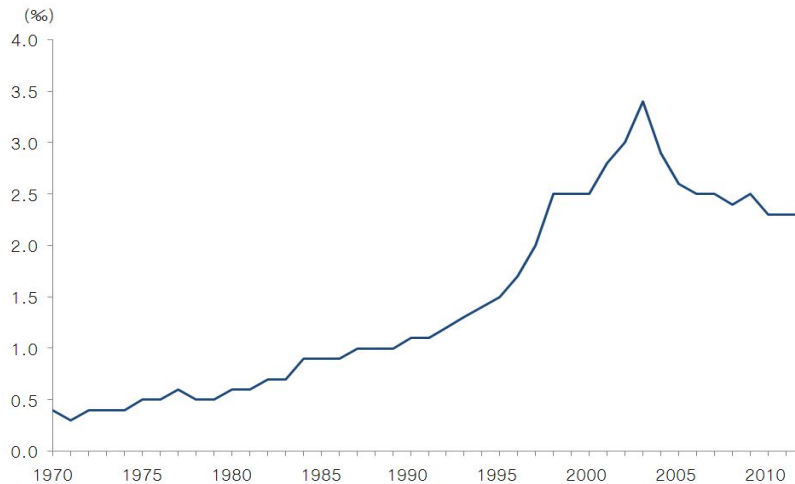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1970	2007	국가	1970	2007	국가	1970	2007
미국	10.6	7.31	스위스	7.55	5.41	네덜란드	9.48	4.41
한국	9.20	7.13	스웨덴	5.38	5.17	오스트리아	7.07	4.24
폴란드	8.62	6.57	노르웨이	7.58	5.13	이탈리아	7.35	4.01
이스라엘	9.10	6.33	뉴질랜드	9.23	5.08	프랑스	7.75	3.97
리투아니아	9.53	6.15	OECD 평균	8.14	5.00	스페인	7.32	3.76
덴마크	7.38	5.97	그리스	7.67	4.68	헝가리	9.35	3.67
일본	10.00	5.71	독일	7.40	4.62	불가리아	8.61	3.42
멕시코	7.30	5.63	캐나다	8.80	4.60	슬로베니아	8.28	3.17
핀란드	8.84	5.59	체코	9.19	4.56			
호주	7.50	5.52	영국	8.47	4.43			

22204. 이혼율

■ 주요지표

조이혼율, 1970-2012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즉 연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년도 주민등록연앙인구(7월 1일)로 나누고, 그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매월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집계하는 이혼건수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혼인건수는 이혼신고서를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별거 등 사실이혼은 제외됨.
$$\text{조이혼율} = (\text{연간 총 이혼건수} \div \text{당해연도 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0$$

● 지표의 의의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한 사회의 가족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이다. 조이혼율은 이혼건수를 이혼과 관련이 없는 영유아 인구가 포함된 전체 인구로 나누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파악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교육 및 사회화, 개인의 정서적 안정 등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이다. 가족의 기능이 과거에 비하여 축소되고 상당부분 사회로 이전되고는 있지만 가족안정성은 여전히 사회의 안정성의 기반을 이룬다. 이혼율은 우리 사회의 가족관계의 질을 보여주거나 가족의 건강성을 대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 해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990년에 1.1이었으나, 불과 10년 후인 2000년에는 2.5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3.4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후 조이혼율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2년 약 2.3건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이혼율 저하는 그동안 이혼율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이혼숙려기간 의무화 및 이혼 전 상담 등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70년에는 하위 네 번째 국가였던 한국이 2005년에는 상위 7번째를 기록하였다. 물론 유럽의 많은 국가가 사실 혼이 많은 반면, 한국은 혼인 신고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조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이혼율의 증가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IMF 사태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위기, 호주제 폐지와 같은 법적인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개인의 행복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도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보조지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2년 48.7%로 1998년 60.8%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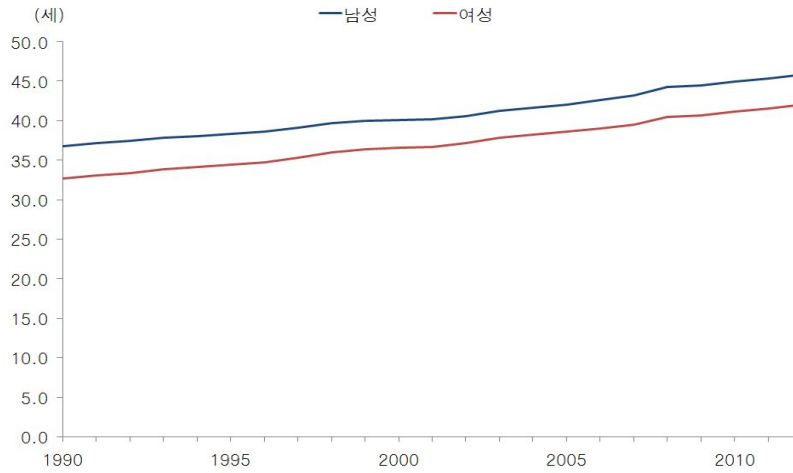
조이혼율, 1970-2012

연도	조이혼율	연도	조이혼율	연도	조이혼율	연도	조이혼율	연도	조이혼율
1970	0.4	1979	0.5	1988	1.0	1997	2.0	2006	2.5
1971	0.3	1980	0.6	1989	1.0	1998	2.5	2007	2.5
1972	0.4	1981	0.6	1990	1.1	1999	2.5	2008	2.4
1973	0.4	1982	0.7	1991	1.1	2000	2.5	2009	2.5
1974	0.4	1983	0.7	1992	1.2	2001	2.8	2010	2.3
1975	0.5	1984	0.9	1993	1.3	2002	3.0	2011	2.3
1976	0.5	1985	0.9	1994	1.4	2003	3.4	2012	2.3
1977	0.6	1986	0.9	1995	1.5	2004	2.9		
1978	0.5	1987	1.0	1996	1.7	2005	2.6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성별 평균이혼연령, 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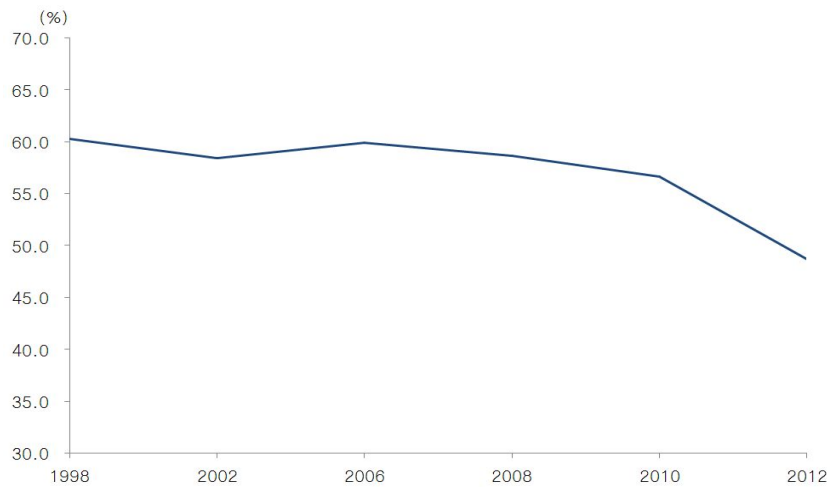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남성	36.8	37.2	37.4	37.9	38.1	38.3	38.6	39.1
여성	32.7	33.1	33.3	33.8	34.1	34.5	34.8	35.3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성	39.7	40.0	40.1	40.2	40.6	41.3	41.7	42.1
여성	36.0	36.4	36.5	36.7	37.1	37.9	38.2	38.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남성	42.6	43.2	44.3	44.5	45.0	45.4	45.9	
여성	39.0	39.5	40.5	40.7	41.1	41.5	42.0	

이혼반대율, 1998-2012



주: 1) 이혼반대율은 전체 조사대상인구(2010년까지는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이혼에 대해 '어떤 이유라도 이혼은 안 된다' 또는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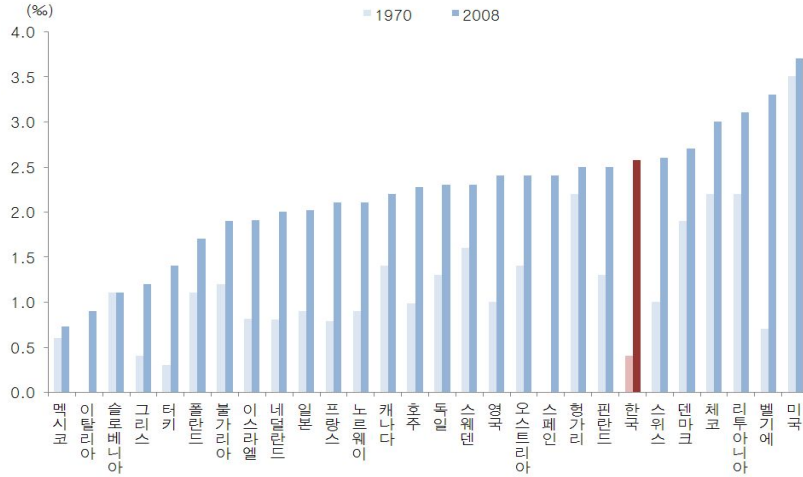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8	2002	2006	2008	2010	2012
이혼반대율	60.3	58.4	59.9	58.6	56.6	48.7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조이혼율, 1970, 2008



주: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임.

2)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그리스, 멕시코 등은 2007년 자료이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2006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2.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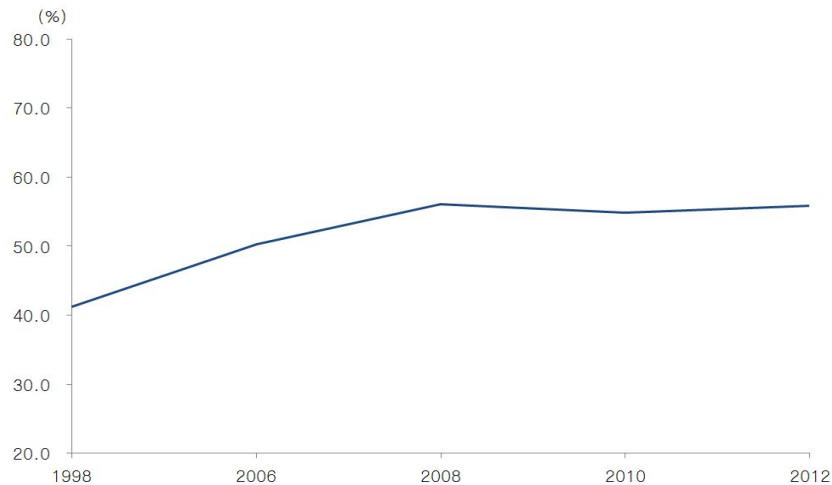
국가	1970	2008	국가	1970	2008	국가	1970	2008
미국	3.5	3.7	영국	1.0	2.4	일본	0.9	2.0
벨기에	0.7	3.3	오스트리아	1.4	2.4	네덜란드	0.8	2.0
리투아니아	2.2	3.1	스페인	0.0	2.4	이스라엘	0.8	1.9
체코	2.2	3.0	독일	1.3	2.3	불가리아	1.2	1.9
덴마크	1.9	2.7	스웨덴	1.6	2.3	폴란드	1.1	1.7
스위스	1.0	2.6	호주	1.0	2.3	터키	0.3	1.4
한국	0.4	2.6	캐나다	1.4	2.2	그리스	0.4	1.2
헝가리	2.2	2.5	프랑스	0.8	2.1	슬로베니아	1.1	1.1
핀란드	1.3	2.5	노르웨이	0.9	2.1	이탈리아	0.0	0.9

2.2.3. 가족관계

22305. 가족관계만족도

■ 주요지표

가족관계만족도, 1998-2012



주: 1) 가족관계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인구(2010년까지는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2년에는 이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전체 인구 중 본인의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조사되는 '가족관계 만족도'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문항은 전체 조사대상자(2010년까지는 전국 만 15세 이상 가구원, 2012년부터는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원)에게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text{가족관계만족도} = (\text{'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수}) \div \text{전체 조사대상자수} \times 100.$$

● 지표의 의미

원만한 가족관계는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인의 하나이다.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속감과 유대, 친밀감의 원천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소망한다. 그러나 가족은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집단이라는 특성상 잠재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최근 들어 한국가족은 규범에 의해 유지되는 제도에서 우애적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의 관계적 측면에 대한 높아진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를 보여주면서 한국인의 가족생활의 질과, 더 나아가 삶의 질의 중요한 단면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 해설

가족관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41.2%에서 2012년에는 55.8%까지 높아졌다. 특이한 점은 IMF 직후 경제난 등으로 이혼율이 정점에 달한 1998년도부터 오히려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여건이 어려울 때 가족 해체 현상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가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가족응집력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관계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은 남성의 비율이 1998년 42.8%에서 2012년 58.2%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에 39.6%에서 54.2%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가족관계 만족도 평균치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관계 만족도가 꾸준히 높다.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 1998년을 제외하고는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읍면부가 동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다.

가족관계를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각 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이 2006년에 가장 낮았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상승하는 패턴이 배우자관계, 자녀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년도에 조사된 두 측면의 관계 만족도를 비교하면,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배우자관계에 만족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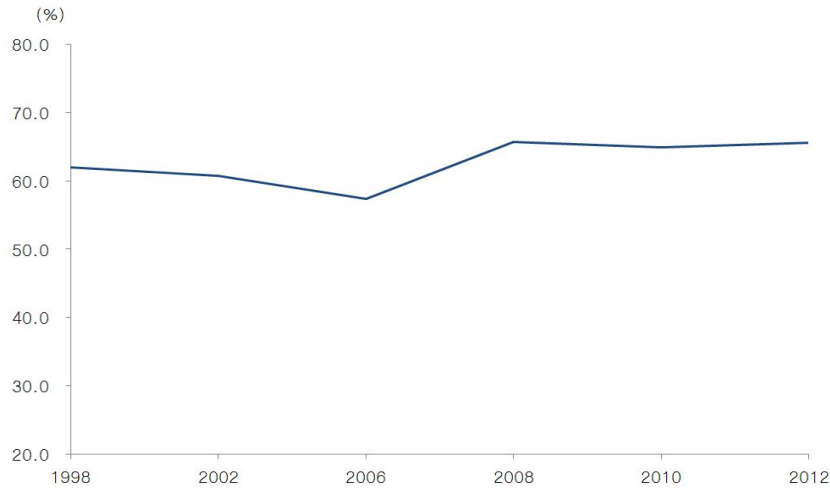
성, 연령 및 지역별 가족관계만족도, 1998-2012

	1998	2006	2008	2010	2012
계	41.2	50.3	56.1	54.8	55.8
성					
남자	42.8	53.1	57.7	56.6	58.2
여자	39.6	47.7	54.6	53.1	54.2
연령					
15-19세	-	54.6	62.2	62.7	68.0
20-29세	-	53.5	65.4	64.8	65.0
30-39세	-	56.3	62.0	59.7	62.3
40-49세	-	50.6	54.0	52.0	53.4
50-59세	-	44.9	48.4	47.0	47.1
60세이상	-	41.9	46.6	47.6	47.8
65세이상	-	41.4	46.1	47.8	48.6
지역					
동부	42.0	50.1	55.9	54.2	55.4
읍면부	37.5	51.3	56.8	57.4	59.6

주: 1) 가족관계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인구(2010년까지는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또는 '약간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2년에는 이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1998년의 연령구분은 다른 년도와 상이하여 비교하기 어려움.
 3) 2012년 15-19세는 13-19세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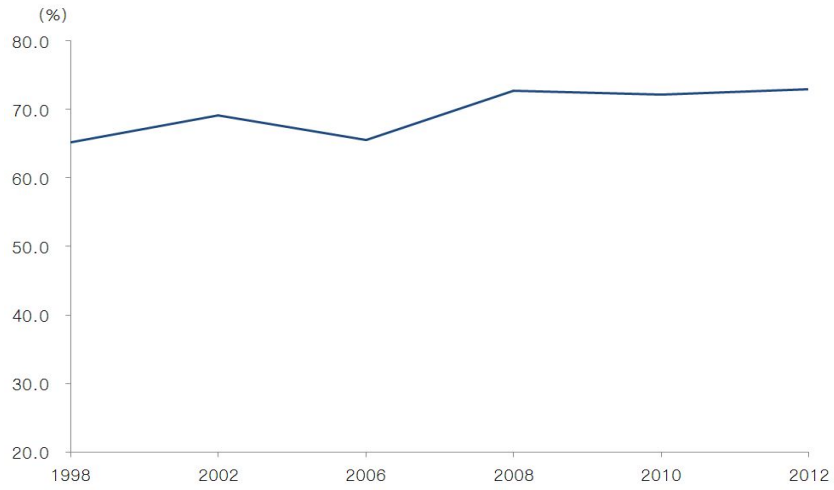
배우자만족도, 1998-2012



주: 1) 배우자만족도는 유배우 조사대상인구(2010년까지는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중 배우자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8	2002	2006	2008	2010	2012
배우자만족도	61.9	60.7	57.3	65.7	64.9	65.5

자녀만족도, 1998-2012



주: 1) 자녀만족도는 자녀가 있는 조사대상인구(2010년까지는 만 15세 이상,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중 자녀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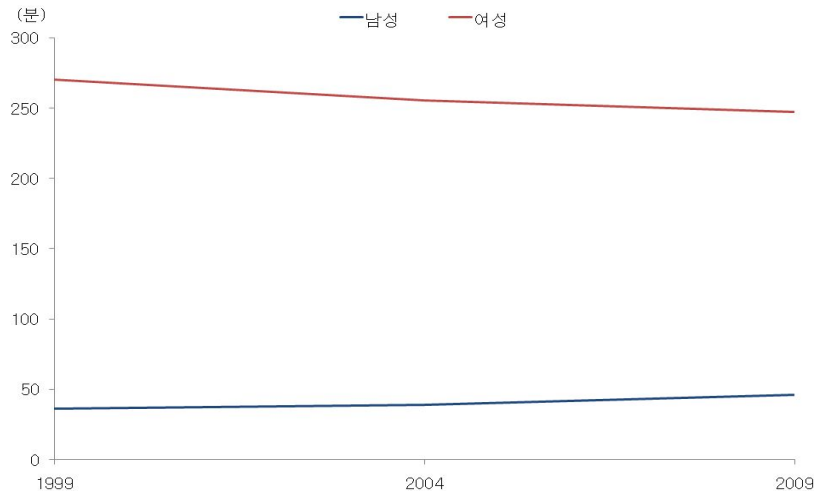
	1998	2002	2006	2008	2010	2012
자녀만족도	65.2	69.1	65.6	72.7	72.2	73.0

■ 국제비교지표 (없음)

22306. 가사노동시간

■ 주요지표

성별 가사노동시간, 1999-2009



주: 1) 가사노동시간은 20세 이상 기혼 남녀가 1일 평균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임. 가사노동에는 가정 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등이 포함됨.
2) 2009년 자료는 연 2회(3월 및 9월)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이며, 1999년과 2004년 자료는 연 1회(9월 실시)조사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가사노동시간은 20세 이상 기혼 남녀가 1일 평균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임. 가사노동에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 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등의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 등이 포함됨.
- 측정 방법: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집계된 혼인상태별 생활시간 자료 중 20세 이상 기혼남녀의 1일 평균(요일평균) 가정관리시간과 가족보살피기시간의 합으로 산출함.

$$\text{가사노동시간} = \text{20세 이상 기혼남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합} \div \text{전체 20세 이상 기혼남녀의 수.}$$

● 지표의 의의

가사노동시간은 기혼남녀의 가정관리 및 가족 돌봄에 사용한 시간을 파악한 것으로 부부간에 얼마나 성평등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삶의 질이나 부부관계의 질을 반영하기도 한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절대적, 상대적으로 장시간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상황은 일-가족 갈등을 야기하거나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시간사용과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들

에 따르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부부간의 역할갈등이 감소하고 부부관계 만족도는 높아져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사노동시간의 남녀 간 비교와 그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민주적 가족관계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 해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50%를 넘어서면서 전체가구 중 맞벌이가구가 약1/3을 차지하게 되었다. 여성의 교육수준 및 자아실현 욕구가 높아진 것과 함께, 교육비, 주거비용 등 가계 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맞벌이가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족 내 성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사를 남편과 부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한다는 의견이 2002년에 30%를 넘어서 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46%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 수행에 사용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성불평등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출산·육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3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했다가 30대 후반-40대 초반에 재진입하는 M자형 모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하루 50분 미만에 머물고 있고,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50분 내외에서 아주 완만한 감소를 보인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가사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가정관리나 가족 돌봄을 부부 이외의 사람이나 기관에 위탁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반영한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비교국가 중 가장 짧다.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노르웨이 다음으로 가장 짧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는 비교대상 27개국 중 8번째로 커서, 한국은 가사노동 참여에 있어서 남녀 간 불균형이 심한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남녀 간 불균형은 가정 내에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변화와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일과 가족역할을 전담하는 이중적 부담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태도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족시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아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시간에 할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녀 간 불균형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가사노동종류별 가사노동시간, 1999-2009

(분)

	1999			2004			2009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전체	306	36	270	294	39	255	293	46	247
가정관리	238	25	213	224	26	198	224	32	192
가족보살피기	68	11	57	70	13	57	69	1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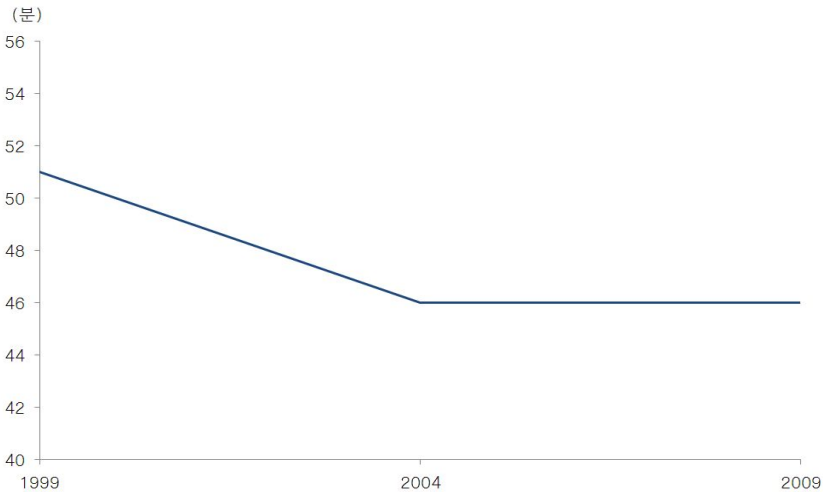
주: 1) 가사노동시간은 20세 이상 기혼 남녀가 1일 평균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임.

2) 2009년 자료는 연 2회(3월 및 9월)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이며, 1999년과 2004년 자료는 연 1회(9월 실시)조사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가족시간, 1999-2009



주: 1) 가족시간은 10세 이상 인구의 1일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으로, 가족과의 식사와 가족 및 친척과의 교제에 사용된 시간이 포함됨. 가족에는 직계가족과 4촌까지의 친인척이 포함됨(단, 배우자 쪽과 본인이 가까운 친척으로 생각하는 경우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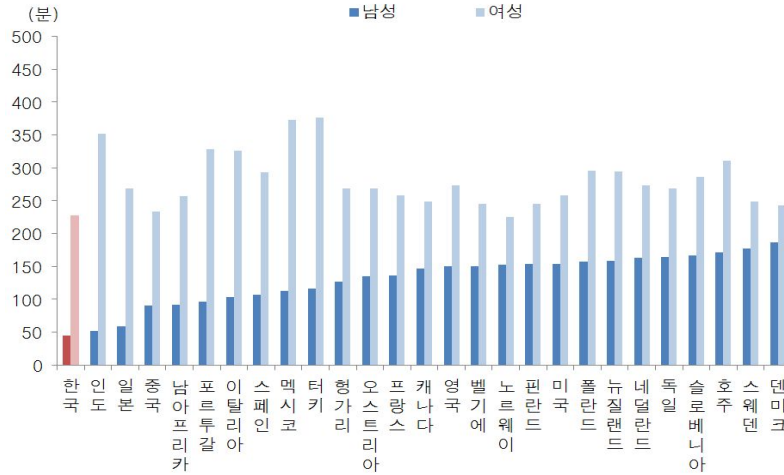
2) 2009년 자료는 연 2회(3월 및 9월)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이며, 1999년과 2004년 자료는 연 1회(9월 실시)조사한 결과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9	2004	2009
가족시간	51	46	46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2000년대



주: 1) 가사노동시간은 1일 평균 사용시간으로 일상적인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 이외에도 쇼핑, 가구 원돌봄, 비가구원돌봄, 자원활동, 가사관련이동 등에 사용한 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2) 유럽의 국가와 한국은 20세 이상, 일본은 10세 이상, 캐나다와 미국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함.
 3)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1999년 자료, 핀란드, 헝가리, 남아프리카는 2000년 자료, 덴마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은 2001년 자료, 독일은 2002년 자료, 이탈리아, 스페인은 2003년 자료, 폴란드는 2004년 자료, 벨기에, 캐나다는 2005년 자료, 호주, 네덜란드, 일본, 터키는 2006년 자료, 중국, 미국은 2008년 자료, 오스트리아, 한국, 멕시코는 2009년 자료임.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2011.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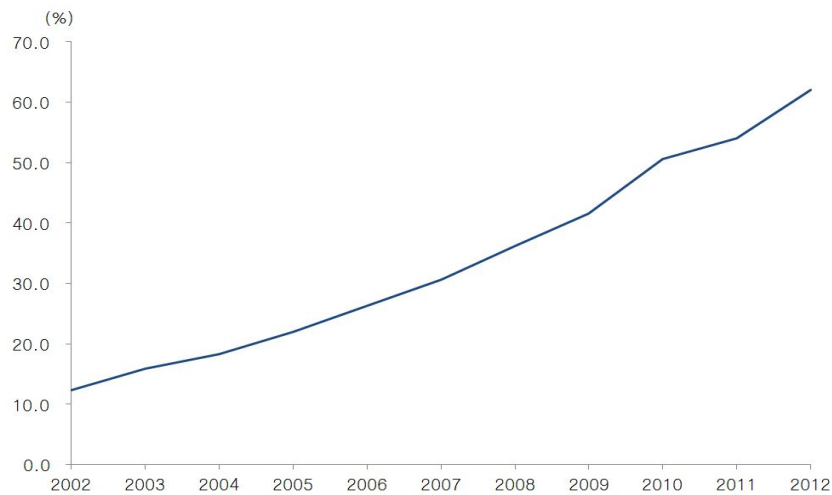
국가	남성	여성	국가	남성	여성	국가	남성	여성
한국	45	227	터키	116	377	미국	154	258
인도	52	352	헝가리	127	268	폴란드	157	296
일본	59	269	오스트리아	135	269	뉴질랜드	158	294
중국	91	234	프랑스	136	258	네덜란드	163	273
남아프리카	92	257	캐나다	146	248	독일	164	269
포르투갈	96	328	영국	150	273	슬로베니아	166	286
이탈리아	103	326	벨기에	151	245	호주	172	311
스페인	107	294	노르웨이	152	225	스웨덴	177	249
멕시코	113	373	핀란드	154	245	덴마크	186	243

2.2.4. 가족돌봄

22407. 어린이집이용률

■ 주요지표

영아 어린이집이용률, 2002-2012



주: 1) 영아 어린이집이용률은 영아(만 0-2세) 인구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2세)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영아 어린이집이용률은 영아인구(만 0-2세)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의 비율임
- 측정 방법: 보건복지부가 반기마다 집계하는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의 연말 기준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아동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영아 어린이집 이용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수 ÷ 만 0-2세 주민등록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가족 기능의 전반적 축소 및 사회적 이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별 가족 내에서 여성들이 주로 수행해 왔던 돌봄의 사회화가 두드러진다.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와 가족의 소규모화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가족의 돌봄 제공 자원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시되는 출산율의 저하도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 그 중에서도 자녀 돌봄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으면 돌봄의 질(quality) 저하나 역할 과중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

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집 이용률은 자녀 돌봄 기능을 지원해주는 시설의 가용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혼여성 및 자녀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만 0세부터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은 유치원을 이용할 수 없고 어린이집만이 가용한 돌봄 지원시설인 연령대 자녀들에 대한 돌봄의 사회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돌봄 기능의 사회화가 적절히 보장될 때, 여성의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가능하고 저출산 문제의 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해설

영아(만0세-2세)의 어린이집이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2002년 전체 영아 중 약 12%가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반면, 2012년에는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약 62%로 나타난다. 만 0세의 경우 2002년 약 2%에 불과했던 어린이집이용률이 10년 사이에 약 38%까지 증가하였고, 만 1세의 경우 2010년 어린이집이용률이 50%를 넘었고, 2012년에는 만 1세 어린이의 68%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였다. 만 2세는 이미 2007년에 과반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였고 2012년에는 이용률이 약 80%정도까지 높아졌다.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육아휴직자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 내에서의 돌봄 기능 강화 움직임도 보인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도 늘고 있어서 2012년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는 모두 1,790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는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신청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12년 2.8%에 불과하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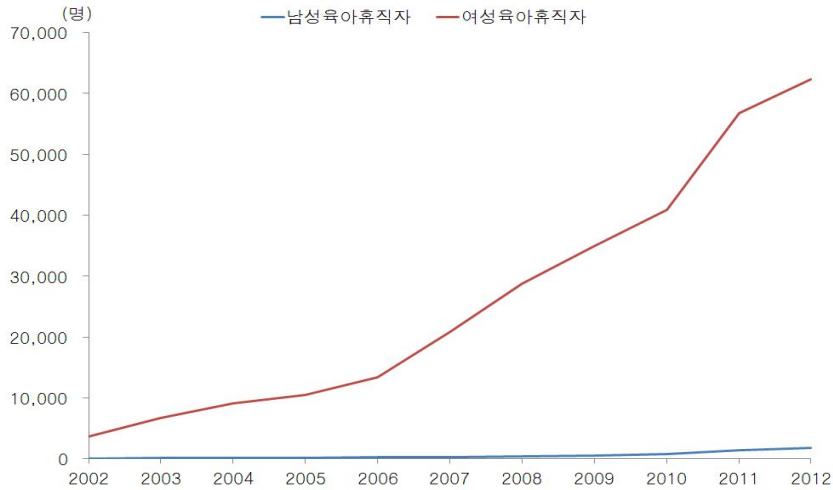
영아의 연령별 어린이집이용률, 2002-201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2.4	15.9	18.3	22.0	26.3	30.7	36.3	41.6	50.5	54.1	62.0
만0세	2.5	3.1	4.8	8.1	10.9	14.7	22.3	25.3	27.9	32.5	38.3
만1세	10.2	13.6	15.0	19.0	23.7	27.5	32.6	42.8	51.7	53.1	68.1
만2세	21.6	28.7	34.0	36.5	42.6	51.2	54.2	54.4	71.2	77.0	79.2

주: 1) 영아 어린이집이용률은 영아(만 0-2세) 인구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2세)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년도.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 보조지표

성별 육아휴직자수, 200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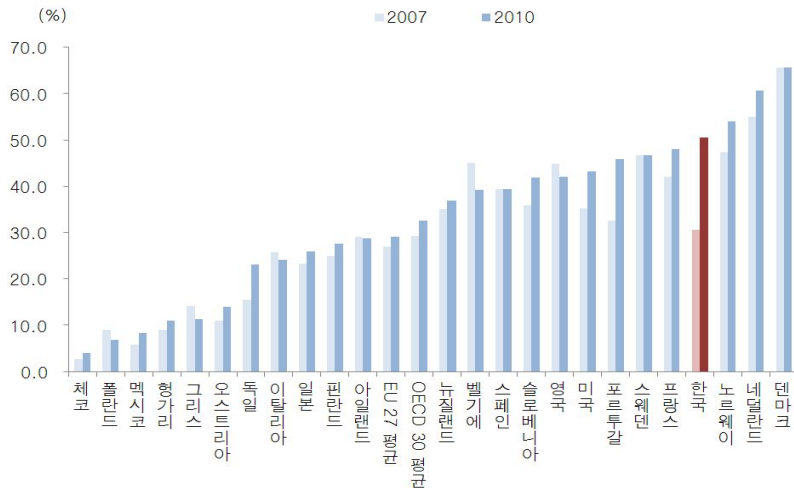
주: 1) 육아휴직자수는 해당년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수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여성	3,685	6,712	9,123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남성	78	104	181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영아 어린이집이용률, 2007, 2010



주: 1) 영아 어린이집이용률은 해당 국가 영아(만 0-2세) 인구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2세)의 비율임.
2)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을 포함함.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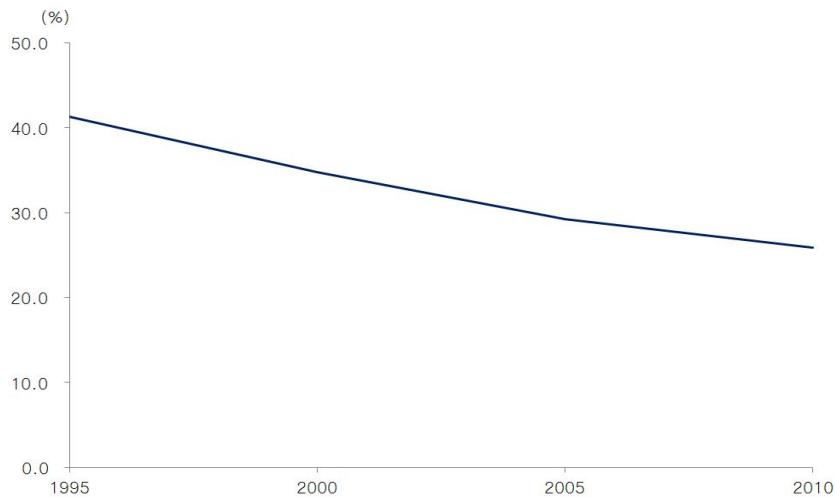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2007	2010	국가	2007	2010	국가	2007	2010
체코	2.6	4.0	핀란드	25.0	27.7	미국	35.2	43.2
폴란드	9.1	6.9	아일랜드	29.0	28.8	포르투갈	32.5	45.9
멕시코	5.9	8.3	EU27평균	27.0	29.0	스웨덴	46.7	46.7
헝가리	9.0	10.9	OECD30평균	29.3	32.6	프랑스	42.0	48.0
그리스	14.2	11.3	뉴질랜드	35.1	36.8	한국	30.6	50.5
오스트리아	10.9	13.9	벨기에	45.0	39.2	노르웨이	47.3	54.0
독일	15.5	23.1	스페인	39.3	39.3	네덜란드	54.9	60.6
이탈리아	25.8	24.2	슬로베니아	35.9	41.8	덴마크	65.7	65.7
일본	23.2	25.9	영국	44.8	42.0			

22408. 노인과 자녀 동거비율

■ 주요지표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 1995-2010



주: 1)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고령자 10% 표본자료,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부문 고령자 10% 표본 자료 중 성, 세대구성 및 연령별 고령자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자수는 세대구성이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편부모’, ‘부부+자녀+부부의형제자매’, ‘4세대 이상’ 등의 고령자수를 을 합한 값임.
노인의 자녀와 동거비율 =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인구 ÷ 전체 65세 이상 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고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노년기에 자녀와의 동거는 노인의 삶의 질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 노년기 거주유형은 부모부양에 대한 규범과 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세대의 필요와 자원 등 복합적 요인이 고려되는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노인과 자녀세대의 지원교환이나 상호접촉은 거주단위의 범위 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공간을 달리할 때 돌봄의 성격이나 정도는 동거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특히 신체적 의존성이 증가하고 건강악화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 될 때 대체로 함께 사는 가족들에 의해 충족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대 간 동거 여부는 노인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 해설

65세 이상 인구 중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은 9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5년에는 노인의 약 41%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2000년 34%, 2005년 29%, 2010년 25%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반면 노인 1인 가구와 노인 부부가구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1995년에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데 비하여 2010년에는 노인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졌다.

노인의 동거가족유형의 변화는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부모의 노후 생계에 대해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08년 40.7%에서 2012년 33.2%로 5년 사이에 대폭 감소하였다. 대신에 가족과 정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었음을 다양한 사회조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가족 규범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 가구의 증가를 젊은 세대의 부양의지 약화로 인한 확대가족의 붕괴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의 의식이 독립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건강과 경제력 등 독립 주거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가진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증가가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든, 중요한 사실은 연령증가와 함께 이들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돌봄이 요구되는 시점을 대비한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과 지역사회, 국가가 노인 돌봄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협력, 분담하는 다양한 방안과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 상세 통계표

노인의 동거가족구성, 1995-2010

연도	세대구성별 노인 비율(%)				65세 이상 인구 (명)
	1인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1995	13.3	22.7	41.3	22.7	2,623,853
2000	16.2	27.9	34.8	21.1	3,346,821
2005	18.1	32.2	29.2	20.4	4,315,415
2010	20.2	33.9	25.9	20.0	5,283,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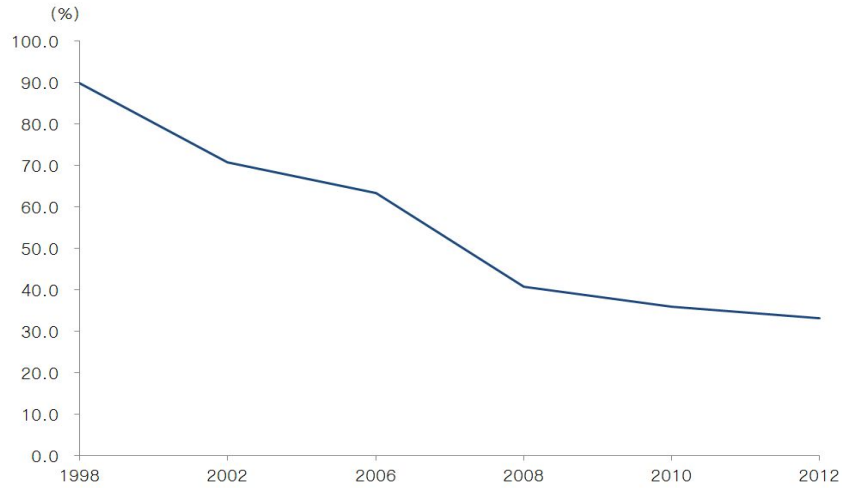
주: 1) 자녀동거가구에는 세대구성이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편부모', '부부+자녀+부부의형제자매', '4세대 이상'인 가구 등이 포함됨.

2) 기타에는 '1세대가구', '부부+양친', '부부+한부모', '조부모+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손자녀', '2세대기타', '3세대기타', '비친족가구' 등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고령자 10% 표본자료, 각 년도.

■ 보조지표

부모부양의무 수용률, 1998-2012



주: 1) 부모부양의무 수용률은 전체 조사대상인구(2010년까지는 만 15세 이상 인구, 2012년부터는 만 13세 이상 인구) 중 부모의 노후 생계를 자녀(가족)가 돌보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8	2002	2006	2008	2010	2012
부모부양의무수용률	89.9	70.7	63.4	40.7	36	33.2

■ 국제비교지표 (없음)

2.3.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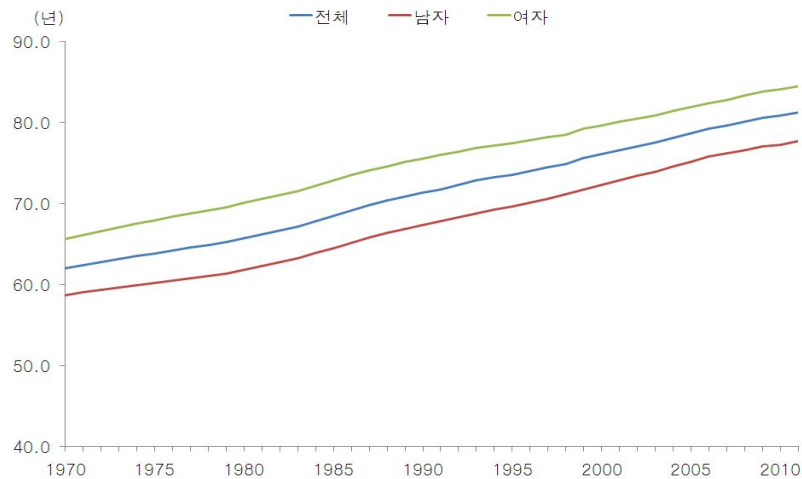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건강	건강상태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건강인지율		• 건강인지율
	건강결정 요인	• 흡연율	• 간접흡연율 • 청소년흡연율	• 흡연율
		• 음주율	• 1인당 알코올소비량	• 1인당 알코올소비량
		• 신체활동실천율	• 걷기실천율	• 신체활동실천율
		• 비만율		• 비만율
	보건의료 서비스	•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인구 1,000명당 병상수 •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인구 1,000명당 병상수 •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암생존율	• 대장암생존율 • 유방암생존율	• 대장암생존율 • 유방암생존율
		• DPT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 DPT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2.3.1. 건강상태

23101. 기대수명

■ 주요지표

성별 기대수명, 1970-2011



주: 1)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임. 통상 '평균수명'으로도 불림.
- 측정 방법: 통계청이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매년 작성하는 「생명표」의 '연령별 기대여명' 중 '0세의 기대여명'으로 산출함. 생명표란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어떤 출생 집단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령별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정리한 표임.

● 지표 의의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사망과 질병 수준으로 구성될 수 있다. 사망수준은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기대수명이 사용된다. 기대수명은 영아사망률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구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기대수명은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0세의 기대여명'으로 지칭된다.

● 해설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2011년 81.2세로 1970년의 61.9세에 비해 19.3년이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2011년 현재 한국 여자의 기대수명은 84.5세로 남자의 77.7세에 비해 6.8년이나 길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50년에서 55년 사이에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불과 47.9세였으며, 당시 스웨덴과 비교 시 23.8년이나 차이가 났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10년에 들어서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세까지 상승하여 세계의 여타 선진국들과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단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의 양적 발전을 이루었음을 보여준다.

평균수명이 양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건강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라면, 건강수명은 삶의 질을 건강의 측면에서 나타내는 지표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원활히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나머지 수명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살 수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2년 68세에서 2007년 71세로 5년 사이에 3년간량 향상되었다. 2007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9.6세로서 건강수명과는 8.6년 정도 차이가 나며, 그 차이의 폭은 2002년의 9.0년에 비해 1년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한국인의 삶의 질이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세계적 수준에서 봤을 때 부족하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국가들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과는 5년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역시 2007년 기준으로 일본 7년, 스위스 7.6년, 독일 7.5년 등으로 한국의 격차가 1년 정도 크다. 이는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평균수명보다 건강수명에서 더 크게 차이가 난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 사회는 양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건강의 질적 측면은 양적인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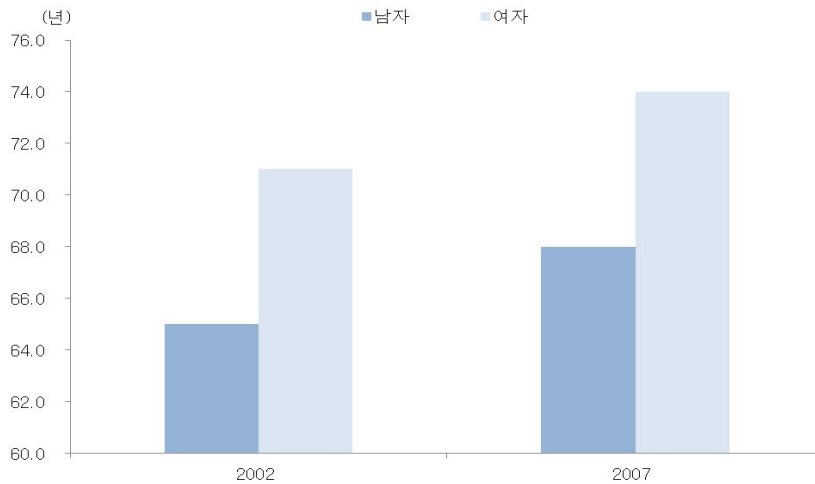
성별 기대수명, 1970-2011

	(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전체	61.9	63.8	65.7	68.4	71.3	73.5	76.0	78.6	80.8	81.2
남자	58.7	60.2	61.8	64.5	67.3	69.6	72.3	75.1	77.2	77.7
여자	65.6	67.9	70.0	72.8	75.5	77.4	79.6	81.9	84.1	84.5

주: 1) 기대수명은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성별 건강수명, 2002,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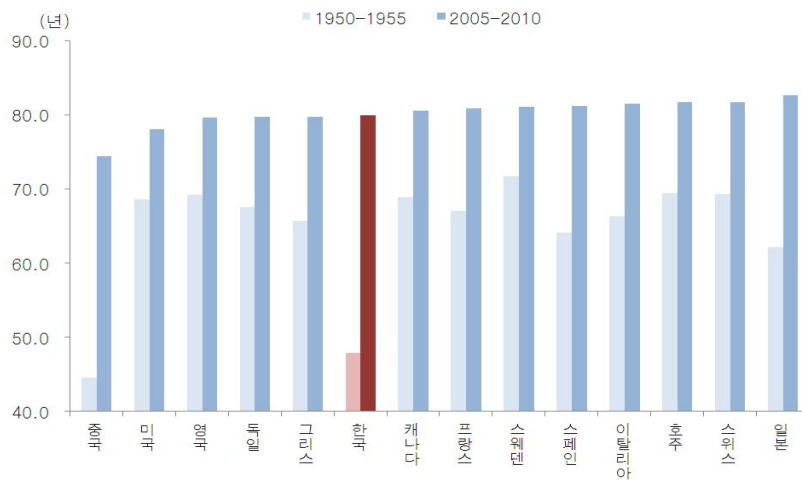
주: 1)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한 수명임.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04, 2009.

통계표

	2002	2007
전체	68	71
남자	65	68
여자	71	74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기대수명, 1950-1955, 200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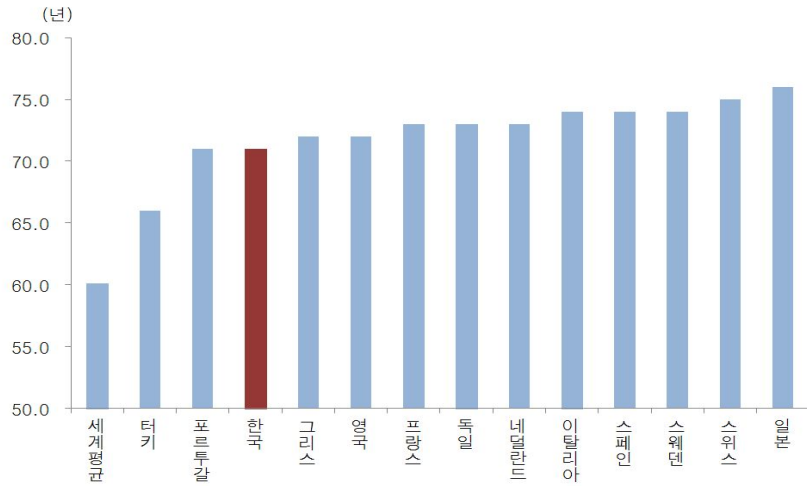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2.

통계표

	일본	스위스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한국	그리스	독일	영국	미국	중국
1950-1955	62.2	69.3	69.4	66.3	64.2	71.7	67.1	68.9	47.9	65.7	67.5	69.3	68.6	44.6
2005-2010	82.7	81.8	81.7	81.5	81.2	81.1	80.9	80.5	80.0	79.8	79.8	79.6	78.1	74.4

주요국의 건강수명, 2007



주: 1)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한 수명임.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09,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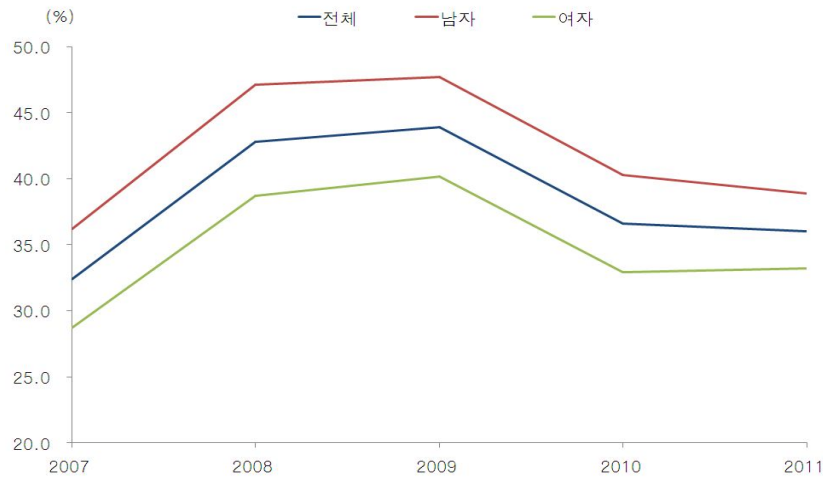
통계표

	세계 평균	터키	포르 투갈	한국	그리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 란드	이탈 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일본
건강 수명	60.1	66.0	71.0	71.0	72.0	72.0	73.0	73.0	73.0	74.0	74.0	74.0	75.0	76.0

23102. 건강인지율

■ 주요지표

성별 건강인지율, 2007-2011



주: 1) 건강인지율은 성인 인구(만19세 이상) 중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임.
 2) 각 년도의 건강인지율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건강인지율은 성인 인구(만 19세 이상) 중 평소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관적 건강상태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산출함. 설문문항은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에게 “평소 ○○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text{건강인지율} = (\text{'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수} \div \text{만19세 이상 조사대상자수}) \times 100.$$

● 지표 의의

건강인지율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다. 보통 건강상태는 객관적으로는 사망과 질병의 수준을 측정하여 파악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적 진단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건강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진단되기 이전의 단계이지만 심리사회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이와 같이 불건강한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중요해졌고 따라서 건강상태를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수준을 측정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 해설

2011년 현재 건강인지율은 36.0%이고 남자 38.9%, 여자 33.2%로 남자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인지율은 약 32%에서 44%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다. 즉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것은 OECD 국가들이 대체로 70% 이상인 것과 크게 대비된다. 즉 한국의 경우 객관적 건강 지표인 기대수명의 경우에는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만 건강인지율은 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에 속한다. 즉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객관적 건강수준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주관적으로 건강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 상세 통계표

성, 연령집단별 건강인지율,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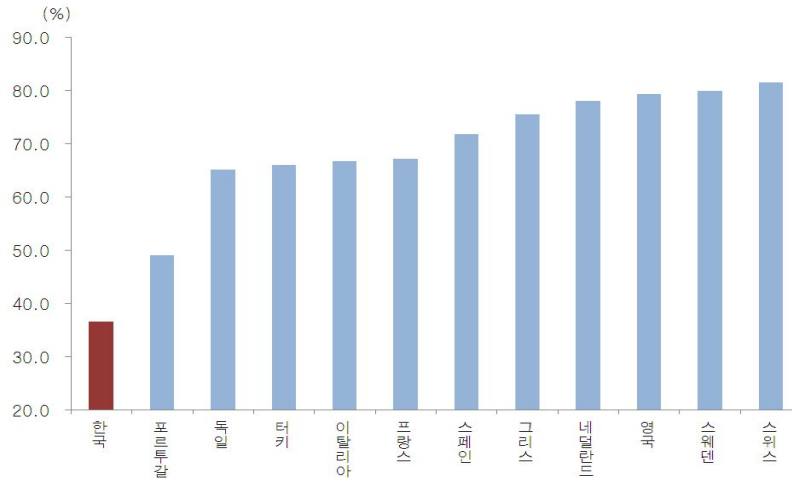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32.4	42.8	43.9	36.6	36.0
성					
남자	36.2	47.1	47.7	40.3	38.9
여자	28.7	38.7	40.2	32.9	33.2
연령집단					
19-29세	36.6	52.8	52.5	43.4	44.9
30-39세	35.2	41.6	42.8	39.8	34.6
40-49세	31.6	43.6	45.3	34.4	37.1
50-59세	30.9	37.6	40.7	31.5	32.9
60-69세	26.9	35.2	37.7	32.1	27.3
70세 이상	22.8	33.6	31.3	27.9	27.1

주: 1) 건강인지율은 성인 인구(만19세 이상) 중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건강인지율, 2010



주: 1) 건강인지율은 전체 인구 중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임. 한국은 만 19세 이상, 그 외 유럽국가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 201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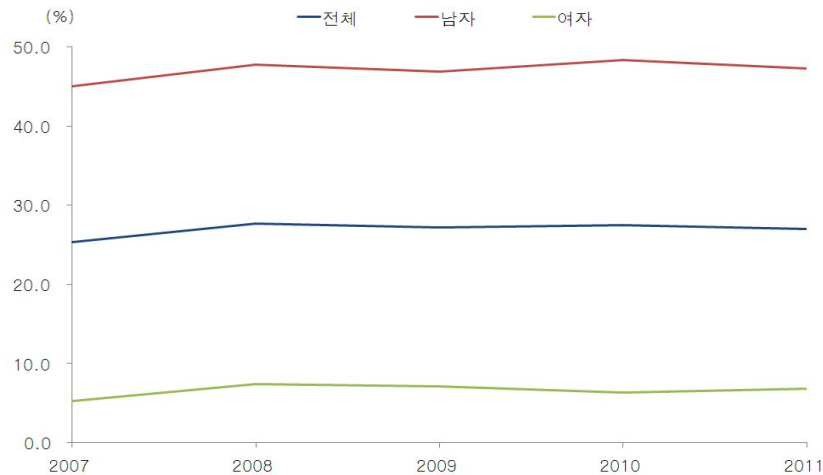
	한국	포르투갈	독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스위스
건강인지율	36.6	49.1	65.2	66.0	66.8	67.2	71.8	75.5	78.0	79.4	80.0	81.5

2.3.2. 건강결정요인

23203. 흡연율

■ 주요지표

성별 흡연율, 2007-2011



주: 1) 흡연율은 성인 인구(만 19세 이상)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임. 현재 흡연자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며,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흡연율은 성인 인구(만 19세 이상)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임. 현재 흡연자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임.
- 측정 방법: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흡연 관련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산출함. 설문문항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흡연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에게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일 피움’, ‘가끔 피움’,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으로 구성되었음.

$$\text{흡연율} = (\text{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 \div \text{만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수}) \times 100.$$

● 지표 의의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많은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흡연이 단지 개인적인 기호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을 하게 되는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피해를 가하는 주요 건강결정요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흡연자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흡연율을 파악하는 것은 국민 건강 평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해설

2011년 성인 흡연율은 27%이며 남자 47.3%, 여자 6.8%로 성별 차이가 매우 크다. 1990년대에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았으나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강력한 건강증진 및 금연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흡연율 감소가 정체되어 있고 2010년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도 발생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의 흡연율이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제적으로는 유럽 선진국들의 흡연율이 대체로 15-20%인 점과 비교할 때(OECD 2011년 평균: 18.4%) 한국의 흡연율은 높은 편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점도 우리와 다른 양상이다. 흡연율 통계의 경우 여성 흡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의 이유로 여성 흡연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됨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제 여성 흡연율은 통계로 드러난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흡연율과 가정 내 간접 흡연율의 경우 지난 5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2011년에는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율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가정 내 간접 흡연율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11.8%(2011년) 높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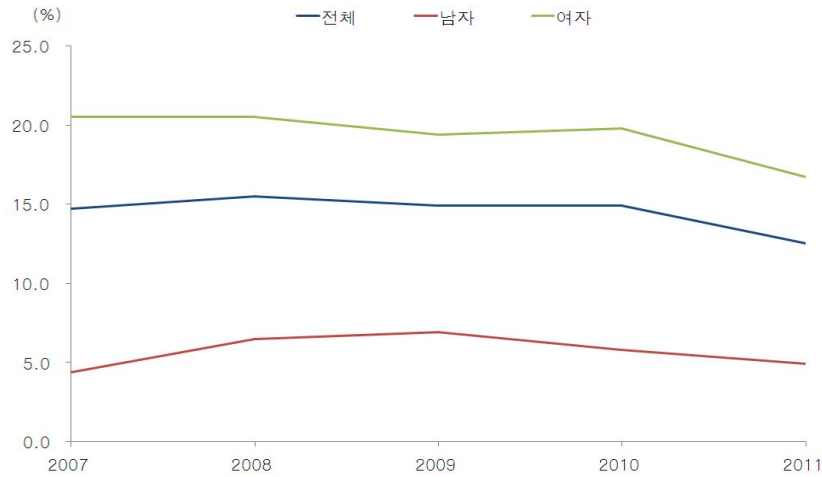
성, 연령집단별 흡연율, 2007-2011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5.3	27.7	27.2	27.5	27.0
성					
남자	45.0	47.7	46.9	48.3	47.3
여자	5.3	7.4	7.1	6.3	6.8
연령집단					
19-29세	27.8	33.9	32.4	27.8	28.3
30-39세	32.0	32.4	32.8	35.0	36.6
40-49세	27.0	27.7	27.5	30.5	25.7
50-59세	19.3	22.5	22.9	25.1	24.5
60-69세	17.0	18.8	18.4	16.1	17.5
70세 이상	12.8	16.0	13.2	12.6	14.3

주: 1) 흡연율은 성인 인구(만 19세 이상) 중 현재 흡연자의 비율임. 현재 흡연자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으며,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성별 가정 내 간접흡연율,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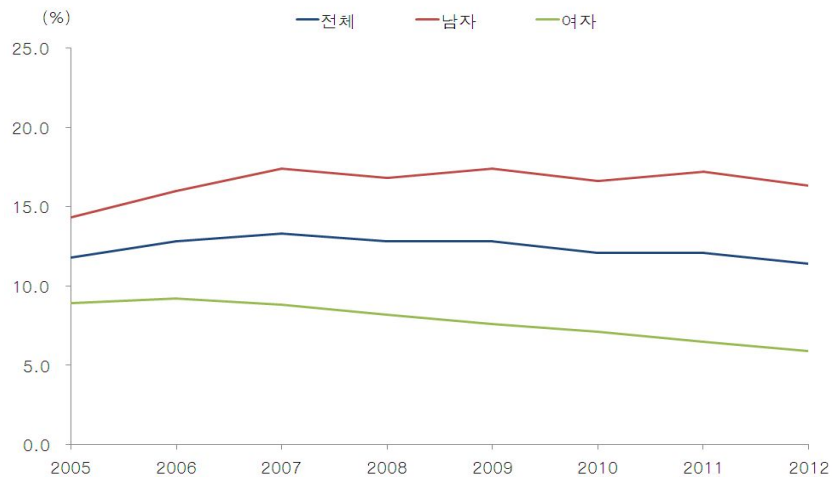
주: 1) 간접흡연율은 성인 인구(만 19세 이상) 중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가정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4.7	15.5	14.9	14.9	12.5
남자	4.4	6.5	6.9	5.8	4.9
여자	20.5	20.5	19.4	19.8	16.7

성별 청소년 흡연율, 2005-2012



주: 1) 청소년 흡연율은 청소년(중1-고3) 중 조사시점 기준 지난 30일 이내에 1회 이상 흡연한 청소년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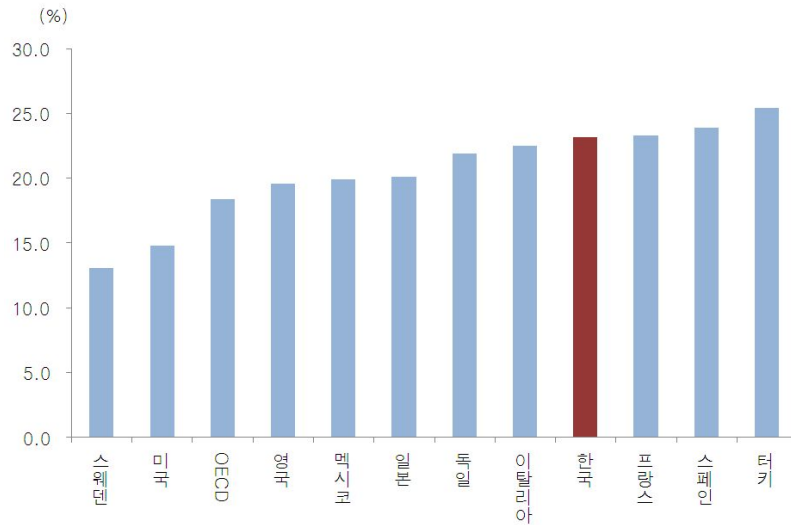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11.4
남자	14.3	16	17.4	16.8	17.4	16.6	17.2	16.3
여자	8.9	9.2	8.8	8.2	7.6	7.1	6.5	5.9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흡연율, 2011



주: 1) 흡연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임.

2) 독일은 2009년, 영국, 터키, 프랑스는 2010년, 멕시코는 2012년, OECD 평균은 2011년 수치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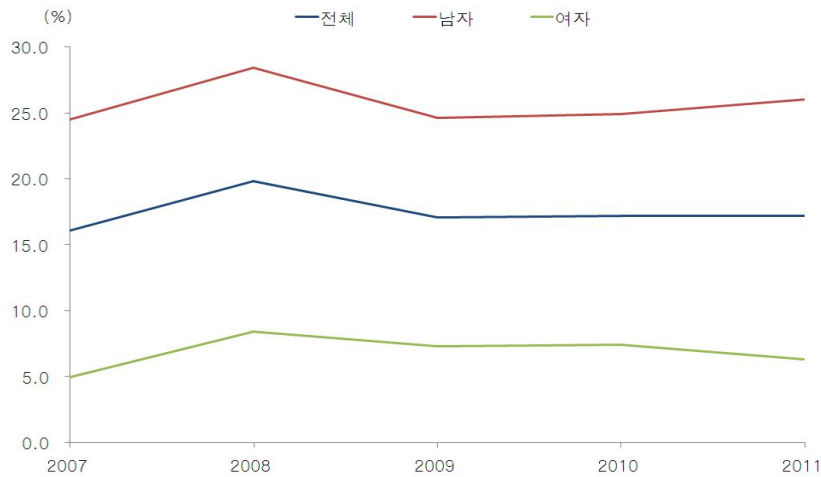
통계표

	스웨덴	미국	OECD	영국	멕시코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	프랑스	스페인	터키
흡연율	13.1	14.8	18.4	19.6	19.9	20.1	21.9	22.5	23.2	23.3	23.9	25.4

23204. 음주율

■ 주요지표

성별 위험음주율, 2007-2011



주: 1) 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 만19세 이상 인구 중 주 2회 이상 음주하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임.

2) 각 년도의 음주율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 만19세 이상 인구 중 주 2회 이상 음주하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음주 관련 설문문항 중 최근 1년 동안의 '음주빈도'와 '1회 평균 음주량' 문항을 이용하여 산출함. 위험음주자는 '1회 음주량'은 주종에 관계없이 각각의 술잔으로 측정되었음.

$$\text{위험음주율} = (\text{주 2회 이상 음주하며, 1회 음주 시 7잔(여자 5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만 19세 이상 수} \div \text{최근 1년 동안 음주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수}) \times 100.$$

● 지표 의의

소량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음은 흡연 못지않게 건강에 위해를 가한다. 한국사회에서 음주에 대해 문화적으로 매우 관용적이기 때문에 음주율이 남녀 모두에게서 높고, 과음하는 경우도 많다. 위험음주율은 보건학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음주의 기준을 음주횟수와 음주량을 고려하여 정하며, 소주 1병 분량의 술을 1주 2회 이상 마실 경우 고위험음주로 규정된다.

● 해설

2011년 위험음주율은 17.2%였고 남자 26.0%, 여자 6.3%로 성별 차이가 컸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50대까지 경제활동인구에서 고위험음주가 많았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19.8%로 상승한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약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을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 1인당 약 9리터까지 소비량이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OECD 평균(2011년 9.1리터)에 근접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과 일본, 멕시코, 터키 등은 한국보다 적었고, 영국과 프랑스 등은 더 많았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연령집단별 위험음주율, 2007-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
전체	16.1	19.8	17.1	17.2	17.2
성					
남자	24.5	28.4	24.6	24.9	26.0
여자	5.0	8.4	7.3	7.4	6.3
연령집단					
19-29세	13.1	18.2	16.1	14.7	15.5
30-39세	19.0	20.4	18.3	21.0	21.9
40-49세	22.0	23.9	20.6	20.3	20.3
50-59세	14.5	24.2	18.5	18.6	19.0
60-69세	13.6	13.5	13.5	11.0	9.9
70세 이상	4.7	9.7	7.3	8.6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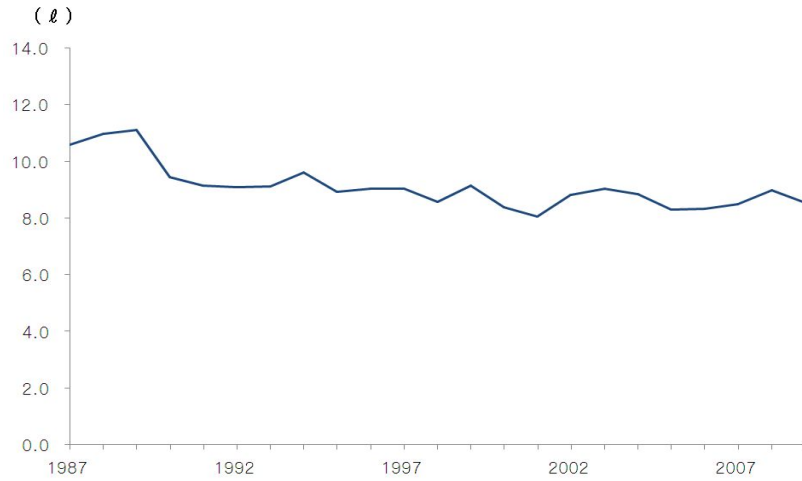
주: 1) 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 만19세 이상 인구 중 주 2회 이상 음주하며,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임.

2) 각 년도의 전체 음주율은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1인당 알코올소비량, 1987-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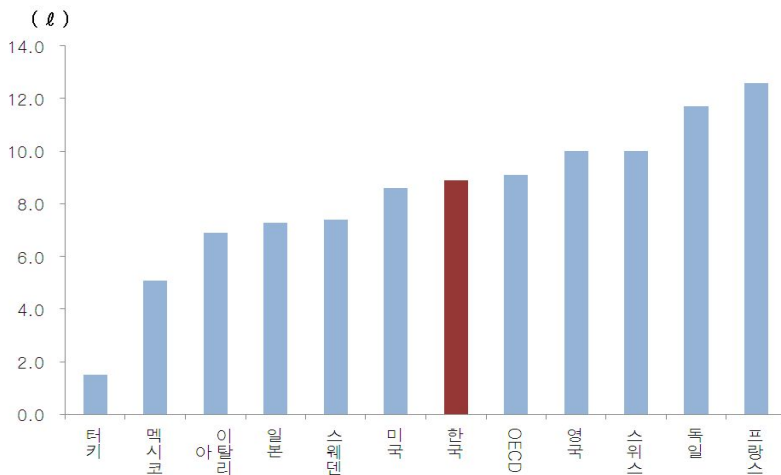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
 2) 1999년까지는 국내분 출고량 기준, 2000년부터는 국내분 출고량과 수입분 출고량을 모두 포함함.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 각 년도.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00-2007.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85-2005.

통계표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0.6	11.0	11.1	9.4	9.2	9.1	9.1	9.6	8.9	9.0	9.0	8.6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인당 알코올 소비량	9.1	8.4	8.0	8.8	9.0	8.8	8.3	8.3	8.5	9.0	8.5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1인당 알코올소비량, 2011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
 2) 독일과 이탈리아는 2009년, 미국은 2010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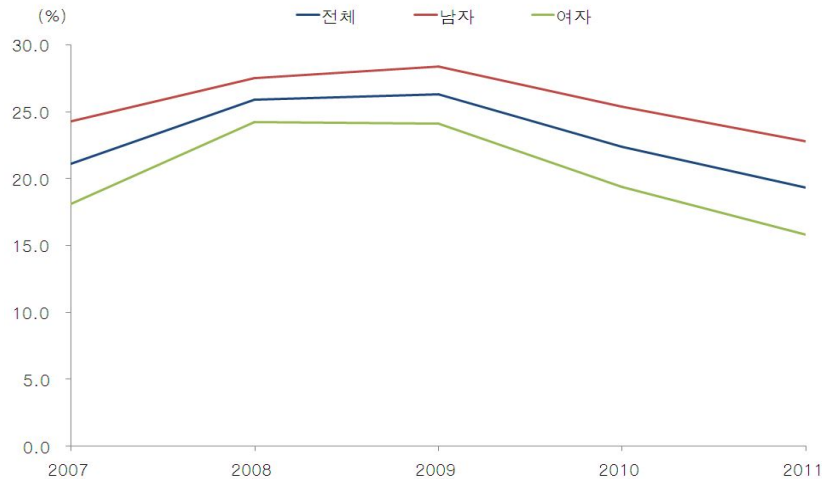
통계표

	터키	멕시코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미국	한국	OECD	영국	스위스	독일	프랑스
1인당 알코올 소비량	1.5	5.1	6.9	7.3	7.4	8.6	8.9	9.1	10	10	11.7	12.6

23205. 신체활동실천율

■ 주요지표

성별 신체활동실천율, 2007-2011



주: 1) 신체활동실천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신체활동실천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 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신체활동 관련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산출함. 신체활동실천율은 만19세 이상의 조사 대상자 중 ①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매우 가쁜 격렬한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이나”는 물음에 3일 이상이라고 대답하고, 이러한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루에 보통 20분 이상 했다고 대답했거나, ②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조금 힘들거나 숨이 약간 가쁜 중등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이나”는 물음에 5일 이상이라고 대답하고, 이러한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루에 보통 30분 이상 했다고 대답한 사람 수의 비율임

● 지표 의의

신체활동은 건강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신체활동은 대중적이란 측면에서 전문적인 운동(스포츠)과 차이가 있고, 신체 전반의 근육을 단련하고 심폐기능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제한된 동작만을 반복하는 노동과도 다르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스트레칭 등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일정한 강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해설

2011년에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9.3%였다. 여자 15.8%보다는 남자가 22.8%로 실천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를 통해 중년층의 건강관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26.3%를 정점으로 이후 약간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중등도 신체활동의 대안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걷기이다. 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걷기를 실천할 때 건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걷기 실천율도 2008년 46.9%를 정점으로 점차 하향하여 2011년에는 38.0%에 그쳤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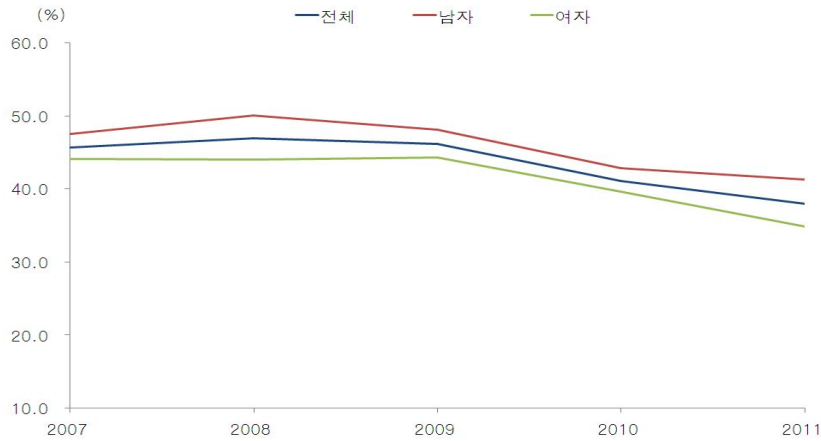
성 및 연령집단별 신체활동실천율, 2007-2011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1.1	25.9	26.3	22.4	19.3
성					
남자	24.3	27.5	28.4	25.4	22.8
여자	18.1	24.2	24.1	19.4	15.8
연령집단					
19-29세	21.2	25.5	27.8	24.6	18.3
30-39세	18.4	25.4	23.9	19.8	19.9
40-49세	25.8	26.5	28.1	23.3	22.2
50-59세	22.8	31.4	30.8	25.4	21.1
60-69세	22.3	25.6	24.9	22.4	16.7
70세 이상	9.8	16.5	16.8	15.1	11.2

주: 1) 신체활동실천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 또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성별 걷기실천율, 2007-2011



주: 1) 걷기실천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임. 각 년도의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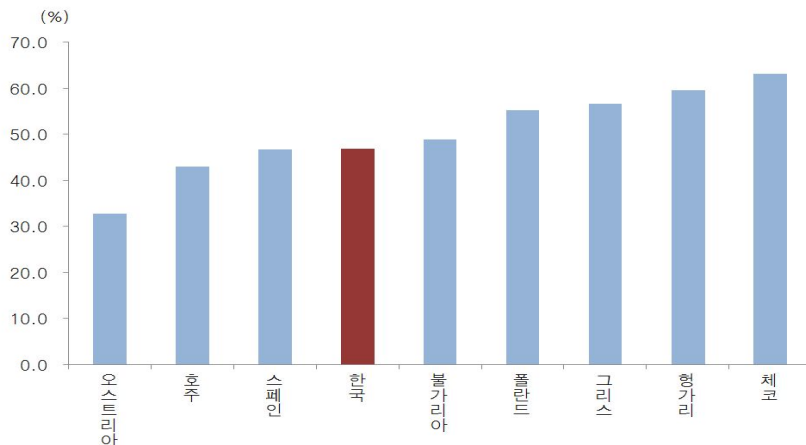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45.7	46.9	46.1	41.1	38.0
남자	47.5	50.0	48.1	42.8	41.3
여자	44.1	44.0	44.3	39.6	34.8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신체활동실천율, 2008



주: 1) 신체활동실천율은 성인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혹은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을 1일 총 30분 이상 실천했거나(유럽), 5회 150분 이상 실천(한국, 호주)한 사람의 비율임.

2) 외국의 경우 중등도 신체활동에 '걷기'가 포함되므로 한국 데이터에도 '걷기'를 포함시켰음.

3) 한국은 2011년, 호주는 2011-12년 수치, 그 외 국가들은 2008-2009년 수치를 08년으로 표시함.

4) 성인의 기준은 한국은 만19세, 호주는 18세, 그 외 국가들은 15세 이상임.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unity Health Indicators, 2009*.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ustralian Health Survey: Physical Activity, 2011-12*, 2012.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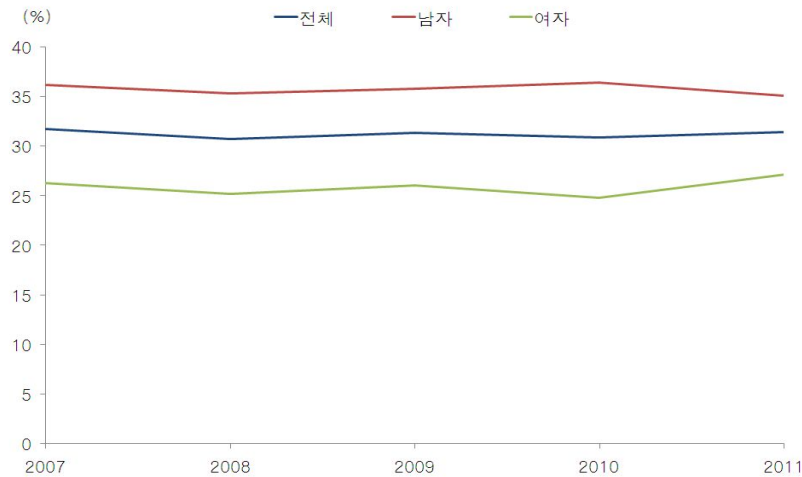
통계표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	한국	불가리아	폴란드	그리스	헝가리	체코
신체활동실천율	32.7	43	46.7	46.9	48.9	55.2	56.6	59.5	63.1

23206. 비만율

■ 주요지표

성별 비만율, 2007-2011



주: 1) 비만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이상인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비만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이상인 비율임.
- 측정 방법: 질병관리본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조사를 통한 직접 계측방식으로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비만율 = (체질량지수 25이상인 사람 수 ÷ 만19세 이상 조사대상수) × 100.

● 지표 의의

비만은 비교적 새롭게 형성된 건강위험 요인으로 가공식품 섭취의 증가와 영양의 과잉섭취, 그리고 신체활동의 부족 등 일상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발생하였다. 생활습관인 흡연이나 음주와는 달리 비만은 산업구조와 생활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기 때문에 개선이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아직 선진국만큼 비만율이 높지 않지만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 해설

한국의 2011년 현재 비만율은 31.4%이며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남자의 비만율이 35.1%로 여자의 비만율 27.1%보다 더 높다. 연령별로는 20대 21.7%, 30대에 31.5%, 40대에 35.4%, 50대에 35.7%, 60대에 38.8% 등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70대에 되어야 감소한다. 고연령층까지 비만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흡연이나 음주와는 다른 특징이다. 타 국가의 경우 남성 비만율이 미국 74.3%, 호주 70.3%, 영국 65% 등 인구의 2/3가 비만상태이고 OECD 평균도 53.5%로 절반을 넘고 있다. 한국은 33.7%로 서구 국가들보다 크게 낮다. 그러나 “서구식 생활방식”이 더 확산될수록 비만의 위험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 상세 통계표

성, 연령집단별 비만율,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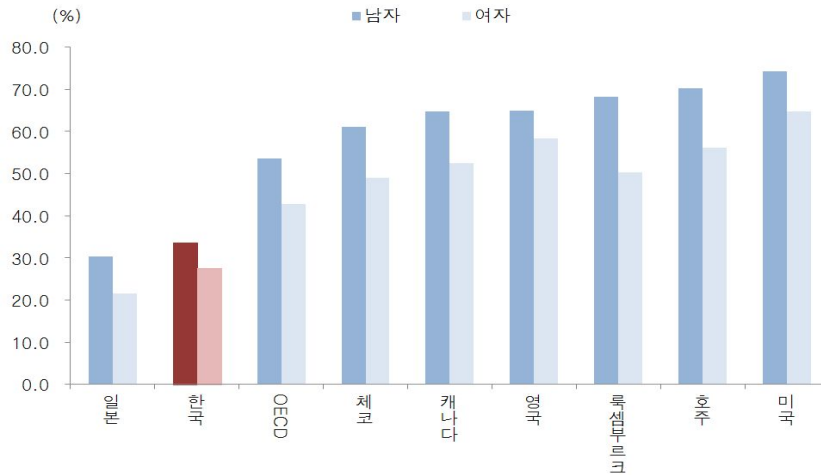
	(%)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31.7	30.7	31.3	30.9	31.4
성					
남자	36.2	35.3	35.8	36.4	35.1
여자	26.3	25.2	26.0	24.8	27.1
연령집단					
19-29세	22.0	23.0	22.1	20.5	21.7
30-39세	27.8	28.0	29.5	31.0	31.5
40-49세	32.5	34.4	34.7	34.1	35.4
50-59세	42.4	37.4	40.0	35.3	35.7
60-69세	46.2	37.2	37.0	40.7	38.8
70세 이상	31.7	29.3	31.1	30.6	29.7

주: 1) 비만율은 만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이상인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성별 비만율, 2011



주: 1) 비만율은 만15세 이상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이상인 비율임. 체질량지수는 직접 계측방식으로 측정되었음.

3) 체코, 캐나다, 미국은 2010, OECD 평균은 2011년 수치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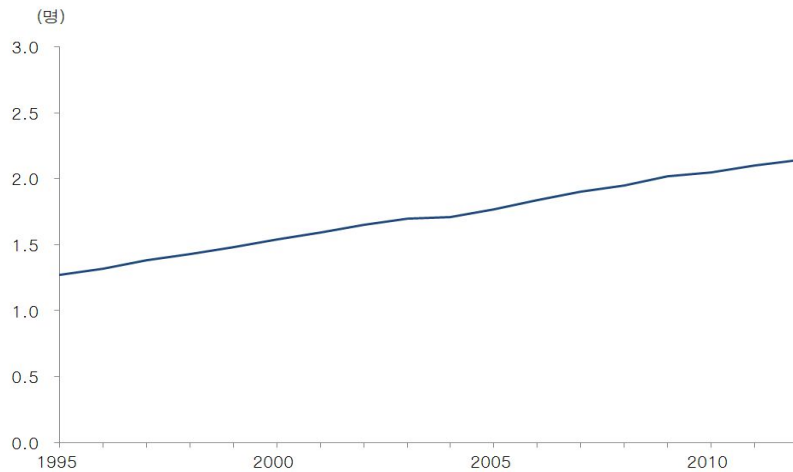
	일본	한국	OECD	체코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남자	30.3	33.7	53.5	61.0	68.2	64.8	70.3	65.0	74.3
여자	21.5	27.6	42.8	49.0	50.3	52.5	56.2	58.4	64.7

2.3.3. 보건의료서비스

23307.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주요지표

인구 1,000명당 의사수, 1995-2012



주: 1) 의사수는 면허의사 기준임.
2) 2004년 이후는 사망자 및 취소자를 제외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해당년도 연앙인구(7월 1일 기준) 1,000명당 의료법 제2조에 의거 해당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의 수입.
- 측정 방법: 보건복지부가 매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발표하는 면허의사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이때 연앙인구는 추계인구자료를 기준으로 함.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면허등록 의사 수 ÷ 추계인구) × 1,000.

● 지표 의의

의사 수는 의료복지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인구 당 의사수가 많을수록 의료복지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병원의 병상은 응급환자나 중증환자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는 병상 수의 증가가 의료복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서구에서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입원치료 기간이 단축되고, 또 정부의 의료비 억제 정책에 의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병상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간호사의 수 역시 증가할수록 의료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사의 수가 적을 경우 환자 가족이 간호의 부담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 해설

한국의 2012년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4명이다. 1995년에 1.27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2012년 시도별 의사수는 서울시가 3.56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광역시(3.01명), 대전광역시(2.96명), 대구광역시(2.82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세종시가 1.24명으로 가장 적다. 일반적으로는 의료 인력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2년에 약 12개로 OECD 평균(2011) 5.1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서구적 기준에서 보면 병상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의사와 간호사의 공급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1년 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활동의사 기준)가 3.2명인데 한국은 2.1명(2012)에 불과하였다. 간호사수(활동간호사 기준)도 OECD 평균(2011)이 8.7명인데 비해 한국은 4.8명(2012)에 불과하였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인구 1,000명당 면허 간호사 수에 비해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 수가 1.1명(2011)정도 적으며, 이는 간호사 인력 부족의 한 원인이 된다. 이처럼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의 노동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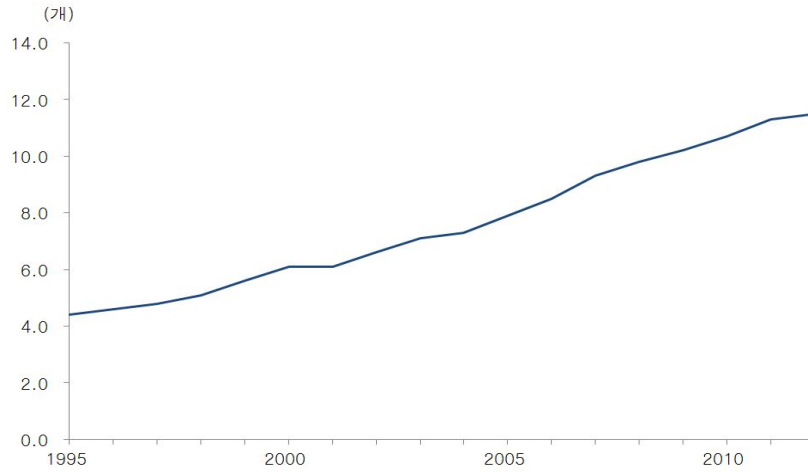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006-20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1.84	1.90	1.95	2.02	2.05	2.10	2.14
서울특별시	2.86	2.92	3.15	3.30	3.40	3.48	3.56
부산광역시	2.20	2.30	2.40	2.46	2.56	2.68	2.77
대구광역시	2.27	2.44	2.58	2.65	2.69	2.73	2.82
인천광역시	1.65	1.69	1.76	1.83	1.81	1.88	1.92
광주광역시	2.52	2.64	2.68	2.71	2.84	2.98	3.01
대전광역시	2.45	2.45	2.63	2.74	2.78	2.84	2.96
울산광역시	1.62	1.70	1.75	1.84	1.84	1.95	1.96
세종특별자치시	-	-	-	-	-	-	1.24
경기도	1.64	1.69	1.79	1.85	1.88	1.95	1.99
강원도	1.97	2.00	2.08	2.14	2.18	2.17	2.20
충청북도	1.70	1.73	1.81	1.89	1.91	1.95	1.97
충청남도	1.74	1.78	1.88	1.93	1.94	1.97	2.03
전라북도	2.15	2.16	2.29	2.41	2.43	2.45	2.49
전라남도	1.66	1.74	1.86	1.96	2.00	2.05	2.11
경상북도	1.53	1.56	1.62	1.69	1.72	1.76	1.80
경상남도	1.57	1.66	1.76	1.86	1.90	1.95	2.00
제주특별자치도	1.68	1.70	1.84	1.94	2.00	2.05	2.10

주: 1) 전체 통계는 면허의사수 기준이고, 시도별 통계는 의료기관종사 의사수(활동의사 수) 기준임.
 2) 2012년 자료는 세종시가 2012년 7월 출범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2.

■ 보조지표

인구 1,000명당 병상수, 199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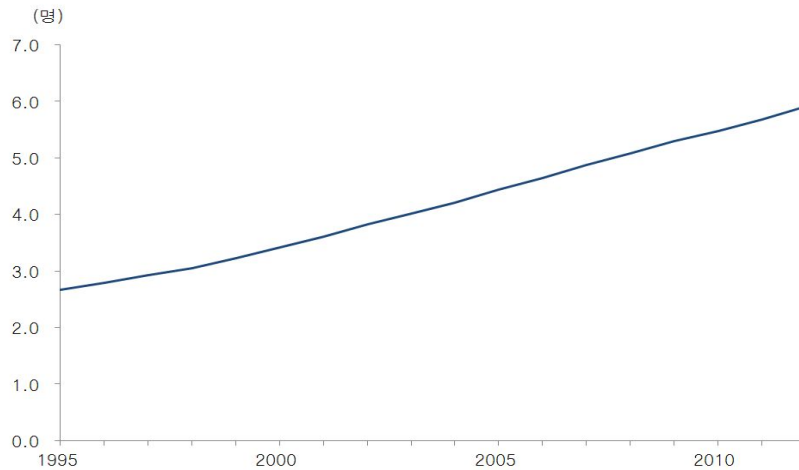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통계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구 1,000명당 병상수	4.4	4.6	4.8	5.1	5.6	6.1	6.1	6.6	7.1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구 1,000명당 병상수	7.3	7.9	8.5	9.3	9.8	10.2	10.7	11.3	11.5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1995-2012



주: 1) 간호사수는 면허간호사 기준임.
2) 2004년 이후는 사망자 및 취소자를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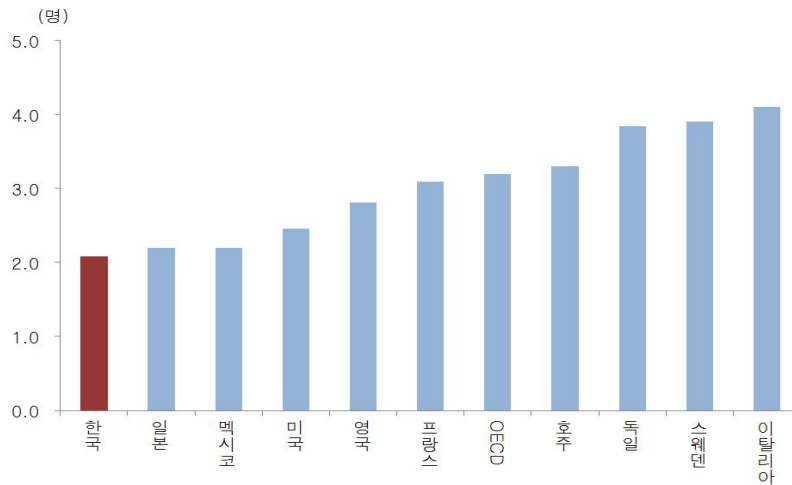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통계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2.7	2.8	2.9	3.1	3.2	3.4	3.6	3.8	4.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4.2	4.4	4.6	4.9	5.1	5.3	5.5	5.7	5.9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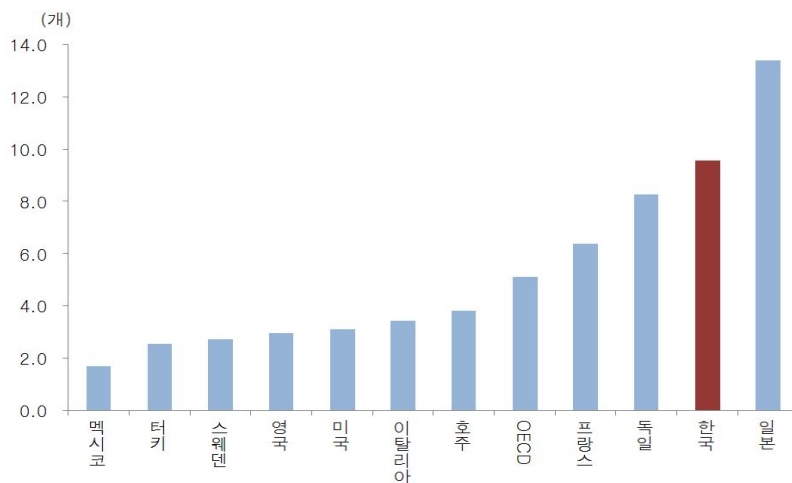


주: 1) 의사수는 활동 중인 의사(practising doctor) 기준임.
 2) 스웨덴과 일본은 2010년, 한국과 프랑스는 2012년 수치임. OECD 평균은 2011년 수치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통계표

	한국	일본	멕시코	미국	영국	프랑스	OECD	호주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1	2.2	2.2	2.5	2.8	3.1	3.2	3.3	3.8	3.9	4.1

OECD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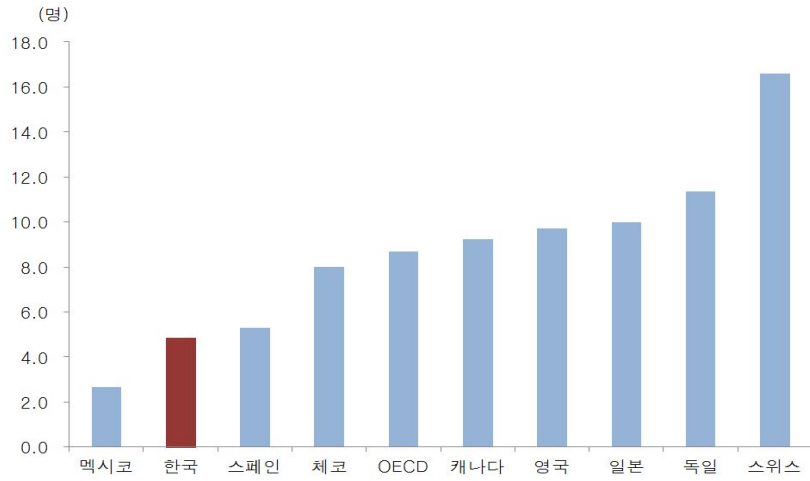


주: 1) 호주, 미국은 2010년, OECD 평균은 2011년 수치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통계표

	멕시코	터키	스웨덴	영국	미국	이탈리아	호주	OECD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인구 1,000명당 병상수	1.7	2.5	2.7	3.0	3.1	3.4	3.8	5.1	6.4	8.3	9.6	13.4

OECD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2011



주: 1) 간호사수는 활동 중인 간호사(practising nurse) 기준임.
 2) 영국과 일본은 2010년, 한국과 스페인은 2012년, OECD 평균은 2011년 수치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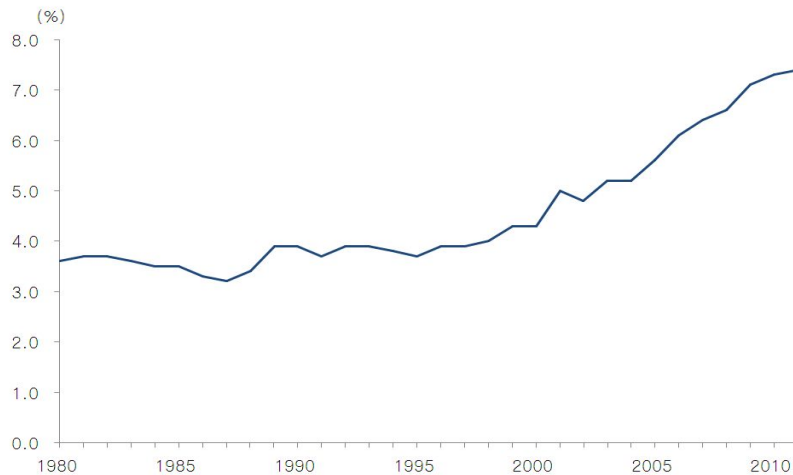
통계표

	멕시코	한국	스페인	체코	OECD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2.7	4.8	5.3	8.0	8.7	9.3	9.7	10.0	11.4	16.6

23308. 국민의료비

■ 주요지표

GDP 대비 국민의료비, 1980-2011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2012.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인 국민의료비를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임. 국민의료비는 개인의료비, 집합보건의료비, 자본형성으로 구성됨.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이고,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 등 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부문 지출이며, 자본형성은 병원, 보건소 등 시설비, 대형장비 구입비 등의 지출임.
- 측정 방법: 보건복지지부가 매년 작성하는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의 ‘국민의료비’를 이용하여 산출함.

$$\text{GDP 대비 국민의료비} = (\text{연간 국민의료비} \div \text{당해연도 GDP}) \times 100.$$

● 지표 의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의료복지의 지출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미국 처럼 GDP의 17%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여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서구 국가들은 10% 정도를 지출하여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고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의료비는 의료기술의 발전, 인구의 고령화, 의료이용의 정도 등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물가수준 이상의 상승률을 갖고 증가하기 때문에 각국은 의료비 억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해설

한국의 2011년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7.4%이다. 2001년에 5% 수준이었는데 10년 만에 7.4%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는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타 국가보다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머지않아 OECD 평균 9.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복지의 방향은 의료비를 공적 재원으로 조달하여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를 없애고, 치료비로 인한 가계파산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의 비중이 중요한데, 건강보험제도 실시 이후 공공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55.3%에 달하였다. 그런데 OECD 평균 71.5%나 서구국가들의 70%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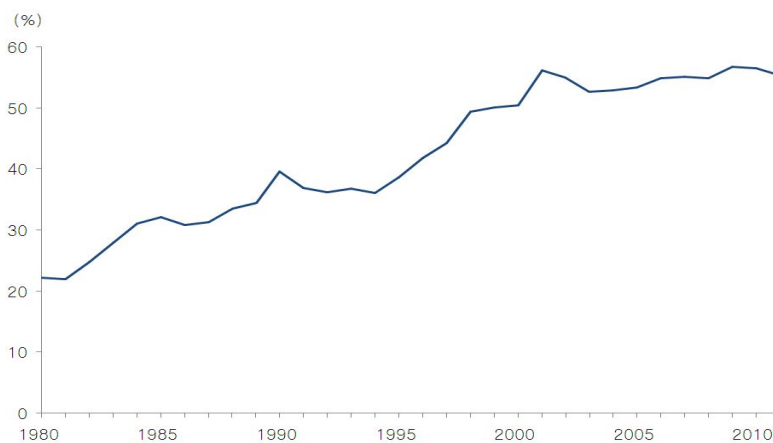
국민의료비 총액 및 GDP대비 비율, 1980-2011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민의료비 (조원)	1.4	3.0	7.4	15.3	26.1	32.3	34.6	39.6	43.1	48.7	55.5	62.3	67.6	75.6	85.5	91.2
GDP 대비 비율 (%)	3.6	3.5	3.9	3.7	4.3	5.0	4.8	5.2	5.2	5.6	6.1	6.4	6.6	7.1	7.3	7.4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2012.

■ 보조지표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198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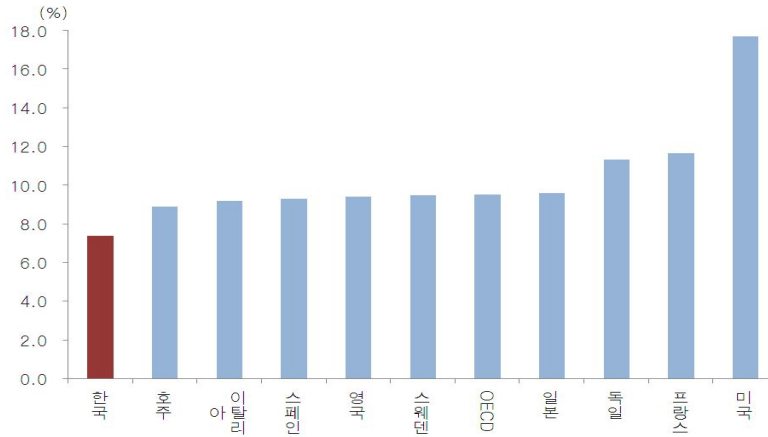
주: 1) 국민의료비 중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2011년도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2012.

통계표

연도	공공 의료비	연도	공공 의료비	연도	공공 의료비	연도	공공 의료비	연도	공공 의료비	연도	공공 의료비	연도	공공 의료비
1990	22.1	1985	32.1	1990	39.5	1995	38.6	2000	50.4	2005	53.3	2010	56.5
1981	21.9	1986	30.8	1991	36.9	1996	41.8	2001	56.1	2006	54.8	2011	55.3
1982	24.7	1987	31.3	1992	36.2	1997	44.2	2002	55.0	2007	55.1		
1983	27.9	1988	33.5	1993	36.8	1998	49.3	2003	52.6	2008	54.8		
1984	31.0	1989	34.4	1994	36.0	1999	50.1	2004	52.9	2009	56.7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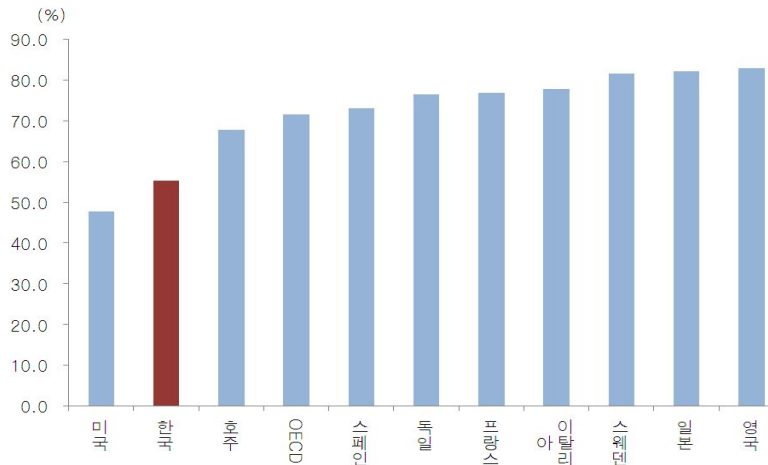


주: 1) 일본과 호주는 2010년 수치, OECD 평균은 2011년 수치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2*, 2012.

통계표

	한국	호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스웨덴	OECD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GDP 대비 국민의료비	7.4	8.9	9.2	9.3	9.4	9.5	9.5	9.6	11.3	11.6	17.7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2011



주: 1) 일본과 호주는 2010년 수치, OECD 평균은 2011년 수치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2*,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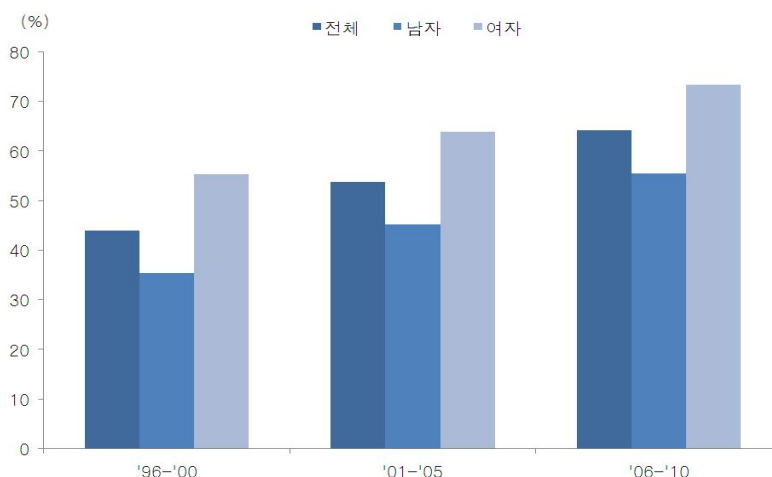
통계표

	미국	한국	호주	OECD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영국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47.8	55.3	67.8	71.5	73.0	76.5	76.8	77.8	81.6	82.1	82.8

23309. 암생존율

■ 주요지표

성별 암 5년 생존율, 1996-2010



주: 1) 암 5년 생존율은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출처: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0년 암등록통계)」, 2012.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암 5년생존율은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중앙암등록본부가 구축하는 「국가암발생데이터베이스」의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암발생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다중원발암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첫 진단된 암을 기준으로 하며, 사망추적은 통계청 사망자료와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함. 추적종료일은 2011년 12월 31일임.

$$\text{암 5년 생존율} = (\text{치료 5년 내 해당 암으로 사망하지 않은 생존자 수} \div \text{암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 \times 100$$

● 지표 의의

암 5년 생존율은 의료기술의 효과와 의료체계의 성과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암 5년 생존율은 암에 걸린 것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암 환자가 최소한 5년 동안 발병한 암으로 사망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5년 생존율이 높다는 것은 곧 암 치료가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의료체계가 암과 같은 중증질환을 관리하기에 적합하다는 것 또한 드러낸다.

● 해설

암 5년 생존율은 매 5년 주기마다 상당한 향상을 보여 왔다.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인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44%에 불과했으며, 남성의 경우 35%에 그쳤다. 그러나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5년 생존율이 53.7%까지 향상되어 절반을 넘어섰으며, 2006년에서 2010년에 이르면 64.1%의 암환자가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한 지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5년 생존율의 경우 계속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왔으며, 둘 사이의 격차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의 20%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9.4%로 상당히 좁혀졌다. 이러한 변화는 남성 5년 생존율이 2005년까지보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18%가량 급상승한 데 기인한다.

OECD에서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그 중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을 살펴볼 때 한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은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기준으로 58.1%로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장암 5년 생존율에 있어서는 미국이 65.5%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는 10%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방암 5년 생존율의 경우 한국은 OECD 평균인 81.2%에 다소 미달한 75.5% 정도의 생존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영국의 78.5%와는 비슷하나 미국의 90.5%에 비하면 15%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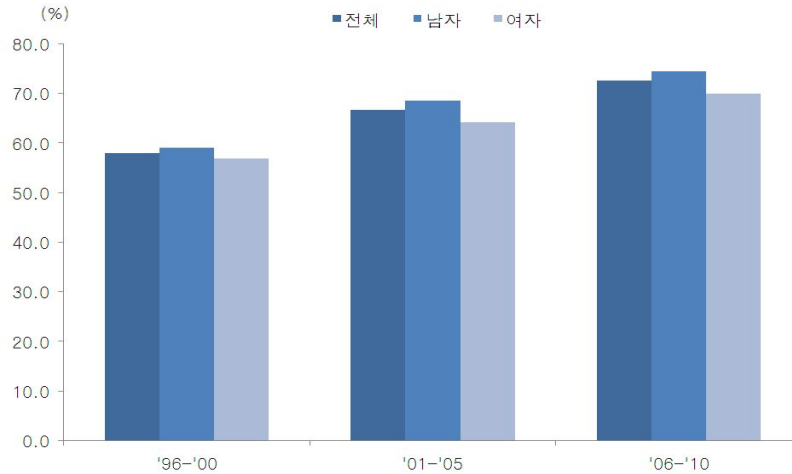
성별 암 생존율, 1996-2010

	1996-2000	2001-2005	2006-2010
전체	44.0	53.7	64.1
성			
남자	35.3	45.2	63.9
여자	55.3	63.9	73.3

주: 1) 암 5년 생존율은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출처: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0년 암등록통계)」, 2012.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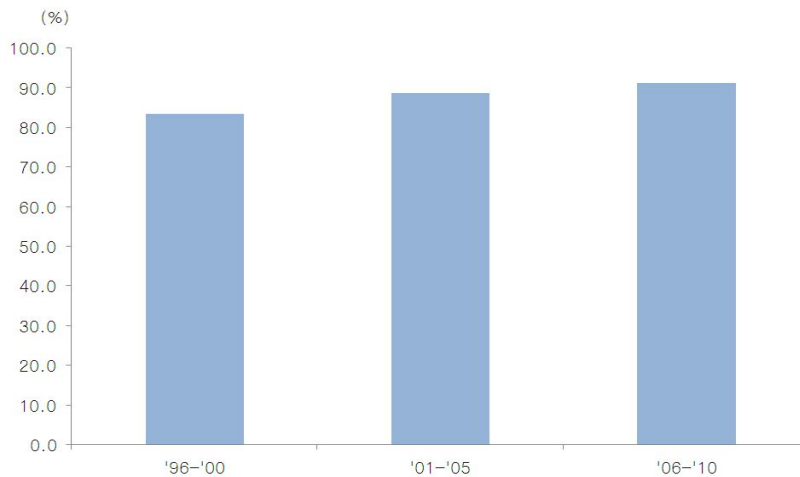
성별 대장암 5년 생존율, 1996-2010



주: 1) 대장암 5년 생존율은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출처: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0년 암등록통계)」, 2012.

	'96-'00	'01-'05	'06-'10
전체	58.0	66.6	72.6
남자	59.0	68.5	74.5
여자	56.8	64.1	69.9

유방암 5년 생존율, 1996-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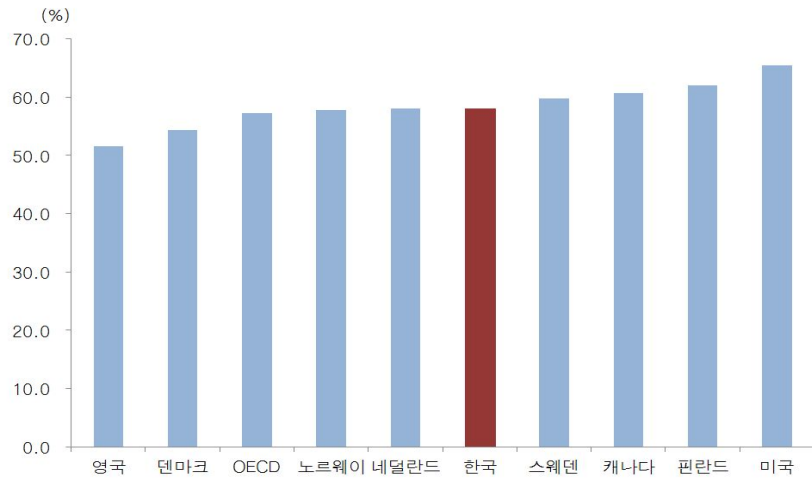


주: 1) 유방암 5년 생존율은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출처: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0년 암등록통계)」, 2012.

	'96-'00	'01-'05	'06-'10
유방암 5년 생존율	83.2	88.5	91.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 2002-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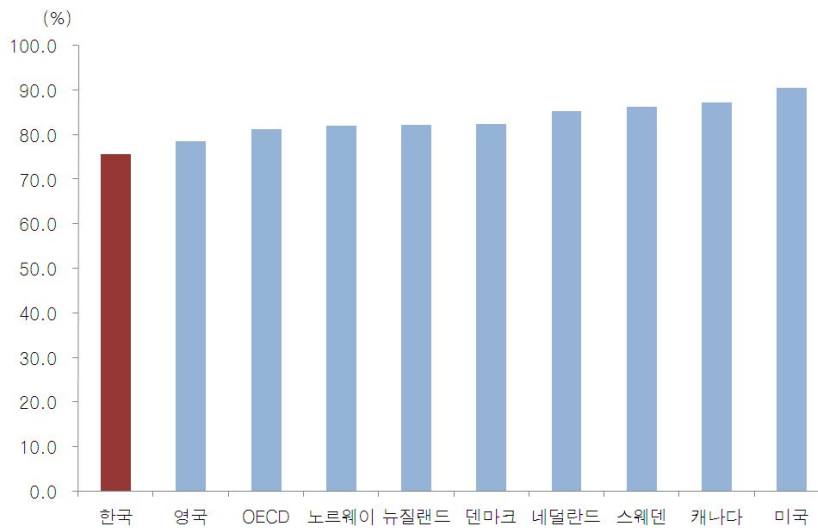
주: 1) 대장암 5년 생존율은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2) 일본은 1999-2004자료, 미국은 2000-2005년 자료, 노르웨이, 한국, 네덜란드는 2001-2006년 자료, 스웨덴은 2003-2008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09*, 2009.

통계표

	영국	덴마크	OECD	노르웨이	네덜란드	한국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미국
대장암 5년 생존율	51.6	54.4	57.3	57.8	58.1	58.1	59.8	60.7	62.0	65.5

OECD 주요국의 유방암 5년 생존율, 2002-2007



주: 1) 유방암 5년 생존율은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09*,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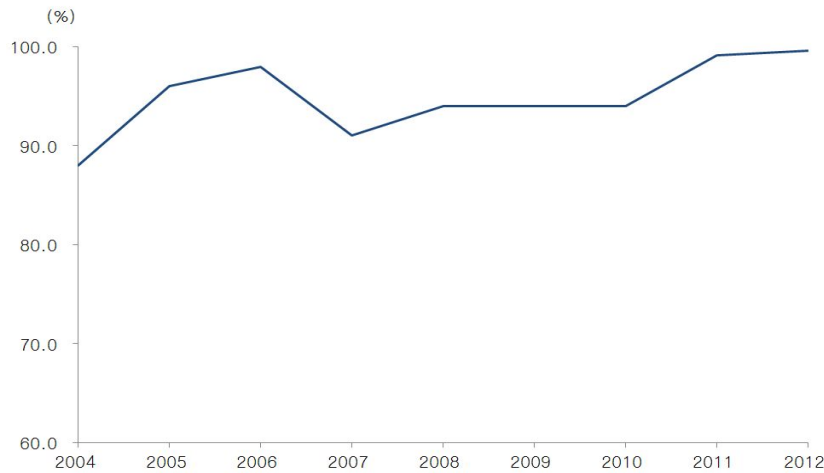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	영국	OECD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미국
유방암 5년 생존율	75.5	78.5	81.2	81.9	82.1	82.4	85.2	86.1	87.1	90.5

23310. DPT예방접종률

■ 주요지표

DPT 예방접종률, 2004-2011



주: 1) DPT예방접종률은 만3세 대상 아동 중 3차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의 비율임.
2) 2010년까지는 OECD 자료이고, 2011년부터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자료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2011, 2012.
OECD. *OECD Health Data 2012*, 2012.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DPT 예방접종률은 만3세 대상 아동 중 3차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의 집계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함.

$$\text{DPT예방접종률} = (\text{DTaP 3차 예방접종을 받은 만 3세 대상자 수} \div \text{만 3세 대상자 수}) \times 100.$$

● 지표 의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 이후 치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을 전염병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은 공중보건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노인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은 새롭게 등장한 공중보건의 과제이다. 노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들이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유행병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해설

한국의 2012년 현재 DPT 예방접종률은 99.5%로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예방접종률이 91%로 비교적 낮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9%에 도달하였다. 한국은 세계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보여준다. 노인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률도 79.6%에 달하여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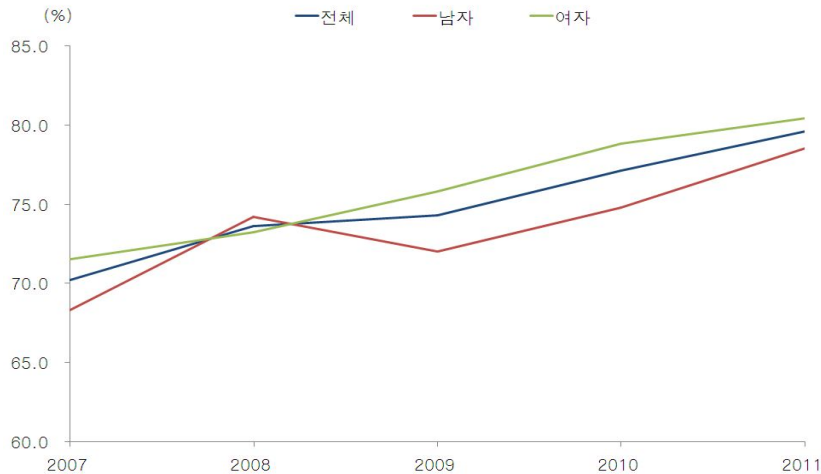
DPT 예방접종률, 2004-2012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88.0	96.0	98.0	91.0	94.0	94.0	94.0	99.1	99.5	

주: 1) DPT예방접종률은 만3세 대상 아동 중 3차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은 아동의 비율임.
 2) 2010년까지는 OECD 자료이고, 2011년부터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자료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전국 예방접종률 조사」, 2011, 2012.
 OECD. *OECD Health Data 2012*, 2012.

■ 보조지표

노인의 성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07-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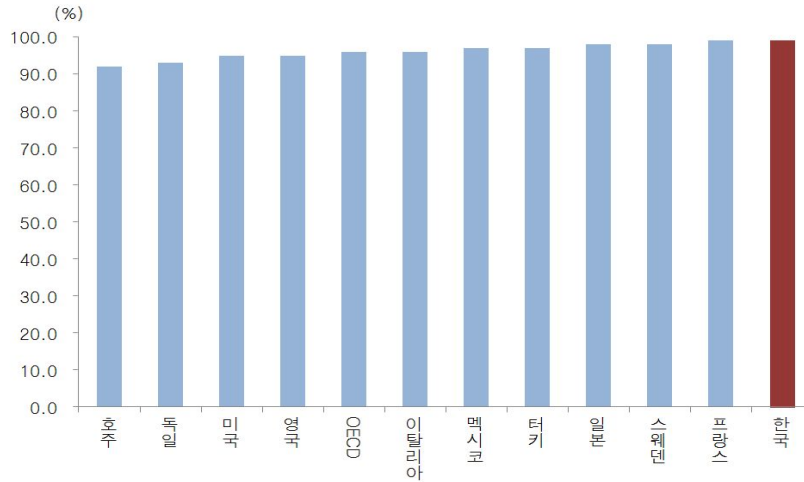


주: 1)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 인구 중 1년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70.2	73.6	74.3	77.1	79.6
남자	68.3	74.2	72.0	74.8	79.0
여자	71.5	73.2	75.8	78.8	80.4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DPT 예방접종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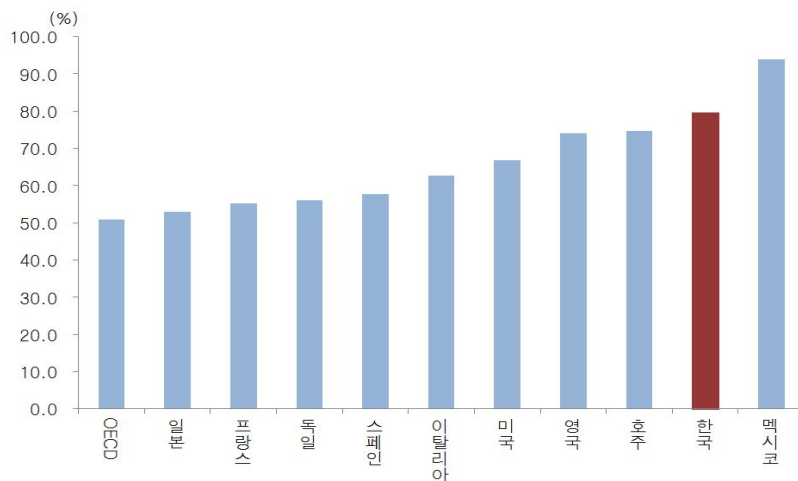


주: 1) DPT 예방접종률은 13-24개월 아동 중 3차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비율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통계표

	호주	독일	미국	영국	OECD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일본	스웨덴	프랑스	한국
DPT 예방접종률	92.0	93.0	95.0	95.0	95.9	96.0	97.0	97.0	98.0	98.0	99.0	99.0

OECD 주요국의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1



주: 1)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65세 이상 대상자 중 1년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임.
2) 독일과 호주는 2009, 일본은 2010년, OECD 평균은 2011년 수치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통계표

	OECD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영국	호주	한국	멕시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50.9	53.0	55.2	56.1	57.7	62.7	66.9	74.0	74.6	79.6	94.0

2.4.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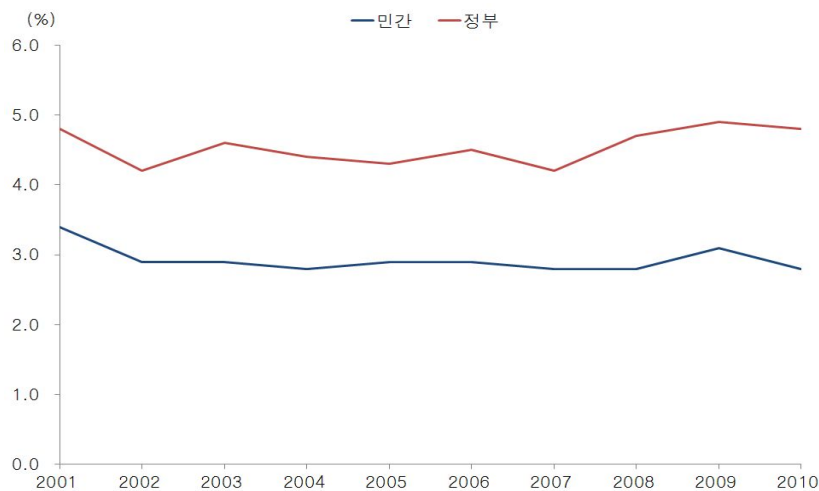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교육	교육기회	• 공교육비	• 학생1인당공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사교육참여율 • 교육비	
		• 취학률	• 고등교육기관진학률 • 학업중단율	• 취학률
		• 평생교육참여율	• 평생교육참여시간	• 평생교육참여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 교원1인당학생수	• 학급당학생수	• 교원1인당학생수
		• 학교생활만족도	• 교육내용만족도 •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 학습시간	• 학습종류별 학습시간 • 사교육시간	• 학습시간
	교육효과	• 교육년수	• 고등교육이수율	• 교육년수
		• 기초학력미달률	•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	• TIMSS 수학·과학 성취도
		• 대학졸업자취업률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니트(NEET)비율	•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

2.4.1. 교육기회

24101. 공교육비

■ 주요지표

GDP 대비 공교육비, 2001-2010



주: 1) GDP 대비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공교육비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2013.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임. 공교육비는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로 구분되며,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대해 정부가 공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고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대해 민간(학부모와 민간단체 등)이 부담하는 금액임. 구체적으로, 정부부담공교육비는 중앙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과 학생·가계에 지원하는 장학금, 수업료 보조, 그리고 학교 재단 등에 지원하는 정부 이전금을 합한 금액이며, 민간부담공교육비는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예: 등록금)과 종교 및 비영리단체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예: 재단전입금)을 합산하여 산출함.
- 측정 방법: $\{(\text{정부 또는 민간}) \text{ 부담 공교육비} \div \text{국내총생산}\} \times 100$.

● 지표의 의의

공교육비는 교육 영역에서 투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 및 민간 수준의 책무성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공공재로서 공교육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동시에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한다.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국민통합의 기능을 증진하고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을 양성하여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근현대사가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는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해설**

지난 10년 간 GDP 대비 공교육비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 동 기간 동안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GDP 대비 비율은 4%대에 머물러 있으며, 민간부담 공교육비의 경우에는 3%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2년과 2007년에는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정부의 노력에 의해 이후에 곧바로 회복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미미하나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교육비는 민간재원에 대한 의존이 높다. 특히 2010년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2010년 현재 GDP 대비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비중 및 민간부담 비중의 OECD 평균은 각각 5.4%, 0.9%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각 4.8%, 2.8%로 OECD 평균에 비해 민간부담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주요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비와 비교할 때에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급속한 교육팽창을 이룩한 한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추세를 살펴볼 때 정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중을 점차 높여 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조지표인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주요지표와 일관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PISA 등에서 거양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어온 교육시설 및 환경 역시 정부와 민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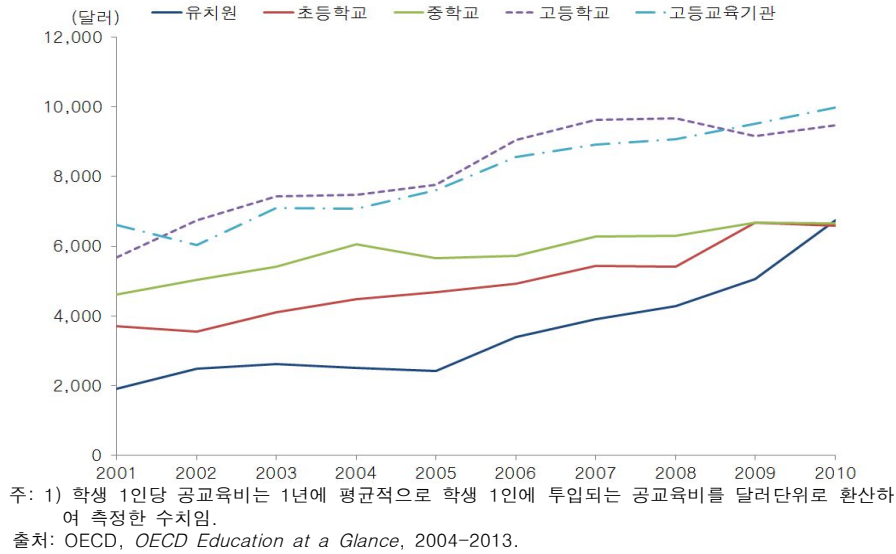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2001-2010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8.2	7.1	7.5	7.2	7.2	7.3	7.0	7.6	8.0	7.6
유아교육	0.1	0.1	0.2	0.1	0.1	0.2	0.2	0.2	0.3	0.3
초중등교육	4.6	4.1	4.4	4.4	4.3	4.3	4.0	4.2	4.7	4.2
고등교육	2.7	2.2	2.6	2.3	2.4	2.5	2.4	2.6	2.6	2.6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2013.

■ 보조지표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1-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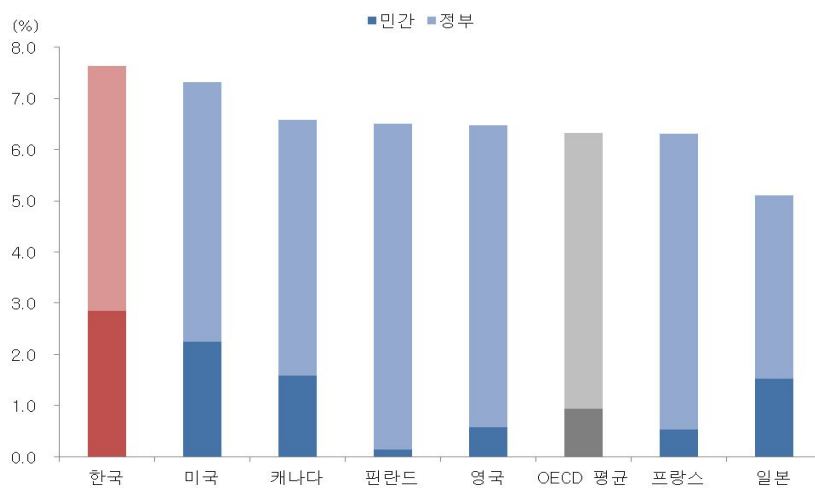


통계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치원	1,913	2,497	2,628	2,520	2,426	3,393	3,909	4,281	5,061	6,739
초등학교	3,714	3,553	4,098	4,490	4,691	4,935	5,437	5,420	6,668	6,601
중학교	4,612	5,036	5,425	6,057	5,661	5,719	6,287	6,307	6,678	6,652
고등학교	5,681	6,747	7,442	7,485	7,765	9,060	9,620	9,666	9,163	9,477
고등교육기관	6,618	6,047	7,089	7,068	7,606	8,564	8,920	9,081	9,513	9,972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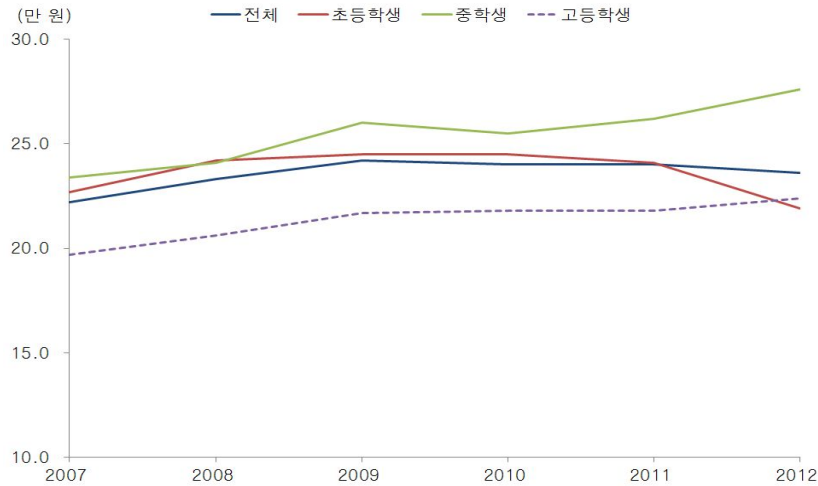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	미국	캐나다	핀란드	영국	OECD 평균	프랑스	일본
전체	7.6	7.3	6.6	6.5	6.5	6.3	6.3	5.1
민간	2.8	2.2	1.6	0.1	0.6	0.9	0.5	1.5
정부	4.8	5.1	5.0	6.4	5.9	5.4	5.8	3.6

24102. 사교육비

■ 주요지표

교육단계별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12



주: 1)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EBS를 제외한 통신강의를 포함사교육에 매달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만원 단위로 측정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임. 사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의미함. 일반 교과와 예체능 과목별로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 (EBS 제외)를 포함함.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모두 포함함.
- 측정 방법: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 학교급별 학생 수

● 지표의 의의

사교육비 규모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사교육비는 국민의 삶의 질,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 복지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증가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피폐해지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반면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감소하면 국민의 삶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공교육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 해설

지난 6년 간 월평균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22.2만원에서 2009년 24.2만원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2012년 현재 23.6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사교육참여율과 가구당 교육비지출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과는 궤를 함께하는 것인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근래 사교육시장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소폭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육단계별로 사교육비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사교육비가 가시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한 결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유가 어디에 있건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감소세는 전반적인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초등학생의 경우와는 반대로 해당 기간 동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중등교육 단계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큰 폭의 전체 사교육비 지출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편 해당 기간 동안 부모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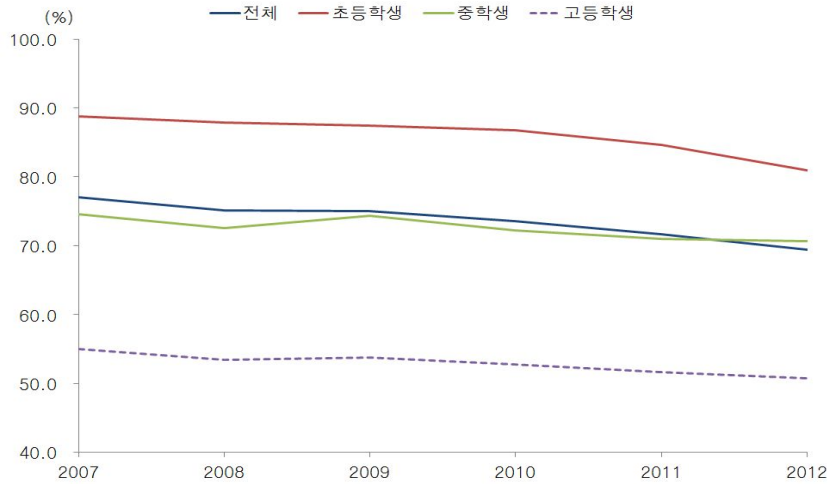
부모 교육수준 및 가구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2007-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22.2	23.3	24.2	24.0	24.0	23.6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8.9	9.3	8.8	9.0	9.7	9.8
고졸	17.1	18.1	17.9	18.1	18.2	18.3
대졸	28.5	29.8	30.7	30.1	29.6	29.0
대학원졸	36.4	36.9	41.2	38.8	39.2	36.6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	9.8	9.6	9.2	9.8	10.7
고졸	19.3	20.1	19.9	19.9	19.8	19.9
대졸	30.6	32.1	33.6	32.4	31.6	30.1
대학원졸	39.6	39.8	44.1	40.8	41.3	38.8
가구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5.3	5.4	6.1	6.3	6.8	6.8
100-200만원 미만	10.7	10.8	11.0	10.3	10.9	11.0
200-300만원 미만	17.7	17.7	18.0	17.0	17.4	16.8
300-400만원 미만	24.1	24.5	24.6	24.0	23.4	23.0
400-500만원 미만	30.3	30.6	31.0	29.8	39.0	28.8
500-600만원 미만	34.4	35.6	37.2	36.2	34.0	33.2
600-700만원 미만	38.8	40.2	42.0	40.4	39.4	36.7
700만원 이상	46.8	47.4	51.4	48.4	44.0	42.6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교육단계별 사교육참여율,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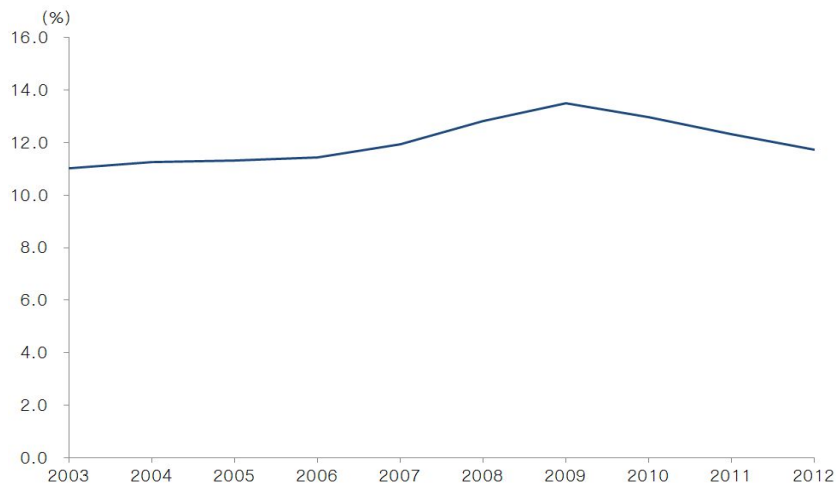
주: 1) 사교육참여율은 전체 학생 중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EBS를 제외한 통신강의를 포함한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77.0	75.1	75.0	73.6	71.7	69.4
초등학생	88.8	87.9	87.4	86.8	84.6	80.9
중학생	74.6	72.5	74.3	72.2	71.0	70.6
고등학생	55.0	53.4	53.8	52.8	51.6	50.7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 2003-2012



주: 1) 가구당 교육비 지출률은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중 학교 납입금, 보충학습비, 학원비, 과외비 등을 포함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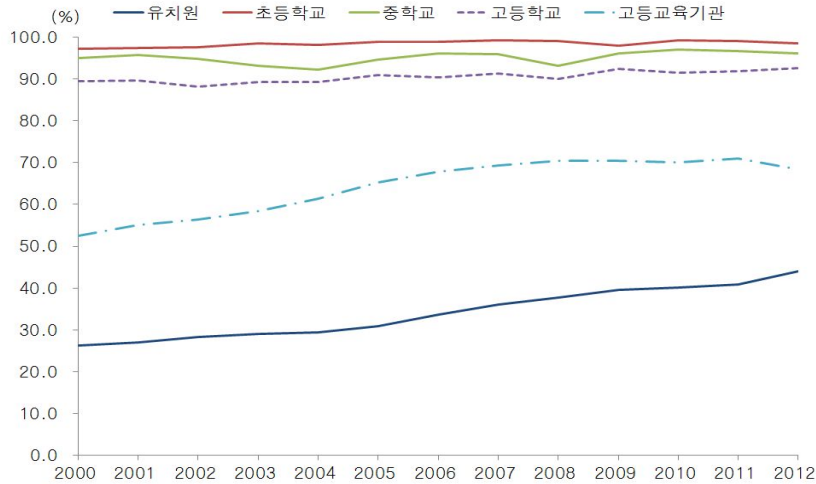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비 지출률	11.0	11.3	11.3	11.4	11.9	12.8	13.5	13.0	12.3	11.7

■ 국제비교지표 (없음)

24103. 취학률

■ 주요지표

교육단계별 취학률, 2000-2012



주: 1) 취학률은 해당 학교급별 취학적령인구 대비 학생수의 비율임. 각 학교급별 취학적령인구는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의 인구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취학률은 취학적령인구 대비 실제 취학자의 비율임. 각 학교급별 취학적령인구는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의 인구임.
- 측정 방법: $(\text{학교급별 학생수} \div \text{학교급별 취학적령인구}) \times 100$

● 지표의 의의

취학률은 교육기회의 충족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학습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취학률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도가 높아져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통합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취학률의 상승은 인적자본의 광범한 축적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반면 취학률이 낮은 경우에는 사회의 질이나 안정성도 미흡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 해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1949년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84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1973년에 발표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1980년대에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고등학교 취학률 또한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초·중등교육 취학률은 90%를 웃도는 완전 취학상태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최상위에 속하게 되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취학률도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고급인력수요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힘입어 점차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70%를 약간 상회하기도 하였지만, 이후에 대졸자의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졸자의 취업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면서 근년에는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소폭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기타 보육시설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를 흡수함에 따라 유치원 취원율은 아직도 50%를 넘지 못하고 있으나(2012년 기준 44.0%)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유치원 취원율의 상승세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사회적 현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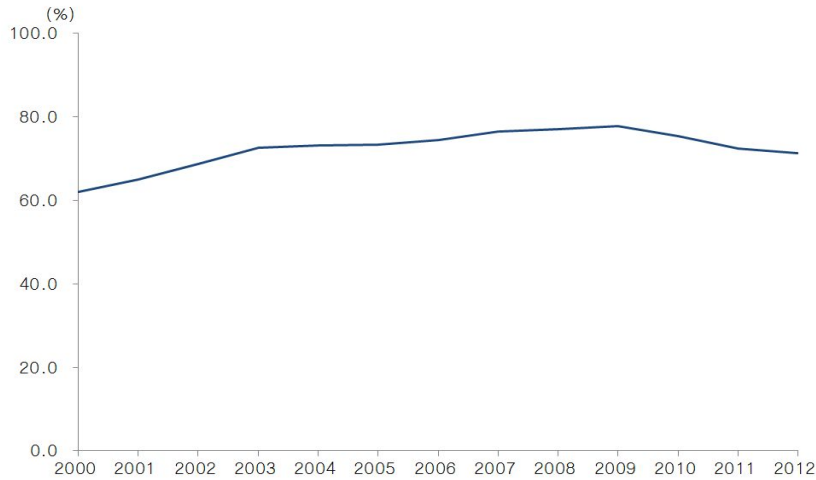
교육단계별 성별 취학률, 2000-20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초등학교													
전체	97.2	97.4	97.6	98.6	98.1	98.8	98.9	99.5	99.5	98.5	99.2	99.1	98.6
남자	96.7	97.1	97.3	98.4	98.0	98.7	98.8	99.4	99.3	98.4	99.2	99.2	98.8
여자	97.8	97.8	98.0	98.8	98.2	98.9	99.0	99.6	99.7	98.7	99.2	98.9	98.3
중학교													
전체	95.0	95.7	94.8	93.1	92.3	94.6	96.0	95.9	93.2	95.9	97.0	96.7	96.1
남자	94.3	95.1	94.7	92.6	91.7	94.2	95.6	95.8	93.4	96.1	96.9	96.3	95.4
여자	95.8	96.3	94.9	93.6	93.0	95.0	96.4	95.9	93.0	95.7	97.1	97.2	96.8
고등학교													
전체	89.4	89.7	88.2	89.3	89.3	91.0	89.8	90.4	89.0	91.4	91.5	91.9	92.6
남자	89.5	89.7	88.5	89.6	89.7	91.0	89.6	90.1	88.5	91.1	91.4	91.9	92.6
여자	89.4	89.7	87.9	88.9	89.0	91.0	90.1	90.8	89.5	91.8	91.6	91.9	92.6
고등교육기관													
전체	52.5	55.6	57.2	59.3	61.9	65.1	66.5	70.2	70.2	68.2	67.5	68.4	68.3
남자	57.2	60.7	62.0	63.7	66.2	69.2	69.8	73.2	72.7	70.1	68.8	69.6	69.3
여자	47.5	50.1	52.1	54.6	57.3	60.7	62.9	66.7	67.4	66.0	65.9	67.0	67.2

주: 1) 취학률은 해당 학교급별 취학적령인구 대비 학생수의 비율임. 각 학교급별 취학적령인구는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 고등교육기관 만 18-21세의 인구임.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전문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각종 학교(전문대학 및 대학 과정) 등을 포함하여 계산된 것이다.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보조지표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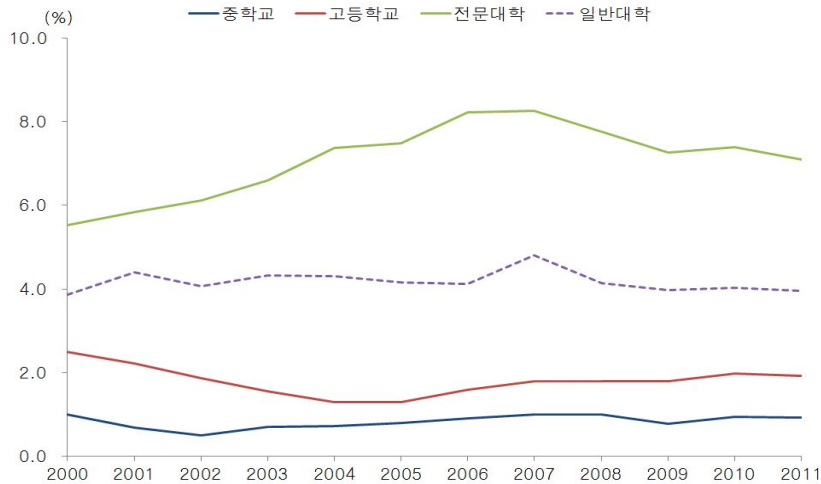


주: 1)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중 고등교육기관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진학률	62.0	65.0	68.8	72.6	73.2	73.4	74.4	76.5	77.0	77.8	75.4	72.5	71.3

교육단계별 학업중단율,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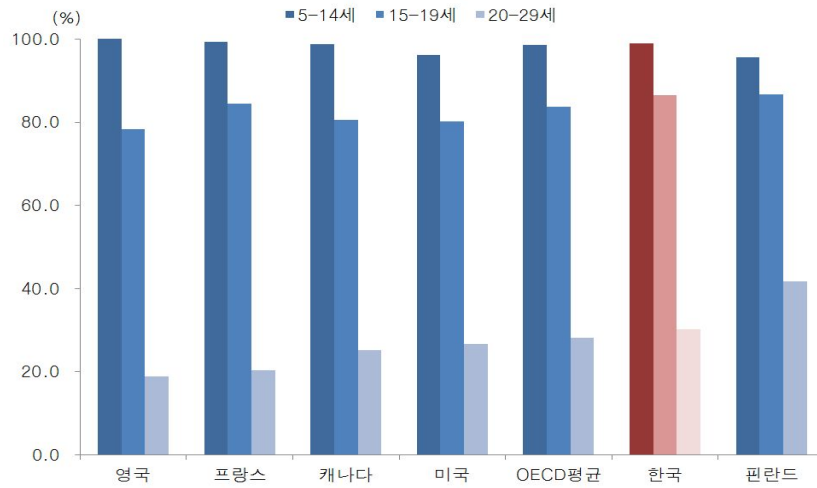
주: 1) 학업중단율은 해당 학교급별 전체 학생 중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사유로 인해 제적, 중퇴 및 휴학한 학생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학교	1.00	0.68	0.50	0.72	0.73	0.80	0.91	1.00	1.00	0.78	0.96	0.93
고등학교	2.50	2.23	1.86	1.56	1.30	1.30	1.60	1.80	1.80	1.80	1.98	1.92
전문대학	5.53	5.85	6.12	6.59	7.38	7.48	8.23	8.26	7.77	7.26	7.39	7.10
일반대학	3.87	4.41	4.07	4.33	4.30	4.16	4.13	4.81	4.13	3.97	4.02	3.95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연령집단별 취학률, 2011



주: 1) 연령집단별 취학률은 해당 연령대의 인구 중 취학자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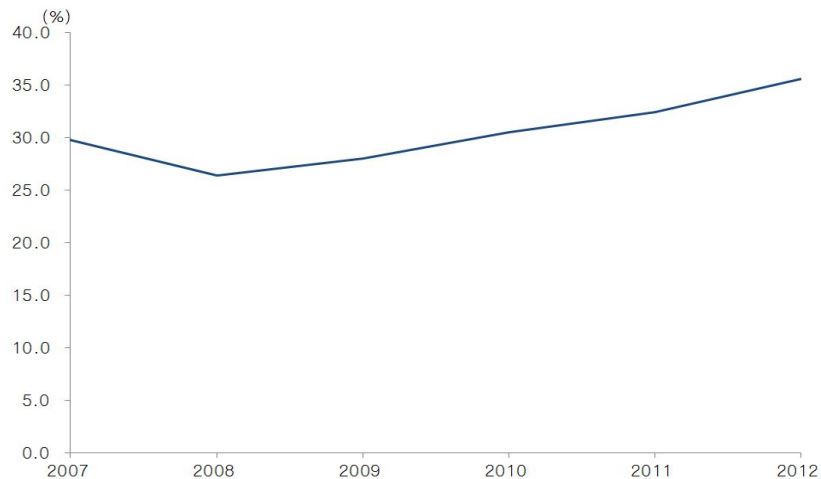
통계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OECD 평균	한국	핀란드
5-14세	100.0	99.4	98.8	96.2	98.6	99.1	95.7
15-19세	78.3	84.4	80.5	80.3	83.8	86.5	86.7
20-29세	18.9	20.3	25.2	26.7	28.1	30.2	41.8

24104. 평생교육참여율

■ 주요지표

평생교육참여율, 2007-2012



주: 1) 평생교육참여율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들 중에서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평생교육참여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들 중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임. 평생교육에는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이 있음. 형식교육이란 국가 학력체계 안에 포함된 과정을 의미하며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방식의 학교교육으로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데, 방송통신대, 학점 은행제, 검정고시 등이 해당됨. 비형식교육이란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하며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 과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는 교육을 가리킴. 비형식교육에는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강좌,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등이 포함됨.
- 측정 방법: $\text{평생교육참여율} = (\text{교육형태별 평생교육 참가자 수} \div \text{25-64세 인구}) \times 100$.

● 지표의 의의

2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정도를 보여줌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삶을 풍부하게 하여 웰빙에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는 개인을 기술변화에 대응하게 하여 노동력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이 지표는 학교교육에 대한 보완 및 계속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따라서 평생교육 참여 정도는 개인의 삶의 질과 아울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설

2007년 정부가 5·31 교육개혁을 통해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설정한 이후 평생교육참여율은 2008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2년 현재 35.6%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증가 추세가 비형식교육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교육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율은 완만하나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규교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성인들이 평생교육을 단순히 공식적 학위의 취득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여건과 관련된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기에는 고등교육기관 진학이 증가하여 학력을 보완할 필요가 감소한 반면, 사회변화의 속도는 빨라져 학령기의 제한적 교육을 넘어 지속적인 지식습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OECD 자료를 살펴보면,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여전히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OECD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며, 핀란드나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향후 사이버대학 확대나 평생학습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정부정책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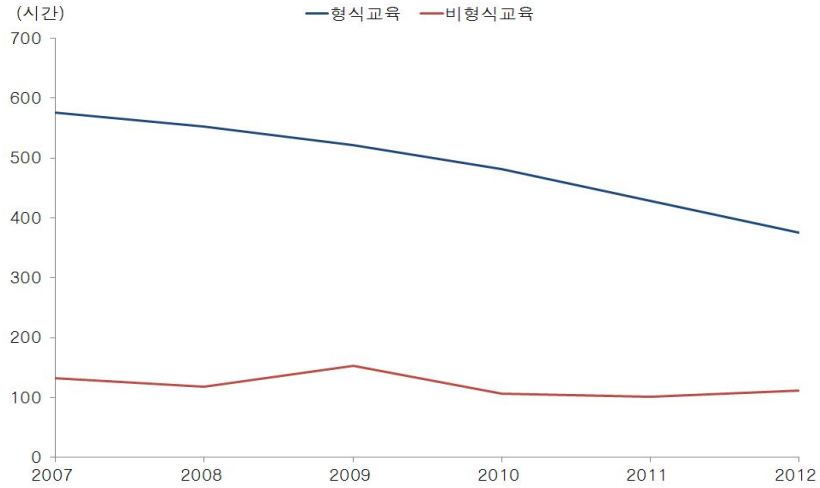
성 및 연령집단별 평생교육참여율, 2007-20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27.6	26.4	28.0	30.5	32.4	35.6
형식교육	5.7	4.1	4.3	3.9	4.2	3.5
비형식교육	26.4	23.9	25.3	28.2	30.1	33.1
성						
남자	25.7	24.4	25.5	28.7	30.7	31.8
여자	29.4	28.4	30.5	32.3	34.0	39.4
연령집단						
25-34세	29.1	32.7	33.1	37.3	42.7	39.3
35-44세	29.1	27.5	29.4	33.1	35.7	35.8
45-54세	26.4	21.3	23.7	25.2	26.5	34.7
55세 이상	23.9	20.8	22.4	21.2	21.0	31.5

주: 1) 평생교육참여율이란 2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들 중에서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2) 형식교육이란 학위취득 과정이 있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이고, 비형식교육이란 학력 및 학위인증과정이 없는 구조화된 교육과정임.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각 년도.

■ 보조지표

평생교육 유형별 연간 참여시간,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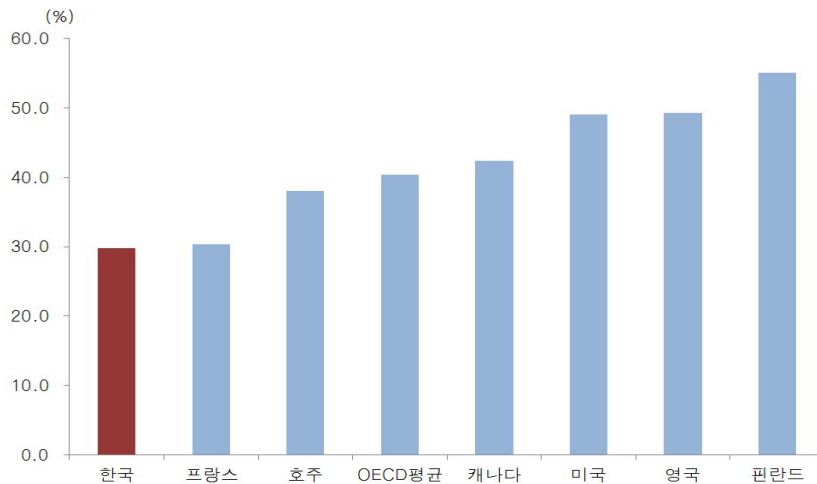
주: 1) 연간 평생교육 참여시간은 연간 평생교육 참여시간을 총 참여자 수로 나누어 산출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각 년도.

통계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형식교육	575.4	552.0	522.0	482.0	429.0	375.0
비형식교육	132.2	118.2	153.3	107.0	101.0	112.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평생교육참여율, 2007



주: 1) 평생교육참여율은 25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들 중에서 형식교육 및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2*, 2012.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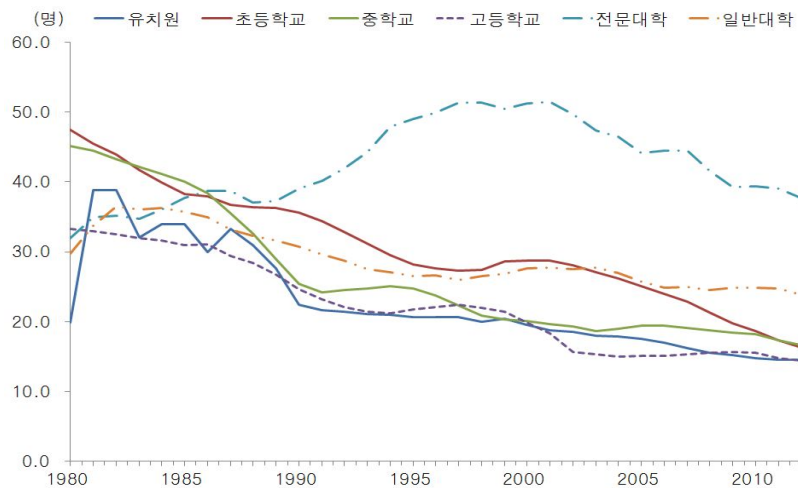
	한국	프랑스	호주	OECD 평균	캐나다	미국	영국	핀란드
평생학습참여율	29.8	30.3	38.1	40.4	42.3	49.0	49.3	55.0

2.4.2. 교육의 조건과 과정

24205. 교원1인당학생수

■ 주요지표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수, 1980-2012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수 ÷ 총 교원수) × 100.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교급별 총 학생 수를 총 교원 수로 나눈 값임. 학생수는 재적학생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교원수는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장, 교감, 교사, 전문상담, 사서, 실기, 보건교사, 기간제 교원 등을 포함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학)장, 전임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이 포함되며,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은 대학원 소속 교원만 해당함.
- 측정 방법: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수 ÷ 총 교원수).

● 지표의 의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교교육의 질과 불가분의 연관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 지표는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학생 간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낸다. 지난 30년간 유·초·중등교육에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학급당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교육의 질 향상의 결과로 생각된다. 이 같은 교육발전에는 교육의 양적 팽창 이후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의 설립과 교육대학원의 설치 등을 통해 교원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고등교육도 유·초·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였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학설립자율화방안 등으로 사립 전문대의 입학정원이 증원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OECD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여전히 평균을 훨씬 웃돌 뿐만 아니라 OECD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년 현재 OECD 평균 초·중·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5.4, 13.3, 13.9명인 반면, 한국은 각각 19.6, 18.8, 15.8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 공교육이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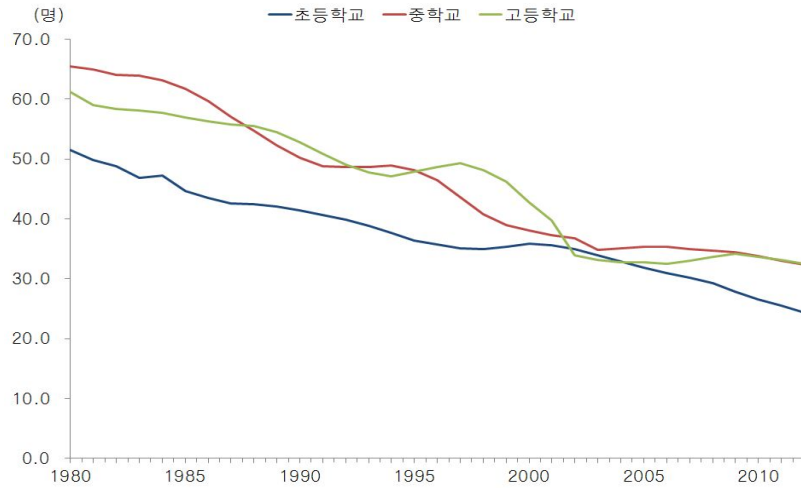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수, 1980-201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유치원	19.9	33.9	22.4	20.7	19.5	17.5	14.8	14.6	14.5
초등학교	47.5	38.3	35.6	28.2	28.7	25.1	18.7	17.3	16.3
중학교	45.1	40.0	25.4	24.8	20.1	19.4	18.2	17.3	16.7
고등학교									
전문계	32.1	29.1	22.9	21.0	18.0	13.6	13.1	12.5	12.1
일반계	33.9	31.1	25.1	22.0	21.0	16.1	16.5	15.8	15.4
대학									
2년제	31.9	37.7	39.0	49.0	51.2	44.1	39.4	39.1	37.7
4년제	29.7	35.7	30.7	26.5	27.6	25.7	24.9	24.7	23.9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재적학생수 ÷ 총 교원수) × 100.
 2) 2011년부터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변경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보조지표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수, 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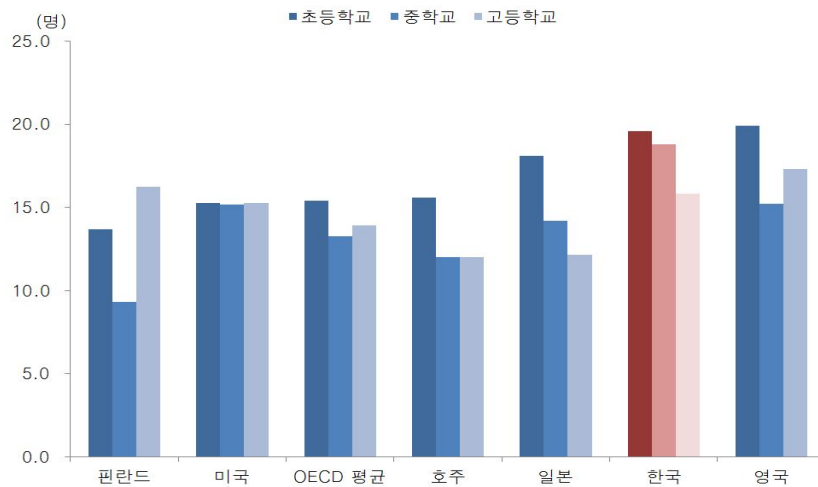
주: 1) 학급당 학생수 = 재적학생수 ÷ 총 학급수.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표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초등학교	51.5	44.7	41.4	36.4	35.8	35.6	34.9	33.9	32.9	31.8	30.9	30.2	29.2	27.8	26.6	25.5	24.3
중학교	65.5	61.7	50.2	48.2	38.0	37.3	36.7	34.8	35.1	35.3	35.3	35.0	34.7	34.4	33.8	33.0	32.4
고등학교	61.2	56.9	52.8	47.9	42.7	39.7	33.9	33.1	32.7	32.7	32.5	33.0	33.7	34.2	33.7	33.1	32.5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 2011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교급별 총학생수를 총교원수로 나눈 값으로, OECD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통계연보와는 달리 교원을 수업담당 교원에 한정하여 교장 및 교감과 관리직 교원 등의 숫자는 제외하고 산출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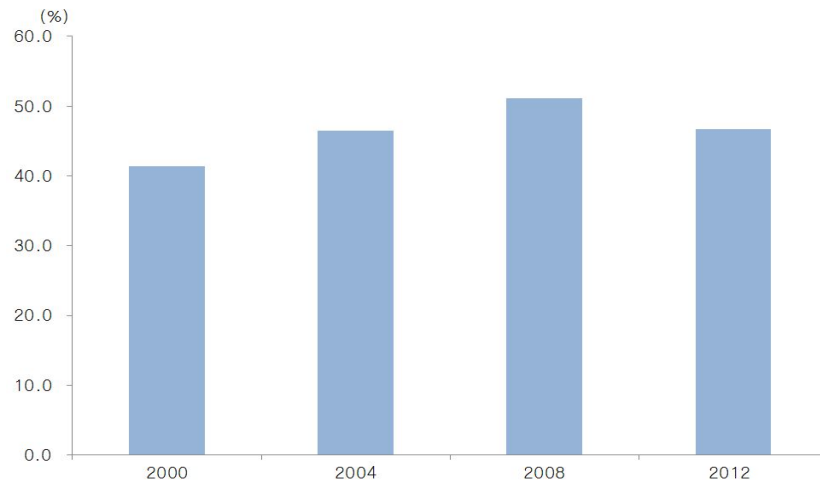
통계표

	핀란드	미국	OECD평균	호주	일본	한국	영국
초등학교	13.7	15.3	15.4	15.6	18.1	19.6	19.9
중학교	9.3	15.2	13.3	12.0	14.2	18.8	15.2
고등학교	16.3	15.3	13.9	12.0	12.2	15.8	17.3

24206. 학교생활만족도

■ 주요지표

학교생활만족도, 2000-2012



주: 1) 학교생활만족도는 현재 학생(중학생-대학생)인 조사대상자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부터 조사대상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 인구로 확대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현재 학생(중학생-대학생)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질문한 문항에서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률을 합하여 산출함.

● 지표의 의의

물리적인 환경 및 시설의 수준만으로는 교육의 조건 및 과정을 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관적 차원에서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지표는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보조지표로 활용함으로써 관점을 달리 하여 학교교육의 질에 관한 평가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해설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4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2008년까지는 고등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이 중등교육 과정의 학생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2012년에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졸자의 취약한 취업 전망이 일조를 한 것으로 유추된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같은 공교육 자원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늘 40% 대의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학생들은 교육내용의 선택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며, 검정 교과서에 의존하여 경직된 교육내용을 답습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된 학교교육만족도는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2008년에 비해 2011년에는 소폭이나마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비교지표의 수치를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지표들은 우리 학교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needs)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의 측면에서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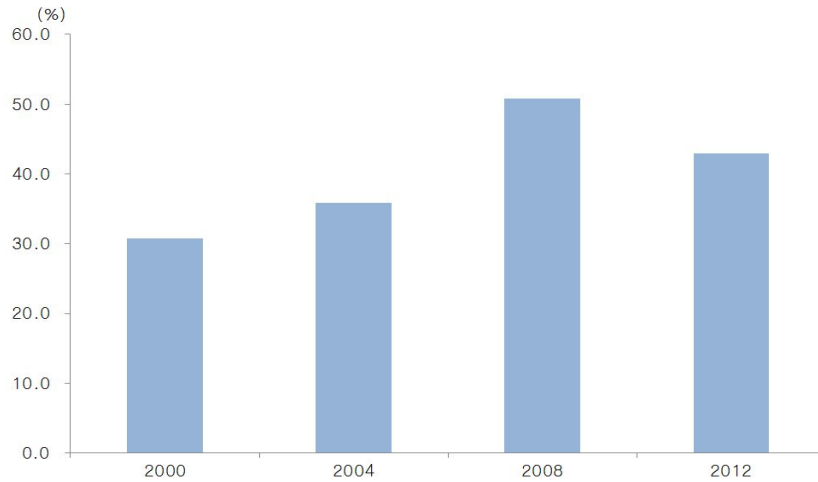
성, 교육단계별 학교생활만족도, 2000-2012

	2000	2004	2008	(%) 2012
전체	41.4	46.5	51.1	45.5
성				
남자	42.0	46.1	52.2	48.9
여자	40.7	46.9	49.7	44.4
교육단계				
중고등학교 재학	42.4	47.9	48.3	47.2
대학 이상 재학	42.2	45.0	53.5	46.0

주: 1) 학교생활만족도는 현재 학생(중학생-대학생)인 조사대상자 중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부터는 조사대상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교육내용만족도,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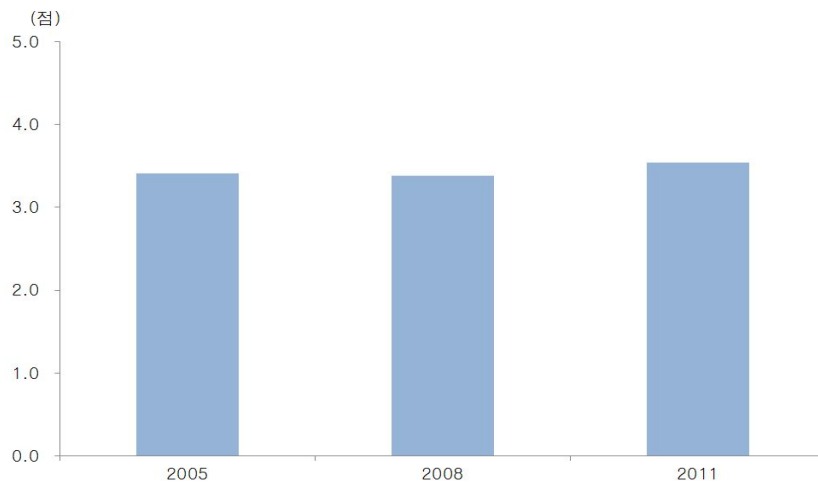


주: 1) 학교생활만족도는 현재 학생(중학생-대학생)인 조사대상자 중 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해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임.
 2) 2012년부터는 조사대상이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4	2008	2012
교육내용만족도	30.7	35.8	50.8	42.9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 200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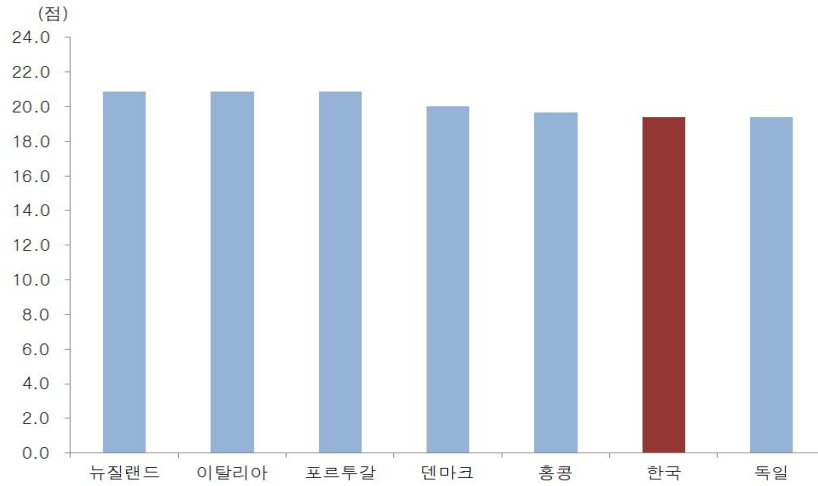
주: 1) 학부모 학교교육만족도는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에서 수집된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교교육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 만족, 5=매우 만족)로 측정한 문항들을 평균한 점수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연구」, 2012.

통계표

	2005	2008	2011
학교교육만족도	3.41	3.38	3.54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학부모 학교교육만족도, 2009



주: 1) 학부모 학교교육만족도는 학부모들이 ①교사전문성 ②학생들의 성취수준 ③교육방법 ④면학 분위기 ⑤학생관리 ⑥학생에 대한 정보제공 ⑦교육활동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측정된 것의 총점으로 산출함.

출처: OECD, Database-PISA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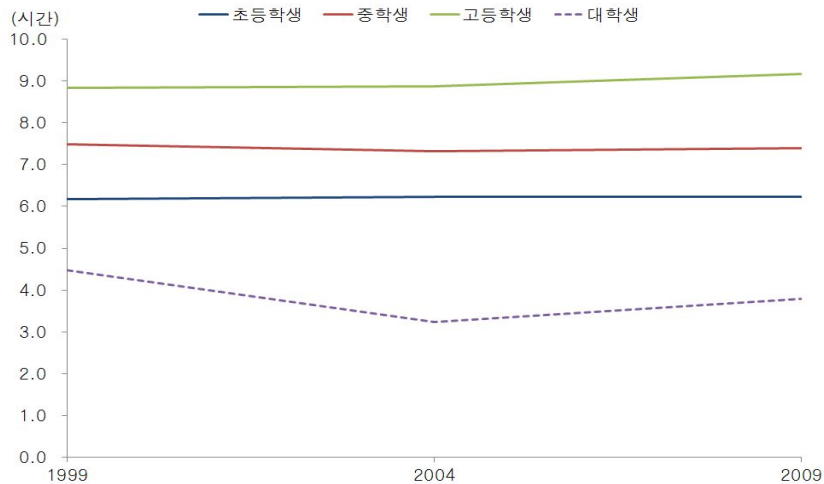
통계표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덴마크	홍콩	한국	독일
학부모 학교교육만족도	20.9	20.9	20.9	20.0	19.7	19.4	19.4

24207. 학습시간

■ 주요지표

교육단계별 학습시간, 1999-2009



주: 1) 학습시간은 10세 이상 학생의 주말을 포함한 1일 평균 학습에 투자한 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학습시간은 조사기간 동안 주말을 포함하여 학습에 투자했다고 응답한 시간의 1일 평균을 의미하며, 학교 학습시간과 학교 외 학습시간으로 구분됨. 학교학습시간은 정규수업시간 및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학교행사, 수업 중 쉬는 시간,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 관련행동이 포함되며 학교 외 학습시간은 정규수업 외 강습, 학교 외에서의 자율학습, 학교 외에서의 기타 학습 관련 행동이 포함됨.
- 측정 방법: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응답자가 학교 학습시간과 학교 외 학습시간에 대해 응답한 내용을 통해 측정함.

● 지표의 의의

학습시간은 교육에 투입되는 물리적 자원인 동시에 교육의 과정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하루 중 평균적으로 몇 시간을 학습에 할애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학습시간 중에서 학교 학습시간과 학교 외 학습시간의 비율은 어떠한지 고찰함으로써 미시적인 측면에서 학습자의 생활양태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학습시간은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바, 이 지표를 통해 학생들의 삶의 질을 일정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설

학습시간 조사결과를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1일 평균 학습시간은 고등학생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 중학생, 초등학생, 대학생의 순이다. 즉 대학생은 초등학생보다도 학습시간이 적고, 고등학생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습시간은 거의 변화하지 않은 가운데 고등학생의 학습시간은 다소 증가하였고 대학생의 학습시간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곡선의 변곡점이 좀 더 예리한 모양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시간이 적은 이유는 대학입시에 과도하게 집중하여 학생들이 탈진에 가까운 상태로 대학에 진학하고, 그 후의 교육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교육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려운 바, 이는 실제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교육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공립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지정한 학습시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1년 국·공립학교의 연평균 총 필수 학습시간의 OECD 평균은 초등학교 801.9시간, 중학교 906.5시간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632.4시간, 중학교 850.0시간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의 학습량과 학습시간이 과다하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상반되기는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반증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학생들은 방과 후에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심각한 학습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술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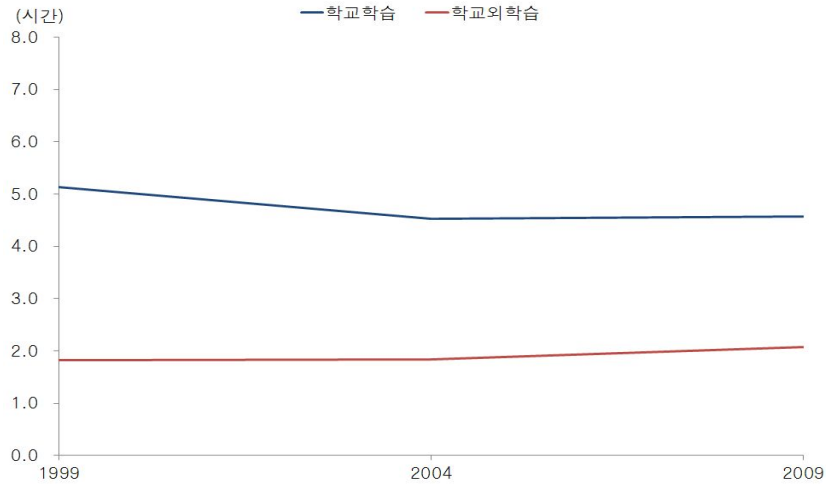
교육단계별 학습시간, 1999-2009

	1999	2004	2009
전체	6.95	6.38	6.63
초등학교	6.17	6.23	6.23
중학교	7.48	7.32	7.40
고등학교	8.83	8.87	9.17
대학교	4.45	3.23	3.78

주: 1) 학습시간은 10세 이상 학생의 주말을 포함한 1일 평균 학습에 투자한 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학습종류별 학습시간, 199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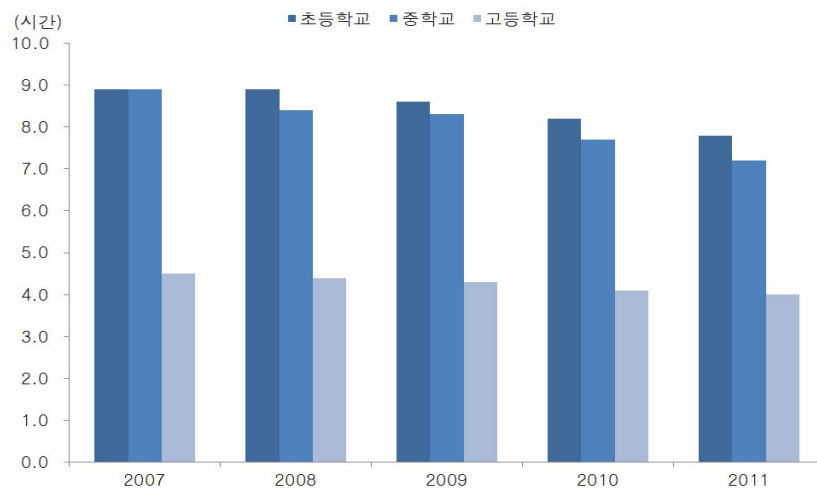
주: 1) 학습시간은 10세 이상 학생의 주말을 포함한 1일 평균 학습에 투자한 시간으로, 학교학습 시간에는 정규수업 및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시간, 학교행사참여시간, 수업 중 쉬는 시간,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시간 등을 포함하며, 학교 외 학습시간은 정규수업 외 강습시간, 학교 외에서의 자율학습시간, 학교 외에서의 기타 학습시간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 각 년도.

통계표

	1999	2004	2009
학교학습	5.13	4.53	4.57
학교 외 학습	1.82	1.83	2.07

교육단계별 사교육시간, 2007-2011



주: 1) 사교육시간은 방과 후 학교 및 EBS 강의 수강시간을 제외하고 일반교과 및 논술과 관련하여 사교육을 받은 주당 평균 시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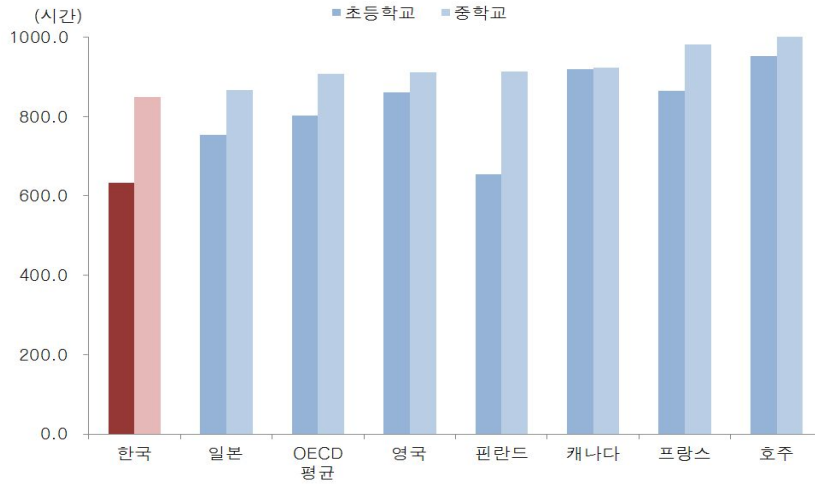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 년도.

통계청

	2007	2008	2009	2010	2011
초등학교	8.9	8.9	8.6	8.2	7.8
중학교	8.9	8.4	8.3	7.7	7.2
고등학교	4.5	4.4	4.3	4.1	4.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 초·중학생의 연간 학습시간, 2011



주: 1) 초·중학생의 연간 학습시간은 국·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필수로 규정하는 1년 단위 학습시간 및 교육제도상 학교재량으로 운영되는 학습시간의 평균으로 계산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2013.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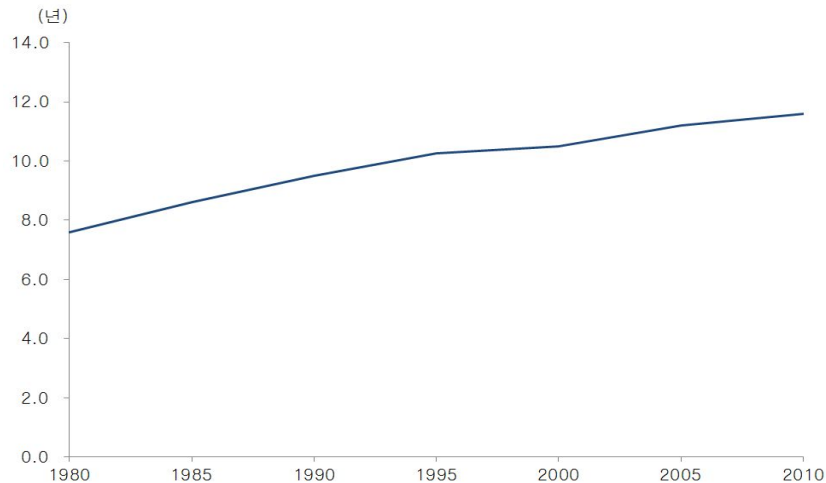
	한국	일본	OECD 평균	영국	핀란드	캐나다	프랑스	호주
초등학교	632.4	753.6	801.9	861.3	654.3	919.0	864.0	953.0
중학교	850.0	866.1	906.5	912.0	913.4	923.0	982.0	1009.0

2.4.3. 교육효과

24308. 교육년수

■ 주요지표

평균교육년수, 1980-2010



주: 1) 평균교육년수는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전 국민의 평균적인 교육 연한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평균교육년수는 재학 중인 학생들을 제외한 전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임. 각 교육단계별로 해당 수학년수를 부여하여 산출하되, 각 학교급별 중퇴자의 경우는 초등 중퇴 3년, 중학중퇴 7.5년, 고교중퇴 10.5년, 전문대중퇴 13년, 대학중퇴는 14년, 석사·박사중퇴는 17년으로 계산함.
- 측정 방법: $\text{평균교육년수} = \frac{\text{국민의 총 교육년수}}{\text{6세 이상 인구} - \text{학생 수}}$.

● 지표의 의의

국민의 평균교육년수는 전체 인구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국가의 교육팽창 결과 및 인적자원 확보 상황을 살펴보는 데 매우 간명하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평균 교육년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상승과 함께 국내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지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교육년수가 교육기회의 충족 정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지표는 개인적인 삶의 질과도 일정 정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는 1980년 7.6년에서 2010년 11.6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2,30대의 평균 교육년수는 14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연령집단에 속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2년제 대학을 마친 교육수준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최근에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승한 사실과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남녀의 평균 교육년수 차이는 2.1년(1980년)에서 1.5년(2010년)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에 남성에 비해 여성의 학력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여성은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남성과 동등한 취학을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수준의 성차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개발이 지속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존의 남아선호사상이 비합리적인 과거의 산물로 간주되면서 자녀교육에 있어 성차별 문화가 약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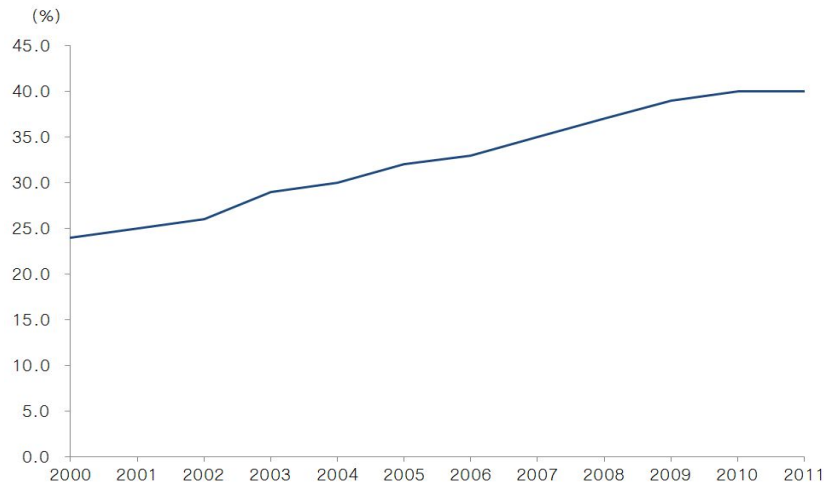
성, 연령집단별 평균교육년수, 1980-2010

	(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체	7.6	8.6	9.5	10.3	10.5	11.2	11.6
성							
남자	8.7	9.7	10.6	11.2	11.5	12.1	12.4
여자	6.6	7.6	8.6	9.4	9.8	10.5	10.9
연령집단							
6-19세	6.5	6.7	7.7	7.0	5.7	4.2	4.8
20-29세	9.9	11.0	12.0	12.7	13.1	13.8	14.1
30-39세	9.2	10.1	11.1	12.2	12.9	13.6	14.0
40-49세	7.5	8.5	9.5	10.5	11.2	12.3	13.0
50세 이상	3.5	4.5	5.5	6.5	7.2	8.2	9.1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고등교육이수율,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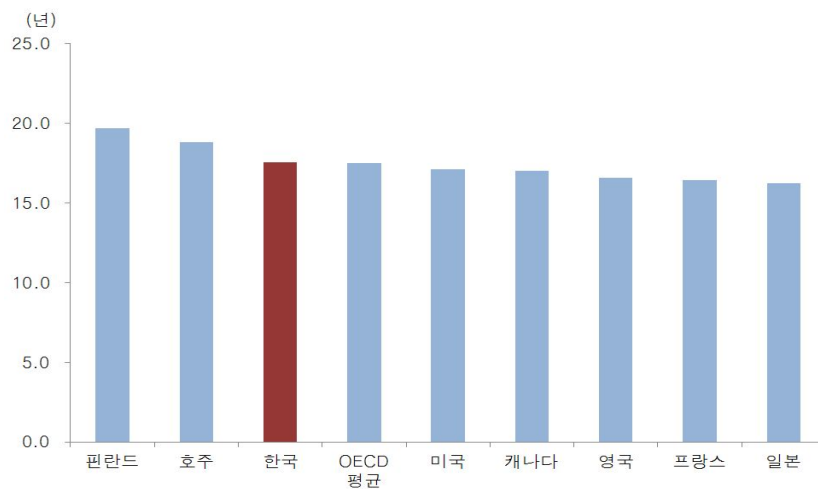
주: 1) 고등교육이수율은 2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 중 고등교육이수자의 비율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2-2013.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고등교육이수율	24	25	26	29	30	32	33	35	37	39	40	4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평균교육년수, 2011



주: 1) 교육년수란 재학 중인 학생수를 제외한 전 국민의 평균 교육년수를 의미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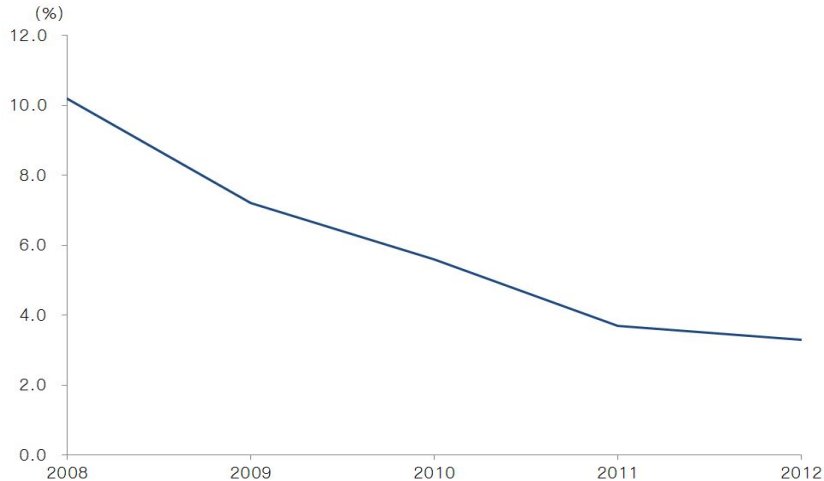
통계표

	핀란드	호주	한국	OECD 평균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평균교육년수	19.7	18.8	17.5	17.5	17.1	17.0	16.6	16.4	16.2

24309. 기초학력미달률

■ 주요지표

기초학력미달률, 2008-2012



주: 1) 기초학력미달률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기초학력미달'로 판정된 학생의 비율임. 기초학력미달 기준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기초학력미달률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기초학력미달로 판정된 학생의 비율.
- 측정 방법: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는 3단계(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수준/기초학력미달)로 평가되며, 그 중 기초학력미달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측정됨.

● 지표의 의의

이 지표는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초학력미달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고 교육격차도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는 학교교육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 해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가,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1학년 대신 2학년으로 평가대상이 변경되었고, 2013년부터는 초등학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학업성취수준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일관성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집단으로는 중학교 3학년만 남게 되어 해당 지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 이래 중학생의 학력은 꾸준히 향상되어 2008년에는 10.2%였던 기초학력미달률이 2012년에는 3.3%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사와 행정가에게 학습부진 아동을 줄여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초학력미달률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는 것이 이를 잘 방증해주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주입식 교육과 문제풀이 형태의 수업에 경도되게 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평가가 창의력 함양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2013년부터 초등학생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2011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 주관한 수학 및 과학 성취기준 평가인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주요국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학에서의 성취도는 1위, 과학에서는 3위라는 높은 성과를 거양하는 등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기초과목 성취 수준이 다른 국가의 중학생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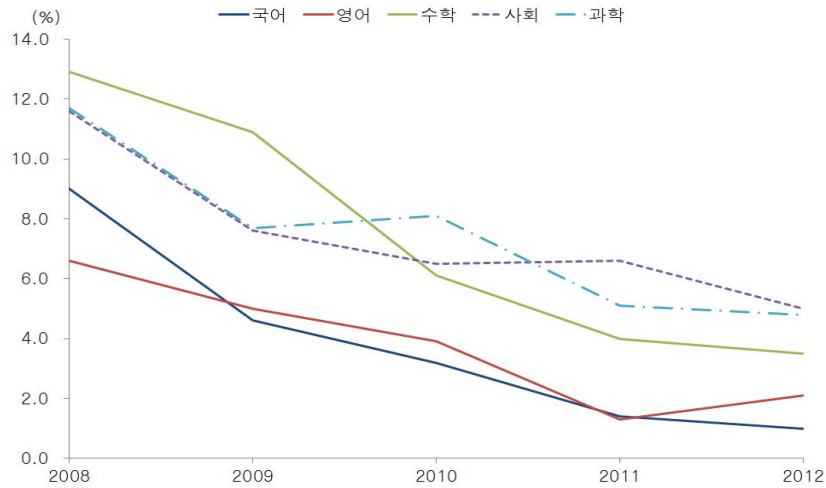
학업성취도, 2008-2012

	2008	2009	2010	2011	2012 (%)
학력수준					
보통학력 이상	57.5	63.7	64.1	68.3	70.1
기초학력	32.2	29.1	30.3	28.0	26.6
기초학력미달	10.2	7.2	5.6	3.7	3.3

주: 1) 통계치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기준별 학생 비율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각 년도.

■ 보조지표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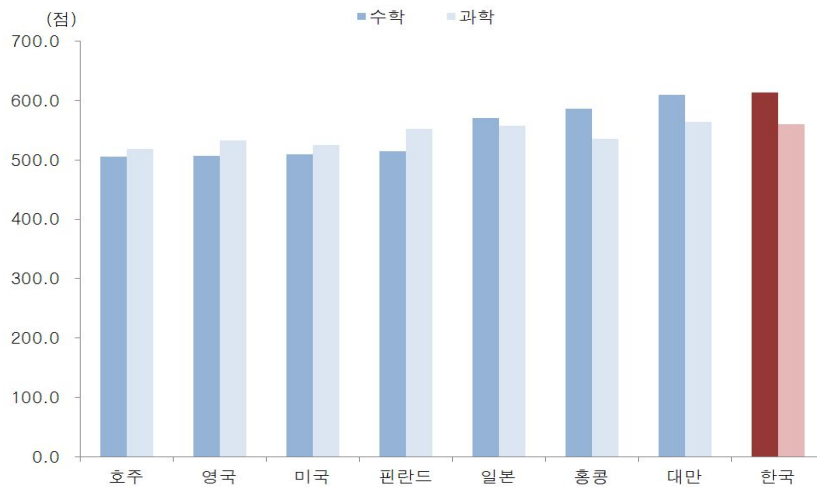


주: 1)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기초학력미달로 판정된 학생의 비율을 과목별로 계산한 수치임.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각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어	9.0	4.6	3.2	1.4	1.0
영어	6.6	5.0	3.9	1.3	2.1
수학	12.9	10.9	6.1	4.0	3.5
사회	11.6	7.6	6.5	6.6	5.0
과학	11.7	7.7	8.1	5.1	4.8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 TIMSS 수학·과학 성취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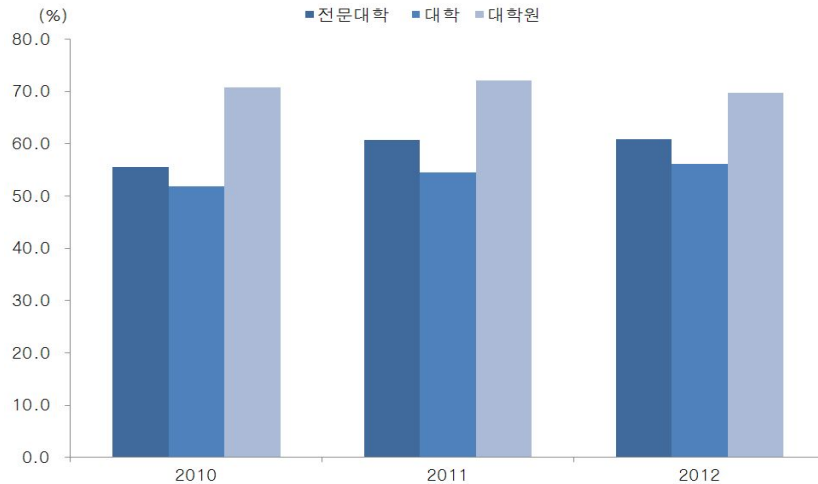
주: 1) TIMSS 수학 및 과학 성취도란 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국제교육성취도평협회)에서 주관하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 Science Study)를 통해 4년 주기로 각국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 학업성취도를 측정된 자료 중 중학교 2학년의 수학과 과학 점수를 의미함.
출처: IEA, TIMSS 2011 International Mathematics(Science) Report.

	호주	영국	미국	핀란드	일본	홍콩	대만	한국
수학	505	507	509	514	570	586	609	613
과학	519	533	525	552	558	535	564	560

24310. 대학졸업자취업률

■ 주요지표

대학 졸업자 취업률, 2010-2012



주: 1) 대학졸업자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2010년부터 건강보험 DB와 연계하여 취업률 산출되고 있음.
출처: 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대학졸업자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취업대상자는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와 군입대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함.
- 측정 방법: 대학졸업자취업률 = $\frac{\{건강보험직장가입자 + 교내취업자 + 해외취업자\}}{\{졸업자 - (진학자 + 취업불가능자 + 제외인정자 + 외국인유학생)\}} \times 100$.

● 지표의 의의

이 지표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고등교육체제의 인적자원개발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조응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 지표는 정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해설

2012년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전문대학 60.8%, 4년제 대학 56.2%, 대학원 69.7%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률이 낮았다. 이 같은 통계는 OECD 평균을 밑돌면서 우리나라 고학력 인구의 취업상태가 썩 양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60%를 하회한 것을 비롯하여 직업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교육에 많은 물질적·정신적 자원을 투입한 대학원 졸업자도 70%를 하회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률의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시간이 흘러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전문대를 마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취업에서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을 자신의 경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의 획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장 취업은 용이하지만 일자리의 질 자체는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구직 및 교육·훈련에 관심이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니트의 추이는 청년층의 비노동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낮은 취업률과 함께 상승하는 니트 비율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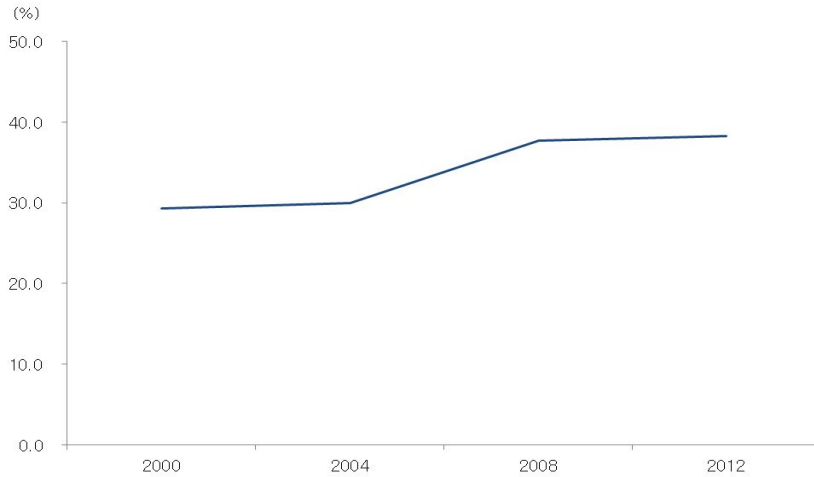
고등교육기관별 졸업자의 성별 취업률, 2010-2012

	2010	2011	2012
전체	55.0	58.6	59.5
전문대학	55.6	60.7	60.8
남자	56.0	61.0	60.9
여자	55.2	60.4	59.9
4년제대학	51.9	54.5	56.2
남자	55.7	58.7	59.8
여자	47.9	50.0	51.7
대학원	70.7	72.1	69.7
남자	78.9	80.6	76.9
여자	58.3	59.4	59.1

주: 1) 2010년부터 건강보험 DB와 연계하여 취업률 산출.
출처: 통계청·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년도.

■ 보조지표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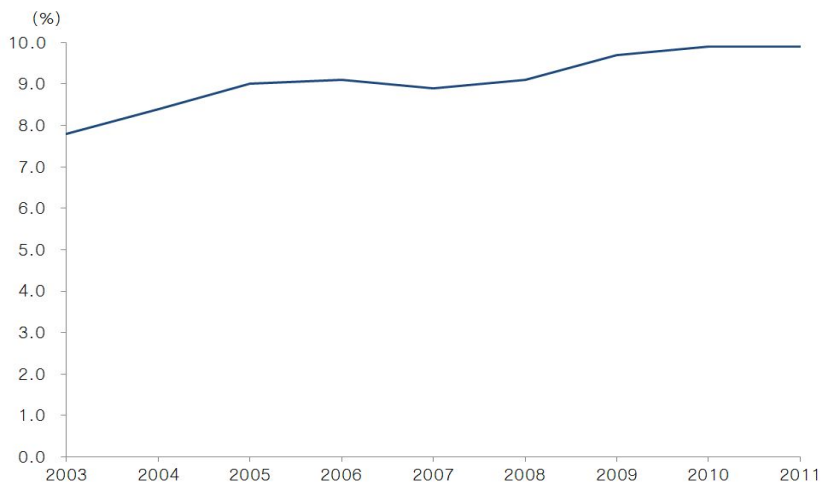
주: 1)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는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 졸업(4년제 미만, 4년제 이상)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 취업한 적이 있거나 취업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전혀 관계없음, 2=관계없는 편임, 3=보통, 4=일치하는 편임, 5=매우 일치함)로 설문한 문항에서 응답자 중 전공과 직업이 일치(4~5)한다고 답한 비율로 계산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4	2008	2010	2012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29.3	30.0	37.7	36.3	38.3

니트(NEET)비율, 2003-2011



주: 1) 니트(NEET)비율은 15-34세의 인구 중 ①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 및 기관에 통학하지 않고 ② 고용상태에 있지 않으며 ③ 구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④ 가사나 육아를 하고 있지도 않고 ⑤ 배우자가 없는 인구의 비율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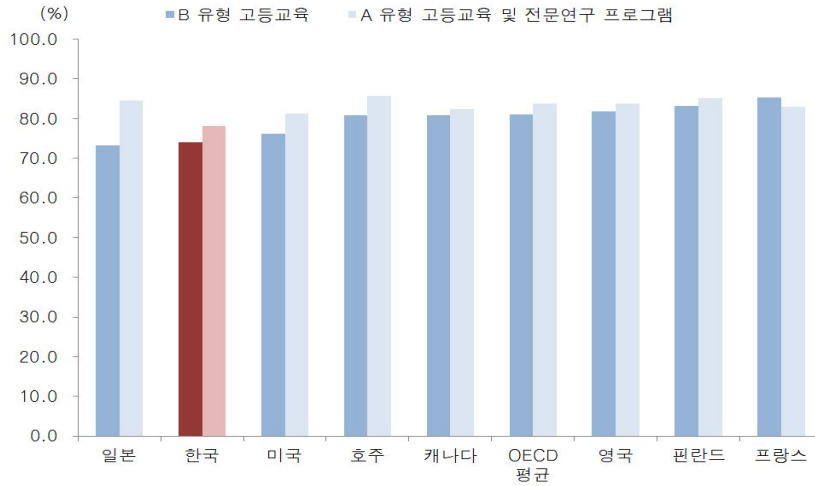
출처: 남재량(2012), "고졸 NEET와 대졸 NEET", 「월간 노동리뷰」, 2012년 4월호, 39-54.

통계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니트(NEET) 비율	7.8	8.4	9.0	9.1	8.9	9.1	9.7	9.9	9.9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2011



주: 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대상자 중 실제로 취업한 자의 비율임. 여기에서 B유형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각종학교(전문대학과정), 기술대학(전문대학과정),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을, A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프로그램은 대학(교),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기술대학/사내대학(대학과정) 및 전문대학원/일반대학원(박사과정)을 지칭함.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 2013.

통계표

	일본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OECD 평균	영국	핀란드	프랑스
B 유형 고등교육	73.2	74.0	76.2	80.8	80.9	81.0	81.7	83.1	85.2
A 유형 고등교육 및 전문연구	84.4	78.1	81.1	85.6	82.3	83.8	83.7	85.0	83.0

2.5. 문화와 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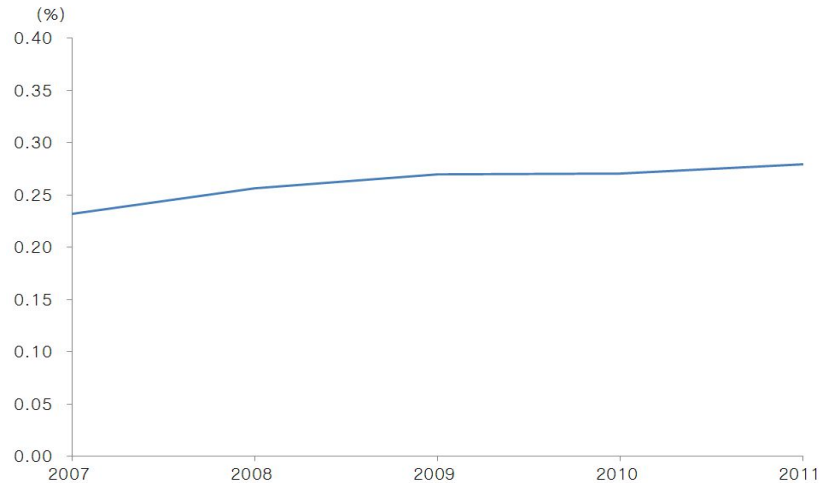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문화와 여가	문화지원	• 문화재정		
		• 문화여가비	•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	
	문화여가활동	• 문화예술관람률	•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 독서율	• 서적종류별 독서율	
		• 생활체육참여율	• 스포츠경기관람률	
		• 여가시간	• 여가활동종류별 여가시간 • 휴가활용률	• 여가시간
		• 여가만족도		
	미디어	• 인터넷이용률	• 인터넷서비스종류별 이용률	• 인터넷이용률

2.5.1. 문화자원

25101. 문화재정

■ 주요지표

GDP 대비 문화재정, 2007-2011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GDP 대비 문화재정은 문화재정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문화재정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에 편성되는 예산 및 기금으로 구성됨.
- 측정 방법: $\text{GDP 대비 문화재정} = (\text{문화재정} \div \text{국내총생산(GDP)}) \times 100$.

● 지표의 의의

국내총생산 대비 문화재정의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문화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문화와 여가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서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필수적이다. 문화를 위한 민간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부의 재원 투입은 시장의 작동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문화재정은 문화여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 지표의 적합한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

재, 문화재정이 국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총예산 대비 문화재정의 비율 대신 국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문화재정의 비율을 작성하였다. 둘째, 본 지표는 문화정책의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예산과 기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타 부서와 지자체가 문화정책 관련 사업 수행에 투입하는 재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문화재정의 규모는 제시한 통계량을 훨씬 더 상회한다. 이와 같은 한계가 있으나 본 지표는 시계열 비교를 통해 문화재정의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 **해설**

문화재정은 2007년 2조 2,660억 원에서 2011년 3조 4,557억 원으로 연평균 11.1% 증가해 왔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 대비 문화재정의 비중은 2007년 0.23%에서 2011년 0.2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문화재정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재정 외에 타 부서와 지자체가 문화정책 관련 사업 수행에 투입하는 재원은 포함되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문화 분야를 위한 공공지출은 여기서 제시된 문화재정 비중을 상회한다.

분야별로는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종무, 홍보, 국립문화예술기관 등을 포괄하는 문화예술부문이 2011년 1조4천5백5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 국민의 문화여가 활성화 기반 조성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의 확충과 같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중이 최근 증가하였다.

● **상세 통계표**

GDP 대비 문화재정, 2007-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문화재정(억 원)	22,660	26,354	28,746	31,747	34,557
예산	12,681	15,136	16,665	18,167	19,604
기금	9,979	11,218	12,081	13,580	14,954
분야별					
문화예술부문	9,440	10,709	11,275	13,266	14,552
관광부문	6,649	7,766	8,944	8,901	9,257
체육부문	4,419	5,304	6,431	7,303	8,403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152	2,575	2,096	2,277	2,346
국내총생산(억 원)	9,750,130	10,264,518	10,650,368	11,732,749	12,351,605
GDP 대비 문화재정(%)	0.23	0.26	0.27	0.27	0.28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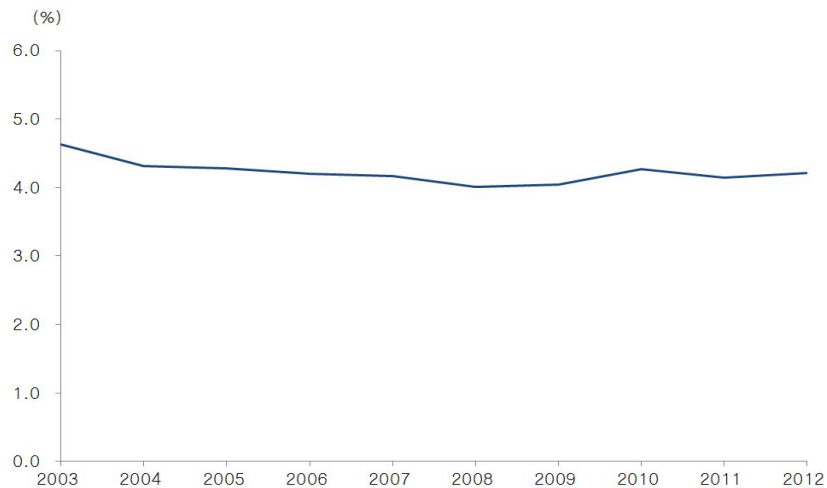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없음)

25102. 문화여가비

■ 주요지표

가구의 문화여가비 지출률, 2003-2012



주: 1) 문화여가비지출률은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대비 문화여가비의 비율임.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문화여가비 지출률은 가구의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비가 차지하는 비율. 문화여가비는 영상 음향기기(텔레비전 등),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영상음향 및 정보 기기 수리,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 화훼 관련 용품, 애완동물 관련 물품 등으로 구성되는 오락문화비임.
- 측정 방법: 문화여가비 지출률=(월평균 오락·문화비 ÷ 월평균 가계지출)×100

● 지표의 의의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출을 가계지출에 대비하여 파악함으로써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수준을 제시한다. 문화여가비는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해설

가구의 문화여가비 지출은 2003년 99,522원에서 2012년 135,691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6%에서 2008년 4.1%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2012년 4.2%가 되었다. 활동종류별로는 서적의 비율이 2003년 26.5%에서 14.0%까지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문화서비스는 15.7%에서 20.8%로 증가하였고 단체여행비는 8.8%에서 18.1%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보화영향으로 인한 독서 활동 감소, 문화예술관람 활동 및 관광 활동의 증가와 같은 문화여가생활의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여가 활동은 경제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탄력재의 성격을 가진다. 소득분위별로 문화여가비를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문화여가비의 비율이 높아서 2012년 소득 1분위의 가계지출 대비 문화여가비 비율이 3.7%인 반면 5분위는 4.7%로 나타났다. 문화여가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도 대체로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경제위기에 문화여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 상세 통계표

가구의 문화여가비 지출률, 2003-20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문화여가비(1,000원)	99.5	98.2	101.2	104.1	107.7	108.9	112.3	126.6	128.9	135.7
가계지출(1,000원)	2,147	2,277	2,366	2,475	2,584	2,718	2,776	2,961	3,115	3,217
문화여가비 지출률(%)	4.6	4.3	4.3	4.2	4.2	4.0	4.0	4.3	4.1	4.2

주: 1) 문화여가비 지출률은 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 대비 문화여가비의 비율임. 전국 2인이상 가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문화여가비의 지출구성, 2003-20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영상음향기기	5.7	6.6	6.3	7.7	7.9	8.0	8.2	7.2	7.1	6.3
사진광학장비	1.8	2.6	2.1	1.7	1.9	1.8	1.9	1.7	1.3	1.0
정보처리장치	8.3	8.4	9.0	8.9	9.2	7.5	8.3	7.7	7.2	6.2
기록매체	0.9	0.8	0.6	0.4	0.3	0.3	0.2	0.2	0.2	0.2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0.6	0.6	0.6	0.6	0.8	0.8	1.0	1.0	0.9	0.8
오락문화내구재	0.3	0.2	0.2	0.2	0.2	0.2	0.2	0.2	0.2	0.2
악기기구	1.1	1.1	1.2	1.0	1.5	1.2	0.9	0.9	1.1	1.0
오락문화내구재 유지및수리	0.2	0.2	0.1	0.1	0.2	0.2	0.1	0.1	0.1	0.2
장난감 및 미용품	3.8	3.4	3.3	3.1	3.3	3.6	3.9	3.8	4.4	4.5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3.9	3.9	3.8	3.8	3.8	3.9	3.8	4.0	4.5	4.5
화훼 관련 용품	1.9	2.3	2.5	2.4	2.3	2.2	2.3	2.2	2.2	2.2
애완동물 관련 물품	1.5	1.5	1.2	1.2	1.2	1.2	1.3	1.3	1.6	1.7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1.0	1.0	0.8	0.8	1.0	1.0	0.8	0.9	0.9	1.0
운동 및 오락서비스	9.8	11.5	11.4	10.7	10.7	11.8	11.7	11.5	11.5	11.6
문화서비스	15.7	17.4	18.2	18.0	18.0	18.9	20.1	19.2	20.4	20.8
복권	0.5	0.4	0.4	0.4	0.3	0.3	0.3	0.2	0.3	0.2
서적	26.5	21.7	20.8	20.8	19.4	20.8	18.9	17.3	16.0	14.0
기타인쇄물	3.5	3.2	2.9	2.6	2.3	2.6	2.6	2.1	1.9	1.7
문구	4.0	3.8	3.3	3.2	2.9	3.0	3.0	3.0	3.5	3.7
단체여행비	8.8	9.3	11.1	12.4	12.8	10.6	10.6	15.4	14.8	18.1

주: 1) 통계치는 월평균 오락문화비 중 해당 지출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임.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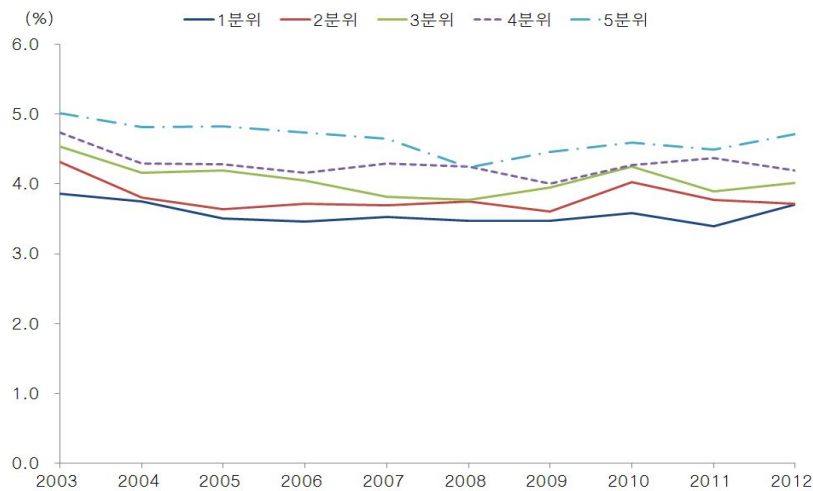
가구 소득 대비 문화여가비, 2003-20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문화여가비(1,000원)	99.5	98.2	101.2	104.1	107.7	108.9	112.3	126.6	128.9	135.7
가구소득(1,000원)	2,631	2,789	2,898	3,038	3,200	3,391	3,432	3,632	3,842	4,077
소득 대비 문화여가비(%)	3.8	3.5	3.5	3.4	3.4	3.2	3.3	3.5	3.4	3.3

주: 1) 가구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문화여가비와 가구소득은 월평균 금액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 지출률, 2003-2012



주: 1) 문화여가비지출률은 가계지출 대비 문화여가비의 비율임. 전국 2인 이상 가구 기준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통계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03	3.9	4.3	4.5	4.7	5.0
2004	3.8	3.8	4.2	4.3	4.8
2005	3.5	3.6	4.2	4.3	4.8
2006	3.5	3.7	4.0	4.2	4.7
2007	3.5	3.7	3.8	4.3	4.6
2008	3.5	3.7	3.8	4.2	4.2
2009	3.5	3.6	4.0	4.0	4.5
2010	3.6	4.0	4.2	4.3	4.6
2011	3.4	3.8	3.9	4.4	4.5
2012	3.7	3.7	4.0	4.2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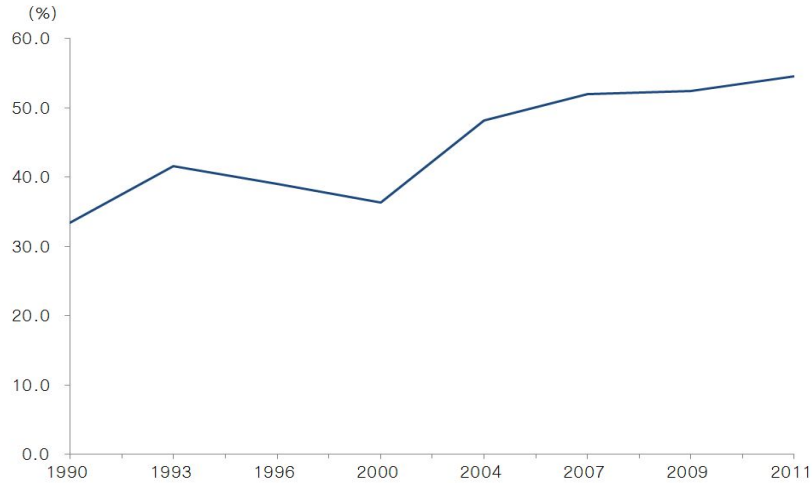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2.5.2. 문화여가활동

25203. 문화예술관람률

■ 주요지표

문화예술관람률, 1990-2011



주: 1) 문화예술관람률은 조사대상인구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조사대상인구는 200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이며,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문화예술관람률은 국민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위해 문화예술시설에 가 본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문화예술행사의 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을 포함함.
- 측정 방법: 문화예술관람률=(문화예술관람객수 ÷ 조사대상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문화예술관람률은 국민이 문화예술 활동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기본 지표이다. 문화예술관람률을 통해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파악하며 문화예술 소비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문화예술 활동은 다양한 경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웰빙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공동체의 유지에 기여한다. 문화예술 행사 관람은 문화예술 활동이 가지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활동의 의미를 가진다.

● 해설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예술관람률은 33.4%에서 54.5%로 증가하였다. 1993년에서 200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997년의 경제위기 전후로 문화예술행사 관람이 위축되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의 문화향수에 대한 욕구 증가가 문화 인프라 구축 및 문화산업 성장과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문화예술활동은 인구학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 나이 많은 연령층보다는 젊은 연령층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2009년에 비해 2011년에 50대의 증가폭이 6.2%포인트로 가장 커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관람률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차이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서 2011년까지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을 보면 영화의 관람률이 가장 높고 무용의 관람률이 가장 낮아서 대중적인 문화산업과 순수예술 소비층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단기적으로 국민의 웰빙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다양한 부문의 문화예술 관람이 증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 상세 통계표

문화예술관람률, 1990-2011

	(%)							
	1990	1993	1996	2000	2004	2007	2009	2011
문화예술관람률	33.4	41.6	39.0	36.3	48.2	52.0	52.4	54.5

주: 1) 문화예술관람률은 조사대상인구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조사대상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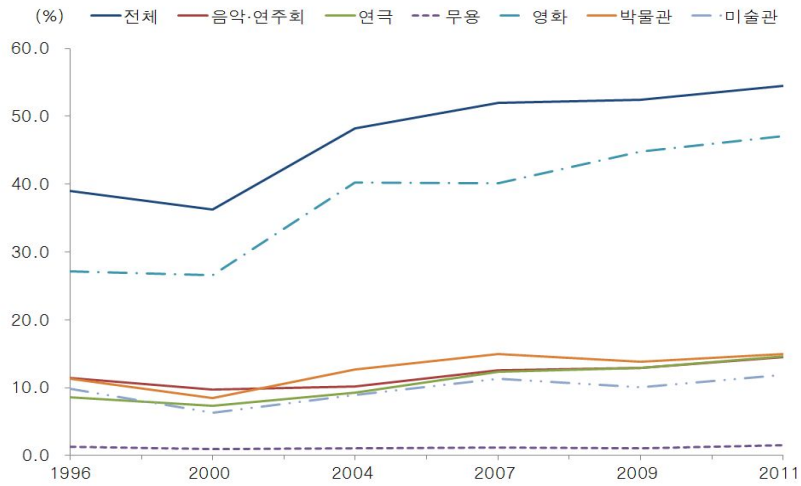
성 및 연령집단별 문화예술관람률, 2009-2011

	(%)	
	2009	2011
전체	52.4	54.5
성		
남자	50.5	51.5
여자	54.2	57.4
연령집단		
20세 미만	77.2	77.9
20-29세	79.6	78.2
30-39세	68.2	70.6
40-49세	53.4	58.7
50-59세	35.0	41.2
60세 이상	13.4	16.6

주: 1) 문화예술관람률은 조사대상인구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조사대상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문화예술 종류별 관람률, 1996-2011



주: 1) 문화예술 종류별 관람률은 조사대상인구 중 지난 1년간 해당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2) 조사대상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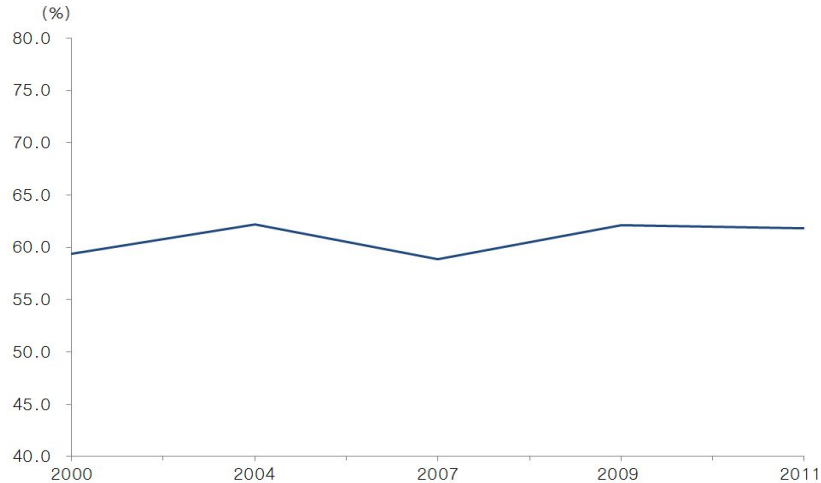
	전체	음악·연주회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1996	39.0	11.4	8.6	1.3	27.2	11.3	9.8
2000	36.3	9.7	7.3	0.9	26.6	8.5	6.3
2004	48.2	10.2	9.3	1.1	40.2	12.7	8.9
2007	52.0	12.6	12.3	1.2	40.1	15.0	11.3
2009	52.4	12.9	12.9	1.1	44.8	13.8	10.1
2011	54.5	14.5	14.6	1.5	47.1	15.0	11.9

■ 국제비교지표 (없음)

25204. 독서율

■ 주요지표

독서율, 2000-2011



주: 1) 독서율은 조사대상인구 중 중 지난 1년간 독서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조사대상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독서율은 국민 중 1년간 독서(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류 포함, 교과서 및 참고서제외)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일반서적은 잡지류, 교양서적, 직업과 관련된 서적류, 생활·취미·정보서적, 기타(만화 무협지 등)서적 등을 포함하고 교과서 및 학습참고서는 제외함. 교양서적은 종교, 철학,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문학, 소설, 어학, 역사, 지리, 예술서적, 시집 등이 포함.
- 측정 방법: 독서율=(지난 1년간 독서 경험자÷조사대상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독서는 지식, 정보, 교양, 즐거움과 같이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활동으로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 뉴미디어의 보급에 따라 활자매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독서 인구의 변화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독서율은 우리나라 국민의 미디어 이용에서 활자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독서율은 2000년 59.4%에서 2011년 61.8%로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 독서율을 보면 2000년에는 10대(82.1%)와 20대(83.0%)가 가장 높았으나 2011년에는 10대(62.6%)에서 독서율의 하락이 두드러졌고 20대(76.9%)의 독서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 인구의 독서율은 같은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 정보화의 영향이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독서율의 상승을 가져온 반면 젊은 층에서는 독서율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서적종류별 독서율에서는 교양서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취미 정보서적의 독서율이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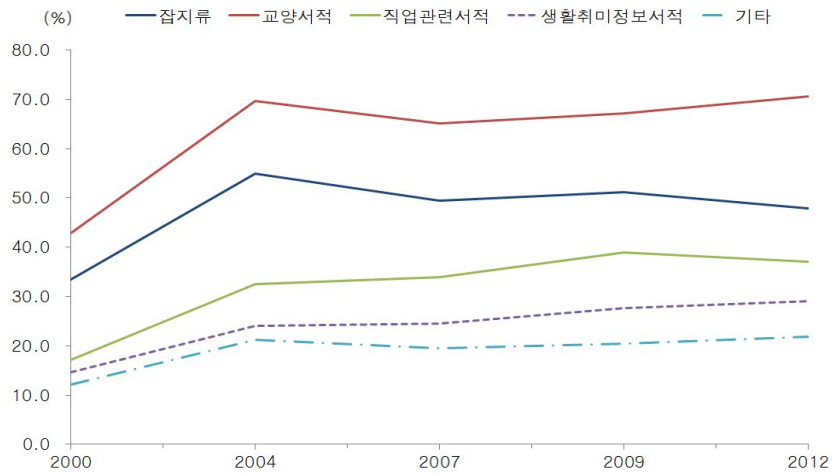
성 및 연령집단별 독서율, 2000-2011

	(%)				
	2000	2004	2007	2009	2011
전체	59.4	62.2	58.9	62.1	61.8
성					
남자	60.2	62.0	58.5	62.4	61.0
여자	58.6	62.4	59.3	61.7	60.9
연령집단					
20세 미만	82.1	81.5	78.1	78.3	62.6
20-29세	83.0	82.1	78.7	81.6	76.9
30-39세	73.0	78.1	74.8	78.9	75.8
40-49세	56.6	63.5	61.0	67.6	68.0
50-59세	38.2	42.9	43.5	48.7	51.9
60세 이상	19.2	20.5	21.4	23.9	26.6

주: 1) 독서율은 조사대상인구 중 중 지난 1년간 독서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조사대상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서적종류별 독서율, 2000-2011



주: 1) 서적종류별 독서율은 조사대상인구 중 중 지난 1년간 해당 서적을 독서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조사대상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잡지류	교양서적	직업관련서적	생활취미정보서적	기타
2000	33.4	42.8	17.1	14.6	12.2
2004	54.9	69.7	32.5	24.0	21.3
2007	49.5	65.2	33.9	24.6	19.5
2009	51.1	67.2	39.0	27.6	20.4
2012	47.9	70.6	37.0	29.1	21.8

■ 국제비교지표 (없음)

25204. 생활체육참여율

■ 주요지표

성별 생활체육참여율, 1989-2012



주: 1) 생활체육참여율은 10세 이상 인구 중 1회에 30분 이상 할애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임.
 2) 2006년 이전 조사의 조사대상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생활체육참여율은 10세 이상 인구 중 1회에 30분 이상 할애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임. 규칙적 체육활동이란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는 활동임. 체육활동은 일상생활의 걷기와 학생의 경우 학교 체육수업은 제외하며 운동 횟수는 1일 1회를 기준으로 함.
- 측정 방법: 생활체육참여율=(주 2회 이상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조사대상 인구)×100.

● 지표의 의의

생활체육참여율은 국민들의 건강 및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현황을 보여 준다. 생활체육은 전문 운동선수 중심의 엘리트 체육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스포츠 경기 관람과 같이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체육 활동이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은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 사회적 접촉 증가 등을 통해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 해설

1989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은 등락을 반복하였다. 1989년 27.2%에서 1997년 38.8%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33.4%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2006년 44.1%까지 증가하였다. 이후에도 다시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생활체육 참여율의 등락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설명이 없다.

성별 참여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가운데 전체 참여현황과 비슷한 추세로 증감을 보였다. 연령별 참여율에서는 10대(15-19세)의 생활체육참여율이 1997년(51.0%) 이후 감소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50대, 60대의 중·장년층의 비율은 89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 70세 이상의 노령인구 또한 2006년부터 체육참여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고령화의 진전 속에서 노인층의 적극적인 체육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스포츠 경기에 대한 관람률은 2000년에서 2011까지 9.5%에서 24.3%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남자의 스포츠 경기 관람률이 34.2%인 반면 여자는 14.9%로 나타나 절반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여자의 스포츠 경기 관람률도 남자와 함께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의 프로 스포츠 산업의 성장에 따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연령집단별 생활체육참여율, 1989-2012

	(%)									
	1989	1994	1997	2000	2003	2006	2008	2010	2012	
전체	27.2	37.6	38.8	33.4	39.8	44.1	34.2	41.5	35.0	
성										
남자	18.3	48.1	46.7	37.8	41.4	48.4	35.5	42.5	35.1	
여자	8.9	55.8	30.0	28.9	38.3	40.0	32.8	40.5	34.9	
연령집단										
20세 미만	12.1	50.2	51.0	39.9	32.6	38.0	30.5	34.8	27.4	
20-29세	-	39.0	39.6	35.6	24.4	45.2	30.2	36.4	30.3	
30-39세	4.7	33.3	35.7	25.9	35.8	41.7	31.8	38.0	32.1	
40-49세	3.9	31.3	35.3	30.8	46.8	50.9	37.8	44.4	38.5	
50-59세	2.1	34.8	37.8	39.1	54.0	56.7	40.6	48.5	41.4	
60-69세	1.1	34.0	29.6	36.8	53.3	33.0	39.6	51.1	39.8	
70세 이상	-	-	-	-	-	24.3	28.5	42.8	37.1	

주: 1) 생활체육참여율은 10세 이상 인구 중 1회에 30분 이상 할애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임.

2) 2006년 이전 조사의 조사대상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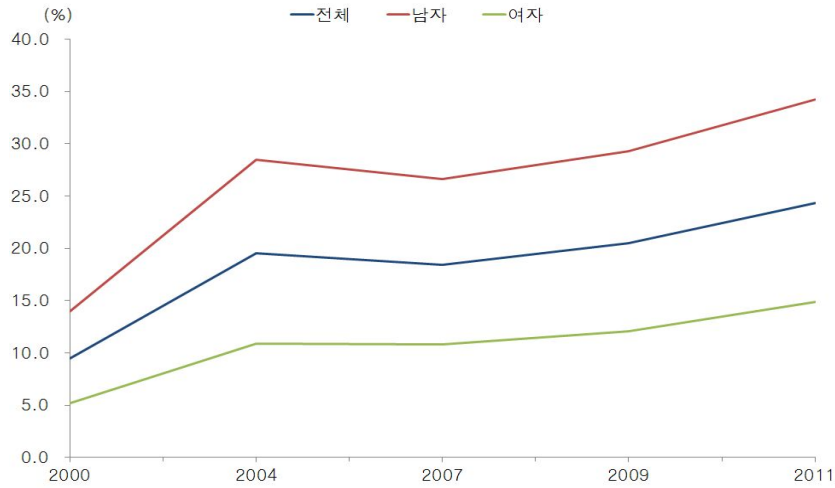
3) 1989년 조사에서는 20-24세, 25-29세로 구분해 조사되었으므로 제외시켰음.

4) 1989년부터 2003년 자료의 60-69세는 60세 이상을 의미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성별 스포츠경기관람률, 2000-2011



주: 1) 스포츠경기관람률은 조사대상인구(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스포츠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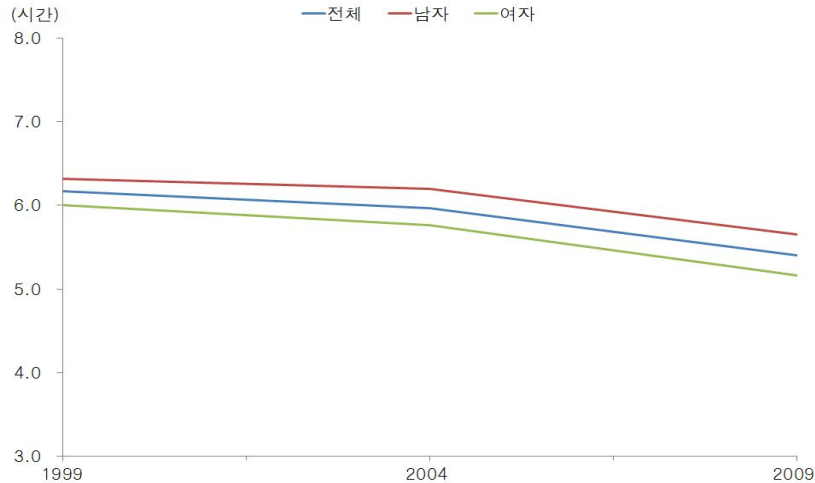
	2000	2004	2007	2009	2011
전체	9.5	19.5	18.4	20.5	24.3
남자	14.0	28.5	26.6	29.3	34.2
여자	5.2	10.9	10.8	12.1	14.9

■ 국제비교지표 (없음)

25206. 여가시간

■ 주요지표

성별 여가시간, 1999-2009



주: 1) 여가시간은 10세 이상 인구의 1일 평균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여가시간은 10세 이상 인구의 1일 평균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임. 여가시간에는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이용(대중매체),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기타 등의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포함함.
- 측정 방법: 통계청이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집계한 10세 이상 인구의 행위별 평균시간 자료 중 교제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요일평균 사용 시간을 이용하여 산출함.

● 지표의 의의

여가시간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여가생활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시한다. 여가시간은 여가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장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인해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지 못해 왔다. 적정한 수준의 여가시간은 일 중심의 사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며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 해설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파악한 국민의 여가시간은 1999년 6시간 10분에서 2004년 5시간 58분, 2009년 5시간 24분으로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의 여가시간이 짧았다. 남녀와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에서 여가시간의 감소가 나타났다. 주5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 것은 주로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보면 휴가활용률이 2007년 66.4%에서 2008년 69.9%로 증가했으나 이후 2010년에는 62.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2010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휴가활용이 저조한 것도 역시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여가시간 감소와 휴가활용 위축이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여가시간의 감소를 야기하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활동유형별로는 2009년에 TV 등의 대중매체 이용에 가장 많은 2시간 39분을, 그 다음으로는 교제활동에 59분,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에 51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여가활동이 대중매체 이용에 집중됨으로써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줄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06년에 실시한 OECD 주요국의 여가시간 비교를 보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 멕시코는 하루 중 15.8%를 여가시간에 할애하며, 노르웨이는 26%로 가장 많은 여가시간활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하루 24시간 중 21.6%를 여가활용에 할애함으로써 OECD 평균 수준의 여가시간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요일별 여가시간, 199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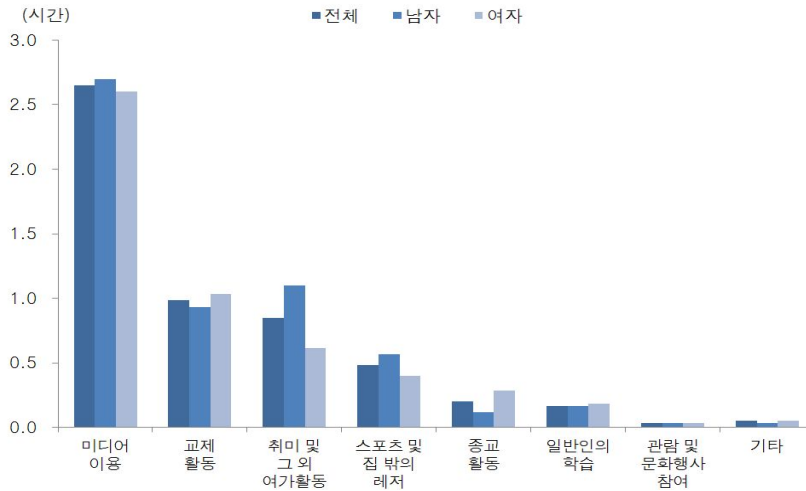
(시간:분)

	전체		평일		토요일		일요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999	6:10	6:00	5:43	5:40	6:38	6:26	7:53	7:17
2004	5:58	5:46	5:32	5:26	6:36	6:16	7:36	6:56
2009	5:24	5:10	4:54	4:49	6:16	5:46	7:01	6:22

주: 1) 여가시간은 10세 이상 인구의 1일 평균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한 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성 및 여가활동종류별 여가시간, 2009



주: 1) 여가시간은 10세 이상 인구의 해당 여가활동에 사용한 1일 평균 시간임.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통계표

	미디어이용	교제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종교활동	일반인의 학습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기타
전체	2:39	0:59	0:51	0:29	0:12	0:10	0:02	0:03
남자	2:42	0:56	1:06	0:34	0:07	0:10	0:02	0:02
여자	2:36	1:02	0:37	0:24	0:17	0:11	0:02	0:03

성별 휴가활용률, 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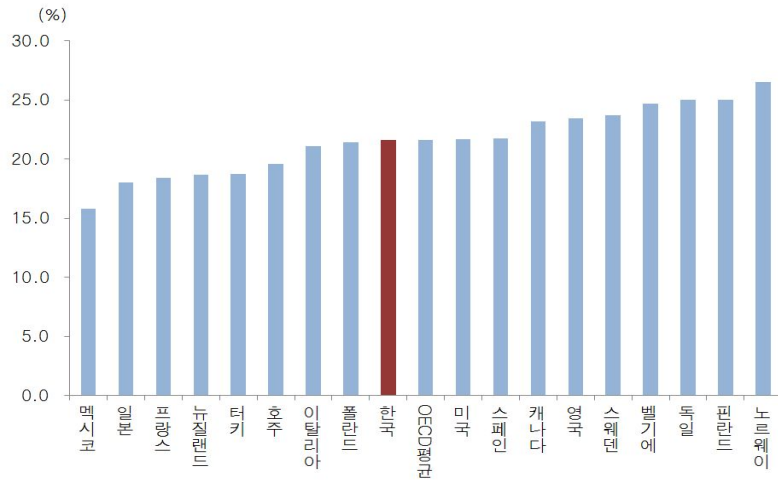
주: 1) 휴가활용률은 조사대상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7	2008	2010	2012
전체	66.4	69.9	62.5	62.5
남자	69.2	71.8	64.4	63.6
여자	63.6	68.0	60.8	61.5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여가시간, 2006



주: 1) 통계치는 1일 평균 여가시간을 하루 24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OECD. *Stat: time-use survey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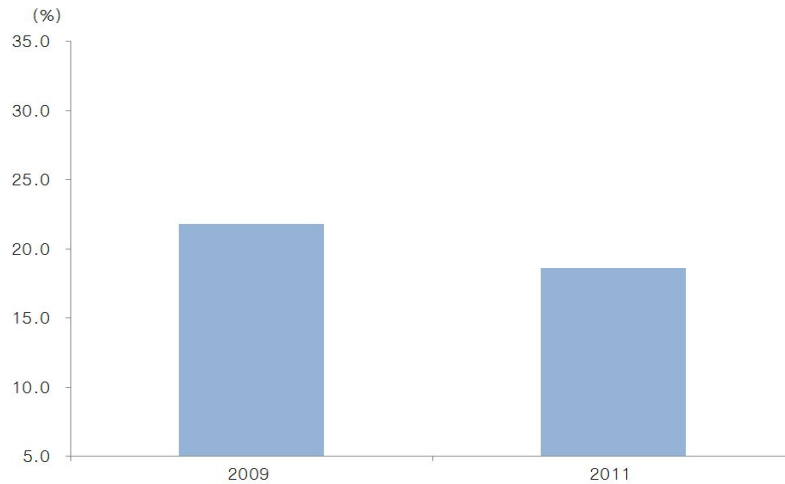
통계표

	멕시코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터키	호주	아일랜드	폴란드	한국	OECD 평균
하루 중 여가시간의 비율	15.8	18.0	18.4	18.7	18.7	19.6	21.1	21.4	21.6	21.6
	미국	스페인	캐나다	영국	스웨덴	벨기에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하루 중 여가시간의 비율	21.7	21.7	23.1	23.4	23.7	24.7	25.0	25.0	26.0	

25207. 여가만족도

■ 주요지표

여가만족도, 2009-2011



주: 1) 여가만족도는 조사대상자인구(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이고, 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 중 현재 여가활동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여가만족도는 여가활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낸 지표로서, 국민 중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격년으로 조사되는 여가만족도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문항은 '귀하는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음.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 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함.

● 지표의 의의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는 여가활용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다수의 경험적인 연구들이 여가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는 여가 만족이 삶의 질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여가생활의 만족은 건강이나 경제적 조건과 같은 다른 삶의 영역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친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 해설

여가만족도는 2009년 21.8%에서 2011년 18.6%로 3.2%p 감소하였다. 성별로 만족도를 구분해 보아도 남성과 여성 모두 2.5%포인트 하락하였고, 연령별로는 10대에서 4.6%포인트 상승한 반면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감소추세를 보인다. 여가 시설이 확충되고 여가 활동 관련 산업이 성장했음에도 여가만족도가 감소한 이유는 여가시간의 부족,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증가, 경제 불황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연령집단별 여가만족도, 2009-2011

	2009	2011
전체	21.8	19.3
성		
남자	23.2	20.7
여자	20.5	18.0
연령집단		
20세 미만	25.1	29.7
20-29세	26.1	23.1
30-39세	20.9	16.7
40-49세	21.4	18.2
50-59세	21.4	18.6
60세 이상	18.6	14.3

주: 1) 여가만족도는 조사대상자인구(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이고, 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임) 중 현재 여가활동에 '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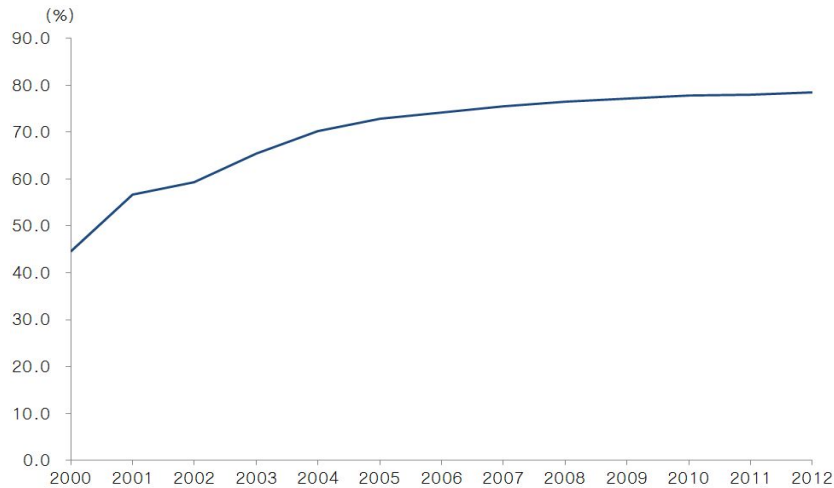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2.5.3. 미디어

25308. 인터넷이용률

■ 주요지표

인터넷이용률, 2000-2012



주: 1) 인터넷이용률은 조사대상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임.
2) 조사대상인구는 2001년까지 7세 이상 인구, 2002-2005년까지는 6세 이상 인구, 2006년부터 3세 이상 인구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인터넷이용률은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인터넷 이용률=(인터넷 사용 인구수 ÷ 조사대상인구수) × 100.

● 지표의 의의

인터넷이용률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 규모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의 비율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보화 과정에 배제된 인구의 비율을 보여줌으로써 지식정보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방송통신 관련 국제지수 산출을 위한 주요 평가항목으로 활용된다.

● 해설

인터넷이용률은 2000년 44.7%에서 2012년 78.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4년에 70%대에 올라선 이후 증가세가 완만해졌다. 성별 인터넷이용률도 전체 이용률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연령별 이용률에서는 50대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2001년 상반기: 14.9%, 2012년 상반기: 55.2%)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종류별 이용률을 보면 2012년에 이메일이 84.8%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인터넷뱅킹이 43.2%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2012년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인터넷이용률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이용률은 84.1%로 노르웨이의 95.0%보다는 낮으나 인도(12.6%)와 멕시코(38.4%)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인터넷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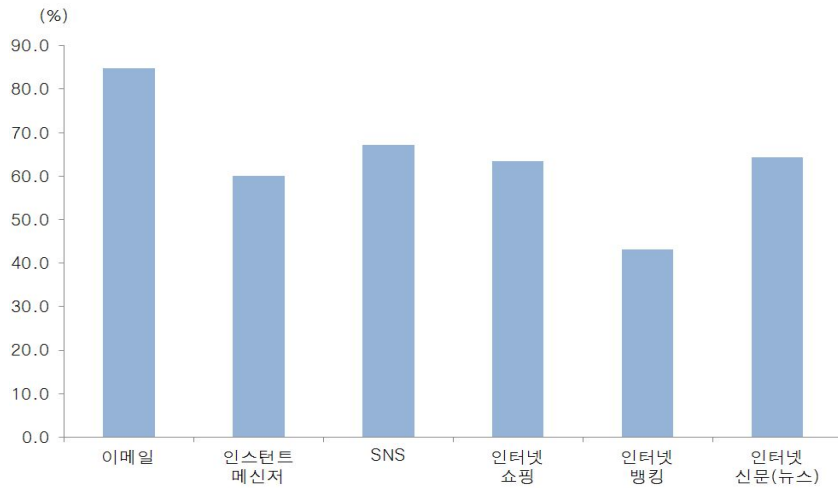
성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 2001-2010

	(%)															
	2001	2002	2002	2003	2003	2004	2004	2005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9	2010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1/2	1/2
성별																
남자	63.0	63.5	65.2	70.7	71.7	74.4	75.9	77.4	78.5	79.3	80.7	81.1	80.8	81.6	82.4	83.4
여자	50.2	52.4	53.6	57.5	59.2	62.0	64.6	66.3	67.2	67.6	68.9	69.9	70.3	71.5	71.9	72.4
연령별																
3-9세	-	-	-	-	-	-	-	-	-	-	-	-	79.5	82.2	85.4	85.5
10-19세	-	-	-	-	-	-	-	-	-	-	-	-	99.8	99.9	99.9	99.9
20-29세	84.6	86.6	89.8	94.3	94.5	95.0	95.3	97.2	97.9	98.1	98.9	98.9	99.3	99.7	99.7	99.9
30-39세	61.6	66.7	69.4	78.5	80.7	86.4	88.1	89.8	91.0	91.6	94.6	94.6	96.5	98.6	98.8	99.3
40-49세	35.6	38.9	39.3	50.8	51.6	58.3	62.5	67.2	68.7	71.0	74.9	77.8	79.2	82.0	84.3	87.3
50-59세	14.9	17.5	17.9	23.2	22.8	27.6	31.1	34.7	35.7	37.5	42.9	45.6	46.5	48.9	52.3	55.2
60세 이상	3.4	3.2	2.3	5.1	5.2	7.3	10.1	11.0	11.9	15.2	16.5	17.4	17.6	19.0	20.1	21.8

주: 1) 인터넷이용률은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임.
 2) 조사대상인구는 2001년까지 7세 이상 인구, 2002-2005년까지는 6세 이상 인구, 2006년부터 3세 이상 인구임.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인터넷서비스종류별 이용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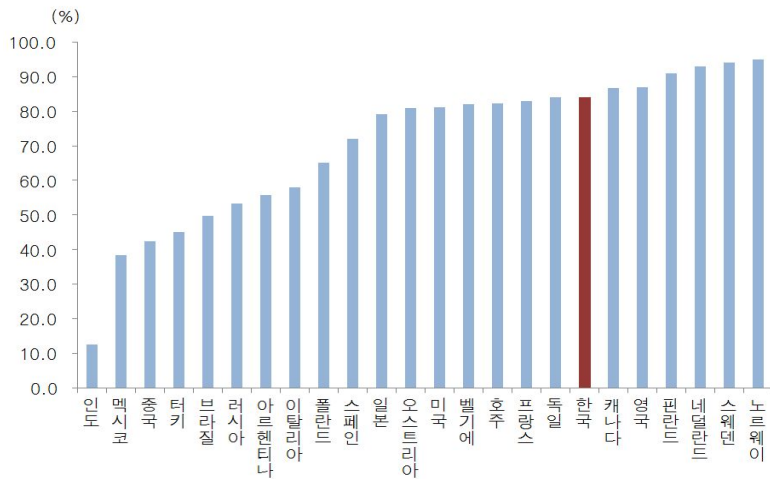
주: 1) 인터넷서비스종류별 이용률은 6세 이상 인구 중 해당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은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각 년도.

통계표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SNS	인터넷쇼핑	인터넷뱅킹	인터넷신문(뉴스)
인터넷서비스이용률	84.8	60.1	67.1	63.5	43.2	64.4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인터넷이용률, 2012



주: 1) 인터넷이용률은 해당 국가의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임.
출처: ITU, ITU indicators database, 2012.

통계표

	인도	멕시코	중국	타키	브라질	러시아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일본	오스트리아
인터넷 이용률	12.6	38.4	42.3	45.1	49.8	53.3	55.8	58.0	65.0	72.0	79.1	81.0
	미국	벨기에	호주	프랑스	독일	한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인터넷 이용률	81.0	82.0	82.3	83.0	84.0	84.1	86.8	87.0	91.0	93.0	94.0	95.0

2.6.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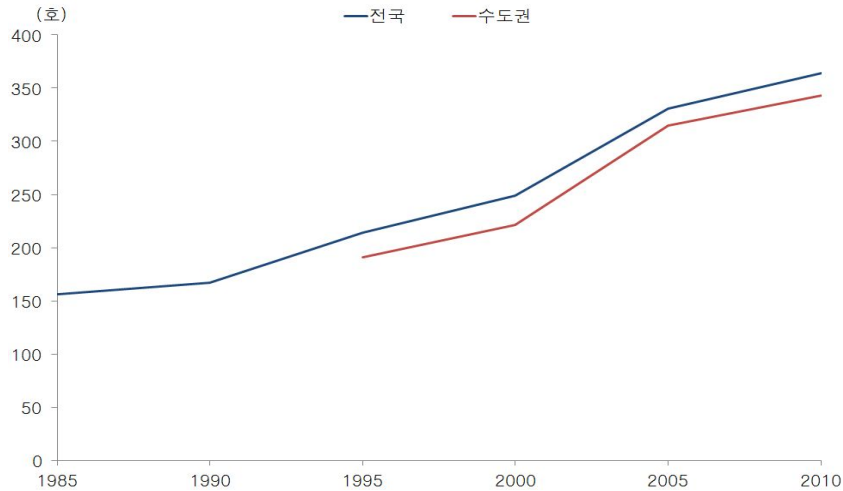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주거	주택공급·관리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 주택보급률 • 임대주택수 • 멸실주택수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인구 1,000명당 주택 건설수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수 • 인구 1,000명당 임대 주택건설수	•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 주택가격변동률
		• 주택전세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주거상황	• 소득대비임대료(RIR)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임대료(RIR)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 주택가격(PIR)	• 소득대비주택가격(PIR)
		• 자가점유율	• 주거점유형태 •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율	• 자가점유율
		• 1인당 주거면적	•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주거환경만족도	• 주택만족도	

2.6.1. 주택공급·관리

26101.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주요지표

인구 1,000명당 주택수, 1995-2010



주: 1) 2005년, 2010년 자료는 주택수 산정 시 다가구주택을 구분거처수로 산정한 주택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국내 인구수와 주택재고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임.
- 측정 방법: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여 작성됨

● 지표의 의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국내 인구수 대비 주택호수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가주택수급상황 및 재고수를 나타내며,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기초 지표 중 하나이다. 1인가구의 증가와 가구구성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구기준의 주택보급률의 정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는 주택수급상황을 보다 잘 보여주는 지표이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증가하면 주택수급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해설

지속적인 주택공급에 따라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들어 100%를 상회하여 만성적인 주택부족상태에서 거의 벗어났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주택보급률의 증가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수가 빠르게 늘어난데 기인한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여 2010년 현재 364호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10년 현재 343호이며, 지방은 380호이다. 주요국가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대개 400호를 상회하고 있어 한국의 주택재고는 그에 비해 적은 편이다.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던 70년대와 80년대와 달리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파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단독주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 현재 아파트의 비중은 60%에 달한다. 그밖에 90년대 이후, 다세대주택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구 1,000명당 임대주택 수는 약 30호이며,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많이 공급되었는데 특히 주택 가격이 높고 주거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울에 임대주택이 많다.

한편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한 주택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주택이 멸실되었다. 2012년의 멸실주택수는 7만 7,000호로 주택재고의 0.5%에 달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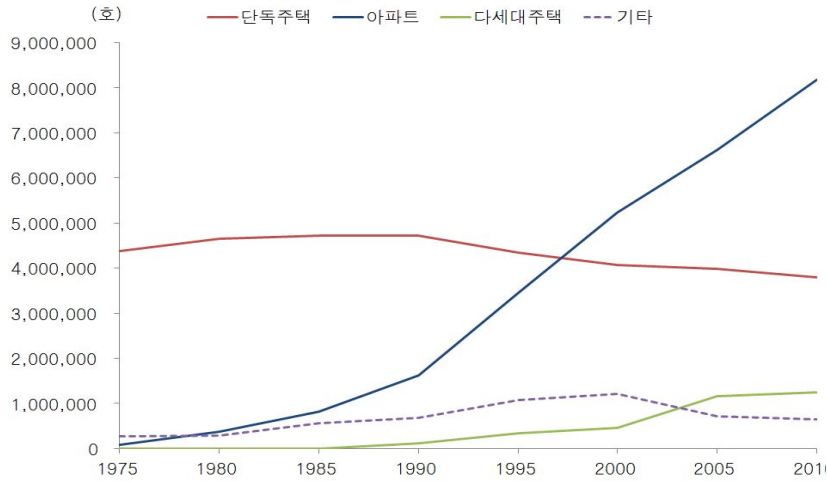
인구 1,000명당 주택수, 1995-201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전국	156.0	167.0	214.5	248.7	330.4	363.8
수도권	-	-	191.2	221.6	314.7	342.9

주: 1) 2005년, 2010년 자료는 주택 수 산정 시 다가구주택을 구분거처수로 산정한 주택수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197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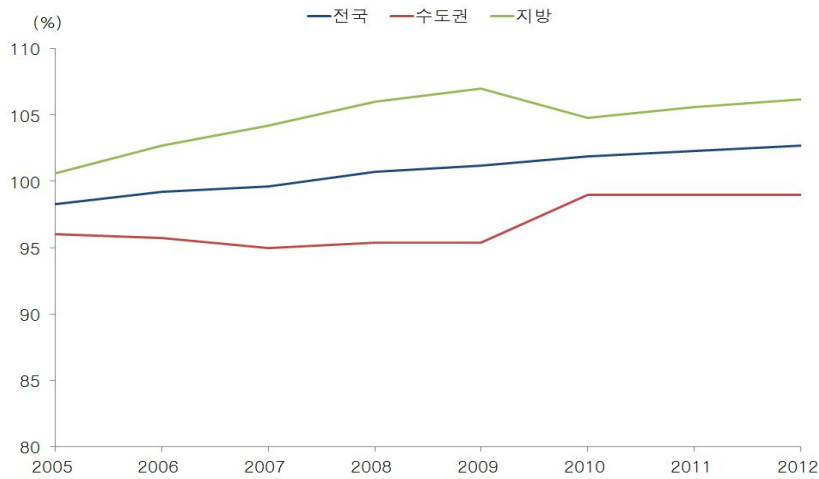


주: 1) 주택재고는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1) 영구건물, 2)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3) 독립된 출입구, 4)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의 네가지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을 포함함.
 2) 기타는 단독, 아파트, 다세대주택을 제외한 연립,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 등의 건물을 나타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단독주택	4,381,772	4,652,127	4,719,464	4,726,933	4,337,105	4,069,463	3,984,954	3,797,112
아파트	89,248	373,710	821,606	1,628,117	3,454,508	5,231,319	6,626,957	8,185,063
연립주택	164,718	161,795	349,985	487,506	734,172	812,872	520,312	503,630
다세대주택	0	0	0	115,349	336,356	453,117	1,164,251	1,246,486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98,431	131,248	213,155	202,481	342,788	392,571	198,353	151,280
기타	263,149	293,043	563,140	689,987	1,076,960	1,205,443	718,665	654,910

주택보급률, 200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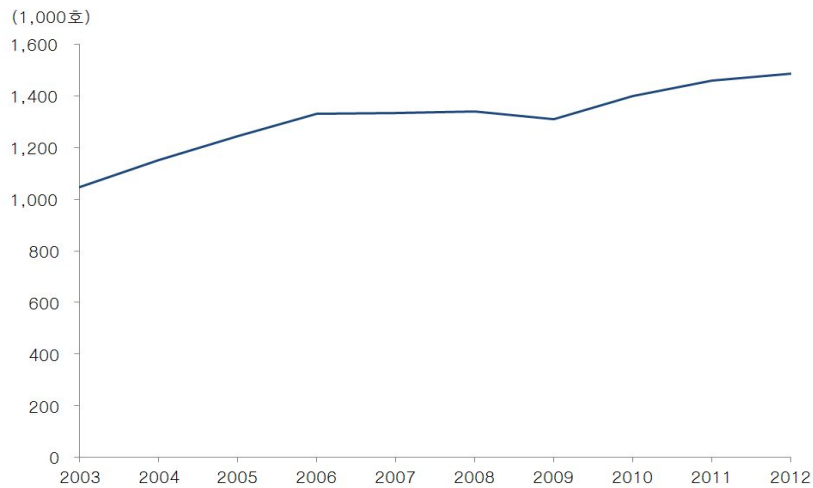
주: 1) 주택보급률은 일반 가구 수 중에서 주택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여기서 일반가구 수는 보통가구 수에서 비월연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 수를 말하며, 주택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다가구구분거처를 반영하고, 빈집을 포함함.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는 연도의 통계는 장래가구추계를 통한 추정치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장래가구추계」, 2011.

통계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98.3	99.2	99.6	100.7	101.2	101.9	102.3	102.7
수도권	96.0	95.7	95.0	95.4	95.4	99.0	99.0	99.0
지방	100.4	102.3	103.8	105.6	106.7	104.6	105.4	106.2

임대주택수,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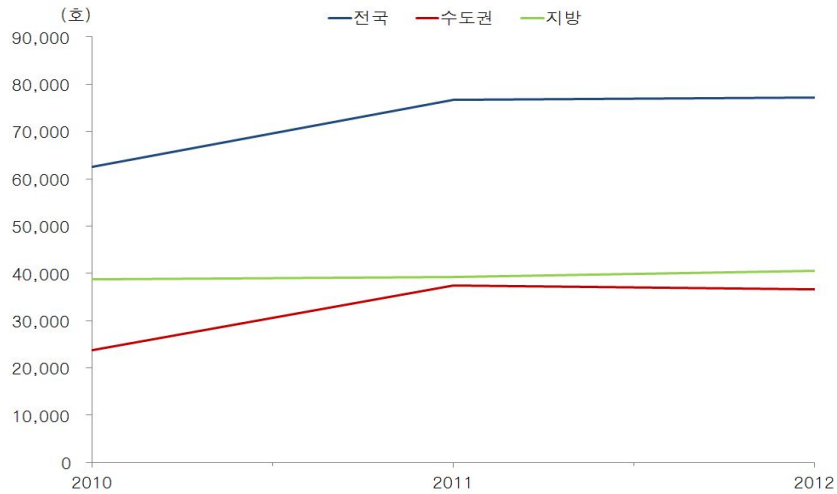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통계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임대주택수	1,046	1,150	1,243	1,330	1,335	1,341	1,311	1,399	1,460	1,487

멸실주택수, 2010-2012



주: 1) 멸실주택은 건축법상 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 말소가 이루어진 주택을 말함.

2) 주택멸실 현황은 시스템(e-AIS, HIS) 추출 시 발생하는 오류(중복, 누락 등)를 보완하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가구 수가 명확히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여 통계청 센서스 결과를 활용하여 비교·보정 후 추출한 자료를 지자체별로 검증·보정하여 최종 생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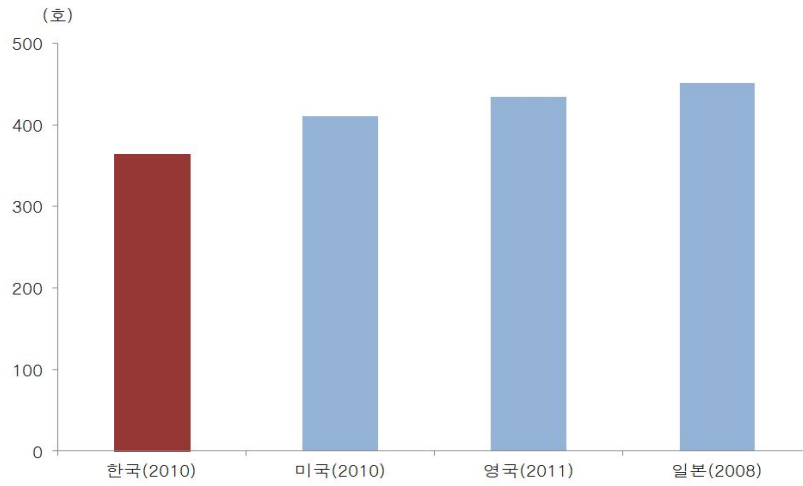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장래가구추계」, 2011.

통계표

	2010	2011	2012
전국	62,485	76,662	77,234
수도권	23,762	37,501	36,634
지방	38,723	39,161	40,600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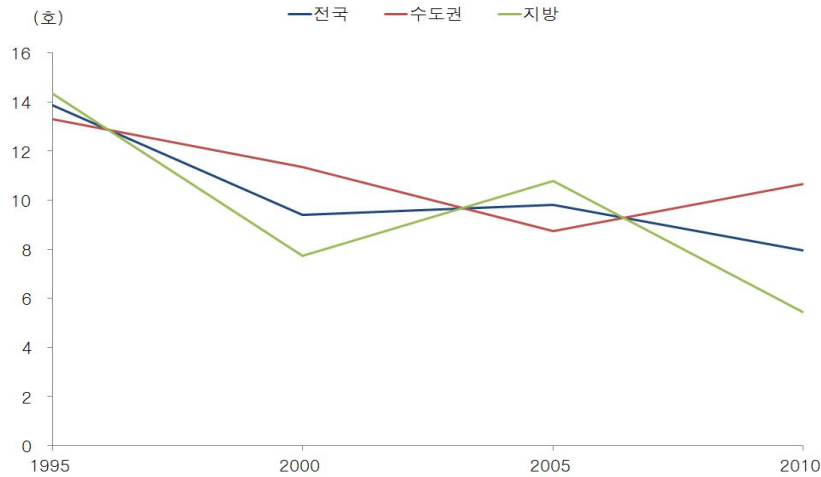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merican Housing Survey*, 2010.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English Housing Survey: Household Report*, 2011.
 일본총무성통계국, 「주택토지통계조사」, 2008

	한국(2010)	미국(2010)	영국(2011)	일본(2008)
인구 1,000명당 주택수	364	410	434	451

26102.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 주요지표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1995-2010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인구 1,000명당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매년 건설되는 주택수를 의미함.
- 측정 방법: 매년 발표하는 주택건설실적통계의 주택건설호수와 매 5년마다 발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수를 통하여 인구 천 명당 주택건설호수를 측정 조사함.

$$\text{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호수} = (\text{주택건설호수} \div \text{인구}) \times 1,000.$$

● 지표의 의의

주택건설은 가구의 주거안정은 물론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경기를 좌우하며, 매년 발생하는 신규수요와 교체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또한 주택건설은 건설경기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해설

2000년대 중반 이후 주택건설은 연평균 50만호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에 주택건설실적이 70만호를 상회한 것은 수도권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한데다 지방의 주택시장 회복으로 아파트 건설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호수는 1990년대 중반 14호였으나 최근에는 8호정도로 낮아지고 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체 주택건설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이 큰 폭으로 증가해 아파트건설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외 주택건설 비중이 높았으나 지난 2년 동안은 지방의 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주요국의 주택건설을 인구기준으로 비교하면 2000년대 중반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은 미국 6호 내외, 영국 3~4호, 일본 9호 정도이며, 미국과 영국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택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2010년 각각 1.9호와 2.2호로 급감하였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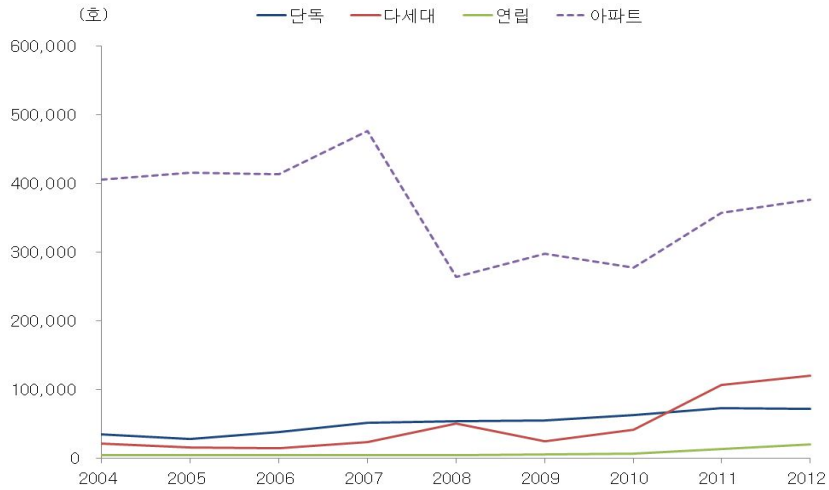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1995-2010

	(호)			
	1995	2000	2005	2010
주택건설수	619,057	433,488	463,641	386,542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전국	13.88	9.40	9.81	7.96
수도권	13.30	11.34	8.75	10.67
지방	14.35	7.74	10.78	5.43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수, 2004-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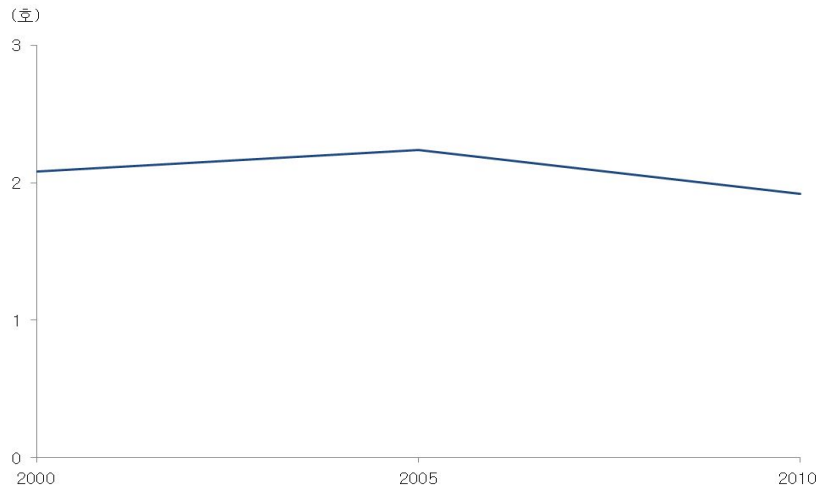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548,792	495,425	519,142	628,504	449,790	460,540	496,812	706,423	716,563
단독	34,237	27,799	37,711	51,450	53,667	54,665	62,173	73,097	71,255
다세대	20,988	15,718	14,223	23,184	50,421	24,513	41,424	106,270	119,952
연립	3,697	4,613	4,678	4,696	4,044	5,426	5,956	13,465	19,591
아파트	404,878	415,511	412,891	476,462	263,153	297,183	276,989	356,762	376,086

인구 1,000명당 임대주택건설수,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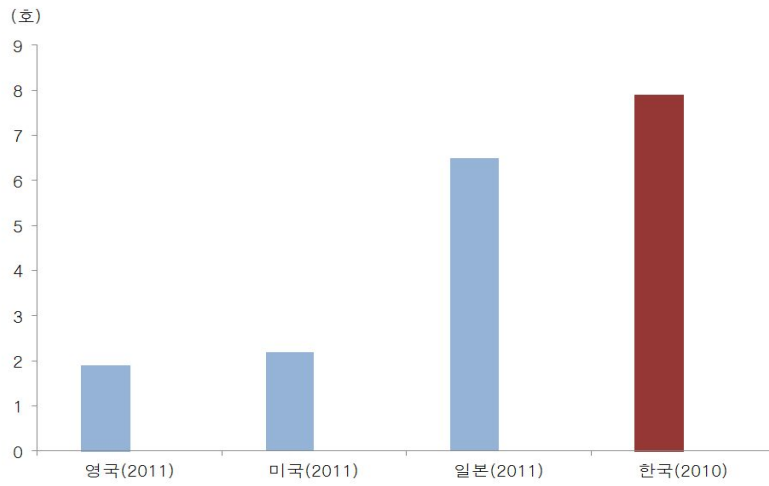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년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5	2010
인구 1,000명당 임대주택건설수	2.08	2.24	1.92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2011



주: 1) 주택건설은 착공호수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해양통계연보」, 2012.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S Housing Market Conditions*.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Housing Statistics*.

총무성통계국, 「주택토지통계조사」.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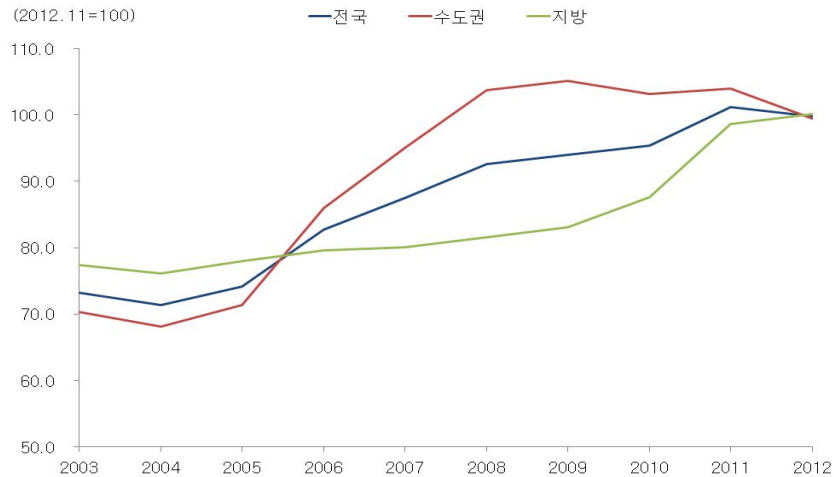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1.9	2.2	6.5	7.9

2.6.2. 주택시장

26203.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요지표

주택매매가격변동률, 2003-2012



주: 1)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기준시점(2012.11)의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 12월.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기준시점(2012.11)의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실제거래에 기초한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를 통한 표본에 의한 주택매매가격을 산출한 후 기준시점 대비 주택매매가격을 지수화하여 산출함.

$$\text{주택매매가격변동률} = (\text{해당시점 주택매매가격} \div \text{기준시점 주택매매가격}) \times 100. \text{ 기준시점은 2012년 11월임.}$$

● 지표의 의의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며, 주택시장 판단지표 및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주택 가격은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인 주거비 부담을 보여주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거비부담의 증가로 주거수준 하락과 소비위축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의 웰빙이 낮아진다.

● 해설

주택 가격은 1980년대 후반 급등한 이후 1990년 들어서는 외환위기로 인한 가격폭락 등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금리하락에 따른 저금리기준의 정착과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에 힘입어 강한 상승 국면을 보였다가 지난 1~2년 동안은 다시 하락하고 있다.

2000년대에 나타난 주택가격의 상승현상은 주택보급률이 낮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이 주도했으나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격차가 심해지면서 2000년대 후반에는 지방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수도권을 상회하였다. 한편 주택유형별 주택가격변동은 1990년대 중반이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단독주택이나 연립의 세대주택의 가격은 별다른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택가격의 국제동향을 살펴보면 2000년을 전후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금융완화에 힘입어 주택 가격이 급등하였으며, 이후 서브프라임사태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확산되자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보였다. 2011년의 경우 주택가격의 국제동향은 독일, 캐나다처럼 빠른 회복을 보이는 국가와 침체가 지속되는 국가로 뚜렷이 나누어지며, 이는 주로 주택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좌우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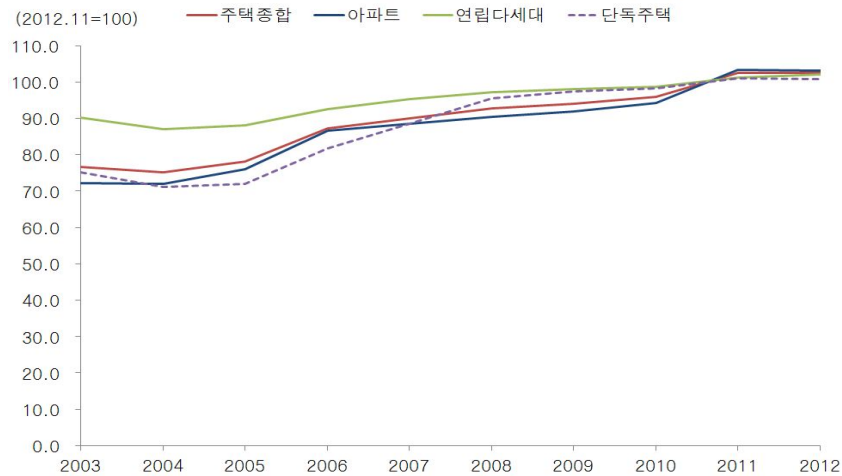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변동률, 2003-2012

	(2012.11=1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국	73.2	71.4	74.1	82.7	87.5	92.6	94.0	95.4	101.2	99.8
수도권	70.3	68.1	71.4	86.0	95.0	103.8	105.1	103.2	104.0	99.5
지방	77.4	76.1	78.0	79.6	80.1	81.6	83.1	87.6	98.7	100.1

주: 1) 전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기준시점(2012.11)의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 12월.

■ 보조지표

주택유형별 주택가격변동률,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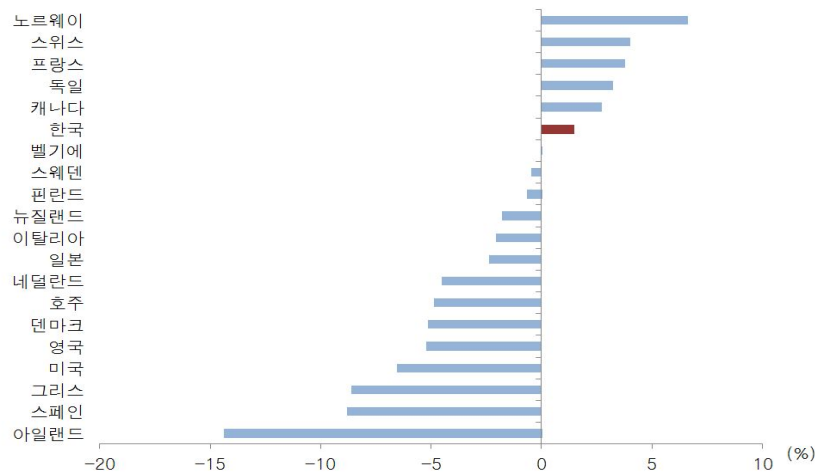


주: 1) 주택매매가격변동률은 기준시점(2012.11)의 해당 주택유형의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 12월.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택종합	76.7	75.1	78.1	87.2	89.9	92.7	94.1	95.9	102.4	102.4
아파트	72.3	71.9	76.1	86.6	88.5	90.5	91.9	94.3	103.3	103.1
연립다세대	90.3	87.1	88.1	92.6	95.2	97.1	98.0	98.7	101.2	102.1
단독주택	75.2	71.1	71.9	81.8	88.6	95.6	97.3	98.2	101.0	100.7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주택가격변동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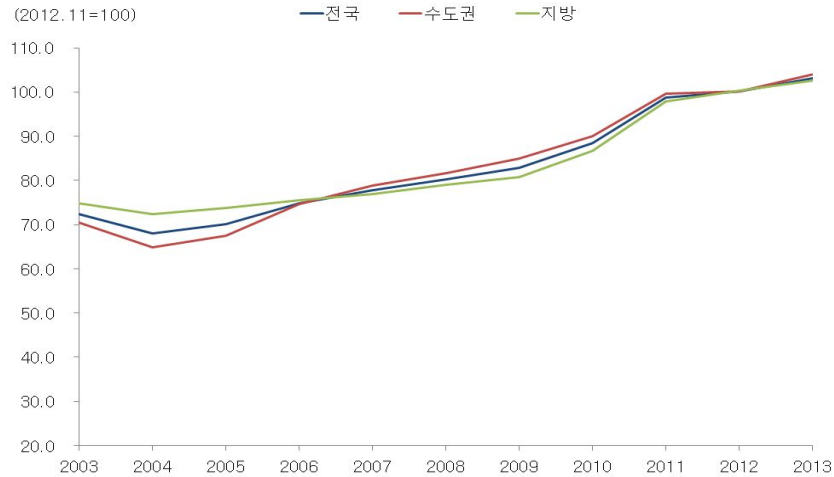
주: 1) 주택가격변동률은 전년대비 주택가격의 변동률임.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3.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미국	영국	덴마크	호주	네덜란드
가격변동률	-14.4	-8.8	-8.6	-6.5	-5.2	-5.1	-4.9	-4.5
	일본	이탈리아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한국	캐나다
가격변동률	-2.4	-2.1	-1.8	-0.6	-0.5	0.0	1.4	2.7
	독일	프랑스	스위스	노르웨이				
가격변동률	3.3	3.8	4.0	6.6				

26204. 주택전세가격변동률

■ 주요지표

주택전세가격변동률, 2003-2012



주: 1) 주택전세가격변동률은 기준시점(2012.11)의 주택전세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전세가격의 비율임.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 12월.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주택전세가격변동률은 기준시점(2012.11)의 주택전세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실제거래에 기초한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를 통한 표본에 의한 주택전세가격을 산출한 후 기준시점 대비 주택전세가격을 지수화하여 산출함.
주택전세가격변동률=(해당시점 주택전세가격 ÷ 기준시점 주택전세가격) × 100. 기준시점은 2012년 11월임.

● 지표의 의의

지역별, 유형별, 규모별로 전국 주택의 전세 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 측정하며, 주택시장 판단지표 및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전세 가격은 특히 무주택자의 주거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전세금마련으로 생활이 어려워지고 전세금이 적고 주거수준이 낮은 주택으로 이사하여 국민의 웰빙은 하락한다.

● 해설

주택전세가격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에 접근할 정도로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기초로 전세보증금의 투자수익성이 낮아져 전세공급이 줄어들고 월세공급이 많아지면서 전세의 수급불균형에 기인한다. 더욱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주택구입수요가 임차수요로 전환한 것도 전세가격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주택전세가격변동률,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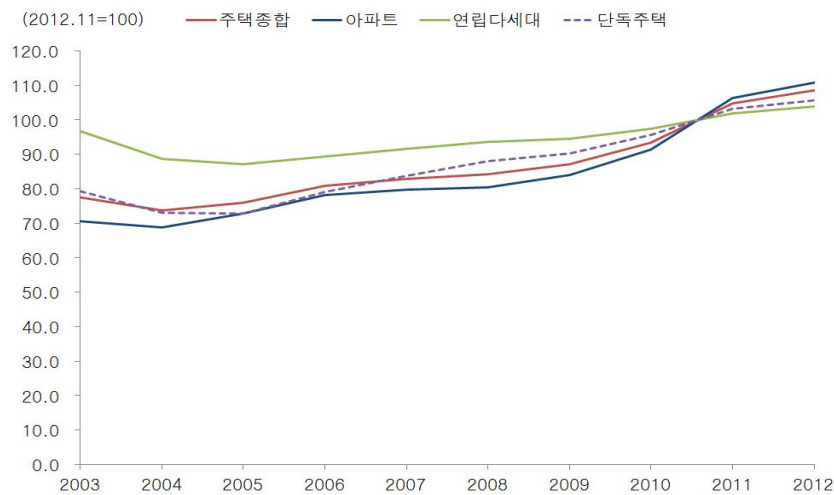
(2012.11=1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	72.3	68.1	70.2	74.9	77.8	80.3	82.9	88.4	98.8	100.2	103.2
수도권	70.4	64.8	67.5	74.6	78.8	81.6	84.9	90.1	99.7	100.1	103.9
지방	74.9	72.4	73.8	75.6	76.9	79.0	80.8	86.7	97.9	100.3	102.6

주: 1) 주택전세가격변동률은 기준시점(2012.11)의 주택전세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 12월.

■ 보조지표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변동률, 2003-2012



주: 1) 주택전세가격변동률은 기준시점(2012.11)의 해당 주택유형 주택전세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전세가격의 비율임.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 12월.

통계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주택종합	77.6	73.7	75.9	80.9	82.9	84.3	87.2	93.4	104.9	108.6
아파트	70.7	68.8	72.8	78.3	79.8	80.4	84.0	91.5	106.3	110.9
연립다세대	96.8	88.8	87.2	89.4	91.6	93.6	94.5	97.4	102.0	103.9
단독주택	79.3	73.0	72.8	79.2	83.9	88.1	90.3	95.6	103.2	1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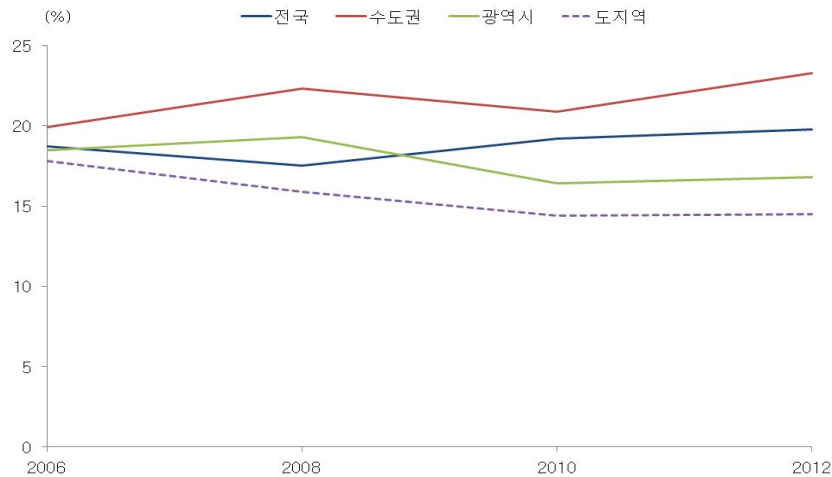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2.6.3. 주거상황

26305. 소득대비임대료(RIR)

■ 주요지표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 2006-2012



주: 1) $RIR = (\text{중위(평균) 월임대료} \div \text{중위(평균) 월소득}) \times 100$. RIR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을 뜻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to-Income Ratio)은 월평균 소득에 대비한 임대료의 비율을 말함. 이 비율은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소득에서 부담하는 비율임
- 측정 방법: $RIR = (\text{중위(평균) 월임대료} \div \text{중위(평균) 월 소득}) \times 100$.

● 지표의 의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은 세입자의 소득에 대비한 임대료를 지표화하여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RIR 수치가 높을수록 무주택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 커짐을 의미한다.

● 해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보여주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은 2008년 17.5%에서 2012년에는 19.8%로 높아져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주거비 부담이 과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몇 년 사이의 전세값 상승과 함께 저금리에 따른 전세의 월세전환현상에 기인한다. 수도권 경우 RIR이 23.2%에 달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는 과중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RIR이 20%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가구의 RIR이 2012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소득이 높은 가구 중에서도 차가가구는 비교적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의 주택구입능력을 보여주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인 PIR(Price Income Ratio)은 5배 내외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많아 저소득층의 PIR은 7배를 상회하고 있다. 주요국가의 PIR이 5배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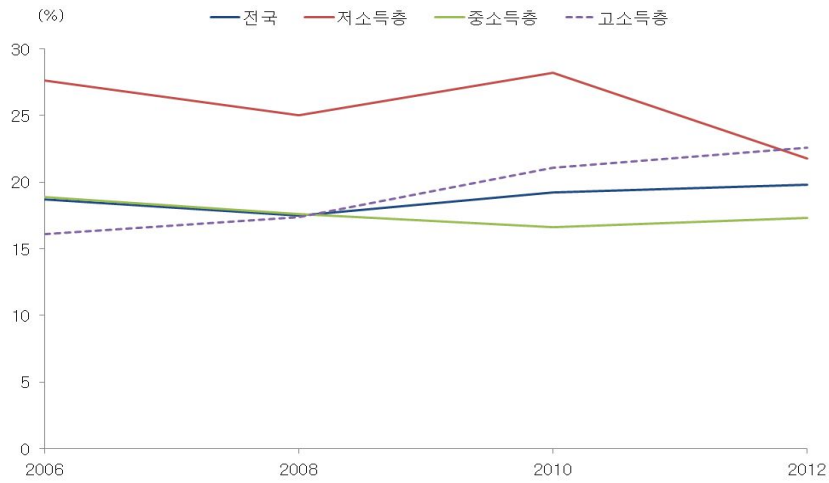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 2006-2012

	(%)			
	2006	2008	2010	2012
전국	18.7	17.5	19.2	19.8
수도권	19.9	22.3	20.9	23.3
광역시	18.5	19.3	16.4	16.8
도지역	17.8	15.9	14.4	14.5

주: 1) RIR = (중위(평균) 월임대료 ÷ 중위(평균) 월소득) × 100. RIR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부담이 높아짐을 뜻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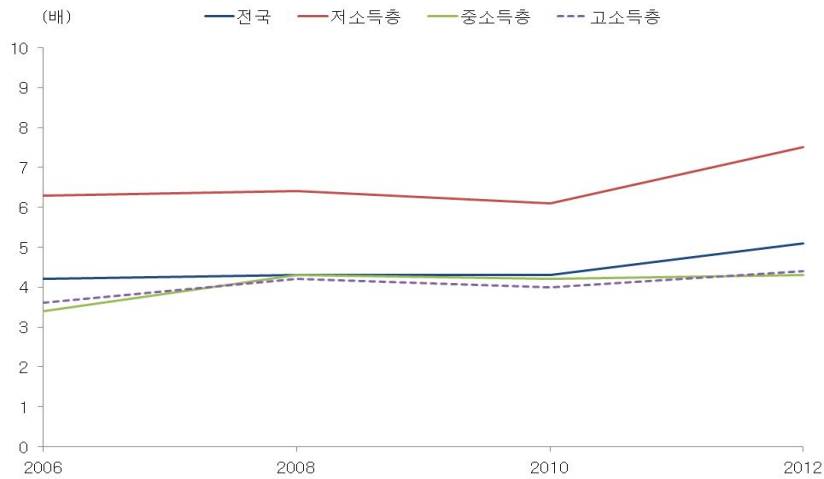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 2006-2012



주: 1) RIR = (중위(평균) 월임대료 ÷ 중위(평균) 월소득) × 100. RIR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을 뜻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6	2008	2010	2012
전국	18.7	17.5	19.2	19.8
저소득층	27.6	25.0	28.2	21.8
중소득층	18.9	17.6	16.6	17.3
고소득층	16.1	17.4	21.1	22.6

소득계층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200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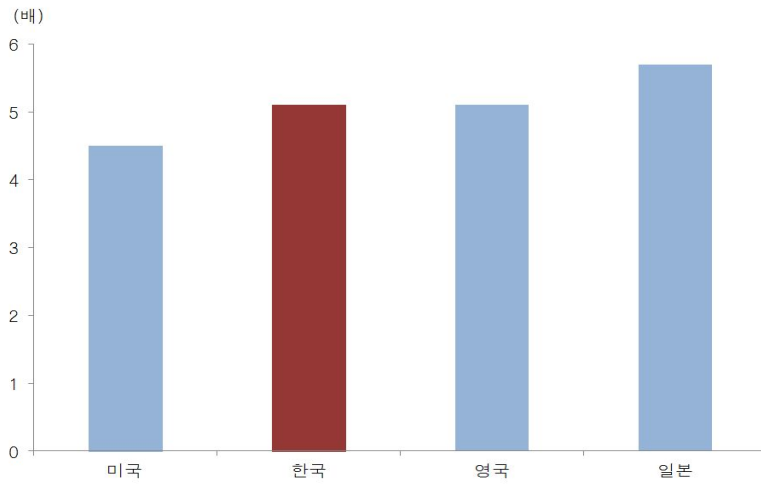


주: 1) PIR = (중위(평균) 주택가격 ÷ 중위(평균) 연소득) × 100. PIR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을 뜻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6	2008	2010	2012
전국	4.2	4.3	4.3	5.1
저소득층	6.3	6.4	6.1	7.5
중소득층	3.4	4.3	4.2	4.3
고소득층	3.6	4.2	4.0	4.4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2012



주: 1) $PIR = (\text{중위(평균) 주택가격} \div \text{중위(평균) 연소득}) \times 100$. PIR 수치가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을 뜻함.

출처: HADS, *Housing Affordability Data System*.
일본 국토교통성 주택산업신문사, 「주택경제 data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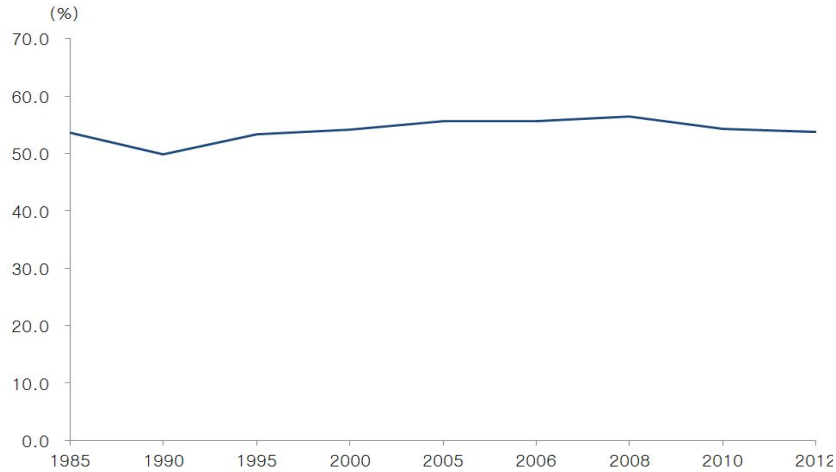
통계표

	미국	한국	영국	일본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4.5	5.1	5.1	5.7

26306. 자가점유율

■ 주요지표

자가점유율, 2000-2010



주: 1) 자가 점유율은 일반가구 중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201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85-2005.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자가점유율은 일반가구 중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가 점유율에서 제외됨. 주거안정의 척도를 보여줌.
- 측정 방법: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사함.

● 지표의 의의

자가점유율은 자가소유율과 함께 사람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과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주택소유 여부가 중요한 지표였으며, 전세값의 상승과 주거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는 자가 점유율이 주거안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통해 자가 점유율을 일정한 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은 주택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해설

자가점유율은 2005년 55.6%에서 2010년 54.3%, 2012년 현재는 53.8%로 2000년대 들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자가 점유율은 자가 보유율에 비해 5~7%가 낮으며, 최근 들어 차이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자가 점유율은 사람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고소득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64.6%인데 비하여 저소득가구는 50.5%에 불과하다.

지역별 자가점유율 역시 수도권과 지방에서 상당한 격차를 나타낸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45.7%에 불과하며 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의 56.4%, 도 지역 거주가구의 64.3%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주택구입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

주요국가의 자가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가 60%를 상회하고 있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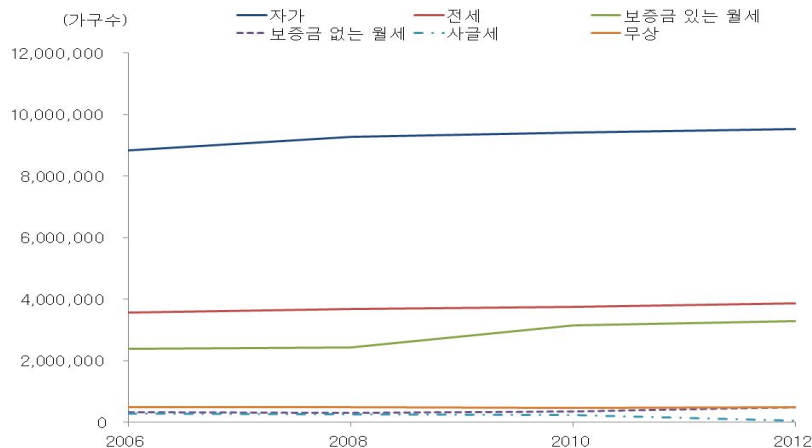
자가점유율, 1985-2012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8	2010	2012
전국	53.6	49.9	53.3	54.2	55.6	55.6	56.4	54.3	53.8

주: 1) 자가 점유율은 일반가구 중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2012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85-2005.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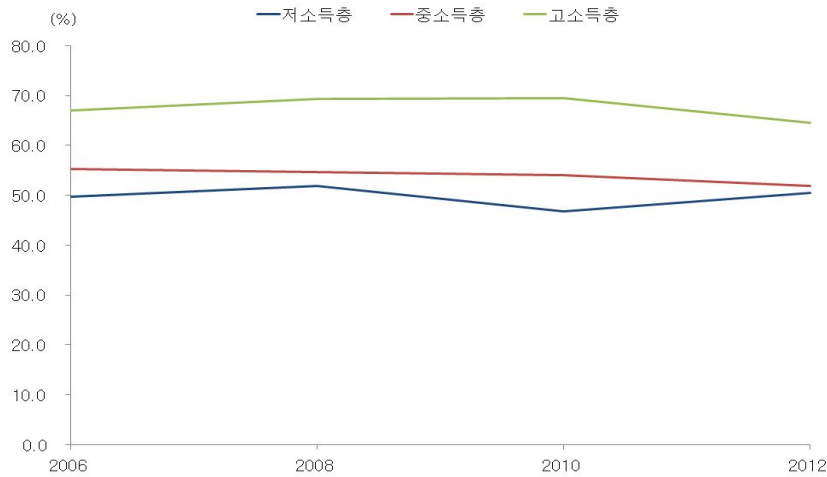
주거점유 형태, 2006-2012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통계표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06	8,828,100	3,556,760	2,394,557	333,206	284,092	490,413
2008	9,269,677	3,672,317	2,433,892	316,694	251,613	495,774
2010	9,406,893	3,755,576	3,148,344	341,584	226,070	461,091
2012	9,532,439	3,864,820	3,298,551	481,194	54,821	502,007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율, 200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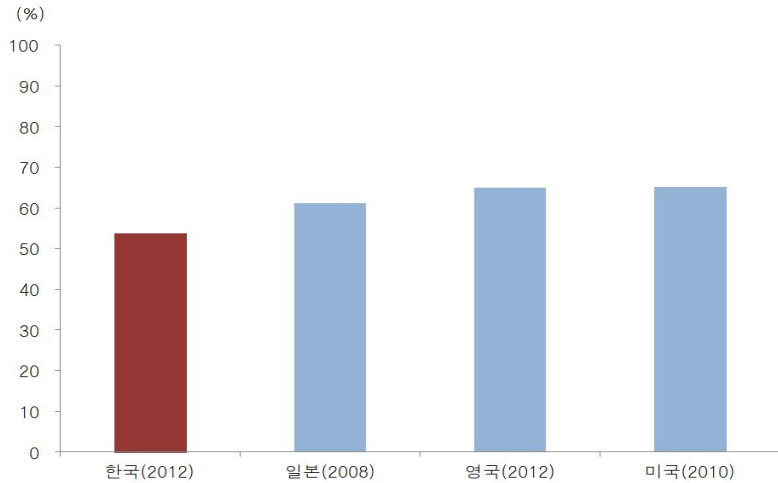
주: 1) 자가소유율은 일반가구 중 자기 소유의 주택이 있는 가구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통계표

연도	2006	2008	2010	2012
저소득층	49.7	51.9	46.9	50.5
중소득층	55.3	54.7	54.0	51.8
고소득층	67.0	69.4	69.5	64.6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가의 자가점유율, 2012



주: 1) 자가 점유율은 일반가구 중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2.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S Housing Market Conditions*, 2010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Housing Statistics*, 2012.
일본총무성통계국, 「주택토지통계조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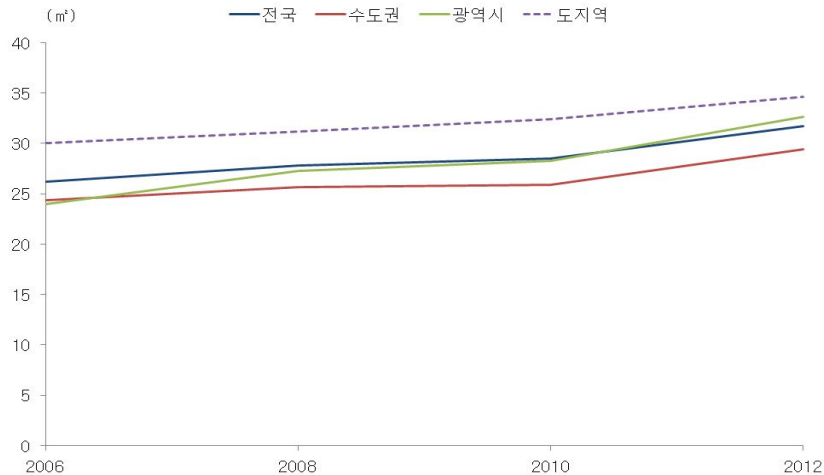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2012)	일본(2008)	영국(2012)	미국(2010)
자가 점유율	53.8	61.1	65.0	65.1

26307. 1인당 주거면적

■ 주요지표

1인당 주거면적, 2006-2012



주: 1) 1인당 주거면적은 1인 인구 대비주거공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 주거 면적을 가구 원수로 나눈 값을 나타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매 2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1인당 주거면적은 가구가 사용하는 주거 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이며, 물리적 주거 밀도를 비교할 수 있어 주거의 질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임.
- 측정 방법: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사함.

● 지표의 의의

한국은 가구원수가 감소하며 1인당 주거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주거면적보다는 1인당 주거면적이 주거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며, 국제비교에서도 활용성이 높다.

1인당 주거면적은 적절한 크기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며 최저미달가구의 산출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 해설

주택공급의 증가와 주택규모 확대에 따라 1인당 주거면적은 꾸준히 향상하고 있으며, 2006년 1인당 주거면적이 26.2㎡였으나 2012년에는 31.7㎡로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소득계층별 격차는 거의 줄어들지 않아 저소득층의 1인당 주거면적은 고소득층의 70%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 62.1㎡(2009), 영국 38.7㎡(2008) 일본 37.3㎡(2008)으로 나타나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을 제외하여도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보다 상당히 크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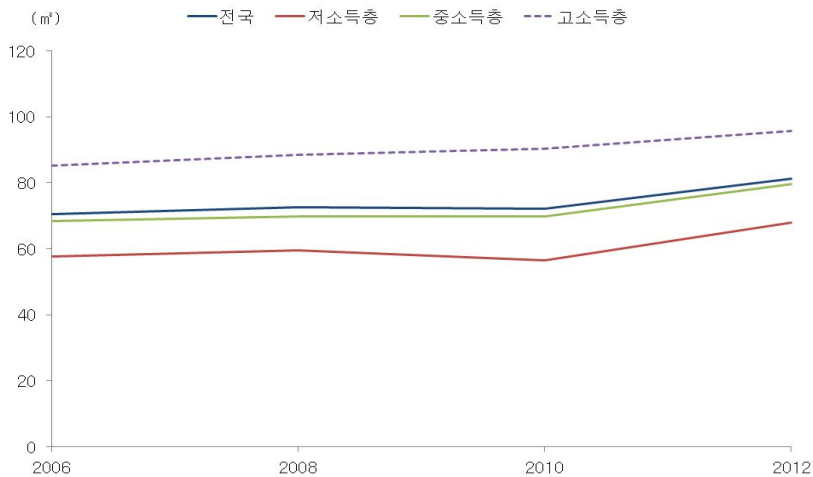
1인당 주거면적, 2006-2012

	(㎡)			
	2006	2008	2010	2012
전국	26.2	27.8	28.5	31.7
수도권	24.4	25.7	25.9	29.4
광역시	24.0	27.3	28.3	32.6
도지역	30.0	31.2	32.4	34.6

주: 1) 1인당 주거면적은 1인 인구대비 주거공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주거 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을 나타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2년.

■ 보조지표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200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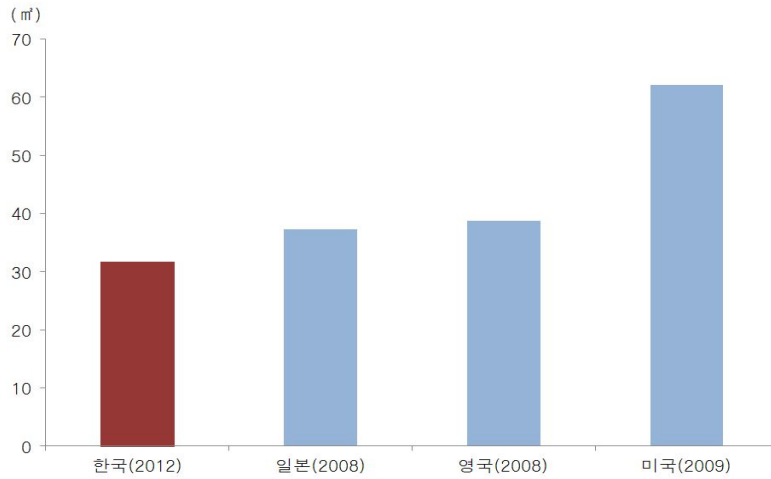


주: 1) 1인당 주거면적은 1인 인구대비 주거공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주거 면적을 가구원수로 나눈 값을 나타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6	2008	2010	2012
전국	70.5	72.6	72.2	81.1
저소득층	57.7	59.6	56.4	67.9
중소득층	68.4	69.8	69.8	79.7
고소득층	85.3	88.4	90.4	95.8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1인당 주거면적, 2012



주: 1) 1인당 주거면적은 1인 인구대비 주거공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주거 면적을 가구원 수로 나눈 값을 나타냄.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해양통계연보」, 2012.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merican Housing Survey*, 2011.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English Housing Survey: Household Report*, 2011.

일본총무성통계국, 「주택토지통계조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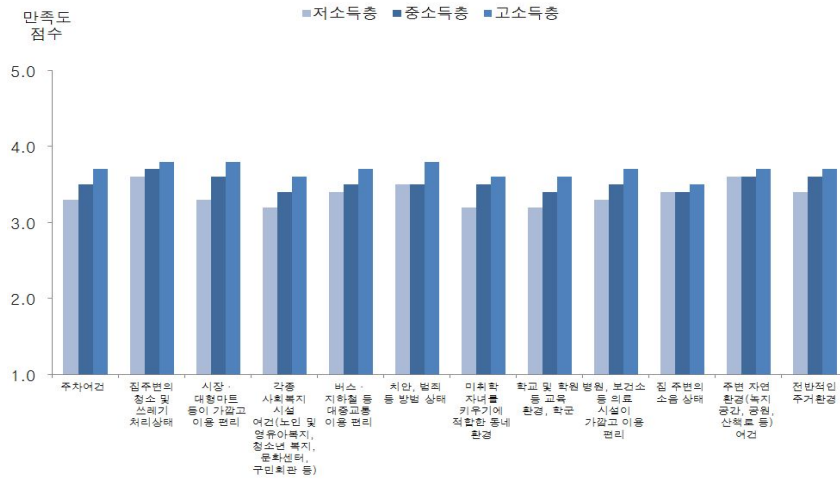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2012)	일본(2008)	영국(2008)	미국(2009)
1인당 주거면적	31.7	37.3	38.7	62.1

26308. 주거환경만족도

■ 주요지표

주거환경 만족도, 2012



주: 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나타냄(최저 1점~최고 5점).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2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주택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 환경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일정 척도에 의해서 측정하는 지표임. 설문조사는 주거실태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짐.
- 측정 방법: 2년마다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조사함.

● 지표의 의의

주거환경만족도는 주택 주변에 대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하며, 거주 계층과 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또는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주택정책이나 계획에 활용 가능한 지표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주택에서 주거환경으로 이동하면서 주거환경만족도는 국민 웰빙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 해설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소득이 높은 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고소득가구는 주택규모가 크고 생활여건이 좋은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교육환경, 학군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공원 등의 자연환경이나 쓰레기처리상태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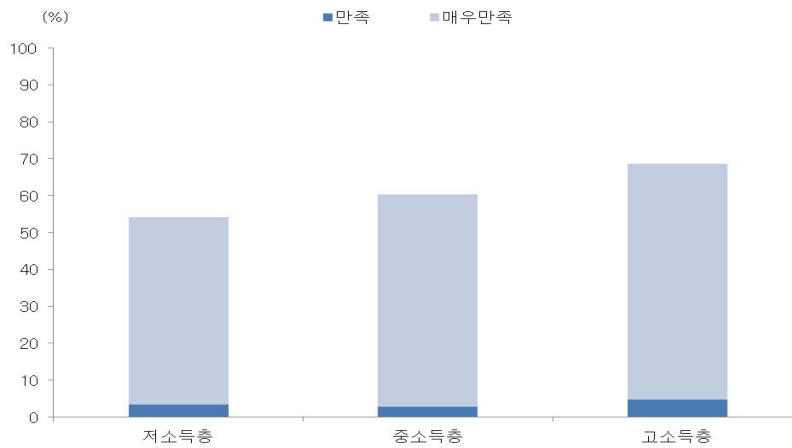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주거환경 만족도, 2012

	전체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주차여건	3.5	3.3	3.5	3.7
집주변의 청소 및 쓰레기처리상태	3.7	3.6	3.7	3.8
시장·대형마트 등이 가깝고 이용편리	3.6	3.3	3.6	3.8
각종사회복지시설여건(노인및영유아복지,청소년복지,문화센터,구민회관등)	3.4	3.2	3.4	3.6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편리	3.5	3.4	3.5	3.7
치안, 범죄 등 방범상태	3.6	3.5	3.5	3.8
미취학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동네환경	3.4	3.2	3.5	3.6
학교 및 학원 등 교육환경, 학군	3.4	3.2	3.4	3.6
병원, 보건소 등 의료시설이 가깝고 이용편리	3.5	3.3	3.5	3.7
집주변의 소음상태	3.4	3.4	3.4	3.5
주변자연환경(녹지공간, 공원, 산책로 등)여건	3.6	3.6	3.6	3.7
전반적인 주거환경	3.6	3.4	3.6	3.7

주: 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나타냄(최저 1점-최고 5점).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2년.

■ 보조지표

소득계층별 주택만족도, 2012



주: 1) 주택만족도는 조사대상인구 중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2.

통계표

	만족	매우 만족
저소득층	3.3	50.8
중소득층	2.8	57.6
고소득층	4.8	63.8

■ 국제비교지표 (없음)

2.7.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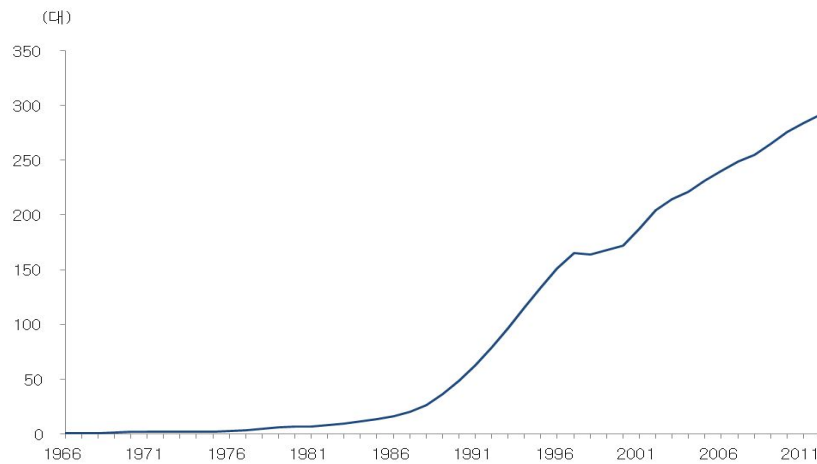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교통	교통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연장 철도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교통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수송분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만족도 자동차 평균주행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수송분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근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학시간 1시간이상통근통학인구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근시간
	교통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에너지소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종별 평균연비 차량 유종별 평균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자동차보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교통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수준별 교통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교통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2.7.1. 교통공급

27101.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 주요지표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1966-2012



주: 1)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대수를 집계한 값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임.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하는데, 본 지표는 승용차 대수만을 집계한 값임.
- 측정 방법: 인구 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통계시점에 등록된 승용차 대수를 총 인구수로 나눈 값임.

● 지표의 의의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주는 주요한 수단이다. 자동차와 교통여건은 직장, 쇼핑센터, 병원, 문화시설 등으로의 접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반면에 자동차는 공해·소음·에너지소비 등의 환경 문제와 교통사고문제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자동차와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등 시설물의 건설도 우리사회의 자원을 소비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자동차는 삶의 질, 국가경쟁력, 환경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적정수준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관리하고 관련 기반시설의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설

한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국내의 자동차 산업이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1990-2000년 사이 자동차 등록대수는 290%,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56% 증가하였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폭은 2000년 이후부터 점차 안정화되어 2000-2012년 사이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52%로 나타난다. 2012년 현재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291.6대인데, EU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의 평균인 473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비교적 높은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한편,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는 도로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국가물류비용, 대기오염비용, 온실가스비용, 소음비용 등 교통부문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⁴⁾와도 관련이 있다. 자동차 및 도로시설이 수반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교통공급, 예컨대 철도수단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상세 통계표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196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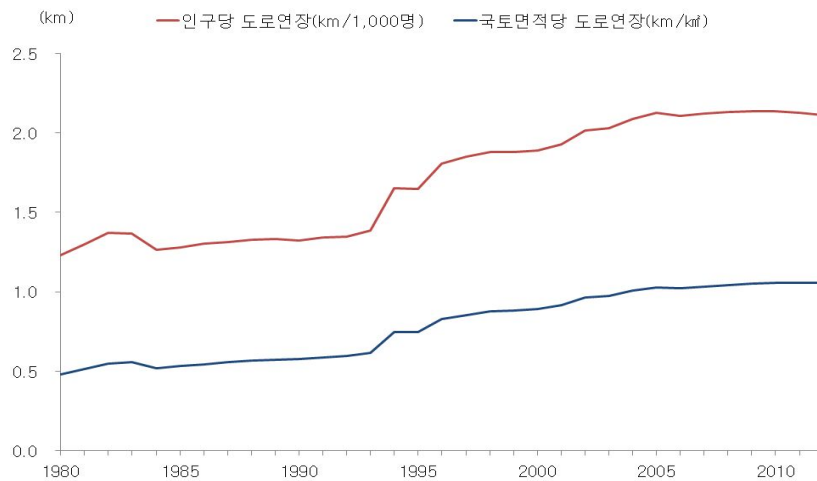
연도	자동차 등록대수 (1만 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대)	연도	자동차 등록대수 (1만 대)	인구 1,000명당 자동차 등록대수 (대)
1966	2	0.7	2003	1,028	214.8
1970	6	1.9	2004	1,062	221.1
1975	8	2.3	2005	1,112	231.0
1980	25	6.6	2006	1,161	240.0
1985	56	13.7	2007	1,210	249.0
1990	207	48.3	2008	1,248	255.0
1995	601	133.3	2009	1,302	264.7
2000	808	171.9	2010	1,363	275.9
2001	889	187.7	2011	1,414	284.1
2002	974	204.5	2012	1,458	291.6

주: 1)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대수를 집계한 값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 년도.

4) 2007년은 약 161조로 GDP 대비 16.5%, 2009년은 약 187조로 GDP 대비 17.6%를 각각 차지함

■ 보조지표

인구 및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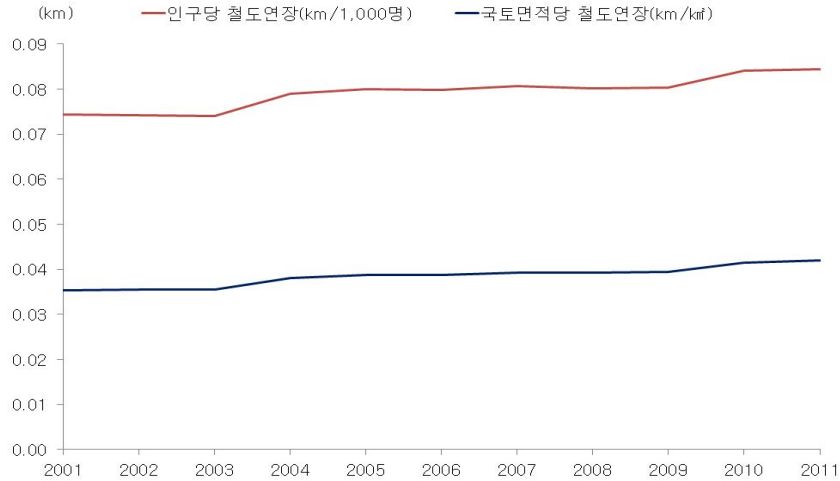
주: 1) 인구당 도로연장은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을,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국토면적 1km²당 도로연장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 각 년도; 「지적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표

연도	인구당 도로연장 (km/천명)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m/km²)	연도	인구당 도로연장 (km/천명)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m/km²)	연도	인구당 도로연장 (km/천명)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km/km²)
1980	1.23	0.48	1991	1.34	0.59	2002	2.02	0.96
1981	1.30	0.51	1992	1.35	0.59	2003	2.03	0.98
1982	1.37	0.55	1993	1.39	0.62	2004	2.09	1.01
1983	1.37	0.56	1994	1.65	0.74	2005	2.12	1.03
1984	1.26	0.52	1995	1.65	0.75	2006	2.11	1.02
1985	1.28	0.53	1996	1.81	0.83	2007	2.12	1.03
1986	1.30	0.55	1997	1.85	0.86	2008	2.13	1.04
1987	1.31	0.56	1998	1.88	0.88	2009	2.13	1.05
1988	1.33	0.57	1999	1.88	0.88	2010	2.14	1.06
1989	1.33	0.57	2000	1.89	0.89	2011	2.13	1.06
1990	1.32	0.57	2001	1.93	0.92	2012	2.11	1.06

인구 및 국토면적당 철도연장,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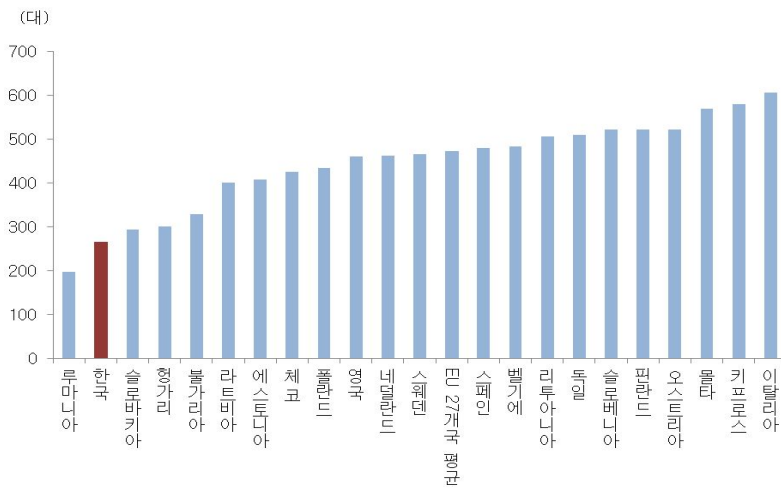


주: 1) 인구당 철도연장은 인구 1,000명당 철도연장을, 국토면적당 철도연장은 국토면적 1km²당 철도연장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국가교통통계 2012」, 2012; 「지적통계연보」, 각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구당 철도연장 (km/천명)	0.075	0.074	0.074	0.074	0.079	0.080	0.080	0.081	0.080	0.080	0.084	0.084
국토면적당 철도연장 (km/km²)	0.035	0.035	0.035	0.036	0.038	0.039	0.039	0.039	0.039	0.040	0.042	0.042

■ 국제비교지표

EU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2009



주: 1)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대수를 집계한 값임.
출처: EU,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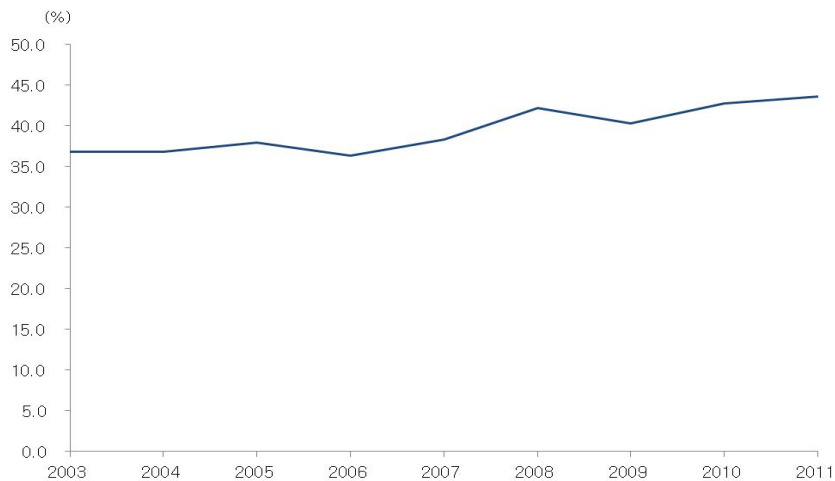
국가	자동차 등록대수	국가	자동차 등록대수	국가	자동차 등록대수
루마니아	197	폴란드	433	독일	509
한국	265	영국	459	슬로베니아	521
슬로바키아	294	네덜란드	462	핀란드	521
헝가리	300	스웨덴	465	오스트리아	522
불가리아	329	EU 27개국 평균	473	몰타	568
라트비아	400	스페인	480	키프로스	579
에스토니아	407	벨기에	483	이탈리아	606
체코	424	리투아니아	506		

2.7.2. 교통수요

27202.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주요지표

대중교통수송분담률, 2003-2011



주: 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총 수송실적 중 철도와 버스의 수송실적 합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수송실적은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한 인원과 이동거리를 곱한 수치로, "인·km" 단위로 측정됨.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분석 연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모든 교통수단의 총 수송실적 중 대중교통의 수송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 여기서 '모든 교통수단'이란 육상으로 통행하는 교통수단, 즉 승용차, 택시, 철도, 버스를 의미하고, 이 중 대중교통은 철도와 버스를 의미함. 각 교통수단의 수송실적은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한 인원과 이동거리를 곱한 수치로서 인·km를 단위로 함.
- 측정 방법: 택시, 철도, 버스의 수송실적은 국토교통통계연보의 원자료를 인용하였고, 승용차의 수송실적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조사하는 승용차 주행거리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산출한 승용차 평균재차인원을 곱하여 산출함.

● 지표의 의의

일반적으로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자가용 자동차가 수반하는 교통혼잡, 에너지소비, 오염물질 배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대중교통 수단은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처럼 삶의 질, 국가발전,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의 교통수요 수송능력, 또는 교통수요의 대중교통 의존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3-2011년 사이 대중교통(철도+ 버스) 수송분담률은 36.9%에서 43.7%로 6.7%포인트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승용차와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각각 5.9%포인트, 0.8%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교통망의 확충과 같은 양적공급과 더불어 중앙버스차로제, 통합요금제 등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개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도시권에서의 시내버스의 평균속도는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승용차와의 속도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년 개선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OECD/EU의 주요국의 평균 20.0%(2008년 기준, 30개국 대상)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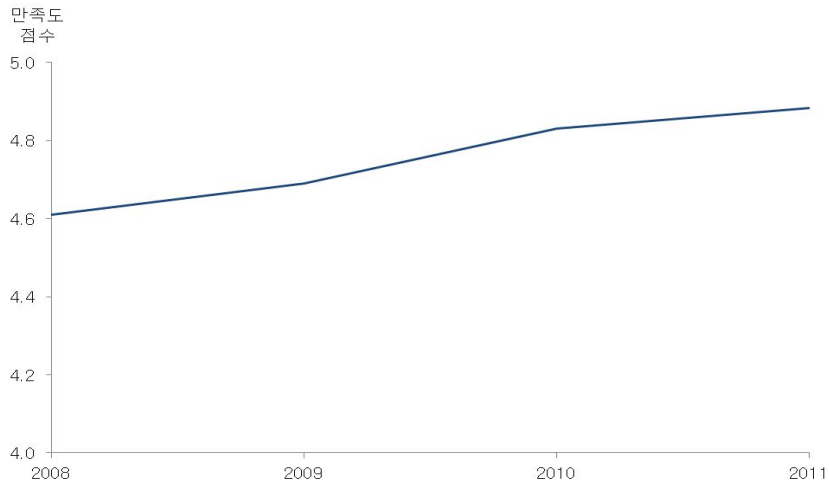
교통수단별 수송실적 및 분담률, 2003-201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수송실적(1억 인-km)	3,078	3,295	3,637	3,813	3,838	3,481	3,499	3,658	3,695
	수송분담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철도	수송실적(1억 인-km)	510	527	546	555	557	568	555	584	630
	수송분담률(%)	16.6	16.0	15.0	14.6	14.5	16.3	15.9	16.0	17.1
버스	수송실적(1억 인-km)	625	686	832	832	912	901	854	982	982
	수송분담률(%)	20.3	20.8	22.9	21.8	23.8	25.9	24.4	26.8	26.6
택시	수송실적(1억 인-km)	149	146	147	147	255	141	152	148	148
	수송분담률(%)	4.8	4.4	4.0	3.8	6.6	4.0	4.4	4.0	4.0
승용차	수송실적(1억 인-km)	1,795	1,936	2,112	2,279	2,113	1,872	1,938	1,945	1,936
	수송분담률(%)	58.3	58.7	58.1	59.8	55.1	53.8	55.4	53.2	52.4

주: 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총 수송실적 중 철도와 버스의 수송실적 합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수송실적은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한 인원과 이동거리를 곱한 수치로, "인-km" 단위로 측정됨.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분석 연구」, 각 년도.

■ 보조지표

대중교통만족도, 2008-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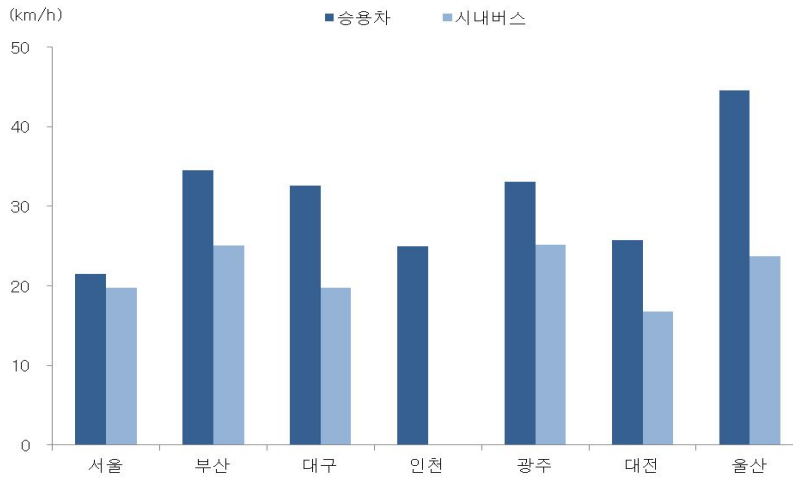
주: 1) 대중교통 만족도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종합만족도로서 7점 척도(최저 1점- 최고 7점) 기준 점수임.

출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현황조사」, 각 년도.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전체	4.61	4.69	4.83	4.88

광역시별 승용차 및 시내버스 평균주행속도, 2010



주: 1)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의 평균주행속도는 조사되고 있지 않음.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통량 조사자료 및 속도 조사자료」, 각 년도.

부산광역시, 「차량교통량 및 차량통행속도 조사결과」, 각 년도.

대구광역시, 「교통관련 기초조사 자료집」, 각 년도.

인천광역시, 「도시교통 기초조사」, 각 년도.

광주광역시, 「교통관련 기초조사」, 각 년도.

대전광역시, 「교통조사 및 분석 보고서」,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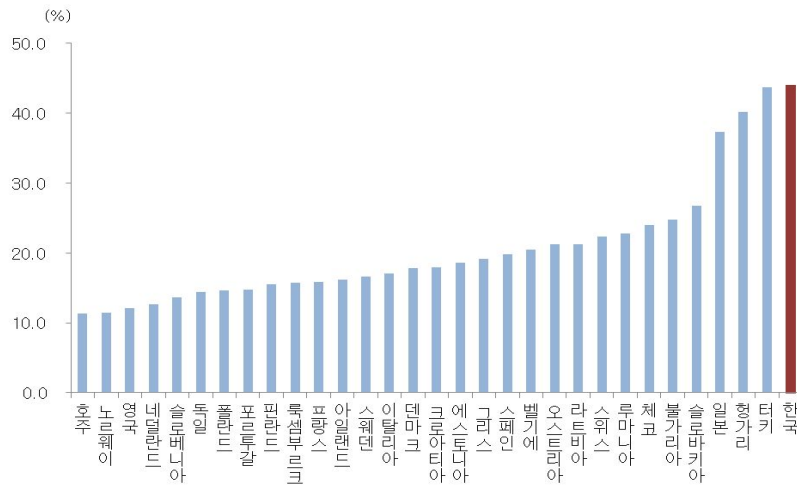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정기 교통량 및 속도조사 결과」, 각 년도.

통계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승용차	22.0	35.0	33.0	25.0	33.0	26.0	45.0
시내버스	19.8	25.1	19.8	-	25.2	16.8	23.7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대중교통수송분담률, 2008



주: 1)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총 수송실적 중 철도와 버스의 수송실적 합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수송실적은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한 인원과 이동거리를 곱한 수치로, "인-km" 단위로 측정됨.
 출처: OECD. OECD.Stat.
 EU.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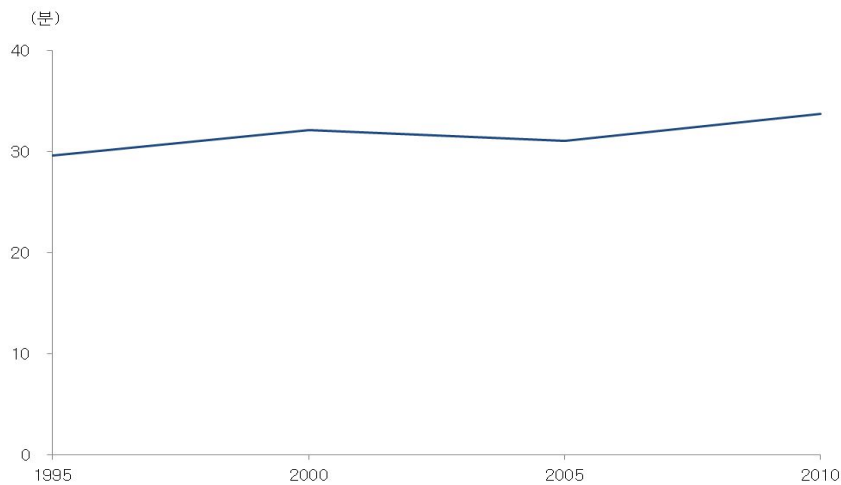
통계표

국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국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국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국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국가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호주	11.3	폴란드	14.6	이탈리아	17.1	오스트리아	21.3	불가리아	24.8
노르웨이	11.5	포르투갈	14.8	덴마크	17.8	라트비아	21.3	슬로바키아	26.7
영국	12.1	핀란드	15.5	크로아티아	17.9	벨기에	20.5	일본	37.3
네덜란드	12.7	룩셈부르크	15.7	에스토니아	18.6	스위스	22.4	헝가리	40.2
슬로베니아	13.6	아일랜드	16.2	그리스	19.2	루마니아	22.8	터키	43.7
독일	14.4	스웨덴	16.6	스페인	19.8	체코	24.0	한국	44.0

27203. 통근시간

■ 주요지표

평균통근시간, 1995-2010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2) 통근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평균통근시간이란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통근인구란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말함
- 측정 방법: 평균통근시간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소요시간 계급별 통근인구 자료로부터 산출함(단, 통근시간 120분 이상 계급은 120-150분 계급으로 설정하여 그 계급값을 135분으로 가정함)

$$\text{평균 통근통학시간} = \frac{\sum_{\text{계급 } i} \text{계급값}_i \times \text{도수}_i}{\text{총도수}}$$

● 지표의 의의

통근시간은 직장으로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산성 및 편의성과 관련되어 국가경쟁력 및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 변화, 업무지역과 주거지역의 변화, 토지이용과 지가 변화, 통근 시간대의 교통서비스수준 등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서 관련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해설

1995-2000년 사이 평균통근시간은 29.6분에서 32.1분으로 2.5분 증가하였다. 전체 통근인구 중 통근시간이 1시간 이상인 인구의 비율은 9.5%에서 14.5%로 5.0%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 평균통근시간은 33.7분(2000년 대비 1.6분 증가), 1시간 이상 인구비율은 15.6%(2000년 대비 1.1% 증가)로 2000년 이후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중반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평균 통근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40분으로 통근시간이 가장 긴 국가에 속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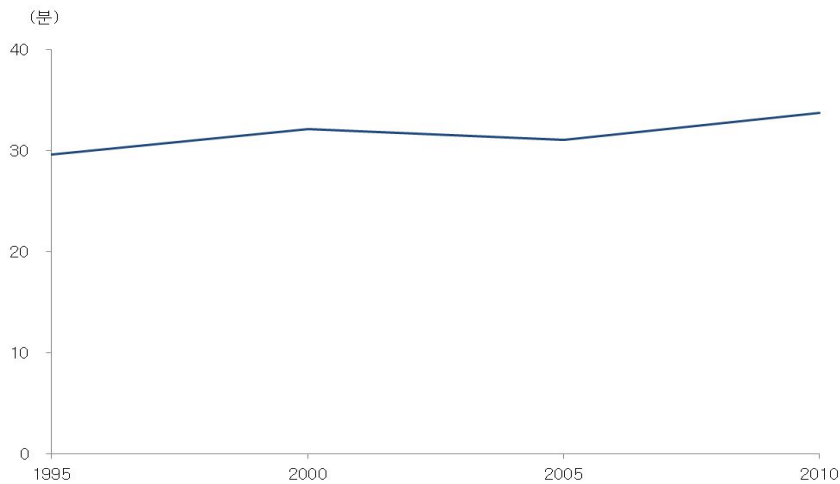
통근시간 차이와 평균통행시간, 1995-2010

	1995	2000	2005	2010
통근인구(1,000명)	16,240	17,196	17,933	21,571
15분 미만	5,488	5,154	5,621	5,472
15-30분	4,627	4,417	4,881	6,169
30-45분	2,758	4,548	4,369	5,829
45-60분	1,818	585	602	727
60-90분	1,090	1,838	1,815	2,411
90-120분	265	452	455	680
120분 이상	196	201	190	284
평균 통행시간(분)	29.6	32.1	31.1	33.7

주: 1) 통근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2) 평균통행시간은 도수분포표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단, 통근시간 120분 이상 계급은 120-150분으로 설정하여 그 계급값을 135분으로 가정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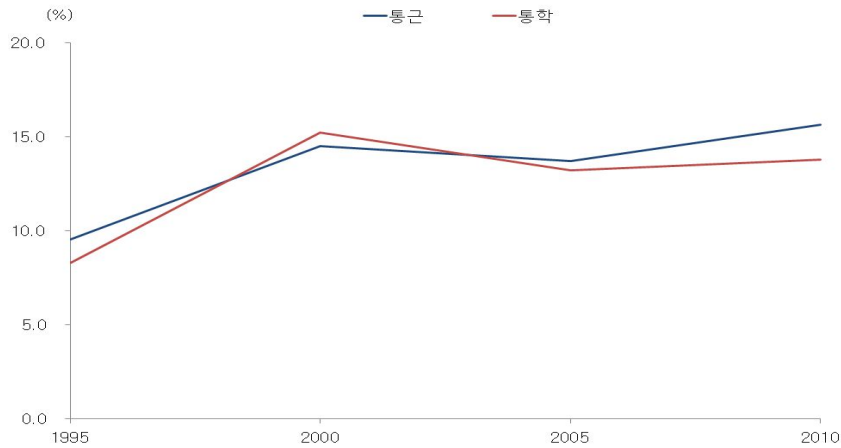
평균통학시간, 1995-2010



주: 1) 평균 통학시간은 통학인구가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2) 통학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 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표	1995	2000	2005	2010
평균통학시간	28.3	33.9	30.1	31.5

1시간 이상 통근통학 인구 비율, 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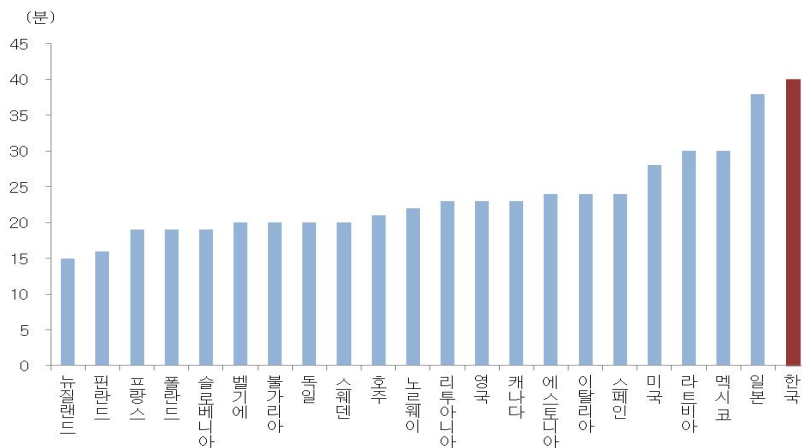


주: 1) 통근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2) 통학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 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를 포함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1995	2000	2005	2010
통근	9.5	14.5	13.7	15.6
통학	8.3	15.2	13.2	13.8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평균통근시간, 2000년대 초중반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2) 프랑스는 1999년 자료,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는 2000년 자료,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은 2001년 자료, 독일, 멕시코는 2002년 자료,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페인은 2003년 자료, 한국, 폴란드는 2004년 자료, 캐나다는 2005년 자료, 호주, 벨기에, 일본, 뉴질랜드, 터키, 미국은 2006년 자료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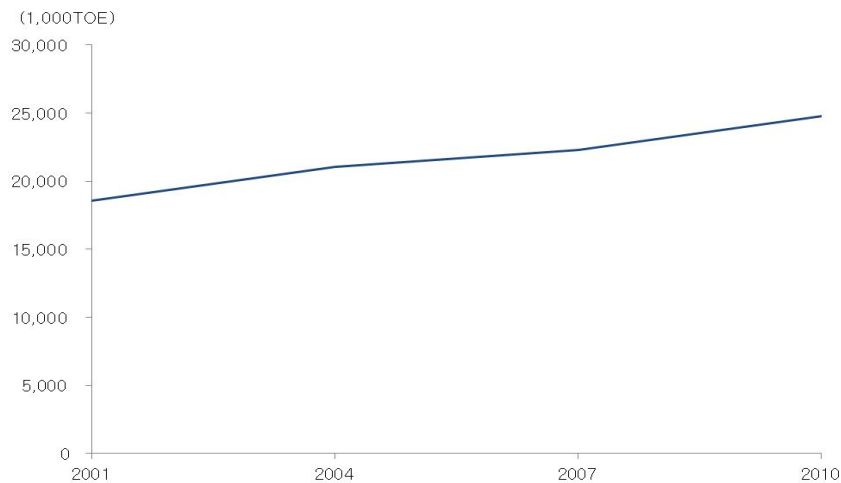
국가	통근시간	국가	통근시간	국가	통근시간	국가	통근시간
뉴질랜드	15	불가리아	20	영국	23	라트비아	30
핀란드	16	독일	20	캐나다	23	멕시코	30
프랑스	19	스웨덴	20	에스토니아	24	일본	38
폴란드	19	호주	21	이탈리아	24	한국	40
슬로베니아	19	노르웨이	22	스페인	24		
벨기에	20	리투아니아	23	미국	28		

2.7.3. 교통환경

27304. 자동차에너지소비량

■ 주요지표

자가용 자동차 에너지소비량, 2001-2010



주: 1) 자가용 자동차 에너지소비량은 자가용 승용차, 자가용 승합차, 자가용 화물차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합계임.
출처: 지식경제부,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자가용 자동차 에너지소비량은 통계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동안 자가용 자동차가 소비한 에너지 소비량임. 여기서, 자가용 자동차는 승용차 일반형, 승용차 다목적형, 승합차, 개인화물차를 포함함.
- 측정 방법: 자가용 자동차 에너지소비량은 에너지총조사보고서의 원자료를 인용함.

● 지표의 의의

한국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교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3% 수준이다. 이 중 자가용 자동차는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량의 약 60% 가량을 소비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 절감과 자동차 효율 개선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자가용 자동차 에너지소비량'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해설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 평균연비가 꾸준히 개선되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가용 자동차 에너지소비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2001-2010년 사이 자가용 자동차 에너지소비량은 1,860만 4,000TOE에서 2,476만 4,000TOE로 약 33%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의 총 통행거리의 증가와 소형 자동차 중심에서 중·대형 자동차로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로정체로 인한 자동차 공회전의 증가 역시 에너지소비량의 증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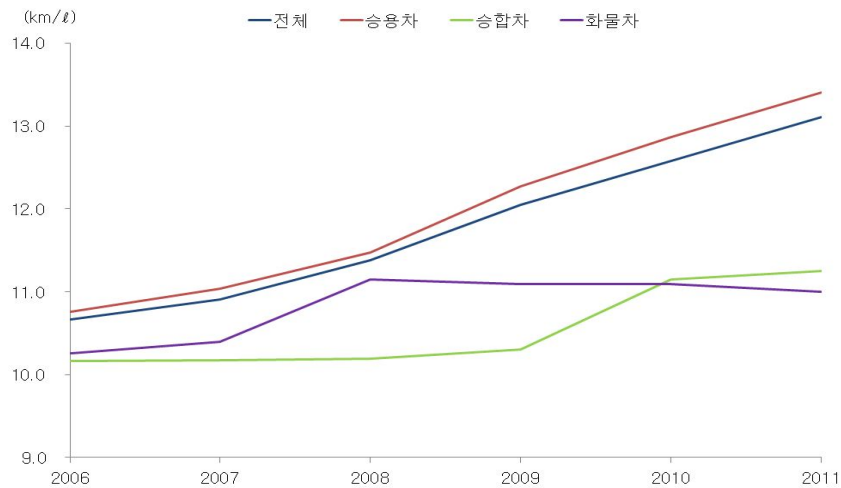
자가용 차종별 에너지소비량, 2001-2010

	(1,000TOE)			
	2001	2004	2007	2010
자가용	18,604	21,051	22,322	24,764
승용차	10,514	12,537	13,837	16,029
일반형	9,522	9,036	9,352	10,831
1,500cc 미만	4,841	3,926	3,142	2,636
2,000cc 미만	3,703	3,721	4,133	5,152
2,000cc 이상	977	1,389	2,077	3,042
다목적형	992	3,501	4,485	5,198
승합차	2,686	2,385	2,169	1,935
15인 이하	2,565	2,191	1,956	1,722
25인 이하	32	51	52	47
26인 이상	89	143	161	166
개인화물차	5,404	6,130	6,316	6,800

주: 1) 다목적형 승용차는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지동차로서 일반형 승용차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차량을 의미함.
출처: 지식경제부,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 보조지표

차종별 평균연비, 2006-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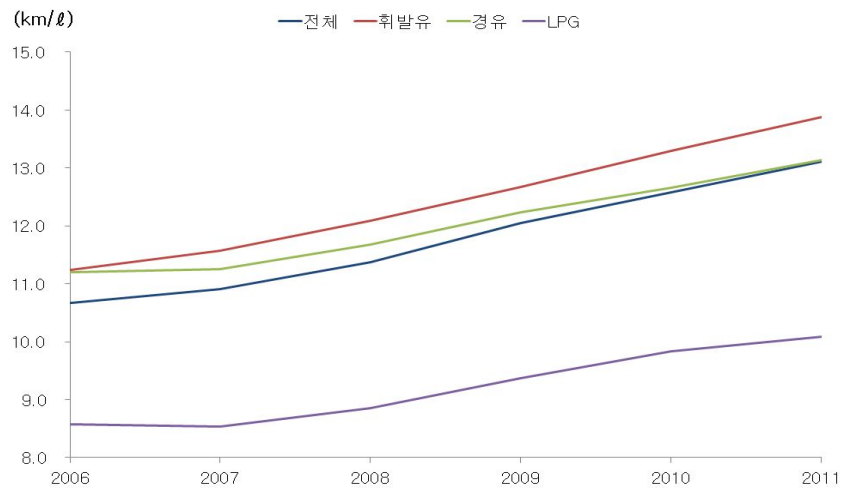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분석집」, 각 년도.

통계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0.7	10.9	11.4	12.1	12.6	13.1
승용차	10.8	11.0	11.5	12.3	12.9	13.4
승합차	10.2	10.2	10.2	10.3	11.2	11.3
화물차	10.3	10.4	11.2	11.1	11.1	11.0

차량 유종별 평균연비, 2006-2011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분석집」,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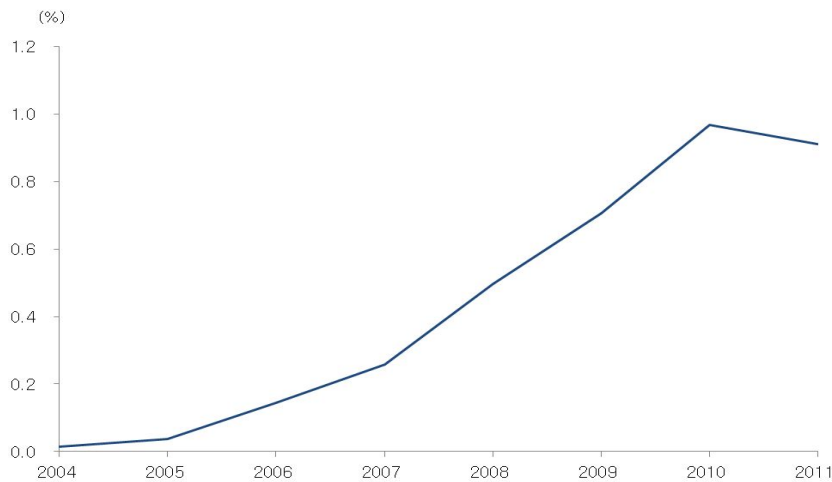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10.7	10.9	11.4	12.1	12.6	13.1
휘발유	11.2	11.6	12.1	12.7	13.3	13.9
경유	11.2	11.3	11.7	12.2	12.7	13.1
LPG	8.6	8.5	8.9	9.4	9.8	10.1

■ 국제비교지표 (없음)

27305.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 주요지표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2004-2011



주: 1) 신재생에너지소비율은 교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은 교통부문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등 종래 사용되어온 에너지 이외에 장차 기술개발에 의하여 공급 될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동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석탄전환연료 등을 말함.
- 측정 방법: 교통부문 신재생 에너지 소비율은 교통부문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을 교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으로 나눈 값으로 각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통계연보의 원자료를 인용함.

● 지표의 의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석유수입의 의존성을 경감하여 국내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을 개선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지표는 교통부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화석연료에 대한 대체 경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교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 에너지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 즉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은 2004-2011년 사이 0.01%에서 0.91%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EU 주요국의 평균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3.8%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 자동차보급률을 살펴보면, 2008-2012년 사이 0.04%에서 0.57%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절대값은 미미한 수준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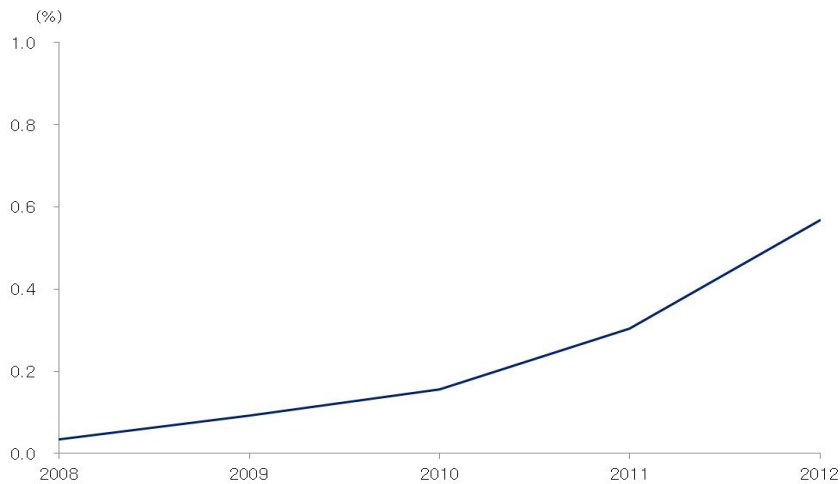
교통부문 사용연료별 에너지소비량, 2004-2011

	(1,000TO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34,615	35,558	36,525	37,069	35,793	35,930	36,939	36,875
석탄	34,160	34,982	35,780	36,149	34,642	34,529	35,282	35,172
도시가스	237	339	475	615	777	960	1,112	1,174
전력	213	224	217	209	196	187	188	193
신재생 및 기타	5	13	54	95	178	254	357	336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 보조지표

친환경자동차 보급률, 200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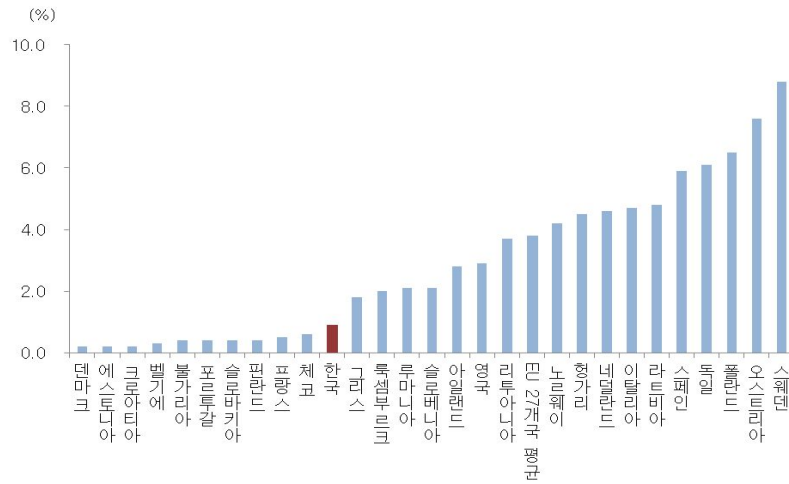


주: 1)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승용차 중 친환경 에너지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의 비율임.
 2) 친환경 에너지는 전기, 하이브리드, 알코올, 태양열, CNG, LNG를 포함함. 클린디젤 역시 친환경 에너지에 속하지만 따로 구분되지 않고 경유로 집계되어 제외함.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 년도.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	0.04	0.09	0.16	0.3	0.57

■ 국제비교지표

EU 주요국의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2010



주: 1) 신재생 에너지 소비율은 교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0.
EU, Eurostat.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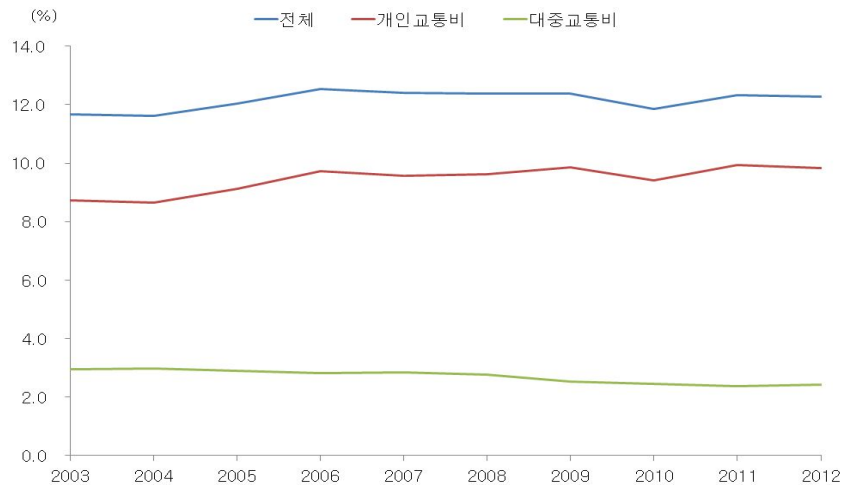
국가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국가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국가	신재생에너지소비율
덴마크	0.2	한국	0.9	헝가리	4.5
에스토니아	0.2	그리스	1.8	네덜란드	4.6
크로아티아	0.2	룩셈부르크	2.0	이탈리아	4.7
벨기에	0.3	루마니아	2.1	라트비아	4.8
불가리아	0.4	슬로베니아	2.1	스페인	5.9
포르투갈	0.4	아일랜드	2.8	독일	6.1
슬로바키아	0.4	영국	2.9	폴란드	6.5
핀란드	0.4	리투아니아	3.7	오스트리아	7.6
프랑스	0.5	EU 27개국 평균	3.8	스웨덴	8.8
체코	0.6	노르웨이	4.2		

2.7.4. 교통비용

27406. 교통비

■ 주요지표

가구 교통비 지출률, 2003-2012



주: 1) 교통비 지출률은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가구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개인교통비는 자동차 구입비, 기타 운송기구(오토바이, 자전거 등) 구입비,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비(부품 및 관련용품, 유지 및 수리비),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서비스(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료, 기타 개인교통) 등을 포함하고, 대중교통비는 철도운송비, 육상운송비, 기타운송비(항공, 교통카드 이용, 기타 여객운송)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가구 교통비 지출률은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중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임. 교통비 지출은 개인교통비와 대중교통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교통비는 자동차 구입비, 기타 운송기구(오토바이, 자전거 등) 구입비,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비(부품 및 관련용품, 유지 및 수리비),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서비스(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료, 기타 개인교통) 등을 포함하고, 대중교통비는 철도운송비, 육상운송비, 기타운송비(항공, 교통카드 이용, 기타 여객운송) 등을 포함함.
- 측정 방법: $\text{가구 교통비 지출률} = (\text{가구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 \div \text{가구 월평균 소비 지출액}) \times 100$.

● 지표의 의의

교통비 지출 지표는 가구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비용, 즉 소비지출 중에서 ‘교통비 지출’ 비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교통 및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교통비 지출액의 변화는 국가의 세수입과 교통부문에 가구가 느끼는 부담으로 직결되는데 특히, 가구의 생활수준실태와 교통비 부담의 변화를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은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형평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유류세, 자동차세, 대중교통요금 등 정책시행이 어느 소비계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 해설

2012년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은 약 30만 2,000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의 19만 8,000원보다 10만원 남짓 증가하였으나 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교통비 지출률은 별다른 변화 없이 대체로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교통비지출을 개인교통비와 대중교통비로 구분해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대중교통비 지출률은 점차 감소해온 반면 개인교통비 지출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개인교통비 지출이 대중교통비 지출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한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이동에 따른 비용이 높아졌음을 반영한다.

가구의 소비수준에 따라 대중교통비와 개인교통비의 지출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비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대중교통비 지출률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소비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개인교통비 지출률이 다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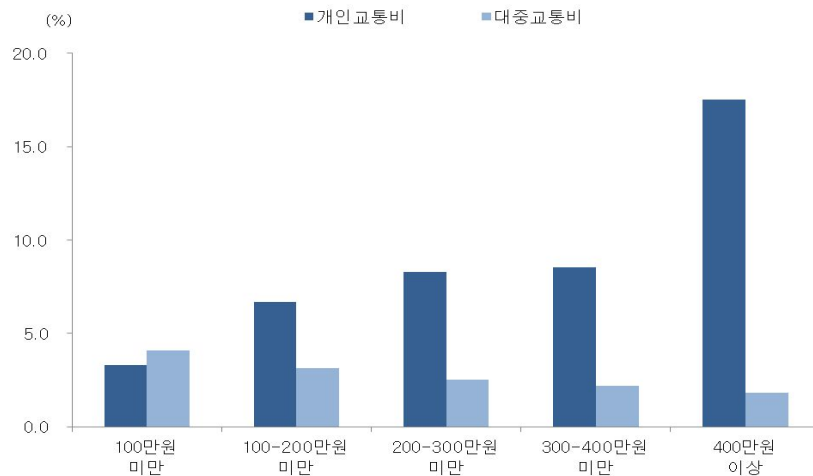
가구 월평균 교통비 및 지출률, 2003-20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통비(1,000원)										
전체	198	209	225	244	250	262	266	271	295	302
개인교통비	148	155	171	189	193	203	212	215	238	242
대중교통비	50	53	54	55	57	59	54	56	57	60
지출률(%)										
전체	11.7	11.6	12.0	12.5	12.4	12.4	12.4	11.9	12.3	12.3
개인교통비	8.7	8.6	9.1	9.7	9.6	9.6	9.8	9.4	9.9	9.8
대중교통비	2.9	3.0	2.9	2.8	2.8	2.8	2.5	2.4	2.4	2.4

주: 1) 교통비 지출률은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가구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개인교통비는 자동차 구입비, 기타 운송기구(오토바이, 자전거 등) 구입비,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비(부품 및 관련용품, 유지 및 수리비),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서비스(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료, 기타 개인교통) 등을 포함하고, 대중교통비는 철도운송비, 육상운송비, 기타운송비(항공, 교통카드 이용, 기타 여객운송)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가구 소비수준별 교통비 지출률, 2013



주: 1) 교통비 지출률은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가구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개인교통비는 자동차 구입비, 기타 운송기구(오토바이, 자전거 등) 구입비,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비(부품 및 관련용품, 유지 및 수리비),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서비스(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료, 기타 개인교통) 등을 포함하고, 대중교통비는 철도운송비, 육상운송비, 기타운송비(항공, 교통카드 이용, 기타 여객운송) 등을 포함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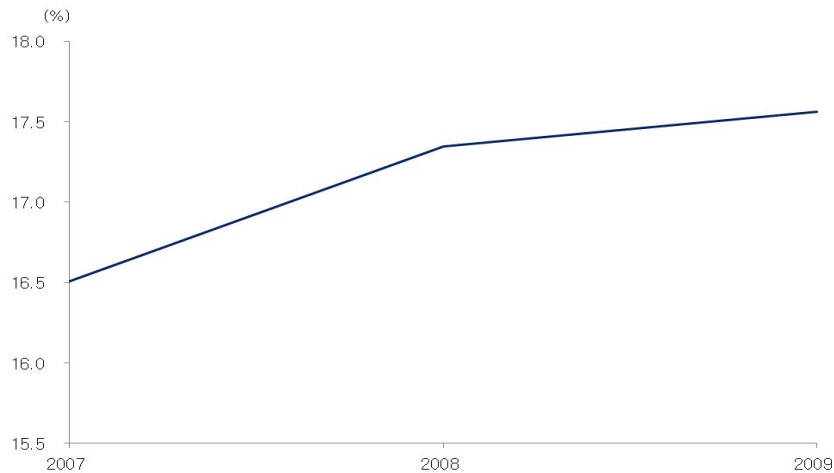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개인교통비지출률	3.3	6.7	8.3	8.5	17.5
대중교통비지출률	4.1	3.1	2.5	2.2	1.8

■ 국제비교지표 (없음)

27407.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 주요지표

GDP 대비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2007-2009



주: 1) 사회적 비용은 도로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국가물류비용, 대기오염비용, 온실가스비용, 소음비용의 합계임.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통계 2012」, 2012.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지표는 도로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교통과 관련된 외부효과를 화폐가치로 계량화한 것을 의미함.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되는 외부비용에는 도로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국가물류비용, 대기오염비용, 온실가스비용, 소음비용이 있음. 경제발전과 비교한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의 변화는 GDP 대비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으로 살펴볼 수 있음.
- 측정 방법: 각 외부비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산출한 결과를 인용함.

● 지표의 의의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은 도로혼잡, 교통사고, 국가물류비, 대기오염, 온실가스, 소음 등 교통부문에서 유발되는 주요 외부비용이다. 도로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국가물류비용은 생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절감해야하는 요소이다. 또한, 도로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대기오염비용, 온실가스비용, 소음비용은 교통이 국민의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교통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교통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 해설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은 2007-2009년 사이 약 161조에서 약 187조로 26조원이 증가하였다. GDP 대비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은 2007년 16.5%, 2009년 17.6%로 경제성장을 고려하더라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을 항목 별로 살펴보면 2009년 기준 국가물류비용이 약 116조원으로 전체 비용 중 가장 큰 비율인 약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혼잡비용, 대기오염비용, 온실가스비용, 교통사고비용, 소음비용이 각각 약 28조원(14.8%), 17조원(8.9%), 12조원(6.6%), 12조원(6.2%), 3조원(1.6%)으로 나타났다.

● 상세 통계표

GDP 대비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 2007-2009

	2007	2008	2009
전체(10억원)	160,957	178,043	187,048
GDP 대비(%)	16.5	17.3	17.6
도로교통혼잡비용(10억원)	25,862	26,903	27,706
GDP 대비(%)	2.7	2.6	2.6
교통사고비용(10억원)	10,184	10,630	11,582
GDP 대비(%)	1.0	1.0	1.1
국가물류비용(10억원)	107,479	120,262	115,785
GDP 대비(%)	11.0	11.7	10.9
대기오염비용(10억원)	13,054	14,378	16,621
GDP 대비(%)	1.3	1.4	1.6
온실가스비용(10억원)	1,273	2,924	12,306
GDP 대비(%)	0.1	0.3	1.2
소음비용(10억원)	3,105	2,946	3,048
GDP 대비(%)	0.3	0.3	0.3

주: 1) 교통부문 사회적 비용은 도로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국가물류비용, 대기오염비용, 온실가스비용, 소음비용의 합계임.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통계 2012」, 2012.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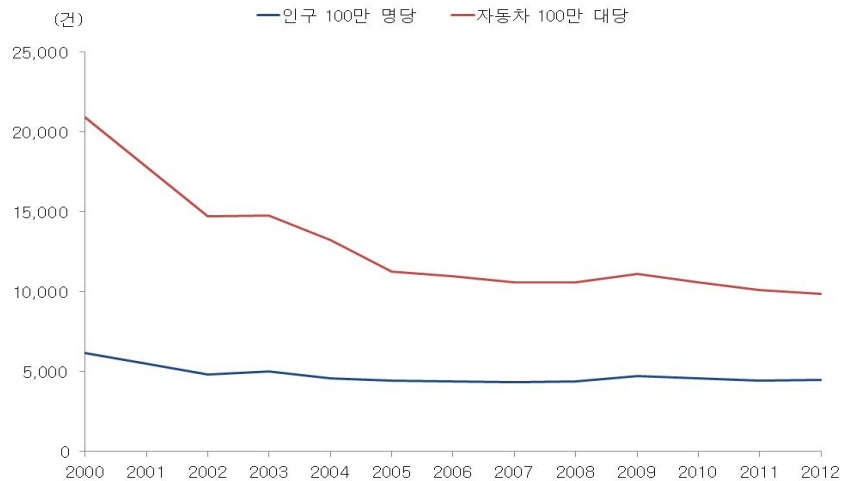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2.7.5. 교통사고

27508.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 주요지표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2000-2012



주: 1)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

2)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 피해 사고만을 포함함.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의미함. 단,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 피해 사고만을 의미하며 물적 피해 사고는 제외됨.
- 측정 방법: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도로교통공단의 원자료를 인용함.

● 지표의 의의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주는 주요한 수단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반면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현재 한국의 교통사고 피해와 교통안전 수준을 파악하여 교통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2000-2012년 사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90,481건에서 223,656건으로 23% 감소하였다.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6,179건에서 4,473건으로, 자동차 100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920건에서 9,900건으로 각각 28%, 53%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최근 5년간(2007-2012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0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자동차 100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지만, 각각 평균적으로 매년 1.2% 증가, 0.6% 증가, 1.3%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어린이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평균적으로 매년 1.2%, 0.6% 증가하였다. 반면에 노약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적으로 매년 9.8%씩 증가하여 전반적인 추세보다 심각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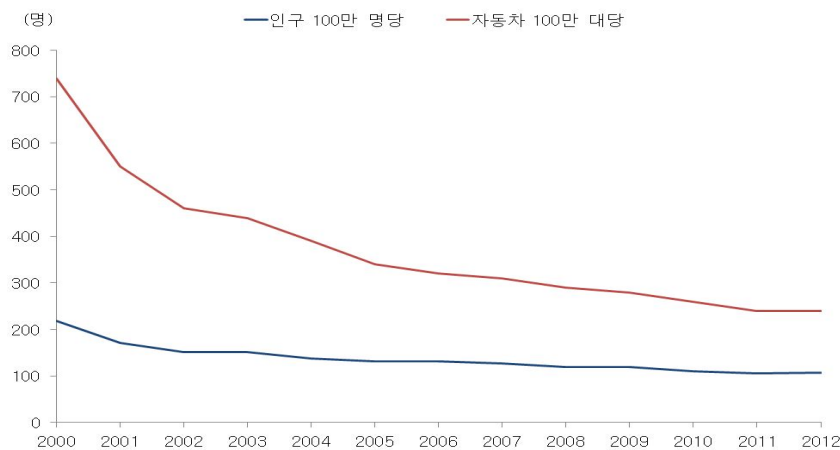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2000-201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290,481	260,579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1일 평균	796	714	633	660	605	587	586	580	590	636	622	607	611
인구 100만 명당	6,179	5,502	4,851	5,032	4,595	4,449	4,419	4,355	4,409	4,717	4,592	4,454	4,473
자동차 100만 대당	20,920	17,830	14,750	14,760	13,250	11,290	10,980	10,580	10,590	11,140	10,580	10,120	9,900

주: 1)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
 2)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 피해 사고만을 포함함.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보조지표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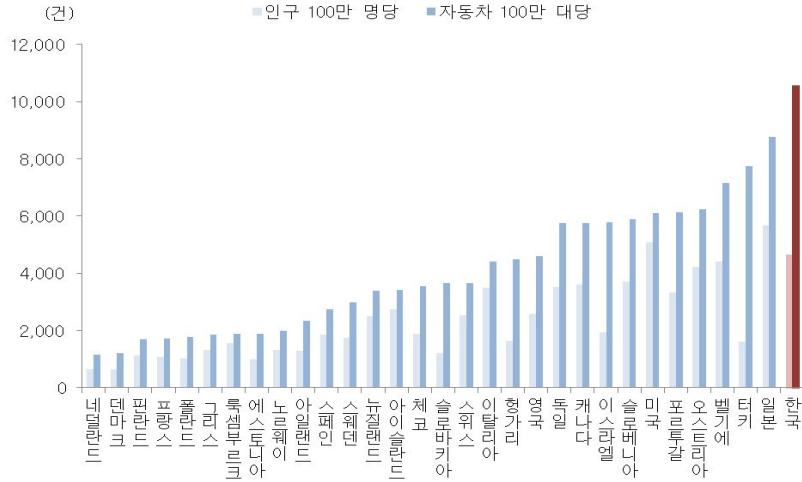


주: 1)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
 2)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구 100만명당	218	171	152	151	137	132	131	127	120	119	111	105	108
자동차 100만대당	740	550	460	440	390	340	320	310	290	280	260	240	24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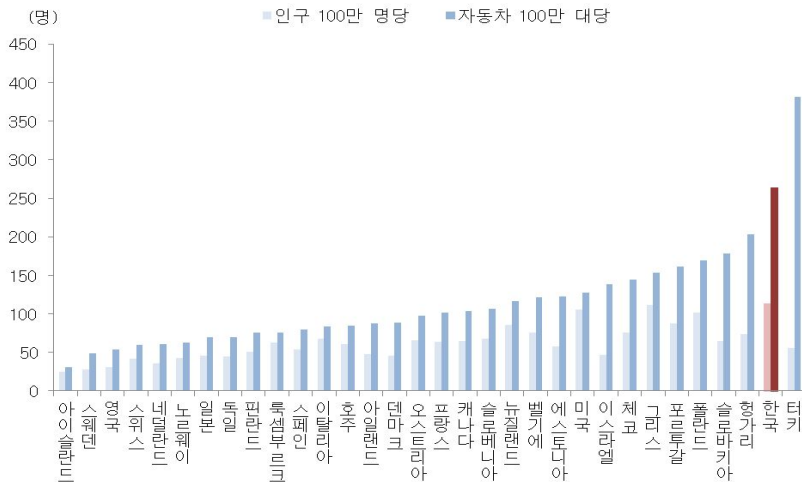


출처: IRTAD.

통계표

국가	인구 100만 명당 발생건수	자동차 100만 대당 발생건수	국가	인구 100만 명당 발생건수	자동차 100만 대당 발생건수	국가	인구 100만 명당 발생건수	자동차 100만 대당 발생건수
네덜란드	650	1,154	스웨덴	1,740	2,981	이스라엘	1,932	5,781
덴마크	632	1,210	뉴질랜드	2,492	3,398	슬로베니아	3,711	5,888
핀란드	1,135	1,689	아이슬란드	2,755	3,409	미국	5,083	6,106
프랑스	1,071	1,724	체코	1,873	3,547	포르투갈	3,330	6,139
폴란드	1,017	1,763	슬로바키아	1,210	3,648	오스트리아	4,221	6,229
그리스	1,330	1,865	스위스	2,518	3,658	벨기에	4,409	7,145
룩셈부르크	1,568	1,874	이탈리아	3,504	4,407	터키	1,610	7,737
에스토니아	1,004	1,890	헝가리	1,629	4,480	일본	5,667	8,769
노르웨이	1,310	1,999	영국	2,581	4,584	한국	4,642	10,578
아일랜드	1,294	2,342	독일	3,524	5,745			
스페인	1,859	2,750	캐나다	3,612	5,760			

OECD 주요국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2010



출처: IRTAD.

통계표

국가	인구 100만 명당 발생건수	자동차 100만 대당 발생건수	국가	인구 100만 명당 발생건수	자동차 100만 대당 발생건수	국가	인구 100만 명당 발생건수	자동차 100만 대당 발생건수
아이슬란드	25	31	이탈리아	68	84	미국	106	127
스웨덴	28	49	호주	61	85	이스라엘	47	138
영국	31	54	아일랜드	47	88	체코	76	145
스위스	42	60	덴마크	46	88	그리스	111	153
네덜란드	36	61	오스트리아	66	97	포르투갈	88	162
노르웨이	43	63	프랑스	64	102	폴란드	102	170
일본	45	69	캐나다	65	103	슬로바키아	65	179
독일	45	70	슬로베니아	68	107	헝가리	74	203
핀란드	51	76	뉴질랜드	86	117	대한민국	114	264
룩셈부르크	63	76	벨기에	76	121	터키	56	381
스페인	54	80	에스토니아	58	122			

2.8.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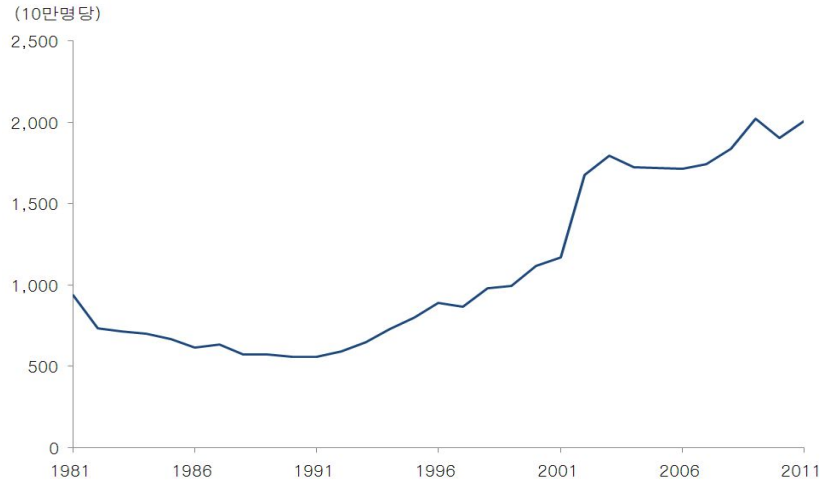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안전	범죄	• 범죄율	• 범죄자수 • 소년범죄자율	• 살인범죄율
		• 범죄피해율		
		• 재범률	• 교도관수대비1일평균수용자수	
	치안	•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 인구 10만 명당 민간경비원수	•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
	재해	• 자연재해피해액	• 자연재해주의보·경보발효횟수	
		• 화재피해액		
	안전에 대한 인식	• 사회안전인식도	• 위험종류별 안전인식도	
		• 범죄두려움		• 범죄두려움

2.8.1. 범죄

28101. 범죄율

■ 주요지표

범죄율, 1981-2011



주: 1)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자수임.
2) 2002년도부터 특별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형법범으로 분류하고 2003년도부터 특별법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으로 분류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범죄는 현행 「형법」을 위반한 형법범죄를 의미함.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법전(法典)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범죄란 '형법전(刑法典)'상 제시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로서 성립되어 진 것을 의미함. 2002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형법범죄에 포함됨. 형법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 측정 방법: 범죄율 = (형법범죄 발생건수 ÷ 총인구) × 100,000.

● 지표의 의의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내는 주요지표이다. 통상 범죄로 불리는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가 포함된다.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 신체, 명예에 손상을 가하여 국민의 웰빙을 감퇴시키고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을 높여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를 낮춤으로써 사회 안전과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해설

한국의 공식 범죄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은 범형식적 분류방식을 채택하여 범죄를 형법과 특별법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러나 범형식은 특별법이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형법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죄분석」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범죄현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대검찰청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2년에 집계방식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부분적인 개선에 그쳤다. 안전의 한 하위영역으로서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분석」을 사용하는 현 지표도 따라서 한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공식 범죄통계를 통해서 범죄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학과 실무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계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범죄율은 1981년의 인구 10만명당 934건에서 2011년의 2003건으로 2.1배 증가하였다. 범죄율은 1981년부터 1991년(558건)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의 IMF 여파로 1998년의 범죄율 증가폭이 커졌고, 2002년에 가장 급격한 증가가 관찰된다. 그러나 2002년에 범죄율이 급증한 것은 범죄발생 때문이라기보다는 특별법범죄에 속하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집계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범죄율이 2000년대 초반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강간(성폭력범 포함), 폭행, 절도의 추세를 보면,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강도의 범죄율만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살인은 1.3배, 절도는 1.6배, 강간(성폭력 포함)은 2배, 폭행은 7.1배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이후로 나타나는 폭행의 급증이다. 2005년에 21,352건이던 폭행사건이 2006년에 75,994건, 2011년엔 155,12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6년 이후로 주요범죄에서 폭행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폭행의 발생이 갑자기 증가했다기보다는 경찰이 2005년도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는 경미한 폭행사건이 빠짐없이 기록된 결과로 추정된다.

국가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발생을 비교하기 어렵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율을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수준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살인율을 지역에 따라서 살펴 보면, 아프리카가 가장 높고, 남미, 북미, 아시아, 유럽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살인율은 2.6으로 아시아에서 일본(0.4), 싱가포르(0.4), 중국(1.0)보다 높지만, 대만(3.2), 인도(3.4)보다 낮다. 한국의 살인율이 국제비교지표에서 살펴본 19개국 평균(6.2)보다 상당히 낮아 비교적 안전한 사회로 평가된다. 한국의 살인범죄에는 살인 미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할 경우 살인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범죄건수를 중심으로 한 통계 이외에 범죄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30년간 한국의 범죄자수는 1981년의 400,539명에서 2011년의 954,629명으로 약 2.9배 증가하여 범죄율보다 증가폭이 조금 더 컸다. 이 기간 중에 제24회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 범죄자수가 가장 적었고,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범죄자수가 1,118,253명으로 급증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

범죄자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는 주로 남자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30년간 전체 범죄자 중에서 여성범죄자가 차지한 비율은 1981년에 14.1%로 가장 낮았고, 1996년에 23.1%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로 다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7.1%를 기록했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범죄분석」 자료를 분석해보면, 주요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에서 2011년 사이에 5가지 주요범죄(살인, 강도, 강간(성폭력 포함), 절도, 폭행)에서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간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살인, 강도, 절도, 폭행에서 청소년 범죄자 비율은 모두 감소한 것은 전체인구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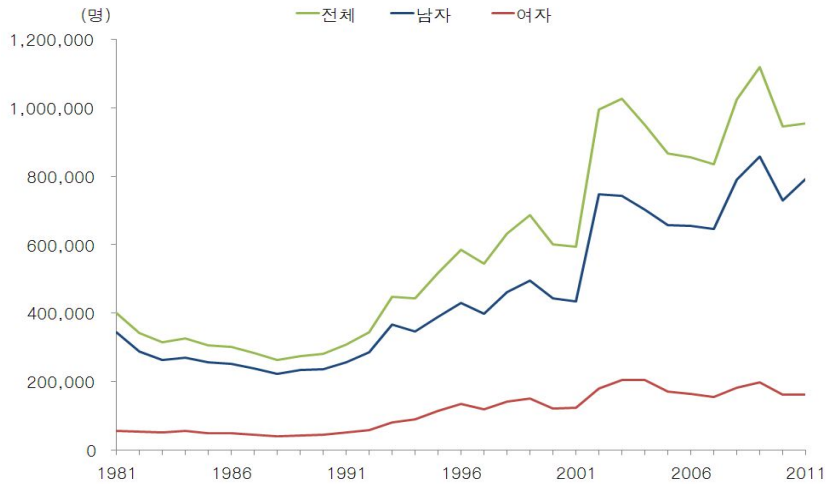
주요 형법범죄율, 2000-201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살인	2.1	2.2	2.1	2.1	2.3	2.3	2.2	2.3	2.3	2.8	2.6	2.5
강도	11.4	11.7	12.5	15.3	12	10.9	9.7	9.2	9.9	13	8.9	8.1
강간(성폭력 포함)	21.7	22.1	19.8	21.7	23.1	24.4	28.1	28.1	30.8	32.8	40.4	44.3
폭행	35.8	36.4	33.8	39.1	36.2	40.4	132.8	200.8	220.5	234.9	221.8	247.7
절도	351.6	357.1	376.3	392.5	322.3	397	394.3	437.3	456.1	521.9	542.4	565.6

주: 1) 형법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형법범죄자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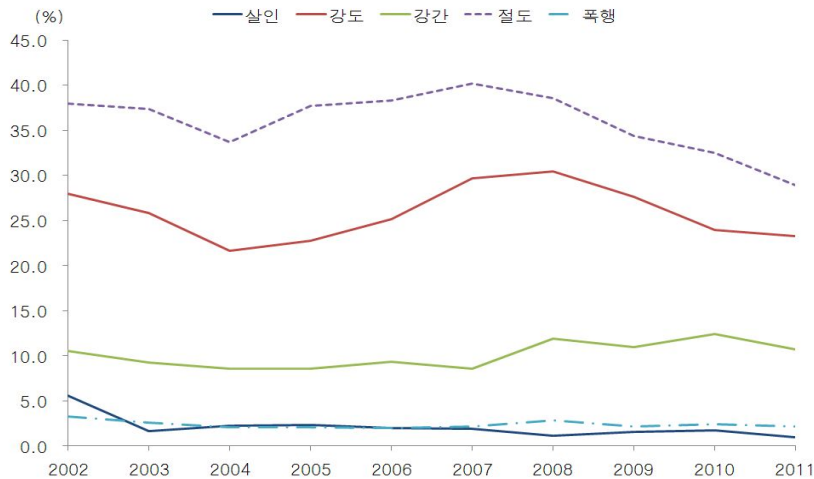
성별 범죄자수, 1981-2011



주: 1) 범죄자수는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수를 의미함.
 2) 2002년도부터 특별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으로 집계함.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2.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전체	400,539	306,614	281,552	517,925	599,992	865,325	944,853	954,629
남자	344,119	255,908	237,057	389,026	443,226	657,658	728,985	791,780
여자	56,420	50,706	44,495	114,015	122,459	171,820	162,762	162,849

주요 범죄유형별 소년범죄자율, 200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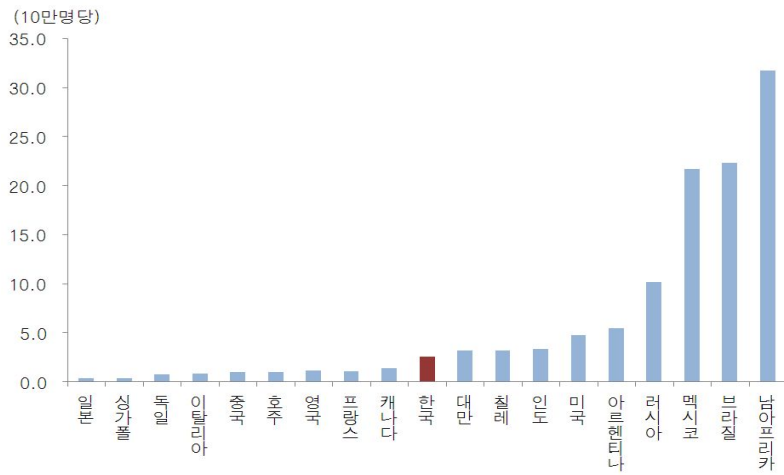


주: 1) 주요범죄별 전체 검거된 범죄자 중 소년 범죄자 비율임.
 2) 2008.6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2009년부터 18세로 연령 기준을 변경함.
 3) 강간은 성폭력을 포함한 수치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살인	5.6	1.7	2.3	2.4	2.0	1.9	1.2	1.6	1.8	1.0
강도	27.9	25.8	21.6	22.7	25.1	29.6	30.4	27.6	23.9	23.2
강간	10.5	9.3	8.6	8.6	9.4	8.6	11.9	11.0	12.4	10.7
절도	38.0	37.4	33.7	37.7	38.3	40.2	38.6	34.4	32.5	28.9
폭행	3.3	2.6	2.1	2.1	2.0	2.2	2.9	2.2	2.4	2.2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살인범죄율, 2010



주: 1) 주요국가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율임.
출처: UNODC, *UNODC Homicide Statistics*,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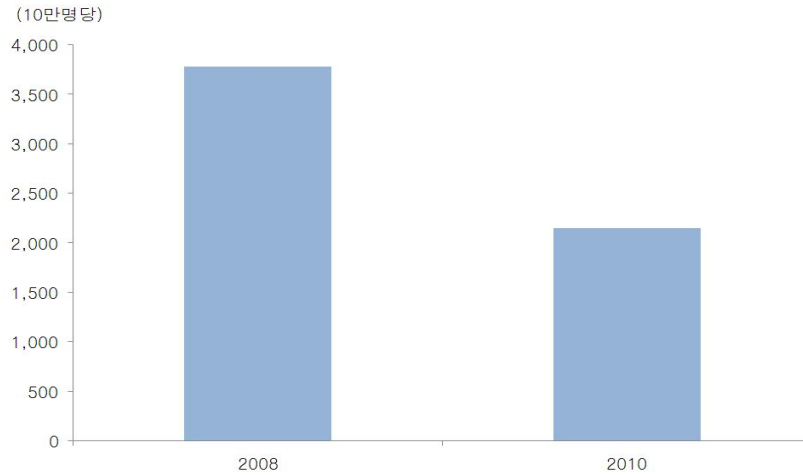
통계표

	일본	싱가폴	독일	이탈리아	중국	호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살인범죄율	0.4	0.4	0.8	0.9	1.0	1.0	1.1	1.1	1.4	2.6
	대만	칠레	인도	미국	아르헨티나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남아프리카	
살인범죄율	3.2	3.2	3.4	4.8	5.5	10.2	21.7	22.4	31.8	

28102. 범죄피해율

■ 주요지표

범죄피해율, 2008, 2010



주: 1) 인구 10만 명당 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행 범죄피해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인구 십만명당 개인대상 범죄피해자수임. 개인대상 범죄피해자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지난 1년간 개인대상 범죄피해(2008년과 2010년 조사에 모두 포함된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자임.
- 측정 방법: 범죄피해율 = (개인대상 범죄피해자 ÷ 조사대상인구) × 100,000.

● 지표의 의의

공식범죄통계는 경찰과 검찰이 인지하고 처리한 사건들을 집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어도 사법기관에 신고 되지 않거나 신고 됐어도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공식범죄통계에서 빠지는 ‘숨은 범죄’의 문제가 생겨난다. 공식범죄통계는 또한 범죄의 실제 발생보다 사법기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조사는 ‘숨은 범죄’를 파악해서 범죄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고 사회안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함으로써 국민의 웰빙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범죄피해예방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해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8년과 2010년에 수집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두 차례의 조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개인대상 범죄피해 항목(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의 발생률을 추정해 보니, 2008년에 3,775명이던 피해율이 2010년에 2,142명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피해유형별로 보면, 절도피해가 가장 많이 줄었고 그 뒤를 성폭력피해, 폭행·상해피해, 강도피해 순으로 줄어들었다. 공식범죄통계인 「범죄분석」에서 계산한 형법범죄율은 2008년보다 2010년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식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에 근거한 추세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차이는 실제 범죄발생은 감소하지만 범죄신고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통신기술의 발전과 국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이 작용하여 신고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발생의 감소는 전국적인 규모의 범죄피해조사가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으면서 실증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0년도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성별, 연령, 교육수준별 차이를 분석해보니, 모든 범죄피해유형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피해를 당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도와 강도 피해율은 14세 이하의 연령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범죄피해를 더 당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성폭력과 폭행·상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상세 통계표

성, 연령, 교육수준별 주요범죄피해율, 2010

	절도	강도	성폭행	폭행·상해
전체	1,534	247	138	223
성				
남자	658	102	12	66
여자	761	132	90	108
연령집단				
14세 이상	356	108	12	30
20대	157	12	48	30
30대	338	18	18	54
40대	314	18	6	18
50대	132	30	12	6
60대	84	42	6	24
70대	36	6	0	12
교육수준				
무학	12	12	0	6
초등학교	78	24	6	24
중학교	181	84	6	24
고등학교	610	84	36	42
대학교	489	30	54	78

주: 1) 인구 10만 명당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주요범죄 피해율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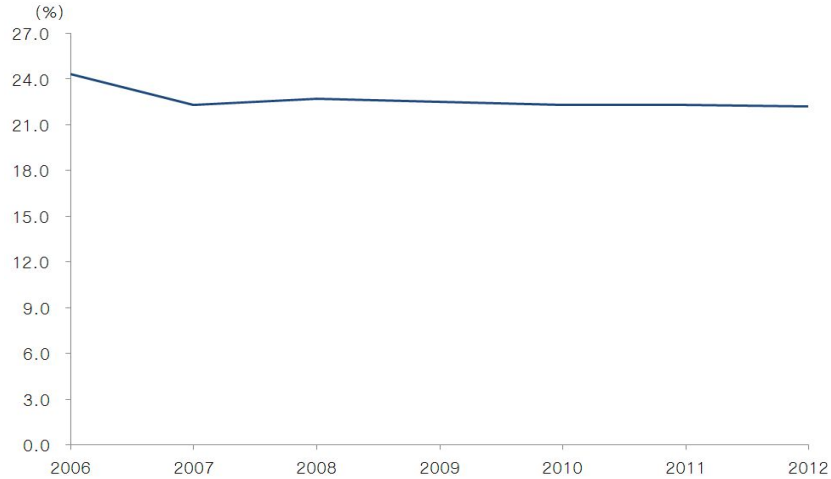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없음)

28103. 재범률

■ 주요지표

3년 이내 재범률, 2006-2012



주: 1) 재범률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수형자들이 출소한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 유죄선고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02년 출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산출을 시작함.

출처: 법무부, 「법무연감」,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재범률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수형자들이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 유죄선고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함. 여기서는 재범률의 측정을 출소 후 3년 이내 재범률로 함. 재범률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에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되는 비율임.
- 측정 방법: 3년 이내 재범률 = (3년 이내 재범자수 ÷ 해당년도 출소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국가가 범죄문제에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들을 형사사법 기관이라고 부른다. 경찰부터 교도소에 이르는 일련의 연결된 기관들은 범죄자를 체포하여 처벌이나 처우를 통해 이들의 재범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활동한다. 출소자의 재범률을 통해서 형사사법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고 형사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재범률이 낮을수록 국민의 웰빙이 증진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 해설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처리하게 되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과 같은 국가기관들을 형사사법기관이라고 부른다.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교정기관이 교육과 훈련 혹은 이념에 따라서는 처벌을 통해서 수형자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한 성과는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복역률로 판단할 수 있다.

2002년 출소한 30,869명 중에서 24.3%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되었다. 2003년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2%포인트 떨어진 22.3%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22%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 애리조나주의 재범률은 24.5%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고(Las Vegas Sun. 2008-08-20.), 캘리포니아주는 출소자의 약 64%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재구금되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2012).

교정기관이 노력한 성과를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복역률로 판단할 때 수용자 수와 교도관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자수는 1981년의 6.2명에서 2012년의 2.9명으로 46.8% 감소했다.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수가 줄수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 교육과 훈련이 용이해져서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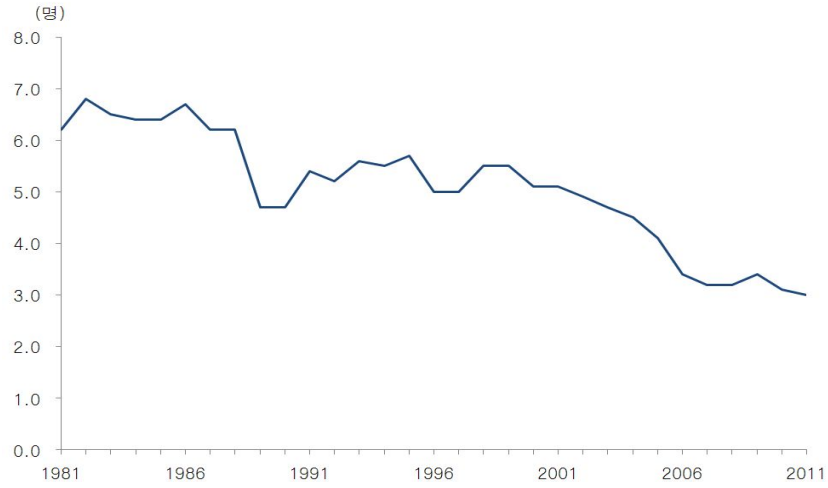
3년내 재복역률, 2006-201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출소자 수 (명)	(2002년) 30,869	31,317	29,875	27,489	24,626	24,151	(2008년) 25,802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 수 (명)	7,498	7,241	6,772	6,169	5,553	5,396	5,737
출소자 3년내 재복역률 (%)	24.3	22.3	22.7	22.5	22.3	22.3	22.2

주: 1) 재복역률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수형자들이 출소한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 유죄선고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2002년 출소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산출을 시작함.
출처: 법무부, 「법무연감」, 각 년도.

■ 보조지표

교도관수 대비 1일 평균 수용자수, 1981-2012



주: 1) 교도관수 대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1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감호자 등의 1일 평균 수용인원임.
출처: 법무부, 「법무연감」, 각 년도.

통계표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용자수	6.2	6.4	4.7	5.7	5.1	4.1	3.4	3.2	3.2	3.4	3.1	3.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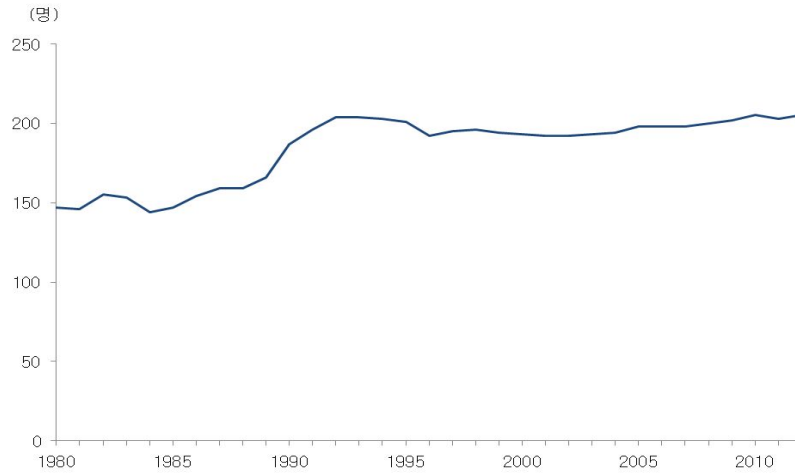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2.8.2. 치안

28204.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 주요지표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1980-2012



주: 1)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별정·일반·기능·계약직 공무원과 전·의경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양경찰도 제외됨.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감」,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를 나타냄. 경찰인력은 경찰관 총 정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별정·일반·기능·계약직 공무원과 전·의경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양경찰도 제외됨.
- 측정 방법: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 (경찰관수/인구수) × 100,000.

● 지표의 의의

치안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기본적인 복지로 경찰이 그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는 사회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기본인력을 나타내며 치안환경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가 적으면 경찰이 치안활동을 적절히 수행하기 어려워 높은 범죄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민의 웰빙을 침해하게 된다.

● 해설

지난 30년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는 1981년의 146명에서 2012년의 205명으로 1.4배 증가하였다. 인구 수 대비 경찰관수가 많을수록 경찰이 사회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웰빙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2010년 기준으로 멕시코, 독일, 호주, 영국, 미국의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는 한국보다 많고, 일본과 캐나다는 비슷한 수준이며,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적게 나타난다. 이렇듯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찰관수는 부족한 편이며, 또한 향후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치안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고려하면 경찰인력의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가 5년 내에 경찰인력을 2만 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단기간에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이, 증가하는 치안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민간경비업이 성장하고 있다. 경비회사는 계약에 의해 돈을 받고 일반기업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경비인력은 경비업체가 고용한 경비원수와 국가시설, 국영시설,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청원경찰의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원수는 빠르게 증가해서 이 둘을 합친 민간 경비인력은 경찰관수보다 많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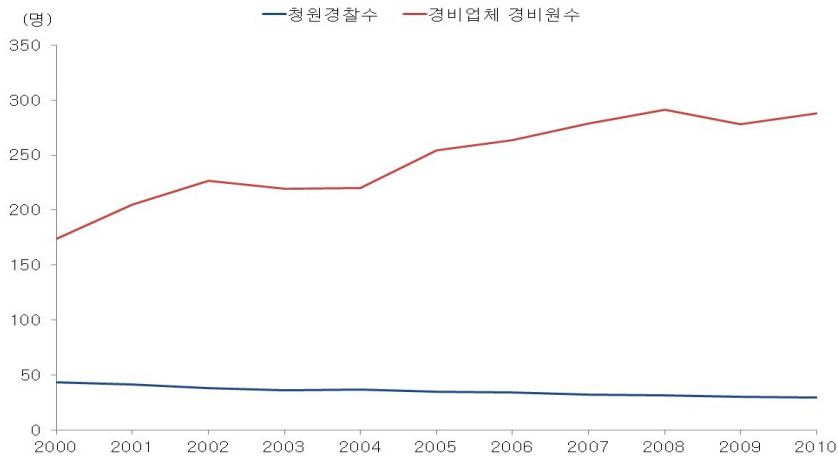
경찰관수 및 경찰관 1인당 인구, 1980-2012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경찰관수	56,003	59,907	80,026	90,639	90,670	95,336	101,108	101,239	102,386
경찰관 1인당 인구	681	681	536	498	518	505	489	492	488

주: 1)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별정·일반·기능·계약직 공무원과 전·의경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양경찰도 제외됨.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감」, 각 년도.

■ 보조지표

인구 10만명당 민간경비원수,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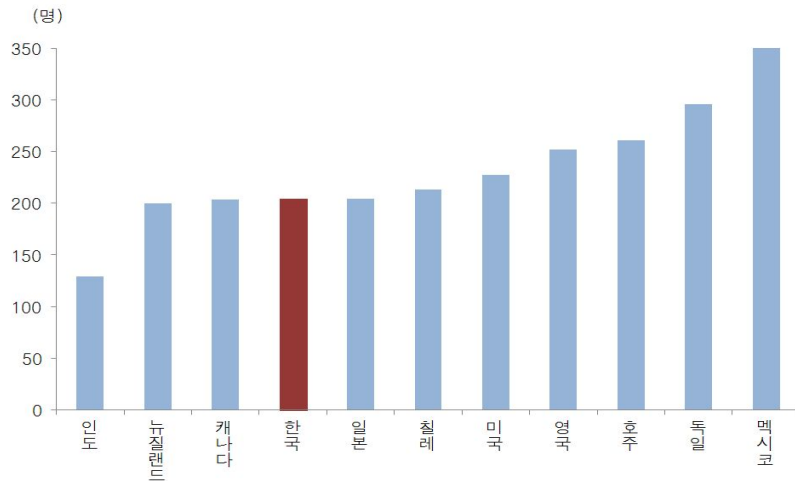
주: 1) 민간경비업체 경비원수와 국가시설, 국영시설,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원을 제시한 것임.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청원경찰 수	43.5	41.2	38.2	36.4	36.6	35	34.1	32.4	31.3	30.2	29.8
경비업체 경비원수	173.6	205.1	226.7	219.1	220	254.1	263.8	278.6	291	278.4	288.1

■ 국제비교지표

주요국의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2010



주: 1) UN에 보고된 주요국의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임.

2) 영국은 England와 Wales를 합한 수치임.

출처: UNODC, Total Police Personnel at the National Level, 2011.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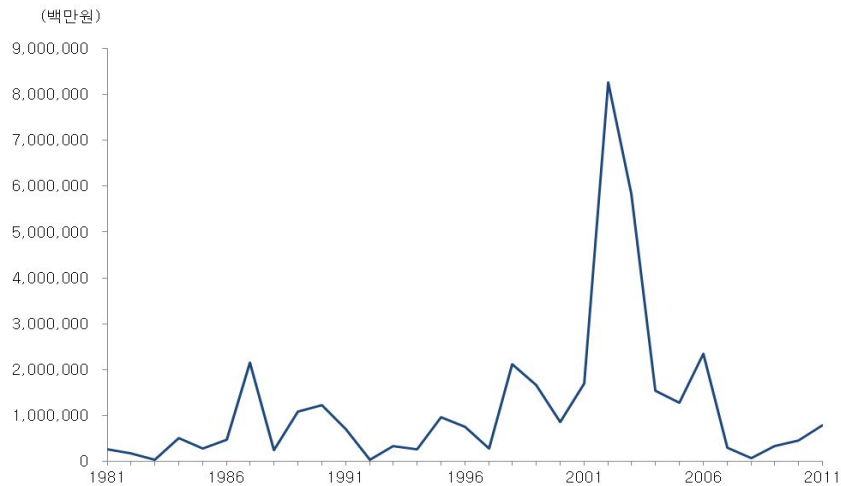
	인도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일본	칠레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멕시코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129	200	204	204	204	213	227	252	261	296	371

2.8.3. 재해

28305. 자연재해 피해액

■ 주요지표

자연재해 피해액, 1981-2011



주: 1)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액을 2011년도 환산가격으로 나타낸 것임.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11.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자연재해란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함.
- 측정 방법: 자연재해 피해액은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기타의 자연재해 총 피해액을 환산가격으로 나타냄.

● 지표의 의의

오늘날 자연재해는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의 정도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의 웰빙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 자연재해 피해액은 일반 국민과 국가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치르게 되는 비용을 나타낸다.

● 해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봄에 황사로 시작하여, 여름에 폭염과 더불어 폭우, 태풍피해로 정점에 이르고, 겨울 한파로 이어지면서 국민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연재해 중에서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태풍과 호우이며 겨울철 대설의 발생빈도도 증가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1989년 이후로 호우와 대설 주의보 및 경보의 발효횟수의 증가가 관찰되는데 특별히 2000년대 초반 이후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을 2011년도 환산가격으로 보면 주의보나 경보의 횟수보다 강력한 특정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상당히 큰 등락을 보인다. 1987년에 태풍 셀마의 영향으로 피해액이 2조 1천억 원을 넘었고, 1989년엔 호남지역에 홍수피해가 컸으며, 1990년에는 중부지방의 대홍수로 인해 20만 명이 넘는 이재민과 1조 2천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1998년의 태풍 예니, 1999년의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각기 2조1천억과 1조 7천억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큰 자연재해는 2002년의 태풍 루사로 그해 피해액이 8조 원을 넘었고 2003년에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5조 8천억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2006년의 자연재해 피해액도 태풍 에위니아의 영향으로 2조 3천억 원 이상이 되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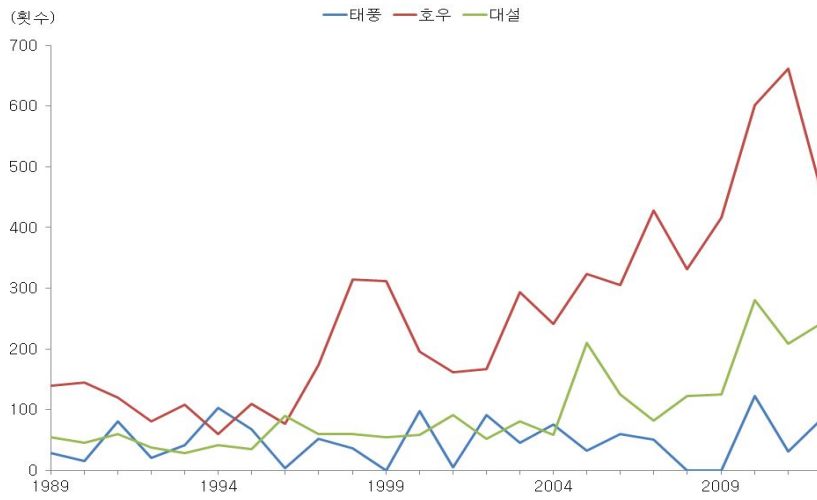
자연재해 피해액, 사망자수 및 이재민수, 1985-201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자연재해 피해액(백만원)	276,225	1,223,462	969,625	866,039	1,281,853	452,737
사망자수 (명)	250	257	158	49	52	14
이재민수 (명)	72,257	203,314	30,408	3,665	9,914	76,110

주: 1)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조수(潮水)·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피해액을 2011년 환산가격으로 나타낸 액수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및 이재민수임.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2011.

■ 보조지표

태풍, 호우, 대설 주의보·경보 발효횟수, 1989-2012



주: 1) 기상청에서 발표한 태풍, 호우, 대설 주의보·경보 발효횟수임.
출처: 기상청, 「기상연감」,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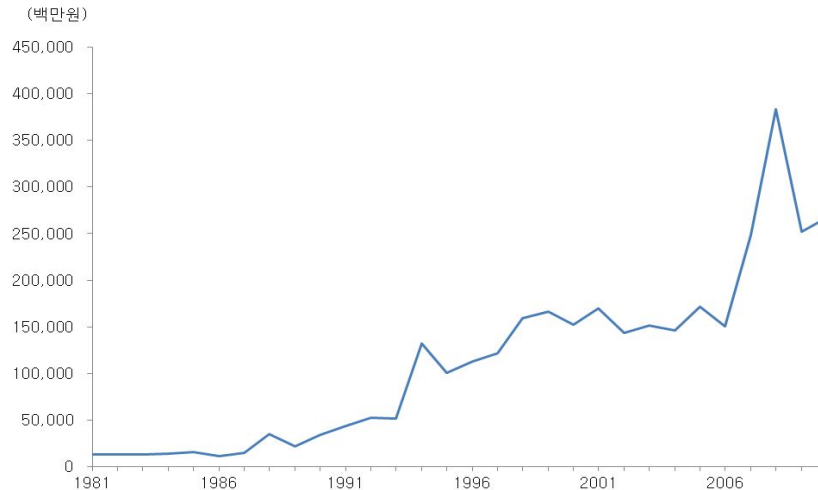
	1989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태풍	28	15	67	98	32	60	51	-	-	122	31	85
호우	139	145	110	196	323	305	428	331	416	601	662	458
대설	54	46	35	59	210	125	82	122	125	280	208	242

■ 국제비교지표 (없음)

28306. 화재 피해액

■ 주요지표

화재 피해액, 1981-2010



주: 1)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으로 인한 화재피해액을 각 년도별 화폐기준으로 제시함.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화재 피해액은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으로 인한 화재피해액을 의미함
- 측정 방법: 화재피해액은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으로 인한 화재피해액을 각 년도별 화폐기준으로 나타냄.

● 지표의 의의

화재는 인적재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한국사회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인구밀집 공간이 증가했지만 화재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기술발전은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개인과 사회가 입게 된 피해액이 크다는 것은, 오랜 세월 수고하여 축적한 재화를 한 순간에 잃게 되었다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일 수 있다. 따라서 화재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는 국민들의 웰빙 강화와 국가발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해설

1985년 이후로 한국의 화재발생건수는 1985년의 8,137건에서 2010년의 41,862건으로 5.1배나 증가했다. 2000년대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화재건수는 몇 년간 안정된 것처럼 보이다가 2007년에 약 4만 7천 건으로 급증했고 그 뒤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는 1985년의 1,080명에서 2000년의 2,384명으로 15년 만에 2.2배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89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1981년의 132억에서 2012년의 2,668억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특별히 2007년과 2008년에 화재 피해액이 급증해서 2008년에는 3,831억 이상에 달했다. 제시된 피해액은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연도별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 상세 통계표

화재발생건수와 화재 사상자수, 1985-201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화재 발생건수(건)	8,137	14,249	26,071	34,844	32,340	41,862
화재 사상자수(명)	1,080	1,548	2,219	2,384	2,342	1,891

주: 1)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으로 인한 화재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수치임.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보」,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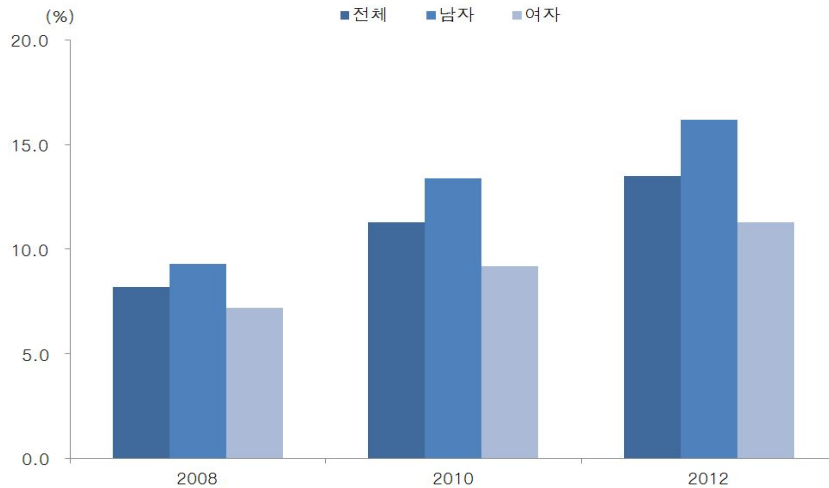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2.8.4. 안전에 대한 인식

28407. 사회안전인식도

■ 주요지표

성별 사회안전인식도, 2008-2012



주: 1) 사회안전인식도는 15세 이상 인구 중 사회 전반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임.

2) 2012의 경우 전체는 15세 이상이고, 남자, 여자는 13세 이상이 응답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전반에 대해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전국의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사회조사」에서 ‘전반적인 사회안전’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가 ‘매우 안전하다’와 ‘안전하다’로 응답한 비율로 제시함

● 지표의 의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감 수준과 그 변화추세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사회의 안전 수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더불어 주관적 지표의 파악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추세변화를 통해서 삶의 질 수준을 판단하고 안전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된다.

● 해설

한국 사회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008년의 8.2%에서 2012년의 13.5%로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사회전반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08년의 51.4%에서 2012년의 37.3%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민들이 사회 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은 증가하고 불안감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보다 약 2.8배 많다. 사회안전 인식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집단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가장 낮았고, 최근으로 올수록 10대와 20대집단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아졌다.

사회의 안전을 세분하여 국가안보,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 범죄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보면, 자연재해와 국가안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교통사고와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도에 교통사고와 범죄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51.2%와 64.2%나 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인식을 반영하여 교통사고와 범죄 문제에 적격히 대응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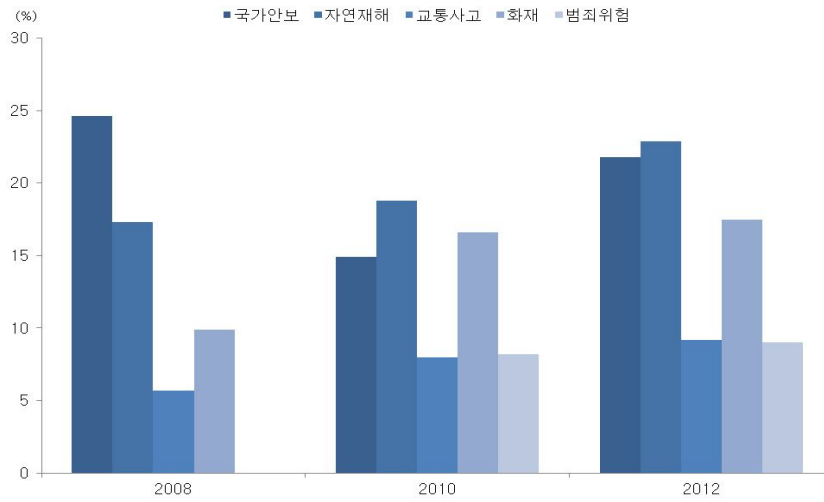
성 및 연령별 사회안전인식도, 2008-2012

	2008	2010	2012 (%)
전체	8.2	11.3	13.5
성			
남자	9.3	13.4	16.2
여자	7.2	9.2	11.3
연령			
20세 미만	8.1	11.5	16.1
20-29세	8.8	11.4	14.2
30-39세	6.9	9.3	12.0
40-49세	8.5	12.7	13.9
50-59세	8.2	11.9	13.8
60세 이상	8.9	11.3	13.5
65세 이상	9.2	11.3	13.5

주: 1) 사회안전인식도는 15세 이상 인구 중 사회전반의 안전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8, 2010년은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2012의 경우 13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3) 2012년의 경우 전체는 15세 이상 인구가 응답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위험종류별 안전인식도, 2008-2012



주: 1) 안전인식도는 15세 이상 인구 중 해당 위험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2008년에는 범죄위험 항목이 조사되지 않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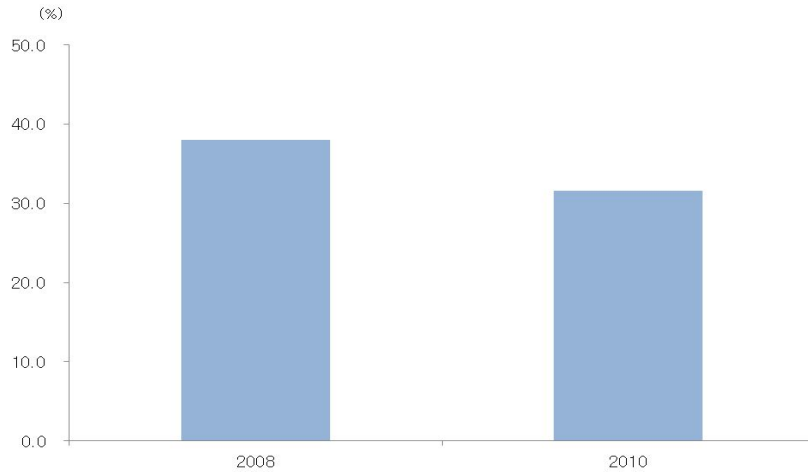
	2008	2010	2012
국가안보	24.6	14.9	21.8
자연재해	17.3	18.8	22.9
교통사고	5.7	8.0	9.2
화재	9.9	16.6	17.5
범죄위험	-	8.2	9.0

■ 국제비교지표 (없음)

28408. 범죄두려움

■ 주요지표

범죄두려움, 2008-2010



주: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밤에 혼자서 (동네) 골목길을 다니기가/걸을 때 두렵다”는 질문에 “매우 두렵다”와 “두려운 편이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의 합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밤에 혼자서 (동네) 골목길을 다니기가/걸을 때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임.
- 측정 방법: 밤에 혼자서 (동네) 골목길을 다니기가/걸을 때 ‘두려운 편이다’와 ‘매우 두렵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합임.

● 지표의 의의

범죄의 두려움은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것은 실제 범죄피해의 가능성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주관적인 측면으로 두려움이 커질수록 안전감을 얻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개인의 일상활동이 위축되어 비공식적 통제수준을 낮추게 된다. 결국, 범죄의 두려움은 안전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의 지표로 국민의 웰빙수준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 해설

범죄의 두려움 수준은 2008년의 38.0%에서 2010년에는 31.6%로 6.4%포인트 감소하였다. 이것은 국민의 심리적 웰빙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사회성원들 간의 상호 신뢰가 증진되어 사회의 비공식적 통제가 높아져서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5년도에 EU가 출간한 세계범죄피해조사 결과를 가지고 외국과 비교하면 당시 한국의 범죄 두려움 수준은 25.2%로 조사대상이 된 11개 국가 평균인 27.3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조사국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가 35%로 가장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보이고, 멕시코, 스페인, 영국, 뉴질랜드,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두려움 수준을 나타낸다. 캐나다가 17%로 가장 낮은 수준의 두려움을 보이고,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두려움을 나타낸다.

범죄의 두려움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남녀간에 나타난다. 여성의 범죄두려움은 남성보다 2.7배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아서 10대의 두려움이 60대 이상의 2.2배에 달한다.

● 상세 통계표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범죄두려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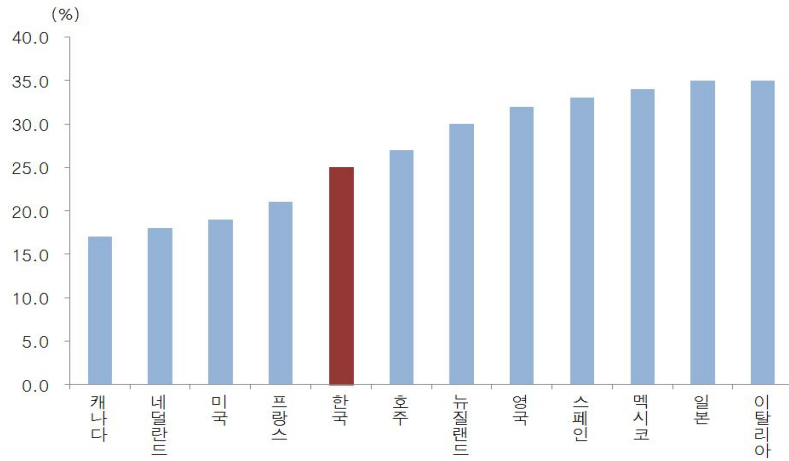
(%)			
	두렵지 않다	그저 그렇다	두렵다
전체	48.6	19.9	31.6
성			
남	68.0	19.0	13.1
여	30.8	19.9	35.4
연령			
10대	33.2	22.1	44.8
20대	41.0	18.4	40.6
30대	41.7	21.3	37.0
40대	48.2	21.4	30.5
50대	53.7	18.4	27.9
60대 이상	61.2	18.6	20.1

주: 1) “밤에 혼자서 (동네) 골목길을 다니기가/걸을 때 두렵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임.
 2) “전혀 두렵지 않다”와 “두렵지 않은 편이다”를 합하여 “두렵지 않다”로, “매우 두렵다”와 “두려운 편이다”를 합하여 “두렵다”로 제시함.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범죄두려움, 2005



주: 1) 2004-2005 유럽에서 실시된 범죄피해조사와 2005년 한국에서 실시된 범죄피해조사에서 어두운 골목길을 걸기에 "많이 두렵다"와 "두렵다"에 응답한 비율의 합임.

2) 영국은 England와 Wales만 포함함.

출처: van Dijk, J., van Kesteren, J., and Smit, P. (2007). *Criminal Victimization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Key findings from the 2004-2005 ICVS and EU ICS*. WOD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2006.

통계표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한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멕시코	일본	이탈리아
범죄두려움	17	18	19	21	25	27	30	32	33	34	35	35

2.9.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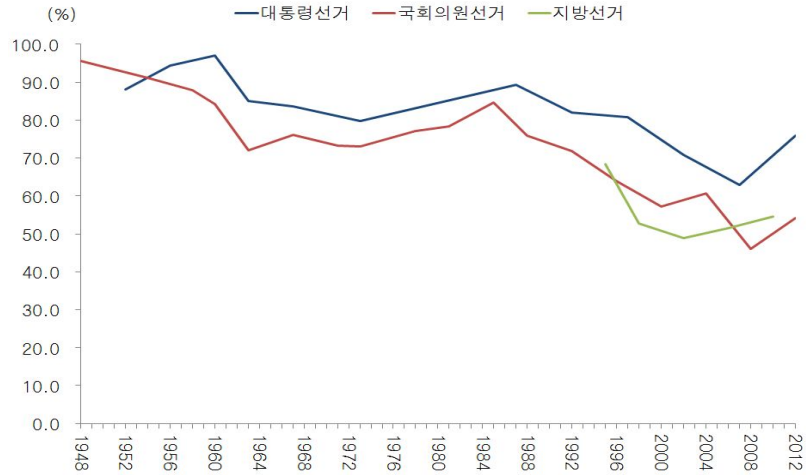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 선거투표율		• 선거투표율
		• 여성의원비율	•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 여성의원비율
		• 사회단체참여율		
	신뢰와 투명성	• 기관신뢰도		• 기관신뢰도
		• 대인신뢰도		• 대인신뢰도
		• 부패인식지수		• 부패인식지수
	사회적 관계	•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후원 및 기부 참여율	
		• 사회적고립도		• 사회적고립도
	삶의 기회와 만족	•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 주관적계층인식	
		• 삶의만족도		• 삶의만족도
		• 자살률		• 자살률
	사회보장	• 공공복지예산		• 공공복지복지예산
		• 공적연금수급률		• 공적연금소득대체율
		• 기초생활보장수급률	• 상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2.9.1. 정치 및 사회 참여

29101. 선거투표율

■ 주요지표

선거투표율, 1948-2012



주: 1)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직선제가 이뤄진 선거에 한해 집계했으며, 2회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누락돼 있음.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각 년도; 「국회의원선거총람」, 각 년도; 「지방의원선거총람」,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제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함.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선거를 할 수 있으며,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제외 국민도 선거를 할 수 있다. 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 있는 자, 선거법 등은 선거권을 제한받음.
- 측정 방법: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 지표의 의의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민의의 정치적 반영이다.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이다.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해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치참여의 대표적 형태가 투표이다. 한국은 건국 이후 7~80%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국회의원 총선 및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0년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총선과 대통령 선거 모두 투표율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투표율 하락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70년대와 비교해 절반에 가깝게 투표율이 떨어졌다. 반면 호주는 1970년대에 투표율에 비해 2% 정도 떨어지는데 그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선거투표율, 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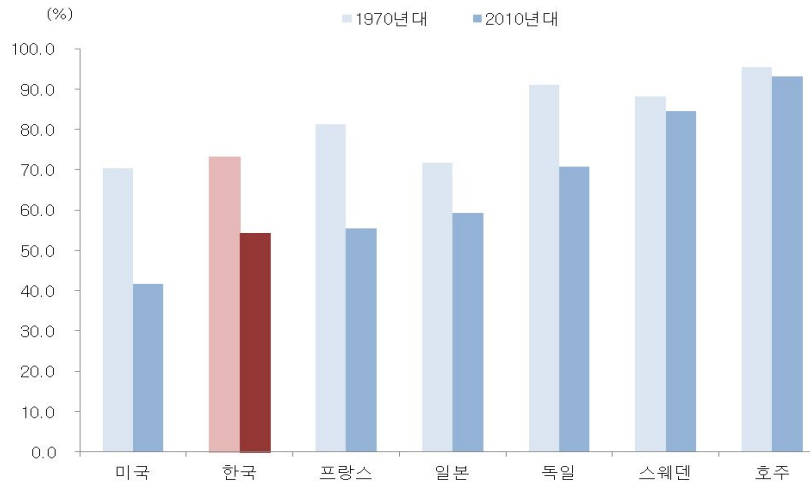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2002	2007	2012	2000	2004	2008	2012	2002	2006	2010
전체	70.8	63.0	75.8	57.2	60.6	46.1	54.2	48.9	51.6	54.5
성										
남자	71.3	63.3	74.8	56.5	63.0	48.9	55.7	51.2	52.3	55.1
여자	70.3	63.1	76.4	58.7	59.2	44.3	53.1	51.4	51.9	54.7
연령										
19세		54.2	74.0			33.2	47.2		37.9	47.4
20대 전반	57.9	51.1	71.1	39.9	46.0	32.9	45.4	36.3	38.3	45.8
20대 후반	55.2	42.9	65.7	34.2	43.3	24.2	37.9	27.0	29.6	37.1
30대 전반	64.3	51.3	67.7	45.1	53.2	31	41.8	34.5	37.0	41.9
30대 후반	70.8	58.5	72.3	56.5	59.8	39.4	49.1	44.8	45.6	50.0
40대	76.3	66.3	75.6	66.8	66.0	47.9	52.6	56.2	55.4	55.0
50대	83.7	76.6	82.0	77.6	74.8	60.3	62.4	70.0	68.2	64.1
60대 이상	78.7	76.3	80.9	75.2	71.5	65.5	68.6	72.5	70.9	69.3

주: 1)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 및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지방의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1970년대, 2010년대



주: 1)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상원과 하원이 있는 경우, 하원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였음.

3) 1970년대 투표율의 경우 호주,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은 1972년의 투표율을 프랑스, 한국은 1973년의 투표율, 2010년대의 경우 호주, 스웨덴, 미국은 2010년, 독일2009, 일본, 한국2012년 투표율을 기준으로 삼았다.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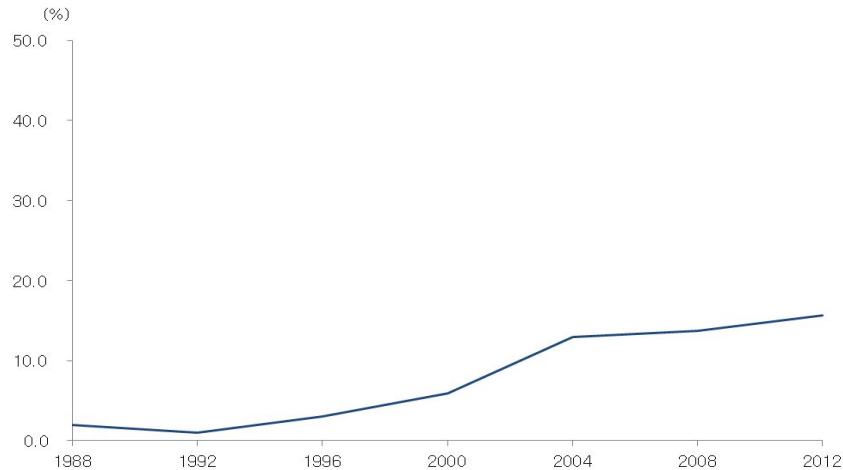
통계표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독일	스웨덴	호주
1970년대	79.85	71.36	81.31	71.74	91.11	90.83	95.38
2010년대	41.59	54.26	55.4	59.32	70.78	84.63	93.23

29102. 여성의원비율

■ 주요지표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88-2012



주 : 1)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국회의원 중 여성당선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주요 입법기관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주요입법기관으로 국회, 지방광역의회, 지방기초의회가 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공천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현, 공직선거법)은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하고 있음.
- 측정 방법: 여성의원비율 = (여성당선자수 ÷ 의회정원수) × 100.

● 지표의 의의

정치 사회 참여의 영역에는 참여의 정도와 함께 참여의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주어지는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랜 동안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여성들의 입장과 요구를 대변하는가의 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 해설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990년대까지 5% 미만의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높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15%를 넘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과 함께 여성의 입장을 정책결정 및 법률제정에서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젠더 측면에서의 사회통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등과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45% 가까이 돼, 입법 기관 구성에 있어 양성 평등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

고위직 공무원은 직접 정책을 제안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국가의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이 보다 반영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2000년 3.5%에 불과했던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은 10년 사이 빠른 증가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10%에 머물러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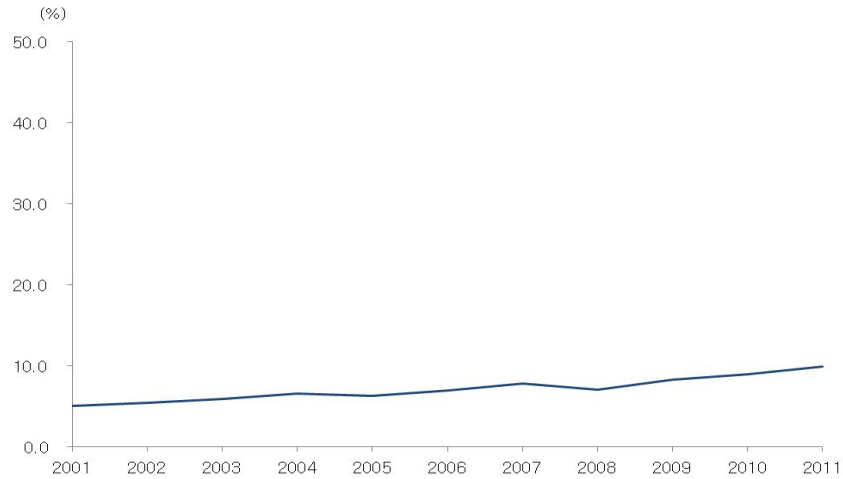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 1988-2012

	(%)												
	1988	1991	1992	1995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국회	2.0		1.0		3.0		5.9		13.0		13.7		15.7
광역의회		0.9		1.4		2.3		9.2		12.1		14.8	
기초의회		0.9		1.6		1.6		2.2		15.1		21.7	

주: 1) 여성의원비율=(여성당선자수 ÷ 의회정원수) × 10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 년도; 「지방의원선거총람」, 각 년도.

■ 보조지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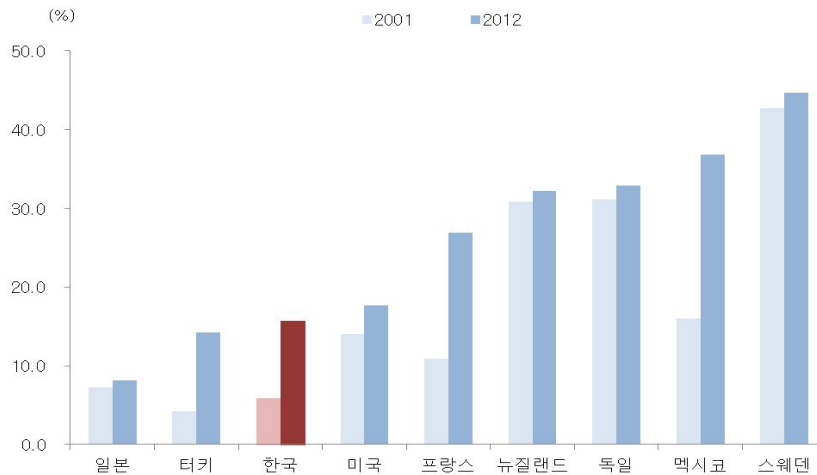
주: 1)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5급 이상 중앙공무원 정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임.
 2) 중앙공무원 관리직의 경우 2001-2003년은 49개 기관, 2004-2007년은 48개 기관, 일반·외무·별정·일반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안전행정부, 「안전행정 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3.5	4.8	5.5	6.4	7.4	8.4	9.4	10.1	10.8	10.5	9.0	10.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01, 2012



주: 1)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 국회의원 정원 중 여성의원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국제의원연맹(IP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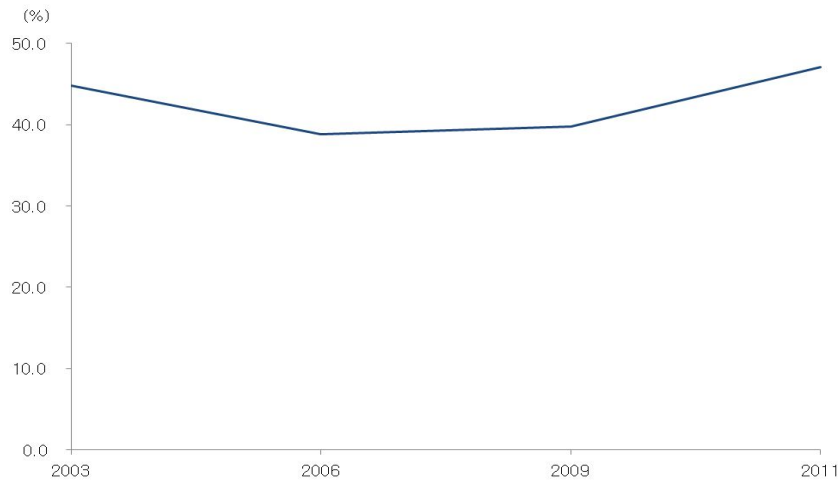
통계표

	일본	터키	한국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스웨덴
2001	7.3	4.2	5.9	14	10.9	30.8	31.1	16	42.7
2012	8.1	14.2	15.7	17.7	26.9	32.2	32.9	36.8	44.7

29103. 사회단체 참여율

■ 주요지표

사회단체 참여율, 2003-2011



주: 1) 사회단체참여율은 조사대상인구(2009년까지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사회단체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15세 이상 인구(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 중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복수 응답케 하였으며, 단체에 단순히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은 상태는 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 온라인상 활동도 단체참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측정 방법: 사회단체참여율 = (단체참여인원 ÷ 조사대상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사회단체 참여는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결합하여 활동하는 정도를 보여준다. 최근 공동체적 삶의 기초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들은 사회단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을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융성의 기초로 본다. 다양한 관심과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들에 참여하는 정도와 참여하는 단체의 유형은 사회 전반적인 참여의 정도와 특성을 보여준다.

● 해설

사회단체 참여는 2000년대 들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다소 참여율이 낮아졌다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조금 참여율이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2003년에 비해 2011년에는 47% 정도에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사회단체 참여율이 정체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단체의 유형은 친목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단체로 주로 사적인 영역에 쏠려있다. 사적인 영역에 사람들의 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을 통해, 사회활동이 사회적 자본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0대의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이 29.5%에 달해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학교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봉사활동이나 참여활동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지역사회모임의 경우 연령이 늘어날수록, 참여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사회단체참여율, 2011

	전체	친목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레저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 모임	기타
전체	46.6	73.1	28.7	34.0	11.0	4.7	2.5	1.0	10.1	0.7
성										
남자	47.8	75.2	22.9	40.5	10.9	5.2	3.6	1.4	9.6	0.5
여자	45.4	71.0	34.6	27.4	11.1	4.1	1.4	0.6	10.6	1.0
연령										
13~19세	32.4	39.9	32.6	47.9	29.5	8.6	0.5	0.8	1.0	1.8
20~29세	44.1	73.6	22.7	46.7	10.1	10.0	2.3	1.1	2.1	0.9
30~39세	46.2	75.4	24.0	40.1	7.4	4.3	3.1	0.6	7.7	0.8
40~49세	54.7	76.5	28.4	35.8	12.6	4.2	4.1	1.2	10.9	0.5
50~59세	55.8	80.1	29.6	28.0	10.1	2.9	2.5	1.2	14.6	0.3
60세이상	40.5	72.2	36.9	14.5	5.7	1.4	0.5	0.9	17.2	0.9
교육수준										
초졸이하	33.5	64.2	31.3	16.7	9.6	1.7	0.4	0.5	16.7	1.1
중졸	41.4	68.1	27.5	26.1	15.3	2.8	0.5	0.8	12.5	0.9
고졸	47.1	75.4	26.3	34.8	11.2	3.4	2.1	1.0	10.2	0.8
대졸이상	55.4	75.4	30.5	41.5	9.9	7.4	4.2	1.2	7.0	0.6

주: 1) 단체유형별 참여율은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해당 사회단체에 참여한 인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보조지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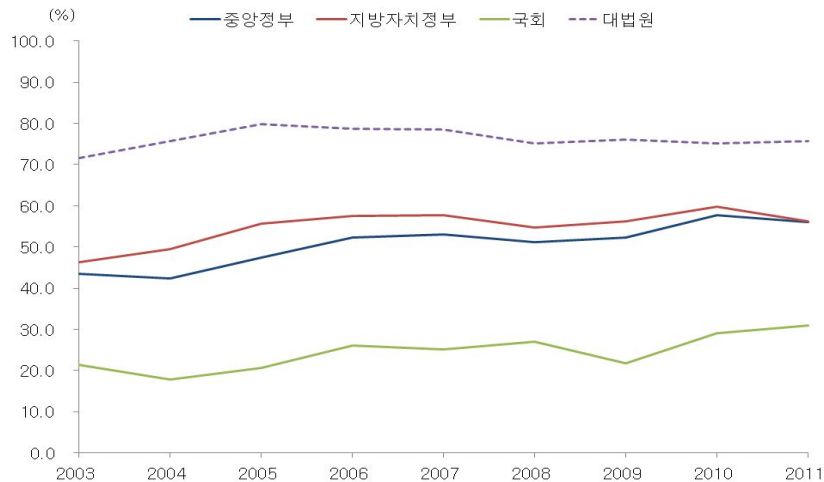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2.9.2. 신뢰와 투명성

29204. 기관신뢰도

■ 주요지표

정부, 국회 및 대법원 신뢰도, 2003-2011



주: 1) 기관신뢰도는 19세 이상 성인 중 해당 사회기관을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주요 사회기관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임.
- 측정 방법: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이 기관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귀하는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매우 신뢰’, ‘다소 신뢰’, ‘거의 신뢰 없음’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들 중에서 ‘매우 신뢰’ 혹은 ‘다소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하여 산출함.

● 지표의 의의

사회의 여러 제도 및 기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는 제도 및 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며 또한 국민 전체의 요구나 이해를 잘 대변하는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 기관 및 제도의 정당성이 높다고 본다.

● 해설

공적 기관 및 제도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비교하면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대법원이 76%로 가장 높고, 다음이 지방자치정부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가 31%로 가장 낮다. 2000년대 들어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법원이 5% 포인트, 그리고 그 밖의 기관들은 모두 10% 포인트 안팎으로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완만하게나마 공적 기관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사회통합 증진과 사회적 자본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OECD 통계에서는 한국인들이 사법체계보다 중앙정부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통계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뢰도 자체도 30%대 초반으로 매우 낮다. 질문 대상, 질문 문항 등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로, 국내 통계와 OECD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각 통계자료가 보여주는 경향, 추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보다 사법체도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경향은 OECD 주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인데 특히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상세 통계표

주요 사회기관 신뢰도, 2000-20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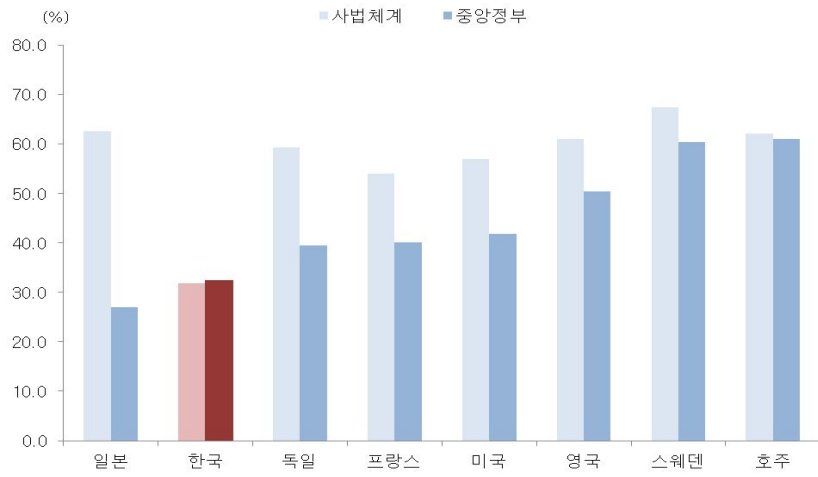
연도	대기업	종교계	교육계	노동조합	신문사	TV방송국	의료계	중앙정부	지방자치정부	국회	대법원	학계	군대	금융기관	청와대	시민운동단체
2003	60.7	67.5	69.3	58.8	65.9	71.8	75.3	43.4	46.3	21.3	71.5	80.2	71.7	70.1	56.3	80.4
2004	62	69.9	67.8	61.5	56.5	66.6	74.2	42.4	49.4	17.9	75.7	80.4	72.8	72.3	51.6	79.3
2005	70.4	71.8	70.3	58.7	68.0	75.6	82.0	47.5	55.6	20.6	79.9	84.9	66	79.1	54.9	77.5
2006	74.5	69.7	71.9	60.5	70.4	77.2	83.9	52.3	57.6	26.0	78.7	84.9	79.2	83.7	59.4	76.1
2007	74.0	68.2	68.9	57.5	70.5	78.8	80.1	53.0	57.7	25.2	78.6	81.3	79.5	81.3	56.2	76.3
2008	69.8	64.6	69.6	59.6	61.9	75.9	80.5	51.1	54.8	27.0	75.2	82.7	78.8	80	50.4	72.2
2009	71.0	67.0	72.6	59.7	58.7	74.5	85.6	52.3	56.2	21.7	76.0	85.6	83.8	83.6	52.8	74.6
2010	74.7	59.8	64.5	56.9	62.9	73.1	84.4	57.8	59.8	29.1	75.2	81.9	76.7	82.8	59.1	71.3
2011	69.0	60.4	70.9	62.0	65.7	73.7	84.1	56.1	56.2	31.0	75.7	81.4	74.2	75.0	61.0	75.4

주: 1) 기관신뢰도는 19세 이상 성인 중 해당 사회기관을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지표

OECD 주요국의 정부 및 사법제도 신뢰도, 2010



주: 1) 신뢰도는 성인 인구 중 사법체계, 정부 등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 Measuring Well-being*,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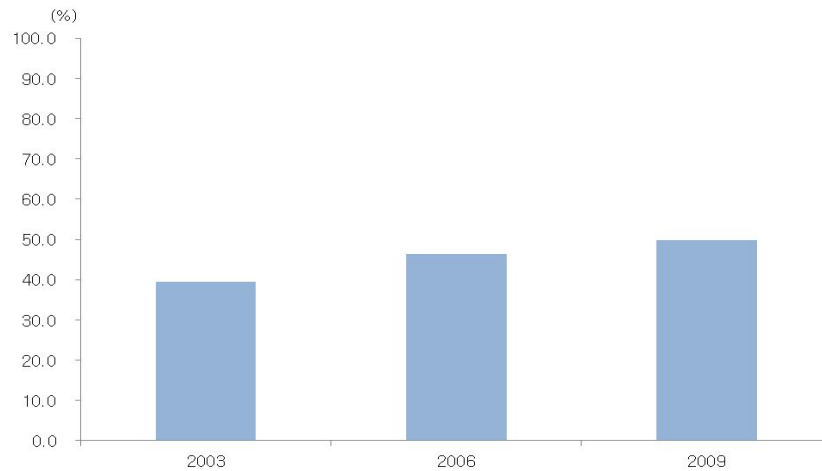
통계표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사법체계	62.6	31.8	59.3	53.9	56.9	61.0	67.4	62.0
중앙정부	27.0	32.4	39.5	40.1	41.8	50.4	60.3	61.0

29205. 대인신뢰도

■ 주요지표

대인신뢰도, 2003-2009



주: 1) 대인신뢰도는 19세 이상 성인 중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19세 이상 성인 중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
- 측정 방법: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 문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계산함.

● 지표의 의의

일반화된 신뢰는 자신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일반적 타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나타낸다.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범위가 좁아질 뿐 아니라 서로 불신하는 집단들끼리 협동하기 보다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자본이 번성하며 사회적 유대 또한 돈독해질 수 있다.

● 해설

자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잘 모르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다는 비율은 2003년 39.5%에서 2009년 49.9%로 10% 포인트가 넘게 높아졌다. 아직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완만하게나마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만한가?” 라는 질문에 믿을만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OECD 평균 33%였다. 한국은 이에 못 미친 26%대였고, 가장 높은 국가는 60%를 기록한 덴마크였다. 사회 제도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여준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은 대인 신뢰 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한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과 대인신뢰 수준이 모두 낮게 나왔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와 대인신뢰가 비례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프랑스는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은 평균 정도였으나, 대인 신뢰는 매우 낮은 편에 속했다. 독일은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지만, 대인신뢰는 높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지만, 대인신뢰수준은 OECD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 상세 통계표

대인신뢰도, 2003-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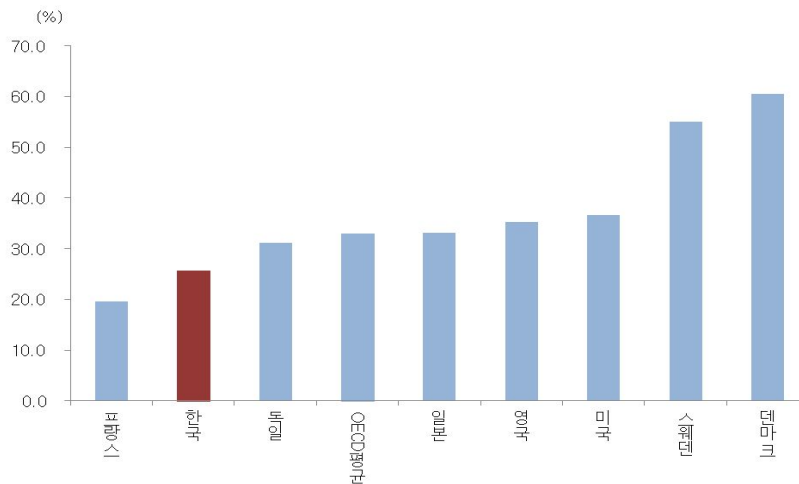
	(%)		
	2003	2006	2009
대인신뢰도	39.5	46.4	49.9

주: 1) 대인신뢰도는 19세 이상 성인 중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대인신뢰도, 2010



주: 1) 대인신뢰도는 성인 인구 중 커뮤니티, 일터 등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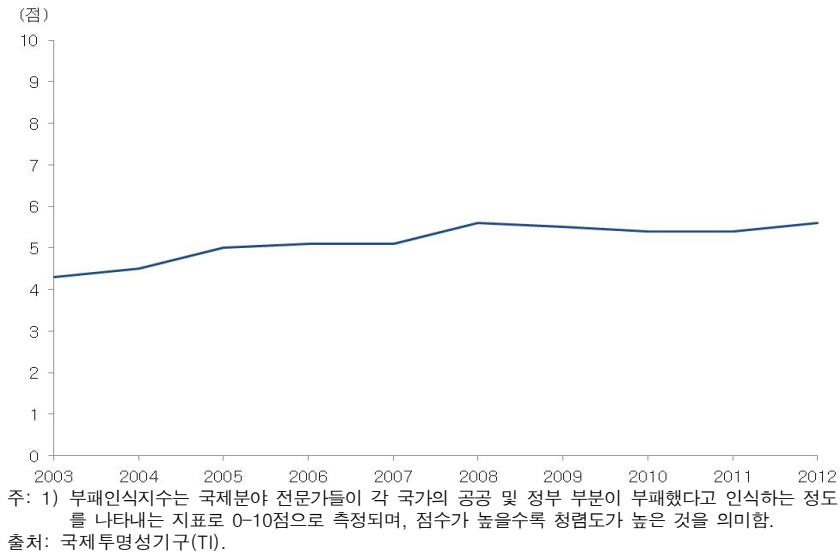
통계표

	프랑스	한국	독일	OECD 평균	일본	영국	미국	스웨덴	덴마크
대인신뢰	19.6	25.6	31.1	33	33.2	35.2	36.6	55.1	60.5

29206. 부패인식지수

■ 주요지표

부패인식지수, 2003-2012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공공 및 정부 부분의 부패를 인지하는 정도. 국제투명성기구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음.
- 측정 방법: 월드뱅크 등 13개 국제기관의 국가분석전문가들에게 각 국가별로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함. 0~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것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임. 주요 질문 내용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정부예산 배정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가?”, “설명할 수 없는 특수공무비용이 존재하는가?”, “공공재원에 대해 감사하는 독립기구가 존재하는가?”,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한 내부 고발자, 언론인 등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등임.

● 지표의 의의

정부의 부패 정도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주로 활용한다.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인식은 정부가 얼마나 소수의 부패한 집단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여 공평무사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청렴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정도도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잘 운영되고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 해설

정부의 부패 혹은 청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10점 만점에 2012년 5.6으로 중간보다는 높게 나타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2000년대 들어 부패인식지수는 2003년 4.3점에서 2012년 5.5점으로 1점정도 높아져 청렴의 정도가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2003년에 비해 청렴도가 낮아진 OECD 국가는 핀란드, 호주, 영국, 미국 등이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은 높아졌다. 하지만 핀란드는 청렴도가 떨어졌음에도 전체 점수 9점으로 10년째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해마다 조사 대상국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가 새로 포함되고 있다. 전체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의 백분율 순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절대 점수와 국제 순위는 2007년 이후 다소 하락했다.

● 상세 통계표

부패인식지수, 2003-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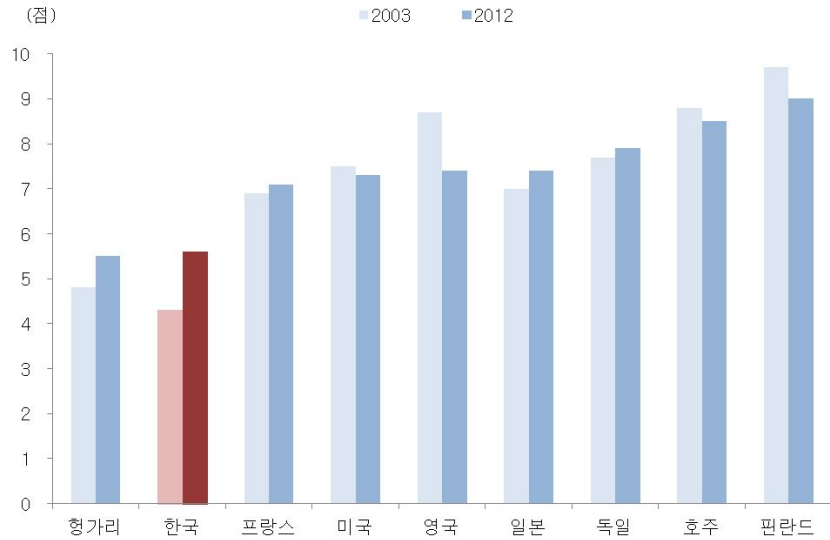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부패인식지수	4.3	4.5	5.0	5.1	5.1	5.6	5.5	5.4	5.4	5.6
세계순위	50	47	40	42	43	40	39	39	43	45
백분율	37.6	32.2	25.2	25.8	23.9	22.2	21.6	21.9	23.5	25.6
조사대상국	133	146	159	163	180	180	180	178	183	176

주: 1) 부패인식지수는 국제분야 전문가들이 각 국가의 공공 및 정부 부분이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I).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부패인식지수, 2003, 2012



주: 1) 부패인식지수는 국제분야 전문가들이 각 국가의 공공 및 정부 부분이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출처: 국제투명성기구(TI).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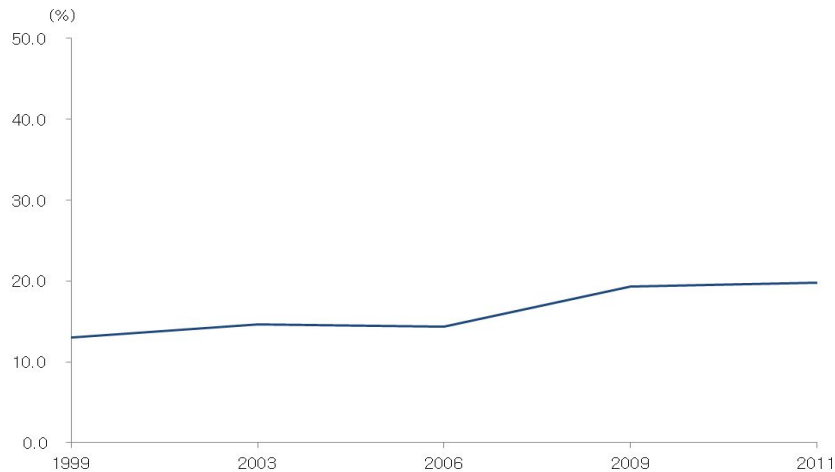
	헝가리	한국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핀란드
2003									
점수(점)	4.8	4.3	6.9	7.5	8.7	7	7.7	8.8	9.7
순위	40	50	23	18	11	21	16	8	1
백분율(%)	30.1	37.6	17.3	13.5	8.3	15.8	12.0	6.0	0.8
2012									
점수(점)	5.5	5.6	7.1	7.3	7.4	7.4	7.9	8.5	9.0
순위	46	45	22	19	17	17	13	7	1
백분율(%)	26.1	25.6	12.5	10.8	9.7	9.7	7.4	4.0	0.6

2.9.3. 사회적 관계

29307.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주요지표

자원봉사활동참여율, 1999-2011



주: 1)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조사대상인구(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15세 이상 인구(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 참여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2가지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모두 조사하였음.
- 측정 방법: 자원봉사참여율 =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자 수 ÷ 조사대상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자원봉사는 정부의 강제나 시장에서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이타주의의 발현이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사회의 공공선이 증대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 역시 만족감과 시민의식이 고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가 활발해지면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높아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며 이는 다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낳는다.

● 해설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1999년 13%에서 2011년 20%에 가깝게 높아졌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회적 결속과 유대가 증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성인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가 더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상세 통계표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자원봉사활동참여율, 1999-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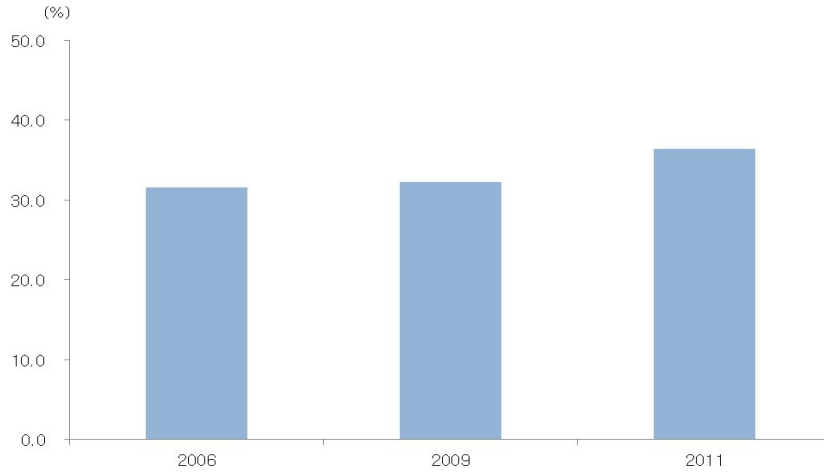
	(%)				
	1999	2003	2006	2009	2011
전체	13.0	14.6	14.3	19.3	19.8
성					
남자	12.2	15.1	14.0	19.3	19.6
여자	13.8	14.1	14.6	19.3	20.1
연령집단					
20세 미만	33.8	52.4	59.5	79.8	77.7
20-29세	16.0	10.3	8.3	13.9	13.2
30-39세	26.3	11.6	10.2	13.6	11.2
40-49세	25.7	14.2	13.9	18.6	17.0
50-59세	21.5	12.2	12.4	15.5	14.6
60세이상	14.5	12.3	11.8	12.3	7.2
교육수준					
초졸이하	8.7	10.0	8.9	10.4	24.0
중졸	20.5	27.7	30.8	42.4	39.8
고졸	11.9	12.2	11.4	15.0	13.6
대졸이상	12.7	13.6	12.7	18.4	16.2

주: 1) 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조사대상인구(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후원 및 기부 참여율, 2006-2011



주: 1) 후원 및 기부 참여율은 조사대상인구(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 2011년부터는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후원 및 기부활동에 참여한 적이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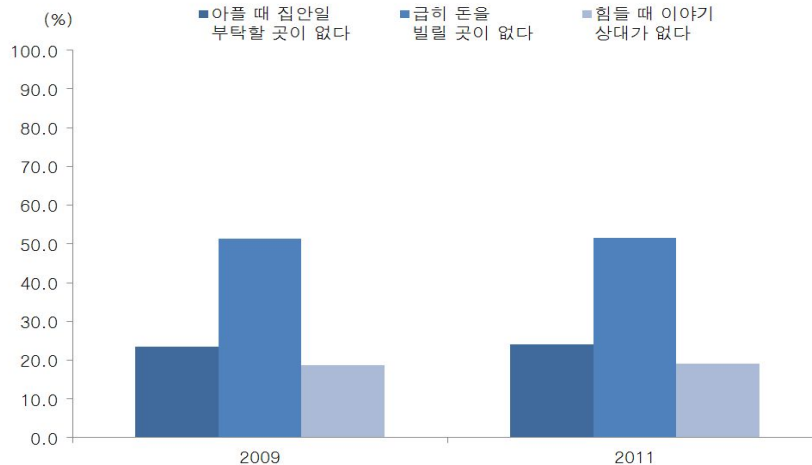
	2006	2009	2011
후원 및 기부 참여율	31.6	32.3	36.4

■ 국제비교지표 (없음)

29308. 사회적고립도

■ 주요지표

사회적 고립도, 2009-2011



주: 1) 사회적 고립도는 가구주인 조사대상인구(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 중, 해당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사회적 고립도는 국민 중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 측정 방법: 조사대상인구(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 중 가구주를 대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습니까?”라고 질하였으며, 제시된 상황은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이다. 지인의 존재 여부와 함께 몇 명인지를 물었음 .

● 지표의 의의

사회적 관계와 지지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며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회적 관계와 지지의 유무는 사회적 유대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도 특히 인적, 물적, 정신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지망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사회의 질을 높여준다.

● 해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회적 고립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비율은 대화 등의 정신적 도움에 비해 물질적 도움의 경우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야기 상대가 없다는 비율이 2011년에 19%이고,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 비율이 24%, 그리고 급하게 돈을 빌릴 사람이 없는 경우는 51.4%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2009년과 2011년 사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스웨덴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3.8%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20.2%에 달한다. OECD의 다른 국가나 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 사회는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은 관계망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기초 단위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가치, 규범이 공유되고, 협력이 만들어진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범죄율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취업, 승진 등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이는 등 개인적 차원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통계표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사회적 고립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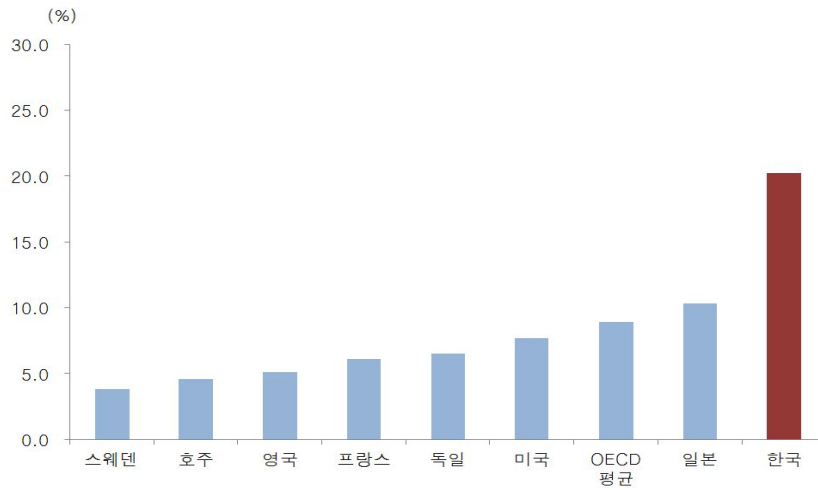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갑자기 많은 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없음	있음	인원 (평균)	없음	있음	인원 (평균)	없음	있음	인원 (평균)
전체	24.1	75.9	2.4	51.4	48.6	2.6	19.0	81.0	3.2
성									
남자	23.1	76.9	2.5	50.5	49.5	2.7	20.2	79.8	3.2
여자	25.1	74.9	2.3	52.2	47.8	2.5	17.9	82.1	3.1
연령집단									
20세미만	-	-	-	41.4	58.6	4.1	15.4	84.6	4.8
20-29세	17.7	82.3	2.8	40.8	59.2	2.8	11.6	88.4	3.9
30-39세	22.3	77.7	2.3	42.4	57.6	2.3	13.3	86.7	2.9
40-49세	25.6	74.4	2.4	52.3	47.7	2.3	18.7	81.3	2.8
50-59세	26.0	74.0	2.3	59.0	41.0	2.3	22.8	77.2	2.7
60세이상	28.2	71.8	2.3	67.1	32.9	2.2	30.2	69.8	2.5
교육수준									
초졸이하	31.3	68.7	2.2	65.5	34.5	3.0	29.4	70.6	3.1
중졸	28.5	71.5	2.2	55.4	44.6	3.1	20.7	79.3	3.3
고졸	24.5	75.5	2.5	52.9	47.1	2.5	19.1	80.9	3.1
대졸이상	19.5	80.5	2.5	40.3	59.7	2.4	12.6	87.4	3.2

주: 1) 사회적 고립도는 가구주인 조사대상인구(2009년은 15세 이상 인구, 2011년은 13세 이상 인구) 중, 해당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2010



주: 1) 사회적 고립도는 국민 중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1.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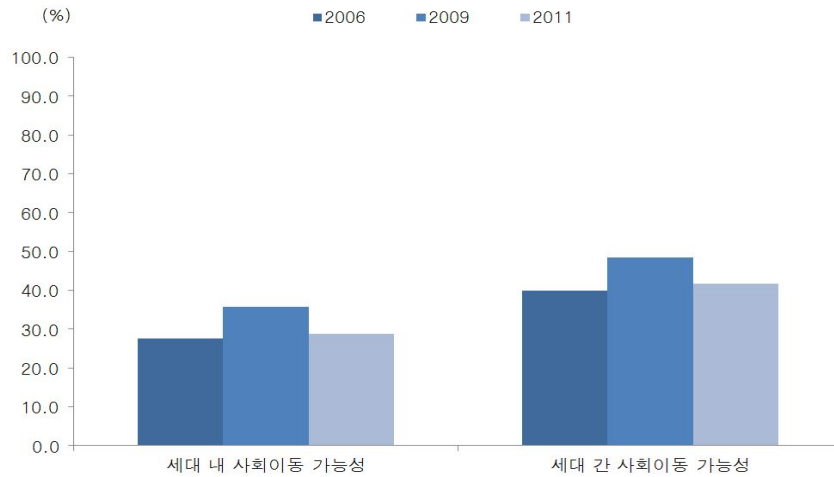
	스웨덴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OECD 평균	일본	한국
2010	3.8	4.6	5.1	6.1	6.5	7.7	8.9	10.3	20.2

2.9.4. 삶의 기회와 만족

29409.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 주요지표

사회이동 가능성 인지도, 2006-2011



주: 1)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는 만15세 이상 가구주 중 세대 내 사회이동 및 세대 간 사회이동에서 이동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응답자 비율임.

2) 2011년 세대 내 이동 가능성과 세대 간 이동 가능성은 각각 13세 이상 가구주와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응답의 비율. 전체 응답인원 중, 세대이동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라고 대답한 인원의 비율임.
- 측정 방법: 낮은 지위에서 높은 지위로의 이동가능성을 세대간(세대와 세대사이) 이동과 세대내(당대)이동으로 구분하여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세대간 이동은 대가 바뀌면서 사회적 지위가 변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사이의 이동의 가능성을 “우리사회에서 현재의 본인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조사하였으며, 세대내 이동은 “우리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 조사하였음.

● 지표의 의의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일생 동안 혹은 자녀세대에서 현재보다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가를 나타낸다. 미래의 이동기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희망과 의지를 갖도록 한다.

● 해설

사회적 이동이 자녀세대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41.7%인 반면 자신의 세대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8.8%로 낮게 나타났다. 자녀 세대에서의 이동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보다 낙관적 전망이 많지만 절반을 넘지 못하며, 본인 세대에서의 이동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낙관적 전망과 거의 비슷하다. 사회적 이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 세대에 대해서나 본인 세대에 대해서나 2006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개선되었다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악화되었다.

사회적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궤를 같이 한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중이라고 평가한 비율 역시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증가했다가,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하락했다. 자신의 위치를 하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은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했다. 1999년과 비교해 자신의 지위를 상, 하라고 평가한 사람은 모두 증가한 반면, 중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줄어들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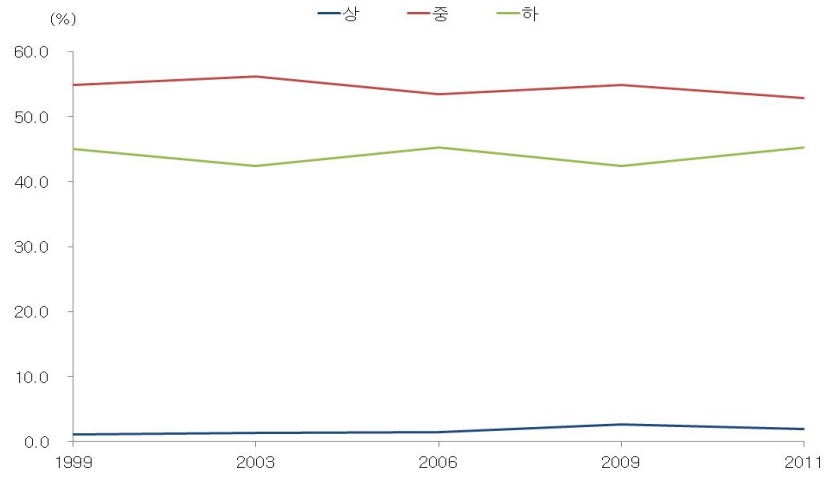
성, 연령, 교육수준별 사회이동 가능성 인지도, 2011

	세대내이동가능성(만 13세 이상)					세대간이동가능성(만 19세 이상)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매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전체	2.1	26.7	42.9	15.9	12.5	4.0	37.7	33.4	9.6	15.4
성										
남자	2.3	27.3	44.5	15.7	10.2	4.2	38.8	34.4	9.5	13.1
여자	1.6	24.5	74.9	16.5	19.9	3.5	34.1	29.8	9.8	22.8
연령집단										
30세 미만	3.6	27.5	42.6	14.6	11.7	5.2	34.9	33.6	11.4	14.9
30-39세	2.0	23.8	46.9	18.2	9.2	3.6	34.7	35.9	11.9	13.8
40-49세	2.0	24.7	47.9	16.2	9.2	4.0	36.4	37.1	9.8	12.7
50-59세	2.1	27.2	43.4	15.9	11.3	4.2	38.2	34.4	9.8	13.5
60세이상	2.0	29.9	34.7	14.2	19.2	3.9	41	27.0	7.3	20.8
65세이상	2.0	29.1	33.0	14.3	21.5	4.0	40.6	25.0	7.3	23.1
교육수준										
초졸이하	1.8	23.6	34.1	17.0	23.6	3.1	36.1	26.5	8.7	25.6
중졸	1.4	24.2	39.9	17.0	17.5	3.9	35.9	29.6	10.1	20.5
고졸	1.6	24.0	44.7	17.4	12.4	3.8	36.1	34.4	10.2	15.4
대졸이상	3.0	31.6	46.2	13.5	5.7	4.7	40.6	36.8	9.2	8.7

주: 1) 세대 내 및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은 각각 13세 이상 가구주와 19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11

■ 보조지표

주관적 계층인식, 1999-2011



주: 1) 주관적 계층의식은 가구주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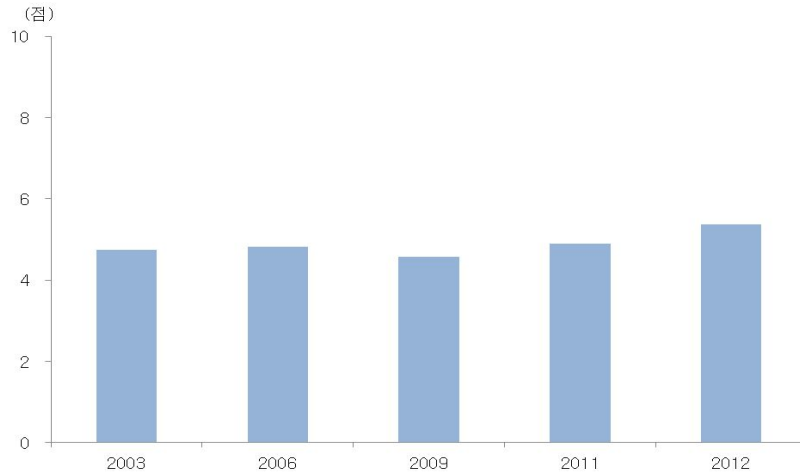
	1999	2003	2006	2009	2011
상	1.1	1.4	1.5	2.7	1.9
중	54.9	56.2	53.4	54.9	52.8
하	45.0	42.4	45.2	42.4	45.3

■ 국제비교지표 (없음)

29410. 삶의만족도

■ 주요지표

삶의 만족도, 2003-2012



주: 1) 만족도 점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매우 만족"을 10점, "약간 만족"을 7.5점, "보통"을 5점, "약간 불만족"을 2.5점, "매우 불만족"을 0점으로 부여하여 산출한 평균 점수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
- 측정 방법: "귀하는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중 평균하였음. "매우 만족"에 10점, "약간 만족"에 7.5점, "보통"에 5점, "약간 불만족"에 2.5점, "매우 불만족"에 0점을 부여하여 산출한 응답 평균 점수임.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함.

● 지표의 의의

주관적 삶의 만족(subjective wellbeing)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보여 준다. 주관적 만족은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 만족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도 개인간 편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삶의 질이 다차원적이고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삶의 만족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해설

주관적 삶의 만족을 10점 만점으로 볼 때 2012년 한국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 점수는 중간이 5점을 겨우 넘는 정도이다.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일본과 비슷한 정도이다. 2003년 이후 완만하게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2009년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큰 변동이 없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조사한 OECD 국가의 평균 만족도 역시 같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 상세 통계표

성, 연령 및 교육수준별 삶의 만족도, 2003-2012

	(%)				
	2003	2006	2009	2011	2012
전체	20.4	28.9	20.9	24.1	33.3
성					
남자	20.9	29.4	22.3	24.4	33.6
여자	20.0	28.4	19.5	23.9	33.0
연령집단					
20세미만	25.5	35.9	23.8	36.1	47.8
20-29세	22.9	31.1	23.0	26.1	36.1
30-39세	23.1	33.0	24.1	26.1	36.4
40-49세	18.8	28.1	22.5	25.7	34.2
50-59세	16.4	24.3	19.4	21.1	28.5
60세이상	16.4	22.9	13.6	14.5	23.6
교육수준					
초졸이하	14.7	21.0	10.7	16.2	25.8
중졸	17.0	25.7	17.1	22.1	31.1
고졸	19.0	26.5	17.7	20.8	30.4
대졸이상	29.6	39.4	31.6	33.0	41.5

주: 1) 만족도는 "귀하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고 질문에 대하여 '매우만족'과 '약간 만족'의 응답비율을 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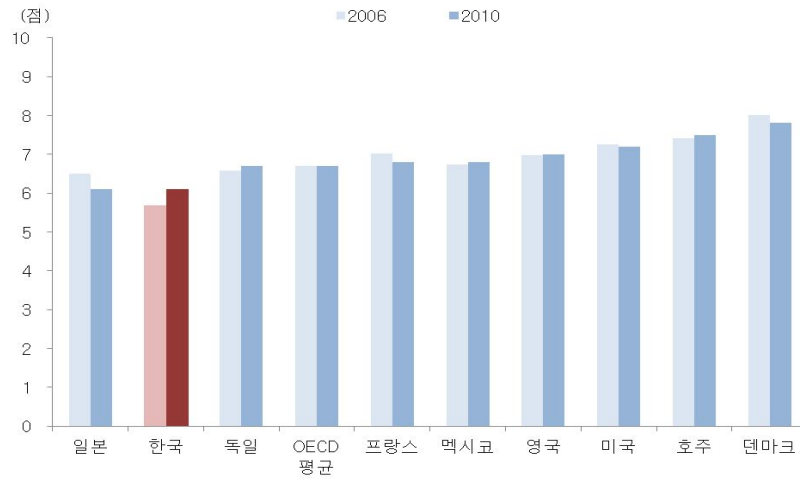
2)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고, 2011년부터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삶의 만족도, 2006-2010



주: 1)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을 만족도 점수로 나타낸 것임.
출처: OECD,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2011;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Social Indicator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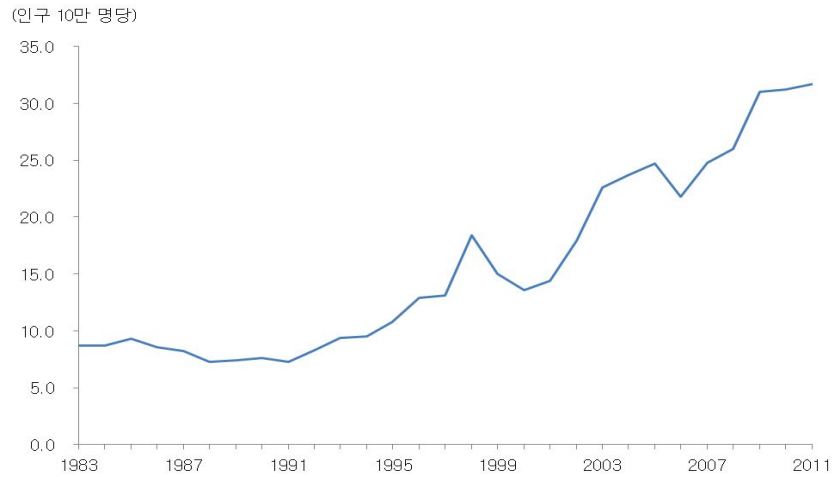
통계표

	일본	한국	독일	OECD 평균	프랑스	멕시코	영국	미국	호주	덴마크
2006	6.5	5.7	6.6	6.7	7.0	6.74	7.0	7.3	7.42	8.0
2010	6.1	6.1	6.7	6.7	6.8	6.8	7.0	7.2	7.5	7.8

29411. 자살률

■ 주요지표

자살률, 1983-2011



주: 1)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임.
- 측정 방법: 자살률 =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 연앙인구) × 100,000.

● 지표의 의의

자살 자체는 개인적 현상이지만,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준다.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이 사회적으로 통합이 약해지는 경우에 혹은 집단에서 더욱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사회적인 급격한 변동이나 불안정성의 증가가 나타나는 경우 자살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자살률은 한 사회의 통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볼 수 있다.

● 해설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인구 십 만명 당 자살자 수는 2011년 30명을 넘어섰으며 이것은 1999년에 비해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두 배 가량 높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자살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70세 이상 노인 인구에서 가장 높아, 2011년 655.5명에 달하고 있다. 20,30대의 경우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는 다른 연령대보다 적지만, 젊은 층의 경우 사망률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자살은 삶에 대한 만족이 극도로 떨어졌을 때 취하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성 및 연령집단별 자살률, 1983-2011

(인구 10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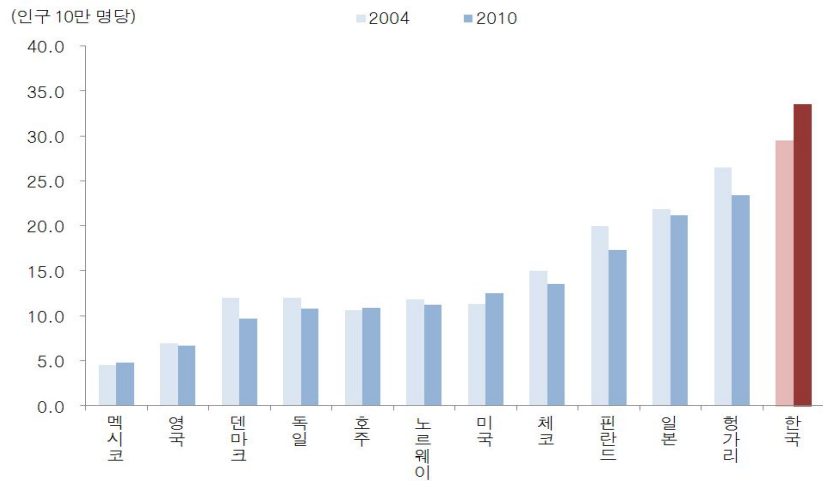
	198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8.7	13.6	14.4	17.9	22.6	23.7	24.7	21.8	24.8	26.0	31.0	31.2	31.7
성													
남자	12.7	18.8	20.2	24.6	31.0	32.4	32.9	29.5	31.5	33.4	39.9	41.4	43.3
여자	4.6	8.3	8.6	11.1	14.1	14.9	16.4	14.1	18.1	18.7	22.1	21.0	20.1
연령집단													
0-9세	0	0.2	0.1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10-19세	7.8	7.0	6.2	6.9	9.1	7.7	8.7	7.2	9.4	9.4	13.0	10.2	10.7
20-29세	30.3	22.2	22.2	24.7	30.4	27.7	35.3	27.4	41.6	44.5	49.6	47.6	47.8
30-39세	21.3	30.2	30.8	37.3	43.7	41.2	43.4	33.6	44.9	49.1	62.7	59.1	61.0
40-49세	26.3	37.6	37.2	45.5	56.4	59.1	56.6	49.7	52.4	56.8	65.7	68.2	68.0
50-59세	30.5	44.4	47.5	56.4	69.6	76.3	69.3	67.1	62.6	66.4	82.0	80.8	82.5
60-69세	27.7	51.4	61.3	70.9	98.7	104.2	110.1	94.5	95.9	94.7	104.0	106.3	100.9
70세이상	42.2	273.1	326.4	510.3	610.2	650.0	680.7	604.7	656.6	597.4	684.5	680.9	655.5

주: 1)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자살률, 2004, 2010



주: 1)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3*. 2013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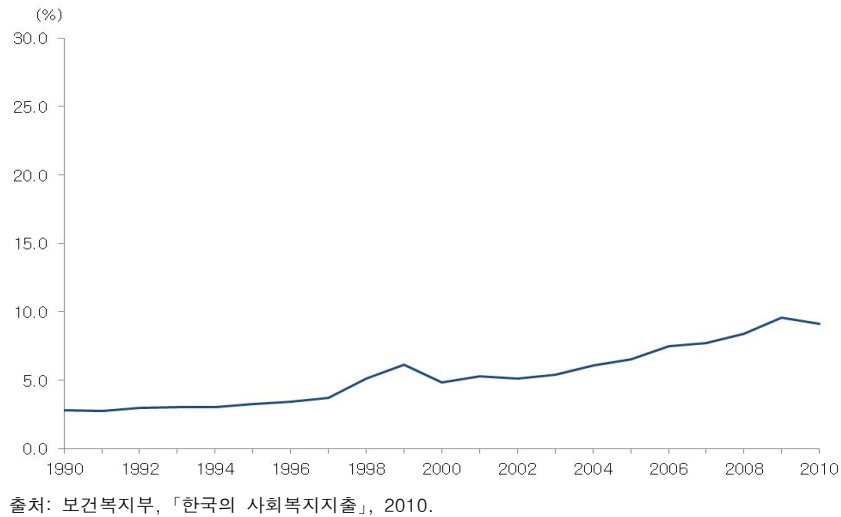
	멕시코	영국	덴마크	독일	호주	노르웨이	미국	체코	핀란드	일본	헝가리	한국
2004	4.5	6.9	12.0	12.0	10.6	11.8	11.3	15.0	20.0	21.9	26.5	29.5
2010	4.8	6.7	9.7	10.8	10.9	11.2	12.5	13.5	17.3	21.2	23.4	33.5

2.9.5. 사회보장

29512. 공공복지예산

■ 주요지표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 1990-2010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복지 예산의 비율임. 공공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험(공적연금), 사회복지서비스(보육·가족 및 여성, 주택) 등을 비롯해 취약계층지원, 보훈 등임.
- 측정 방법: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공공복지예산 ÷ GDP)× 100.

● 지표의 의의

정부재정에서 복지와 관련된 지출의 비중은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의 복지에 대해 얼마나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재정에서 복지 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도한 복지 지출은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 해설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의 비율은 2000년대 들어 높아져 왔으며, 2000년에 비해 2009년에는 5% 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정체해 왔다.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의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빠른 고령화 때문에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복지 예산이 돌아가는 분야는 보건과 노령 분야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한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과 가족 분야이다. 1990년도 GDP 대비 0.3%에 불과했던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과 가족 분야 예산액은 2010년도에 0.38%, 0.81%로 늘어났다. 주요 복지 수요가 고령화, 가족의 해체, 실업과 같은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상세 통계표

GDP 대비 공공복지 분야별 예산,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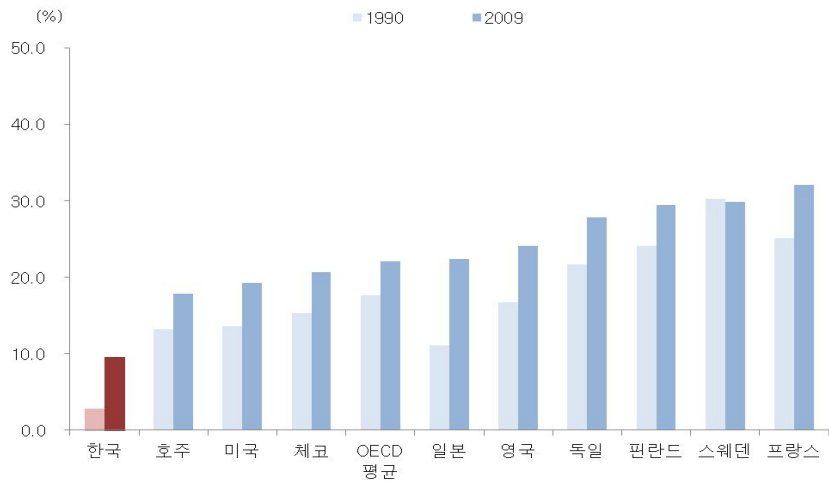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공복지예산(10억 원)	5,398	29,084	34,398	37,036	41,442	50,156	56,297	67,849	74,899	86,042	102,290	107,721
GDP 대비 비율(%)												
전체	2.82	4.82	5.28	5.14	5.4	6.07	6.51	7.47	7.68	8.38	9.6	9.18
노령	0.61	1.25	1.03	1.02	1.14	1.36	1.46	1.56	1.65	1.94	2.08	2.10
유족	0.16	0.17	0.18	0.19	0.21	0.22	0.23	0.25	0.25	0.26	0.27	0.26
근로무능력 관련급여	0.29	0.38	0.41	0.44	0.50	0.53	0.54	0.57	0.57	0.58	0.60	0.51
보건	1.53	2.18	2.78	2.64	2.72	2.76	3.00	3.35	3.52	3.61	4.02	4.12
가족	0.03	0.11	0.14	0.14	0.17	0.24	0.26	0.57	0.53	0.74	0.81	0.81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0.03	0.38	0.22	0.19	0.12	0.11	0.12	0.12	0.13	0.31	0.61	0.38
실업	-	0.08	0.13	0.12	0.13	0.18	0.20	0.23	0.25	0.28	0.39	0.31
주거	-	-	-	-	-	-	-	-	-	-	-	-
기타	0.18	0.27	0.39	0.41	0.42	0.67	0.70	0.83	0.78	0.66	0.83	0.68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0.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예산, 1990-2009



출처: OECD.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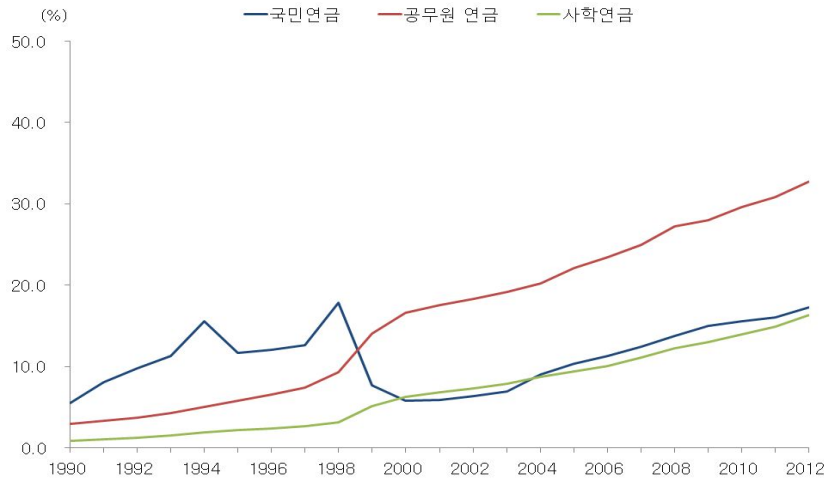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	호주	미국	체코	OECD 평균	일본	영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1990	2.8	13.2	13.6	15.3	17.6	11.1	16.7	21.7	24.1	30.2	25.1
2009	9.6	17.8	19.2	20.7	22.1	22.4	24.1	27.8	29.4	29.8	32.1

29513. 공적연금수급률

■ 주요지표

공적연금수급률, 1990-2012



주: 1) 공적연금수급률은 해당연금 가입자 중 연금혜택을 받은 수급자의 비율임.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연금별 가입자 중 연금혜택을 받은 수급자의 비율임. 18세 이상 취업자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 측정 방법: 공적연금수급자률 = (공적연금수급자수 ÷ 공적연금가입자수) × 100.

● 지표의 의의

공적연금제도는 사적연금과 달리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노후생계 보장을 통해 소득계층간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활보장을 하는 기능을 한다. 공적 연금의 수급률은 실질적으로 연금의 혜택이 얼마나 광범하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내며 실질적 사회보장 특히 노후 보장의 정도를 보여준다.

● 해설

공적연금수급률은 2000년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 지난 10여 년간 50% 가까이 수급률이 증가했는데, 이는 공적연금을 통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의 수급률이 가장 높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수급률은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을 얼마나 대체해 주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은퇴 이후에도 은퇴 이전과 같은 방식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빈곤에 빠지거나 은퇴 이후에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압력에 놓이기 쉽다.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50%이고, 한국은 이에 못 미치는 47%대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적연금만을 포함하는 수치다. OECD 국가 중 11개국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은퇴 이후 공적 연금과 더불어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제도를 설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있다. 이들 11개국의 퇴직연금을 고려하면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67.6%로 높아진다. 호주의 경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14%에 불과하지만,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의 59%를 연금으로 메울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99%에 달하는데, 이중 공적연금의 비중은 33%에 불과하고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한다.

● 상세 통계표

공적연금 종류별 1인당 급여액, 1990-2011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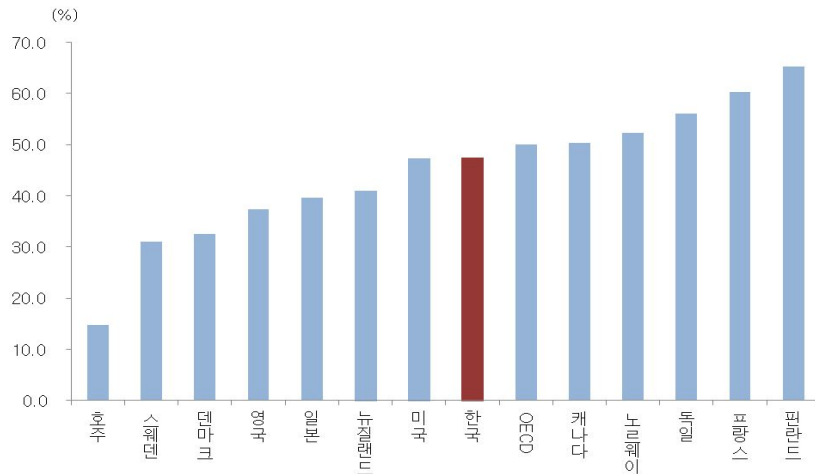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민연금	13.7	71.7	143.4	136.8	150.7	164.8	157.5	169.1	182.1	191.3	203.3	223.4	240.5	256.9
공무원연금	588.0	1085.0	1188.0	1241.0	1314.0	1543.0	1629.0	1697.0	1749.0	1787.5	1895.0	1961.0	2025.0	2110.0
사학연금	668.3	1144.6	1252.3	1373.0	1449.8	1685.9	1777.3	1872.8	1944.2	2009.3	2081.2	2209.8	2281.3	2343.1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공적연금소득대체율, 2011



주: 1)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수준인 자가 가입시점부터 지급연령까지 가입을 가정하여(평균 40-45년 가입)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임.

출처: OECD, *Pension at a glance 2011*,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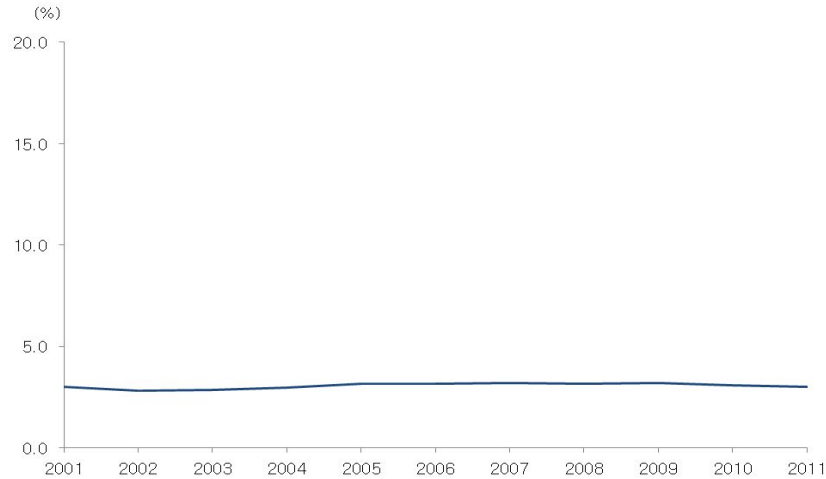
통계표

	호주	스웨덴	덴마크	영국	일본	뉴질랜드	미국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14.8	31.0	32.6	37.4	39.7	41.1	47.3
	한국	OECD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핀란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47.5	50.0	50.4	52.4	56.0	60.4	65.2

29514. 기초생활보장수급률

■ 주요지표

기초생활보장수급률, 2001-2011



주: 1)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총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2) 시설수급자 제외함.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2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총인구(연앙 추계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 지원 내용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이 포함됨.
- 측정 방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률=(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 총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기초생활보장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는 계층에 대해 인간다운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률은 사회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는 인구의 비율이 얼마인가, 또한 그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어 사회적 기초생활보장의 정도를 나타낸다.

● 해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종 원인으로 인해 최저 빈곤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복지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빈곤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구들이 있다. 상대적 빈곤 상태의 가구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되는 가구의 비율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상대빈곤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되는 비율은 2006년 28%에서 2012년 25%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이것은 빈곤상태의 가구들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수는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지만, 상대빈곤층 가구의 수가 2011년까지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수급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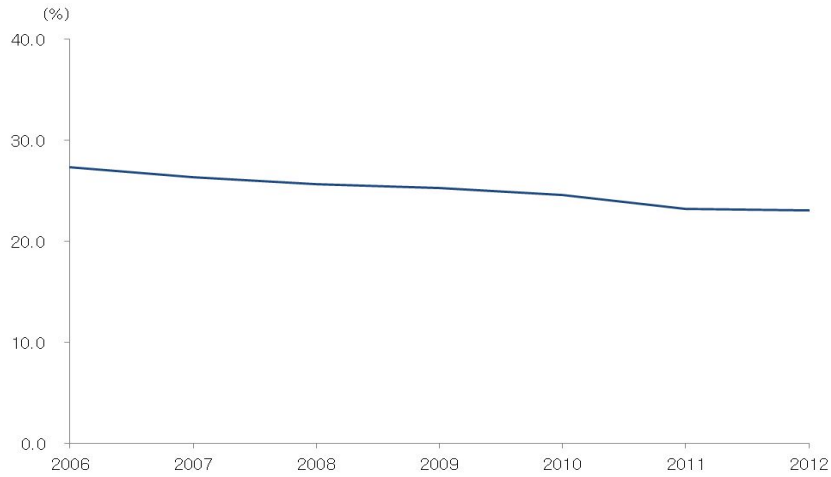
가구유형 및 가구원수별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수, 2001-2012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698,075	691,018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878,799	850,689	821,879
(가구)												
가구유형별												
노인세대	237,443	235,893	238,790	240,030	244,565	242,470	245,935	243,132	244,529	243,708	237,213	236,617
일반세대	217,462	216,645	230,827	249,393	276,227	288,945	294,872	291,680	302,202	291,774	277,081	259,866
장애인세대	100,313	104,009	112,987	123,418	136,892	144,747	154,066	162,527	171,330	173,322	173,751	174,112
모자세대	70,152	65,132	66,636	70,951	77,985	81,189	82,920	82,880	86,961	85,970	83,525	78,333
부자세대	19,128	17,289	17,158	17,916	19,450	19,963	19,934	19,744	21,115	20,879	20,479	18,820
소년소녀가정	13,613	13,638	13,932	14,387	14,823	14,713	14,475	14,276	13,533	11,565	9,798	8,105
미혼부모세대									291	411	450	466
조손세대									3,415	5,095	6,357	6,533
기타세대구성	39,964	38,412	37,531	37,586	39,803	39,665	40,218	39,966	39,549	46,075	42,035	39,027
가구원수												
1인가구	353,437	371,166	399,220	426,701	463,181	482,842	511,975	525,078	547,931	549,341	544,206	540,924
2인가구	149,106	144,295	146,655	152,454	161,044	163,478	164,300	160,918	164,856	163,983	156,799	147,736
3인가구	105,980	98,189	98,532	101,200	108,067	108,631	104,564	100,546	101,774	99,248	90,321	80,900
4인가구	62,126	54,151	51,997	52,094	55,050	54,510	50,843	47,688	48,047	46,424	41,472	36,494
5인가구	19,966	16,865	15,636	15,516	16,444	16,269	15,111	14,555	14,798	14,373	12,804	11,272
5인가구	5,492	4,624	4,248	4,153	4,304	4,278	4,061	3,888	3,923	3,840	3,514	3,168
7인가구 이상	1,968	1,728	1,573	1,563	1,655	1,684	1,566	1,522	1,596	1,590	1,573	1,385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2

■ 보조지표

상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 2006-2012



주: 1) 상대적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상대빈곤층 가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상대빈곤율을 토대로 계산해 낸 값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1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2012

통계표

	상대빈곤층 기초생활보장수급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	전체가구 수	상대 빈곤률
2006	27.3	831,692	18,326,619	16.6
2007	26.4	852,420	18,687,694	17.3
2008	25.7	854,205	19,005,339	17.5
2009	25.3	882,925	19,261,292	18.1
2010	24.6	878,799	19,865,179	18.0
2011	23.2	850,689	20,033,142	18.3
2012	23.1	821,879	20,211,770	17.6

■ 국제비교지표 (없음)

Ⅲ. 환경지표

3.1. 생활환경과 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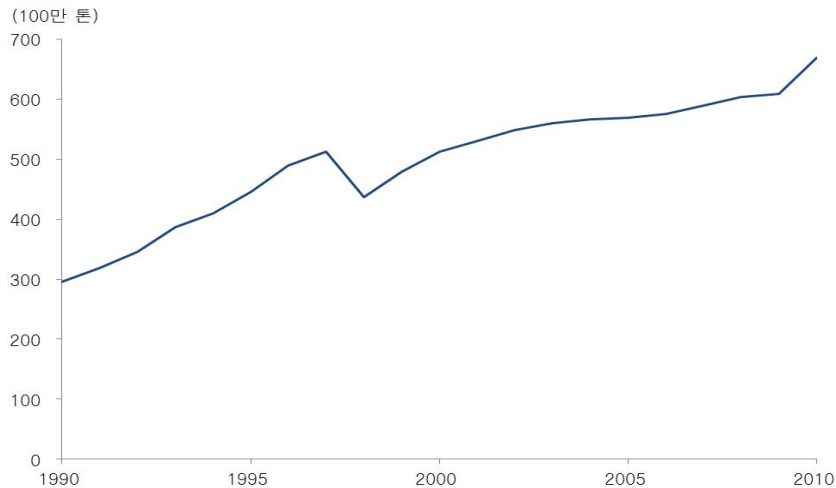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생활 환경과 오염	기후· 대기· 소음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대기오염도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대기오염도
		• 환경소음도	• 소음 진동민원건수	
	물환경	• 하수도보급률	• 하천 수질오염도	• 하수도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 상수도보급률
	폐기물· 유해물질	• 폐기물발생량	• 폐기물재활용률 • 생활폐기물발생집약도	• 생활폐기물발생집약도
		• 화학물질배출량	• 방사성폐기물발생량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 환경보호비용	• 환경예산	• 환경보호비용
		• 환경향상체감도	• 환경문제심각성인식도	

3.1.1. 기후·대기·소음

31101. 온실가스배출량

■ 주요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0



주: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6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단위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임).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3.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온실가스란 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하며,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의 6개 물질이 온실가스로 정해져 있음. 6개 온실가스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정도가 다른데,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를 1로 했을 때 다른 온실가스들의 온실효과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 지구온난화지수임.
- 측정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 6개 온실가스별 연간 배출량 ×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지수 (※지구온난화지수: 이산화탄소=1, 메탄=21, 아산화질소=310, 수소불화탄소=150-11,700, 과불화탄소=6,500-9,200, 육불화황=23,900)

● 지표의 의의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환경문제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국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빙하 감소,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한반도에도 잦은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며, 온실가스 배출은 인간의 생산 활동 및 소비활동(특히 에너지 사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992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1997년에는 지구온난화에 역사적 책임이 많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전 지구적인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흐름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은 2009년에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바 있다.

● 해설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이 되는 해인 1990년에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은 296백만 톤(이산화탄소환산 기준)이었다. 20년 후인 201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669백만 톤으로, 1990-2010년 동안 126% 증가하였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약 4.15%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2010년 기준으로 세계 12위(OECD 국가 중 6위)이다.

온실가스 배출원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에너지 사용과 관련되는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된다. 1990-2010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 역시 에너지 부문이며, 동 기간 동안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5.3% 증가하였다.

실질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802.6(톤/10억원)에서 2010년 641.8(톤/1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동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속도보다는 경제규모의 확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랐음을 의미한다.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반면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6.9톤에서 2010년 13.5톤으로 동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이나 호주 같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독일, 영국 등 제조업 중심의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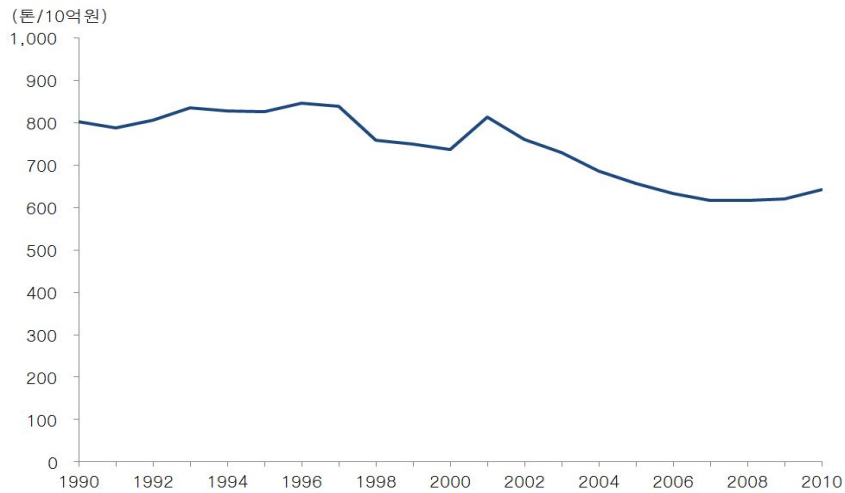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0

	(100만 톤)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배출량	296.13	445.92	512.08	568.75	575.42	590.26	604.10	609.07	668.82	
에너지	242.59	356.25	413.08	467.83	474.71	495.46	509.27	516.05	570.70	
산업공정	20.19	50.91	58.62	64.54	64.10	59.46	59.59	57.45	62.67	
농업	23.48	24.08	22.75	20.90	20.73	20.77	20.80	21.17	21.26	
폐기물	9.86	14.67	17.64	15.49	15.89	14.57	14.44	14.40	14.18	

주: 1) 산림 등에 의한 탄소흡수량은 제외함.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3.

■ 보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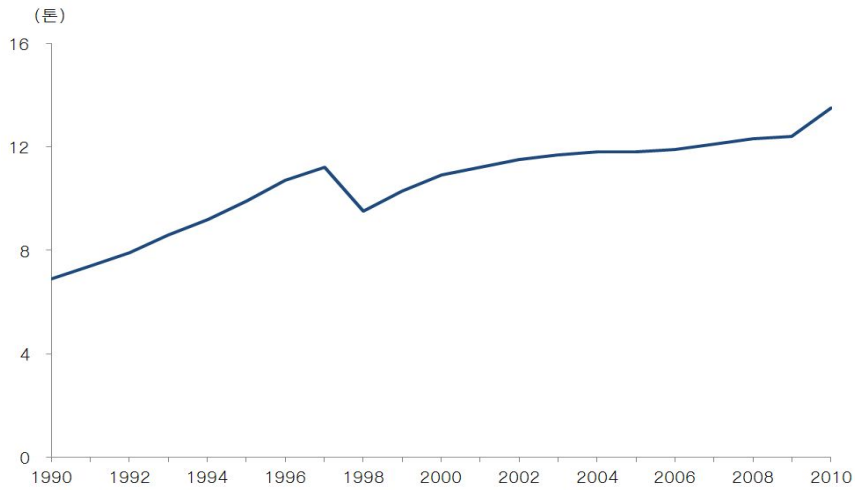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1990-2010



주: 1)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실질GDP로 나눈 값임.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3.

통계표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DP 대비 온실가스배출량	802.6	826.7	737.1	657.3	632.3	617.1	617.4	620.5	641.8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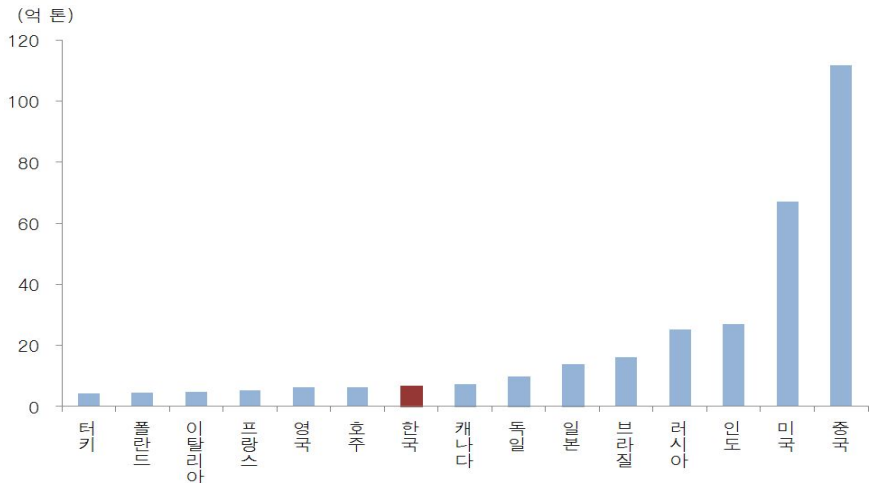


주: 1)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인구로 나눈 값임.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3.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인당 온실가스배출량	6.9	9.9	10.9	11.8	11.9	12.1	12.3	12.4	13.5

■ 국제비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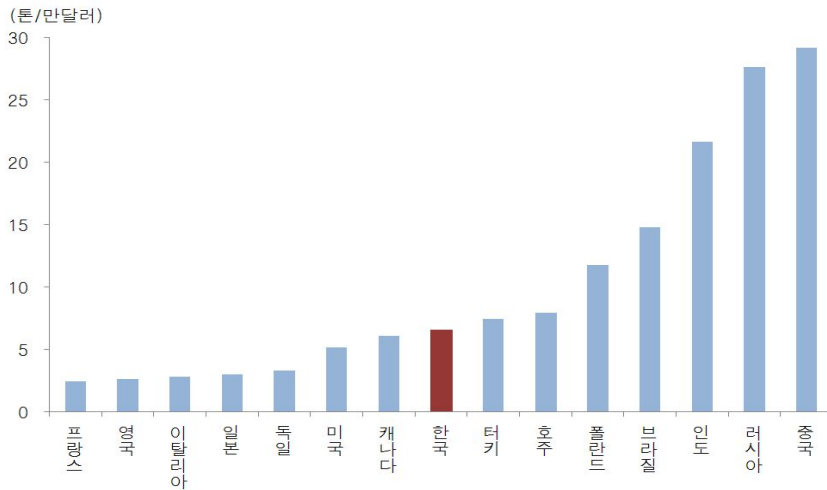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2010



주: 1)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환산한 6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배출총량(단위는 이산화탄소환산톤임)임.
출처: EDGA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3.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호주	한국	캐나다	독일	일본	브라질	러시아	인도	미국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	4.2	4.5	4.9	5.4	6.2	6.3	6.7	7.3	9.8	13.8	16.2	25.1	26.9	67.1	111.8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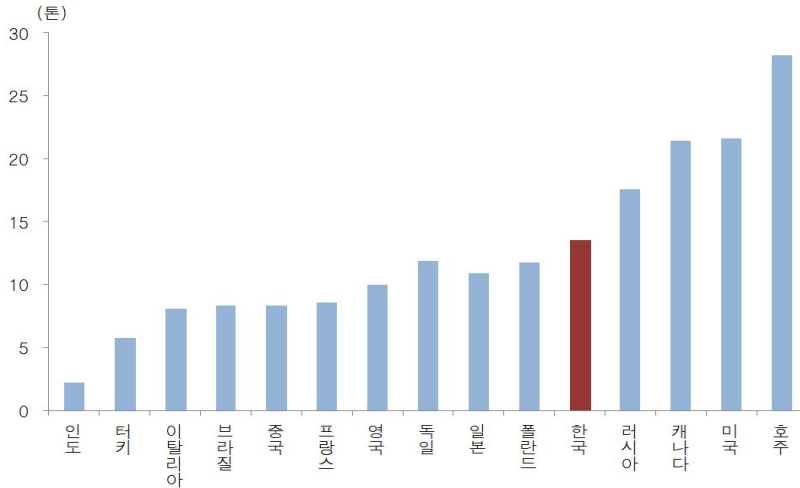


주: 1)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실질GDP로 나눈 값(GDP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출처: EDGAR.
World Bank

통계표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미국	캐나다	한국	터키	호주	폴란드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GDP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44	2.62	2.78	2.97	3.31	5.17	6.05	6.56	7.43	7.89	11.74	14.78	21.59	27.61	29.13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010



주: 1)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총인구로 나눈 값임.
출처: EDGAR.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2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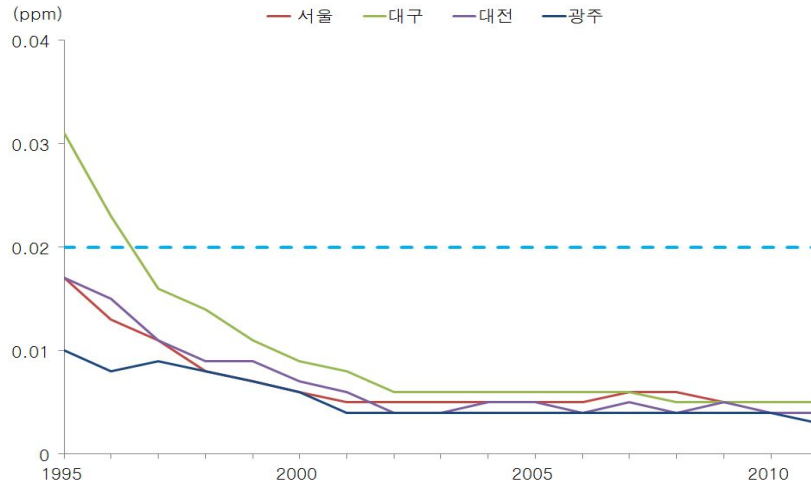
통계표

	인도	터키	이탈리아	브라질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폴란드	한국	러시아	캐나다	미국	호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20	5.77	8.10	8.31	8.34	8.57	9.99	11.90	10.90	11.76	13.50	17.56	21.41	21.63	28.24

31102. 대기오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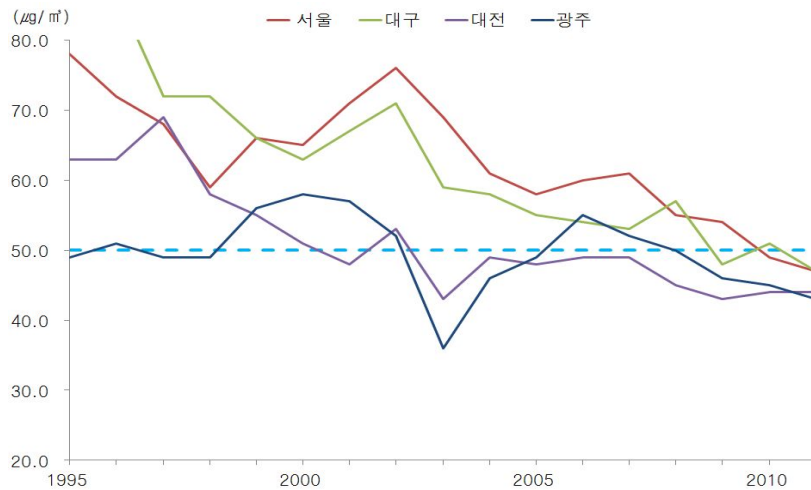
■ 주요지표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아황산가스, 1995-2011



주: 1) 대기 중 아황산가스 농도의 연평균 수치임.
 2) 점선은 아황산가스의 대기환경기준(0.02ppm)임.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1995-2011



주: 1)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연평균 수치임.
 2) 점선은 미세먼지의 대기환경기준(50µg/m³)임.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대기오염도란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₁₀), 오존(O₃), 납, 벤젠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오염 정도를 말함. 대기오염도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로 측정되며, 통상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는 ppm 단위로, 미세먼지는 $\mu\text{g}/\text{m}^3$ 단위로 표시됨.
- 측정 방법: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자동 측정.

● 지표의 의의

대기오염(대기질)은 인체 및 생태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전통적이면서 대표적인 환경이슈이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은 여러 가지이며, 한국 정부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납, 벤젠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기준을 정해 놓았다.

이 중 아황산가스(SO₂)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무색의 기체로 연료 중에 포함된 황 성분이 연소되면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산성비의 대표적인 원인물질이다. 국내 최초의 대기환경기준도 아황산가스에 대해 설정되었다.

미세먼지(PM₁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직경 10 μm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는 것으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세먼지(PM₁₀)의 연평균농도가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 해설

전통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SO₂)의 농도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1년에 주요 도시의 연평균 아황산가스 농도는 0.004-0.005ppm 범위이며, 이는 아황산가스의 대기환경기준인 0.02ppm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무연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료 사용량이 증가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황유와 LNG 등 청정연료 공급의 확대, 배출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속적인 연료규제 정책으로 황산화물(SO_x)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간 배출량 400천 톤 내외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5년에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PM₁₀)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까지도 대부분의 도시가 연평균 환경기준(50 $\mu\text{g}/\text{m}^3$)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책에 힘입어 2011년에는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하였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대기오염 수준을 비교해보면, 서울의 경우 베이징 같은 개발도

상국 대도시에 비해서는 대기 질이 양호한 편이지만,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대기 질이 좋지 않은 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47\mu\text{g}/\text{m}^3$)는 프랑스 파리($27\mu\text{g}/\text{m}^3$)나 영국 런던($31\mu\text{g}/\text{m}^3$)에 비하면 상당히 오염도가 높은 편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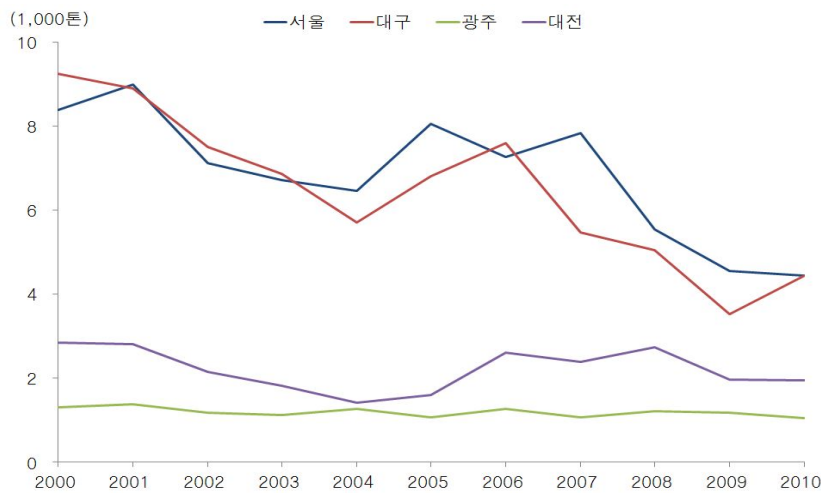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아황산가스 및 미세먼지, 1995-201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아황산가스 (ppm)	서울	0.017	0.013	0.011	0.008	0.007	0.006	0.005	0.005	0.005
	부산	0.023	0.022	0.018	0.015	0.014	0.010	0.008	0.007	0.006
	인천	0.023	0.012	0.013	0.009	0.008	0.008	0.007	0.006	0.007
	광주	0.010	0.008	0.009	0.008	0.007	0.006	0.004	0.004	0.004
	대전	0.017	0.015	0.011	0.009	0.009	0.007	0.006	0.004	0.004
	울산	0.028	0.022	0.019	0.015	0.017	0.013	0.012	0.010	0.011
	대구	0.031	0.023	0.016	0.014	0.011	0.009	0.008	0.006	0.006
미세먼지 ($\mu\text{g}/\text{m}^3$)	서울	78	72	68	59	66	65	71	76	69
	부산	73	76	68	67	65	62	60	69	55
	인천	76	67	70	57	53	53	52	57	61
	광주	49	51	49	49	56	58	57	52	36
	대전	63	63	69	58	55	51	48	53	43
	울산	69	51	43	29	29	52	55	54	40
	대구	81	87	72	72	66	63	67	71	59

주: 1)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의 연평균 수치임.
출처: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년도.

■ 보조지표

주요 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황산화물,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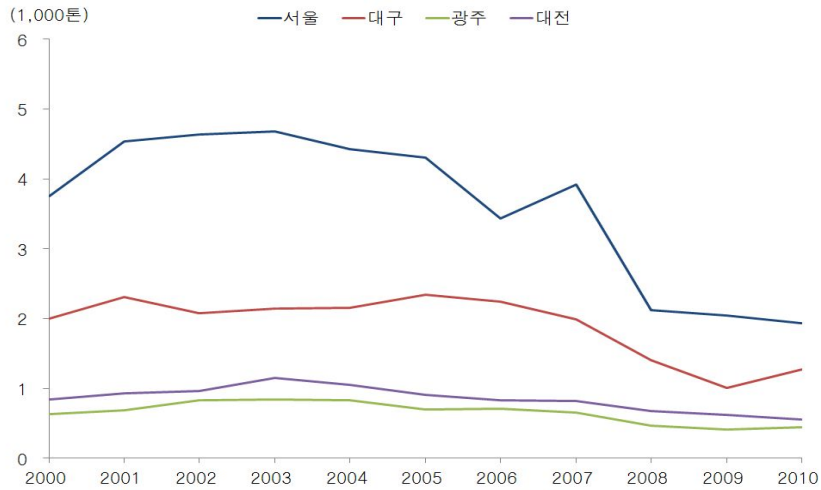


주: 1) 아황산가스 오염을 초래하는 원인물질인 황산화물(SOx)의 연간 배출량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통계표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	8.39	8.05	7.28	7.84	5.54	4.56	4.45
대구	9.25	6.82	7.60	5.47	5.05	3.52	4.45
광주	1.30	1.08	1.26	1.07	1.22	1.19	1.05
대전	2.85	1.59	2.60	2.38	2.73	1.05	1.95

주요 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미세먼지, 20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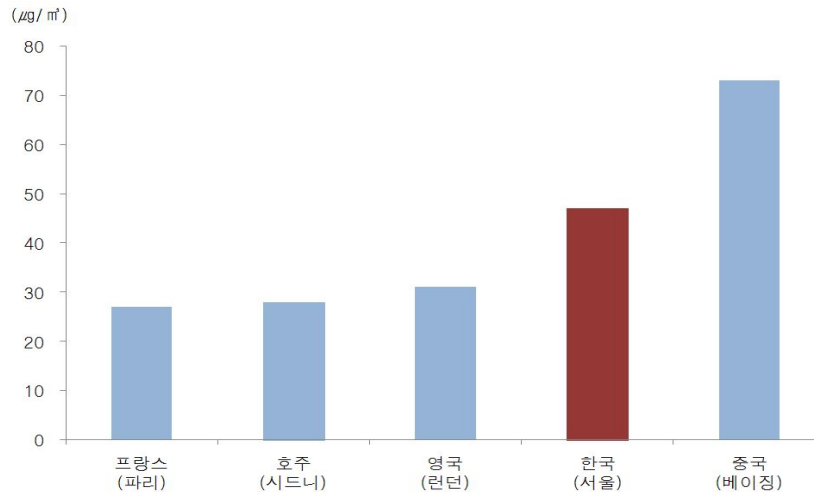
주: 1) 미세먼지 오염을 초래하는 원인물질인 미세먼지(PM₁₀)의 연간 배출량.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년도.

통계표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서울	3.75	4.31	3.43	3.92	2.12	2.05	1.94
대구	2.00	2.34	2.25	1.99	1.40	1.01	1.27
광주	0.64	0.70	0.71	0.65	0.47	0.41	0.44
대전	0.84	0.91	0.83	0.82	0.68	0.62	0.55

■ 국제비교지표

세계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2010



주: 1)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연평균 수치임.

출처: <http://www.airparif.asso.fr>(파리); <http://www.environment.gov.au>(시드니); EEA, 「Air Quality Monitoring Review 2011」, 2012(런던); 환경부, 「2012 대기환경연보」, 2013(서울);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2(베이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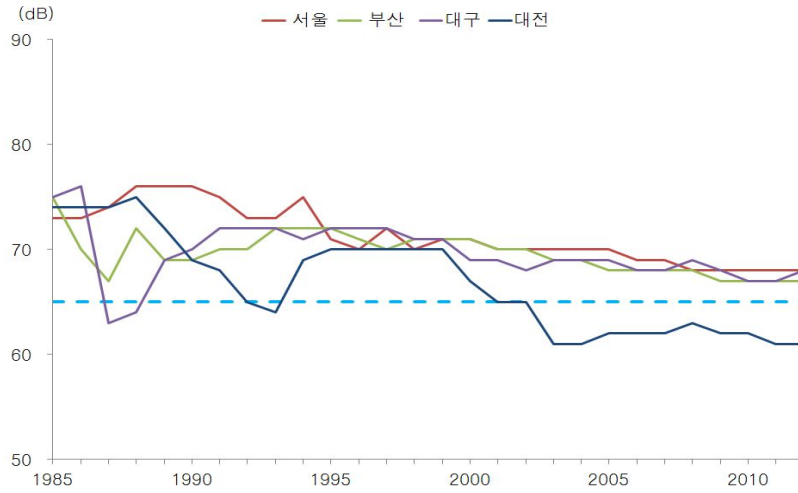
통계표

	프랑스(파리)	호주(시드니)	영국(런던)	한국(서울)	중국(베이징)
대기오염도: 미세먼지	27	28	31	47	73

31103. 환경소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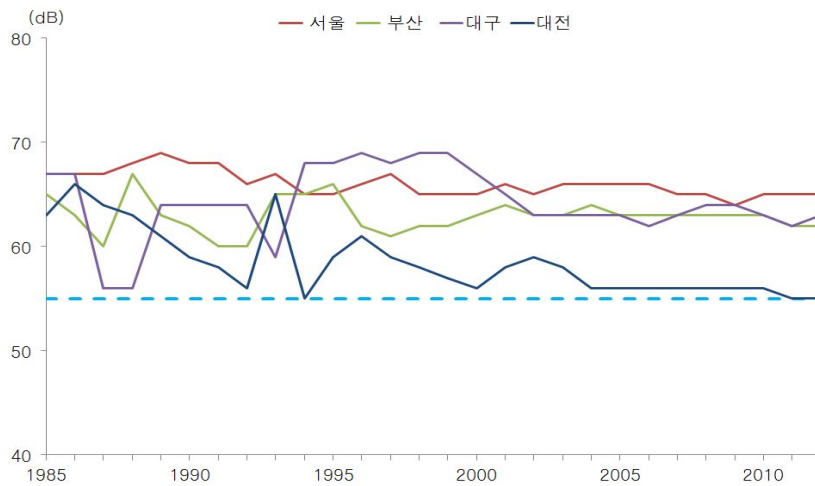
■ 주요지표

주요 도시 소음도: 낮, 1985-2012



주: 1)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 크기
 2) 점선은 도로변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낮(65dB)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주요 도시 소음도: 밤, 1985-2012



주: 1)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 크기
 2) 점선은 도로변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밤(55dB)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소음·진동관리법」)를 말하며, 소음 정도는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낮, 밤) 달라질 수 있음. 여기서 사용하는 환경소음도 지표는 도로변 주거지역에서 측정된 소음의 크기를 의미하며, 단위는 등가소음도(Leq dB(A))로 표시함.
- 측정 방법: 환경소음측정망을 통해 측정(전국 10개 도시 62개 도로변 지점에 자동측정망 운영).

● 지표의 의의

환경소음이란 통상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한 소음을 말하며, 생활소음이라고도 부른다. 생활소음의 주요 발생원은 도로·철도·항공과 같은 교통수단, 산업체나 건설공사장, 확성기나 인근 주민 등 매우 다양하다.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으로 환경소음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환경문제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환경소음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 속 깊이 들어온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다. 더욱이 소음 공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다.

대기질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음의 경우에도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로 소음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음환경기준은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낮, 밤)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40dB~75dB). 여기서는 이러한 환경소음을 대표하는 것으로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도’를 이용한다.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낮 시간대의 소음환경기준은 65dB, 밤 시간대의 소음환경기준은 55dB이다.

● 해설

1985년 이후 국내 주요 도시의 소음도(도로변 주거지역)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는 소음도가 조금씩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 추세는 낮 시간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1985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서울은 73dB에서 68dB로, 부산은 75dB에서 67dB로, 대구는 75dB에서 68dB로, 대전은 74dB에서 61dB로 개선되었다. 동 기간 동안 밤 시간대 역시 소음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 그 개선 정도가 크지 않다.

둘째, 소음도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시들이 소음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중 대전만이 낮 시간대와 밤 시간대 모두 소음환경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나머지 도시들은 여전히 소음환경기준을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밤 시간대의 소음환경기준(55dB)과 소음 측정치(65dB) 간의 괴리가 매우 크다.

한편 객관적인 수치인 소음도와 달리 주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민원 건수는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에 21,759건이었던 소음·진동 민원 건수는 2011년에 56,244건으로 동 기간 동안 158%나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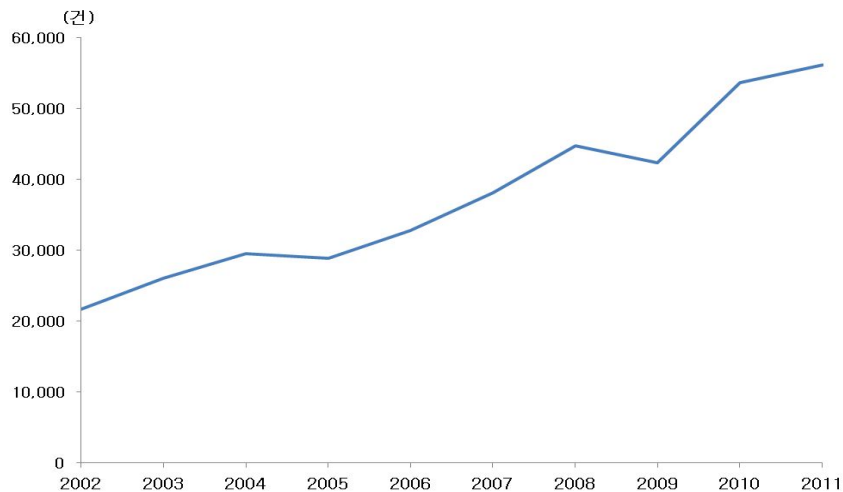
주요 도시 주거지역 소음도, 1985-2012

		(dB)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낮	73	76	71	71	70	69	69	68	68	68	68	68
	밤	67	68	65	65	66	66	65	65	64	65	65	65
부산	낮	75	69	72	71	68	68	68	68	67	67	67	67
	밤	65	62	66	63	63	63	63	63	63	63	62	62
대구	낮	75	70	72	69	69	68	68	69	68	67	67	68
	밤	67	64	68	67	63	62	63	64	64	63	62	63
광주	낮	74	68	70	72	66	65	66	63	63	64	64	63
	밤	66	61	60	66	61	60	60	59	58	59	59	58
대전	낮	74	69	70	67	62	62	62	63	62	62	61	61
	밤	63	59	59	56	56	56	56	56	56	56	55	55

주: 1) 주요 도시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 크기(소음환경기준은 낮 65dB, 밤 55dB)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보조지표

소음·진동 민원 건수, 2002-2011



주: 1) 환경민원 중 소음·진동민원 건수임.
출처: 환경부,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각 년도.

통계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음·진동 민원건수	21,759	26,126	29,576	28,940	32,800	38,159	44,784	42,400	53,718	56,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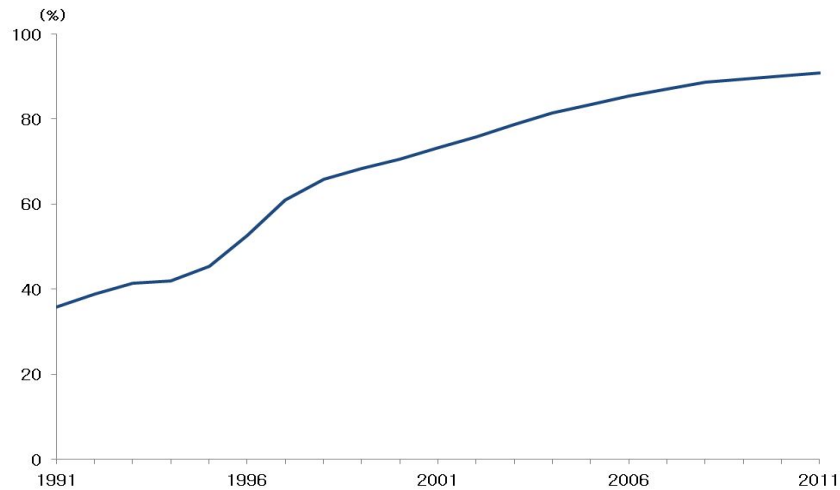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3.1.2. 물환경

31204. 하수도보급률

■ 주요지표

하수도 보급률, 1991-2011



주: 1) 하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하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의 비율을 말함. 타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장의 혜택을 받는 인구도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로 간주함
- 측정 방법: $\text{하수도 보급률} = (\text{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div \text{총인구}) \times 100$

● 지표의 의의

하수도보급률은 공공하수도서비스 수혜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하수 및 폐수 처리와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정도를 대표하는 지표이다. 하수도 보급률은 수질오염 부하를 줄이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공중위생 수준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지표 중의 하나이다.

● 해설

1990년대 초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하수도 보급률은 1991년 39.3%에서 2011년 90.9%로 증가하여 평균치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2010년 기준으로 영국의 100%, 독일의 9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스웨덴의 87%, 일본의 7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하수도보급률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서울의 경우 2007년에 이미 하수도보급률 100%를 달성했지만,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2011년에도 하수도보급률이 각각 68.5%, 72.3%, 74.4%이다.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1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94.2%이지만 농어촌지역은 59.5%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시행된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고도처리의 효과로 4대강의 수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강의 수질은 측정 지역의 위치(예컨대, 상류 지역인지 하류 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며, 아직까지는 특정한 강의 수질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수질 지수가 개발되어 있지는 않다.

4대강의 주요 상수원 취수구역(팔당, 물금, 대청, 주암)은 대부분 BOD 2mg/l 이하의 ‘ 좋음 ’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 낙동강 물금 구역은 2012년에 전년 대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어 ‘ 좋음 ’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1990년대 초에 비하면 수질오염도가 가장 많이 개선되었다.

● 상세 통계표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1991-2011

	(%)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39.3	45.2	70.5	83.5	85.5	87.1	88.6	89.4	90.1	90.9
서울	97.9	75.5	98.3	99.7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산	44.2	41.7	72.7	89.0	98.6	99.0	99.0	99.1	99.1	99.1
대구	24.8	56.0	96.2	97.0	97.4	97.5	97.5	98.0	98.0	98.2
인천	0.0	45.9	83.9	86.6	86.6	90.6	98.2	97.1	97.8	97.6
광주	0.0	55.0	97.3	98.0	98.0	98.0	98.0	97.9	98.1	98.1
대전	38.1	49.1	93.0	95.9	96.1	96.1	97.1	97.1	97.3	97.4
울산	-	-	20.3	91.6	91.9	92.2	92.2	92.4	94.0	95.1
경기	14.7	54.9	74.4	82.2	84.5	85.8	88.1	89.9	90.6	91.3
강원	0.0	22.9	48.3	65.7	70.4	75.3	76.4	77.0	81.3	83.1
충북	0.0	52.1	64.5	72.8	75.5	76.8	77.0	77.9	79.6	83.0
충남	0.0	12.6	24.8	53.9	56.7	59.0	61.8	63.5	64.7	68.5
전북	18.6	16.0	42.8	70.8	73.2	74.7	77.7	79.3	80.8	82.3
전남	0.0	2.4	26.1	60.1	61.6	63.3	66.1	68.3	70.9	72.3
경북	5.6	13.6	46.8	60.7	63.2	68.8	69.8	71.9	72.3	74.4
경남	0.7	19.0	40.7	76.7	78.1	80.9	81.9	82.7	83.6	85.3
제주	1.2	41.5	62.5	72.3	73.1	79.1	82.0	84.8	87.1	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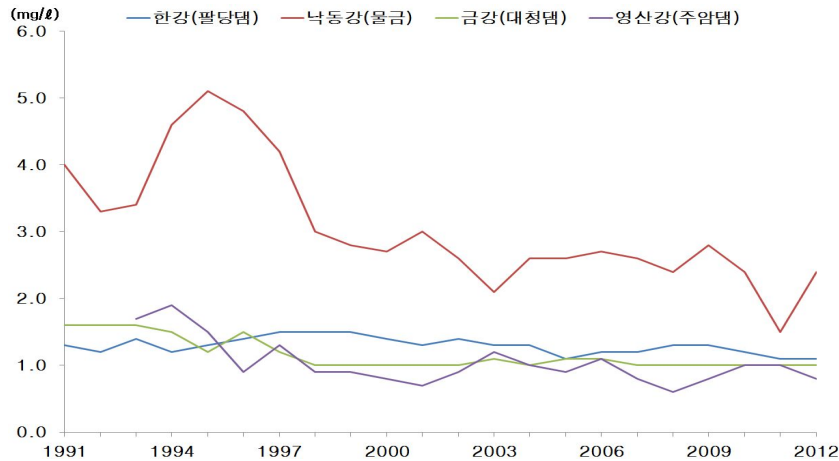
주: 1) 하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의 비율임.

2) 울산은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 이전 년도는 경북에 포함함.

출처: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년도.

■ 보조지표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오염도: BOD, 1991-2012



주: 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물속의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유기물질에 의한 오염 정도를 나타냄.

2) 4대강별 측정지점은 수돗물 취수구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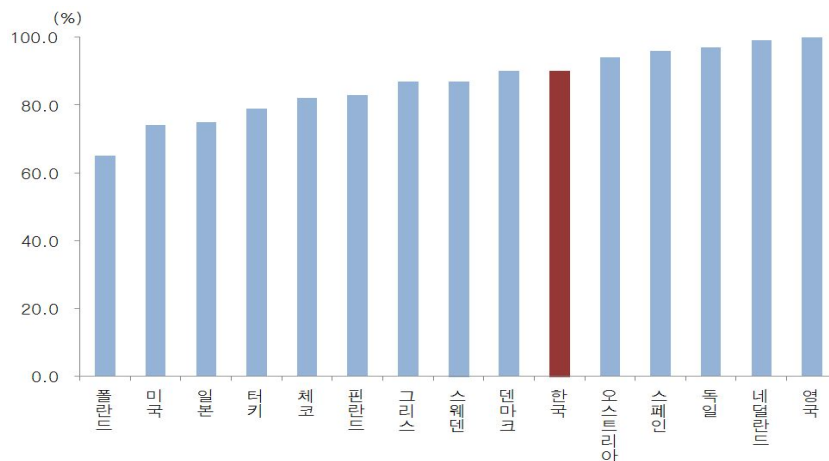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통계표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강(팔당댐)	1.3	1.3	1.4	1.1	1.2	1.2	1.3	1.3	1.2	1.1	1.1
낙동강(물금)	4.0	5.1	2.7	2.6	2.7	2.6	2.4	2.8	2.4	1.5	2.4
금강(대청댐)	1.6	1.2	1.0	1.1	1.1	1.0	1.0	1.0	1.0	1.0	1.0
영산강(주암댐)	-	1.5	0.8	0.9	1.1	0.8	0.6	0.8	1.0	1.0	0.8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하수도 보급률, 2010



주: 1) 하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의 비율임.

2) 미국은 2008년 수치임.

출처: OECD, OECD.Stat.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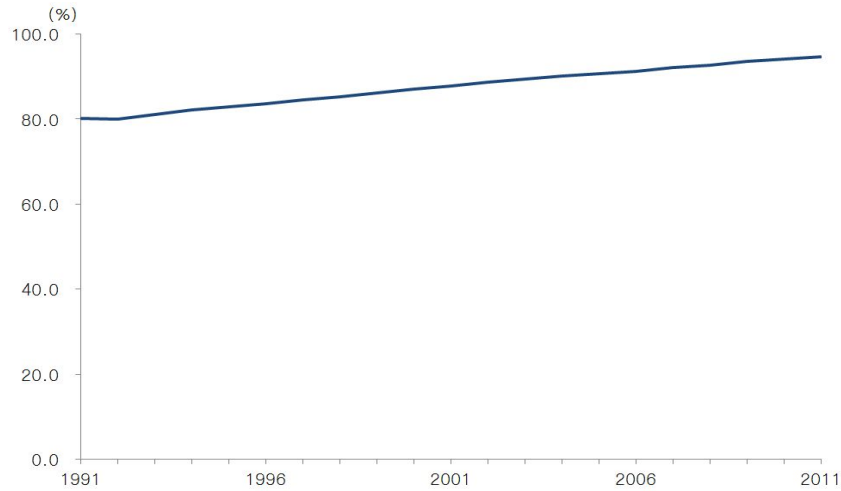
통계표

	폴란드	미국	일본	터키	체코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한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영국
하수도 보급률	65	74	75	79	82	83	87	87	90	90	94	96	97	99	100

31205. 상수도보급률

■ 주요지표

상수도 보급률, 1991-2011



주: 1) 상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급수인구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상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급수인구의 비율. 여기서 말하는 급수인구는 지방상수도(지방자치단체가 공급)와 광역상수도(한국수자원공사 공급)의 혜택을 받는 인구를 말하며, 간이상수도 등은 제외됨.
- 측정 방법: 상수도 보급률 = (급수인구 ÷ 총인구) × 100.

● 지표의 의의

상수도의 주된 목적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상수도는 보건위생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과 방화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갖는 기본시설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일반적으로 상수도를 공급 받아야 할 대상 인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상수도 보급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주거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지역의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이다.

● 해설

하수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해 상수도 보급률은 1991년 80%에서 2011년 95%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2011년 12월말 현재 전국 162개 지방상수도사업자(특·광역시 7개, 특별자치도 1개, 시 73개, 군 81개)와 1개 광역상수도사업자가 전체 인구의 94.6%에게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혜택을 받는 인구를 포함할 경우에는 급수인구의 비율이 97.9%로 높게 나타난다.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2000년대 초에 97%-99%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을 달성하였는데(광대한 영토를 가진 미국은 예외), 한국도 현재에는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 보급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수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 시지역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99%를 넘지만, 읍지역이나 면지역은 각각 94.9%와 86.7% 수준이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혜택 인구를 포함한 수치임).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보급 확충의 필요성은 수도물의 수질과도 관련된다. 2011년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의 0.2%, 수도꼭지의 0.02%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즉, 먹는 물로 부적합)했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 비율이 3.7%에 달했다. 약수터의 초과 비율은 이러한 수도시설들보다 훨씬 높은 25.4%로, 이는 약수터 4개 중 1개가 먹는 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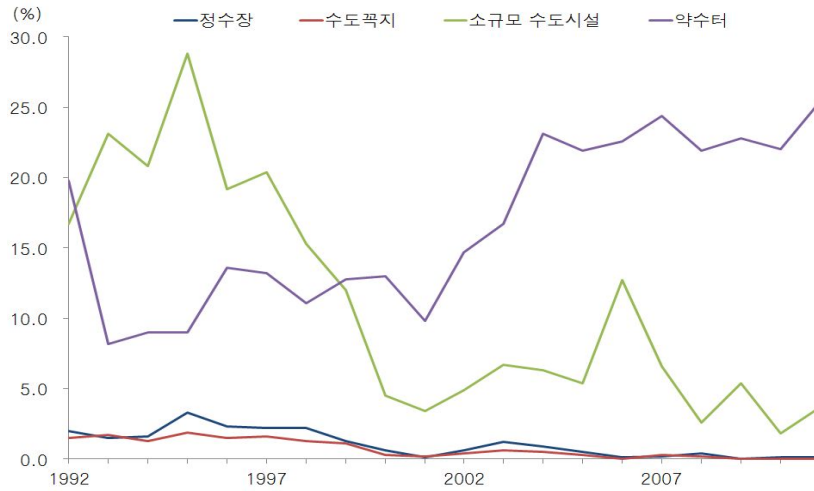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1991-2011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80.1	82.9	87.1	90.7	91.3	92.1	92.7	93.5	94.1	94.6
서울	99.9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산	97.7	97.4	98.4	99.3	99.5	99.6	99.8	99.9	99.9	99.9
대구	97.6	98.1	99.2	99.6	99.6	99.7	99.7	99.8	99.8	99.8
인천	97.2	95.2	96.2	97.0	97.6	97.6	97.7	97.9	98.0	98.3
광주	91.5	93.2	95.3	97.9	97.9	97.9	98.0	98.5	99.4	99.5
대전	88.0	93.4	96.0	98.8	99.0	99.2	99.4	99.5	99.6	99.7
울산	-	-	89.3	92.4	93.0	93.5	95.4	96.5	96.6	97.4
경기	75.4	82.9	88.0	91.7	92.3	93.4	94.4	95.3	95.7	96.4
강원	70.1	74.4	79.9	83.7	84.3	84.6	85.5	86.1	86.5	87.5
충북	56.5	63.7	72.3	79.9	81.1	82.7	83.7	85.1	86.0	86.8
충남	36.6	43.2	52.6	63.3	64.4	67.4	69.4	71.4	74.1	76.0
전북	55.9	65.4	74.4	81.9	84.0	85.4	87.7	89.5	91.0	92.1
전남	39.7	47.5	58.5	66.1	67.7	69.9	70.3	73.7	76.1	77.7
경북	54.0	60.2	70.2	77.7	78.7	80.7	82.3	83.5	84.9	85.7
경남	64.5	70.5	74.6	82.6	84.1	84.9	85.9	87.2	88.8	89.7
제주	99.9	9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상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급수인구의 비율임.
 2) 울산은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 이전 년도는 경북에 포함함.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년도.

■ 보조지표

먹는물 수질 기준 초과율, 199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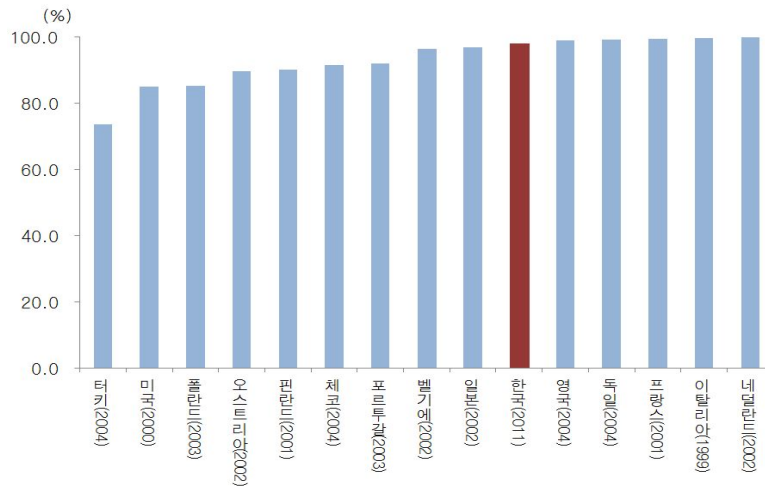
주: 1) 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비율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통계표

	1992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정수장	2.0	3.3	0.6	0.5	0.1	0.2	0.4	0.0	0.1	0.1
수도꼭지	1.5	1.9	0.3	0.3	0.0	0.3	0.2	0.0	0.0	0.0
소규모 수도시설	16.7	28.8	4.5	5.4	12.7	6.6	2.6	5.4	1.8	3.7
약수터	19.8	9.0	13.0	21.9	22.6	24.4	21.9	22.8	22.0	25.4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상수도 보급률, 2000년대



주: 1) 상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급수인구의 비율임.
2) 국제비교를 위해 한국 수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혜택인구 포함한 값을 사용함.
출처: OECD, *OECD.Stat*.
환경부, 「2011 상수도통계」, 2012.)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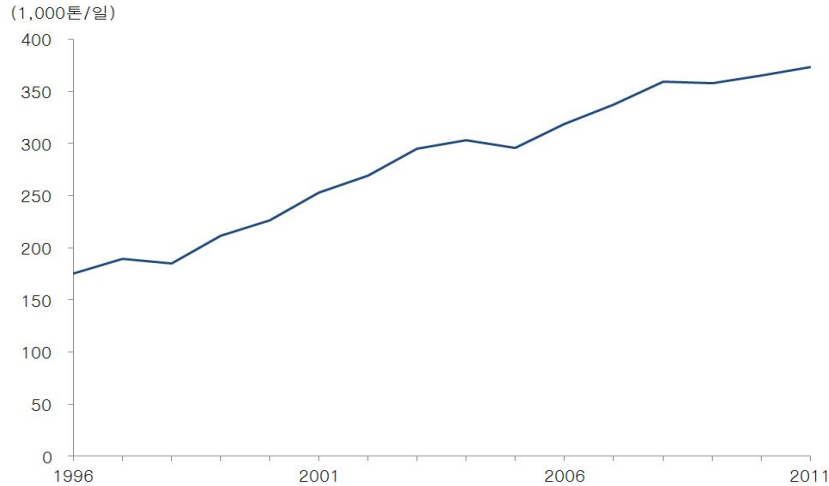
	터키 (2004)	미국 (2000)	폴란드 (2003)	오스 트리아 (2002)	핀란드 (2001)	체코 (2004)	포르 투갈 (2003)	벨기에 (2002)	일본 (2002)	한국 (2011)	영국 (2004)	독일 (2004)	프랑스 (2001)	이탈 리아 (1999)	네덜 란드 (2002)
상수도 보급률	74	85	85	90	90	92	92	96	97	98	99	99	99	100	100

3.1.3. 폐기물·유해물질

31306. 폐기물발생량

■ 주요지표

폐기물 발생량, 1996-2011



주: 1) 일반폐기물의 일일 발생량임.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국내에서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구분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배출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함.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함. 일반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을 말함.
- 측정 방법: 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일일 발생량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일일 발생량 + 건설폐기물 일일 발생량.

● 지표의 의미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대기나 물환경과 더불어 전통적이고 기초적인 환경이슈 중의 하나이다. 폐기물 자체는 대기나 물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 환경매체는 아니지만, 폐기물의 처리 과정에서 대기오염(소각)이나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매립)을 초래한다. 폐기물 발생총량은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일종의 후처리 활동인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을 규정짓는 대표지표 중의 하나이다.

● 해설

1996-2011년 동안 전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발생량은 일일 175,334톤에서 일일 373,312톤으로 113% 증가하였다. 폐기물 범주별로 보면, 생활폐기물의 경우 쓰레기종량제의 시행(1995년) 이후인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역시 일일 350kg-400kg 사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1996-2006년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폐기물은 1996-2011년 동안 가장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전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발생량 중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16.2%에서 2011년 49.9%로 급증하였다.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처리되는 총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재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1996년에 54.9%였던 재활용률은 2011년에 83.7%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미국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원절약 모범국 중의 하나인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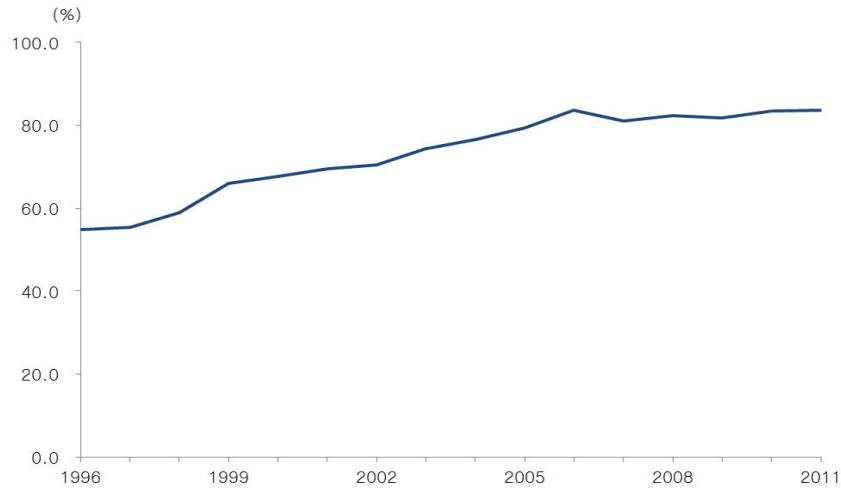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1996-2011

연도	총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폐기물	건설폐기물
1996	175,334	49,925	96,984	28,425
1997	189,200	47,895	93,528	47,777
1998	184,989	44,583	92,713	47,693
1999	211,728	45,614	103,893	62,221
2000	226,668	46,438	101,453	78,777
2001	252,927	48,499	95,908	108,520
2002	269,548	49,902	99,505	120,141
2003	295,047	50,736	98,891	145,420
2004	303,514	50,007	105,018	148,489
2005	295,723	48,398	112,419	134,906
2006	318,928	48,844	101,099	168,985
2007	337,158	50,346	114,807	172,005
2008	359,296	52,072	130,777	176,447
2009	357,861	50,906	123,604	183,351
2010	365,154	49,159	137,875	178,120
2011	373,312	48,934	137,961	186,417

주: 1) 일반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건설폐기물)의 일일 발생량임.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년도.

■ 보조지표

폐기물 재활용률, 1996-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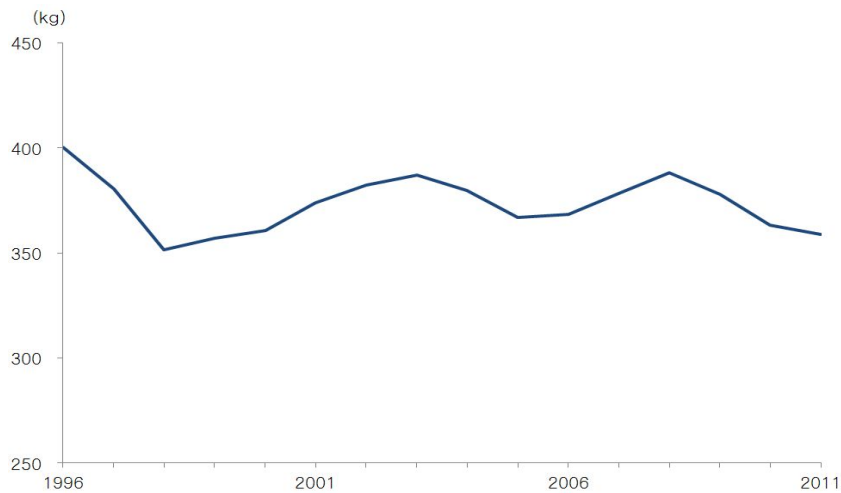


주: 1) 일반폐기물 중 발생량 대비 재활용된 양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년도.

통계표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폐기물 재활용률	54.9	67.7	79.4	83.6	81.1	82.3	81.7	83.4	83.7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1996-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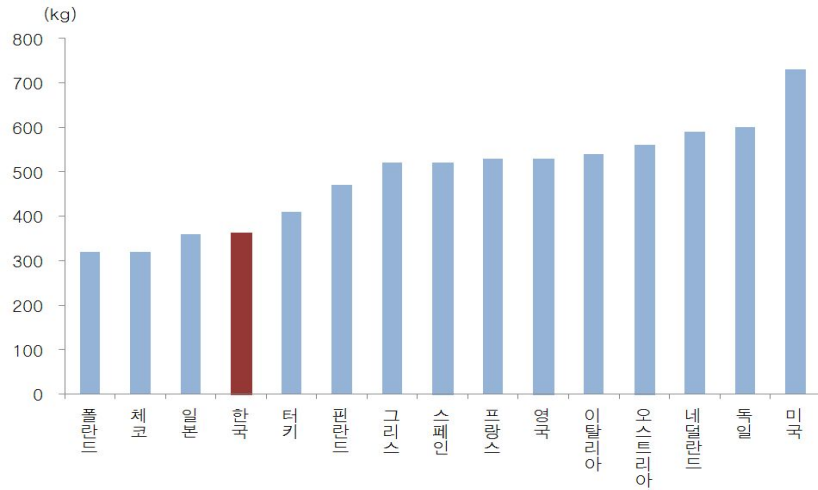
주: 1)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총인구로 나눈 값임.
출처: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년도.

통계표

	1996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400	361	367	369	378	388	378	363	359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0



주: 1)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총인구로 나눈 값임.

출처: OECD. OECD.Stat.

환경부, 「20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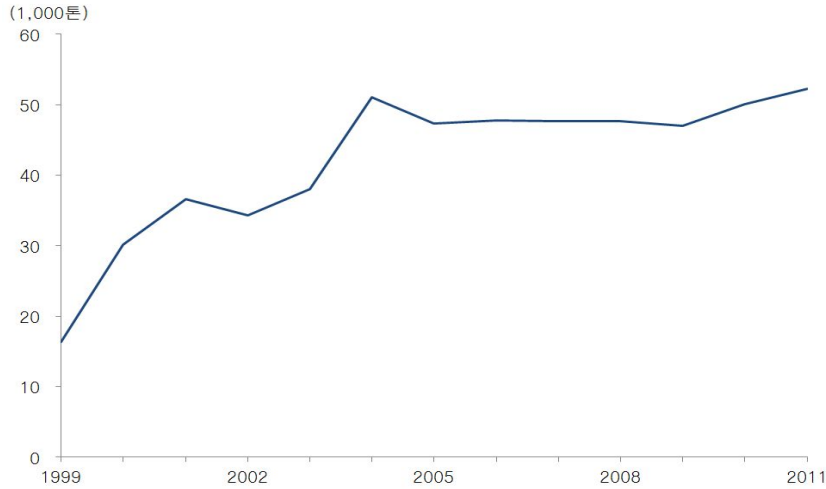
통계표

	폴란드	체코	일본	한국	터키	핀란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미국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320	320	360	363	410	470	520	520	530	530	540	560	590	600	730

31307. 화학물질배출량

■ 주요지표

화학물질 배출량, 1999-2011



주: 1)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임.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 등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 통계 작성 대상 화학물질은 유독물·발암물질·중금속 등 독성물질과 환경오염물질 중 화학물질임(1999년 시작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조사대상 화학물질과 업종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1년 현재 실제 조사 업종은 34개, 조사 물질은 242종임).
- 측정 방법: 기업체 보고(직접 측정 또는 추정치).

● 지표의 의의

화학물질은 그 편리성 이면에 인체와 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1984년 인도 보팔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각 국의 정부가 기업과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배출목록(Emission Inventory)을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도록 하는 권고가 채택되었다. OECD에서는 이의 이행을 위해 1996년에 “PRTR(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지침서”를 개발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에서는 2000년 석유정제·화학 등 2개 업종의 1999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화학물질 배출

량 정보는 화학물질의 배출과 이동현황을 나타내는 것이며, 사람이 생태계가 화학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위해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질의 노출로 인한 위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정보 외에 물질의 성상, 분해 정도, 잔류성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배출량은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마찬가지로 환경압력과 건강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 해설

조사대상 업종 및 화학물질의 확대로 맞물려서 2004년까지는 화학물질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연간 5만 톤 내외에서 조금씩 증가 또는 감소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급 발암물질(10종)의 경우 배출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매체별로 보면, 초기 조사에는 수계나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도 꽤 많았지만, 현재에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가장 유해성이 강력하면서도 통상적인 유해화학물질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특별 관리대상물질이 방사성폐기물이다. 방사성폐기물은 크게 사용 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 후 핵연료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이 없다. 이로 인해 사용 후 핵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의 꾸준히 쌓이고 있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의 경우 1990년 누적 량에 비해 2011년 누적 량은 9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현 저장시설의 추가 확충이 없다면 2016년부터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하는 원전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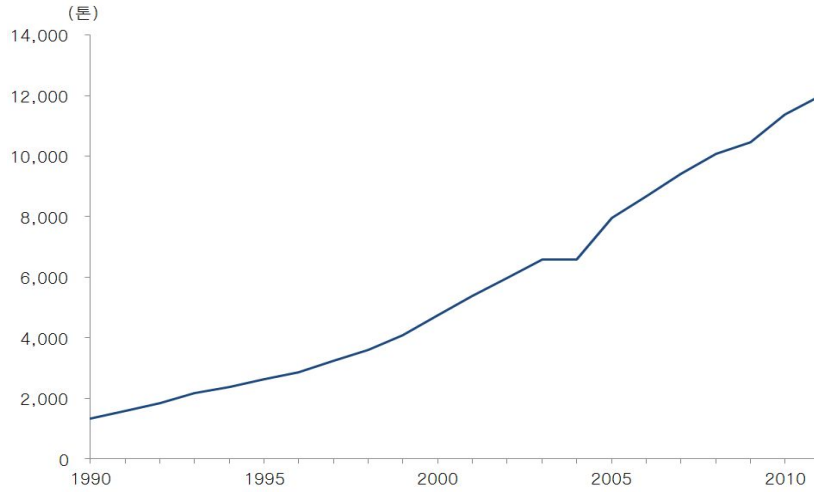
환경매체별 화학물질 배출량, 1999-2011

연도	(kg)			
	계	대기	수계	토양
1999	16,379,541	14,859,515	1,315,885	204,141
2000	30,143,167	23,746,517	964,977	5,341,674
2001	36,587,477	34,518,397	432,876	1,636,204
2002	34,271,815	34,120,586	149,515	1,714
2003	38,041,021	37,919,395	114,755	6,871
2004	51,020,912	50,841,428	179,181	303
2005	47,298,912	47,048,252	250,384	276
2006	47,796,041	47,598,239	197,764	37
2007	47,688,180	47,430,283	257,875	22
2008	47,624,556	47,474,237	150,319	-
2009	46,988,587	46,857,837	130,750	-
2010	50,034,309	49,882,268	152,041	-
2011	52,288,640	52,105,033	183,607	-

주: 1)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임.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각 년도.

■ 보조지표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사용 후 핵연료, 199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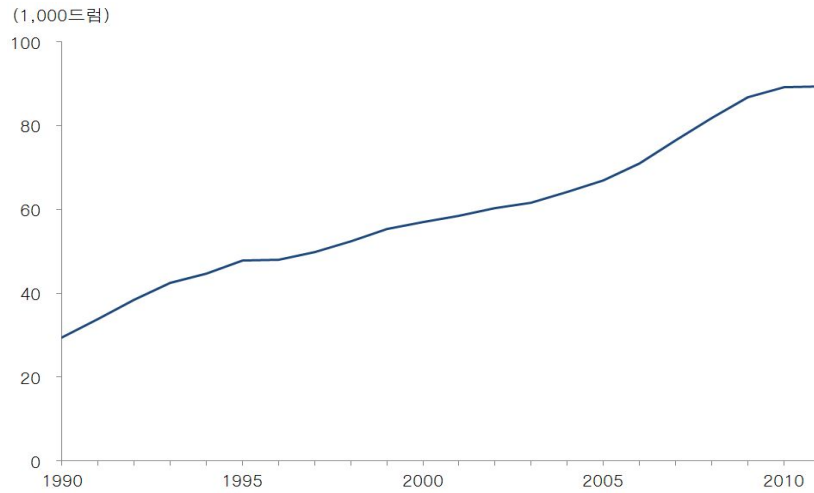


주: 1) 사용후 핵연료의 연간 발생량의 누적값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백서」, 각 년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연감」, 각 년도.

통계표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용 후 핵연료	1,336	2,623	4,758	5,385	5,982	6,588	6,588	7,960	8,670	12,000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중저준위 폐기물, 1990-2011



주: 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원전 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덧신, 걸레 등과 기기교체 부품 등)의 연간 발생량의 누적값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백서」, 각 년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원자력연감」, 각 년도.

통계표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저준위 고체폐기물	30	48	57	67	71	76	82	87	89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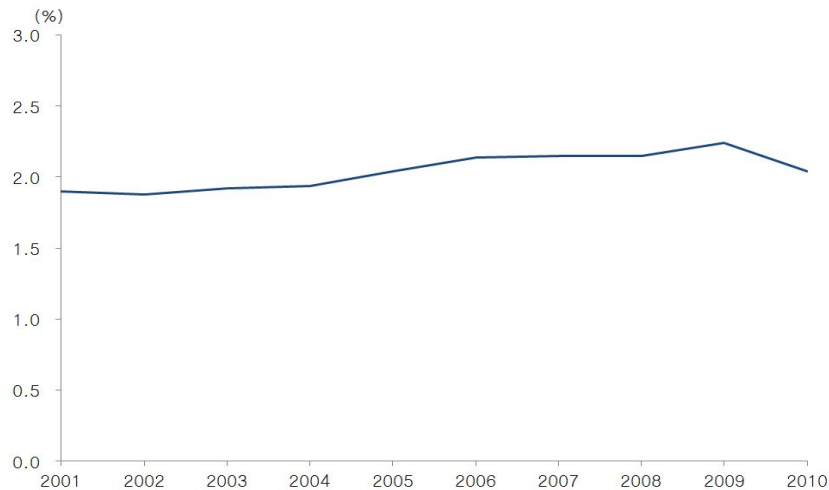
■ 국제비교지표 (없음)

3.1.4.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31408. 환경보호비용

■ 주요지표

GDP 대비 환경보호비용, 2001-2010



주: 1) 환경보호지출액을 명목GDP로 나눈 값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GDP 대비 환경보호비용은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지출액을 명목GDP에서 나눈 값을 말함.
- 측정 방법: $GDP \text{ 대비 환경보호비용} = (\text{환경보호지출액} \div \text{명목GDP}) \times 100.$

● 지표의 의의

GDP 대비 환경보호비용은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출한 금액을 명목GDP로 나눈 값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 전체가 부담한 비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환경보호비용은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지출한 금액을 집계한 것으로, 압력-상태-반응 틀에서 반응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이자 동시에 이른바 방어지출을 대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환경보호비용은 방어지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GDP 대비 환경보호비용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해설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환경보호비용은 GDP 대비 2-3%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도 2001-2010년 동안 GDP 대비 환경보호비용은 1.88-2.24%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환경보호비용은 경제주체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환경영역이나 지출형태에 따라서도 세분된다. 환경영역은 환경보호활동에 관한 국제표준분류체계에 따라 9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대기, 폐수, 폐기물의 3개 영역이 전체 환경보호비용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폐수와 폐기물 영역에서는 공공 부문이 대부분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기 영역에서는 민간기업 부문이 상당 부분의 지출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정책에서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관련되는 지표 중의 하나가 환경예산의 비중이다. 환경부 예산의 규모와 정부예산 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타 부처 환경관련 예산을 포함한 환경분야 예산의 비중은 다른 추세를 보인다. 1997년 2.82%를 정점으로 정부예산에서 환경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1.86%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에 2.11%로 약간 증가하였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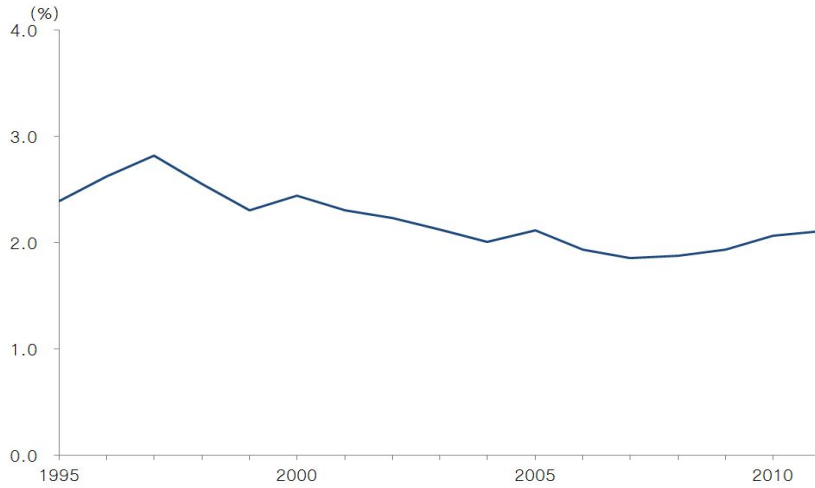
환경보호비용의 지출형태, 환경영역 및 경제주체별 구성비율, 2001-201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환경보호비용(10억원)		12,395.0	13,579.4	14,741.4	16,087.0	17,630.6	19,479.4	21,010.2	22,032.7	23,861.1	23,983.4
GDP 대비 환경보호비용(%)		1.90	1.88	1.92	1.95	2.04	2.14	2.15	2.15	2.24	2.04
지출형태별 구성비(%)	투자지출	43	44	45	46	47	48	49	49	50	46
	경상지출	60	59	59	57	56	55	54	54	53	57
	부산물	(3)	(3)	(4)	(4)	(4)	(3)	(3)	(3)	(3)	(3)
환경영역별 구성비(%)	대기보호	16	17	16	17	17	19	21	21	19	20
	폐수관리	39	39	38	36	36	36	35	35	36	34
	폐기물관리	28	27	28	28	27	26	24	25	24	26
	토양수질	3	3	3	4	4	4	4	4	4	4
	소음진동	1	1	1	1	1	1	1	1	1	1
	생태계	6	6	7	8	8	8	9	8	10	10
	방사선 보호	1	1	1	1	1	1	1	1	1	1
	연구개발	3	2	2	2	2	2	2	2	2	2
	기타	3	3	4	3	3	3	3	3	3	2
	기타	3	3	4	3	3	3	3	3	3	2
경제주체별 구성비(%)	공공	48	46	48	48	48	47	46	45	50	46
기업	31	32	31	30	31	31	32	33	33	29	
가계	3	4	4	3	3	3	3	3	3	3	
환경전문업체	18	18	19	18	18	19	18	18	19	18	

주: 1) 환경보호비용은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지출한 금액임.
 2) 부산물: 환경보호 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재활용 및 판매에 따른 부수적 수입(수입이므로 전체 지출에서 차감)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보조지표

환경예산비율, 199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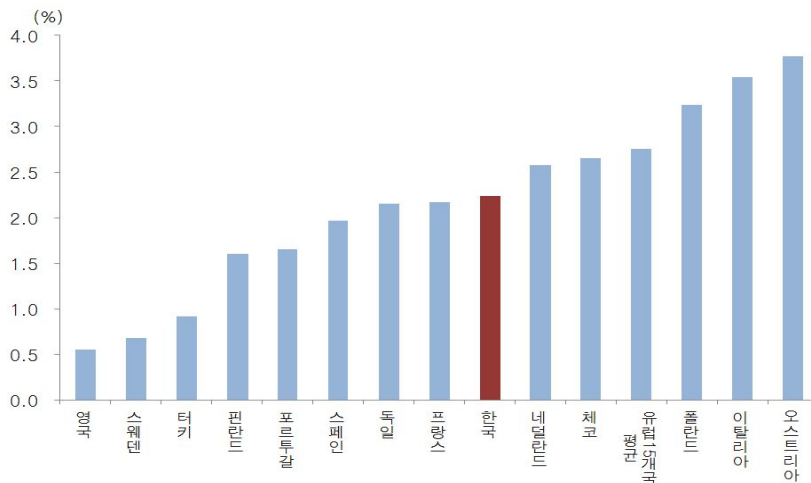


주: 1) 환경예산비율은 정부예산 대비 환경분야 예산 비율임.
 2) 환경분야 예산은 환경부 예산에 타 부처 환경 관련 예산을 합한 금액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환경예산비율	2.39	2.44	2.12	1.94	1.86	1.87	1.94	2.07	2.11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환경보호비용,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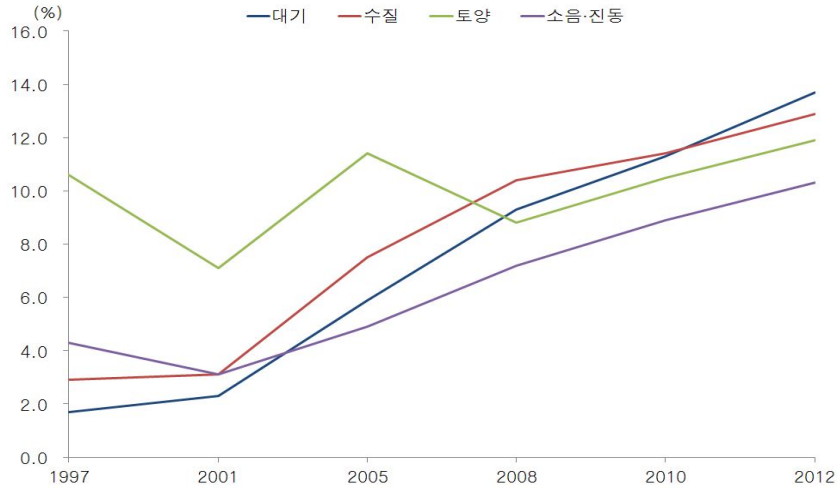
주: 1) GDP 대비 환경보호비용은 환경보호지출액을 명목GDP로 나눈 값임.
 출처: EU, Eurostat.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2.

	영국	스웨덴	터키	핀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체코	유럽15개국 평균	폴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GDP 대비 환경보호비용	0.55	0.68	0.92	1.6	1.65	1.97	2.15	2.17	2.24	2.58	2.65	2.75	3.24	3.54	3.77

31409. 환경 향상체감도

■ 주요지표

환경 향상 체감도, 1997-2012



주: 1) 환경향상체감도는 조사대상인구 중 해당 환경문제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환경향상체감도는 국민 중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각각의 환경문제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임.
- 측정 방법: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2년마다 조사되는 ‘환경체감도’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함. 설문문항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은 1년 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되었고, 응답범주는 “매우 좋아졌다”부터 “매우 나빠졌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환경향상 체감도는 “매우 좋아졌다” 또는 “약간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함.

● 지표의 의의

국민의 웰빙 또는 삶의 질 관점에서 볼 때 주관적 지표도 매우 중요하며, 국내에서 이러한 주관적 지표를 대표하는 것이 환경체감도와 국민의식조사이다. 환경체감도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5개 분야(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다. 본 지표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의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에서 1년 전에 비해 환경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 해설

환경체감도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시작한 1997년과 2001년을 비교해보면, 대기 분야를 제외한 수질, 토양, 소음·진동 분야 모두 체감도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로는 대체로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자체는 2000년대 중반까지 토양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대기 분야에 대한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들어 주관적 만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1995년 1회 조사와 2000년 2회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기, 수질, 생태계, 소음·진동, 악취 등 모든 영역에서 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이후의 조사에서는 이 5개 영역 모두에서 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특히 2003년과 2008년 동안 대기 분야와 수질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 상세 통계표

지역별 환경향상 체감도, 199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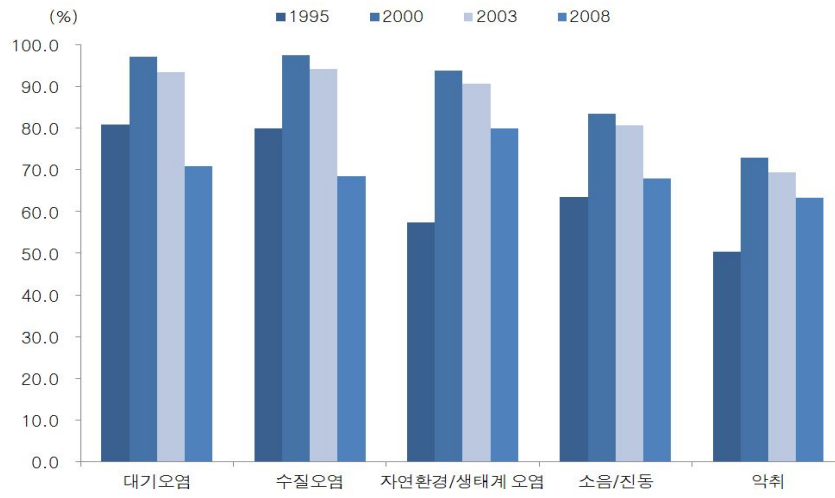
(%)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 환경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좋아짐	변화 없음	나빠짐
1997 전체	1.7	28.3	70.0	2.9	33.1	64.0	10.6	33.5	55.9	4.3	35.3	60.5	7.5	43.7	48.7
1997 도시	1.7	23.8	74.5	3.2	32.3	64.5	12.2	32.7	55.2	4.5	32.6	62.9	8.3	42.5	49.2
1997 농촌	1.7	46.7	51.5	1.9	36.1	62.0	4.3	36.9	58.7	2.9	46.2	50.9	4.4	48.6	47.0
2001 전체	2.3	45.0	52.6	3.1	51.4	45.4	7.1	44.4	48.4	3.1	39.5	57.3	6.5	56.4	37.1
2001 도시	2.4	42.1	55.5	3.2	52.0	44.8	7.9	43.7	48.4	3.3	36.3	60.4	7.0	55.4	37.6
2001 농촌	2.0	56.7	41.3	2.8	49.1	48.1	3.8	47.6	48.6	2.3	52.4	45.3	4.6	60.4	35.0
2005 전체	5.9	59.9	34.2	7.5	65.3	27.3	11.4	57.8	30.8	4.9	52.2	42.9	10.6	60.1	29.3
2005 도시	5.7	59.4	34.8	7.3	67.3	25.3	12.0	58.5	29.6	4.8	51.2	43.9	11.5	60.3	28.3
2005 농촌	6.7	62.2	31.1	8.0	55.8	36.2	8.6	54.8	36.6	5.3	56.5	38.3	7.0	59.1	33.9
2008 전체	9.3	51.7	39.0	10.4	58.2	31.4	8.8	55.6	35.6	7.2	46.0	46.8	13.8	51.8	34.5
2008 도시	9.7	50.9	39.3	11.2	59.0	29.8	9.4	56.1	34.5	7.5	44.7	47.8	15.3	51.3	33.4
2008 농촌	7.3	54.9	37.8	7.2	54.3	38.5	6.0	53.4	40.6	5.8	52.1	42.1	6.9	54.0	39.1
2010 전체	11.3	74.8	13.9	11.4	78.0	10.6	10.5	75.5	14.0	8.9	69.9	21.2	19.8	70.0	10.2
2010 도시	11.3	74.8	13.8	11.4	78.6	10.0	10.7	76.3	13.0	8.8	69.9	21.3	20.7	69.2	10.1
2010 농촌	11.3	74.5	14.2	11.5	75.2	13.3	9.9	72.0	18.1	9.4	70.1	20.5	16.0	73.6	10.4
2012 전체	13.7	75.0	11.3	12.9	78.6	8.5	11.9	75.9	12.2	10.2	69.2	20.5	25.0	67.3	7.7
2012 도시	13.5	75.3	11.3	12.7	79.5	7.8	11.8	76.5	11.7	10.0	69.2	20.7	26.0	66.4	7.6
2012 농촌	14.8	73.5	11.7	13.8	74.6	11.5	12.5	72.8	14.7	11.6	69.0	19.5	20.6	71.7	7.7

주: 1) 환경향상체감도는 조사대상인구 중 해당 환경문제가 1년 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보조지표

분야별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 1995-2008



주: 1)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도는 조사대상인구 중 해당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환경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2008.

통계표

	1995	2000	2003	2008
대기오염 심각	80.9	97.1	93.4	70.8
수질오염 심각	80.0	97.4	94.2	68.4
자연환경/생태계 오염 심각	57.3	93.7	90.6	79.9
소음/진동 심각	63.4	83.4	80.6	67.9
악취 심각	50.3	72.9	69.4	63.3

■ 국제비교지표 (없음)

3.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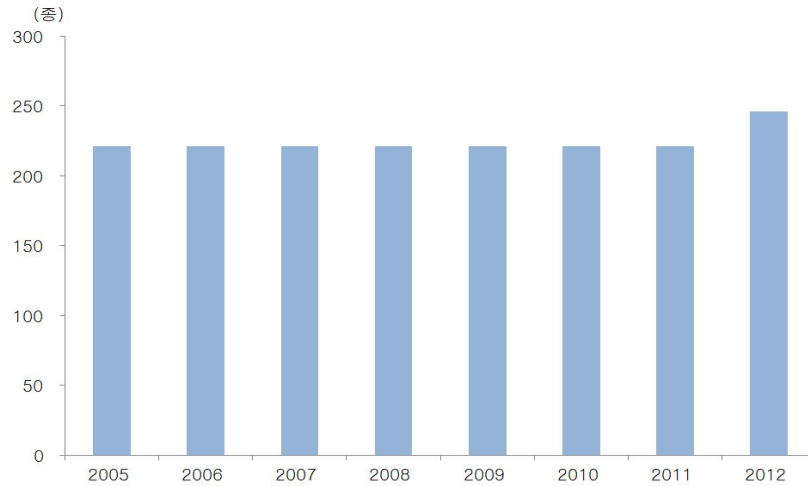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생태 환경과 자연 자원	생물다양성	• 멸종위기종	• 야생생물유전자원	• 멸종위기종
		• 자생생물종	• 농업종자유전자원	• 자생생물종
	토지산림	• 경지면적		• 1인당 경지면적
		• 생태경관보존면적		• 생태보호지역면적
		• 유기농경작면적률	•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 유기농경작면적률
		• 산림면적	• 산지타용도전환면적	• 산림지역면적
	해양수산	• 총허용어획량소진율		
		• 연안습지면적	• 해양보호구역면적	• 습지면적
	수자원	• 1인당 취수량	• 지하수이용량	• 1인당 상수도공급량
	에너지	• 1차에너지공급량	• 1인당 에너지소비량 •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	• 1차에너지공급량
		• 전력생산량	• 1인당 전력소비량 • GDP 대비 전력소비량	• 전력생산량
		• 재생가능에너지비율	• 재생가능에너지시설용량 • 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	• 재생가능에너지비율

3.2.1. 생물다양성

32101. 멸종위기종

■ 주요지표

멸종위기종수, 2005-2012



주: 1) 멸종위기종이란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종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멸종위기종은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종을 말하며 위협 정도에 따라 두 등급으로 나뉨.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II급 :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임.
- 측정 방법: 종별 생물학적 특성인 종 분류, 생활사, 분포, 생육지 특성을 파악한 자료를 기초로 종의 개체 수나 개체군 수, 종 특이적 서식지 파괴 현황, 전반적인 분포 현황, 출현 범위, 위협 요인, 종 특이적인 생물학적 특성 등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진과 자문위원이 3차례에 걸쳐 평가 후 종 선정. 종의 지정해제 또한 종 지정과 같은 절차를 거침.

● 지표의 의의

멸종위기종수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척도의 하나이다. 특정한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할 경우 그 종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 영향은 먹이사슬 전반으로 파급되어 결국 생태계 내 생물종 다양성을 저해하여 생태계의 평형을 파괴한다. 종 수준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보존될 때 그 종이 존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을 지표로 관리하는 최종 목적은 멸종위기종 지정이 아니라 해제에 있으며 멸종위기종의 보호 관리를 통해 생물 종의 멸종을 예방하는 것이다. 더불어 멸종위기종을 적극적으로 증식·복원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여야 하는 것도 주요 목적 중 하나다. 그러나 생태환경 지표는 국가마다 생태환경의 차이가 커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 해설

1989년(92종), 1993년(179종), 1996년(203종)에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식물류만을 지정하여 보호하였고 1998년(194종)부터 현재와 동일한 분류군이 지정되었다. 이처럼 2005년 이전까지는 범주가 계속 변경되어 자료의 연속성이 없다. 2005년(221종)부터는 동일한 범주 정의 하에 매년 종의 특성과 서식 분포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11년까지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종은 없었다. 2012년에는 신규 지정, 해제, 재지정 종으로 인해 246종으로 지정 종수에 변화가 있었다.

신규 지정된 종은 경기·충청지역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수원청개구리’, 환경부 지정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서 복원중인 ‘따오기’ 및 개체수가 적은 ‘금자란’ 등 57종이다. 해제 종은 절멸된 ‘바다사자’,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연간 60~100만 개체),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는 ‘황기’ 등 32종이다. 재지정 종은 호랑이, 황새 및 미호종개 등 189종이며, 개체 수 및 개체군 수가 적거나 분포지역이 제한되어 있어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멸종위기 종으로 재지정 되었다.

야생생물 유전자원은 기후 변화, 환경오염, 개발에 의한 야생 서식지 감소, 외래종의 도입, 보신을 위한 밀렵 등으로 야생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 생물 유전자원을 보유하여 종을 증식, 복원하려는 국가적 노력을 보여준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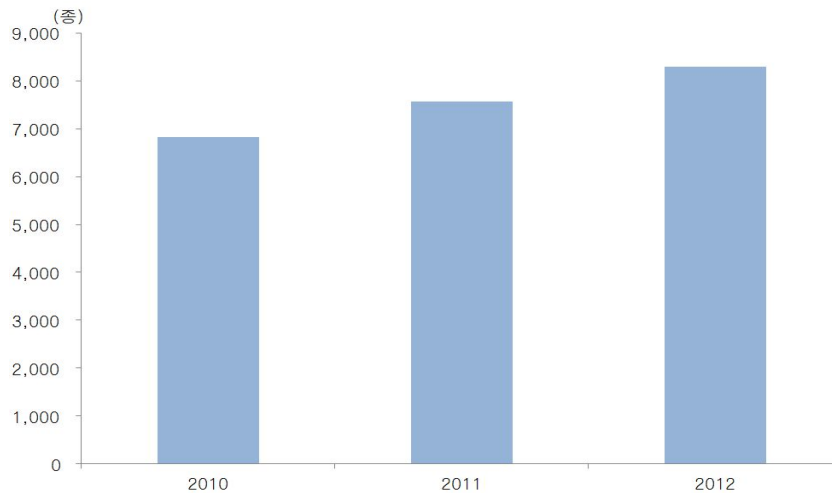
멸종위기종수, 2005-2012

(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21	221	221	221	221	221	221	246
포유류	22	22	22	22	22	22	22	20
조류	61	61	61	61	61	61	61	61
양서/파충류	6	6	6	6	6	6	6	7
곤충류	20	20	20	20	20	20	20	22
어류	18	18	18	18	18	18	18	25
무척추동물	29	29	29	29	29	29	29	31
식물	64	64	64	64	64	64	64	77
해조류	1	1	1	1	1	1	1	2
고등균류	-	-	-	-	-	-	-	1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보조지표

야생생물 유전자원 종수, 2010-2012



주: 1)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유전자원이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로 유전물질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과 같은 생체 또는 DNA와 같은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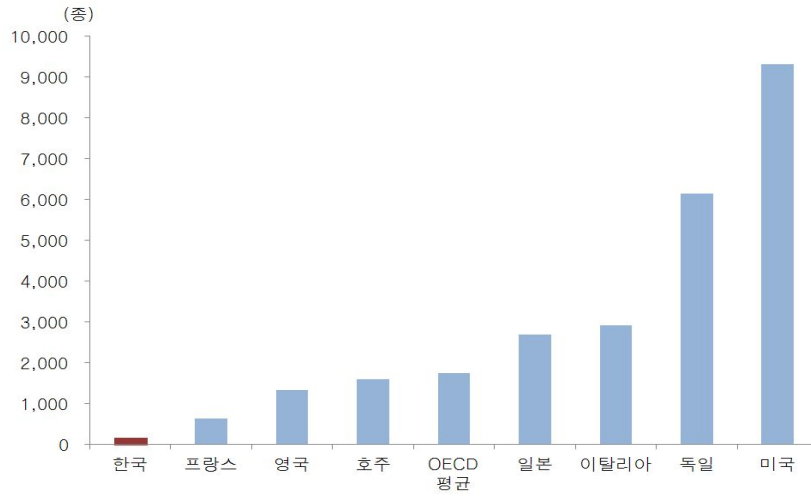
출처: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 유전자원 보유현황」, 각 년도.

통계표

	2010	2011	2012
야생생물 유전자원	6,820	7,574	8,300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멸종위기종수, 2008



주: 1) 멸종위기종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이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 '멸종 위기종'(endangered), '취약한 종'(vulnerable)을 포함함.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동식물과는 지정 기준이 다름.
출처: OECD,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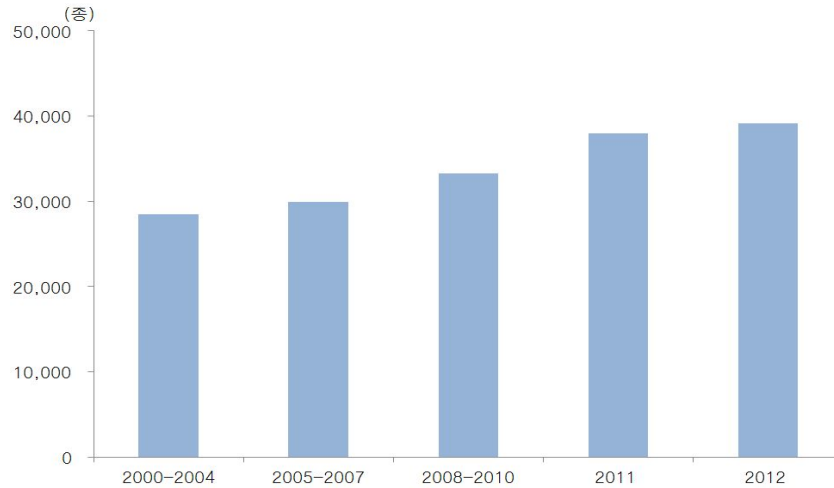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	프랑스	영국	호주	OECD	일본	이탈리아	독일	미국
멸종 위기종	167	635	1,336	1,590	1,736	2,692	2,910	6,137	9,294

32102. 자생생물종

■ 주요지표

자생 생물종수, 2000-2012



주: 1) 자생 생물종이란 대한민국 영내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모든 생물 분류군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자생 생물종이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여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을 통칭하며, 분류학적으로 종 혹은 종 이하의 분류군을 총망라하는 것임. 한국의 자생 생물종은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지리적 개념에서 대한민국 영내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모든 생물 분류군으로 정의함.
- 측정 방법: 탐색 조사를 통해 기존 문헌에 보고된 종의 표본을 확보하거나 미기록종/신종을 발굴하여 자생 생물 종으로 등록

● 지표의 의의

2010년에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자국 내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되, 가입국에 대해 자국 생물종의 자세한 목록 및 주기적인 감시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 생물종에 대한 기초 현황 파악을 통해 생물자원의 이용,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및 멸종 위기 종 증식 복원 대책 수립 등 생물자원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해설

한국의 생물종수는 국토 면적과 환경 여건이 유사한 나라(영국, 일본 등)와 비교·추정할 때 약 10만 종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6년 최초 문헌조사 결과 한국에서 자생하는 것으로 기록된 종은 28,462종이었으며, 2005년 ‘한반도 고유 생물종 확인 및 DB 구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29,916종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자생 생물종 조사·발굴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2008년 33,253종, 2011년에는 38,011종, 2012년 39,150종으로 등록된 종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물은 곤충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50만의 생물종이 알려져 있는 데 그 중 곤충이 100만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곤충(14,145종)은 2012년 전체 자생 생물종의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자생종수(24,545종)는 국토 면적과 환경 여건이 유사한 영국(49,465종)의 약 1/2, 일본(69,043종)의 약 1/3 수준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자생생물종 조사·발굴 사업이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2007년에는 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보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립생물자원관이 건립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생 생물에 대한 조사·연구가 장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확인되는 자생 생물종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생태환경 지표는 각 나라의 생태적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그 외 국가와의 비교 및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생 생물종 조사는 생물 현황을 파악한다는 생태학적 가치 외에도 생물에 대한 국가적 주권 확대의 기초 자료를 축적한다는 의미가 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 각 국에 등록된 생물 유전자원은 이용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생물 유전자원, 그 중에서도 식량 안보를 위한 식량 농업 유전자원의 보존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와 종자 유전자원에 대한 소유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농업종자 유전자원(보조지표) 확보에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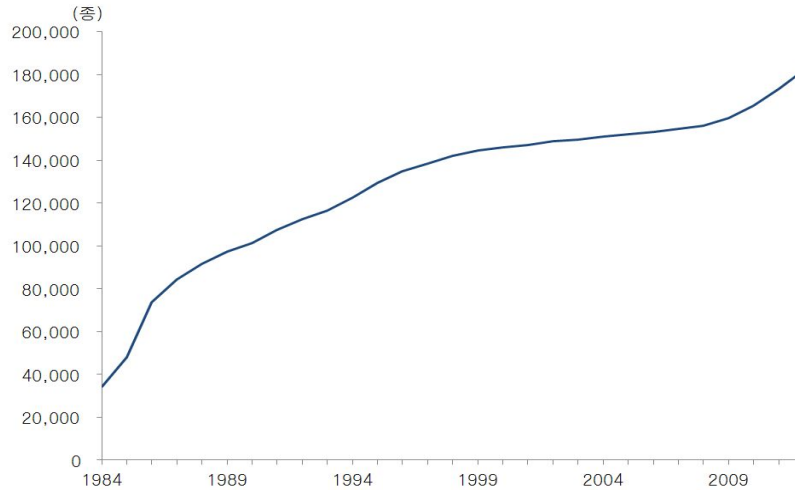
자생 생물종수, 2000-2012

	(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28,462	28,462	28,462	28,462	28,462	29,916	29,916	29,916	33,253	33,253	33,253	38,011	39,150
척추동물	1,359	1,359	1,359	1,359	1,359	1,528	1,528	1,528	1,898	1,898	1,898	1,884	1,889
곤충	11,853	11,853	11,853	11,853	11,853	11,853	11,853	11,853	12,982	12,982	12,982	13,734	14,145
무척추동물(곤충제외)	3,451	3,451	3,451	3,451	3,451	4,736	4,736	4,736	6,288	6,288	6,288	6,167	6,468
식물	4,662	4,662	4,662	4,662	4,662	4,662	4,662	4,662	4,130	4,130	4,130	5,241	5,281
균류/지의류	1,625	1,625	1,625	1,625	1,625	1,625	1,625	1,625	2,078	2,078	2,078	4,103	4,113
원생생물	736	736	736	736	736	736	736	736	842	842	842	1,374	1,573
조류(algae)	3,557	3,557	3,557	3,557	3,557	3,557	3,557	3,557	3,816	3,816	3,816	4,652	4,672
원핵생물(남조류, 박테리아)	1,219	1,219	1,219	1,219	1,219	1,219	1,219	1,219	1,219	1,219	1,219	856	1,009

주: 1) 자생 생물종이란 대한민국 영내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모든 생물 분류군임.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 보조지표

농업종자 유전자원 종수, 198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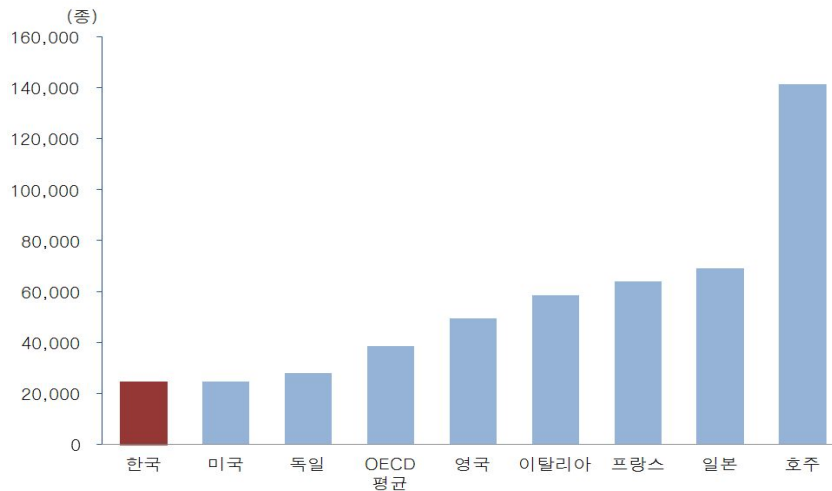
주: 1) 농업종자 유전자원이란 환경적, 생태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자체가 보존될 필요가 있는 유용한 자원이면서 동시에 식량과 농업에 위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식물로부터 유래된 모든 유전물질임.
출처: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 「유전자원 국가등록 현황」. 각 년도.

통계표

연도	농업종자 유전자원 종수	연도	농업종자 유전자원 종수	연도	농업종자 유전자원 종수
1984	34,285	1994	122,517	2004	151,082
1985	48,026	1995	129,529	2005	152,269
1986	73,742	1996	135,005	2006	153,306
1987	84,280	1997	138,470	2007	154,695
1988	91,565	1998	142,038	2008	156,282
1989	97,216	1999	144,410	2009	159,767
1990	101,433	2000	146,154	2010	165,303
1991	107,443	2001	147,192	2011	173,217
1992	112,645	2002	148,977	2012	182,013
1993	116,624	2003	149,742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자생 생물종수, 2008



주: 1) 각 국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을 파악한 것은 아니므로 서식 실태가 알려진 종을 의미. 국가 별로 생물 종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음. 미국은 외래 종을 포함. 프랑스와 독일은 멸종된 종은 제외. 한국은 멸종된 종을 포함하며 주요 지표인 자생 생물 종과는 범주가 다름.
출처: OECD.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 <http://stats.oecd.org>. 2009.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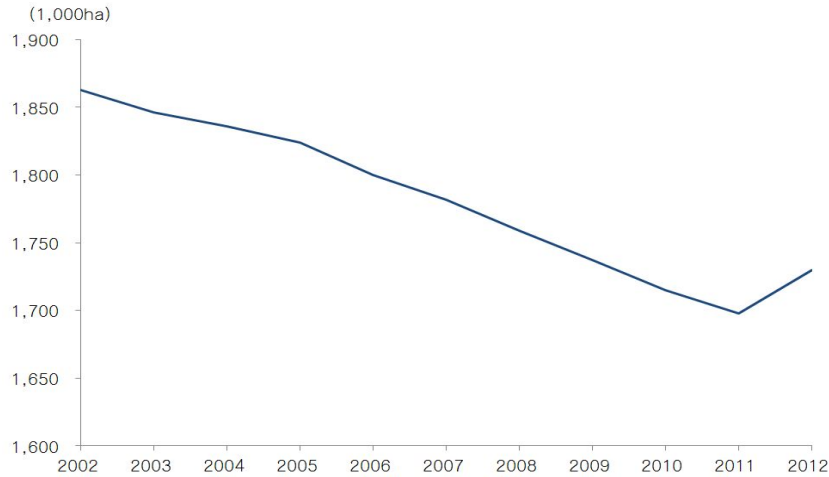
	호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OECD 평균	독일	미국	한국
자생생물종	141,515	69,043	64,115	58,597	49,465	38,491	27,866	24,590	24,545

3.2.2. 토지산림

32203. 경지면적

■ 주요지표

경지면적, 2002-2012



주: 1) 경지면적은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토지 면적임.
출처: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각 년도.
한국농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경지면적이란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도 재배가 가능한 토지의 면적을 말함. 경지에는 논과 밭, 수리답을 포함함.
- 측정 방법: 농업정책수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내 농지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기반과에서 매년 한 차례씩 측정함.

● 지표의 의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 확산 현상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의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경작가능 토지는 식량자급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담수, 자연보존, 경관과 관련하여서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작지는 우선 식량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경작지는 빗물을 담아두는 담수 기능도 겸하고 있어 한국처럼 특정 시기에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는 홍수를 막는 역할도 한다. 자연보존 기능도 빼놓을 수 없다. 경작지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면서 다양한 먹이사슬을 구성하여 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 이밖에 인공 시설물 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관을 제공하여 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제공한다.

● 해설

한국의 경지면적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1년 187만 6,000ha에서 2011년 169만 8,000ha로 지난 10년간 총 17만 8,000ha 감소하였고, 연평균 1만 8,000ha씩 줄어들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의 경지면적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증가면적은 3만 600ha이고, 감소면적은 47만 9,000ha로 순 감소면적은 17만 3,000ha로 나타났다. 경지면적이 줄어든 이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물건축 7만 9,000ha, 유휴지 7만 4,000ha, 기타 2만 6,000ha로 나타났다. 2012년 들어 경지면적이 증가한 이유는 원격탐사 방식으로 조사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논밭의 경지면적 가운데 논은 2002년 113만 8,000ha에서 2011년 현재 96만 ha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밭은 72만 4,000ha에서 73만 8,000ha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과 밭을 합친 전체 경지면적은 2002년 186만 3,000ha에서 2011년 현재 169만 8,000ha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경지면적을 살펴보면, 호주, 미국, 프랑스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한국은 가장 낮았다.

● 상세 통계표

1인당 경지면적, 200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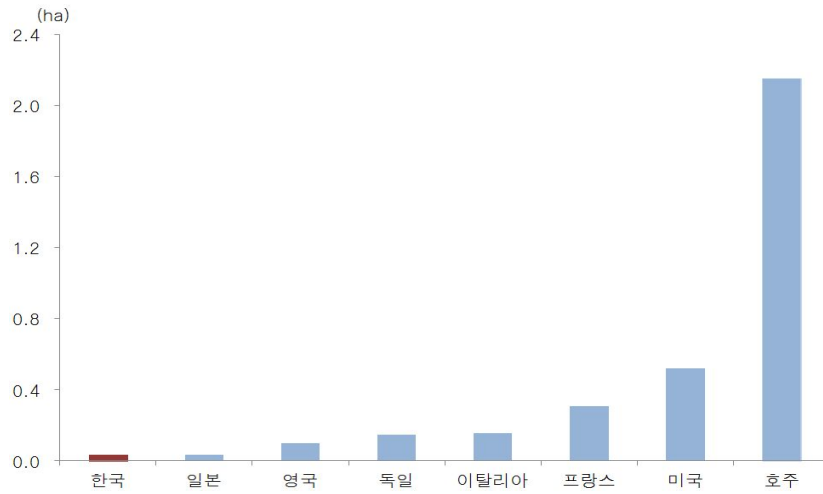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경지면적(1,000ha)	1,863	1,846	1,836	1,824	1,800	1,782	1,759	1,737	1,715	1,698
논	1,138	1,127	1,115	1,105	1,084	1,070	1,046	1,010	984	960
밭	724	719	721	719	716	712	713	727	731	738
1인당 경지면적(ha)	0.03912	0.03857	0.03822	0.03789	0.03721	0.03667	0.03594	0.03532	0.03471	0.03411

출처: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각 년도; 「장래추계인구」, 2011.
한국농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각 년도.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1인당 경지면적, 2011



주: 1) 경지면적은 경작적합지(arable land) 및 영구경작지(permanent crops)의 면적임.

출처: UN, FAOSTAT.

OECD,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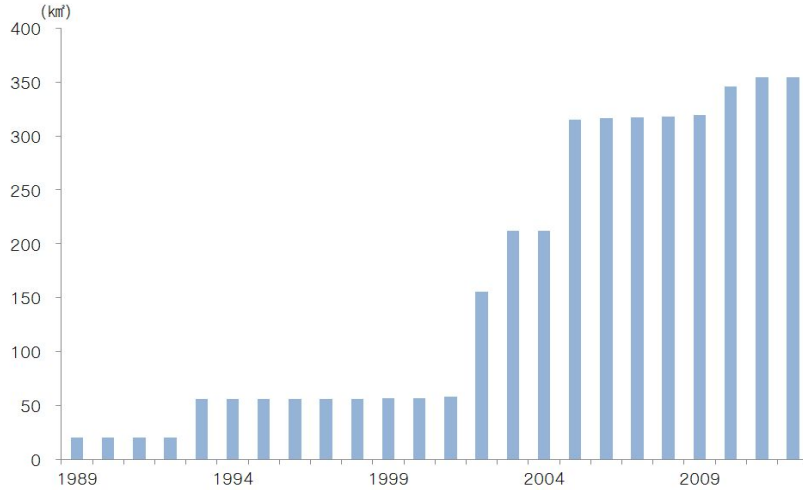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1인당 경지면적	0.03	0.04	0.10	0.15	0.15	0.31	0.52	2.15

32204. 생태경관보존면적

■ 주요지표

생태경관보존지역 면적, 1989-2012



주: 1)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함.

2) 두 해에 걸쳐 지정된 장소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 기준으로 합침.

출처: 환경부,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현황」, 2012.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고 있음
- 측정 방법: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근거하여 지정안을 마련한 후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함

● 지표의 의의

생태적 관점에서 절대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생태보존지역이 야생동식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건강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OECD의 생태보호지역이 생명체의 절대보호를 의미한다면, 우리의 생태경관보존지역은 자연경관까지 포함하여 보고 있다. 이는 산이 많은 한국의 특징상 다양한 자연풍경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생명체는 물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에게도 중요한 자원임에 틀림없다.

● 해설

1999년부터 시작된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은 초창기에는 큰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1999년 3개 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2년 8개 지역이 선정되며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에 환경부에서만 지정하던 보존지역을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2009년을 기점으로 지정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 개수 및 면적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개수와 면적이 증가한 해는 2002년이다. 한 해 동안 총 8개 지역에 97.3km²의 면적이 보존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한편 2010년 한 해에만 운문산 한곳에서 26.4km²의 보전 지역이 새로 지정되었다. 수달, 하늘다람쥐, 담비, 산작약 등 멸종 위기종의 서식처라는 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OECD 주요 국가의 생태보호지역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1,155,553km²)이 가장 넓었고, 2위는 호주(814,699km²)였다. 그 다음은 독일, 프랑스, 영국 순서였고, 한국(5,879km²)은 가장 적었다.

● 상세 통계표

생태경관보존지역 지정수 및 면적, 198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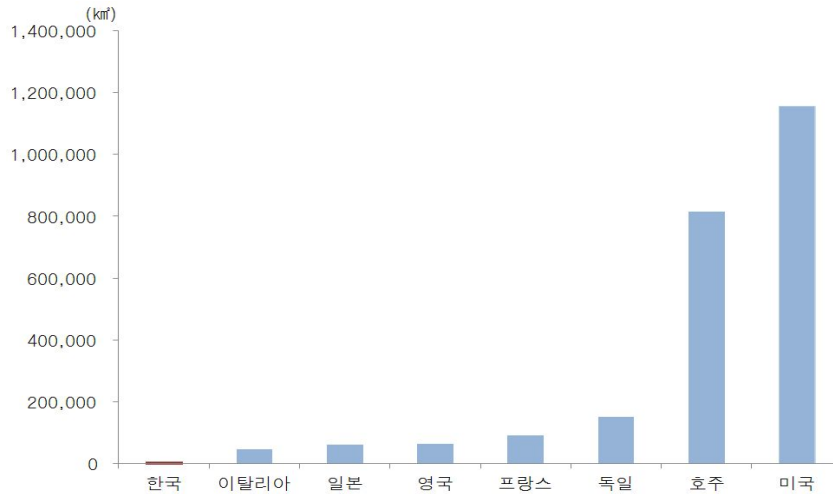
연도	누적개수(개)	누적면적(km ²)	연도	누적개수(개)	누적면적(km ²)
1989	1	20.2	2001	8	58.3
1990	1	20.2	2002	16	155.6
1991	1	20.2	2003	18	211.7
1992	1	20.2	2004	20	212.2
1993	4	56.2	2005	23	315.2
1994	4	56.2	2006	26	316.5
1995	5	56.2	2007	28	316.9
1996	5	56.2	2008	30	318.1
1997	5	56.2	2009	33	319.7
1998	5	56.2	2010	34	346.0
1999	6	56.5	2011	35	354.4
2000	7	56.5	2012	36	354.5

주: 1) 두 해에 걸쳐 지정된 장소의 경우 최초 지정년도 기준으로 합침.
출처: 환경부,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현황」, 2012.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생태보호지역 면적, 2010



출처: UNEP-WC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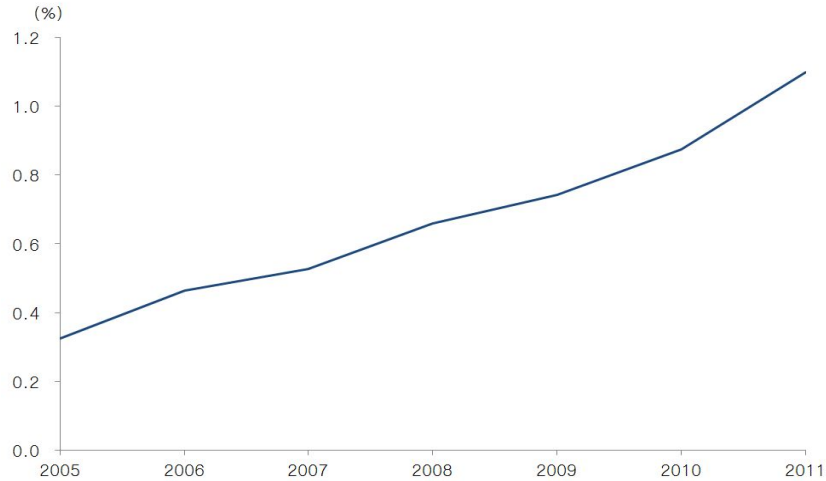
통계표

	한국	이탈리아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
생태보호지역면적	5,879	45,370	61,641	64,851	90,815	151,692	814,699	1,155,553

32205. 유기농경작면적률

■ 주요지표

유기농 경작면적률, 2005-2011



주: 1) 유기농 경작면적률은 총 경작면적 중 유기농 경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UN, FAOSTAT.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유기농 경작면적률은 총 경작면적 중 유기농 경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임. 유기농 경작은 자연 토비를 사용하거나 농약을 쓰더라도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농업을 의미함. 그러나 이밖에 다른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유기농업이란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를 주지 않는 농사법을 말함.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자연과의 공생, 자연과 작물과 인간의 순환 관계, 전통 농법의 복원까지 고려하는 농사법임. 한국에서는 국립 농업과학원 유기농정보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로 관리하고 있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 등 합성된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 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태계를 유지 및 보전해야 함
- 측정 방법: $\text{유기농 경작면적률} = (\text{총 경작면적} \div \text{유기농 경작면적}) \times 100.$

● 지표의 의의

최근 들어 웰빙붐을 타고 ‘유기농업’으로 대표되는 친환경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기존의 화학비료에 의존한 대량생산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곧 화학비료를 줄여 땅의 힘을 되찾고 보다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 2010년부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향후 유기농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총경작지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총경작지 대비 유기농 경작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친환경농업을 대표하는 지표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해설

유기농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기농 경작면적 자체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체 경작지 가운데 유기농 경작지가 차지하는 비중, 즉 유기농 경작면적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농 경작면적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5년 0.32%였던 비중이 2011년에는 1.09%까지 증가했다.

유기농 경작면적률과 더불어 중요한 지표는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이다. 유기농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농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의 증가 여부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OECD 주요국의 유기농 경작면적률을 살펴보면 이탈리아(7.8%), 독일(5.9%), 영국(4.1%), 등의 순서였고, 한국(0.9%)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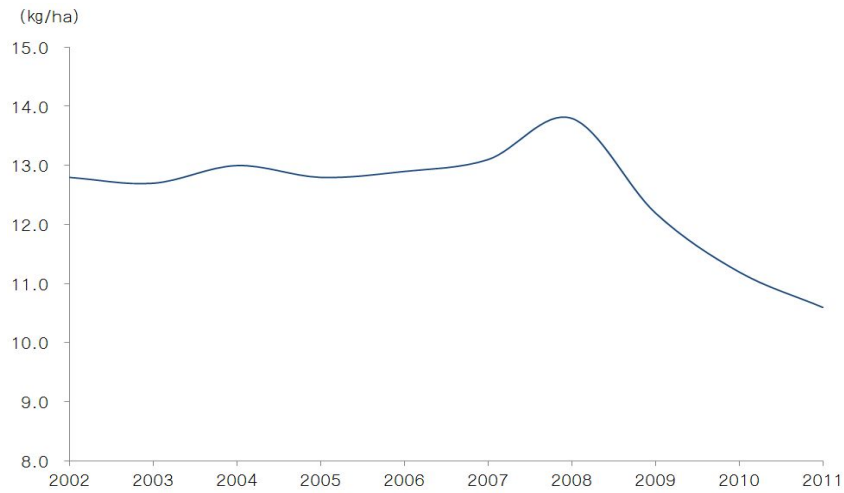
유기농 경작면적률, 2005-201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경작지 면적(1,000ha)	1,881	1,858	1,840	1,817	1,795	1,773	1,756
유기농 경작지 면적(1,000ha)	6.1	8.6	9.7	12.0	13.3	15.5	19.3
유기농 경작면적률(%)	0.32	0.46	0.52	0.66	0.74	0.93	1.09

주: 1) 유기농 경작면적률은 총 경작면적 중 유기농 경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UN, FAOSTAT.

■ 보조지표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200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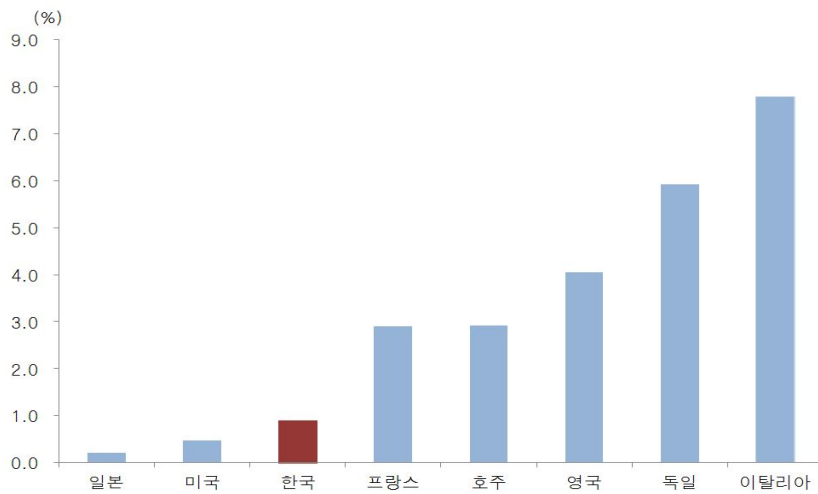
주: 1) 단위면적(1ha)당 농약사용량은 해당연도 농약출하량을 전체 경지이용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함.
출처: 한국작물보호협회, 「농약연보」, 각 년도.

통계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12.8	12.7	13.0	12.8	12.9	13.1	13.8	12.2	11.2	10.6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유기농 경작면적률, 2010



주: 1) 유기농 경작면적률은 총 경작면적 중 유기농 경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UN, FAOSTAT.

통계표

	일본	미국	한국	프랑스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유기농 경작면적률	0.2	0.5	0.9	2.9	2.9	4.1	5.9	7.8

32206. 산림면적

■ 주요지표

산림면적, 2003-2010



출처: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산림은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산이나 숲을 말함. 한국의 산림면적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구분됨.
- 측정 방법: 산림청 산림기본통계를 통해 작성. 임목축적 산출방식은 ‘국가산림자원조사’ 표본점 조사결과 활용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산림자원조사’ 통계작성 주기와 동일한 5년 주기로 변경되었음.

● 지표의 의의

산림은 자원으로 뿐만 아니라 각종 공해와 오염을 예방하는 허파역할을 한다. 또한 산림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크게 늘어난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곧 삼림의 비율을 높고 보전이 잘된 국가일수록 기후변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산림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사유림의 경우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산림면적이 환경을 대표하는 지표임을 감안하면 사유림에 대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산림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 해설

한국의 산림(637만ha)이 1년간 제공하는 공익기능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109조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3% 가량을 흡수하고 있다. 이 밖에 대기정화, 수원확보, 산림휴양, 토사유출 및 붕괴방지, 산림정수, 동식물보호 등의 기능까지 포함하면 산림이 제공하는 혜택은 많다. 그러나 한국의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8년 간 평균 약 4,625ha 감소하였다. 감소 이유는 도로, 대지, 공장용 도로 건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목축적은 증가 추세다.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125.6m³로 OECD 평균인 121.4m³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독일(315.3m³), 미국(154.9m³)에 비해서는 아직 낮다.

소유별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을 살펴보면 사유림의 비중이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현재 사유림의 면적은 433만 8,000ha로 전체 산림면적 636만 9,000ha의 68%에 이른다. 사유림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임목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지의 타용도 전환이란 산지를 택지, 공장, 관광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은 산이 많은 산림국가다. 과거 산림은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산지가 파괴되면 그 보호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산지의 타용도 전용은 생태자원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산지의 타용도 전환면적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는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OECD 주요국의 산림지역 면적을 보면 미국(3억 440만 5,000ha)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호주(1억 4,837만 6,000ha), 일본(2억 498만 8,000ha) 순서이다. 한편 한국의 산림면적은 621만 5,000ha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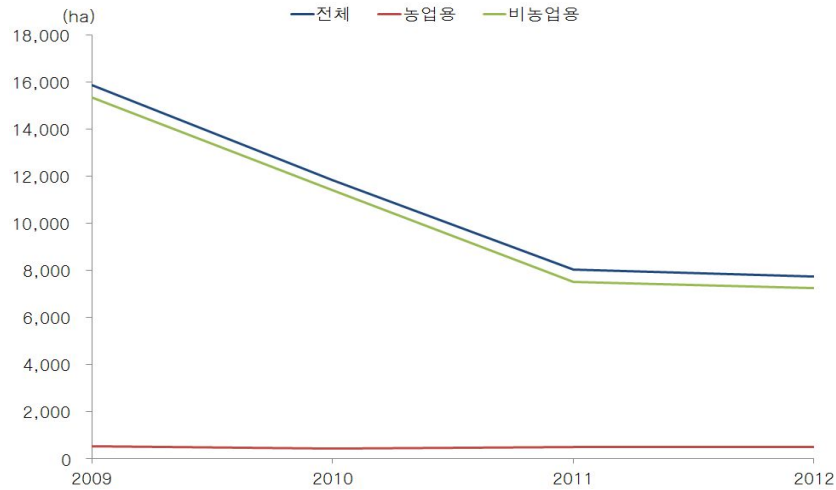
소유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2003-201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6,874	6,889	6,900	6,915	7,006	7,034	7,067	7,169
산림 면적(1,000ha)	6,406	6,400	6,394	6,389	6,382	6,375	6,370	6,369
임목축적(100만m ³)	468	489	506	526	624	659	697	800
국유림	1,599	1,618	1,637	1,656	1,696	1,714	1,737	1,772
산림 면적(1,000ha)	1,457	1,470	1,484	1,497	1,509	1,518	1,530	1,543
임목축적(100만m ³)	142	148	153	159	187	196	207	229
공유림	527	528	529	531	536	538	541	548
산림 면적(1,000ha)	490	489	489	489	489	488	488	488
임목축적(100만m ³)	37	39	40	42	47	50	53	60
사유림	4,749	4,744	4,733	4,728	4,774	4,782	4,889	4,849
산림 면적(1,000ha)	4,459	4,441	4,420	4,403	4,384	4,369	4,352	4,338
임목축적(100만m ³)	290	303	313	325	390	413	437	511

출처: 산림청, 「산림기본통계」, 각 년도.

■ 보조지표

산지의 타용도 전환면적, 2009-2012



주: 1) 산지의 타용도 전환이란 산지를 택지, 공장, 관광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행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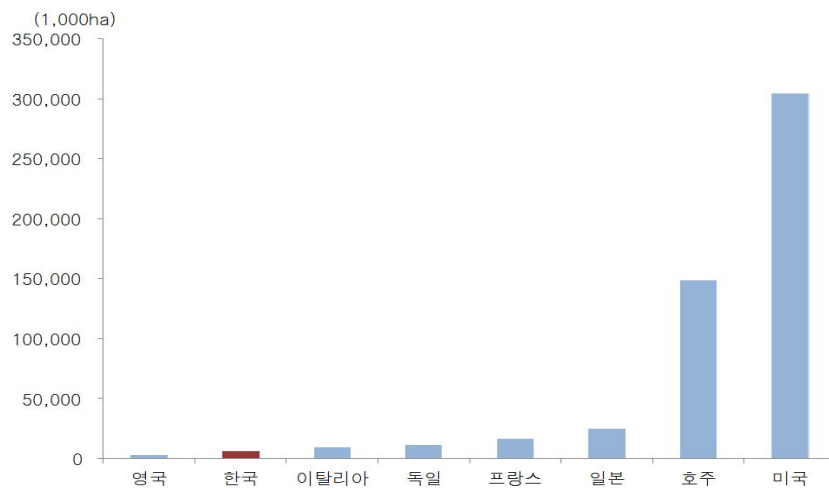
출처: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표

	2009	2010	2011	2012
전체	15,877	11,851	8,026	7,753
농업용	535	450	499	504
비농업용	15,342	11,401	7,527	7,249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산림지역면적, 2011



출처: UN, FAOSTAT.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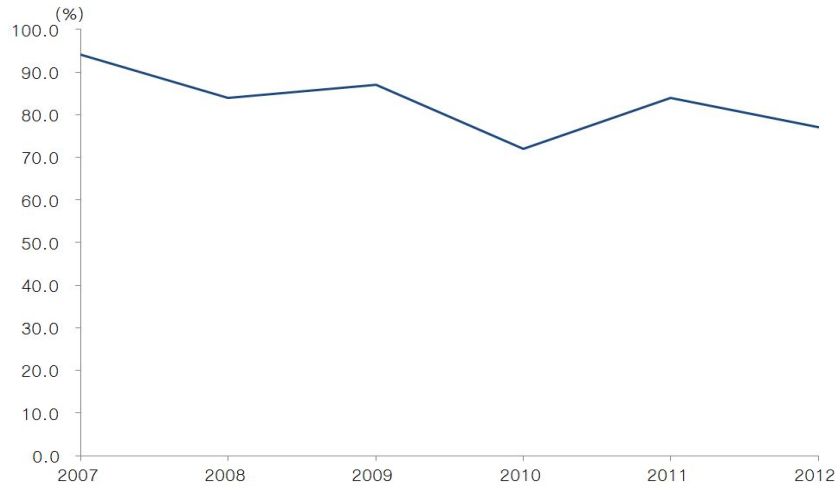
	영국	한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미국
산림지역면적	2,888	6,215	9,227	11,076	16,002	24,988	148,376	304,405

3.2.3. 해양수산

32307. 총허용어획량소진율

■ 주요지표

총허용어획량 소진율, 2007-2012



주: 1) 총허용어획량 소진율은 총허용어획량 대비 실제 어획량의 비율임. 총허용 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이란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학적, 사회경제학적으로 허용된 총량임.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TAC 소진현황」,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총허용어획량 소진율은 총허용어획량 대비 실제 어획량의 비율임. 총허용 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이란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학적, 사회경제학적으로 허용된 총량임.
- 측정 방법: 총허용어획량은 자원평가를 통해 도출된 적정어획사망계수, 최대지속적 생산량 등을 이용해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cceptable Biological Catch, ABC)을 산출한 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추가로 고려해 산정함. 소진량의 경우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은 수협 위판장에서만 판매를 하게 되어있어 수협 위판기록을 통해 측정함.

● 지표의 의의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원에 미치는 어획의 영향을 평가하여 효과적인 어획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총허용 어획량 지정 제도를 통해 매년 자원 상태를 파악하고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종별 연간 최고 어획량을 설정한다. 이는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수산정보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 해설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은 1999년 4개 종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11개 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종 선정은 자원이 감소하여 관리가 필요한 종, 자원 관리가 용이한 종,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 사회 경제적으로 대중적인 종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중앙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심의 후 결정한다. 제도 시작 시에는 정어리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리 종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후 정어리 어획량이 매우 낮아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어졌고 2006년 이후 대상 종에서 제외되었다. 반대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참홍어와 도루묵은 2009년부터 관리종으로 선정되었다.

총허용어획량 소진율을 보면 2007년 오징어(105%), 2008년 고등어(103%), 2009년 오징어(102%)는 실제 어획량이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했다. 이와 같이 종별로는 실제 어획량이 총허용어획량을 넘는 해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넘는 해는 없었다. 2009년을 기점으로 평균을 웃돌던 고등어와 꽃게의 소진율이 평균 소진율 이하로 떨어졌다. 오징어는 반대로 2009년까지 평균 소진율을 밑돌았으나 이후 평균 소진율보다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꽃게의 소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총허용어획량의 계속적 증가 때문이다. 2007년 총허용어획량은 3,350톤에서 2012년 1만 4,900톤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나 실제 어획량은 2.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의 모든 어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이 지속가능한 어업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에 한해서는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총허용어획량 지정 대상 어종이 증가하고 이를 허용어획량 안에서 관리한다면 지속가능한 어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는 주로 어족 자원량(fish stock)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바다에는 어류의 종에 따라 서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구분이 되는 지형적 경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종이지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개체군(subpopulation)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내 어족 자원의 변화를 관찰하고 관리한다. 하지만 한국은 어족 자원량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아 동해, 서해, 남해 각 해역의 특성에 따른 어족 자원과 어업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류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추후 지속가능한 어업과 생태계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상세 통계표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소진율, 1999-2012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평균)	93	51	81	72	70	89	36	66	94	84	87	72	84	77
고등어	115	49	95	79	74	98	29	61	90	103	69	52	79	73
전갱이	47	68	88	100	100	99	90	94	50	55	63	52	58	52
정어리	42	3	1	0	0	3	1	0	2	2	-	-	-	-
붉은대게	65	78	69	64	92	103	75	97	100	99	99	100	99	98
개조개	-	-	64	59	52	58	38	52	71	67	100	88	72	65
키조개	-	-	33	57	65	70	39	100	92	91	90	83	80	76
제주소라	-	-	90	95	91	79	94	92	79	99	104	79	100	97
대게	-	-	-	78	61	78	81	109	131	94	77	85	63	55
꽃게	-	-	-	-	38	7	3	0	87	93	81	64	52	50
오징어	-	-	-	-	-	-	-	-	105	74	102	88	91	82
도루묵	-	-	-	-	-	-	-	-	-	-	70	84	78	96
참홍어	-	-	-	-	-	-	-	-	-	-	75	93	54	56

주: 1) 총허용어획량 소진율은 총허용어획량 대비 실제 어획량의 비율임.
출처: 국립수산물과학원, 「TAC 소진현황」,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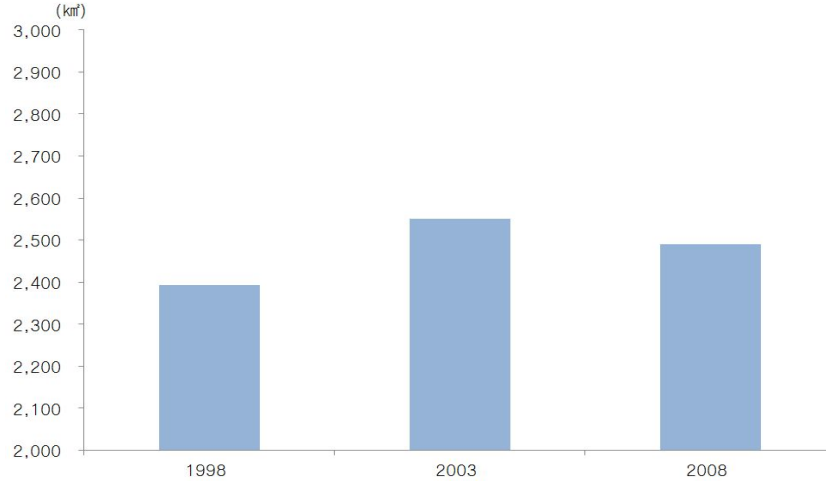
■ 보조지표 (없음)

■ 국제비교지표 (없음)

32308. 연안습지면적

■ 주요지표

연안습지면적, 1998-2008



주: 1) 연안습지지역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2) 1998년 자료(A)는 1987년 이후 상실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1/75,000 축적 해도를 디지털 면적 계산기로 작성.
3) 2003년 자료는 보다 정밀한 전자해도를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면적이 다소 늘어남.
4) 2008년 자료는 1/5000의 해안선 조사 측정결과를 반영한 결과 추가적인 감소사유가 발생.
5) 2013년부터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습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함.
출처: 해양수산부, 「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연안 습지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한국의 경우 ‘습지 보전법’에 의한 연안 습지 대부분이 갯벌이므로 이 둘을 혼용하여 사용함. 갯벌이란 밀물 시에는 바닷물로 덮여 있으나 썰물 시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을 말하며, 갯가(바닷가)의 넓고 평평한 들판이라고도 함.
- 측정 방법: 전자해도(1/75,000, 1/50,000) 및 해안선 조사측량(1/5,000) 자료를 기반으로 GIS를 이용해 갯벌 면적을 산출함.

● 지표의 의의

갯벌은 수산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이며, 오염정화와 자연재해 저감 능력이 탁월한 생태자원으로 갯벌면적 증감은 건강한 해양생태계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 해설

2008년 기준 갯벌면적은 2,489.4km²로 국토 면적(99,828km²)의 2.5%를 차지한다. 2008년 갯벌면적은 2003년의 2,550.2km²보다 60.8km² 감소했다. 이는 송도국제도시(25.9km²), 평택항(11.1km²), 여수 울촌(3.2km²) 산업단지 건설 등 대규모 갯벌 매립으로 인한 손실과 갯벌면적 측정기법(위성자료 분석에 의한 전자해도 측정)의 발달로 새로이 발견된 면적이 보충된 결과이다.

갯벌면적은 산출시기마다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로 인해 면적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각 년도의 증감량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2015년 새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항만용지, 주거용지, 산업용지 등을 위한 갯벌매립이 계획되어 있어 갯벌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람사르 지정 습지는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포함하며 람사르 기준을 충족해야 습지로 지정될 수 있다. 한국의 람사르지정 습지 면적은 177km²(2013년)이다. 국가적으로는 연안습지면적만을 관리하고 있어 내륙습지 현황 파악에 유용한 자료이다. 호주는 람사르협약 최초 가입국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 지정 습지를 가진 국가로 81,192km²에 달하는 총 65개의 습지를 가지고 있다. 습지면적과 같은 생태환경 지표는 각 국가의 생태적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국가 간 비교 및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보호구역은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등의 기준을 고려해 지정되며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나뉜다. 해양보호구역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안습지보호지역 12개소, 해양보호구역 6개소, 총 18개소가 지정되었고 지정구역과 면적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양환경관리공단 내 해양보호구역센터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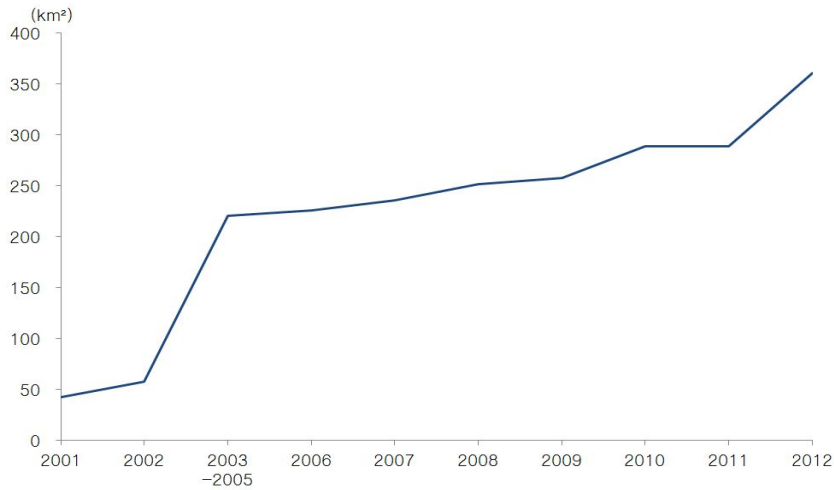
시도별 연안습지면적, 1998-2008

	1998	2003	(km ²) 2008
전국	2,393	2,550.2	2,489.4
인천	685	737.1	703.9
경기	153.5	177.8	168.8
충남	304.2	367.3	358.8
전북	113.6	132	117.7
전남	1,054.1	1,017.4	1,036.9
경남	59.0	91.4	79.1
부산	23.6	27.2	24.2

주: 1)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2) 1998년 자료(A)는 1987년 이후 상실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1/75,000 축적 해도를 디지털 면적 계산기로 작성.
 3) 2003년 자료는 보다 정밀한 전자해도를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면적이 다소 늘어남.
 4) 2008년 자료는 1/5000의 해안선 조사 측정결과를 반영한 결과 추가적인 감소사유가 발생.
 5) 2013년부터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습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함.
 출처: 해양수산부, 「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각 년도.

■ 보조지표

해양보호구역면적, 2001-2011



주: 1)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등의 기준을 고려해 지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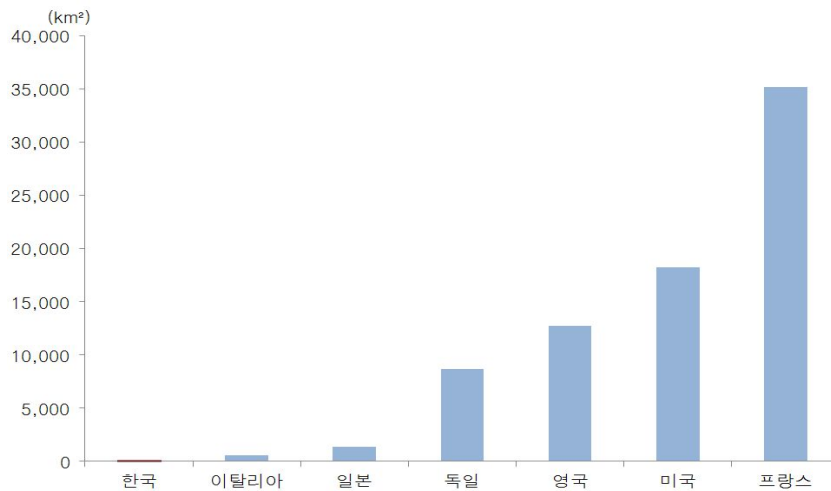
출처: 해양환경관리공단, 「2012 해양보호구역 조사관찰 최종보고서」, 2012.

통계표

	2001	2002	2003-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양보호구역 면적	42	57.8	220.5	225.4	235.8	251.1	257.2	288.5	288.6	360.3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람사르협약 지정 습지면적, 2013



주: 1) 람사르협약 지정 습지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제1범주)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제2범주)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서식지(제3범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대상이 됨. 총 가입국은 168개국이며, 가입국면적 총합은 2,055,403km²임.

출처: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The List of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2013.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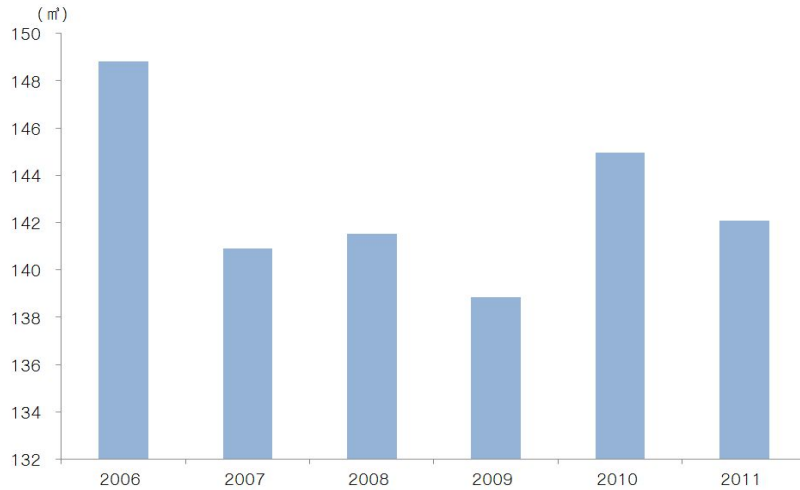
	한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람사르협약 지정 습지 면적	177	602	1,369	8,682	12,768	18,271	35,140

3.2.4. 수자원

32409. 1인당 취수량

■ 주요지표

1인당 취수량, 2006-2011



주: 1) 취수량은 연간 지하수 및 지표수의 합임.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1인당 취수량은 연간 취수량을 총인구로 나눈 값임. 연간취수량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 등의 수원에서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취수한 수량을 말함. 마을상수도 와 공업용 수도를 위한 취수량은 제외하였음.
- 측정 방법: 연간취수량은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 취수량을 나타낸 값임. 환경부 수도 정책과에서 매년 한 차례씩 측정하고 있음

● 지표의 의의

자연자원 가운데 시스템의 상호연관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물이다.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 소비 증가로 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물 부족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면 생존에 필수적인 지하수의 보전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1인당 취수량은 생존과 직결되는 주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해설

2011년 현재 전체 취수량은 2010년(71억 6,200만^m³) 대비 1.2% 감소한 70억 7,200만^m³이다. 취수원별 취수량은 지표수가 69억 7,600만^m³으로서 9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수는 9,600만^m³으로 1.4%에 불과하다. 이는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취수량은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간 취수량을 지하수와 지표수로 구분하여 보면 지표수가 평균 90%에 근접하거나 상회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표수 가운데에는 하천 표류수와 댐에서 발생하는 물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취수량 가운데 여전히 많은 부분을 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기타 저수지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이용량을 살펴보면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하수 자원이 풍부해진 것이 아니라 이용량이 늘어난 것이어서 지하수 고갈은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하수 이용량뿐만 아니라 시설도 증가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시설 수는 1994년의 63만여 공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145만 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지하수 이용 현황을 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농어업용수 19억 3,000^m³(49%), 생활용수 17억 8,000^m³(46%), 공업용수 1억 7,000^m³(4%) 순서로 많이 이용했다.

한편 OECD 주요 국가의 1인당 상수도 공급량을 비교해 보면 영국(1,011ℓ), 호주(1,009ℓ), 독일(1,006ℓ), 이탈리아(1,001ℓ)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의 1인당 상수도 공급량은 953ℓ로 한국보다 국민총소득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통계표

지하수 및 지표수 연간 취수량, 2006-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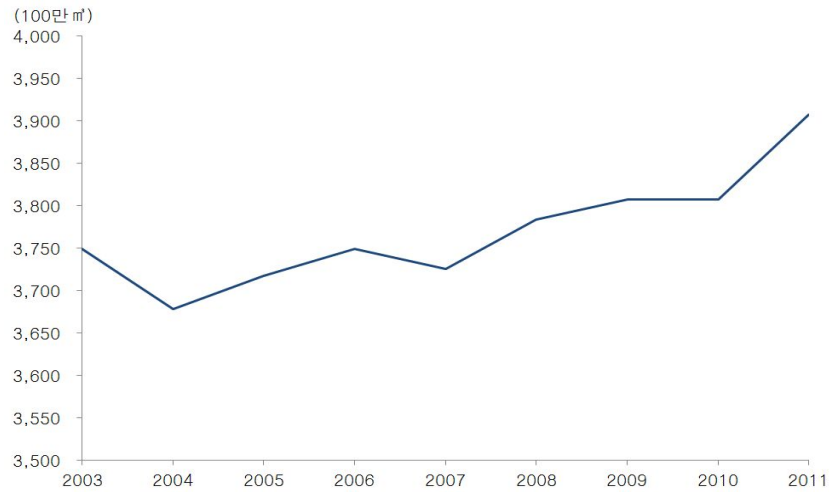
	(100만 ^m ³)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7,198	6,848	6,928	6,828	7,162	7,072
지하수	92	90	89	90	93	96
지표수	7,106	6,758	6,389	6,738	7,069	6,976
하천표류수	3,174	3,175	3,207	3,154	3,267	3,253
하천복류수	399	417	433	417	463	473
댐	3,471	3,110	3,148	3,121	3,281	3,194
기타저수지	61	56	51	46	58	56

주: 1) 연간취수량은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 등의 수원에서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취수한 수량을 말함. 마을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위한 취수량은 제외한 값임.

출처: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년도.

■ 보조지표

지하수이용량, 2003-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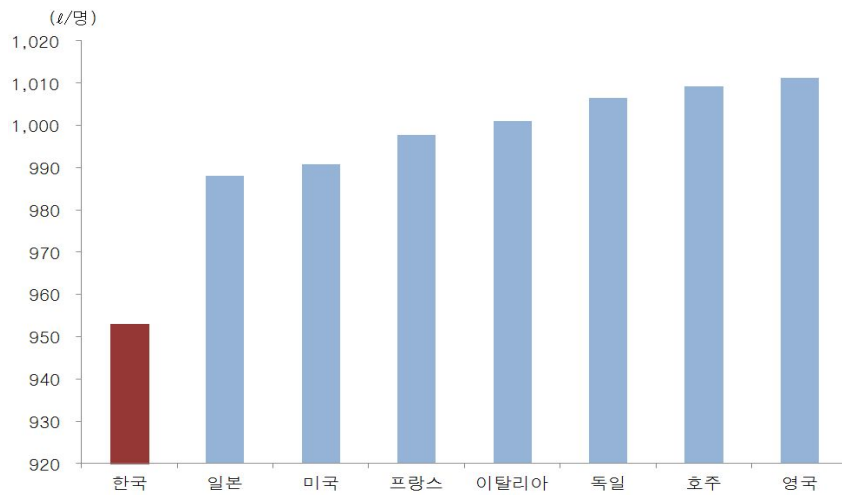
주: 1) 제주 염지하수(지하염수) 제외.
출처: 국토교통부, 「지하수조사연보」, 각 년도.

통계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하수 이용량	3,749	3,678	3,717	3,749	3,725	3,784	3,807	3,807	3,907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1인당 상수도 공급량, 2010



출처: WHO & UNICEF, JMP(Joint Monitoring Programme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OECD, OECD Stat.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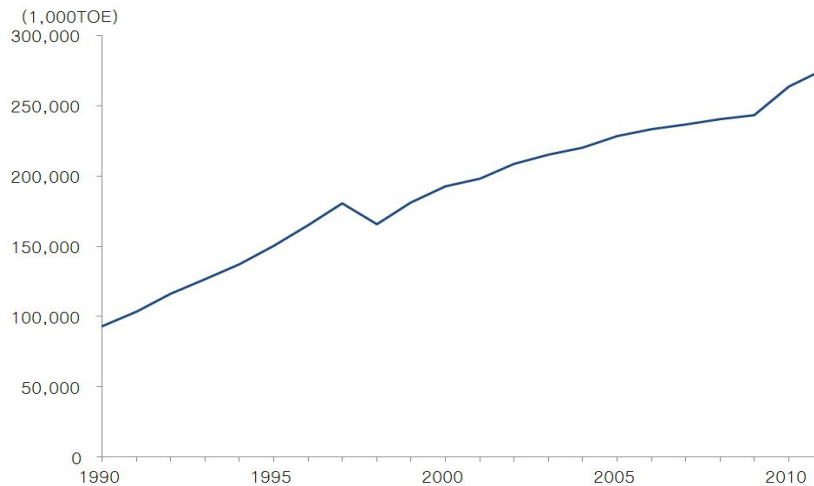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호주	영국
1인당 상수도 공급량	953	988	991	998	1,001	1,006	1,009	1,011

3.2.5. 에너지

32510. 1차에너지공급량

■ 주요지표

1차 에너지 공급량, 1990-2011



주: 1) 1차 에너지란 천연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말함.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대표적인 1차 에너지원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1차 에너지란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태양열, 지열이 대표적인 예임.
- 측정 방법: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에너지통계연보로 작성.

● 지표의 의의

한국 에너지 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단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환경오염이다. 에너지 소비는 수질오염, 해양오염, 열오염, 온배수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특히 석탄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는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은 공급 위주가 아니라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을 해야 하며 따라서 총1차 에너지 공급량은 에너지 관리의 중요한 지표이다.

● 해설

에너지는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곧 에너지의 과다한 사용 탓이기 때문이다. 특히 1차 에너지 공급량은 환경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7년 IMF 사태로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줄어들었으나 1998년 이후 회복세를 보인 이후 다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2억 7,568만 8,000TOE로 1990년 9,319만 2,000TOE에 비해 2.95배 증가하였다. 1차 에너지 공급량 못지않게 중요한 지표는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다. 곧 개인의 에너지 소비 규모를 고려하면 과도한 소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07년을 정점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2009년 이후 급등하고 있다. 이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다시 에너지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이는 에너지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GDP의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한편 OECD 주요국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을 살펴보면 미국(22억 270만 TOE)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일본(4억 5,810만 TOE), 독일(3억 720만 TOE) 순서였다. 한국은 2억 5,760만 TOE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호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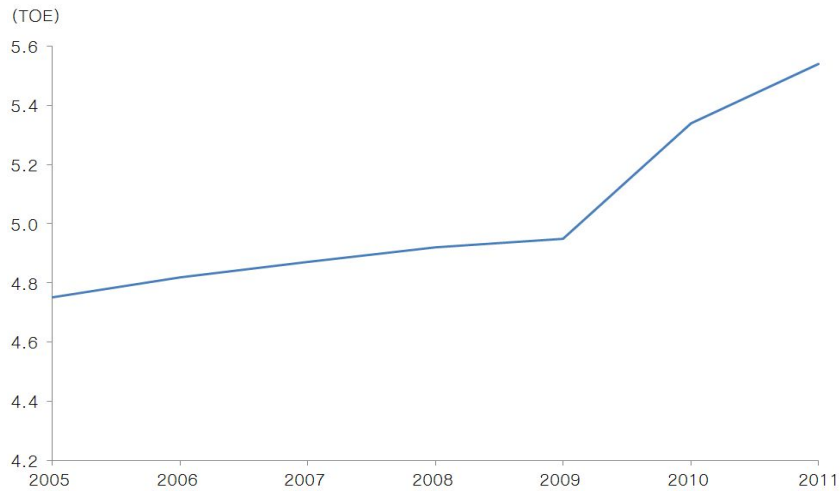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공급량, 1990-2011

	(1,000TOE)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총에너지	93,192	103,619	116,010	126,879	137,234	150,437	165,212	180,638	165,932	181,363	192,887
석탄	24,385	24,535	23,618	25,882	26,680	28,091	32,200	34,799	36,039	38,155	42,911
무연탄	9,947	8,144	6,315	5,058	3,507	2,953	2,561	1,989	2,207	2,425	3,094
유연탄	14,438	16,391	17,303	20,824	23,173	25,139	29,639	32,810	33,832	35,731	39,817
석유	50,175	59,627	71,740	78,495	86,343	93,955	99,898	109,080	90,582	97,270	100,279
에너지유	39,653	45,773	52,311	57,139	62,680	68,949	73,264	74,144	53,952	59,007	59,743
LPG	3,601	9,515	5,441	5,990	6,398	6,675	6,874	7,201	6,877	7,808	8,644
비에너지유	6,921	9,515	13,988	15,366	17,264	18,331	19,760	27,735	29,753	30,455	31,893
LNG	3,023	4,339	4,581	5,723	7,618	9,213	12,172	14,792	13,838	16,849	18,924
수력	1,590	1,263	1,216	1,502	1,025	1,369	1,301	1,351	1,525	1,517	1,402
원자력	13,222	14,078	14,133	14,535	14,663	16,757	18,481	19,272	22,422	25,766	27,241
신재생 및 기타	797	617	723	742	906	1,051	1,161	1,344	1,526	1,806	2,13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에너지	198,409	208,636	215,066	220,238	228,622	233,372	236,454	240,752	243,311	263,833	275,688
석탄	45,711	49,096	51,116	53,128	54,788	56,687	59,654	66,060	68,604	77,092	83,640
무연탄	3,678	4,041	4,560	4,302	4,768	5,208	5,586	5,906	5,812	6,141	6,898
유연탄	42,033	45,054	46,556	48,826	50,020	51,479	54,068	60,155	62,792	70,951	76,741
석유	100,385	102,414	102,379	100,638	101,526	101,831	105,494	100,170	102,336	104,301	105,146
에너지유	59,049	58,601	57,650	54,100	53,416	51,800	50,738	45,705	45,607	46,420	44,296
LPG	8,676	9,398	9,140	9,153	9,484	9,689	10,127	10,647	11,079	10,925	10,303
비에너지유	32,660	34,415	35,634	37,385	38,626	40,342	44,629	43,819	45,651	48,956	50,547
LNG	20,787	23,099	24,194	28,351	30,355	32,004	34,663	35,671	33,908	43,008	46,284
수력	1,038	1,327	1,722	1,465	1,297	1,305	1,084	1,196	1,213	1,392	1,715
원자력	28,033	29,776	32,415	32,679	36,695	37,187	30,731	32,456	31,771	31,948	32,285
신재생 및 기타	2,456	2,925	3,241	3,977	3,961	4,358	4,828	5,198	5,480	6,064	6,618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 보조지표

1인당 에너지소비량, 200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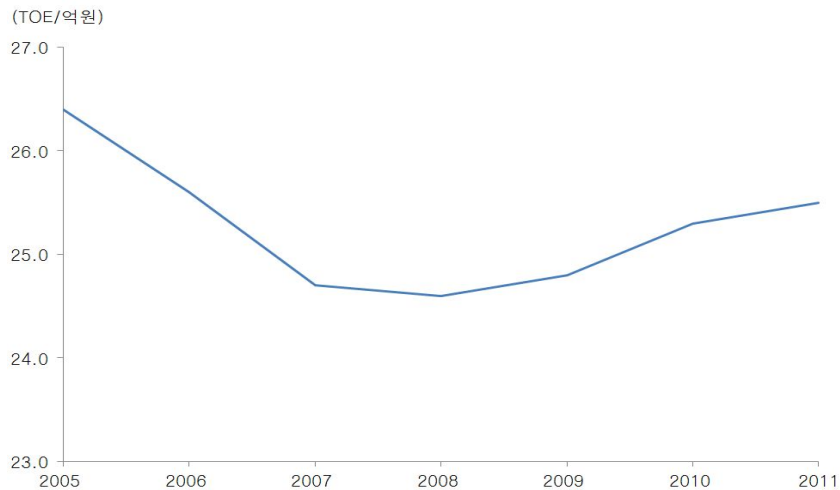


주: 1) 1인당 에너지소비량 = 1차 에너지소비량 ÷ 총인구.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통계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인당 에너지소비량	4.75	4.82	4.87	4.92	4.95	5.34	5.54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 2005-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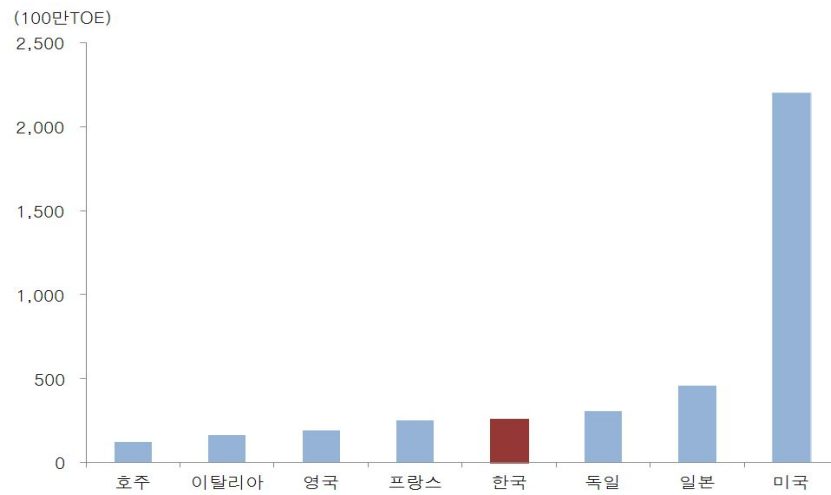
주: 1)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 = 1차 에너지소비량 ÷ GDP(명목).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	26.4	25.6	24.7	24.6	24.8	25.3	25.5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1차 에너지 공급량, 2011



출처: OECD, *OECD 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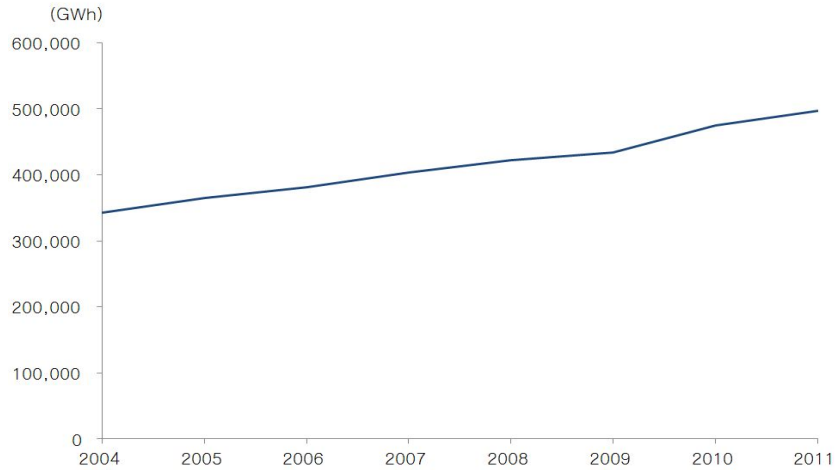
통계표

	호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한국	독일	일본	미국
1차 에너지 공급량	119.8	165.1	189.0	251.4	257.6	307.2	458.1	2,202.7

32511. 전력생산량

■ 주요지표

전력생산량, 2004-2011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전력은 역학에너지, 열에너지, 화학에너지와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말함. 조명, 컴퓨터 작동, 원동력 등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음.
- 측정 방법: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에너지 통계연보로 작성.

● 지표의 의의

전력은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전기는 정책적으로 값싸게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무절제하게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전기낭비로 인한 전력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력난 못지않게 환경문제 또한 심각하다.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에너지 공급으로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총전력 생산량은 전력수급뿐만 아니라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해설

한국의 총전력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총1차 에너지 공급량과 마찬가지로 IMF 사태로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시기를 제외하고는 증가세가 둔화된 적이 없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총 전력 생산량은 496,893GWh로 1990년 107,670GWh에 비해 4.61배 증가했다. 1인당 전력 소비량 또한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꾸준히 증가 추세다. GDP 대비 전력소비량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0.38GWh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OECD 주요국의 전력 생산을 살펴보면 미국이 4,320.0Twh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위는 일본으로 1,048.6Twh였다. 한국은 515.5Twh로 경제력이 한국보다 앞선 영국, 이탈리아, 호주보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고 매순간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균형이 어긋나게 되면 일시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블랙아웃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순간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항상 최대 전력수요보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진 공급능력 즉, 발전설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여유정도를 예비율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전력공급 중단 사태는 이 예비율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발전설비는 단기간에 건설이 불가능한 설비로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전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발전설비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전력수요 예측 및 발전설비 건설계획 못지않게 연도별 전력수급동향 파악과 수요 관리도 중요하다. 특히 발전설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요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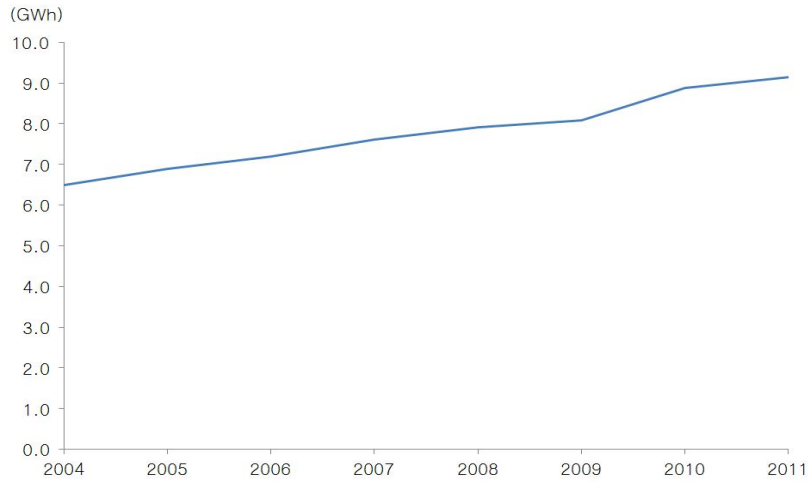
에너지원별 전력생산량, 2004-2011

	(GWh)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력생산량	342,148	364,639	381,181	403,125	422,355	433,604	474,660	496,893
수력	5,861	5,189	5,219	5,042	5,563	5,641	6,472	7,831
원자력	130,715	146,779	148,749	142,937	150,958	147,771	148,596	154,723
집단	3,553	2,759	2,597	3,084	5,336	5,827	8,080	12,429
대체	350	404	511	829	1,090	1,791	3,984	7,592
화력	201,669	209,508	224,105	251,230	259,407	272,574	307,034	313,505
석탄	127,158	133,659	139,205	154,674	173,508	193,217	197,916	200,124
중유	18,042	17,318	15,999	17,689	9,700	13,670	12,405	12,040
경유	470	413	599	443	393	413	473	452
LNG	55,999	58,118	68,302	78,427	75,809	65,274	96,734	101,702

주: 1) 총전력 생산량을 수력, 원자력, 집단, 대체, 화력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 보조지표

1인당 전력소비량, 2004-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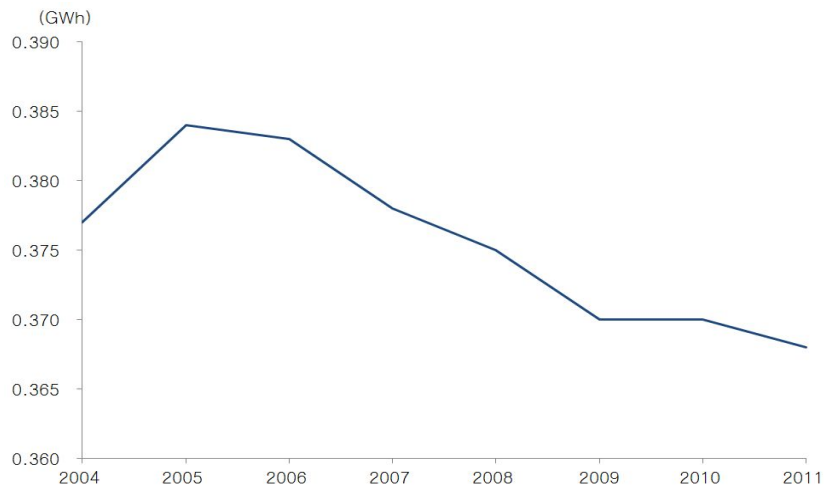


주: 1) 전력소비량은 계약종별 전력소비량 추이를 합산한 것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통계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인당 전력소비량	6.49	6.88	7.19	7.61	7.92	8.09	8.88	9.14

GDP 대비 전력소비량, 2004-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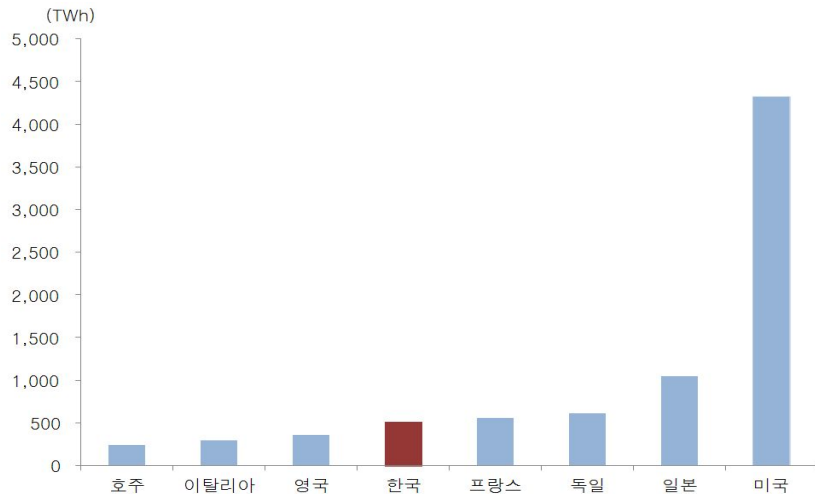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통계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대비 전력소비량	0.377	0.384	0.384	0.378	0.375	0.370	0.370	0.368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전력생산량, 2011



출처: OECD, *OECD.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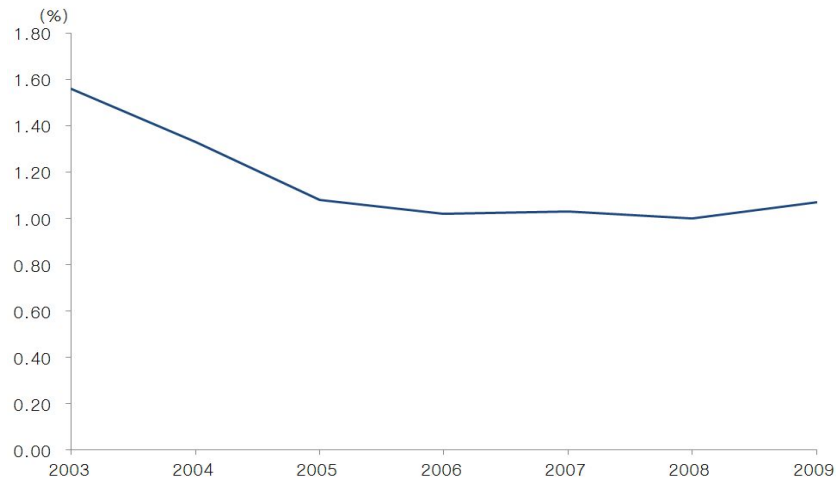
통계표

	호주	이탈리아	영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전력생산량	238.5	298.5	362.4	515.5	557.4	608.3	1,049.6	4,320.9

32512. 재생가능에너지비율

■ 주요지표

재생가능에너지비율, 2003-2009



주: 1)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은 총발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 지표 정의와 측정 방법

- 지표 정의: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은 총 발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통계기준은 국가별로 다름. 한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총 11개 분야로 정의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에너지를 신에너지로, 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을 재생에너지로 칭하고 있음.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과 파괴, 특히 기후변화의 심화라는 환경 속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임.
- 측정 방법: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매년 에너지 통계연보로 작성.

● 지표의 의의

석유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이용의 확대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각종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국내, 국제간 불평등을 심화시켜 왔다.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석유에 의존한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

● 해설

2002년까지 지지부진하던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은 2003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수력가운데 대규모 수력발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대규모 수력발전의 포함으로 2002년 0.07%에 불과하던 비중이 2003년에는 1.5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비중은 다시 조금씩 감소하면서 2009년 1.07%를 나타냈다.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해양의 각 연도별 설치용량의 단순합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용량이 증가했는지는 파악이 어렵다. 한편 OECD 주요국의 1차 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가 11.7%로 1위, 독일이 11.3%로 2위, 프랑스가 7.3%로 3위였다. 한국은 0.7%로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상세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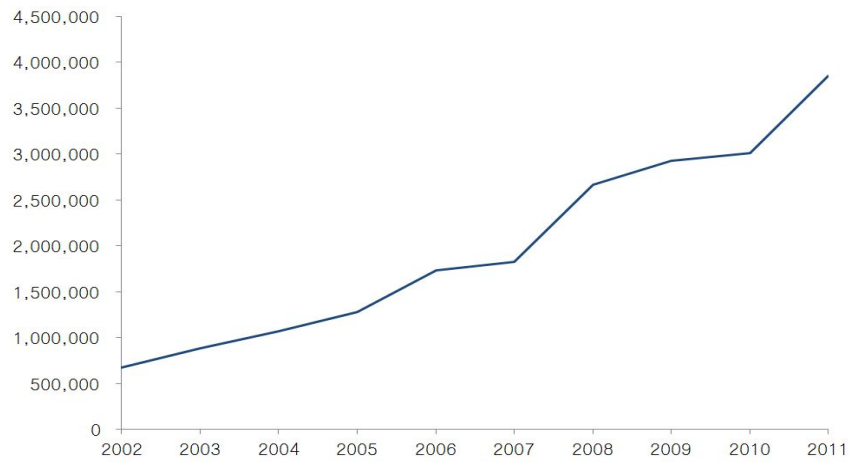
재생가능에너지비율, 2003-200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발전량(MWH)	322,451,697	342,147,967	364,639,331	381,180,709	426,647,338	422,355,126	433,603,745
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 총계(MWH)	5,035,156	4,533,603	3,950,000	3,899,369	4,394,830	4,227,476	4,617,886
재생가능에너지비율(%)	1.56	1.33	1.08	1.02	1.03	1.00	1.07

주: 1)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은 총 발전량 중 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년도.

■ 보조지표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용량, 2002-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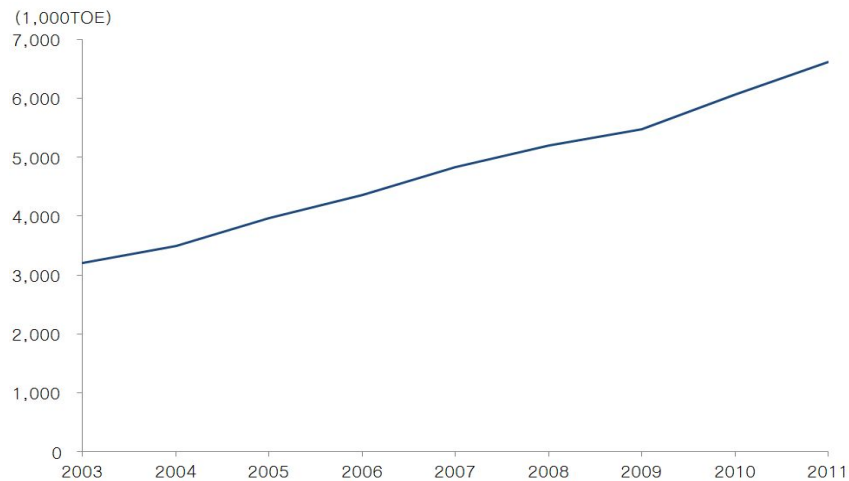


주: 1)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용량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해양의 각 연도별 설치용량은 단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순 합산하였음. 따라서 특정한 단위가 없음.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2011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12.

통계표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용량	671,728	885,613	1,070,213	1,281,151	1,731,851	1,821,788	2,660,744	2,927,264	3,009,888	3,848,376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량, 2003-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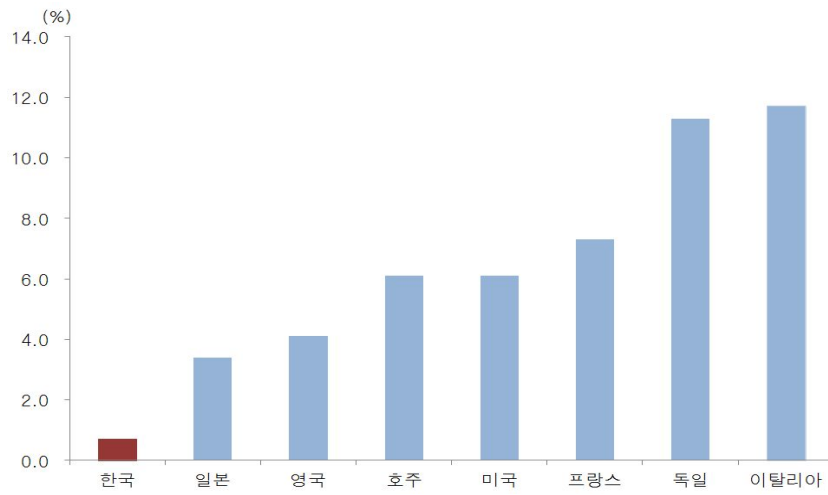
주: 1) 신재생에너지에서 수력에너지는 제외됨.
출처: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연도.

통계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량	3,210.8	3,500.1	3,960.7	4,358.1	4,827.9	5,198.4	5,479.6	6,064.0	6,617.4

■ 국제비교지표

OECD 주요국의 1차 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2011



출처: OECD, *OECD Factbook 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2012.

통계표

	한국	일본	영국	미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1차 에너지 중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0.7	3.4	4.1	6.1	6.1	7.3	11.3	11.7

부록

부록 1. 국가주요지표체계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경제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 1인당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 1인당 국내총생산 • 경제성장률
		소득분배	• 노동소득분배율	•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	• 노동소득분배율
		투자	• 투자율	• 건설투자증가율 • 설비투자증가율 • 무형고정자산투자증가율	• 투자율
		대외거래	• 경상수지비율		• 경상수지비율
	• 수출입비율		• 주요 상대국별 수출비율 • 주요 상대국별 수입비율	• 수출입비율	
	재정과 금융	재정 규모와 구성	•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 정부 수입과 지출 비율
			• 정부세입구성		• 정부세입구성
			• 정부지출구성		• 정부지출구성
		재정안정성	• 국가채무비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비율 • 공공부문채무비율	• 국가채무비율
			• 재정수지비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수지비율	• 재정수지비율
		금융시장규모	• 금융자산비율	• 주식시가총액비율 • 기업공개실적 • 총여신비율	• 금융자산비율
		금융시장안정성	• BIS자기자본비율	• 무수익여신비율	• BIS자기자본비율
			• 대외채무비율	• 단기외채비율 • 외환보유액비율	• 대외채무비율
		금융시장	• 국고채금리	• 기준금리 • 콜금리, 회사채금리	• 해외주요시장금리 • 해외주요정책금리
			• 코스피주가지수	• 코스닥주가지수	• 해외주요주가지수
	• 환율			• 해외주요통화환율	
	산업과 생산	산업구조	• 산업구성	• 산업집중도 • 식량자급률 • 전력공급예비율 • 서비스업 산업구성	• 산업구성
			• IT산업생산비율	• 반도체생산 • 디스플레이생산 • 바이오산업생산 • IT산업생산 세계시장점유율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 거주자 해외직접투자비율	•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생산성	• 노동생산성	• 1인당 노동생산성지수 • 시간당 노동생산성지수 • 총요소생산성증가율	• 노동생산성
			• 중소기업임금비율	• 기업규모별 영업이익률 • 중소기업 신규진입률	
혁신		• 연구개발투자비율		• 연구개발투자비율	
	• 특허출원증가율	• 연구개발지출대비특허출원수 • 한국의 세계기술혁신순위 • 한국의 세계기술수용성순위	• 특허출원수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경제	고용과 노동	고용	• 고용률	• 고용률(OECD 기준) •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률	• 고용률	
			• 비임금근로자비율	• 고용주비율 • 자영업자비율 • 무급가족종사자비율	• 비임금근로자비율	
			• 취업자의 산업구성	• 서비스업취업자비율 • 취업자의 직업구성	• 제조업취업자비율 • 도소매·숙박업취업자비율 •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취업자비율	
		임금	• 비정규직근로자비율	• 한시적, 시간제 및 비전형 근로자비율	• 한시적근로자비율 • 시간제근로자비율	
			•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 성별 임금차이 • 근로형태별 임금차이	• 임금격차(임금10분위배율) • 성별 임금차이	
			• 저임금근로자비율	•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 저임금근로자비율 • 중위임금대비최저임금	
		근로조건	• 근로시간	• 근로형태별 근로시간 • 취업자 근로시간	• 근로시간	
			• 산재사망률	• 산업재해율		
			• 일자리만족도	• 임금만족도 • 일자리장래성만족도		
		노사관계	• 노동조합조직률	• 근로손실일수	• 노동조합조직률 • 단체협약적용률	
		소득과 소비	소득과 자산	• 개인소득	• 소득만족도	• 개인소득
				• 가구소득	• 소득분위별 가구소득원천구성 • 가구소득변화인식	• 가구소득
	• 가구자산			• 소득분위별 가구순자산 • 가구 자산과 부채 • 가구부채변화인식		
	소득분배		• 지니계수	• 소득5분위배율 • 상대적빈곤율	• 지니계수	
	소비와 물가		• 소비지출	• 소득대비소비지출 • 가구 소비지출구성 • 소비생활만족도	• 소비지출	
			• 물가상승률	• 생활물가상승률	• 물가상승률 • 물가수준	
	저축		• 저축률		• 가계저축률	
	사회	인구	인구규모	• 총인구	• 시도별 인구	• 총인구 • 도시인구
			인구변화	•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
				• 합계출산율	• 조출생률 •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
				• 조사망률	• 영아사망률	• 조사망률
				• 체류외국인	• 국적취득자수	
			인구구조	• 중위연령	• 인구피라미드	• 중위연령
• 성비				• 출생성비	• 성비	
• 부양인구비				• 고령화지수	• 부양인구비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 평균가구원수		• 평균가구원수	
			• 한부모가구비율	• 저소득층 한부모가구비율	• 한부모가구비율	
		가족형성	• 혼인율	• 평균초혼연령 • 결혼선호율 • 국제결혼비율	• 조혼인율	
			• 이혼율	• 평균이혼연령 • 이혼반대율	• 조이혼율	
		가족관계	• 가족관계만족도	• 배우자만족도 • 자녀만족도		
			• 가사노동시간	• 가족시간	•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	• 어린이집이용률	• 육아휴직자수	• 어린이집이용률	
			• 노인과 자녀 동거비율	• 부모부양의무수용률		
		건강	건강상태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기대수명 • 건강수명
				• 건강인지율		• 건강인지율
	건강결정요인		• 흡연율	• 간접흡연율 • 청소년흡연율	• 흡연율	
			• 음주율	• 1인당 알코올소비량	• 1인당 알코올소비량	
			• 신체활동실천율	• 걷기실천율	• 신체활동실천율	
			• 비만율		• 비만율	
	보건의료서비스		•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인구 1,000명당 병상수 •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 인구 1,000명당 의사수 • 인구 1,000명당 병상수 •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	
			•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국민의료비 • 공공의료비	
			• 암생존율	• 대장암생존율 • 유방암생존율	• 대장암생존율 • 유방암생존율	
			• DPT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 DPT예방접종률 • 노인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교육		교육기회	•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 사교육비	• 사교육참여율 • 교육비	
				• 취학률	• 고등교육기관진학률 • 학업중단율	• 취학률
				• 평생교육참여율	• 평생교육참여시간	• 평생교육참여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교생활만족도	• 교육내용만족도 •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 학부모학교교육만족도	
• 학습시간			• 학습종류별 학습시간 • 사교육시간	• 학습시간		
교육효과		• 교육년수	• 고등교육이수율	• 교육년수		
		• 기초학력미달률	•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	• TIMSS 수학·과학 성취도		
		• 대학졸업자취업률	•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니트(NEET)비율	•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률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 문화재정			
			• 문화여가비	• 소득분위별 문화여가비		
		문화여가활동	• 문화예술관람률	• 문화예술종류별 관람률		
			• 독서율	• 서적종류별 독서율		
			• 생활체육참여율	• 스포츠경기관람률		
			• 여가시간	• 여가활동종류별 여가시간 • 휴가활용률	• 여가시간	
	• 여가만족도					
	미디어	• 인터넷이용률	• 인터넷서비스종류별 이용률	• 인터넷이용률		
	주거	주택공급·관리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주택유형별 주택재고 • 주택보급률 • 임대주택수 • 멸실주택수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수 • 인구 1,000명당 임대주택건설수	• 인구 1,000명당 주택건설수	
		주택시장	•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 주택가격변동률	
			• 주택전세가격변동률	•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거상황	• 소득대비임대료(RIR)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임대료(RIR) • 소득계층별 소득대비주택가격(PIR)	• 소득대비주택가격(PIR)	
			• 자가점유율	• 주거점유형태 • 소득계층별 자가소유율	• 자가점유율	
			• 1인당 주거면적	• 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주거환경만족도	• 주택만족도		
		교통	교통공급	•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 도로연장 • 철도연장	• 인구 1,000명당 자동차등록대수
			교통수요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대중교통만족도 • 자동차평균주행속도	• 대중교통수송분담률
	• 통근시간			• 통학시간 • 1시간이상통근통학인구비율	• 통근시간	
	교통환경		• 자동차에너지소비량	• 차종별 평균연비 • 차량유종별 평균연비		
			•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 친환경자동차보급률	•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교통비용		• 교통비	• 소비수준별 교통비		
			•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교통사고		•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발생건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사회	안전	범죄	• 범죄율	• 범죄자수 • 소년범죄자율	• 살인범죄율
			• 범죄피해율		
			• 재범률	• 교도관수대비1일평균수용자수	
		치안	•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 인구 10만명당 민간경비원수	•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재해	• 자연재해피해액	• 자연재해주의보·경보발효횟수	
			• 화재피해액		
	안전에 대한 인식	• 사회안전인식도	• 위험종류별 안전인식도		
		• 범죄두려움		• 범죄두려움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 선거투표율		• 선거투표율
			• 여성의원비율	• 5급이상여성공무원비율	• 여성의원비율
			• 사회단체참여율		
		신뢰와 투명성	• 기관신뢰도		• 기관신뢰도
			• 대인신뢰도		• 대인신뢰도
			• 부패인식지수		• 부패인식지수
		사회적 관계	•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후원 및 기부 참여율	
• 사회적고립도				• 사회적고립도	
삶의 기회와 만족		•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 주관적계층인식		
		• 삶의만족도		• 삶의만족도	
		• 자살률		• 자살률	
사회보장		• 공공복지예산		• 공공복지예산	
		• 공적연금수급률		• 공적연금소득대체율	
		• 기초생활보장수급률	• 상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수급률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소음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온실가스배출량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대기오염도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대기오염도
			• 환경소음도	• 소음진동민원건수	
		물환경	• 하수도보급률	• 하천수질오염도	• 하수도보급률
			• 상수도보급률	•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 상수도보급률
		폐기물-유해물질	• 폐기물발생량	• 폐기물재활용률 • 생활폐기물발생집약도	• 생활폐기물발생집약도
	• 화학물질배출량		• 방사성폐기물발생량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 환경보호비용	• 환경예산	• 환경보호비용	
		• 환경향상체감도	• 환경문제심각성인식도		

(표 계속)

부록 1.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보조지표	국제비교지표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 멸종위기종	• 야생생물유전자원	• 멸종위기종
			• 자생생물종	• 농업종자유전자원	• 자생생물종
		토지산림	• 경지면적		• 1인당 경지면적
			• 생태경관보존면적		• 생태보호지역면적
			• 유기농경작면적률	•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 유기농경작면적률
			• 산림면적	• 산지타용도전환면적	• 산림지역면적
		해양수산	• 총허용어획량소진율		
			• 연안습지면적	• 해양보호구역면적	• 습지면적
		수자원	• 1인당 취수량	• 지하수이용량	• 1인당 상수도공급량
		에너지	• 1차에너지공급량	• 1인당 에너지소비량 • GDP대비에너지소비량	• 1차에너지공급량
			• 전력생산량	• 1인당 전력소비량 • GDP대비전력소비량	• 전력생산량
			• 재생가능에너지비율	• 재생가능에너지시설용량 • 재생가능에너지공급량	• 재생가능에너지비율

부록 2. 용어해설

1. 경제부문

1.1. 국민계정

국민계정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분류, 회계규정을 근거로 일관적이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진 거시경제계정표, 대차대조표를 말함. 경제분석, 의사결정, 정책입안을 위해 경제데이터를 이용하여 제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회계체계를 제공함.

국내총생산(GDP)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영토 안에서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임.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소득도 포함됨.

명목국내총생산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해당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값임. 명목 국내총생산의 변동분은 최종생산물의 수량과 가격변동분이 혼재되어 있음.

실질국내총생산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기준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값임. 실질 국내총생산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생산수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냄. 경제성장률 산정에 활용됨.

국민총생산(GNP)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임.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임.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우리나라의 생산요소가 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의 생산요소가 국내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지급한 소득을 뺀 값임.

국민총소득(GNI)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임. 명목국민총소득은 명목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으로, 명목국민총생산과 같음. 실질국민총소득은 실질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무역손익을 차감하고,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임. 대외거래가 많은 나라는 교역조건에 따라 소득수준이 달라지므로 한 나라 국민의 구매력을 평가하는데 보다 정확한 소득지표로 활용됨.

구매력평가

장기적으로 각국 화폐의 구매력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는 개념임. 절대적 구매력평가와 상대적 구매력평가로 나뉨. 절대적구매력평가는 동일한 제품을 서로 다른 나라에서 구매할 때 필요한 통화 단위의 비를 환율로 보는 것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을 가정함. 상대적 구매력평가는 환율의 변화율이 두 나라의 물가상승률 차이와 같다는 것을 의미함.

구매력평가환율

장기적으로 각국의 물가수준 차이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통상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가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함. 대표적인 구매력평가환율로는 '빅맥지수'가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판매 중인 빅맥햄버거의 가격비를 의미함.

경제성장률

실질국내총생산의 전년대비 증감률임. 즉, 일정기간(분기 또는 연간)중 한 나라의 경제 규

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노동소득분배율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노동소득은 근로자들이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 즉 피용자보수를 의미함.

영업잉여

기업가가 자본, 경영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함.

제도부문별 소득분배율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에서 경제주체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소비율, 투자율, 저축률 등의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국민총소득(GNI)에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명목지표만 편제됨.

생산요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필요한 요소임. 전통적인 생산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나,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기업가의 경영능력을 생산요소로 보기도 함.

건설투자증가율

공장, 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데 투자되는 증가분임.

설비투자증가율

기계, 설비와 같은 고정 자본 설비에 새롭게 투자되는 증가분임.

무형고정자산투자증가율

고정자산 중 물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에 투자되는 증가분임. 무형고정자산의 예로는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음.

국제수지

한 국가 안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정 1년 동

안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과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을 의미함.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등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짐.

경상수지

한 국가 안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1년 동안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과 행한 모든 대외적인 경상거래 중, 다른 국가들에서 해당국가로 지급된 액수로부터 해당국가에서 다른 국가들로 지출된 액수를 뺀 값임. 경상수지는 1)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2)운수, 여행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3)노동과 자본의 이용대가(즉 임금 및 이자)의 결과인 소득수지, 4)아무런 대가없이 제공되는 무상원조, 교포송금 등의 결과인 경상이전수지로 구분됨.

자본수지

한 국가 안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정 1년 동안 다른 국가의 경제주체들과 행한 모든 대외적인 자본거래를 분류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에서 해당국가로 지급된 액수로부터 해당국가에서 다른 국가들로 지출된 액수를 뺀 값임. 자본수지는 1)거주자의 대외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대내·외 직·간접투자 및 대출·차입을 포괄하는 투자수지 2)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처분, 이민에 따른 해외이주비 등을 포괄하는 기타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음.

준비자산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을 말함.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결과가 준비자산증감에 계상됨.

대외의존도

개방경제 체제하의 국민경제에서 해외부문과의 거래가 차지하는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임. 국민소득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됨. 대외의존도가 높을수록 해외부문의 여건 변화가 한 국가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됨을 의미함. 대외의존도 = {(수출액+수입액)÷국민소득} ×100

1.2. 재정과 금융

정부세입

정부의 1년간 총 수입을 말함.

조세부담률

국내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임. 이는 국민전체의 조세부담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를 의미함.

국민부담률

국내총생산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국가채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를 말함.

국채

재정수지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함.

차입금

정부가 한국은행, 기타 회계·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임(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예산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함).

일반회계

내국세, 교통세, 교육세 등의 국세와 정부출자수입, 주식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일반세입과 각 중앙 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하는 일반세출로 구성되는 회계를 말함.

특별회계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로써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정부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정부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임.

금융자산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금융자산 비율임.

시가총액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시가를 전부 합한 금액임.

기업공개실적

기업이 신규상장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금액임.

BIS자기자본비율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임. 여기서 위험가중자산은 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것으로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무수익여신비율

은행부문 총여신 중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여신 비중임.

대외채무

일정시점에 일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미래특정 시점에 금융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확정채무잔액을 말함.

단기외채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를 말함.

외환보유액

정부의 자산으로서 중앙은행 및 외국 국립은행 등에 예치된 외국 통화 예금의 총액임.

기준금리

한국은행 소속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를 말함.

코스피주가지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가의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임. 코스피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을 기준시점으로 하고 기준 시가총액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코스닥주가지수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가의 총합인 시가총액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나타낸 지표임. 코스닥주가지수는 1996년 7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하고 기준 시가총액을 1000으로 하여 산출함(2004년 1월 26일, 100에서 1000으로 기준지수 조정).

환율

일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와의 교환비율을 말함.

국고채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함.

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등 회계간의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차입, 채무상환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 즉 재정상의 채권·채무행위액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순융자 포함)의 차를 의미함.

누진세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별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함.

부가가치세

제품이나 그 부품이 팔릴 때마다 과세되는 소비세로 '생산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의 각 유통단계마다 증가된 가치(부가가치)의 부분이 과세대상이 됨.

1.3. 산업과 생산

산업구성

1차, 2차, 3차산업의 부가가치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중을 말함.

1차산업

농업·목축업·임업·어업 등 직접 자연에 작용하는 산업의 총칭임.

2차산업

1차산업을 제외한 모든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 구체적으로는 광업·제조업 등의 광공업 이외에 건설업, 전력·가스·수도업 등도 포함됨.

3차산업

1, 2차 산업에서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임.

부가가치

기업이 생산활동을 한 결과, 생산물의 가치 등에 새로 부가된 가치임.

산업집중도

산업 내의 가장 상위 3개 기업이 전체 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측정치임.

독과점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 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경우)인 독점과,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퍼센트를 차지하는 경우)의 과점을 합친 용어로서, 경쟁이 결여된 시장 형태임.

시장점유율

특정 업종의 제품시장에서 취급되는 전체 거래량 중에서 특정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임.

시장구조

시장이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임.

CR3

하나의 산업 또는 시장에서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집중도(시장지배율)를 측정하는 지표임. 산업집중도 비율이라고도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 주체들이 모든 산업활동을 그 성질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부호화한 것으로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데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임.

식량자급률

사료용도를 제외한 식량(곡물) 및 축산육류에 대한 국내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말함. 식량 및 쌀은 양곡년도(전년 11월-당년 10월) 기준이고, 축산육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합한 수치임.

전력공급예비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발전소의 돌발사고등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는 예비 전력의 수준을 의미함.

IT 산업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 및 표시를 포함한 정보의 처리 및 통신기능을 실현시키거나 가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시설을 공급, 설치 운영 또는 유지 보수하는 산업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를 포함함.

IT산업생산비율

IT산업생산분야의 연간 생산 실적 합계를 당해년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중임.

반도체생산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반도체생산규모임.

디스플레이생산

LCD, PDP 등의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생산규모임.

바이오산업 생산

생물의약, 생물화학, 바이오식품, 생물환경,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생물전자, 생물공정 및 기기, 생물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등 8개 분야의 생산규모임.

외국인 직접투자

투자하는 나라의 기업이 그 나라의 국경을 벗어나 투자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하여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M&A

Merger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함. 기업의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함.

거주자 해외직접투자

국내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즉, 국내기업 또는 국내투자자가 해외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하여 이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임.

노동생산성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노동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로서 노동자 1인이 단위 노동시간동안 산출하는 생산량임.

산출량지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산업들의 생산활

등을 총합하여 지수로 작성한 것임.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노동투입량지수

근로자수와 근로시간의 곱을 지수화 한 것으로, 기준년도와 해당년도의 노동투입량의 비율임.

총요소생산성

전체 생산성에서 노동과 자본투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분을 뺀 생산성을 말함.

중소기업임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의미함.

중소기업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의 업체임.

대기업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의 업체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차이

대기업 영업이익률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의 차이임.

중소기업 신규진입률

중소기업 사업체 총수 대비 신설법인수의 비중임.

신설법인수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수의 집계임.

연구·개발투자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공공 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과 공공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총 연구개발비의 비중임.

연구·개발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함.

고등교육

초등, 중등교육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12년간의 교육 이후의 대학교육 및 대학원 교육을 총칭함.

특허출원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특허청으로부터 권리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횟수임.

특허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세계기술혁신순위

144개국에 대하여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하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제도 및 제반요소 중에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을 평가한 순위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 비영리 재단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1,200여 개 이상의 기업체와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2,000여 명에 가까운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가해 일주일 동안 정치, 경제 같은 여러 분야의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함.

세계기술수용성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하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제도 및 제반요소 중에 기존의 기술을 흡수 및 활용하는 기업의 능력을 의미함.

영업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공제한 것으로 영업활동 그

자체의 업적평가를 행하는 수익성지표임. 영업 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1항과 3항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

정보통신기술(ICT)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합성어로 컴퓨터, 미디어, 영상 기기 등과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말함.

1.4. 고용과 노동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 국내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며, OECD 기준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 인구로 정의함.

취업자

조사 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 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말함.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연령인 15세 이상 인구로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

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등은 제외함. OECD에서는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 인구로 정의함.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주부나 학생, 구직단념자등이 이에 해당됨.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그 일을 즉시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임. 경제활동에 참가한다는 것은 취업하고 있거나 혹은 실업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임.

고용주

한 사람 이상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자영업자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

사자만을 데리고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말함.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
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
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를 말함.

정규직근로자

고용기간의 종료를 미리 정하지 않고, 전일제
로 근무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고용계
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함.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거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
무를 기대할 수 없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있음.

시간제근로자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근로
자를 말함.

비전형근로자

과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를 포함함.

산재사망률

산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
하는 모든 근로자 중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
망한 자의 비율로서, 대상근로자 1만 명당 산
재사망자수로 나타냄.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한 산업재
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
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
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산업재해율

산재적용 대상근로자 중 재해근로자의 비율임.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항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
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
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
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정의함.

노동조합조직률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인 자
의 수로 나눈 값임.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
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임.

단체협약적용률

노동조합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결
과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을 일컬음.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최저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 시간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
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
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1.5. 소득과 소비

연앙인구

추계인구를 산출하기 위해 이용해 주로 1년의
인구 중 그 해의 중간일인 7월 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인구수를 연앙인구라
고 함.

가구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
를 함께하는 생활단위로 일반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로 구분됨.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집단가구나 외국인 가구는 조사하지 않음.

일반가구

가족단위로 이루어져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혈연가구),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5인 이하 가구),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1인 가구)를 의미함.

집단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기숙사, 고아원 등의 시설 내에서 생활 하고 있는 가구(집단시설가구), 혈연관계가 없는 6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동일한 거처 내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비혈연 6인 이상 가구)를 의미함.

외국인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임.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함.

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됨.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평가손익 및 자산거래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않음.

경상소득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업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순자산

가구의 평균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액을 순자산이라고 함.

지니계수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1(완전 불평등 상태)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고 0(완전 평등 상태)에 근접할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함.

로렌츠 곡선

전체가구를 소득에 따라 낮은 소득에서 높은 소득순으로 배열한 후 낮은 소득부터 축차적으로 더하여 얻은 곡선을 말함.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을 받는 경우 이 곡선은 완전균등선(45도의 각을 이루는 직선)으로 나타나고 가구간 소득 불평등도가 높아질수록 완전균등선보다 아래로 멀어짐.

균등화소득

가구특성(가구원수,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등)이 다르면, 동일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지출규모도 다름. 균등화소득이란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 가구소득으로 소득격차 지표산출, 가구간 생활수준 비교 등에 많이 사용함. 우리나라에서는 OECD에서 사용하는 소득을 루트 가구원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균등화 소득을 산출함.

소득5분위배율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보여줌.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을 말함.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

상대적빈곤율

소득수준으로 정렬한 상태에서 한가운데 소득(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인구비중을 의미함.

민간 소비지출

일정기간중의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계와 민간 비영리단체의 소비지출을 말함.

소비자물가지수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지표로서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함으로써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를 말함.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수로서 소비자물가 조사대상품목 중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기본 생필품 152개를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나타냄.

물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함.

물가지수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경제지표임.

지출목적별분류지수

소비지출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작성한 지수(12개 대분류)임.

개인순저축률

국민계정상에서 세금과 이자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 지출에 쓰고 남은 돈의 비율을 말함. '가계저축률'이라고도 함.

평가손익

기업의 소유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장부 가액과 평가액 사이에 생기는 손실이나 이익을 의미함.

연평균성장률

수년 동안의 성장률을 매년 일정한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 성장률을 환산함.

재산소득

재산의 이용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을 말함.

이전소득

생산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아니나 개인의 가계에 소득의 형태로 들어오는 수입임. 보조금, 보험금, 연금 등이 있음.

자산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함.

부채

재화나 용역의 차입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를 말함.

실물자산

부동산, 기계, 장치 등과 같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말함.

금융부채

외상매입금, 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채임.

2. 사회부문

2.1. 인구

고령화지수

소년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를 의미함.

노년부양인구비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를 의미함.

도시화

전체 인구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부양인구비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비율임.

생명표

어떤 한 출생코호트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가를 나타내는 표를 말함.

성비

남자수와 여자수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를 의미함.

소년부양인구비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소년인구(0-14세)의 백분비를 의미함.

연령별출산율

15-49세의 여성인구집단에서 각각의 연령 또는 연령집단별로 한 사람이 1년에 몇 명의 아이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영아사망률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임.

조사망률

1년간의 사망자수를 당해년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임.

조출생률

1년간의 출생아수를 당해년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임.

중위연령

전체인구를 연령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연령을 의미함.

출생성비

여자 출생아 수와 남자 출생아 수의 비를 의미하며, 여자 출생아수 100명에 대한 남자 출생아수를 의미함.

출생코호트

특정의 해, 또는 기간에 출생한 집단을 말함.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자가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2.2. 가구와 가족

평균가구원수

가구형태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평균가구원수는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친족

법률 용어로서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에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함.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이루어짐.

핵가족화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으로 되는 현상을 말함.

인구고령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말함.

한부모가구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 등의 이유로 한 명의 부(父)나 모(母)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임.

저소득층

월평균 가구총소득이 중위 소득의 60%이하인 가구임.

조혼인율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냄.

조이혼율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안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냄.

국제결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남성 혹은 여성이 국적이 다른 사람과 하는 결혼을 말함.

이혼숙려제도

결혼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했을 때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이 허가되는 제도임. 이혼 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려할 기회를 줌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됨.

일-가족(양립)갈등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의미함.

성역할

말하는 형식, 언행의 버릇, 품행, 의복과 동작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나 태도 등에서 남녀별로 적절한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의미함.

무급노동

포괄적으로는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유급노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주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을 의미함.

돌봄의 사회화

전통적 가족의 주요한 기능이었던 돌봄 기능이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약화됨에 따라 가족의 돌봄 기능을 시장이나 국가가 수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육아휴직제

만 6세(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생후 1년 미만)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임.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이 휴직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2.3. 건강

기대수명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건강수명

인구 중 평균적으로 질병 혹은 장애를 겪은 기간을 평균수명에서 제한 수명을 말함. 특별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이상 없이 생활 가능한 기간을 의미함.

건강인지도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 좋음' 혹은 '매우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임. 주관적건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

흡연을

만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임.

간접흡연을

만19세 이상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분율임.

청소년흡연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대상자 중 지난 30일 이내에 1회 이상 흡연한 분율임.

위험음주를

만19세 이상 지난 한 해 동안 술을 마신 사람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잔으로 남자 7잔, 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분율임.

신체활동실천율

만19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주일 동안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했거나, 또는 몸이 약간 힘들거나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을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임.

비만을

만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kg/m²) 기준으로 25 이상인 분을임. 체질량지수(BMI)=체중(kg)/[신장(m)]²

국민의료비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임.

공공의료비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 공공영역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를 말함.

암5년생존율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 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분율임.

2.4. 교육

OECD

사회경제적 발전과 무역촉진을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임.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도 함.

공교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학교교육을 말함.

사교육

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

초등교육

가장 기초적인 지식·기능·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함.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짐.

중등교육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사이에서 고등교육을 예비하는 교육을 말함.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짐.

고등교육

학교교육의 최종단계로서,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을 말함.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짐.

평생학습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평생에 걸친 교육을 의미함.

형식교육

국가학력체계안에 포함되어 학력인정이 되는 교육을 말함.

비형식교육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함. 형식교육과는 다르게 학력이나 학위 등의 인증체계가 없음.

교원

교육기관에서 원아(園兒)나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말함. 교사 이외에도 교장·교감·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원장·원감(園監) 등이 포함됨.

취업률

구직자 중 취업한 비율임.

IMD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으로 1980년부터 매년 국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NEET

고용이나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다(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는 의미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의미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 시험으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에서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를 말함. 보통 3년마다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글 이해력),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각국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됨.

2.5. 문화와 여가

문화재정

문화재정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에 편성되는 예산 및 기금으로 구성됨.

문화여가비

영상 음향기기(텔레비전 등),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영상음향 및 정보 기기 수리, 악기기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 관련 용품, 화해 관련 용품, 애완동물 관련 물품 등으로 구성되는 오락문화비를 말함.

문화예술관람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람을 위해 문화예술시설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문화예술행사의 분야는 음악, 연극, 무용,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을 포함함.

여가시간

조사대상자의 각 요일(평일, 토요일, 일요일)별 여가활용시간을 전체로 환산하여 산출한 평균 시간을 말함. 여가활용은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이용(대중매체),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기타 등의 활동을 포괄함.

생활체육참여율

전체 조사대상 인구 중 한 회에 30분 이상 할애 하고 이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임.

여가만족도

여가활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임.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는 여가활용에 대해 종합적인 주관적 만족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

인터넷이용률

만 3세 이상의 조사대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에 인터넷을 이용한 비율임. 인터넷 이용률은 국내 인터넷 이용자 규모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의 비율을 보여줌.

독서율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독서(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류 포함, 교과서 및 참고서제외)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2.6. 주거

주택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①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춘. ③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거처

현재 거주하는 주택 또는 주거지를 뜻함.

인구1,000명당주택수

빈집을 포함한 전국 인구수 대비 주택호수를 말함.

주택보급률

일반가구수 중에서 주택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다가구주택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를 1인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수로 나누어 산정함. 주택보급률 = 주택수 ÷ 일반가구수 (주택수 = 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한 주택수, 일반 가구수 = 보통가구 + 1인가구 + 5인이하 비혈연가구)

주택매매가격

전국의 아파트, 단독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의 실제거래에 기초한 주택매매가격을 말함.

주택전세가격

전국의 아파트, 단독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의 실제거래에 기초한 주택전세가격을 말함.

연소득대비주택가격(PIR)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인 PIR(Price-to-Income Ratio)은 주택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주택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이며, 몇 년치 소득을 저축해야만 대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음.

월소득대비임대료(RIR)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RIR: Rent-to-Income Ratio)는 월평균 소득에 대비한 임대료의 비율을 말함. 이 비율은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소득에서 부담하는 비율임.

자가점유율

일반가구 중 자기소유의 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가점유율에서 제외됨.

주택만족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일정척도에 의하여 측정한 수치임.

주거환경만족도

현재 거주하는 주택 주변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자연 환경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감을 일정 척도에 의하여 측정한 수치임.

2.7. 교통

자동차등록대수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임.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하는데, 본 지표는 승용차 대수만을 집계함.

인구당 도로연장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을 의미함.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국토면적 1km²당 도로연장을 의미함.

인구당 철도연장

인구 1,000명당 철도연장을 의미함.

국토면적당 철도연장

국토면적 1km²당 철도연장을 의미함.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총 수송실적 중 철도와 버스의 수송실적 합이 차지하는 비율임.

대중교통

철도와 버스를 의미함.

수송실적

교통수단을 이용한 인원과 이동거리를 곱한 수치로서 인·km를 단위로 함.

대중교통만족도

대중교통의 접근성, 환승, 서비스 등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종합만족도로서 7점 척도 기준 점수임.

평균통근시간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통근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평균통학시간

통학인구가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통학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 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를 포함함.

자가용 자동차에너지소비량

통계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가용 자동차가 소비한 에너지 소비량임.

자가용 자동차

승용차 일반형, 승용차 다목적형, 승합차, 개인 화물차를 포함함.

다목적형 승용차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승용차 및 승용경화물형이 아닌 차량을 의미함.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교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량

교통부문에서 소비되는 신재생 에너지의 양을 의미함.

신재생에너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등 종래 사용되어온 에너지 이외에 장차 기술개발에 의하여 공급 될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동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수소에너지, 석탄전환연료 등을 말함.

친환경자동차보급률

전체 승용차 중 친환경 에너지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의 비율임.

대중교통비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항공, 교통카드 이용, 기타 여객운송)에 지출하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임.

개인교통비

자동차 구입, 기타 운송기구(오토바이, 자전거 등) 구입, 운송기구 유지 및 수리(부품 및 관

련용품, 유지 및 수리비),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 개인교통서비스(운전교습비, 주차료, 통행료, 기타 개인교통)에 지출하는 가구당 월평균 금액임.

교통부문 사회적비용

도로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국가물류비용, 대기오염비용, 온실가스비용, 소음비용의 합계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의미함.

교통사고사망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2.8. 안전

범죄율

여기서 범죄는 현행 「형법」을 위반한 형법범죄로 한정함. 따라서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범죄율=(형법범죄 ÷ 총인구) × 100,000.

주요 형법범죄율

주요 형법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함.

형법범죄

형법범죄에서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법전(法典)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범죄란 '형법전(刑法典)상 제시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로서 성립되어 진 것을 말함.

범죄피해율

인구 10만 명당 개인대상 범죄피해자수임. 범죄피해율=(개인대상 범죄피해자 ÷ 조사대상인구) × 100,000

교도관수 대비 1일 평균 수용자수

교도관수 대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1개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감호자 등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임. 교도관수 대비 1일 평균 수용자 수 = 1일 평균 수용자수 ÷ 교도관수

3년 이내 재복역률

재복역률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에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되는 비율임. 출소후 3년 이내 재복역률 = (3년 이내 재복역자수 ÷ 해당년도 출소인구) × 100

민간경비원수

경찰청에 의해 조사된 시설경비, 신변보소, 호송경비, 특수경비 등 민간경비업체 종사자들과 국가시설, 국영시설,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원을 제시한 것임.

사회안전인식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국민들이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느끼는 안전감의 정도를 나타냄.

범죄두려움

위험에 대한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밤에 혼자서 (동네) 골목길을 다니기가 / 걸을 때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임.

자연재해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등의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해를 말함.

자연재해피해액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기타의 자연재해 총 피해액을 나타냄.

화재피해액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으로 인한 화재 피해액임.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수사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능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수사전산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One-Click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함.

2.9. 사회통합

투표율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임.

부패인식지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공공 및 정부 부분의 부패를 인지하는 정도, 점수가 높을 수록 청렴함을 의미함.

자살률

인구 10만 명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임.

공공복지지출

공공복지에 투입되는 정부 지출임.

공적연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원연금이 있음.

소득대체율

연금, 보험 등이 평상시 소득(임금)을 어느 정도 대체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는 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중위소득

전체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한 뒤, 한 가운데 순서의 소득을 의미함.

평균소득

전체 소득을 모두 더한 뒤, 전체 인원수로 나눈 소득임. 전체 99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순위 50등의 소득을 의미함.

상대빈곤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미만인 경우를 의미함.

3. 환경부문

3.1. 생활환경과 오염

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임. 1996년도부터 분리하여 통계처리 함.

과불화탄소(PFCs)

탄소와 불화의 화합물임. 전자제품과 도금산업 등에서 세정용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주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됨.

광역상수도

국가, 지자체 수자원 공사,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인 이상 지역에 공급하는 상수도임.

대기오염도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통해 상시 측정된 자료를 말함.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10), 오존(O₃)의 연평균 오염도로 표시됨. 이 중 아황산가스(SO₂)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무색의 기체로 화석연료 중에 들어있는 황성분이 탈 때 생성되어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임.

데시벨(dB)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임. 데시벨(dB: decibell)은 10분의 1을 의미하는 deci와 전화기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름인 Bell에서 딴 것임.

미세먼지(PM10)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지름 10 μ m 이하이며,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림. 연소작용에 의해 발생되므로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음.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함.

먹는물수질기준

인간이 물을 마시기에 적당하고 인체에 해를 주지 않는 정도를 의미함. 각 국가의 여건을 고려하여 WHO 권장기준치에 근접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산업공정 등 배출시설의 설치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로서 사무실, 대형매장, 백화점,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임.

상수도보급률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임. 상수도보급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지방자치단체 내 주거환경 및 주택구조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생활편익시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 또는 ppm)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호기성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말함. BOD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오염되었음을 의미함.

유기물

주로 생체 내에서 합성되는 물질 전분, 지방, 단백질 등 탄소를 가진 화합물로서 생명체의 구성성분이며 에너지원임. 토양 중에 서는 서서히 분해되어 작물에 흡수되며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개선에 중요한 비료가 됨.

미생물

육안의 가시한계를 넘어선 0.1mm 이하의 크기인 미세한 생물임. 주로 단일세포 또는 군사로 몸을 이루며, 생물로서 최소 생활단위를 영위함. 식품, 의약품 등 생산공업이나 생물자원, 수질환경 및 토양의 지력보존 등에 이용됨.

수소불화탄소(HFCs)

불연성 무독성 가스임.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로 사용됨.

순수생활폐기물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임.

아황산가스(SO₂)

황이 연소할 때에 발생하는 기체로, 황과 산소의 화합물임.

이산화질소(NO₂)

자극성 냄새가 나는 갈색의 유해한 기체로서 과산화질소라고도 함. 분자식은 NO₂, 분자량은 46.008이며 공장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에서 배출되며 태양광하에서 NO와 산소원자(O)로 분리되어 산소원자는 다시 산소분자와 결합해서 오존(O₃)을 생성함.

육불화황(SF₆)

전기제품,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는 가스임.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임.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97)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6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를 감축 대상으로 명문화됨.

온실효과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하여 지구를 보온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을 말하며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함. 만약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18℃ 까지 내려가 생명체가 살 수 없으며, 온실효과가 지구 평균기온을 15℃ 정도로 유지하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줌. 그러나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됨.

지구온난화지수

대기 중 농도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기체들의 상대적인 복사 흡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공통적인 수단으로 방출 수준을 해석하기 위한 지수임. 각각의 기체들을 기준이 되는 기체들과 비교했을 때 대기하층에서 성층권까지의 상대적 가열정도의 척도로서 나타내어진 것임. GWPs는 일정기간(보통 100년)동안 1kg의 온실가스가 야기하는 적외선 흡수 능력(가열효과)과 이산화탄소 1kg의 영향에 대한 비율로 측정됨. 복잡한 대기중 화학반응에 의해 방출된 기체들은 복잡성 때문에 GWPs에 의해 측정되어 왔고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나타내어짐. IPCC는 새로운 회기마다 이 GWP를 업데이트함. 10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1로 볼 때, 메탄은 21, 아산화질소는 310, HFC 1,300, PFC 7,000, 육불화황 23,900 정도가 됨.

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물체의 연소, 합성, 분해 등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염화수소, 플루오린, 플루오린화 규소, 납 및 그 화합물, 질소산화물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하는 물에 함유된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사이안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육가크로뮴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PCB를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중저준위 폐기물

방사능을 띤 기체로부터 방사능을 걸러내는 필터, 원자로 내의 방사능을 흡착하는 이온 교환수지·액체 폐기물을 처리한 뒤에 남는 찌꺼기, 청소에 사용된 종이나 걸레·비닐주머니, 이것들을 소각하여 생긴 재 등을 말함.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오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함. 폐기물관리법상의 유해성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폐기물로 폐유나 폐산, 폐알칼리, 중금속이나 유기용제를 용출시키는 폐기물 등이 해당됨.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하수도보급률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임. 하수처리에 대한 지표로 사용됨.

하수처리시설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포기조, 살수여상, 염소처리 등의 하수처리를 행하는 시설임.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함.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정보시스템(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사업장에서 제조·사용 등 사용과정에서 환경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부, 기업, 민간이 공유토록 하는 제도임. 배출저감 노력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함.

환경보호비용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 가게 등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지출액을 말함. 투자지출(건물, 토지, 설비 등)과 경상지출(재료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부산물수입을 빼서 구해짐.

환경소음도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에 따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음환경기준의 달성여부 측정을 위하여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44개 도시의 소음측정망중 주요 대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를 의미함.

환경향상체감도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의 5개 영역에 대해 1년 전에 비해 환경상태가 더 좋아졌는지, 변화 없는지, 더 나빠졌는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집계한 지표임.

3.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1차에너지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임.

갯벌

밀물 시에는 바닷물로 덮여 있으나 썰물 시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을 말하며, 줄여서 갯가(바닷가)의 넓고 평평한 들판이라고도 함. 우리나라의 경우 '습지보전법'에 의한 연안 습지 대부분이 갯벌이므로 이 둘을 혼용하여 사용함.

경지면적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도 재배가 가능한 토지를 말함. 경지에는 논과 밭, 수리답을 포함함.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생물다양성협약의 세가지 목표 중 '공정한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규정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문서임.

내륙습지

강의 가장자리나 냇가 등 담수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우기에 침수되어 형성되거나 강 유역의 범람하는 토양이 침적되어 만들어진 지역을 말하며 늪, 호소(湖沼)·하구(河口) 등이 있음.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 이행을 의무화 하는 등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임.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됨.

멸종위기종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거나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종을 말함.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세계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 하에 체결한 협약임.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됨.

산림

입목지와 무림목지를 말함. 입목지는 교목의 울폐도가 30% 이상인 임분 또는 ha당 일정 분수 이상의 치수가 고르게 생육하고 임분을 뜻함. 무림목지는 입목지 이외의 모든 임지를 말함. 황폐지, 개간지, 도로, 하천, 소택지, 고정방화선, 저목장, 암석지, 묘지, 방목지 등 입목육성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임지인 제지를 포함하고 있음.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보존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접근 및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간의 양자간 이익공유를 규정함. 1993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됨.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Acceptable Biological Catch)

대상자원에 대해 생물학적인 관점(성장, 산란, 가입 등)에서 어획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적정어획량을 말함.

생태·경관보존면적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을 의미함.

습지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함.

식량농업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보존, 이용 및 다자체제 하에서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규정함. 1994년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가입됨.

야생생물

산·들 또는 강등의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 식물, 균류·지의류,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을 말함.

어족자원량

어류의 종에 따라 서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구분이 되는 지형적 경계가 있어, 같은 종이지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개체군(subpopulation)의 자원량을 말함.

아개체군

단일종 또는 아종내에서도 형태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분리된 집단을 말함. '계군'이라고도 함.

연안습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갯벌·바위해안·모래해안 등이 있음.

유기농

자연 토비를 사용하거나 농약을 쓰더라도 최소한으로 이용하는 농업임.

유전자원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임. 유전물질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함.

자생생물종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하여 서식하는 생물 분류군을 통칭하며, 분류학적으로 종 혹은 종 이하의 분류군을 총망라하는 것임. 우리나라의 자생 생물 종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지리적 개념에서 대한민국 영내에서만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모든 생물 분류군으로 정의함.

재생가능에너지

석유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연료전지, 폐기물, 지열 등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함.

적색목록(Red List)

국제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협에 처해 있는 종들을 위협 정도에 따라 범주화하고 해당 종을 목록화함. 절멸종(EX), 자생지 절멸종(EW), 심각한 위기종(CR), 멸종 위기종(EN), 취약종(VU), 위기 근접종(NT), 관심 필요종(LC), 자료 부족종(DD), 평가불가종(NE)으로 구분함.

전력

역학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와 같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말함.

총허용어획량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 쿼터시스템을 말함.

취수량

광역 또는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 등의 수원에서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취수한 수량임. 마을상수도와 공업용수도를 위한 취수량은 제외함.

해양보호구역

습지보전법 제8조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연안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함.